

第15代 金大中 大統領

# 指示事項綜合

國務調整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

# 目 次

|                             |     |
|-----------------------------|-----|
| 第 1 章 總 括 .....             | 1   |
| 제1절 지시사항 개요 .....           | 3   |
| 제2절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       | 6   |
| 第 2 章 部處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 11  |
| ○ 재정경제부 .....               | 13  |
| ○ 교육인적자원부 .....             | 77  |
| ○ 통 일 부 .....               | 104 |
| ○ 외교통상부 .....               | 118 |
| ○ 법 무 부 .....               | 141 |
| ○ 국 방 부 .....               | 177 |
| ○ 행정자치부 .....               | 205 |
| ○ 과학기술부 .....               | 287 |
| ○ 문화관광부 .....               | 333 |
| ○ 농 림 부 .....               | 387 |
| ○ 산업자원부 .....               | 431 |
| ○ 정보통신부 .....               | 475 |
| ○ 보건복지부 .....               | 514 |
| ○ 환 경 부 .....               | 564 |
| ○ 노 동 부 .....               | 605 |
| ○ 여 성 부 .....               | 636 |

|                      |     |
|----------------------|-----|
| ○ 건설교통부 .....        | 652 |
| ○ 해양수산부 .....        | 704 |
| ○ 기획예산처 .....        | 731 |
| ○ 국무조정실 .....        | 779 |
| ○ 법 제 처 .....        | 802 |
| ○ 국정홍보처 .....        | 811 |
| ○ 국가보훈처 .....        | 826 |
| ○ 중앙인사위원회 .....      | 838 |
|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852 |
| ○ 공정거래위원회 .....      | 855 |
| ○ 금융감독위원회 .....      | 862 |
| ○ 비상기획위원회 .....      | 893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 897 |
|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 901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904 |
| ○ 방송위원회 .....        | 906 |

### 第 3 章 市・道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909

|               |     |
|---------------|-----|
| ○ 서울특별시 ..... | 911 |
| ○ 부산광역시 ..... | 921 |
| ○ 대구광역시 ..... | 926 |
| ○ 인천광역시 ..... | 931 |
| ○ 광주광역시 ..... | 938 |

|                 |     |
|-----------------|-----|
| ○ 대전광역시 .....   | 943 |
| ○ 울산광역시 .....   | 947 |
| ○ 경 기 도 .....   | 952 |
| ○ 강 원 도 .....   | 955 |
| ○ 충 청 북 도 ..... | 961 |
| ○ 충 청 남 도 ..... | 970 |
| ○ 전 라 북 도 ..... | 975 |
| ○ 전 라 남 도 ..... | 983 |
| ○ 경 상 북 도 ..... | 988 |
| ○ 경 상 남 도 ..... | 992 |
| ○ 제 주 도 .....   | 996 |

|                                |      |
|--------------------------------|------|
| 附 錄 : 大統領 指示事項 目錄 및 管理指針 ..... | 1003 |
|--------------------------------|------|

# 第 1 章 總 括

## 第 2 章 部處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第 3 章 市・道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附 錄

- 大 統 領 指 示 事 項 目 錄
- 大 統 領 指 示 事 項 管 理 指 針

# 第 1 章 總 括

## 第1節 指示事項 概要

'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지시한 사항은 2003년 1월말 현재 총 1,896건이다.

대통령지시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과 훈시 성격의 지시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총 1,896건의 지시사항 중 계획을 수립할 사항이 1,017건이고 훈시사항은 879건이다.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서 기지시한 계획수립사항에 대한 추가지시가 284건, 국정과제와 중복되는 지시사항이 202건, 지시사항으로 관리함이 부적절하여 관리종결 처리한 사항이 4건이었으므로 실제로 총리실에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리해온 지시사항은 총 527건이 된다.

527건의 지시사항을 다시 부문별로 분류해 보면,

통일·안보에 관한 지시사항이 33건(6.3%)이며, 정치·외교에 관한 지시사항이 11건(2.1%), 경제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은 162건(30.7%)이다. 국토개발·교통에 관한 지시사항은 27건(5.1%)이고, 사회·복지·노동·환경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은 80건(15.2%)이다. 그리고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지시사항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시사항은 각각 59건(11.2%)과 50건(9.5%)이며, 지방행정, 공무원 복무, 민원처리, 대민업무 등에 속하는 지시사항은 77건(14.6%), 기타가 28건(5.3%)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경제분야 지시사항이 전체지시사항 중 30.7%인 16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노동·환경분야의 지시사항으로 전체의 15.2%인 80건에 달한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 극복에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환경과 사회복지분야로 옮겨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분야별 지시사항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시사항 분야별 건수〉

\* '2003년 1월말 현재

| 코드번호 | 분 야                | 내 용   | 건수  | 비율(%) |
|------|--------------------|---|-----|-------|
| 01   | 통일 · 안보            |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협력,<br>국방, 안보, 보훈, 민방위          | 33  | 6.3   |
| 02   | 정치 · 외교            | 정치발전, 선거, 외교                                  | 11  | 2.1   |
| 03   | 경제                 |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br>에너지자원, 농 · 축 · 수산      | 162 | 30.7  |
| 04   | 국토개발 · 교통          |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발,<br>지역발전, 교통                   | 27  | 5.1   |
| 05   | 사회 · 복지<br>노동 · 환경 |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 근로조건,<br>직업안정, 환경, 노인 · 청소년문제 | 80  | 15.2  |
| 06   | 교육 · 문화 · 체육       |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 59  | 11.2  |
| 07   | 과학 · 기술            | 과학기술, 정보 · 통신                                 | 50  | 9.5   |
| 08   | 일반행정               |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br>대국민 홍보                  | 77  | 14.6  |
| 09   | 기 타                | 감사, 부처업무조정, 기타 다른분야에<br>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8  | 5.3   |
|      | 계                  |   | 527 | 100.0 |

그리고 관리대상 지시사항이 발령된 연차별 건수는 다음과 같다.

- 1998. 3 ~ 1998.12 : 163
- 1999. 1 ~ 1999.12 : 120
- 2000. 1 ~ 2000.12 : 99
- 2001. 1 ~ 2001.12 : 96
- 2002. 1 ~ 2003. 1 : 49

또한 각 부처별 및 시도별 지시사항 건수는 다음과 같다.

### 〈部處別 市道別 指示事項〉

'03年 1月末 現在(단위 : 건)

|                   |     |               |    |
|-------------------|-----|---------------|----|
| 총 계               | 527 | 산 업 자 원 부     | 18 |
| 중 앙 계             | 511 | 정 보 통 신 부     | 20 |
| 대 통 령 정 책 기 획 위   | 1   | 보 건 복 지 부     | 22 |
| 민 주 평 통 자 문 위     | 1   | 환 경 부         | 20 |
| 여 성 부(여성특위)       | 6   | 노 동 부         | 9  |
| 중 소 기 업 특 별 위 원 회 | 2   | 건 설 교 통 부     | 27 |
| 중 앙 인 사 위 원 회     | 8   | 해 양 수 산 부     | 10 |
| 국 무 총 리 실         | 21  | 방 송 위 원 회     | 1  |
| 국 정 홍 보 처         | 1   | 2 기 관 이 상 공 통 | 61 |
| 법 제 처             | 2   | 지 방 계         | 16 |
| 국 가 보 훈 처         | 1   | 서 울 특 별 시     | 3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4   | 부 산 광 역 시     |    |
| 비 상 기 획 위 원 회     | 1   | 대 구 광 역 시     | 1  |
| 청 소 년 보 호 위 원 회   | 1   | 인 천 광 역 시     |    |
| 금 융 감 독 위 원 회     | 13  | 광 주 광 역 시     |    |
| 기 획 예 산 처         | 28  | 대 전 광 역 시     |    |
| 재 정 경 제 부         | 39  | 울 산 광 역 시     |    |
| 통 일 부             | 10  | 경 기 도         | 1  |
| 외 교 통 상 부         | 11  | 강 원 도         | 2  |
| 법 무 부             | 20  | 충 청 북 도       | 1  |
| 국 방 부             | 17  | 충 청 남 도       | 3  |
| 행 정 자 치 부         | 43  | 전 라 북 도       | 1  |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20  | 전 라 남 도       |    |
| 과 학 기 술 부         | 23  | 경 상 북 도       |    |
| 문 화 관 광 부         | 32  | 경 상 남 도       | 2  |
| 농 립 부             | 18  | 제 주 도         |    |
|                   |     | 시 도 공 통       | 2  |

## 第2節 大統領指示事項 管理

### 1. 指示事項 管理根據

대통령지시사항이 행정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제399호, 2002. 2. 7 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마련하여 이에 따라 관리·추진하고 있다.

### 2. 指示事項의 區分

대통령지시사항은 크게 훈시사항과 계획수립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훈시사항은 계획수립은 필요치 아니하나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을 통해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에 반해 계획수립사항은 해당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 신규지시사항 : 지시내용상 처음으로 지시된 사항으로 신규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
- 추가지시사항 : 이미 지시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시사항으로 기존지시사항에 포함하여 동일 건으로 관리할 사항
- 국정과제중복사항 : 국정과제와 중복되는 지시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통합하여 관리되는 사항

### 3. 指示事項 管理體系

대통령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첫째, 大統領 秘書室(政策企劃首席秘書官室)에서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훈시 또는 계획수립사항으로 분류·시달을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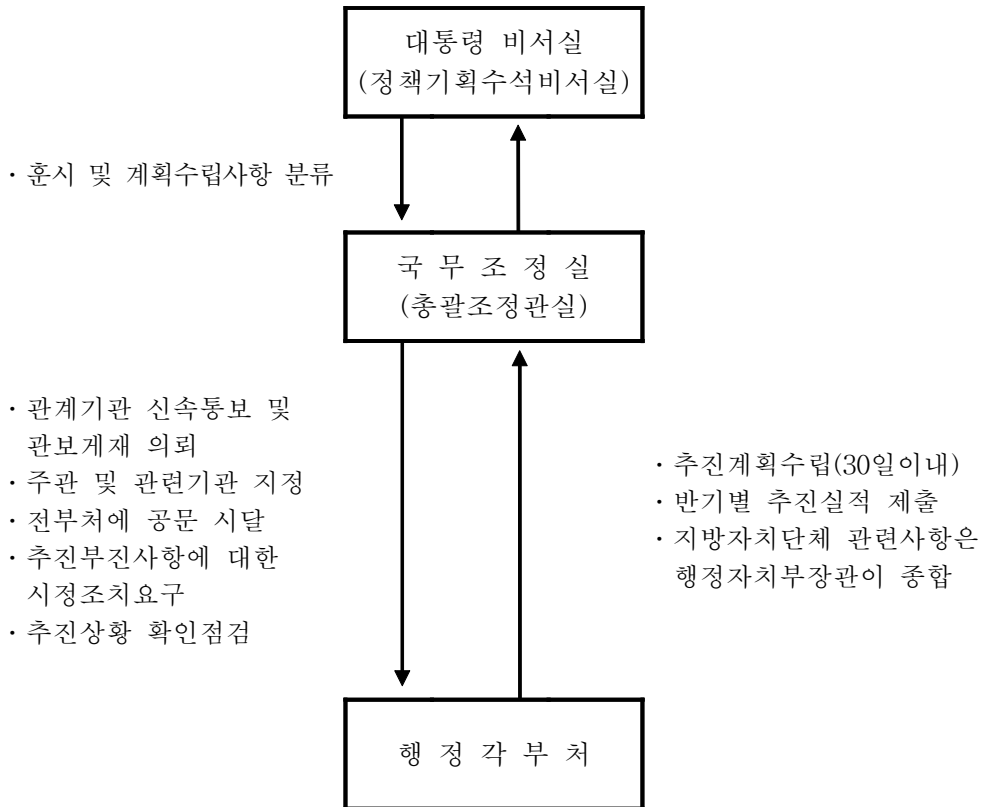
둘째, 國務調整室(總括調整官室)에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송부받은 지시사항을 신속히 전부처에 통보함(잠정시달)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셋째, 전부처에 통보한 지시사항 중에 해당부처에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별도로 주관 또는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공식적으로 지시사항 시달(본시달)을 하게 된다.

넷째, 각 부처의 기관장은 소관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에 대해 잠정시달을 받은 즉시 각 부서에 전달·주지시키고, 본시달 후에는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로 통보하고 이를 추진하게 되며,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로 그 추진실적을 보고한다(기획관리실이 지시사항 종합관리).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실적을 제출받아 종합평가하고, 필요시 부처별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며, 파악한 추진상황과 평가결과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다. 또한 대통령지시사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단독 혹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도 한다.

### < 지시사항 추진 체계도 >



## 4. 指示事項 推進狀況 確認・點檢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대통령지시사항의 추진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매 반기별로 각 부처의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취합·분석하고 계획수립, 집행, 사후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보완조치를 하여 왔으며, 서면분석만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점검사항은 계획수립사항의 추진실태 및 사후관리,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 예산문제, 추진상의 애로사항 파악과 해소방안, 주요사업 추진성과 파악과 수범사례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다.

점검결과의 수범사례는 적극 전파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해 왔으며, 2002년 11월에는 각 부처의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유공자 26명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하였다(훈·포장 4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11명).

한편, 매년말 그때까지의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을 홍보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확인·점검 등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 <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 점검 >

| 기 간                 | 주 관 기 관         | 대 상 기 관                  | 점검 및 조치내용  |
|---------------------|-----------------|--------------------------|--|
| ‘99. 2.25<br>~ 3.12 | 국무조정실           | 중앙부처(23) 및 소속기관, 시·도(16) | · 관리실태 및 재원확보 등<br>→지적사항 보완조치 및 국정과제와 대통령지시사항의 이중관리체계 개선안 강구 |
| ‘00. 5.22<br>~ 5.27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 | 21개 중앙행정기관               | ·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 등<br>→지적사항 조치 및 추진이 어려운 3건의 관리종결 조치            |

| 기 간                 | 주 관 기 관 | 대 상 기 관   | 점검 및 조치내용  |
|---------------------|---------|---|--|
| '01.4.6<br>~5.18    | 감사원     | 국무조정실 등 35개<br>기관                                 | · 주의사항 2건 및 통보사<br>항 3건에 대한 시정조치                 |
| '01. 6.12<br>~ 6.16 | 국무조정실   | 5개 중앙행정기관   | · 5개 과제 이행실태 점검<br>→소요재원 및 인력확보 필<br>요과제 조정조치 등  |
| '01. 8. 9<br>~8.17  | 국무조정실   | 4개 중앙행정기관   | · 4개 과제 소요재원, 인력<br>확보상황 및 이행실태<br>→보완 등 대책강구 조치 |
| '01.10.15<br>~10.24 | 국무조정실   | 4개 중앙행정기관   | · 4개 과제 이행 실태 등<br>→보완 등 대책강구 조치                 |
| '01.11.12<br>~11.24 | 국무조정실   | 13개 중앙부처 등  | · 3개 과제 이행실태 등<br>→보완 등 대책강구 조치                  |
| '01.12.10<br>~12.24 | 국무조정실   | 6개 중앙부처   | · 3개 과제 이행실태 등<br>→보완 등 대책강구 조치                  |
| '02. 4. 1<br>~4. 6  | 국무조정실   | '2001년도 종합평가<br>시 보완필요과제 및<br>주요 현안과제 28건<br>관련기관 | · 보완필요과제 통보, 수범<br>사례 발굴 홍보 등                    |

## 第 2 章 部處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財 政 經 濟 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03-31-01)   |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역할 강화      | 1998. 3.11 |
| 2(03-31-02)   | 기업인수 및 합병 활성화         | 1998. 3.11 |
| 4(03-31-03)   | 소수주주권 강화              | 1998. 3.11 |
| 5(03-31-04)   | 물가통계                  | 1998. 3.16 |
| 29(03-31-05)  | 기업구조조정 시급             | 1998. 4.14 |
| 51(03-31-06)  | 공기업의 고율이자 조장 조사       | 1998. 5. 6 |
| 70(03-31-07)  | 각종개혁정책의 철저한 추진        | 1998. 6.26 |
| 71(03-31-08)  | 중소기업지원 및 경제체질 강화      | 1998. 6.26 |
| 127(03-31-09) | 외국인투자의 한시적 세제지원방안 검토  | 1998. 7.14 |
| 140(03-31-10) | 국제금융동향점검 및 구조조정노력 강화  | 1998. 9. 1 |
| 194(03-31-11) |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적극 추진  | 1999. 3. 2 |
| 201(03-31-12) |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        | 1999. 3.23 |
| 251(03-31-13) | 중·저소득층 지원대책           | 1999. 6. 2 |
| 255(03-31-14) | 수도권집중 해소 대책의 수립       | 1999. 6.29 |
| 261(03-31-15) |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의 시정       | 1999. 7.20 |
| 273(03-31-16) | 물가안정대책 수립             | 1999. 8.31 |
| 278(03-31-17) | 주세인상에 대한 대 국민 홍보      | 1999. 9.21 |
| 281(03-31-18) | 부산파이낸스사 문제에 대한 대책     | 1999. 9.21 |
| 310(03-31-19) |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수립        | 2000. 2. 8 |
| 311(03-31-20) |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        | 2000. 3.13 |
| 322(03-31-21) | 경제안정대책 강구             | 2000. 3.13 |
| 389(03-31-22) | 서민생활안정대책              | 2000.10. 4 |
| 402(03-31-23) | 6개 금융기관 완전감자 관련 대책 강구 | 2000.12.19 |
| 393(03-31-24) |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          | 2000.10.10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12(03-31-25) | 기업금융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      | 2001. 1.15 |
| 413(03-31-26) | 외환시장 안정방안 강구           | 2001. 1.15 |
| 414(03-31-27) |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차단 노력 강화    | 2001. 1.15 |
| 415(03-31-28) |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 | 2001. 1.15 |
| 494(04-31-29) | 전월세 대책 마련              | 2001. 3.13 |
| 507(03-31-30) | 사금융의 폐해 근절             | 2001. 4.17 |
| 527(03-31-31) |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2001. 7. 2 |
| 528(03-31-32) | 대내외 경제문제 적극 대처         | 2001. 7.16 |
| 534(03-31-33) |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 2001. 8.28 |
| 538(03-31-34) | 기업규제 완화                | 2001.11.12 |
| 539(03-31-35) | 중국의 WTO가입 대비 철저        | 2001.12. 7 |
| 549(03-31-36)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 2002. 2. 4 |
| 550(03-31-37) | 카드사용 좀 더 확산 추진         | 2002. 2. 4 |
| 554(05-31-38) | 여성보육문제 해소방안 마련         | 2002. 2. 8 |
| 606(03-31-39) | 민생안정노력강화               | 2002. 8.27 |
| 10(03-70-01)  | 실업문제 종합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관련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65(03-70-05)  | 기업부실 판정결과 후속조치 철저 추진   | 1998. 6.19 |
| 113(03-70-07) | 재계와의 협력강화              | 1998. 7. 7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지시사항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183(09-70-17) | 설 연휴 대책                | 1999. 2. 2 |
| 264(08-70-25) |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9. 8. 3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대 국민과제 홍보              | 1999. 9.21 |
| 284(03-70-30) | 국가채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홍보  | 1999.10. 4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98(03-70-31)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1999.12.28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53(03-70-37) |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 2000. 4.26 |
| 366(09-70-39) |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2(08-70-41) |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            | 2000. 8.29 |
| 385(03-70-44) |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          | 2000. 9.1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2(03-70-46)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399(03-70-49) |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          | 2000.10.31 |
| 410(08-70-50) | 설 종합대책 마련                | 2001. 1.1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531(07-70-59) | 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1. 8. 7 |
| 545(07-70-62)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 추진    | 2001.12.24 |
| 596(05-70-64)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준비 철저         | 2002. 4.30 |
| 609(03-70-66) | 추석종합 대책 마련               | 2002. 9. 3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5 |

## 1) 消費者團體의 物價監視 役割 強化 : 1(03-31-01)

-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정당한 가격이 책정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 강구 필요('98. 3.11,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지역별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운영
  - 대상지역 : 전국 13개 주요도시 총 195명
  - 대상품목 : 50개 품목
    - 주요생활필수품 : 쌀, 한우쇠고기, 라면 등 30개 품목
    - 개인서비스 : 갈비탕, 이용료, 목욕료 등 20개 품목
  - 주요활동
    - 지역 소비자단체(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지역 내의 업소별 비교가격정보 제공
    - 물가조사 결과를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지방언론, 지방소식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물가감시활동을 전 주민으로 확산하고, 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촉발하여 가격인하 유도
    - 과다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정보요청권 제도 등을 활용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에 직권조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처
    - 일반적인 물가감시활동 외에 명절, 이사철, 신학기를 전후하여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물가조사 활동 전개
-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 위원회 구성의 개선
    - 소비자대표 비율 25% 이상, 소비자대표 수는 정부 및 관련단체 대표 수보다 많아야 함. 경영·회계 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및 민간위원장 선임 유도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충분한 사전검토기회 부여(최소 10일), 전문기관의 원가검증기회 부여, 서면결의 금지, 소비자대표 참여의무화, 정기개최(반기 1회 이상), 회의결과의 공개 등
- 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 위원회 의결내용에 구속력 부여, 위원에 대해 회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위원회 운영근거 법제화

## 2) 企業引受 및 合併 活性化 : 2(03-31-02)

-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주주가 회사돈을 이용하여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결과가 되므로 자사주 취득한도는 당초의 10%로 환원할 것('98. 3.11,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로 공격자측의 제한이 없게 된 바, 방어자측의 방어수단도 자유화 할 필요('98. 3.17, 경제대책조정회의 결과)
- '98. 5.25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자사주취득 수량한도(발행주식 총수의 1/3이내) 폐지

## 3) 少數株主權 強化 : 4(03-31-03)

- 대표소송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98. 3.11,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98. 5.25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요건 추가완화(0.05%→0.01%)



#### 4) 物價統計：5(03-31-04)

- 물가지수를 일반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로 구분·집계하여 발표할 것('98. 3.16, 재경부 업무보고시)
- 생활물가 관련 통계를 보완할 것('98. 3.26, 국무회의시)

- 일반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 구분 발표
  - 물가통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물가지수 확정('98. 4.13)
    - 대상품목：실생활과 밀접한 쌀, 라면 등 154개 품목(가중치 469.8)
  - '98년 4월 물가동향 보도시부터 전체 소비자물가와 함께 생활물가 동향 발표

#### 5) 企業構造調整 時急：29(03-31-05)

- 기업구조조정은 서둘러야 함. 이를 위해서 부동산 매각 등도 촉진되어야 함('98. 4.14, 국무회의시)
- 재경부는 재정적자와 통화량증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차질없는 개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확고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임('98. 6.16, 국무회의시)
- 경제발전과 나라안정을 위해 노사정 협력 필요('98. 6.26, 재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5+3원칙」\*에 따라 기업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주 중시의 선진화된 경영관행이 확산
  - 제조업 부채비율이 '97말 396%에서 '02. 6말 136%로 개선 (美 162%, 日 160%)

-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97년  $\Delta 0.3\%$ 에서 '02년 상반기 7.3%로 대폭 개선 (美5.0%, 日3.9%)
- \* 5+3원칙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 상속·증여방지
- 경제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재정부의 경제조정기능 강화
  - 98. 6월 이후 '02년말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180여회 개최
- 노사정 협력 강화
  -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여 전교조 문제 해결('99. 1)
  - 민주노총 합법화('99.11)
  - 근로시간단축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00.12)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01. 2)
  -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 도출('01. 7)
  - 공기업 자회사(6개) 민영화에 대한 합의 도출('01.11)

## 6) 公企業의 高率利子 助長 調査 : 51(03-31-06)

- 최근 일부 공기업이 수천억 내지 수조에 이르는 보육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입찰 방식을 통해 20%내외의 이자를 강요함으로써 금리 인상 요인을 조장하고 있음. 재정부장관은 이를 파악·보고하고 조치할 것('98. 5. 6, 국무회의시)
- 예산청으로 하여금 각 기금관리부처에 기금의 금리입찰방지 협조토록 요청('98. 6)

- 실적배당부 상품에 대한 사전수익률 제시요구 및 금리입찰행위와 유사한 금리협상행위 금지
- 각 부처별 「기금융유자금운용지침」의 제·개정
- 기금의 금리입찰 방지를 위해 금감위·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금감위 : 거액수신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정한 금리초과 이면계약 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불법·위규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
  - 감사원 : 수익률위주의 감사에서 불법·부당거래 중심으로 감사방향 전환
- 은행연합회, 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금리입찰 방지 협조 요청
- 기금운용지침 제·개정 등을 통하여 고율의 금리입찰 방지를 위한 여건조성을 함으로써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에 기여

## 7) 各種 改革政策의 徹底한 推進 : 70(03-31-07)

-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공기업 개혁과 규제완화 등 각종 개혁 조치를 9월말까지 끝내고 10월부터 새로운 활기가 넘치도록 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간담회 등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98. 6.26, 재정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현재 추진중인 금융개혁은 9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것 ('98. 9.15, 국무 회의시)
- 금융구조조정,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도있게 추진할 것 ('98.10.27, 국무회의시)

-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 등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중개 기능 회복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정('98. 9)
  - IMF이후 '02. 6월까지 총 631개 부실금융기관 정리 ('97년말 대비 전체 금융기관의 29.8%)
  - 2차례 공적자금 조성 및 회수재원 활용, '02년말까지 157조원 투입
- 다양화·고급화를 통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
  - '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육성 추진
    - \* '02.11월 현재 TFT-LCD, DRAM 등 281개 상품 선정
  -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분야를 매년 50개 이상 발굴('10년까지 2조원 투자) 하여 수출 주력분야로 집중 육성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시책 추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98. 9)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용에관한법률」 제정('02.11)

## 8) 中小企業 支援 및 經濟體質 強化 : 71(03-31-08)

- 재정을 확대해서라도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98. 6.26, 재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중소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98.10.17, 국무회의시)
- 경기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 ('99. 1.30, 경제부처 실·국장 초청오찬시)
- 경제력 집중현상의 시정과 중산층 육성('99. 4. 6, 국무회의시)

- 중소기업 담보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원 확충

- '99.1월 정부예산 1조 2,000억원 조기 출연
- '00년 정부예산 7,800억원 출연
-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편
  -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 자유화 및 기한부 내국신용장 제도 도입
  - 포괄금융 용자대상 업체 확대
  - 벤처기업 등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체에도 무역금융 용자대상 확대
  - 원자재 의존율 및 가득율을 폐지하는 등 무역금융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 수출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환가료 및 외환매매수수료 인하 유도

## 9) 外國人投資의 限時的 稅制支援方安 檢討：127(03-31-09)

- 외국인투자의 시급성을 감안, 일반제조업과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시행령 제정시 검토해 볼 것 ('98. 8. 3, 국무회의시)

-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세제지원
  - 일반제조업의 경우도 외국인투자금액과 고용규모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혜택 부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98.11.17 시행)
  -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의 완화를 통한 조세지원의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제3항제1호 '02. 1. 1 시행)
-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한시적 세제지원
  - 관광호텔업·국제회의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에 대한 일정한 외국인투자금액이상인 신설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00년까지 신

- 고, '03년까지 도입되는 투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조세감면혜택 부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98.11.17 시행)
- 외국인투자지역내 관광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확대와 조세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제3항제2호, '00. 1.10 시행)
    -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대상지역을 확대
    - '01년말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05년말까지 도입되는 경우로 조세감면혜택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지역내 관광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확대와 조세감면의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제3항제2호, '02. 1. 1 시행)
    - 종합유원시설업을 추가하고 지역제한을 철폐함
    - '03년말까지 신고, '05년말까지 도입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조세감면혜택 부여

## 10) 國際金融 動向點檢 및 構造調整努力 強化：140(03-31-10)

- 경제부처들은 국제금융동향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외환수급상황도 철저히 점검할 것
- 구조조정을 되도록 빨리 완료하여 불확실성의 제거로 시장기능과 대외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할 것('98. 9. 1, 국무회의시)

### <국제금융동향 점검>

- 주요 국가의 환율·주가 등 금융동향 매일 파악
  - 외평채 등 한국물과 주요국가의 국채 가산금리(spread) 매일 파악
- 국제금융센터 설립·운영
  - '99. 4. 1 국제금융센터를 금융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

- 설립이후 '99년말까지 일일국제금융속보 등 570건 발간
- 세계 주요도시에서 Korean Forum 개최
  - 국제금융시장 등에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세계 주요 17개 금융·산업도시에서의 설명회(Korean Forum) 개최
  - \* 기간 : '98. 9.29~10.16
- 각종 세계투자가회의에 적극 참여
  - 세계투자가회의에 적극 참석 ('99년중 18회)

<구조조정노력 강화>

-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퇴출, 합병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
  - '97년말 이후 '02.11월말까지 인가취소·합병 또는 자진해산 등을 통해 651개사의 금융기관을 퇴출

(단위 : 개사)

|     | '97말  | 정 리 | 신 설 | '01.11말 |
|-----|-------|-----|-----|---------|
| 은 행 | 33    | 14  | 1   | 22      |
| 비은행 | 2,068 | 637 | 62  | 1,493   |

- \* 증권 17, 보험 11, 투신 8, 상호저축은행 12개사 등 63개사 신설
-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통하여 조기 정상화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중개의 기반 마련
  - 기초성된 정부보증채권발행자금 64조원을 지원완료('99.12말)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20.5조원
    - 자산건전성 제고 및 퇴출를 위하여 출자·예금대지급 등으로 43.5조원을 지원
  -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단계에서 대우그룹부실화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자금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정부보증채권발행자

- 금 40조원을 조성('00.12)하여 지원완료
- '01.1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출자, 예금대지급 등 지원
-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사에게 매각('00. 1)
  - 한빛, 서울, 평화은행 등 6개 은행에 출자('00.12 4.1조원)하여 자본건전성 제고
  -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01. 4)
  -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01. 9)
  -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약 1.1조원을 출자완료('01.12)
- \* 은행의 부실제거를 위한 경영개선조치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노력으로 자기자본비율(BIS) 및 여신건전성 등 자산건전성이 향상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BIS비율(%) : '97(7.04)→ '98(8.23)→ '99(10.83)→ '00(10.53)→ '01(10.81)→ '02.9(10.58)
- 고정이하여신비율(%) : '99말(13.6) → '00말(8.9) → '01말(3.3) → '02. 9월말(2.5)

### 11) 우리社株信託制度(ESOP) 積極 推進 : 194(03-31-11)

- 우리사주신탁제도(ESOP)를 적극 추진하여 공평한 고통분담 및 성과배분 원칙을 수립('98. 3. 2, 국무회의시)
- ESOP제도 도입방안 마련('01. 9)
  -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ESOP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형성성과 향상의 토대 구축('02. 3)



## 12) 外換自由化의 蹉跎없는 推進 : 201(03-31-12)

-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최소한 500~550억불)
- 기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함
-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국제금융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위험에 대처함
- 외환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함  
(‘99. 3.23, 국무회의시)

-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확충
  -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노력으로 '02년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98년말(485.1억불) 대비 150% 증가한 1,214.1억불에 달함
-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무역신용을 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유동성비율을 상향조정('00. 6.10)
  - 기업의 외환관련 공시제도를 강화('00. 5)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환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강화방안 추진('01. 1 시행)
-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 국제금융센터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영하여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 ASEAN+3 주요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내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00.11.30)하는 등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
  - EWS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모델 추가개발('03. 1)
-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보완대책 수립 추진
  - 외환거래 모니터링 기능개선을 위한 외환전산망 보완개발('00. 9. 1)

- 자본거래 허가제 5년간 연장 및 대외채권회수의무제도 유지(외국환거래법 개정, '00.10.23), 대외거래내역의 국세청 통보제 강화(외국환거래규정 개정, '01. 1. 1)
- 제1·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 결과 대외거래 자유화가 확대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었음

### 13) 中・低所得層 支援對策：251(03-31-1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부장관은 중·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보고하기 바람('99. 6. 2, '99. 7. 7, 국무회의시)</li> </ul> |
|---|
-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 연간 약 30만명의 청년에게 취업 또는 연수기회 및 직업훈련을 실시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 융자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
  -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보험 내실화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저소득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 저소득층·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PC 무상보급 확대
  - 금융 및 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 등 세부담 완화
    - 우리사주신탁(ESOP) 제도 활성화 지원

-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 국민임대주택 52,500호 등 건설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율 100% 달성 추진
  -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지원
  -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액 인상

#### 14) 首都圈集中 解消對策의 樹立 : 255(03-31-14)

- 기업·금융기관·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금융·조세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것  
(‘99. 6.29, 국무회의시, ‘99. 7.14, 서울시 행정개혁 보고서)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확정·발표 (‘99. 8.23)
  - 지원대상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되, 2002년말까지 한시적 운영
  - 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강화
    -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하며 최저한세 (중소기업-12%, 대기업-15%)의 적용을 배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토록 추진
    - 공장 등의 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과세 이연
  - 이전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 토지공사 등에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기금”을 설치하여 이전기업의 공장, 사옥 등을 우선 매입
    - 산업은행에 정부출자(100억원) 등을 통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1조

- 원 규모)을 조성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을 실시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신용보증한도를 확대(연간 매출액의 1/4→1/3)
- 대단위 기업군(이전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지방이전시 기업 스스로 생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 금융기관 본사의 지방이전시 법인세(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등을 감면하고 본사사옥 등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하며, 대학의 지방이전시 기존부지 등을 토지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

## 15) 所得階層 兩極化 現狀의 是正 : 261(03-31-15)

- 중산층과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은행 융자, 학자금융자 등을 통해 현재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불식시켜야 함  
(‘99. 7.25, ‘00. 1. 4, ‘00. 3.20, 국무회의시)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 종류간·계층간 세부담 형평 제고
  - 금융종합과세 재실시(‘01. 1. 1 시행)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
  - 소비가 대중화된 품목(식음료,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보다 정확한 분배구조 파악을 위한 통계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

## 16) 物價安定對策 樹立 : 273(03-31-16)

-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유가, 전세값 등이 오르고 있는 바, 빈틈 없는 물가안정 대책을 세워 대처하도록 하고 국제 원유가의 인상대책도 세워야 함
-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경영을 개선하여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99. 8.31, 국무회의시)

-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수립·추진(추석물가 안정대책 차관회의 : ‘99. 9. 3)
  - 기간 및 품목 : ‘99. 9. 6~9.23(18일간), 사과, 조기 등 27개 품목
  -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 최고 200%까지 대폭 확대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하고,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염가판매 실시
  - 추석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지도·단속 강화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 및 부처별 추석물가대책반 편성·운영
- 국제유가상승 대책 방향 수립(경제대책조정회의 : ‘99. 9.18)
  -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확대,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 등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전세값 안정대책
  - 2000년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10만호→12만호)하고,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확대(5호이상→2호이상)
- 공공요금 안정대책
  -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혁신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여 요금조정과정에 투명성 제고

## 17) 酒稅引上에 대한 對 國民 弘報 : 278(03-31-17)

- 소주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기 바람  
(‘99. 9.21, 국무회의시)

- 주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신문광고, 간담회 개최, 언론보도, 팜플렛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소주·맥주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99. 9.17, 9.28)
  - 15개 주요 일간지 1면 하단 광고(‘99. 9.22~ 9.28)
  - 정당, 정부·공공기관, 경제·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팜플렛 배포(‘99. 9.22, 100만부)
  - 여·야 국회의원 개별방문 설명(‘99. 9.28, 9.30)
  - 방송사 토론회 및 대담프로그램 제작 반영(‘99.10. 8)
  - 학계·시민단체 전문가의 언론사 기고(‘99.10. 4 ~ 10. 9)
  - 재정경제부장관 초청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간담회 개최(‘99.10. 8)
  - 케이블 TV 대담프로그램 제작 방영(‘99.10.14)
  - 여성단체(9개)와의 오찬간담회 개최(‘99.10.22)
- 언론매체(신문, 팜플렛, K-TV 등) 및 간담회를 통해 소주세율 인상의 불가피성과 주세의 쓰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시킴

## 18) 釜山파이낸스社 問題에 대한 對策 : 281(03-31-18)

- 부산 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대책마련 지시
  - 사전에 긴급입법이라도 해서 피해를 막아야 했던 것 아닌가  
(‘99. 9.21, 국무회의시)
- 불법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대국민 홍보
  - 금융감독원에 정보수집및홍보업무전담팀을 설치(‘99.11)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정보제공
  - 경찰청은 금감원 수집정보에 의거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00. 5.16~6.15)
  - 신문, TV, 반상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도권금융기관조회란 신설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및시행령」 제정·시행(‘00. 1)
  -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신행위를 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 이를 광고하는 행위, 금융업 유사 상호의 사용 등을 금지
  -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업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규정(시행령)

## 19) 貧困退治를 위한 對策 樹立 : 310(03-31-19)

- 올해를 빈곤퇴치의 해로 정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빈곤퇴치 및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음성소득의 철저한 추적 등을 추진  
(’00. 2. 8, 국무회의시)

-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취업활동 및 창업지원
  - 연간 약 30만명의 청년에게 취업 또는 연수기회 및 직업훈련을 실시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 융자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
-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보험 내실화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저소득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 해소
- 금융 및 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봉급생활자 등 세 부담 완화
  -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신탁(ESOP) 제도 활성화 지원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



## 20) 産・學・研・政 協力の 強化 : 311(03-31-20)

- 軍・ 행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첨단기술제품을 구매할 시 국내 벤처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00. 3.13, 과기부 등 5개기관 업무보고시)

- 우수제품 선정 확대
  - 연도별 우수제품 품목 선정(‘02년 1,042품목) 및 판로지원(‘02년 8,381억원)
- 우수제품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
  - 선정된 우수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3자 단가계약 체결(‘02년 158건)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개정(‘00. 3. 4)
  - 우수제품 판로지원팀 구성 및 홍보활동 전개
    - 우수제품 판로지원팀 2명 → 5명으로 확대 운영(‘01. 1.29)
    - 수요기관별 전담자 지정(63개기관)
    - 우수제품요청시 관련수요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 70회 50,131개기관
- 우수제품 선정 심사위원 확충과 심사기준 개정
  - 우수제품 선정 외부심사위원 확충(‘02년 144명)
  - 중소기업 벤처업체의 우수제품 신청서류 간소화(‘00. 1. 1)
  - 우수제품 인정기간 연장(2년→3년)등 선정· 심사기준 개정(‘00.12. 9)
  - 우수제품 선정기준 강화(65점→70점)등 우수제품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02. 9.24)
- 우수제품 홍보강화
  - 「정부조달 우수제품전」 등 전시회 개최(8회 199,708명관람)
  - 카달로그(3회 1,5000부), 팜플렛(10회 11,100부) 제작· 배포
  - 중소기업 벤처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02. 5.10부터 797개 업체 지원)

- 우수제품 분리발주 활성화
  - 분리발주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 실무협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분리 발주 토의안건 상정('00. 7. 21)
  - 조달청 감리공사중 일괄대행공사에 대하여 우수제품을 우선 설계·반영하여 분리발주 시행('01. 2.17부터)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주관으로 공공기관 구매실태 조사실시('01. 5.10~6. 8)

## 21) 經濟安定對策 講究 : 322(03-31-21)

-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금리, 외환, 주식, 서민생활 등 5개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00. 2.22, 국무회의시)
- 증시의 건전한 균형발전('00. 3.20, 재경부등 5개기관 업무보고시)
- 경제문제에 철저히 대처('00. 5. 9, 국무회의시)

-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과제 발굴과 기존시책 추진상황을 점검
  - '00년도에는 재정은 긴축, 금융은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 '01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황, 미국의 9.11 테러사태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대응기능을 제고
  - '02년에는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으로 수출·투자·내수가 균형된 적정성장을 도모

### ※ 주요 추진 성과

- 경제성장률 : ('98)  $\Delta 6.7\%$   $\rightarrow$  ('02p) 6%

- 소비자물가 : ('98) 7.5% → ('02) 2.7%
- 회사채금리 : ('98) 23.13% → ('02) 6.59%
- 외환보유액 : ('97.12) 39억\$ → ('02.12p) 1,214억\$
- 주 가 : ('97말) 376.31 → ('02말) 627.55
- 국제금융센터 등을 통해 국내투자자들에게 해외증시 동향분석 서비스 제공('00. 3)
-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주증시 경영문화 정착,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및 매매제도 개선('00. 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00.10)
- 투신사에 비과세상품 허용('00. 7) 및 증권금융 증자추진('00. 8) 등을 통해 투신사 수신기반 확충
- 금융감독원에서 투신사 부실자산 현황을 공개하여 시장불신 제거

## 22) 庶民生活安定對策 : 389(03-31-22)

- 동절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에너지 가격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하고, 물가안정대책 및 월동기대책을 추진바람('00.10. 4, '00.10.10, 국무회의시)
- 서민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01. 1.15, 재경부 업무보고시)
- 실업·물가문제에 철저히 대처('01. 2. 6, 국무회의시)
- 중산·서민층 지원정책 집행철저('01.11.10, 국무회의시)
- 물가 및 주택가격 안정('02. 4.23, 국무회의시)

-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 수립·추진(추석물가 안정대책 차관회의 : '99. 9. 3)
- 국제유가상승 대책 방향 수립(경제대책조정회의 : '99. 9.18)
- 2000년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10만호→12만호)하고,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확대(5호이상→2호이상)
- 공기업의 철저한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여 요금조정과정에 투명성 제고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대책 심의후 공공요금 등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범 부처적으로 추진('00.10.11)
  - 농산물 등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방출 실시
  -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확대('00년 상반기 61개→하반기 70개 품목)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및 세정지원 등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합리화사업의 유통정보화에 대한 용자 한도 확대
-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고리대금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기간 확대(현행 25일)
-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대책 추진, 논농업 직불제 시행,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등을 보급
- 인터넷 쇼핑몰업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신설, 애완견 판매업, 이사화물 취급사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강화

## 23) 6個 金融機關 完全減資 關聯 對策講究 : 402(03-31-23)

- 최근 일부 금융기관 감자에 대한 정부와 은행관계자들의 책임문제와 소액주주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00.12.19, 국무회의시)

○ 소액주주 관련대책 강구

-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주식매수청구 공고('00.12.18)
- '01.2월말~3월초 관할법원의 결정을 거쳐 은행제시가격대로 주식매수가격을 확정하고 주식매수대금 지급

-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부여

<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

-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기회 부여('01. 7)

< 제주은행 >

- 제주은행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기회 부여 ('01. 7)

○ 은행관계자 등 책임관련 대책 마련

- 예금자보호법('00.12) 및 동법시행령('01. 3) 개정

- 부실기업 등 은행부실과 관련된 책임추궁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을 유도
- 부실 채무기업에 대한 조사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규정 신설

○ 정책당국 책임관련 대책 마련

- 공적자금의 조성·운영 등 전과정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01. 2)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감자손실 일부 보전

○ 우리금융지주회사(BW발행), 제주은행(신주발행)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향유 기회 제공

## 24) 公的資金의 透明한 執行 : 393(03-31-24)

- 공적자금과 관련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간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해야 함
- 근본적으로 과거 정권에서 누적된 폐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과거에는 추가자금이 필요없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함  
(‘00.10.10, 국무회의시)

- 공적자금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보고 강화
  - 공적자금 설명 팜플렛, 홍보만화 등을 설날·추석 귀성객에 배포
  - 공적자금에 대한 “경제이슈”를 작성하여 대학교, 언론계 등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배포(‘01. 6)
  -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01. 8, ‘02. 8)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공적자금 7조원, 과연 빼돌렸는가?” 팜플렛 배포(‘01.12)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 양질의 공적자금관련 정보 제공(‘02. 1)
    - 홈페이지 Q&A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대응성을 제고
    - 홈페이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주요안건 및 의결사항 공개
  - 매월 공적자금통계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 공적자금운용현황 대 국회 보고
  - 분기별로 국회에 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서 제출

## 25) 企業金融 活性化에 대한 對策 마련 : 412(03-31-25)

- 전경련이 1월 10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500대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함
    - 은행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기업자금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 (’01. 1.15,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 한은의 신축적인 금리정책 운용(콜금리를 5.25%에서 네 차례(2, 7, 8, 9월)에 걸쳐 4%로 인하)
  - 국고채 금리 안정을 통해 은행수신금리 인하 유도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 시행( ’01년 중 약 2.5조원 인수)
  - P-CBO, CLO의 지속적인 발행( ’01년 중 8.2조원 발행)
  -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01. 6. 7)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유도
  - 금융기관 임직원 불안심리 해소
  - BIS 비율 중심의 건전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용(은행 목표 BIS비율을 10% → 8%로 하향 조정)
- 신용보증 공급 확대(중소·중견기업에 39조원 공급)
- 장기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 연기금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을 통한 연기금 투자제약 해소
  - 1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 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통한 장기배당투자 유도
  - 장기증권저축 도입

## 26) 外換市場 安定方案 講究 : 413(03-31-26)

- 헤지펀드 등 단기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01. 1.15, 재정부 업무보고서)
- 국제금융센타를 통하여 국내외 외환시장, 주식시장, 역외 NDF시장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
-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헤지펀드 등 외국인 단기투기성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재정부, 금감원, 한은, 국제금융센터 등 모니터링 관련기관간 실무점검회의를 수시 개최
- ASEAN 사무국이 작성한 단기자금 이동관련 표준모델을 기초로 역내 국가간 양자 차원의 자료교환 추진키로 결정('01. 5. 9 ASEAN+3 재무장관회의)
  - 현재 일본·홍콩·필리핀과 자료교환 실시중이며 태국·인도네시아와는 협의중
- 당초 계획의 지속적 추진

## 27) 國內資金의 海外逃避 遮斷努力 強化 : 414(03-31-27)

-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함('01. 1.15, 재정경제부 연두업무보고서)
- 외환거래 자료에 대한 분석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에서 통보받거나 자체 수집한 외환거래 자료에 대한 국세청·관세청의 전산관리, 분석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분석된 자료를 조세탈루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위해 적극 활용
  - 외환거래 분석을 통한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 강화, 해외 자본거래 감시 강화 및 국제거래 조사능력의 향상(국세청)
  - 증여성 송금관리 전담팀 구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요원별 외환거래 전담조사분야 지정(관세청)

## 28) 中小企業과 庶民에 대한 各別한 對策 樹立 : 415(03-31-28)

- 중소기업과 서민은 우리사회의 중추이고 경제의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함  
(‘01. 1.15, 재경부 연두업무보고시)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인력·자금지원 및 판로확대 추진
  - 5년간(‘01~‘05)매년 1천개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
  - 신보·기보의 보증공급을 다양화하여 신용대출 확대(‘02년 36조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02년 41.5조원)
  - 공동상표 육성,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개최 등 내수판매를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800개사), 해외전시단 파견 등 수출 촉진 지원
- 서민의 취업, 주거생활 안정, 복지 및 재산형성 지원
  - 연간 약 30만명의 청년에게 취업 또는 연수기회 및 직업훈련을 실시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 융자지원 확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등
  - 국민임대주택 52,500호 등 건설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율 100% 달성 추진
  -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봉급생활자 등 세 부담 완화
-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신탁(ESOP) 제도 활성화 지원

## 29) 傳月貫 對策마련 : 494(04-31-29)

- 집세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크며, 특히 전월세 비율이 역전되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 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 ('01. 3.13, 국무회의시)
- 최근 문제되는 일부지역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 ('02. 1. 8, 국무회의시)

- 근로자·서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제도를 개선
  -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 ('01) 영세민 : 15백만원→2,450백만원, 근로자·서민 : 보증금의 50%→70%
    - ('02) 영세민지원대상(최고 35백만원→50백만원) 및 지원금액확대 (24백만원→35백만원)
  -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 변제한도 인상 (800~1,200만원→1,200~1,600만원)
  - 전세의 월세 전환이자율 상한규제 ('02. 6, 14%)
- 임대·소형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00년 10천호→'01년 35천호→'02년 51천호)
  - 임대사업자 대한 임대주택 매입자금지원 등 세제·금융지원 확대
  -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제도 마련 ('01. 5)

-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확대 ('01. 5, 20%→30%)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신설 ('01. 8)
- 수도권내에서의 소형평형 의무건설비율(20%)제도 재도입 ('01.12)
-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 ('02. 5, 500억원)
- 투기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 수시고시 및 인상 ('02. 4, '02. 9)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분양권전매자 등의 자금출처확인 등 세무조사 강화('02)
  -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도입 ('02. 4, 35세이상 5년이상무주택자 25.7 평이하)
  -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재도입 ('02. 9)
  -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담보 비율 축소유도('02. 9, 70~80% → 60%이내)
  - 3주택이상 실거래 과세 등 양도세 강화 ('02.10)
  - '투기지역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강화 ('02.10, 시행은 '03. 1)

### 30) 私金融의 弊害 根絶 : 507(03-31-30)

- 사금융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연 1,200%의 사채이자가 있는가 하면 가족에 대한 협박과 신체적인 가혹행위 등이 있다고 함
- 사금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함. 관계부처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01. 4.17, 국무회의시)

-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01. 4.20일)

-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사금융 양성화를 위한 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 고리대금행위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 금융감독원에 사금융피해신고센타를 설치('01. 4. 2)하여 '02.12말까지 6,887건 신고 접수받아 이중 908건 관계기관 통보
  - 국세청은 '01. 4.20일부터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 공정위는 '01. 6.11일부터 91개 사채업자에 대해 직권조사하여 '02. 6 31개 사채업자에게 불공정약관(90%초과 이자등)에 대해 시정명령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02. 8.26) · 시행('02.10.27)
  -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03. 1.26까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 (미등록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등에 대한 소액대출(3,000만원이하)에 대한 이자를 연 66%이하로 제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력,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행위 유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31) 企業의 透明性 提高方案 講究 : 527(03-31-31)

- 노사관계안정,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 우리기업의 국제신용 및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것도 기업의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 ('01. 7. 2, 국무회의시)

- 지배구조개선 실태 조사

- 공시제도개선안 마련
  - 금감위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공시기준을 일반법인의 1/2수준으로 강화('01. 8)
-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 발표('01. 8)
- 자율감리제도 도입('01. 6)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안 마련('01.12)

## 32) 對内外 經濟問題 積極 對處 : 528(03-31-32)

- 미국·일본에 이어 EU·남미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적 합의와 여야 협력이 필요. 여·야·정 3자간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적 문제가 우리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02. 7.16, 국무회의시)
  - 국내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함.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02. 7.16, 국무회의시)
-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탄력적인 정책대응으로 '02년 6% 성장을 달성
    - 내수의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의 탄력적 운용 추진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시장금리, 환율 및 물가의 안정기조 유지 노력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
    -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가게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사에 대한 현금 서비스 업무 제한 등 가게 대출급증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

-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지연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33) 金融機關 民營化 推進 : 534(03-31-3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정부소유를 종결시키고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적극 마련</li> <li>○ 동 계획에 따라 정부소유주식을 국내외에 매각.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매각문제도 조속히 매듭('01. 8. 28, 국무회의시)</li> </ul> |
|---|
-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 마련('02. 1)
    - 관계기관 협의, 금융발전심의회 등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은행 민영화계획 마련
      - '02년중 매각을 본격화하여 3~4년내 완료를 목표
      - 민영화를 통해 은행경영주체를 정립하고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촉진
    - 은행 소유한도 확대, 은행의 타은행 소유허용 등의 은행법 개정('02. 4)을 통해 민영화 촉진을 위한 수요기반 확대여건 조성
  - 추진실적
    - 우리금융 : 9천만주(11.8%)를 6,800원에 공모 및 상장 완료('02. 6)
    - 조흥은행 : 국제경쟁입찰('02.10) 진행중
      - 공자위 매각소위, 신한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02.12)
    - 서울은행 : 하나은행과 합병('02.12 합병은행 출범)
    - 제주은행 : 신한금융지주에 지분 51% 매각('02. 4)
    - 대한생명 : 한화컨소시엄에 지분 51% 매각('02.10)

### 34) 企業規制緩和 : 538(03-31-34)

- 주한 미상공회의소장의 회견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심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경제부총리는 실태와 개선책을 조사해 보고 바람('01.11.12, 국무회의시)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처리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01년 하반기)하여 창업·공장설립·외국인 투자분야 등에서 305건의 규제완화
- 경제계 의견수렴 및 규제완화 지속 추진
  - 「정·재계 간담회(5.16)」, 「여야 정책포럼(5.19)」 등을 통해 기업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5.31)」 마련
  - 전경련 등 재계로부터 분기별로 기업이 경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대상을 건의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

### 35) 中國의 WTO加入 對備 徹底 : 539(03-31-35)

-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될 것임. 중국시장이 개방되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므로 우리도 더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국이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만큼 민·관 합동으로 테스트포스를 구성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 경제인들에게도 교육시켜 주기 바람('01.11.12, 국무회의시)

- WTO가입 등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 대책 협의('01.11.17)
-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책수립 회의 개최 및 종합 대책반 구성 ('01.11.22)
  - 재경부 등 17개 정부부처와 KOTRA 등 3개 기관이 참석하여 중국의 WTO 가입 관련 대응방안 점검 및 종합대책반 구성 등 부처간 공조체제 가동
- 한·중 교류협력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중국전문가포럼」 창립 ('01.10.11)
  - 한·중 중장기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고 협의하기 위해 민·관·학 등 각계 중국전문가 53명으로 구성
  - 3차례 회의('02. 2.22, '02. 7.11, '02.12.17)를 통해 한·중 협력 방안 및 웹사이트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터넷 게재와 보도자료를 통해 대 국민 홍보 추진
- 중국종합정보시스템인 「중국전문가포럼 웹사이트」 구축('02. 4. 8)
  - 중국전문가간 네트워킹과 정보제공 등을 통한 중국진출 기업 지원체제 운영
- 중국의 경제권역별 특성과 진출방안, 한·중 중장기 경제협력방안과 전망 등 한·중 양국간 교류증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5건)으로 정책개발
-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경제협력 현안 논의('02. 5.13, 북경)
  - 참석 : 아측(부총리등 14명),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등 12명)
- 한·중간 공동연구 채널인 「21세기 한·중 경제협력공동연구회」 발족 ('02. 5.13, 북경)
  - 한·중 양국이 각 10명씩(정부 4인, 연구원 3인, 기업 3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양국간 중장기 협력방안 공동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모색



### 36) 巨視經濟의 安定的 運營 : 549(03-31-36)

- 성장잠재력에 맞는 성장, 3%내외의 물가안정, 저금리체제의 유지, 국제수지 개선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금년에는 거시경제가 최대한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함
- 사회안정망의 확충이 대중적 구매력을 창출시켜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이 경제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02. 2. 4, 재정부업무보고서)

- 탄력적 재정·금융정책의 운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
  - '02년 대외여건이 부진한 속에서도 6%의 성장, 전년대비 8.2%의 수출 신장, 70억불이상의 경상수지흑자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연평균 2.7%로 안정되고, 실업률도 연간 3% 이내로 안정
  - 시중금리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업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
  - 불안요인이던 가계대출과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화대책(2.25, 5.22, 9. 4, 10.11)에 힘입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
- 사회보장정책이 내수진작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용
  - 영아전담시설기준 완화,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등 범정부차원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02. 3)하여 추진
  - '03. 2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 추진
  - 연기금의 직접주식투자 규모를 확대('02, 2.3조원→ '03, 4.9조원)하고 기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전환 추진

### 37) 카드使用 좀 더 擴散 推進 : 550(03-31-37)

○ 카드사용을 전면화하면 투명과세,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며, 세수가 필요이상 늘어나면 세율을 내려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02. 2. 4,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서)

- 가맹점 확대 지속 추진('02 연간)
  - 타업종에 비해 가맹비율이 낮은 업종 선정(소매점, 학원, 서비스업, 집단상가 등)
  - 「집중홍보기간」 설정,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조사 등 가맹점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02.11월말 현재 소비자상대업종의 87.7% 가맹('01.12월말 81.1%) 특히, 음식숙박업 94.8%, 병·의원 98.3% 가맹
-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사용취약분야 관리 강화
  - 성형외과 등 6개 병과 및 입시학원 등에 「신용카드 환영」 스티커 부착 등 자율적 신용카드 사용분위기 조성('02. 3~6)
  - 미가맹점과 결제기피자 등에 대한 조사 등 중점관리('02. 2~)
    - 신용카드 결제기피업소로 고발횟수가 많은 업종,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업종 등 14개 분야에서 중점대상자 선정하여 조사 등 관리 강화
-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근절대책 추진
  - 위장가맹점 상시 감시체계 구축('02. 3~)
    - 위장가맹점 혐의자 자동선정프로그램 개발·활용
    -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신용카드사에 실시간 자동통보프로그램 개발로 대금지급중지 등 적기 조치
    -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 설치 운영

- 인터넷쇼핑몰 등을 이용한 위장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와 의뢰업체간 거래내역 자료 수집, 각 지방청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에서 분석·활용
- '02년 적발실적 4,387건(전년 대비 144.6%)
  -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제도 활성화('02. 4)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홍보문구 게재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연장 및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38) 女性保育問題 解消方案 마련 : 554(05-31-38)

- 여성문제가 국민의 정부 하에서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보육문제가 미흡하므로 금년 중 보육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복지부 등 관계장관과 협의·해결방안을 마련할 것('02. 2. 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추진계획개요
  - 재경부 주관하에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02. 3. 6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영아·야간·휴일·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추진
  - 이를 위해 '02년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28억원을 추가지원하고 '03년부터 보육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02년:4,354억→'03년:6,112억)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보육시설 확충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02. 4 보육사업안내 관련규정 개정)
- 가정보육모 양성·배치를 위해 전담 T/F 구성('02. 4)
- 야간·휴일·24시간 등 특수 보육시설 지원('02. 4 지원기준 마련 및 예산확보)
- 초등학교를 보육시설로 활용(교육부와 협의 진행 중)
- 공동육아제도 활성화('02. 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상정)
- 직장보육시설 인건비지원요건 완화('03.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02. 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상정)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02. 4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상정)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역할 재정립

### 39) 民生安定 努力強化：606(03-31-39)

- 추석이 임박하고 호후적조 등으로 농수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하여 추석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대책을 강화
- 경제부총리, 건교부장관 등 경제부처가 합심해서 주택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가임대료도 주택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점을 두어 처리할 것('02. 8.27, 국무회의시)

- 물가대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02. 9. 2)
- 사과, 배, 쇠고기, 조기, 참기름 등 22개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 염가판매 등 수급안정 도모
- 추석 성수품 운반차량의 도심·부도심 통행제한 해제 등 수송대책 추진

-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 등
- 부동산시장 과열현상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 추진
  - 「투기과열지구」 1순위요건강화, 양도세 과세강화(3주택이상·고급주택 實去來價과세 등), 담보대출 축소유도 등 「9. 4 주택시장안정대책」 수립추진
  - 부동산종합전산망을 통한 상시점검체제구축, 「투기지역」 내에서 양도세 실통거래가 과세 강화 등 「10.11 주택시장안정대책」 수립추진
- 상가임차인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기사행 여건 마련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전국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통조사결과(중소기업청 주관, '02. 6.11~7. 5)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사업등록변경 및 확정일자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완료 ('02. 9, 국세청)
  - 조기사행 법률 개정('02.8.26, 시행일 변경 : '03. 1. 1→'02.11. 1)에 따라 시행령 조속제정('02.10.14) 등 후속조치
  -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확정일자 신고업무 실시 (국세청)

#### 40) 失業問題 綜合對策 樹立 : 10(03-70-01)

-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98. 3.26, 국무회의시)
- 실업자의 78%가 7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실업대책과 공공근로 사업은 산술적 계산을 해서 안배하기보다는 7대도시에 집중되어야 함. 더욱이 20대 실업자가 전체의 41%에 달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99. 3.16, 국무회의시)

- 「'98실업문제종합대책」('98. 3.26), 「'99종합실업대책」('99. 1.19), 「2000년 종합실업대책」('00. 1.11), 「2001년 종합실업대책」('01. 1.17), 「청소년실업 종합대책」('01.12.17)을 수립·추진
  - 단기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등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산성·공공성이 높은 공공근로 사업 실시 ('02년까지 총 341.4만명 투입)
  -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특성별 실업대책 추진
    -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02.10 현재 26.6만명(목표 30만명)에게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실시
    - 고용유지 지원금('98), 전직지원장려금제도('01) 등으로 기업의 구조 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98~'01년간 고용안정사업으로 총 5,951억원 지급)
    - 40~50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령자 특별직업훈련과정』을 운영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04. 1부터 적용
- \* 실업률이 '98년 6.8%에서 '02년 5월 이후 2%대(11월 2.7%)로 안정

#### 41) 經濟政策關聯 對外弘報 強化：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정부의 홍보논리와 홍보노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

- 해명자료 134건 배포('98. 5. 1~'98.12.20), 오보내용 231건 시정
- 중점홍보과제 선정, 전략적 홍보 시행：17회 개최, 38개 안전심의
- 외신에 대한 경제홍보 강화
  - 미국 PR협회로부터 「공공부문 홍보」 Silver Anvil상 수상('99. 6)
  - 정부경제홍보센터를 통한 대외신 서비스 강화('99. 1~12)
  - 외신대변인 외신기자 인터뷰(61건) 및 간담회(8회)(99. 1~12)
- 지역경제 설명회(장관)등 각종 경제홍보설명회 개최
- 시민단체와 연계한 전국 12개 지역 순회토론회('99. 9.30~12.16)
- 홍보자료 발간배포：책자, 비디오 등 5종 37건
- 신문광고:4종 14회；중앙일간지(10개) 및 경제지(4개)( '99. 6.28~30)
- IMF 2년 경제홍보('99.12. 3)
  - 「IMF 2년」의 성과를 서울시내 65개 전광판에 홍보('99.12. 2~12.31)
  - 「IMF 2년」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12. 7)

#### 42) 企業不實 判定結果 後續措置 徹底 推進 : 65(03-70-05)

- 부실판정 기업들과 거래해온 협력업체들의 권익보호와 존립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98. 6.18,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퇴출기업의 어음보유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  
억원내에서 특례보증 지원(‘98.12월말 완료)  
※ ‘98.12월말까지 3,157억원 보증지원
- 퇴출기업과 거래해온 협력업체에 운전자금 지원

#### 43) 財界와의 協力 強化 : 113(03-70-07)

- 재계와의 협력 강화
  -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98. 7. 7, 국무회의시)
- 99년도 수출입 확충방안 발표(‘99. 3. 9)
  - 필요시 약 15억불의 공적재원을 추가로 지원
  -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재원 확대(2조원→3조원) 및 수출입은행 원화  
금융 지원 확대
-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확대(‘99. 5. 1)
  - 내국신용장제도 활성화 : 기한부 신용장 허용, 외화결제 허용
  - 포괄금융 융자대상 확대(2천만달러 → 3천만달러)
- 연불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환·이자율 변동보험 도입



#### 44)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98. 8.11, 국무회의시)

- 「재정경제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98. 9.23)

#### 45)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 : 138(08-70-09)

- 8.15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거리행진을 취소하고, 동 행사 예산을 수해대책비로 전용하여 주기 바람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 수재민을 위로·격려
- 각 장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수해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  
( '98. 8.11, '98. 8.17, 국무회의시)

- 수해복구 지원 : 양주군 일영소재 농가(직원 45명)
- 수재의연금 모금기탁 : 1,000만원
- 침수지역 위로방문(재경부장관) : 파주시, 평탄면 일원

#### 46) 訪日 後續措置 徹底: 157(09-70-12)

- 1998.10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철저('98.10.12, 국무회의시)

- 양국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 제1차 한일 각료간담회 개최 ('98.11, 가고시마)
  - 제1차 한일 고위경제 협의회 개최 ('99. 3)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협력
  - 미야자와 플랜 자금지원:
    - 한국은행과 일본은행간 50억불 스왑 계약 체결 ('99. 6)
    - 한국 산업은행의 일본 수은 차관 10억불 도입 계약 체결 ('99. 9)
  - '98.10 정상 회담시 합의된 30억불 차관 계약 체결
    - 기은, 한전, 가스공사 등 23.5억불 (정부지급보증)
    - 포철, SK해운 등 6.5억불 (정부보증 없음)
- 한일 투자 교류
  - 한일 투자협정 체결 합의 ('98.11), 제1차 민관 투자촉진협의회 개최 ('98.12)
  - 한일 문화산업투자설명회 개최 ('99. 7 동경, 오사카)
- 한일 이중 과세 방지 협약 체결 ('98.10)

#### 47)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98.11.23, 국무회의시)
- 2000년 1월 1일 연도전환중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을 위한 비상대책 수립
  - Y2K 문제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와 재경부 및 산하기관(7곳)의 비상연락체제구축
  - 재경부 및 산하기관 7곳에서 시스템 백업을 정상적으로 완료('99.12.31)
  - 재경부 본부 연도전환 및 정상가동 확인('00. 1. 1~'00. 1. 4)
    - 주전산기 및 W/S, DB, 재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산하기관 연도전환 및 정상가동 확인('00. 1. 1~'00. 1. 4)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7개기관

#### 48)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 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국·과장 간부의 출신지역별·학교별 현황점검('99. 2. 9, '99. 7.10기준)
- 승진인사시 업무추진력,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반영
- 전보인사시 소관업무에 대한 경력, 전문성, 지역별·학력별 출신고려
- 업무추진능력, 전문성, 청렴성, 개혁성을 인사기준으로 설정·운영
  - 특정 실·국 보직시 출신지역별 안배 고려 및 특정학교 편중 방지

#### 49) 설 連休 對策 : 183(09-70-17)

- 구정 성수품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철저히 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99. 2. 2, 국무회의시)

-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수립·추진(물가대책장관회의 개최 : '99. 1.19)
- 대책기간 ('99. 2. 1~2.15, 15일간)을 설정하여 사과, 배, 쇠고기, 조기, 참기름 등 19개 품목을 중점관리
  - \* 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에 그침

- 제수용품 등 설날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 평시보다 108~312% 확대 공급(조기, 명태, 오징어 등)
-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3.5톤이상 15톤이하 성수품 운반 화물차량의 도심 및 부도심 통행제한 해제
- 생산자단체를 통한 설날 성수품 염가(10~15%) 판매('99. 2. 8~2.15))
  - 전국 농·수·축·임협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특판행사 실시
-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99. 1.26~2. 8)
  - 원산지표시지도 및 단속을 하여 과태료 부과(33건)

## 50) 水害防止 綜合對策의 蹉跎없는 推進 : 264(08-70-25)

-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99. 8. 3, 국무회의시)
  -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 ('99. 8.10, 국무회의시)
  -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99.12.28, 국무회의시)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 ('00. 3.21, 국무회의시)
  - 철저한 재해예방 ('00. 8. 1, 국무회의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허용요건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감사등을 의식하여 수의계약체결을 기피한다는 지적
  - 당초 규정에서도 긴급한 수해복구가 필요하여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때는 비상재해에 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동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중 “비상재해”를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로 개정('00.12.27)

## 51) 8.15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새천년을 맞는 각분야의 국정개혁방향이 8.15경축사에 담겨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99. 9. 7, 국무회의시)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8.15 대통령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01. 1월부터 재 실시
  -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
    -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율체계 개선
    -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상장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 도입
    -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률 인상(10% → 20~30%)
    -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등
  -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것을 실지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
    - 과세특례자(연간 2,400~4,800만원 미만)는 과세방식을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발전시키고, 간이과세자(연간 4,800 ~ 1억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 중산·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키, 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골프장이용료
- ’99.12월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률 및 시행령 개정

## 52) 對 國民 課題 弘報 : 282(08-70-29)

-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임
-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임  
(‘99. 9.21, ‘99.10. 4, ‘99.12. 7, ‘99.12.21, 국무회의시)

- 추진실적
  -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배포(5회), 15개 주요일간지 광고(9.22~9.28) 및 홍보 팜플렛 배포(9.22, 220만부)
  - 관련업계 대표간담회(2회)
  - 재정경제부장관 초청 주요언론사 논설위원간담회(10. 8)등 개최

## 53) 國家債務現況에 대한 正確한 內容 弘報 : 374(03-70-30)

- 우리 국가채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임(‘99.10. 4, 국무회의시)

- 「국가채무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기자설명회 개최 (‘99.10.18)
- 「국가채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나라경제에 기고(‘99.11)
- 관련 홍보자료 작성·배포(‘99.10.21~30) : 5만부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추진
  - 법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99.11.5)
  -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당정협의(‘99.11.11)

## 54)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主力 : 298(03-70-31)

-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안정 개선 ('99.12.28, 국무회의)
- 200만개 일자리 창출대책('00. 1),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00. 3),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00. 4) 및 수차례의 중산·서민층 대책회의 개최
-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 금융 및 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생활 안정
  -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하여 봉급생활자 등 세 부담 완화
  -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신탁(ESOP) 제도 활성화 지원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
  - 전·월세 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55)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304(03-70-32)

- 금년도 각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국가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선진적인 거시경제 운용, 물가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성, 소득분배 개선 및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개방적이고 투명한 전자재정부 구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00. 3.20)

## 56)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선거과정에서 국정을 왜곡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설명하고 대처해야 함('00. 3.21, 국무회의시)

-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00. 2)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
  - \* 2000년 외국인의 주식순매수 규모 : 11.4조원(사상최대)

## 57) 國家資産의 效率的 管理 : 353(03-70-37)

-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수입을 늘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필요('00. 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 민간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의 사용·수익권의 전대허용으로 민자유치 촉진
  - 국유재산 임대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체감제도 도입
  - 미활용 재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국유부동산 매각가격의 체감제도 도입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국유재산의 대부·신탁수입에 대한 지자체 귀속비율을 상향조정(30→50%)하고, 매각대금 귀속비율은 지자체별 관리실적평가에 따라 차등(30→20~30%)하는 제도로 개선
  -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위탁 확대
  -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분양형 신탁제도의 도입



## 58) 今年度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부처가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하며 장관들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00. 5. 9, 국무회의시)

- 선진적인 거시경제 운용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96년 이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
  - 국제수지 흑자기반 정착노력으로 2000년도 122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달성
-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
  - 고유가에 따른 대응방안 추진,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 등으로 2000년도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2.3%로 안정
-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성
  -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함으로써 4대 개혁의 기본틀을 조성
- 디지털 경제로의 경제운용 패러다임 전환
  - 지식기반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화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소득분배 개선 및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과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개방적이고 투명한 전자 재경부 구현
  - 목적세 통폐합, 비과세·조세감면 축소 및 납세절차 간소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를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

## 59) 秋夕連休와 疎外階層 慰勞 : 382(08-70-4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안정, 교통대책, 체불임금 해소 등 추석연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li> </ul> |
|---|
- 정부비축·생산자단체 방출물량 확대 및 민간 보유물량 출하확대 유도
    - 대책기간('00. 8.24~9. 9, 17일간)을 설정하여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19개 품목 중점관리(최고 3배까지 확대 공급)
  -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통행제한 완화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매장, 직판장 등에서 추석성수품 5~10% 염가판매('00. 8.28~9.12)
  - 사업자단체에 협조요청('00. 8.22), 유통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00. 9월초)

## 60) 證市安定과 經濟不安心理 解消 : 385(03-70-4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해소와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li> </ul> |
|---|
- 상장법인의 주식매입여력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 제도 도입('00.12)
    - 이사회결의만으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01. 3)
  - 장기안정적인 주식 수요확충 방안 마련
    -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마련('00.10, '01. 4)
    -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00.12)
    -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Mutual Fund 허용('00.12)
  - 시장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

## 61)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

- 인건비 등 부당집행 개선
  - '00년 타 예산과목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누진제 폐지 지연 등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과다지급 개선
  - '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향후 발생소지 제거
- 연차휴가일수 과다산정으로 퇴직금 과다지급 개선
  - '01년 개정된 노동부 지침을 공시관련 규정에 반영
- 한국조폐공사의 노조전임자 과다운영 시정조치('01. 1.13)
  - 전임자수 감축 : 2명(11名 → 9名) → 연간 9천만원 정도 원가절감

## 62) 4大部門 12大 核心課題의 蹉跎없는 推進 : 392(03-70-46)

- 재경부장관 등 관계부처장관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00.10. 4,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 우리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있으므로 관계장관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4대부문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00.10.31, 국무회의시)

- 총 5차례 걸쳐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점검회의 개최('00.10.31~'01. 3. 2)
- 시장원리에 입각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이행 ('01. 3 이후)
  - 상시 신용위험 평가시스템 구축('01. 3)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시행('01. 9)

<4대부문 개혁의 주요 성과>

- 잠재 부실기업의 정리와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
  - 제조업 부채비율 : ('98) 303% → ('01) 182.2%
-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자금흐름 정상화
  - 은행 당기순이익 : ('98) △20.7조원 → ('02상) 4.0조원
-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 11,125건의 행정규제중 6,060건 폐지, 3,166건 개선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과 상생의 노사문화 유도
  - 성과배분제 실시업체 : ('99. 1) 689개 → ('02. 1) 1,172개

### 63) 公共部門 勞使紛糾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00.10.23, 국무회의시)

- 인력구조조정
  - '01. 2.28자 세무대학 폐지로 68명 인력 감축
  - '00.11 담배인삼공사의 인력 491명 감축
- 퇴직금누진제도 개선
  - 퇴직금누진제 폐지방침 발표('98.12.29)
    - 산하기관 15개 기관의 퇴직금누진제 개선 완료
  -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제를 개선완료 함으로 경영부실을 방지

## 64) 市場의 信賴回復을 위한 努力 : 399(03-70-49)

- 현재의 경제문제 해결은 시장 원리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시장이 금감원과 은행 정부를 신뢰할 때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00.10.31, 국무회의시)

- 장·차관 주요여론홍보실적
  - 방송(TV,라디오) 출연 : 85회, 신문 인터뷰 등 : 45회, 강연 : 81회 등
- 주요경제홍보실적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 1.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협의회 개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협의회 개최(10개도시 : 10회)</li> <li>○ 경제교육 실적 : 7회(3,296명)</li> <li>○ TV토론회 개최 : 5회</li> </ul>  |
| 2. 정부신뢰회복 관련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홍보물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자: 18회, 423,400부</li> <li>- 팸플릿: 15회, 410,500부</li> <li>- 영상간행물: 9회, 4,400개</li> </ul> </li> <li>· 홈페이지게재: 국문 4,827회, 영문 512회</li> <li>· 전자뉴스 Korea Economic updatet송부:(1회당, 3,805명)6회</li> <li>○ 광고(7회) 및 설문조사(4회)</li> <li>○ 재경부 홈페이지개선</li> </ul> |
| 3. 정부신뢰회복 홍보 관련 종합점검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홍보위원회운영 : 3회 개최</li> <li>○ 경제홍보대책회의 개최 : 30회(매주 금요일개최)</li> <li>○ 경제부처공보관회의 개최 : 2회</li> <li>○ 정책심포지움 개최 : 1회</li> </ul>   |

## 65) 설 綜合對策 마련 : 410(08-70-50)

- 물가관리, 체불임금, 교통문제 등 설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불우이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 바람('01. 1.19, 국무회의시)

-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 대책기간('01. 1.11~1.22)을 설정하여 정부비축·생산자단체 방출물량을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 출하확대를 유도
    - 사과, 배, 쇠고기 등 제수용품중심으로 2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여 평시대비 최고 3배까지 확대 공급
  - 성수품 수송화물차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도심 통행제한 완화
-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 농협, 수협, 등의 매장, 직판장 등에서 설 성수품 5~30%염가판매('01. 1.11~23)
  -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01. 1.19~22, 공정거래위원회)
    - 원산지표시 특별단속('01. 1. 8~1.23)
-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 인상 방지
  -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관계기관합동지도·점검반 운영

## 66)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전보·승진 인사시 업무추진능력과 자질,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

반영하여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따른 인사청탁을 근원적으로 차단

- 부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 67)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부처별 월드컵 대책 발굴·추진 할 것('01. 5.29, '02. 3. 5, 국무회의시)
-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며, 월드컵을 계기로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인프라와 우리사회의 전반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01. 8.14, 국무회의시)

- 월드컵 대책(재정경제부 소관) 추진
  -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 인수자금 5,285억원 지원('98~00, 재정융자특별회계 3,535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1,750억원)
  - 월드컵 기념주화 발행 승인('00.11.22)
  - 경기장 건설용품 관세감면('01. 6, 품목수: 약 92개 품목, 감면율: 85%)
  - 해외 원화환전 편의 대책 수립 및 추진('01. 9. 8)
  - 대회참가단 및 반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대책 추진('00.12.14)
- 월드컵 경제분야 지원단 운영
  - 경제분야 지원단 발족 및 산하 실무지원단 구성('01. 9. 5)
  - 월드컵 민관합동토론회 개최('01.10.24)를 통해 민간의 참여 유도 및 월드컵 경제적 활용분 조성
  - 경제분야 지원단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추진실적 점검('01. 9~'02. 5)
  - 기업설명회('01.12.13),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의 월드컵 활용분 조성
-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 수립 및 추진

- 월드컵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관로 지원('01.10~'02. 6, 5486억 지원)
-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전자로봇 월드컵, 한일공동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국가 및 상품이미지 제고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확대
- 디지털방송관 설치, 사이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아시아 IT 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여 IT 강국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IT산업의 도약기반 마련
-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및 홍보관 건립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홍보 및 지방경제 활성화

## 68) 電子政府 事業의 差跌없는 推進 : 531(07-70-59)

- 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01. 8. 7, 국무회의시)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2.1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5개 기금 대상 시범운영
  - '03. 1, 전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전면운영

## 69) 電子政府具現을 위한 法令整備 早期 推進 : 545(07-70-62)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 추진  
( '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회의)
- 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01.12.24, 국무회의시)

- 국고금관리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03. 1. 1)
-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2.1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개 기금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 '03. 1 전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전면운영



## 70) 商街賃貸借保護法 施行準備 徹底 : 596(05-70-64)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당한 임대료인상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할 것('02. 4.30, 국무회의시)
- 임차인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합동대책반」 설치하여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추진('02. 5)
    - 「관계부처 실무점검반(반장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을 편성·운영하여 상시 점검체계 구축('02. 5)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취지 및 법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 \* 반상회보 게재, 홍보팜플렛 300만부 전국배포('02. 5)
      - \* 방송출연, 인터넷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02. 5~)
    - 국세청 및 전국 세무관서에 「임대료 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대료 과다인상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02. 5~)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8개 임대사업자, '02. 6.14)
    - 지자체(25개) 및 지방중소기업청(50개)에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
  - 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질없는 조기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 전국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소기업청 주관, '02. 6.11~7. 5)
      - \* 3만개 임차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을 등을 조사
    - 법 시행전까지 '사업등록변경 및 확정일자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완료 ('02. 9, 국세청)

- 조기사행 법률 개정(8.26, 시행일 변경 : '03. 1. 1→'02.11. 1)에 따라  
시행령 조속제정('02.10.14) 등 후속조치
-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확정일자 신고업무 실시(국세청)

## 71) 秋夕 綜合對策 마련 : 609(03-70-66)

- 추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점검, 주요 품목의 확대 공급 및 서비스요금 안정 지도 등 제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02. 9. 3, 국무회의시)
-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수립·추진(물가대책장관회의 개최 : '02. 9. 2)
  - 대책기간 ('02. 9. 6~9.19)을 설정, 22개 품목 중점관리
  -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을 104~238% 확대 공급
  - 생산자단체를 통한 설날 성수품 염가(5~30%) 판매(9. 6~9.20)
  - 성수품 유통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02. 9. 6~9.19)
  - 서비스 요금 안정지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총 169회)를 개최하고, 774개 물가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격표시불이행 등 1,623건의 부적합행위를 적발하여 처분조치

## 72) 冬節期 對策 마련 : 611(05-70-67)

-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전 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02.11. 5, 국무회의시)

- 서민생활 물가안정
  - 이동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를 통한 물가오름세 차단
  - 248개 지자체에 동절기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02.11.25~12.20)
  - 무·배추 계약제배물량을 집중 출하하고, 젓갈류 출하 독려
  - 주거밀집지역 등에 임시 김장시장(전국 800개소)을 개설
- 서민·근로자를 위한 서민주택금융 지원 강화
  -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금리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0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
- 연탄·석유 등 난방용 유류의 수급 및 가격 안정
- 동절기 실업대책사업 추가 및 조기실시, 동절기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 教育人的資源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9(06-37-01)  | 학교급식 확대   | 1998. 5. 6 |
| 50(06-37-02)  | 스승모시기행사 적극동참  | 1998. 5. 6 |
| 64(06-37-03)  | 교육개혁 추진   | 1998. 6.16 |
| 87(06-37-04)  | 교원 직무경감 및 정보화교육 자격증 제도 방안 검토                                | 1998. 7. 1 |
| 165(06-37-05) | 교원정년 단축의 원활한 추진   | 1998.12. 1 |
| 237(06-37-06) |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 대처 철저  | 1999. 4.12 |
| 254(06-37-07) | 대학내 면학분위기 조성  | 1999. 6.18 |
| 268(06-37-08) | 재난발생시 대피요령의 철저한 교육  | 1999. 8.16 |
| 313(06-37-11) |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불균형 해소<br>-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분야별 수급 불<br>균형 해소 대책 수립 | 2000. 2.16 |
| 323(06-37-12) | 지방대 육성대책 강구   | 2000. 2.22 |
| 356(06-37-13) | 과외금지위헌결정관련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                                      | 2000. 5.22 |
| 372(06-37-14) |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기초교육 강화                                       | 2000. 4.29 |
| 373(06-37-15) |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향상  | 2000. 4.29 |
| 374(06-37-16) | 평생교육 진흥   | 2000. 4.29 |
| 416(06-37-17) | 선진국 수준의 의무교육 실시   | 2001. 1.22 |
| 500(06-37-20) | 교육정보화의 지속 추진  | 2001. 3.17 |
| 502(06-37-22) | 시간강사 대책 수립  | 2001. 3.17 |
| 524(06-37-23) | 기초학문분야 발전방안 마련  | 2001. 5.22 |
| 558(06-37-25) | 학생들의 자연계 진출 촉진방안 마련   | 2002. 2.15 |
| 559(06-37-26) | 농어촌 교육개선방안 마련   | 2002. 2.15 |
| 10(03-70-01)  | 실업 세부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홍보노력의 강화  | 1998. 4.28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35(07-70-22) | 과학기술인력의 병역혜택 확대 검토      | 1999. 4. 1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31(08-70-59) |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1. 8. 7 |
| 545(07-70-62)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 추진  | 2001.12.24 |

## 1) 學校給食 擴大：49(06-37-01)

- 신체발달 시기인 고등학생에 대해 따뜻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시급함  
'98년에 70%, '99년 전반기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적극 독려할 것  
( '98. 5. 6, 국무회의시)

- 고등학교 급식확대 재원마련 노력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개정('98. 9)하여 고등학교에도 시·군 및 자치구가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요자 중심의 급식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유도
  - 「시·도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급식시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경감토록 준칙 시달('98.11)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위탁급식시 부가가치세를 면제('99. 4)
- 2개년간('98~'99) 1,623개 고등학교에 신규 급식확대
  - ('97) 249개교 급식(13.0%) → ('99) 1,872개교 급식(96.3%)
- 급식확대를 위한 급식시설비 2,582억원 지원(총 급식시설비의 76.5%)

## 2) 스승모시기 行事 積極 同參 : 50(06-37-02)

- 5월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 국무위원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스승 모시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 우리가 일일교사로도 참석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생님께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할 것('98. 5. 6, 국무회의시)

- 장관, 차관 및 교육부 직원 은사초청 행사('98. 5.15)
- 모교 또는 자녀 재학학교 방문 및 일일교사 참여('98. 5, 2주간)
-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98. 5.12)
- 모범교원 청와대 초청 오찬 격려('98. 5.15)

## 3) 教育改革 推進 : 64(06-37-03)

- 국민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21세기 대비를 위해 교육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98. 6.16, 국무회의시)
- 21세기에 대비해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함.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함('99. 5. 4, 국무회의시)

- 교육관련 여론수렴 체계 확립
  - '교육정책 리포터' 운영, 학교현장개혁지원단 활동,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결성 및 운영 지원 및 지역별 워크숍 개최 등
-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수립·추진('99.12~)
- 교육개혁 추진 평가 실시('02. 5~11)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주관

#### 4) 敎員 雜務輕減 및 情報化敎育 資格證 制度 方案 檢討 : 87(06-37-04)

- 敎원들의 잡무근절 方案을 철저히 강구 바람  
(‘98. 7. 1, 國政과제 점검회의시)

- 초·중등 敎원 11명으로 敎원업무경감연구팀 구성(‘00. 3~9)
- 敎원업무경감 홈페이지 개설·운영(‘00. 4~)
- ‘敎원업무경감대책’ 수립 및 추진(‘01. 7~)
- 敎원사무보조인력 등 학교현장에 각종 업무지원 인력 배치(‘01~)
  - 敎원사무보조인력 : (‘01) 1,757명 → (‘02) 3,723명
  - 전산보조원 : (‘01) 3,280명 → (‘02) 3,820명
- 수업부담 경감을 위하여 敎원정원의 대폭적 증원 : 23,600명 증원(‘02~‘03)
- 불필요한 공문서 및 행사동원 억제
  - 각종 선거 투·개표 사무요원으로 敎원동원시 최소한 동원토록 관련기  
관에 협조 요청(‘02. 5)
- 정보화관련 자격증 취득敎원 우대 方案 마련
  - 敎사임용, 敎育전문직 임용 및 敎원 전보 승진 평정시 가산점 부여
-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 및 敎원정보화 연수 강화

#### 5) 敎員停年 短縮의 圓滑한 推進 : 165(06-37-05)

- 敎원정년 단축은 敎育개혁을 위해 중요한 일로 성공적으로 추진하  
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퇴직敎원 활용대책을 강  
구하기 바람 (‘98.12. 1, 國무회의시)



-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교원정년 단축 논의 시작('98. 6월 말)
-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정년 조정 필요성 대통령께 보고('98. 8.27)
- 교육부 입장 대통령께 보고('98.11.10)
- 「교육공무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99. 1. 6)
  -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 시행('99. 8.31)

## 6) 집단따돌림 등 學校暴力 對處 徹底 : 237(06-37-06)

-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처 지시('99. 4.1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학교폭력은 치안당국, 학교, 학부모와 사회 등 4자가 협력해 나가야 퇴치에 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 자신이 고발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자기 인권을 지킨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육성해 주기 바람
- (경상남도('99. 4.23), 경기도('99. 4. 24)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국무조정실 주관)
-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및 학생 상담의 활성화 추진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유공자 선발 표창
  - ‘ '02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02. 3) 및 ‘학교폭력근절대책’ 수립(국무조정실과 공동수립, '02. 5)
  - 교원의 전문적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 특별연수('02) : 10,379명
  -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운영('02)

- 학생 · 학부모 · 학교의 공동참여하에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유도
-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피해자 보호장치 및 가해자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조치
- 학부모 계도 및 정보윤리 교육

## 7) 大學內 勉學 霧圍氣 造成 : 254(06-37-07)

○ 대학생들의 과다 음주행위와 학내 흡연문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99. 6.18, 충청남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전개('99. 9. 3)
  - 건전한 음주 · 흡연 문화 정착을 위한 학내 캠페인 활동 전개
  - 음주 · 흡연 폐해 관련 시청각 특강 실시
  - 대학 내 금연구역 설정 및 관련시설 정비 등
- 음주 · 흡연 자제지도 및 홍보
  -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99.12. 9~11) · 학생과장협의회('99.12.16~19) 개최시 및 대학내 교직원회의시 특별 당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 간부회의, MT, 각종 축제시 특별지도
  - 학생회 차원의 자체 정화 캠페인 및 학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계몽 활동 전개
  - 대학 내 금연구역 확대 실시

## 8) 災難發生時 待避要領의 徹底한 敎育 : 268(06-37-08)

-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교교육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적극 검토('99. 8.16, 을지국무회의시)

- 제7차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시 안전교육 내용 적극 반영
  -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기타 교과서(기술·가정)에 반영
- 전국 시·도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개교 이상 안전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 각종 계기교육 및 특별활동 시간 활용 교육(교직원 및 학생 안전 교육)
  - 학교별 안전교육담당자 지정(전국 초·중·고)
-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 학생수련 시설의 시설안전 기준 설정 및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 제정·시행
-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훈련·활용 : 18,264명('01. 3~12)
- 유아교육종합계획 시달('00.12) 및 유치원별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01. 4)

## 9) 尖端技術 發展에 따른 不均衡 解消 : 313(06-37-11)

- 첨단기술발전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분야별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해소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00. 2.16, 과기부·산자부·환경부·국방부·여성특위 업무보고시)

- 학문분야별 석·박사 인력수급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실시('00. 4~'01. 3)

-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원 정원정책 수립('00. 4~'01. 7)
  - 연구조사 결과를 대학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지속 반영
- 범부처 차원의 인력수급전망체제 구축방안 추진('01. 3~)
  - 국가 전략 첨단기술분야 인력양성 대책반 구성·운영('01. 4~)
- 국가 전략 첨단기술분야 인력양성방안 정책연구 추진('01. 3~)
  - 국가 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01.12~)
-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02. 3~)

## 10) 地方大 育成對策 講究 : 323(06-37-12)

- 지방 대학에 가는 우수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대학 육성 대책을 강구 할 것('00. 2.22, 국무회의시)
- 지방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차별이 종식되도록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할 것('00.11. 8, 광주지역인사 오찬시)

-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추진('00.12.27)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노력
  - 관계부처의 강한 반대 의견 제시로 정부입법은 추진 유보('01.12.20)
-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역 평생학습센터의 중핵기관으로 육성
- 지방대학 학생 취업 기회 확대
  - '대학생 직업능력개발 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01. 3)
  - 취업 부서의 인력확충 및 기능 활성화 방안 추진('01.11.26)
- 우수 학생·교수 유치여건 조성

- 지방 사립대학 기숙사 확충 용자 배정
- 국립대 기숙사 투자예산 지원
- 전국 대학교 학생기숙사 입사현황 조사 완료('01. 8)
-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기숙사 확충을 위하여 가칭 「대학시설의운용및 투자촉진에관한특례법」 제정 추진
- 국립대학 양적 감축·내부 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 추구
  - 국립대학 구조조정 평가사업을 통한 특성화 및 내부개혁 유도 추진
  - 국립대학의 총보직 한도제 실시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01. 3)
- 지방대학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사업계획 평가·지원

## 11) 課外禁止違憲決定관련 徹底한 後續對策 마련 : 356(06-37-13)

-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제정 전이라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액과외 방지 방안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충실히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속적으로 특기·적성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입학전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과외의 필요성을 줄이고 동시에 이를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할 것('00. 5. 2, 국무회의시)

- 공교육내실화 추진 기획단 구성·운영('01. 3)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01. 4. 8)
- '02학년도 대입제도 홍보단 구성·운영('01. 4.11)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 수립('01. 7.20)
- '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시안 확정·발표('01.12)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1. 7. 7)
- 공교육내실화 대책 수립·추진('02. 3.15)

## 12) 幼稚園과 初·中等學校 등 基礎敎育 強化 : 372(06-37-14)

-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기초교육 강화
- 정보화 시대라도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 실시  
( '00. 4.29, 敎育부 업무보고서)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시행 기본계획 수립('99. 7)
-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보급('01.11)
-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 실시 및 현황과약
  -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02. 4) : 전체 학생의 약 1.0%(초4~고1)
-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02.10.15)
- 시·도별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강화
  - 시범학교 운영, 학습부진학생지도 경비 확보 추진, 지도교사 연수 및 지도자료·우수사례집 발간 등
- 학습부진학생지도 지원 체제 강구('03~)

## 13) 大學敎育의 競爭力과 質의 向上 : 373(06-37-15)

- 영어교육 강화와 병행하여 영어 번역능력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  
( '00. 4.29, 敎育부 업무보고서)

- 통·번역대학원 교육 강화('00. 7~)
  - 통·번역대학원 신설 : 선문대 등 2교 60명

- 통·번역대학원 정원 증원 : 이화여대 등 3교 32명
- 두뇌한국 21사업 특성화 분야(통·번역전문대학원) 지원 : 매년 5억원씩
-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00.12)
  - 9개 대학원 총100억원 지원('96∼'00, 5년간 760억원)
- 대학의 영어교육 활성화 유도('00. 8∼11)
  - 대학 학사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인쇄·배포
-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지원('00. 8)
  - 26과제 8억원 지원

#### 14) 平生教育 振興 : 374(06-37-16)

-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5%밖에 안되며, 미국 34%, 독일 33%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으로, BK21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못지 않게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00. 4.29, 교육부 업무보고서)
- 다양한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학점은행제 확대
    - 336개 교육훈련기관에서 8,125개 학습과목 운영('02.12 현재)
  - 사내·원격대학제도를 통한 학력·학위 인정
    - 원격대학 설치인가 : 16개 대학 모집정원 20,600명
    - 사내대학(삼성전자공과대학) 설치인가('00.11.30)
  -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
    - '02∼'06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16개 시·도별 1개기관 지정('02. 1.18)
  - 평생학습 정보의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정보교류망 구축
  -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00. 4)

## 15) 先進國 水準의 義務教育 實施 : 416(06-37-1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의 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01. 1.22, 국무회의시)</li> <li>○ 중학교 의무교육을 '0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01. 8.15, 제56주년 광복절 경축사시)</li> </ul> |
|---|
-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전국 확대 계획 수립('01. 1.19)
    - '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지역까지 의무교육 확대 실시
  - 관련법령 개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01.10.20)
      - '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 실시 근거 마련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01.12.19)
      - 지방자치단체도 '04년까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근거 마련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및 교부(예정)
    - '02년도 : 2,678억원(입학금 및 수업료 2,472억원, 교과서대 206억원)
    - '03년도 : 5,450억원(입학금 및 수업료 5,112억원, 교과서대 338억원)
  - '04년도 소요재원 확보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완성 추진 예정



## 16) 教育情報化의 持續推進 : 500(06-37-2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할 것.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 동안 전액 면제할 것임('01. 3.17, 교육부 업무보고시)</li> <li>○ 교육정보화의 물적기반이 상당히 구축되었음. 이제는 교육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li> <li>○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01. 4. 3, 국무회의시)</li> </ul> |
|---|
- 
- 저소득층자녀 PC 및 통신비 관리지침 통보('01. 3)
  - 전화접속(014XY) 협약체결 : 월 16,500원 정액제('01. 5)
  - '01년도 PC 리스료 및 통신비 기금 협약('01. 5)
  - '02년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계획 마련('02. 3)
  - '02년도 PC 리스료 및 통신비 기금 협약('02. 5)
  - 인터넷 통신비 KT와 협약 체결('02. 6)
    - 현행 약 월 30,000 ~ 40,000원 → 월 21,450원으로 협약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개선책 마련('02. 6)
  - 인터넷 통신비 '03년도 예산 확보(인터넷 통신비 증액분 21,450원 적용)

## 17) 時間講師 對策 樹立 : 502(06-37-2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한달 수입이 60 내지 70만원에 불과하여 보수와 신분이 낮아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없으므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01. 3.17, 교육부 업무보고시)</li> <li>○ 시간강사들 처우에 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람('02. 2.15, 교육부 업무보고시)</li> </ul> |
|--|
- 
- 시간강사 대책 수립 · 추진('01. 4)
    - 국립대 전임시간강사료의 현실화 : 27,000원('01) → 34,000원('02, 연구비 포함) → 39,000원('03, 연구비 포함) 인상
    -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 Post-Doc 등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확대, 기초학문 육성 지원 확대
    - 국립 대학 전임교원 정원 증원 추진 : '02~'03 매년 1,000명씩 총 2,000명 증원
    - 사립대학의 경우 평가 및 지원과 연계하여 시간강사 처우 개선 유도
  -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사회보장 혜택 부여방안을 포함한 '대학 시간강사 지위 및 처우 개선 방안' 수립 추진('02~)

## 18) 基礎學問分野 發展方案 마련 : 524(06-37-23)

- 국가의 기틀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학문분야의 발전이 중요
-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초학문의 발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01. 5.22, 국무회의시)

- 기초학문육성위원회 구성('01. 4.20)
- 기초학문육성 정책방안 심포지움 개최 및 대학의견 수렴('01.11. 9)
- 기초학문육성계획(안) 대통령 서면보고('02. 1.10) 및 확정발표('02. 1.23)
- '02 기초학문 사업 기본계획 최종 확정('02. 2. 6)
- 기초학문육성 사업 설명회 개최
  - 전국 대학 연구처장('02. 2.27) 및 교무처장('02. 3.15) 대상
- 기초학문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사업 수행(학술진흥재단 및 학술원, '02. 3)
- 기초학문 육성사업 선정('02. 8. 6)
- 기초학문 연구공간 확보 등에 관한 현장실사('02.10~11)
- 기초학문 육성사업(인문사회분야) 2차 선정('02.11.30)

## 19) 學生들의 自然界 進出 促進方案 마련 : 558(06-37-25)

- 정부는 기초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들의 자연계 기피현상이 문제임
- 따라서 자연계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 주기 바람('02. 2.15, 교육부 업무보고시)

- 과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02. 1. 6)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기본정책방안 심의·의결('02. 3. 2)
- 국가기술자문위원회에서 최종안 상정·의결('02. 7.22)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공계진출 촉진방안 후속 조치 의결·발표('02. 8.20)
-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과학교육 개선방안 수립·의결('02.10.18)
- 과학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02.11.15)
-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활성화 계획’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의결·발표('02.11.29)
- '03 장학금사업 지원예산 309억원 확보('02.12)

## 20) 農漁村 教育改善方案 마련 : 559(06-37-26)

- 교육문제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음
-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농어촌 교육개선방안”을 만들어주기 바람('02. 2.15, 교육부 업무보고시)

-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02. 3.14)
- 농어촌 학교 실태 파악 및 농어민단체 등 의견 수렴
  - 교육부총리, 농어촌 학교 현장 방문 의견수렴(8회)
  - 농어민단체·관계부처 의견수렴('02. 4) 및 토론회 개최('02. 5)
- 농어촌 교직원 사택 지원계획 수립('02. 5.23)
  - '02~'04년 동안 연차적으로 신·개축 및 보수비용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 수립('02.11.27)
- 상기 종합방안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에 송부('02.12. 9)하여 대통령께 보고('02.12.13)
- 향후 농특위와 협의하여 재원확보 및 입법 추진('03. 1 이후)

## 21) 失業 細部對策 樹立 : 10(03-70-01)

- 종합 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는 종합실업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98. 3.26, 국무회의시)
- 실업문제가 심각하며, 실업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갖도록 실업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99. 3.18, 국무회의시)
- 민생안정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한 일할 기회 제공 ('00.10.23, 국무회의시)

- 산업체 재취업교육('98. 9~'99. 2) : 222억원, 30,305명 교육
- 전문대 재취업·전직 교육('99. 3~12) : 100억원, 7,400명 교육
- 대학원 연구과정 지원('99. 3~'00. 2) : 71억원, 3,569명 지원
- 각급 학교 보조요원 배치('98. 9~'99.11) : 660억원, 28,000명 배치
-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 감면('98~'99) : 3,000억원, 550,000명 지원
- 결식 초·중·고생 중식지원('99~'00) : 1,660억원, 315,375명 지원
- 교무보조 지원사업('99.12~'00. 2) : 150억원, 9,932명 배치
-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 사업('99.12~'00. 2) : 23억원, 1,512명 채용
-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보조사업('98. 5~'00. 2) : 30억원, 1,552명 배치
- 대학도서관·박물관 인력지원사업('99.12~'00. 2) : 83억원, 4,010명 배치
- 초·중등 전산보조원 배치('00.11~'01. 2) : 117억원, 5,070명 배치

## 22) 弘報勞力の 強化 : 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고, 유관인사들에게 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98. 4.28, 국무회의시)
- 정책을 만들어 알리겠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또한 사후(事後)적인 홍보보다 사전(事前)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함('00. 2.25, 국무회의시)

- 대언론 홍보활동의 강화('00. 1~'02.12)
  - 보도자료 제공, 장·차관 및 실·국장의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강연 활동
  - 언론 보도내용 분석 및 오·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 대응
- 의견수렴과 교육정책 기획홍보를 위한 홍보지 발간('99. 3~계속)
  - 월간지 형태의 『교육마당21』과 격주간 신문 『교육소식』 발간·배포

## 23)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98. 8.11, 국무회의시)

- 국립대학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
  -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방안 수립('98. 8) : 행정지원인력의 약 20% 감축 등
  - 「국립학교정원령」('99. 2, '00. 2) 및 「국립학교설치령」('01. 3) 개정
-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평가 및 재정 지원

- 국립대학발전위원회 구성·운영('01. 3)
- 국립대학별 자체발전계획 수립 제출('01. 5)
- 추진실적 평가 및 차등 재정 지원('00~)
  - '00 : 10개 대학 128억원 (집중지원)
  - '01 : 43개 대학 250억원 (일반지원 100, 집중지원 150)
  - '02 : 43개 대학 400억원 (일반지원 150, 집중지원 250)
-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 추진(6개 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장학회 통합('98.12) 등

## 24)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수해 대책이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98. 8.11, 국무회의시)
- 이재민구호 및 제방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적극 노력('98. 8.17, 국무회의시)

- 학교시설 피해복구 실시
  - 교실 등 직접 교육활동시설 복구(학교재해복구공제회 복구비 지원, 9억원)
  - 담장, 축대 등 외곽시설 복구(복구액 68억원)
- 수해가정자녀 중·고생에게 3/4분기 학비지원('98. 9.10) : 9,871명, 1,563백만원
- 유실·훼손교과서 무상지원('98. 8.29) : 11,305명, 135,837권, 163백만원
- 교육부 장·차관 수해현장 방문·격려('98. 8.13~8.17)
- 교육부 및 직속기관 직원 등 수해지역 자원봉사 활동실시
- 집중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지원('98. 9.29) : 77억원

## 25)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교육부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학생교류문제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  
(‘98.11.23, 국무회의시)

- 한·일공동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실시
  - 한·일간 구상서 교환 및 세부추진계획 합의(‘99. 2)
  - ‘99년도 부터 매년 100여명 내외 유학생 파견
- 한·일 중고교생 교류사업 추진
  - 한·일간 구상서 교환, 세부추진계획 협의 및 약정서 체결(‘99. 6)
  - 매년 400여명의 중고교생 방일 연수실시(약 5일간)

## 26)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교육부 Y2K대책단 설치·운영(‘99. 5~‘00. 1)
- 3차례 교육(행정)기관의 합동현장점검 실시
  - 대상: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 및 서울대학교 등 34개 대학
- Y2K문제 관련 정보제공
  - 산하기관 Y2K담당자 회의 실시(4회)
  - 교육부, 충남교육청 및 서울대학교 Y2K관련 홈페이지 운영
- Y2K 비상대책반 운영(‘99.12.31~‘00. 1. 4)



## 2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청렴성·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화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 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목표관리제 등과 연계한 공무원의 실적주의 인사체제 수립
  - 평정제도에 실적가점제 도입 및 목표관리제에 의한 상과상여금제 실시
-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한 공정한 인사체제 확립
  - 5급 승진심사시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실시
  - 승진심사시 지역을 고려한 승진대상인원 배정

## 28) 科學技術人力의 兵役惠澤 擴大 檢討 : 235(07-70-22)

- 과기부, 교육부 및 국방부는 상호 협조하여 우수연구인력의 조기교육 및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9. 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국방부와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확대방안 협의('99. 4~5)
  - 협의인원 : ('99) 270명 → ('00) 600명

## 29) 8.15 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각 부처의 국정개혁 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져 있으므로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99. 9. 7, 국무회의시)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 법정 및 농어촌 등 저소득층 5세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중고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평생교육체제 구축
  - 원격(사이버)대학 확대,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 추진, 기술계 학원 수강생 수강료 융자 지원
- 교육정보화 체제 구축
  -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완료
    - 모든 교사와 교실에 PC 1대씩 보급, 전국 21만 교실에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 세계 최초로 전국 모든 초중고에 인터넷 연결('01. 4)
  -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수립·추진('01. 5)

## 30)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弘報 : 282(08-70-29)

- 1999년 국정추진 성과와 내년도 새 천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 필요('99.12. 7, 국무회의시)
- 새 천년 첫 해 예산의 내용과 관련법안 등을 분야별·수혜 계층별로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99.12.21, 국무회의시)
- 새천년의 비전과 전략 및 '00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 홍보 추진
  - 기자설명회 개최, 홍보용 리플렛 제작 배포

- 정기간행물인 교육마당, 교육소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31) 各 部處의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 특히,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5개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00. 4.28)
  -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교육 전부분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교육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 32) 公正한 選舉 管理 : 332(08-70-34)

-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정부는 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거기간 중이라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정을 왜곡·악용하여 국익을 해치는 데 대해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책임이자 의무임('00. 3.21, 국무회의시)
- 부제자 신고요령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 안내 책자, 학교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한 홍보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직자, 공공기관의 자세에 관한 국무총리지시(2000-4호)를 시·도부교육감 및 교육장 회의시 전달

### 33)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하며,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및 지시사항을 각 실·국에 통보('00. 5)
-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추진
  - 10대 정책과제, 59개 실천과제
-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청와대 보고('00.12)

### 34)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00.10.23, 국무회의시)

- 교원노조 분규 예방을 위한 노사관리
  - 교원노조와 대화채널을 구축(교섭이 없는 분기별 1회씩 정책 간담회 개최)하여 분규의 사전예방
  - 교원노조 위원장 등과 수시로 대화와 설득노력 적극 전개
- 교원노조 분규발생시 조기해소 유도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
  - 불법집회 참석 자제 촉구 및 참석자에 대한 서면경고('00.11.23)

- 집단행위 자제 촉구 부총리 담화문 발표('01.10.25)
- 홍보활동을 통한 교원노조의 불법집회 참여자제 여론 조성

### 35)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교육인적자원부보직관리기준」 개정 · 시행('02. 9.30)
  - 공직인사 혁신 및 공정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 시행
    - 인사운영혁신계획 수립('01. 7)
    - 직무의 전문성 및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수립('01.10)
  - 4급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제도 시행
  - 근무성적평정시 실적주의 요소 강화

### 36) 電子政府 事業의 差跌없는 推進 : 531(08-70-59)

- 전자정부 수립은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전자정부는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수립,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01. 8. 7, 국무회의시)
  -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 중 완성될 수 있도록 교육 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 회의시)
-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 및 ISP 수립('00. 9~'01. 3)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확정('01. 7.10)

- 시스템 분석 · 설계 · 개발('01.10~'02.10)
  - 27개 단위 업무에 대한 6,570본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완료
- 43만 교직원에 공인인증서 발급('02. 7~'02. 8)
- H/W 등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환경 조성 사업('02. 6~'02.10) : 408억원
- NEIS 지원서비스 개통('02.11. 4) : 재산, 인사, 회계 등 22개 영역
- 민원서비스 개시('02.12. 2)
  - 제증명 발급서비스(인터넷 신청 : 졸업증명서 등 13종)
  - 시범학교를 통한 학부모 서비스(학생 및 학교정보)

### 37)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法令整備 早期 推進 : 545(07-70-62)

-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개선된 행정프로세스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관계법령의 정비와 필수적이므로, 법령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야 함('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 회의시)
-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법률 공포('02.12. 5)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 「학생 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지침중개정령」 훈령 공포('02.12.20)

|       |
|-------|
| 統 一 部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7(01-32-01)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창구 다원화방안 검토  | 1998. 3.17 |
| 129(01-32-02)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신변안전보장대책 마련 | 1998. 7. 4 |
| 163(01-31-04) | 남북경협의 차질없는 추진          | 1998.11. 3 |
| 208(01-32-05) |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 1999. 3.24 |
| 209(01-32-06) |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 1999. 3.24 |
| 210(01-32-07) | 북한에 대한 철저한 연구          | 1999. 3.24 |
| 371(01-32-08)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중한 추진    | 2000. 6.27 |
| 417(01-32-09) | 북한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         | 2001. 1.29 |
| 468(01-32-10) | 통일교육 · 홍보강화            | 2001. 2.15 |
| 593(01-32-11) | 특사 방북시 합의사항 이행 철저      | 2002. 4.22 |
| 48(08-70-03)  | 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3-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7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추진  | 1999. 9. 7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0. 2. 6 |

## 1) 民間次元의 對北支援窓口 多元化 方案 檢討 : 12(01-32-01)

- 창구 일원화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적십자 창구외에 이산가족 단체 등 NGO, 종교단체 등으로 지원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98. 3.17, 통일부 업무보고서)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시행('98. 3.18)
  - 대북지원 및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
  -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완화
  -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 민간단체 대북지원 동향파악 및 의견 수렴
  - 창구문제 관련 정책개발 워크샵 개최('98. 5.20)
  - 「서로돕기」 등 민간단체(17개) 수시접촉, 연계유지
- 창구 다원화 대책(안) 작성, NSC 실무조정위 상정('98. 6.23, 9.16)
- 「韓赤을 통한 개별지원」의 시범적 허용('98. 9.18)
  - 민간이 대북협의를 · 운송 · 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대북지원 민간단체 워크샵 개최('98.12.15)
  - 창구다원화 방안 관련 의견 수렴

## 2) 金剛山觀光事業 관련 身邊安全保障對策 마련 : 129(01-32-02)

-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 ('98. 7. 4,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남북사업자(현대-아태)간 합의에서 신변안전보장 확보
  - '신변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 보장, 북측관습 위배 등을 이유로 역류 불가



- 남북기본합의서를 신변안전보장의 준거로 명기
- 북한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포괄적 「신변안전보장각서」 확보('98. 7. 9)
  - 현대-북측간 계약에 따라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98. 7.11) 및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98.11.14)를 통해 공개적으로 신변안전보장 확인
- 현대-북측간 합의를 통해 「관광세칙」 합의전까지는 북측 세칙(안)의 일방적 적용 배제

### 3) 南北經協의 차질없는 推進 : 163(01-31-04)

- 현대그룹의 대북경협사업은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본격적인 경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임
  - 우리가 대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긴장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결코 환상을 갖거나 지나치게 들떠서는 안되며, 냉철한 입장에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98.11. 3, 국무회의시)
- 「금강산관광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 개시
    - 현대그룹('98.11.18~ )
  - 「대북경협 과당경쟁 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98.11.13)
  - 주요 대북사업체에 대한 경고조치('98.11.14)
    - 질서있는 교류 협조요청(현대, 삼성그룹)
  - 4대기업 대북경협 담당임원 간담회 개최('98.11.18)
    - 교류협력국장 주관, 현대·삼성·대우·LG 참가
  - 4대기업 남북경협 실무자 1차 협의회 개최('98.11.26)
    - 현대, 삼성, 대우, LG 참가

- 매월 1회 협의회 개최 예정
- '98 남북경협 결산 정부-기업간 협의회 개최('98.12.18)
  - 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등 10개기관·업체 참석

#### 4) 南北間 和解協力 霧圍氣 造成 : 208(01-32-05)

- 남북간 접촉을 강화하고 우리의 영향을 북한에 확대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 이를 위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 대북3원칙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되며 우리가 주도해야 함 ('99. 3.24, 통일부 국정개혁보고서)

- 금강산 관광사업의 본격화 및 안정화 추진
  - 금강산관광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보장합의서」 타결('99. 7.30)
  - 「북한방문자신변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99. 9.21)
- 국제옥수수재단, 북한지역 옥수수재배지역 확대
  - 1,000개 마을, 1,000ha 시험재배 추진
- 한국담배인삼공사, 잎담배 시범포 운영 및 계약 재배
  - '99년산 잎담배 500톤 반입, 남북공동브랜드 「한마음」 생산
- 현대 아산, 금강산 영농사업 추진
  - 비닐하우스 12,000평, 노지 18,000평 재배계약 체결
-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으로 대북경협활성화 여건 조성('99.10.21)
- 민주노총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경기('99. 9)
- 현대아산 「통일농구경기대회」 평양경기 및 서울경기('99. 9~'99.12)

- SBS, KORECOM, MBC · SNG엔터프라이즈 「남북합동음악회」 평양공연  
(’99.10.21)

## 5) 南北對話 突破口 마련 : 209(01-32-0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국대화에 집착하지 말고 가능한한 민간차원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 추진</li> <li>○ 민간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면 당국간 대화는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임</li> <li>○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지만, 대화의 기회가 오면 어떤 레벨에서도 대화를 할 것임. 실무급도 좋고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도 가능(’99. 3.24, 통일부 국정개혁 보고서)</li> </ul> |
|---|
- 민간대북협상 자문 실시
    - 북한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 및 민간단체들의 대북협상력 제고를 위한 협상자문 실시(9회)
  - 회담대책 수립
    - 적십자, 체육회담 등 남북대화 유형별 회담대책(안) 작성
  - 당국간 대화창구 모색
    - 8.15경축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대화호응 촉구
    - 임진강 오염 남북공동 수해방지대책협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제의(’99. 8.11)
  -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개최
    - 기간 : ’99. 6.22~26(1차), 7. 1~7. 3(2차), 베이징
    - 의제 : 이산가족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 문제

## 6) 北韓에 대한 철저한 研究 : 210(01-32-07)

- 북한은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 북한의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하고 냉철하게 연구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지도층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함  
(’99. 3.24, 통일부 국정개혁보고서)

- 북한의 강약점 재평가
  - 북한의 강약점 재평가사업 계획 수립(’99. 4.23)
  - 외부 전문가 선정 및 용역 체결(4.27)
  - 사업추진 중간평가회의 개최(5.14, 6.9)
  - 종합 중간평가회의 개최(7.21)
  - 총평가 워크샵(11. 2)
  - 과제물 접수(11. 2)
- 김정일 연구
  - 기본계획 수립(’99. 4.23)
  - 기초자료 수집 :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외 20건
  - 전문가회의 개최(2회)
  - 외부 전문가 연구과제 위촉(10.30)
  - 연구과제평가 전문가회의 개최(12. 9, 12.13)
  - 김정일 음성 분석의뢰 결과물 접수(12.21)
  - 「김정일연구」 책자 발간(12.29)

## 7) 南北頂上會談 後續措置의 慎重한 推進 : 371(01-32-0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앞으로 계속 이어질 대화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00. 6.27, 국무회의시)</li> <li>○ 긴장완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세가지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는 소관분야에서 이와 관련하여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워 착실히 추진해 주기 바람('00. 9. 4, 국무회의시)</li> </ul> |
|--|
-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00. 6), 분야별 후속조치 추진과제 취합('00. 6)
  - 남북간 대화 개최
    -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각종 남북간 회담 개최
      - 남북정상회담이후 분야별로 총 51차례 회담 개최('02.12말 현재)
  -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직통전화 설치(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02. 9.17)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건설 추진
    - 경의선 철도('02.12)·도로('03년 봄), 동해선 철도('03. 9)·도로('03. 9)·임시도로('02.12)
    - 8차 장관급회담('02.10) 및 3차 경추위('02.11) 등에서 개성공단 '02년내 착공에 합의,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보장문제 미타결로 무산
  -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00. 9. 5), 6.15 남북공동행사, 부산아시아경기대회('02. 9.29) 북한 참가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 활성화

## 8) 北韓의 變化에 철저히 對備 : 417(01-32-09)

- 북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김위원장의 답방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01. 1.29, 국무회의시)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해야 함
  -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첫째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긴장완화, 둘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의 원칙 확립 등임 ('01. 2. 5, 통일부 업무보고시)

- 북한 개혁·개방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 북한 변화 대비계획 보완 : 8개 주요 정책과제별 대책 수립
  -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한 법제화 모색
-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연구
  -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 개혁·개방 사례연구 및 보고서 발간(2건)
  - 통합 지역연구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개최(6회)
  -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실태조사('01. 4. 9~16, 몽골·베트남)
  - 동서독 교류 및 통합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 보고(11건)
  - 독일통일백서('02) 발간
-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실시방안 연구
  - 연구용역 과제위촉(2건)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
- 남북정상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
  -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01년도, '02년도)

-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기구 구성·운영
-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 합의시 운영

## 9) 統一教育・弘報強化：468(01-32-1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함</li> <li>○ 주요 제기 이슈에 대한 문답집을 만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01. 2.15, 통일부 업무보고시)</li> </ul> |
|---|
- 국민의견수렴 및 여론평가활동 강화
    - 국민여론조사(6회), 언론사 등 타기관 여론조사내용 분석(6개사), 정책간담회 및 의견 모니터링(230회), 인터넷 전자공청회(5회) 등
  - 계기별·계층별 기획 홍보자료 발간
    - 국민의 정부 출범 3년 및 4년 홍보자료, 남북정상회담 1주년 홍보자료, 남북장관급회담 해설 등 계기별 홍보 및 해설자료집 발간
    - E-mail 배포시스템 확대(대상인원 5만여명)
  - 통일 환경 및 남북관계에 부합되는 통일교육방향 정립
    - 통일교육 3개년 기본계획 수립('01.12)
    - '02년도 및 '03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
    - 사회통일교육 실태조사('02. 9~11)
    -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4회)
  -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해설·문답집 발간
    - 해설문답집 「따로한 반세기, 함께하는 21세기」,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등 발간·배포
  -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13개 방송)

## 10) 特使 訪北時 합의사항 履行 철저 : 593(01-32-1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사방북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람</li> <li>○ 이산가족 상봉, 경제시찰단 교환, 군사회담 등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관급 회담개최 과정에서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02. 4.22, 통일부 업무보고시)</li> </ul> |
|---|
- 대북 비료 및 식량지원
    - '01년도 비료 20만톤 지원, '02년도 쌀 40만톤(당국간 차관제공) 및 비료 10만톤 지원
  -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제도화 추진
    - 제4차('01. 4.28~5. 3) 및 제5차('02. 9.13~18)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추진
    - 제4차 적십자회담('02. 9. 6~8,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
      - 2차례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지역 면회소 부지, 면회소 설치를 위한 건설단 구성 등 합의
  - 6차('02. 9.14) 및 7차('02. 9.17)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02. 9.10~12)에서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
    -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02.10.23)하고, 「금강산관광지구법」 채택('02.11.13)을 발표('02.11.25, 평방)
  - 북한 경제시찰단 방문
    - '02.10.26~11. 3 박남기(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등 18명
  - 제7차('02. 8.12~14, 서울) 및 제8차('02.10.19~23, 평양)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11)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알리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 국무위원들은 국민과의 교감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공보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98. 4.28, 국무회의시)

- 대북정책 주요현안 및 정책추진방향 관련 일반국민대상 여론조사 실시(5회)
- 통일고문, 정책평가회의, 전문가회의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평가 실시
  - 통일고문회의(5회), 지역 여론수렴 정책간담회(대구, 마산)
  - 통일정책 평가회의(3회), 자문회의(3회) 개최
-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협의체 구성·운영
  - 정보교류협의체 회의(‘00. 3.30) 및 세미나 개최(‘00.10. 9~12)
  - 프로그램 제작 지원 : KBS(일요스페셜), KBS(사회교육방송), Arirang-TV(끝나지 않은 전쟁) 등
- 사이버 홍보추진 강화
  - PC통신공청회 개최(3회), 보도자료 e-mail 배포망 구축(2만여명)
  - 전광판 홍보(연중) 및 웹만화 제작, 인터넷 개재(‘00.11)
- 통일부 홍보물 제작·배포
  - 「2000 통일백서」, 홍보소책자 등 홍보자료(6회), 월간 영문 뉴스레터 Korea Unification Bulletin(매월 2,000부) 등

## 12) 각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
  - 부처업무의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98. 8.11, 국무회의시)

- 경비절감노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98. 9.17)
  - 목표관리제, 일몰법 도입, 해외출장의 합리적 조정 등

## 13) 水害復舊 만전 : 138(03-70-09)

- 이재민 구호 및 제방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적극 노력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 수재의연금 모금활동 전개 : 5,561,200원('98. 8.13 KBS 기탁)
- 수해복구 지원활동 : '98. 8.14(금),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중대천

## 14) 컴퓨터 2000년문제 관련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98.11.23, 국무회의시)

- 주전산기 용역업체와 Y2K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설치키로 합의('98.11)
  - \* Y2K문제는 연도계산 등의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부 주 업무인 통일정책 관련자료 D/B 등에서는 발생치 않음.

## 15) 공정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함('99. 1.12, 국무회의시)

- 4급이상 공무원 출신지별 실태조사('99. 1.20)
- 통일부 조직관리기준 개정('99. 1.25)
- 인사관리 운영지침 제정('99. 4.14)
  - 승진임용과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16) 8.15慶祝辭 後續對策 徹底 推進 : 276(08-70-27)

- 새천년을 맞는 각분야의 국정개혁 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99. 9. 7, 국무회의시)

- 남북간 교류협력 적극 추진(대통령지시사항 222호 및 280호로 관리)
- 남북당국간 대화 추진(대통령지시사항 281호로 관리)
- 대북지원 지속추진기반 강화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규정」 제정·시행('99.10.27)
  - 대북 비료 30만톤 지원, WFP를 통한 식량 10만톤 지원 추진
  - 민간창구 다원화조치('99. 2.10)에 따라 「한적」외 10개 투자창구 운영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8개단체에 54.1억원 지원)
-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 확산
  - 정책설명회, 장·차관특강 등 272여회, 일반국민 여론조사 5회 실시
  - 전자공청회 3회, 전국 6대도시 전광판 1,000여개소 활용 홍보

- 월간 영문 뉴스레터 Korea Unification Bulletin(매월 2,000부) 배포
-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정보교류협의체 구성·운영
- 미주지역 통일포럼,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

## 17)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전 국무위원들은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00. 2. 6, 국무회의시)

- 월례조회시 기관장의 인사청탁 배경 의지 표명('01. 3. 2)
- 인사고충처리 및 청탁신고 관련 총무과장 'HOT LINE」개설('01. 4. 3)
- 인사 청탁자에 대한 제재방안 시행
  - 승진심사시 청탁자 불이익에 관한 장관지침 시달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다면평가 지속 실시 및 운영 내실화(다면평가 2회 실시)
  - 「통일부인사관리운영지침」개정('01. 5.26)
    - 「공무원인사혁신지침」(행자부인사 12114-417, '01. 4. 7) 반영
  - 「통일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개정('01.12.24)
    - 핵심분야전문직위(3개) 신설 등

# 外 交 通 商 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1(02-33-01)  | 한·중, 한·일 어업협정 조기체결 추진      | 1998. 4.15 |
| 92(02-33-02)  | 외규장각 도서 문제 해결              | 1998. 7. 2 |
| 102(02-33-03) | 방미 후속조치 철저                 | 1998. 7. 4 |
| 186(02-33-04) | ASEM 정상회의 준비 철저            | 1999. 2. 9 |
| 259(01-33-05) | 2000년 UN총회 참석 및 행사 준비      | 1999. 7.12 |
| 326(02-33-06) | 해외에서의 국민안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 2000. 2.29 |
| 331(02-33-07) | 서구 4개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추진        | 2000. 3.14 |
| 470(03-33-09) |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 외교 강화          | 2001. 2.16 |
| 471(02-33-10) | 지정학적 이점 활용                 | 2001. 2.16 |
| 472(02-33-11) | 민주인권국가 이미지 확립              | 2001. 2.16 |
| 544(06-33-14) | 한국을 방문치 못하는 세계인들에 대한 대책 강구 | 2001.12.22 |
| 13(03-70-02)  | ASEM 외국인 투자유치 후속조치 준비      | 1998. 4. 6 |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68(01-70-06)  | 북한 잠수정 침투관련 후속조치 철저        | 1998. 6.30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191(02-70-18) | 한·일 어업협정 관련 대국민 설득 강화      | 1999. 3. 2 |
| 196(02-70-19) | 한·중 어업협정의 차질없는 준비·추진       | 1999. 3. 9 |
| 366(09-70-39) | 2000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실천       | 2000. 5. 9 |
| 396(08-70-47)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 2000.10.1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1) 韓・中, 韓・日 漁業協定 早期締結 推進 : 31(02-33-01)

- 금년중 한·중, 한·일 어업협정을 잘 마무리지어야 할 것임
- ASEM 회의에서 주용기 중국 총리를 만나 한·중 어업협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음
- 호금도 중국 공산당 부주석이 김종필 총리 초청으로 방한하게 되면 해양수산부가 외교통상부와 원활히 협조하여 어업협정 문제가 잘 진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98. 4.15,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서)

### ○ 한·일 어업협정

- '98.11.28 신 한·일 어업협정 서명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98. 9.24 신 한·일 어업협정 타결까지 한·일 어업실무회의 7회 개최
- '99. 1.22 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 신 한·일 어업협정 발효
  - 구 어업협정 종료('99. 1.22)전 교섭을 타결하여 무협정 상태로 인한 양국간 어업분쟁 가능성 방지
- '02.12월 현재, 매년말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5차)
  - (익년도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조건 결정)

### ○ 한·중 어업협정

- '98.11 회담 종결 및 문안 가서명
- '99. 3 서명 위한 국내절차 완료
- '00. 8 정식 서명
  - \* '99. 6~'00. 8 양해각서 해석문제 실무회담 개최
- '01. 6.30 정식 발효

## 2) 外奎章閣 圖書 問題 解決 : 92(02-33-02)

- 총리의 프랑스 방문 관련 외규장각도서 문제를 총리께 보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98. 7. 2, 문화관광부 국정과제점검회의시)

## ○ 추진실적

| 세부사업명                                   | 세 부 추 진 계 획  | 추진실적   |
|---|--|--|
| 협상대표<br>임명                              | ○ 양국 협상대표 선임   | ○ '99. 1 불측, 자국 협상대표로 Jacques Sallois 감사원 최고위원 선임<br>○ '99. 3 우리측 대표로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선임  |
| 협상대표간<br>협상을<br>통한 해결<br>방안 모색          | ○ 협상 대표간 회의 개최   | ○ 4차에 걸친 협상 대표회의의 결과 협상 대표간 합의 도달<br>- 제1차('99. 4, 서울),<br>- 제2차('99.10, 파리)<br>- 제3차('00. 6, 서울)<br>- 제4차('01. 7, 파리)                 |
| 정부차원<br>에서의해결<br>방안지원                   | ○ 한·불 정상회담 및 외교<br>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br>불측의 성의 있는 협조<br>촉구 | ○ '99. 6 제8차 한·불 정책협의회<br>○ '00. 3 한·불 정상회담(파리)<br>○ '00.10 시락 대통령 방한<br>○ 주불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과의<br>수시 접촉 기회에 동 문제 협의                       |
| 관계부처간<br>긴밀협의를<br>통한 우리<br>입장 조율        | ○ 교육인적자원부,<br>문화관광부, 문화재청<br>등과 관계부처 대책회의<br>개최        | ○ 협상대표 회의 개최전 관계부처<br>대책회의 개최  |
| 관계학계와<br>의긴밀협의<br>체제 구축                 | ○ 외규장각도서문제 자문<br>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01. 6 자문위원회 구성<br>○ '01. 7 제1차, '01. 8 제2차 자문 위원회<br>개최   |
| 협상대표<br>간합의내용<br>수용 여부<br>결정을위한<br>사전조치 | ○ 1차 실사단 파견<br><br>○ 2차 실사단 파견                         | ○ '02. 1.28~2. 1 1차 실사단 파견<br>-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의궤<br>296책중 200책 조사<br>○ '02. 7. 8~12 2차 실사단 파견<br>- 1차 실사시 미조사된 의궤 및<br>추가조사가 필요한 의궤 재조사 |

\* 실사결과를 토대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 수렴, 향후대책 마련 계획

### 3) 訪美 後續措置 徹底 : 102(02-33-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방문 후속조치로서 투자유치, 수출확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기 바람<br/>(‘98. 7. 4, 외교통상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보고서)</li> </ul> |
|---|
- 한·미 투자협정 체결 추진
    - ‘98년중 3차례의 공식협상 및 ‘99년중 2차례에 걸쳐 비공식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없음
    - 문화관광부가 업계와 협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우리 입장이 마련될 경우, 미측과 협의를 재개할 예정
  - 제14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98.11. 3, 워싱턴)
    - ‘98. 3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 미 해외민간 투자공사(OPIC)의 대한 투자보증사업 재개
    - OPIC 투자촉진협정 서명(‘98. 7.30), OPIC 투자조사단 방한 (‘98.10)
  - 미국의 대한민국 투자 촉진
    - 미 상무장관 인솔, 투자사절단 방한 (‘99. 3)
    - 한·미 투자포럼 개최 (‘98. 6, 뉴욕) : 74건 83억불 상당의 투자상당 진행(약 17건 26억불 가량의 계약 성사)
    - 한국경제 설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쇼 개최 (‘98.12)
      - 23개 벤처기업 등 참여, 미 6개도시 순회, 76건 918백만불 상당
  - 한·미 항공 자유화 협정 후속조치
    - KAL과 미 Delta, 아시아나와 American Air와 영업협력 개시(‘98. 7)



#### 4) ASEM 頂上會議 準備 徹底 : 186(02-33-04)

- 관계부처는 앞으로 열릴 ASEM 정상회의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기 바람('99. 2. 9, 국무회의시, '99. 3.30, 국무회의시)
- 제3차 정상회의를 아시아·유럽 협력의 본격화 계기로 활용
    - ASEM 조정국 역할 적극적 수행('99. 7 조정국회의 참가 등)
    - 아시아·유럽비전그룹 의장국으로서 ASEM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주도('99. 3 비전그룹보고서 발간)
  - ASEM 회의 및 사업에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정상회의 준비 철저
    - ASEM 외무장관회의('99. 3), 경제장관회의('99.10) 등에 적극 참여
    - 아시아·유럽재단(ASEF) 제5차 이사회('99. 5) 등 ASEF 활동에 적극 참가
  - 정상회의 준비체제 정비
    - 정상회의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99. 4)
    - 총리 주재 준비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 수시 개최를 통한 준비현황 점검
  - 아시아·유럽 민속공연축제('00. 9) 등 다양한 문화·학술행사 추진
  - 회의 실질내용에 있어 성과 거양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채택을 통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총 16개 정상회의 신규 승인사업중 4개 사업 공동제안을 통해 아시아·유럽간 협력증진에 중심적 역할 확보
    - 2000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2000) 채택 주도를 통한 향후 ASEM 발전방향 제시

## 5) 2000年 유엔總會 參席 및 行事準備 : 259(01-33-0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유엔총회(천년총회) 참석 및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br/>(‘99. 7.12, 6.25 50주년 기념사업계획 보고서)</li> </ul> |
|---|
- 대통령, 천년정상회의 기조연설(‘00. 9. 6)
    -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6.15 남북 정상회담 성과 설명
    -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
  - 대통령, 원탁회의 연설(‘00. 9. 7)
    - 정보화시대에 있어 교육의 역할 강조
    -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과 UN, IBRD 등 국제기구의 지원 필요성 역설
    - 미얀마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 결의안의 이행 촉구
  - 천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채택(‘00. 9. 6)
    -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 지지 확산
  - 양자회담
    - 한·중 정상회담(‘00. 9. 6), 한·미 정상회담(‘00. 9. 7), 한·스웨덴 정상회담(‘00. 9. 7), 한·러 정상회담(‘00. 9. 8)
  - 기타 주요행사
    - 동포간담회(‘00. 9. 7)
    - 한국문제 전문가 초청 만찬(‘00. 9. 7)
    - 카터 전 미대통령 내외와의 조찬(‘00. 9. 8)
    - 미 경제계인사 초청 오찬(‘00. 9. 8)
    - Korea Society 만찬연설(‘00. 9. 8)

## 6) 海外에서의 國民安全 및 國家이미지 提高 : 326(02-33-06)

- 우리 기업인들 관련 중국내 사건 방지책을 모색하고, 이런 사건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02. 2.29, 국무회의시)
  - 범죄를 범죄 자체로 다루는 것과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신변을 파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바, 중국에서의 마약범죄자 사형집행 관련 사건은 이러한 면에서 유감스러운 일이었음. 중국에서는 500g 이상의 마약만 취급해도 극형에 처하게 되므로 유사한 범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임  
(‘01.10.29, 국무회의시)
  - 재외동포들을 세계 속에 파견된 ‘직함없는 대사’로 생각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01. 2.16, ‘02. 3.20, 외교통상부 연두업무 보고서)
- 
-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해외 진출 아국민에 사전 계도활동 강화  
(‘02. 3 이후)
    - 해외여행 유의사항 발생시 문화관광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의 사후 처리를 위한 영사보호업무 강화
    - 재외국민보호센터 설치(‘00. 3) 및 전담 심의관 배치(‘02. 1)
    -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본부 및 공관의 24시간 비상대응체제 확립
    - 해외사건사고 처리지침 보완(‘01.12 개정)
    - 중국지역 수감자 데이터베이스(‘02.10 구축) 등을 이용한 아국민 수감자 보호활동 강화

- 중국지역 공관 고문번호사제 추진('03 신규사업)
- 해외 무력분쟁 및 테러 대비 재외국민보호대책 확립
  - 이라크 무력충돌에 대비, 중동지역 재외국민 대피 및 안전대책 수립 ('02.10 이후)
  - 국제테러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정보전달 및 보호업무 강화 ('02. 9 이후)
- 영사업무 효율화 및 재외공관 관리감독 강화
  - 위·변조 사증 방지를 위한 스티커식 사증발급 실시 ('03. 1 부터 중국지역 실시)
  - 재외공관 사증발급비리 대책 수립 및 시행('02.11 이후)
  - 영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강화
- 타국과의 영사협력체제 강화
  - '98. 3 이후 모로코, 브라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
  - '98. 3 이후 중, 일, 인니, 뉴질랜드와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및 중, 러, 홍콩, 몽골, 뉴질랜드, 인니와 사범공조조약 체결
  - 아국인 다수 체류국가(일, 중, 러 등)와의 영사업무교류 증진을 위한 양자회의 정례화(년 1회)

## 7) 西歐 4個國 國賓訪問 後續措置 推進 : 331(02-33-07)

- 이태리·프랑스·독일 등과 합의한 투자와 경제협력사업,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의 ASEM 신규사업 채택, 고속전철(TGV) 건설사업의 제3국 공동진출 추진('00. 3.14, 국무회의시)

- 이탈리아 · 프랑스 · 독일 등과 합의한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총 투자유치 상담액 141억불중 91억불을 유치하여 65% 투자 유치달성 (독일 바스프사 4.4억불, LG 필립스 4.8억불, 현대자동차 증자 4.4억불 등)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외국인의 경영 · 생활환경 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02. 1.10)
    - 고도기술수반사업 추가 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업종의 확대 (534개→ 개정 578개, '02. 1.10)등
-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의 ASEM 신규사업 채택
  - 3차 ASEM 정상회의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00.10.20)
  - TEIN 전문가회의 개최(1차 : '01. 3 서울, 2차 : '02. 3 브뤼셀, 3차 : '03 예정)
    - 2차 회의시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hub으로 하는 네트워크 발전 계획 확정
  - 한·EC·말련간 3자 협의 개최('02. 9, 브뤼셀)
    - 말련을 동남아의 hub로 하는 동남아망 설치 합의
  - 한·말련간 양자 협의 개최('02.11, 서울)
    - 한·말련망의 비용 균등 분담 합의
- 고속전철(TGV) 건설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경부고속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속철도기술에 대한 자립기반 확보
    - 프랑스로부터의 기술이전 추진 및 프랑스 알스톰사와 우리 차량업체 간 제3국 공동 진출하는 방안 지속 협의

## 8) 輸出增進 및 投資誘致 外交 強化 : 470(03-33-0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흑자 250억불 달성, 외환보유고 500억불 이상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전력 및 ('99. 3.22, 외교통상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li> <li>○ 중남미 등 틈새시장 활용을 통해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통상문제의 예방과 마찰 최소화 노력 경주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01. 2.16, 외교통상부 업무)</li> </ul> |
|--|
- 
- 재외공관의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 재외공관의 “통상투자종합지원” 활동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 및 수출,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 지원 수출알선 5,308건, 애로사항 해결 1,106건, 수주지원 570건, 투자유치지원 492건)
    - “사이버 기업서비스” 운영을 통한 정보지원(6,000여건의 문의사항 응답)
  - 중점 투자유치 대상업체 및 대한민국 투자관심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투자 유치 활동 강화(459개 중점 투자유치대상 외국기업 선정)
  - 한국경제설명회 및 투자설명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홍보활동 강화(재외공관을 통한 경제설명회, 투자설명회 175건 개최)
  - 통상환경 개선 및 신흥시장 개척활동 강화
    - 아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민관 통상투자사절단 파견 ('99년 4건, '00년 6건, '01년 5건, '02년 8건)
    - 국가별 통상환경, 수출유망품목 등 해외시장 정보를 분석(국별 통상환경보고서,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국별 수출전망 등 18건)
  - 틈새시장 및 품목 발굴 노력
    - 시장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 및 분야에 대한 전문정보를 중점 수집, 우리기업 등에 제공(외교부 홈페이지에 국별 해외입찰정보 게재)

## 9) 地政學的 利點 活用 : 471(02-33-10)

-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이 큰 바, 경제·통상측면에서도 주변 4국의 거대시장과 자원을 활용하는 외교통상 역량을 발휘바람  
(‘01. 2.16,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

- 한·미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 우리 수출의 약 22%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 한·미간 통상현안을 원만히 해결하여 대미수출의 안정적 성장기반 유지
  - 12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 6차례 한·미 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등 각종 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자동차·철강·지재권·농산물·의약품 등 한·미 간 주요통상현안 해결 노력 강화
- 일본지역 수출확대 및 통상장애 요인 완화 노력
  - 일본의 對韓 교역의 확대·균형, 농수산물과 일부 공산품의 관세인하 등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한일투자협정 체결(‘02. 3) 및 발효(‘03. 1)
  - 고위경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각종 양자협의 채널을 통한 교역장벽 완화와 대일 수출시장 개척 노력
  - 한·일 FTA 추진을 위한 ‘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 활동과정에서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통한 교역확대 및 통상장애 요인 완화·철폐 방안 협의
- 한·중 교역의 확대균형을 통한 지속·안정적인 경제통상관계 발전도모
  - 중국과의 통상장관회담(4회), 경제공동위(1회), 무역실무회담(2회) 및 각종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통상현안을 사전에 안정적 관리
  - 중국산 유연탄 도입 확대, 중국상품 구매사절단 파견(4회) 및 중국측 관심품목 조정관세율 인하·폐지 등을 통해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 노력 지속

-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안전문제, 한·중 마늘교역 문제, 가금육 등 중국산 수입식품 위생안전문제 등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의 추진 및 합의사항 성실히행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
-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 공동조정위원회를 '01년까지 3차례 개최하여 각국 현안사항 협의 및 분야별 실무회의 진척사항 확인, 다만 제3차는 중국과 러시아간 이견으로 결렬된 이후 동 위원회 개최 지연
  - '02.10 제3차 공동조정위원회 속개, 그동안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생산국인 러시아간 쟁점이 되어왔던 가스공급가, 배관노선 등에 합의
  - '03. 3 분야별 각국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최종 통합, '03. 6 통합보고서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종보고서 완료 예정
  - 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극동시베리아 분과위를 통한 지역시장 개척 및 선점 노력
    - 제1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02. 3.27~28) 개최
  - TKR-TSR 연결사업을 통해 아시아-유럽간 화물운송망을 구축, 동북아지역의 교역 및 물류중심지화 노력
    - 제2차 한·러 교통협력위('02.12. 9~10) 개최
  - 나호트카공단건설사업을 통해 극동지역에 우리의 자원·산업입지 확보
    - 한·러간 제5차 무역공동위('02.11.28) 및 제4차 경제공동위('02.11.28) 시 나호트카공단 설립협정 비준 촉구



## 10) 民主人權國家 이미지 確立 : 472(02-33-11)

- 민주인권국가 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인권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세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  
(‘01. 2.16,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

- 인권분야 주요 국제회의 참가
  -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3위) 등 연례 인권회의
    - ‘98년 이후 미얀마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 주요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 거론,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 유엔 여성특별총회(‘00. 6. 5~9), HIV/AIDS 특별총회(‘01. 6. 25~27), 아동특별총회(‘02. 5. 8~10) 등 유엔특별총회
  -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01. 8.31~9. 7 남아공 더반), 난민협약 50주년기념 각료회의(‘01.12.12~13, 제네바) 등
- 6개 주요 인권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보고서 제출 및 심의를 통한 인권국가로서의 대외이미지 제고 노력
-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문제 관련,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속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등 국내 인신매매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 난민지위 인정절차 및 운영방식의 개선 노력
-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준비 및 개최
  -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회의 공동준비국 고위관리-대사급회의 9회 개최(‘00. 9~‘02.10, 워싱턴)
  -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개최(‘02.11.10~11.12, 서울)
    - 110개 국가 및 국제기구 참석(참가국 94, 옵서버국 11, 국제기구 5)

- 서울행동계획, 테러리즘에 관한 민주주의 공동체 성명 채택
- '05년초 칠레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의 준비 등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에 공동준비국으로서 참여, 적극 기여 예정

## 11) 韓國을 訪問치 못하는 世界人들에 대한 對策 講究 : 544(06-33-14)

-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TV를 통해 월드컵을 보는 외국인들에게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실감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함
- 손님맞이를 세계 60억 인구 전체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01.12.22, 월드컵·아시아대회 합동보고서)

- 대형 스크린 활용, 월드컵 공동관전 등 추진
  - 재외공관 '월드컵 홍보 협의체'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주재국 주요 인사 및 교민들을 초청, 대형 스크린을 통한 공동관전
  - 주재국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관련 특집기사 게재 유도
- 재외공관 '아리랑 TV' 수신기 지원 : 영국, 독일 등 60개 공관 대상
- 월드컵 개막 리셉션 개최
  - 아국 홍보 영상물 및 월드컵 영상물 방영
  - 정부, 언론계 등 주재국 각계인사 초청, 월드컵 개최 축제분위기 조성
- 제2 프레스 센터(KOIS 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홍보
  - 월드컵 기간중 방한 언론인 취재활동 지원을 통한 홍보
  - 월드컵 비표 미소지 해외 언론인 방한 취재 지원

## 12) ASEM 外國人 投資誘致 後續措置 準備 : 13(03-70-02)

- ASEM 회의에서 결정된 외국인 투자유치 후속조치에 대하여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안을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바람('98. 4. 6, 국무회의시)

- 주요 추진실적
  - '98. 4 외국인투자위,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 실무협의 및 관계장관간담회를 통해 심의·확정 후 국무회의 보고
  - '98. 4 제2차 ASEM 정상회의 후, ASEM 회원국 16개국을 포함한 19개국 및 EU의 투자촉진단 방한 완료
  - '98년중 일본, 영국, 독일 등 12개국 및 EU의 투자촉진단 방한
  - '99년중 덴마크, 스위스, 미국 등 7개국 투자촉진단 방한
  - '99. 6 APEC 투자박람회(서울)에 다수의 유럽기업인 방한

## 13) 經濟政策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국민의견 적극 수렴, 이해 도모, 정책홍보 효율성 증대
- 사전 기획홍보의 중요성 부각, 각부처 공보관 연계활동 강화('98. 4.28, 국무회의시)

- 주한 외국상공관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ham)와 매분기별 간담회 개최
- 주한 외신기자단에게 수시 브리핑 실시('98년: 6.16, 7.23, 10.13, '01년: 1. 1)
  - 주한 외국인단체와 협의채널이 구축되어 '99년 이후에는 필요시 실무적으로 상시 접촉하는 방향으로 변경

- 외교통상부 인터넷 영문 홈페이지 보완
  - 통상교섭본부가 발간하는 각종 책자내용, 통상관련 보도자료를 수록
- 재외공관을 활용한 홍보
  - 재외공관 경제홍보담당관 지정,
    - '99. 2월 자료제공 대상을 125개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 '99. 2월 이후 매일 경제홍보 자료를 재외공관에 송부
  - 공관에 정기, 부정기적 경제홍보 책자 송부('01년: 3, 4, 6, 7, 8, 9월, '02년: 4, 6, 7, 8, 9월 등)
- 경제세미나 개최 또는 주요인사 파견을 통한 대외홍보
  - 김기환 경제협력 특별대사 방미활동('98. 9)
  - 유럽지역 경제세미나 개최('99.10)
  - 대미 경제홍보사절단 파견('99.10)
  - 한국경제세미나 개최(호주, 인도: '00. 4.28~5. 6, 러시아: '00. 6)
  - 한국경제설명회 개최(영국: '00. 9, 독일: '00.10, 프랑스: '00.10, 홍콩: '00.10, LA, 뉴욕, 시카고 등: '01. 4, 스톡홀름, 비엔나 등: '01. 5 등)

#### 14) 北韓 潛水艇 浸透關聯 後續措置 徹底 : 68(01-70-06)

- 북한 잠수정 침투에 대해서 진상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인식시킬 것
-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98. 6.30, 국무회의시)

- 주요 우방국을 통한 대북 압력 여론 조성
  - 우방국들에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우리의 평가를 통보
  - 주한 외교단에 대하여도 브리핑 및 관련자료 제공('98. 7. 1, 7.16)

- 대외발표 문제 등 한·미간 긴밀한 협의
- ASEAN-PMC/ARF 활용
  - 미·일·러 등과의 외무장관 회담 기회에 우리입장 설명, 필요한 협조 요청
- UN을 통한 대응책
  - 안보리 의장앞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 발송('98. 7. 2)
  - 안보리 문서 배포('98. 7.20)

## 15)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획기적 전기 마련
  - 20세기를 끝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양국이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을 위한 큰 방향 설정
-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
  - 방일 성과의 실효성은 양국간에 문서로 합의한 43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음
-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감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임  
( '98.10.12, 국무회의시 )

- 양국간 대화채널의 확충
  - 양국 정상 및 각료간 교류를 긴밀화·정례화하였으며, 지속적인 각료간 담회 개최와 한·일/ 일·한 의원친선단체를 통해 양국 대화창구를 확대
    - '98~'02간 정상회담 14회, 외교장관회담 25회 개최
-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 안보정책협의회(연 1회)와 방공실무회의 등 정례 안보대화를 갖고, 대북정책 공조강화를 위해 정책협의 실시

- 한·일 정상/외상 회담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TCOG('99. 4 개시) 회의 계기 한·미·일 공조 강화
-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 한·일 투자협정 발효('03. 1. 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사회보장협정 체결 교섭 및 지식정보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
  -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98. 9) 후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매년 개최 및 한·일 통상장관회담 수시 개최
-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02. 6), 정례 한·일 환경장관회담, 테러담당대사 협의 및 마약류 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
-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
  - 2002년 월드컵 대회 공동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 관광, 학술, 체육, 지역교류 등 7개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
  - 청소년·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미래프로젝트' 사업('03년부터 실시예정), 항구적 사증면제 추진, 한·일 수교 40주년('05년) 기념 각종 교류행사 추진
  - 3차('98.10, '99. 9, '00. 6)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 개방 실시

## 16) 컴퓨터 2000年 問題 解決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98.11.23, 국무회의시)

- 외교통상부 및 산하기관 Y2K 문제 실태 조사('98. 4)
- Y2K 대책반 구성('98. 7)

- 재외공관 주전산기 2대 Y2K 문제 해결 완료('98.12)
- Y2K문제 비상계획 수립('99. 2)
- 여권과 주전산기 및 시.도 여권발급용 워크스테이션 15대 Y2K문제 해결 ('99. 1~3)
- 「PC 점검의 날」 본부, 재외공관, 산하기관 PC의 Y2K 문제 점검('99. 5)
- 비정보 부문 Y2K문제 해결('99. 7)
- '00년 전환기간중 Y2K 문제 비상 대응계획 수립('99.11~12)
- '00년 전환기간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99.12.31~'00. 2. 4)

## 1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 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인사시 근무경력, 외국어 구사능력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고려와 아울러 지역안배를 위하여 노력

## 18) 韓・日 漁業協定에 관한 對國民 說得強化 : 191(02-70-18)

- 한·일 어업협정 문제가 민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협정을 이행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99. 3. 2, 국무회의시)

- 한·일 어업협정 내용관련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
- 대국민 민원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한·일 어업협정관련 홍보내용을 상세 게재
- 정당 및 국회 방문, 설명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99. 3.20 KBS 심야토론 참석(외교통상부 아태국 심의관 등)
  - 외교통상부장관 언론 특별기고문 게재('99. 3.25 동아일보)
- 서울 국제법 연구지에 논문 게재(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 '99 제6권1호)
-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등에 참석, 정부입장 설명
  - '98.11 어업협정 서명후 「광복회」주최 토론회 참석, 정당 주최 독도 및 어업협정 관련 토론회 등 참석

## 19) 韓・中 漁業協定の 蹉跌 없는 推進 : 196(02-70-19)

- 한·일 어업협정을 교훈으로 삼아 한·중 어업협정은 실무협상 등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99. 3. 9, 국무회의시)

- '98.11 회담 종결 및 문안 가서명
- '99. 3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 '99. 4 한·중 어업협정 협상추진기획단 설치
- '99. 4~9 현지 조업실태 조사 3회 참여
- '99. 4 양해각서 해석문제(양자강 수역 문제)가 발생하여 '99. 6~'00. 8 까지 양해각서 해석문제 실무회담 개최
  - 양자강 수역에서의 우리어선 전면 조업금지 규정을 철회할 것을 중국 측에 강력 요청하고 협정 정식서명 보류
- '00. 8 양해각서 해석 문제 완전 타결 및 협정에 서명
- '99. 2~'00.12간 한·중 수산당국간 실무협상 10회 개최
- '00.11 양해각서 정식 서명
- '01. 6.30 정식 발효
- '01. 6 및 '02.11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 우리측 EEZ와 과도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및 어획량을 일정 비율 삭감하여 서해 어족자원 및 우리 어민 보호

## 20) 2000年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 實踐 : 366(09-70-39)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00. 5. 9, 국무회의시)

- 업무계획 세부추진과제 확정
  -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실천과제 목록 및 추진실적 파악('00. 5.22)
  - 각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종합, 대통령비서실에 보고('00. 6. 1)
-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외교통상부 소관 10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 파악('00. 8.25)
  - 10개 주요 정책과제 선정시 연초 업무보고내용 일부를 포함하여 대통

령비서실에 보고('00. 8.28)

- 대통령 업무보고내용 중간점검('00. 9)
-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5대 현안과제 선정
  - 5개 주요현안 정책과제 목록 및 추진실적, 계획 파악('00.11.25)
  - 추진현황 및 마무리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00.11.29)

## 21) 公務員 人事制度의 改革 : 396(08-70-47)

- 이번에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외교관의 계급제를 폐지기로 한 것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전문성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이러한 제도는 다른 부처에도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공무원 인사제도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00.10.16, 국무회의시)

- 외교인력의 전문성 및 외교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는 요지의 새로운 외무인사제도 채택·시행
  - '00.12 외무공무원법 개정('01. 7. 1 발효)
- 직무분석을 통해 각 직위의 직무값을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 직무값에 기준을 둔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중심제 시행
  - 직위공모제 시행을 통해 보직인사의 투명성과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도모
  - 다면평가제 시행을 통해 객관적 인사평정에 근거한 인사행정 실현 추진

- 다면평가제도 개선·보완('02. 8) 등 신 인사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개선노력 지속

## 22) 2002年 월드컵대회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행사준비 철저
-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월드컵 준비('01. 5.29, 국무회의시)

### < 재외공관 해외홍보활동 >

- 전 재외공관 '월드컵 홍보협의체' 운영 ('99. 7)
  - 공관장, KOTRA, 관광공사, 현지 상사, 한인회, 월드컵후원회 관계자 등
- 월드컵 개막 리셉션 개최 : 33개 본선진출국 및 18개 축구애호국 대상
- 전 재외공관 월드컵 담당관 지정
- 한국주간 행사 등 각종 행사 활용 홍보
  - '한일 국민교류의 해', '한중 국민교류의 해' 계기 월드컵 홍보
- 기타 홍보 활동
  - 홍보영상물, 책자 등 월드컵 홍보물 배포 활용
  - 재외공관 '아리랑 TV' 수신기 지원을 통한 월드컵 홍보
  - 개고기 관련 해외언론보도 대응지침 마련 및 동해표기 정정

### < 국내 홍보활동 >

- 15개국 대상, 총 45개의 서포터즈 활동 지원
- 개도국 언론인 초청 월드컵 관련 시설 시찰
  - 터어키, 요르단, 스리랑카, 모로코 등 13개국 13명 언론인('01~'02)
- 20개 개최도시 주관 문화행사 등 국제행사 지원
  - 제7차 메트로폴리스 2002 서울총회('02. 5) 지원
  - 광주 비엔날레('02. 3~6),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02. 4~5) 등

# 法 務 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9(05-34-01)  | 공명선거 실현                | 1998. 4. 9 |
| 40(05-34-02)  | 불구속 수사 확대              | 1998. 4. 9 |
| 41(05-34-03)  | 북풍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 1998. 4.13 |
| 42(05-34-04)  | 한총련 조직에 대한 대응 철저       | 1998. 4.13 |
| 53(05-34-05)  |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      | 1998. 5. 6 |
| 83(05-34-06)  | 인권보장과 수사력 강화 병행 발전     | 1998. 7. 1 |
| 84(05-34-07)  | 국가기강 확립                | 1998. 7. 1 |
| 85(05-34-08)  | 법조비리 척결                | 1998. 7. 1 |
| 86(05-34-09)  | 구조조정 방해, 해외재산도피 등 엄정대처 | 1998. 7. 1 |
| 162(05-34-10) | 담합과 부당 내부거래의 근절        | 1998.10.27 |
| 176(05-34-11) | 변호사법의 신속한 보완           | 1999. 1.19 |
| 203(05-34-12) | 사법개혁안 마련               | 1998. 6.16 |
| 222(05-34-13) | 부정선거 척결                | 1999. 4. 6 |
| 495(04-34-14) | 전월세 대책 마련              | 2001. 3. 5 |
| 503(03-34-16) |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 2001. 3.13 |
| 504(05-34-17) | 출입국관리체제의 완비            | 2001.12.31 |
| 505(05-34-18) | 불법체류자의 인권보장            | 2001. 3.21 |
| 506(05-34-19) | 남북평화협력관계의 적극 지원        | 2001. 3.21 |
| 562(05-34-20) | 교정행정 개선                | 2002. 2.27 |
| 603(05-34-21) |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            | 2002. 7.16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 수립              | 1999.12.27 |
| 48(08-70-03)  | 홍보노력의 강화               | 1999. 3.16 |
| 63(01-70-04)  | 병무비리 추궁 철저             | 1998. 6.16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31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9. 9.21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06(04-70-21) | 아파트관리 관련 비리 척결          | 1999. 3.23 |
| 277(08-70-28) | 불법도청의 근절                | 1999. 9.21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66(08-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19(05-70-55) | 여성인권 개선                 | 2001. 4.18 |
| 525(06-70-58) | 2002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2. 6.30 |
| 596(05-70-64)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준비 철저        | 2002. 4.30 |

## 1) 公明選舉 實現 : 39(05-34-01)

-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 지역감정 조장, 음해성 흑색 선전 등이 우려되는 바, 지역감정은 망국적인 일임
-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또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운명을 위해서 절대로 위와같은 망국적인 일은 없어야 되므로,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대한 법적 대응책도 철저히 강구하기 바람('98. 4. 9, 법무부 업무보고시)
-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바람('98. 4.13, 전국검사장 접견시)
-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98. 4.28, 국무회의시)
- 지역감정조장사범 엄단
  - 관련 법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 등 흑색선전 차단대책 마련
  -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사실·유언비어 유포사범 엄단
  - 지역감정조장사범을 “3대 선거악”중 하나로 규정, 집중단속 실시('98.11. 3, 전국검사장 접견시)

- '98. 4. 6, 「선거사범 합동단속반」 편성 등 단속체제 완비
  - 전국 53개 지검·지청에 검찰·경찰 등 총 4,772명으로 편성
- 선거사범 단속지침 시달 등
  - '98. 4.15, 선거사범단속 철저 지시
  - '98. 5. 6, 전국公安부장검사회 회의 개최
  - '98. 5.12,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대책회의’ 개최
  - '98. 6. 9, 선거사범처리지침 시달
- 추진실적
  - 각종 선거사범 총 4,463명 입건, 구속 162명
  - 특히, 지역감정조장사범 6명 불구속 기소

## 2) 不拘束 搜查 擴大 : 40(05-34-02)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원칙임에도 지금까지 오히려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무리한 구속은 개인적 인권침해 외에도 가정과괴의 측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불구속수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8. 4. 9, 법무부 업무보고서)

- 대검, '97.12.2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중 불구속 수사지시 철저 이행
    - 수표부도·임금체불 사범 :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도금액, 회수율, 체임액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 행정법규 위반사범 : 원칙적 불구속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 적극 활용
  - 대검, '98. 4.10, 「IMF 사태 이후의 범죄 증가에 따른 특별지시(검사장 회의시 장관지시사항)」 철저 이행 지시
    - '98. 4.16, 「IMF 생계형 범죄 정보보고 지시」 시달
      -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된 경우 과감히 관용 조치
  - '98.11. 3, 제56회 전국 검사장 회의시 차장검사 특별지시사항 시달
    - 신병구속의 신중한 처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구속기소 적극 활용 등
  - '98.11.20, 검찰총장, 불구속수사 확대 등에 관한 특별지시
    - 구속영장 신중 청구, 불구속구공판·구약식 등 적극 활용 등
- ※ 구속점유율은 '98년 5.8%, '99년 4.5%, '00년 4.4%, '01년 4.2%, '02년(1~11월) 4.0%로 지속적 감소 추세

### 3) “北風事件”의 徹底한 眞相糾明 : 41(05-34-03)

- 소위 “북풍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안기부가 협조하여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북풍사건의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람  
(‘98. 4.13, 전국 검사장 접견시)

- 전담 수사팀(서울지검 공안제1부와 남부지청)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효율적 수사진행
-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이대성 파일 유출 사건, 오익제 편지 사건, 김대중 X-파일 사건, 정재문 의원 불법 대북접촉 사건 등 관련 사건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 처리
  - 수사상황(‘98. 3~’99. 9)
    - 권영해 등 13명 구속기소, 정재문 등 5명 불구속기소
  - 재판상황(‘98. 7~’01.11)
    - 권영해(징역5년), 손충무(징역2년), 윤홍준·이대성(징역1년6월), 이상생(징역1년4월) 등 5명 실형 선고·확정
    - 박일룡 등 10명 집행유예 선고·확정(징역 8월~2년, 집행유예 2년~4년)
    - 정재문 등 3명 벌금 1천만원 선고(최봉구 확정, 정재문 등 2명 상고심)



#### 4) 韓總聯 組織에 대한 對應 徹底 : 42(05-34-04)

- 한총련은 조직이 거의 와해된 상태
- 그러나 아직도 한총련을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으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검찰은 한총련의 조직과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폭력시위를 단호히 배척하되, 불필요한 과잉대처로 인해 폭력시위의 발미를 주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람  
(‘98. 4.13, 전국검사장 접견시)

- 한총련 재건 움직임 차단
  - 한총련의 각종 불법집회 원천봉쇄
- 한총련의 와해 지속 추진
  - 제5기~7기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장 류세홍 등 5명 구속
  - 제6기·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관련자 39명 구속, 55명 불구속
  - 한총련,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관련 27명 구속, 463명 불구속
  - 제5기·제6기·제7기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 804명 검거, 458명 구속
  - 한총련, 「반미·반전투쟁」 관련 유인물 배포자 2명 구속, 13명 불구속
  - 과기대·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8명 구속
  - 한양대 「반미구국 한양」사건 관련자 13명 구속
  - 대구 미군지기 「캠프헨리」 기습시위 관련자 3명 구속, 5명 불구속
  - 한총련 「통일 일꾼의 밤」 관련 구속 1명, 불구속 8명

## 5) 不法・暴力示威에 대한 嚴正對處 : 53(05-34-05)

-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법대로 한다’ 는 법무부장관 보고대로 시행할 것
- 법무부장관은 원칙을 확고히 가지고 대처하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중히 운용할 것(‘98. 5. 6, 국무회의시)
-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파업은 엄단할 것(‘98. 5.13, 국무회의시)

- 「8.15 통일투쟁」 관련 명동성당 농성자 5명 구속, 9명 불구속
- 계명대 교수 폭행사건 관련 1명 구속, 7명 불구속
- 「'99 민중대회」 관련 폭력시위 대학생 3명 구속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관련 43명 구속, 265명 불구속
- 전국지역의보 노조 파업 관련 8명 구속, 113명 불구속
- 방송노련 파업 관련 6명 구속, 41명 불구속
- 지하철노조 파업관련 화염병 운반 대학생 2명 구속
- 상암동 철거 반대 시위 관련자 11명 불구속
-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 관련 44명 구속, 26명 불구속
- 축협노조 국회난입 폭력시위 등 관련 9명 구속, 253명 불구속
- 금속연맹 종묘 폭력시위 등 관련 10명 구속, 81명 불구속
- 민노총 총파업 관련 16명 구속, 450명 불구속
-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 관련 17명 구속, 175명 불구속
-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관련 41명 구속, 173명 불구속
- 퇴출은행 노조 파업 관련 6명 구속, 29명 불구속 등

## 6) 人權保障과 搜查力 強化 並行 發展 : 83(05-34-0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이 인권 보장과 수사력 강화의 병행발전에 진력함으로써 인권 상황이 일신되도록 함과 동시에 범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98. 7. 1,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시)</li> <li>○ 인원과 기구의 확대를 통하여 검찰의 범죄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바람('98.11. 3, 전국 검사장 접견시)</li> <li>○ 불법감청,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98.11. 3, 전국 검사장 접견시)</li> <li>○ 감청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 주기 바람('98.12. 8, 국무회의시)</li> <li>○ 약자의 권리보호('02. 2.27, 법무부 업무보고시)</li> </ul> |
|---|
- 
-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근절 지시
    - 가혹행위 엄단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 특별지시 시달('02.10)
    - 고문수사 재발 방지대책 시달('02.11)
    - 인권보호 수사 준칙 제정 · 시행('02.12)
    - 변호인참여제도 실시('03. 1. 1)
  - 유전자형 모세관 자동분석장치 등 182종 2,642점 첨단과학수사장비 도입 ('98. 3~'02.12)
  - 편면경, 화상대화장치, 녹음·녹화 기능을 갖춘 디지털조사실 설치 추진중 ('03. 3, 서울지검에 디지털조사실 1곳 시범설치 예정)
  - 모발을 이용한 엑스터시 마약성분 복용 감정기법 국내최초 개발 등 감정 · 감식실 역량 강화('02. 2)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철저로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최대한 억제

## 7) 國家紀綱 確立 : 84(05-34-07)

-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기강 확립 활동의 중추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강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선량한 시민이 편안하게 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할 것
-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폭력시위는 엄정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가 잘못임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기 바람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공직비리 척결은 고위층 비리척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임.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기 바람('98. 7. 1,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 회의시)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시 예상되는 노사분규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공직비리 척결(부정부패사범 지속적 척결)
  - 체계적 수사를 위해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99. 9.17)
    - 부정부패사범사범 단속('98. 1. 1~'02.11.30) : 27,265명 단속(공무원 3,134명), 9,945명 구속(공무원 1,852명)
  - 공무원비리 집중단속
    -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98. 1~'02.11) : 415명 단속, 262명 구속
    - 중하위공직자 비리('98.10.19~'02.11.30) : 2,322명 단속, 1,347명 구속
- 불법과업이나 지역·직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 북한산 터널공사 반대 공사장 점거 농성자 등 지역·직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집단행동 관련자 319명 구속
- 불법·폭력시위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책임 적극 추궁
  - 피해신고 68건 접수하여 법률구조공단에 26건 이첩, 배상명령 신청 1건

## 8) 法曹非理 剔抉 : 85(05-34-0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가 깨끗하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신뢰받은 법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조비리 척결에 더욱 노력 할 것</li> <li>○ 먼저 검찰 자체의 정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판·검사 사직 후 1년 정도 혜택을 주는 전관예우 악습도 없애야 할 것임<br/>(‘98. 7. 1,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 회의시)</li> <li>○ 사정기관은 자체 정화 철저(‘98.11. 3, 전국검사장 접견시)</li> <li>○ 법조비리의 척결(‘99. 1.12, 국무회의시)</li> <li>○ 법조계 정화 및 개혁의 철저(‘99. 2. 2, 국무회의시)</li> </ul> |
|---|
- 
- 법조비리 단속 강화(‘98. 7~’99.12)
    - 법조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신고접수 32명, 23명 기소
    - 법조주변부조리사범 지속적 단속 등
      - 법조주변부조리사범 1,573명 단속(460명 구속)
      - 법조브로커 337명 대한변협에 명단 통보
  - 자체감찰 활동 강화(‘98. 7~’99.12)
    - 정기암행감찰체제에서 상시암행감찰체제로 전환
    - 검찰 자체정화를 위한 암행감찰활동 적극 전개
      - 전국 58개청에 대한 암행감찰 활동 8회 실시
      - 법조비리 관련 직원 77명 적발

(기소 13명, 의원면직 7명, 징계회부 7명, 경고 및 인사조치 50명)
  -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98. 7~ ’99.12)
    - 수임비리관련 변호사 125명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
  -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99.12.28)

- 수입비리 등 범조비리 엄중 제재로 범조부조리 재발 방지
- 지검 단위 범조윤리협의회 기구 신설

## 9) 構造調整妨害, 海外財産逃避 등 嚴正 對處 : 86(05-34-09)

- 퇴출은행 직원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고객을 불모로 하여 인수업무를 방해하고 고객의 편의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집단농성 등 구조조정 방해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 또한, 국민들의 지탄대상인 해외재산 도피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98. 7. 1,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 회의시)

- 구조조정 방해행위 적극 대처
  - 인수업무 등 적극 방해 노조간부 및 배후조종자를 색출 엄단
  - 직장 점거 등 폭력행위 수반시 공권력 투입 등 강력 대처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개최, 범정부적 대책수립 및 피인수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불법성 적극 홍보
- '97.12.2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중 건전 외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조치 철저 이행
  - 외화밀반출, 외화계속보유자 등 환차익을 노린 불법 환치기사범, 해외 원정도박사범 등을 중점단속
  -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항만 감시체제 강화
- 추진실적
  - 대우중공업 노조 불법파업 등 관련 17명 구속, 90명 불구속
  - 퇴출은행 구조조정방해 관련 6명 구속, 29명 불구속

- 한국조폐공사 창 통폐합 방해 관련 7명 구속
- 대우 옥포조선소 파업 등 관련 4명 구속, 61명 불구속
- 외화밀반출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및 단속 활동 강화
  - '98. 1. 1~9.30 주요사범 280명 단속, 150명 구속

## 10) 談合과 不當 內部去來의 根絶 : 162(05-34-10)

- 건설공사 입찰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각 분야에서 기업들간의 부당한 담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는 물론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와 수사기관은 담합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함
  - 이와 함께 계열기업들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루 속히 차단해야 하며, 이는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임
    - 부당 내부거래가 없어야 경쟁력 있는 기업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것임('98.10.27, 국무회의시)
- '95. 8. 1 「부실공사 관련사범 특별단속 지시」 시달
    - 입찰담합, 건설업 면허대여, 일괄하도급 등 건설관련 구조적 비리 중점 단속
    - 관련 공무원 및 감리 담당자의 금품수수 등 직무상 범행 단속
    -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 단속
  - '97.12.12 「물가안정저해사범 특별단속 지시」 시달
    - 폭리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행위 엄단
    - 사업자간에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등 엄단
    - 각급청에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 설치
  - '98. 6.19 「관급공사 담합입찰 특별단속 지시」 시달

- 입찰담합 등 중점 단속, 관련업자와 유착한 비리공무원 단속
- '98. 6.19 ~ '99. 9.30 72명 단속, 25명 구속

## 11) 辯護士法の 迅速한 補完 : 176(05-34-11)

- 법조계의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사이므로 법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법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 '99. 1.19, 국무회의시 )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 추진
  - '00. 1.28 개정 변호사법 공포 및 '00. 7.29 시행
- 사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한 법조비리 척결 및 법조풍토 쇄신 기대
  - 수임비리 변호사 처벌 등 법조비리사범 처벌조항 대폭 강화
  -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지방법원단위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운영

## 12) 司法改革案 마련(司法改革推進委員會 構成) : 203(05-34-12)

-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인사, 사법시험제도, 판·검사 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기 바람( '98. 3.23, 국무회의시 )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함과 아울러 사법시험제도 정비, 법학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사법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람  
( '99. 3.25,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자문기구) 설치



- '99. 5. 6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 '99. 5. 7 사법개혁위원 임명장 전수 및 1차회의 개최
  - 위원 19명으로 구성(위원장 : 김영준 前감사원장)
- 법조부조리 근절과 법조의 현대화, 국제화를 위한 제반 개혁방안 심의
  - 법조비리 근절 대책, 검찰 중립성 강화 및 법무·검찰 기능조정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민·형사소송 개혁 방안 등 논의
  - 전체회의 32회, 소위원회 10회, 지방세미나 4회, 공청회 2회 개최
- '99.12.21 대통령께 사법개혁안 최종보고
- 43개항의 사법개혁안 마련
  - 법조인 양성 관련
    - 사법시험 주관권의 법무부 이관
    - 사법연수원 폐지 및 법원·법무·검찰·변호사단체·법학계 공동참여의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 13) 不正選舉 剔抉 : 222(05-34-13)

- 재·보궐선거에 대한 일부 부정시비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선관위가 고발한 사례가 주로 여당의 위반사항이라는데 대하여 반성해야 함
- 여당이 이기면 적당히 넘어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부정선거는 대통령의 의지도 여당의 의지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검찰은 철저히 선거부정을 가려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99. 4. 6, 국무회의시)

- 3·30 재·보궐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현황
  - 총 55명 입건, 2명 구속

- 금전선거사범 19명 입건, 흑색선전사범 10명 입건, 불법선거사범 1명 입건, 기타 부정선거운동 19명 입건, 2명 구속,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6명 입건
- 국회의원 19명 입건 1명 구속, 자민련 11명 입건, 1명 구속, 한나라당 14명 입건, 무소속 11명 입건
- 6·3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현황
  - 총 16명 입건, 1명 구속
  - 금전선거사범 3명, 흑색선전사범 3명, 신문·방송 부정이용 3명(1명 구속), 기타부정선거운동 7명 입건
  - 국회의원 3명, 자민련 1명(구속), 한나라당 8명, 무소속 4명 입건

#### 14) 傳月貰 對策마련 : 495(04-34-14)

- 전월세 세입자의 법적보호대책 마련 할 것('01. 3.15, 국무회의시)

- 추진계획개요
  - 전월세가격의 폭등에 대하여는 전세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인상
  - 과도한 월세전환에 대하여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 하여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시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실적   | 추진상황                  |
|-----------------------|---|--|-----------------------|
| 전<br>월<br>세<br>대<br>책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금액 확대를 통한 영세임차인 보호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인 최우선변제권보호대상을 수도권 4,0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li> <li>- 특별·광역시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인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을 수도권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지역 1,200만원으로 인상함</li> </ul> | 완 료<br>(’01. 9.15 시행)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 제한을 통한 과도한 월세수수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환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01.12.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li> </ul>  | 완 료<br>(’02. 6.30 시행) |

## 15) 經濟 再跳躍을 위한 法的 支援 : 503(03-34-16)

- 벤처기업들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큰 기업들이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강탈이나 다름없음.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검찰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양면의 노력을 해야 함
-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노사가 대화를 통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세계 경쟁을 이겨내고 서로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검찰도 이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사문제를 격려하고 또 필요한 규제도 해야 함(’01. 3.21, 법무부 업무보고시)

- 공적자금비리 집중단속
  -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대검중수부장)설치·운영('01.12. 1)
    - 단속실적('02. 1. 1~11.30) : 1,253명 단속, 646명 구속
  - 벤처기업 관련비리에 대한 특별지시 시달('02. 1.15)
    - 단속실적('02. 1. 1~11.30) : 239명 단속, 167명 구속
- 불공정 거래행위사범 단속('01. 1~'02.11) : 1,753건, 3,977명 단속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01. 1~'02.11) : 75,470명 입건, 2,748명 구속
- '02. 4.30 미 정부가 우리나라 지채권 감시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 조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엄정 대처하고 악의적 임금체불업주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단
  -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부문 불법파업 관련자 등 420명 구속
  - 악의적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업주 18명 구속

## 16) 出入國管理體制的 完備 : 504(05-34-17)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개항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01. 3.21, 법무부 업무보고시)

- 친절·신속한 출입국심사기반 확충
  - 심사인력 증원(413명→ 588명), 출입국심사대 증설(128대→288대) 및 3교대 24시간 운영체제 확립
  - 김포공항 구 국제선 2청사에 도심터미널 운영, 국내선 환승객에 대한

## 출국심사 편의제공

- 출입국규제자 자동검색 시스템 등 운영
  - '01. 3.29 인천국제공항 개항시부터 출입국규제자 자동검색시스템인 바코드 판독기 288대 도입 운영으로 출입국 심사시간 대폭 단축
  - 입국규제자 검색시 관세우범자를 세관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인 원스 톱체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입국자 통관시간 대폭 단축

## 17) 不法滯留者の 人權保障 : 505(05-34-18)

- 우리나라를 거쳐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매우 비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음
- 불법체류자를 강제송환하게 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동안은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임('01. 3.21, 법무부 업무보고서)

- 「외국인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등 각종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 체불임금 914건 (8억8천만원) 등 총 2,449건 고충상담, 처리('02. 1~ 11)
- 법률구조 활성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전담변호사 지정 운영
    - 491명 민사소송지원, 구조금액 12억4천만원('02. 1~11)
- 체류외국인 인권침해사범 단속 강화
  - 전국 검찰청에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담검사 지정 운영
    - 인권침해사범 824명 입건처리('02. 1~11)
-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외국인 고충상담 및 각종체류허가
  - '01. 3. 1부터 5개기관 시범실시 : 110회 출장 12,174건 처리

- 적극적인 난민인정 심사
  - 난민인정신청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
    - ※ 난민인정신청자 164명 (허가 1, 불허 54, 철회 34, 심사중 75)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02. 3.25~5.29)
  -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면제 후 최장 1년간 출국준비기간 부여
    - ※ 총 255,978명 (불법체류자의 92.3%) 신고

## 18) 南北 平和・協力 關係의 積極 支援 : 506(05-34-19)

-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함.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01. 3.21, 법무부 업무보고서)

-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내법령 제·개정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 개정 지원('02. 1)
  -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안)」 개정 지원('02. 2)
  -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안)」 개정 지원('02. 7)
  - 「북한이탈주민정착금감액지침(안)」 제정 지원('02. 9)
- 남북 4개 경제협력 합의서에 대한 법적 지원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마련('01. 5)
  - 남북 4개 경제협력 합의서 국내법적 효력방안 강구('01. 6)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비 관계부처 실무위원회 참석 ('02. 4, 8)
-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적 지원
  - 「남북 통행·통신·검역 합의서(안)」 검토 의견 회신('02. 5)
  -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및 운행협정서(안)」 검토 의견 회신('02. 9)

- 「개성공단 관련 남북 통관·검역·통행·통신합의서(안)」 검토 의견 회신('02.10)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시 개성공단 개발관련 실무협의 지원('02.10)
- 경수로 부지 내 질서유지 관련 회의 참석 및 지도('01. 3,11)
- 뉴욕 케도 본부 검사 파견 법적 지원 활동('01. 4~'02.12)
- 원자력 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가입 검토 의견 회신('02. 7)
- 「핵사고책임의정서」 관련 협상 법적 지원('02. 5)
-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특수법령과장 참석('02. 12.11~13)
- 북한·분단국·체제전환국 법제 관련 연구 및 자료집 발간
  - 「개정 북한형법 해설」 자료집 발간 ('02.11)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자료집 발간('02.11)
  - 「통일법무 기본자료 2003」 발간('02.12)
  - 베니스 위원회 정기총회 7회 참석('01. 3~'02.12)
  - 「베니스위원회 개관」 발간('02.12)

## 19) 矯正行政 改善 : 562(05-34-20)

- 재소자가 일반 직장에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도 행정 방안이나 가족면회의 자유폭 확대 등의 개선방안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02. 2.27, 법무부 업무보고서)

- 수형자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및 구외공장 취업 확대
    - 모범수형자 등에 대하여 외부 기업체와 구외공장 취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교정시설 수용중 배운 기술 숙달 및 사회적응력 배양
    - 출소후 동종 기업체 등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 도모
- ※ '02년, 대전교도소 등 28개기관에서 64개 기업체에 1일 평균 1,525

## 명 취업

### ○ 수형자 가족 합동접견 확대

- 모범수형자 ·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교정시설내 개방된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확대, 가족과의 유대강화 및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

※ '02년도 가족합동접견 시행 인원 : 7,970명

## 20) 嚴正한 公權力의 執行 : 603(05-34-21)

- 임기말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 기강해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함
- 특히, 최근 근무중인 경찰관의 폭행, 태풍속에 낚시 강행으로 인명피해 발생, 일부 폭력적 노동쟁의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차단 ·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그러나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람 ('02. 7.16, 국무회의시)

### ○ 대검, 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02. 7)

- 공권력 경시풍조사범, 기초질서 위반사범 등 엄정단속

### ○ 불법 · 폭력시위나 폭력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침해사범 엄단

### ○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노동계 · 공무원 등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효과적인 대응방안 강구
- 주요추진실적



- 법외 공무원노조 불법집단행동 관련자 등 25명 구속
- 거제 원유비축 기지건설 방해자 등 45명 구속
-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과 관련, 공안대책협의회(2회) 개최하여 효과적인 대응책 논의

## 21) 失業細部對策 樹立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98. 3.26, 국무회의시)
-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99. 3.16, 국무회의시)

- 불법체류자 관리강화로 내국인 취업확대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강화
    - 불법취업우려자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 16,247명 ('98 6,408명, '99 9,839명)
    - 불법체류 다발국가 현황을 재외공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매월 통보
  - 공항만 입국심사 강화로 불법취업 우려자 등 입국저지
    - 입국목적불분명자 입국불허 : 12,636명 ('98 1,717명, '99 10,919명)
    - 위변조여권 사용자 적발 : 4,088명 ('98 1,705명, '99 2,383명)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 '98년 3회('97.12.27~'98. 4.30, '98. 7. 1~8.31, '98.10.15~11.30)에 걸쳐 64,374명 출국조치
    - '99년 2회('99. 5. 1~5.31, '99.12. 1~12.31)에 걸쳐 5,064명 출국조치
  - 불법취업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강화

- 출입국사범 108,895건 처리('98 83,619건, '99 25,276건)
- 불법체류외국인 집중단속 ('98 2회, '99 1회) : 2,895명 적발

## 22) 弘報努力의 強化 : 48 (08-70-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강댐 문제와 관련 이는 정부의 홍보논리와 홍보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li> <li>○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율이 높아짐('00. 1.25, 국무회의시)</li> </ul> |
|---|
- 법무행정 주요현안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기자회견·인터뷰 등 : 190회
    - 오보대응 : 484건, 보도자료 배포 : 413건 등
  - 「범정부·범국민준법운동」 홍보기본계획 수립·추진 ('00. 4.29)
    - 범국민준법운동추진본부 발족 ('00. 5. 1)
    - 「법의 날」 대통령 담화문 배포 ('00. 5. 1) : 14,470부
    - 준법풍토 확립을 위한 준법 강연회 개최 ('00. 5 ~ ) : 46회
    - 준법운동 엠블렘 선정·시상 : 10.26
  -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강화방안 수립·시행 ('00. 9. 4)

## 23) 兵務非理 追窮 徹底 : 63(01-70-04)

- 이번 병무비리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 이르는 구조적 비리임
-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병무비리가 없도록 할것('98. 6.16, 국무회의시)

- '98. 6.16 국방부에서 검찰에 민간인 청탁자 185명 수사의뢰
- '98. 6.16부터 '98. 7.22까지 원용수 준위와 병무 청탁부모 등 관련자 65명을 출국금지하고 5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 등 집중수사
- 병무청 파견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 준위에게 금품을 주고 병무청탁을 한 부모, 병무청 공무원, 병무브로커 등 168명 적발, 사법처리
  - 전 제주병무청장 김동용 등 23명 구속기소, 35명 불구속기소, 87명 약식기소, 20명 지명수배, 3명 비위통보
- 혐의 인정된 165명 보도자료로 명단공개

## 24) 各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 할 것
- 경비 절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제고
  - 교육훈련기관 정비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통합하여 기획부로 개편, 청사관리 민간위탁 등으로 51명 감축

-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안내 및 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42명 감축
- 인센티브제도 도입
  - 인센티브제도 개요 및 세부시행 계획 산하기관 통보('98. 5.21)
  - 예산절약 및 수익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 흠막이공법 변경 등에 대한 예산절약 분에 대한 성과상여금 1,570만원 지급

## 25) 水害復舊 萬全 : 138 (08-70-09)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격려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각 장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수해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  
( '98. 8.11, 국무회의시 )
  -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복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감독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  
( '98. 8.17, 국무회의시 )
- 법무부장관 수해지역 위로방문 ( '98. 8.16, 경기도 고양시 )
  - 호우피해 조기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 실시( '98. 8. 5~8.31 )
    - 본부 및 52개 산하기관·단체 6,039명 참가
  - 산하기관 폭우피해에 따른 예산조치 지시
  - 수재의연금 5,982만원 기탁 ( '98. 8.12 ) : 105개 기관·단체 16,146명

## 26) 컴퓨터 2000년 문제 : 224(07-70-17)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Y2K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었음 ('98. 6.16, 국무회의시)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 6.16, 국무회의시)
- 컴퓨터 2000년 문제 추진대책반 편성('97. 5.26)
  -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문제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97. 6.26)
  - 컴퓨터 2000년 문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시행('98. 5. 6)
  - 보호관찰·교정업무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완료('99. 1)
  -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및 미비점 보완 지시(산하기관, '99. 3)
  - 출입국관리업무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완료('99. 6)
  - 컴퓨터 2000년 문제 현장점검(정보통신부 주관, '99.10.21)
  - 컴퓨터 2000년 문제 전환기간 중 비상대응계획 마련('99.12. 8)
  - 컴퓨터 2000년 문제 비상대책상황반 운영('99.12.31~'00. 1. 4)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완료('00. 1. 4)

## 2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실·구 의견 수렴('99. 1.19)
- 추진계획 수립('99. 2.6)

<검사 인사>

- 주요보직에 대한 출신지별 인원 별도 관리
- 인사대상자의 능력·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관리 및 인사권자에게 수시 보고

<일반직 인사>

- 서열과 능력, 조직내에서의 신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발탁
- 출신지·출신학교 등 인사기준 별도관리 및 인사권자에게 수시보고

## 28) 아파트管理 關聯 非理 剔抉 : 206(04-70-21)

- 수사당국은 아파트관리 비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가 척결되도록 하고, 건교부는 책임 있는 조치와 감독을 해야함
  - 많은 국민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민생차원에서 철저히 대처해 주기 바람('99. 3.23, 국무회의시)
- 아파트 관리비리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아파트관리 비리가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임('99. 3.25, 행정자치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99. 3.24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지휘 철저 지시」 시달
  -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지휘
  -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 단속활동 전개
  - 대국민 상대 신고 홍보활동 강화
- '99. 4.28 「아파트관리 비리 수사 재 강조 지시」 시달
- 단속내용

- 공사입찰 · 보험가입 관련 금품수수, 오물수거비 · 시설보수비 · 청소 소독 용역비 · 승강기 보수점검비 등 조작횡령 등
- '99. 3~9 총 5,681명 단속, 구속 158명

## 29) 不法盜聽의 根絶 : 277(08-70-28)

- 불법도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함.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사설기관들의 도청이나 몰래카메라 등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99. 9.21, 국무회의시)

-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특별단속('99. 9)
  - 불법도청장치 판매사범 등 56명 단속, 39명 구속
  - 전담검사를 지정, 각 청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지속적 단속 실시
- 적법절차준수를 위한 지시 시달
  - '99. 9 긴급감청 억제 특별지시
  - '00. 2 통신비밀보호법관련 업무 철저 지시
  - '02. 3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시행 관련 업무 철저 지시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철저('02. 3.30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 '02. 3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해설책자 발간, 일선청과 경찰 · 국정원 배포
  - '02. 3 통신비밀보호법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 지정 · 운영
  - '02. 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통보관련 업무준칙 마련
  - '02. 4 통신비밀보호법 전담검사 회의 개최
  - '02. 4~11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316건(전년 동기 대비 66.0% 감소)

### 30)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 (08-70-29)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 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홍보('99.10. 4, 국무회의시)

#### ○ 홍보내용

- 21세기 관광자원시대 대비 출입국절차 개선
- 21세기 선진교정행정 구현
-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 법률복지 강화
- 보호소년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처우 향상
- 탄력적 보호관찰제도 운영
- 기타 법무행정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과제

#### ○ 홍보방법

- 기자단, 각사 사회부장, 법조담당 논설위원에게 보도자료 배포
- 브리핑 · 간담회 등으로 전국민에게 홍보되도록 조치

#### ○ 홍보결과

- TV : KBS 등 7회 방송
- 신문 : 동아일보 등 28회 게재



### 31)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00. 4.20 대통령 업무보고 완료
  - 새 천년 준법풍토의 확립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
  - 집회·시위, 노사문화 개선
  - 국민생활의 안정 확보
  - 검찰의 자기 혁신
  - 인권과 법률복지의 확충
  - 교정·보호행정의 혁신
  - 선진 출입국행정의 구현
  - 법무행정 정보화 조기 정착
  - 내실있는 사법개혁 완수
  - 세계일류경제 달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32)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이번 총선이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패없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
- 정부는 금전살포와 흑색선전, 폭력에 대한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함('00. 3.21, 국무회의시)

- 선거사범 단속지침 시달 등
  - '00. 2.16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철저 단속지시
  - '00. 4. 3 「선거폭력사범 등 엄단 특별지시」 시달
  - '00. 4.12 선거일 전후 선거사범 처리지침 시달
  - '00. 4.18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처리지침 시달
  - '00. 7.31 선거사범의 신속한 수사 및 재판 관련지시 보고
- 추진실적
  - 각종 선거사범 총 3,749명 입건, 132명 구속
    - 금전선거사범 1,548명 입건, 82명 구속
    - 흑색선전사범 502명 입건, 15명 구속
    - 선거폭력사범 208명 입건, 20명 구속
    - 불법선전사범 666명 입건, 5명 구속
    -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65명 입건, 2명 구속
    - 기타 부정선거운동 등 825명 입건, 10명 구속

### 33)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함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각 부처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새 천년 준법풍토의 확립
  - 의식개혁계기 마련, 시민운동으로 승화, 법령·제도 개선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 등
- 국민생활의 안정 확보, 검찰의 자기 혁신
- 인권과 법률복지의 확충
  - 자랑스런 인권국가로의 발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폭 확충
  - 저소득층 재산범죄 피해의 실질적 해결
- 교정·보호행정의 혁신
  - 수용자 교육훈련 쇄신, 수용자 처우의 획기적 개선
  - 교정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로 과밀수용 해소
- 선진출입국행정의 구현
  - 단체관광객 신속입국시행으로 출입국소요시간 최대한 단축
  - 인천국제공항 개항대비 철저
- 법무행정 정보화 조기 정착
  - 형사사법정보망 구축, 정보인프라 통합, 정보화교육 실시 등
  -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정보화장비 확충, 정보시스템 활용 독려
- 세계일류경제 달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34)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시)

- 인사의 원칙과 기준 확립
  - 승진·전보인사 예고제 실시
  - 전보인사시 순환보직제 실시
  - 소속기관장의 평정서열 존중
- '직렬별 인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 법조인력정책과 5개 직위 등 핵심분야 전문직위 지정
  - 근무실적 우수자 발탁 특별승진 : 소년보호직 6급 3명, 교정직 7급 1명
- 인사청탁근절을 위한 본부직원 정신교육 실시('01. 4.20)

### 35) 女性人權改善 : 519(05-70-55)

-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함 ('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시)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02.12.18 개정법률 공포(시행 : '03. 3.19)
  - 주요 개정내용
    - 수사절차상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 보호처분의 변경·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 사람의 범위에 검사 추가 등

-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신설
  - '01. 4.12 여성관련범죄 수사관계자 교육방안 시달(법무연수원)
  - '01.10 1차교육 실시(교육인원 : 77명)
  - '02. 7 2차교육 실시(교육인원 : 84명)

## 36)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람('01. 5.29, 국무회의시)

- 2002년 월드컵 한·일 출입국공동위원회 구성·운영('99. 3. 9 ~ )
  - 서울, 동경에서 7차례 회의개최, 대회참가자 출입국편의제공 및 홀리건 대책 등 공조방안 협의
  - FIFA 임원 등 대회관계자에 대한 복수사증발급
  - 한·일간 이동시 대회관계자의 AD카드를 사증에 갈음
  - 인천공항↔나리따공항간 출입국심사관 상호 파견, 32,735명 사전입국 심사 실시
- 국익위해자 입국기도 봉쇄
  - 위·변조여권 감식기법 향상을 위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및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식전담반 편성·운영
  - 대테러 및 위·변조여권 감식 순회교육 2회 실시
  - 국제테러분자 6,515명, 홀리건 2,689명 입국규제, 대회기간 중 위·변조 여권소지자 921명, 입국목적불분명자 5,234명 입국불허

- 대테러활동 및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 월드컵 출입국안전대책활동지침 산하기관 시달
  - 9.11 미국테러사태 이후 출입국관리 대테러 종합상황반 운영
  - 입국심사 및 체류외국인 동향조사활동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환태평양 출입국관리 정보회의 개최, 미국, 캐나다 등 10개국과 불법입국 정보자료 신속교환체제 구축

### 37)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준비 철저 : 596(05-70-64)

-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함
-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바람('02. 4.30, 국무회의시)

- 관계부처 차관급 「합동대책반(반장 재경부 차관)」 설치 ('02. 5)
- 법 취지 및 내용 적극 홍보('02. 4~12)
  - 차임 연체 등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갹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등 임대인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 홍보
  - 홍보방법 : 언론 활용, 팸플렛 제작·배포, 인터넷 홈페이지·반상회보
- 부당인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02. 4~12)
  - 전국 세무서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인상자 중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 서울 등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공정위)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설치 ('02. 6, 행정자치부)

- 전국 시·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을 설치·운영
- 상가임대차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 ('02. 6, 중소기업청)
- 전산프로그램 조속 개발 ('02. 8)
- 사업자등록 내용 공시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조기 완료(국세청)
- 시행령 제정·공포 ('02.10.1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02.11. 1)

# 國 防 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9(01-35-01)   | 해상방위를 위한 신무기체계 확보필요    | 1998. 3.18 |
| 88(01-35-02)  | 강군 육성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 1998. 7. 2 |
| 89(01-35-03)  | 직급조정관련 개선방안 마련         | 1998. 7. 2 |
| 90(01-35-04)  | 방위태세 점검                | 1998. 7. 2 |
| 136(01-35-05) | 국방예산의 효율화              | 1998. 8.11 |
| 150(01-35-06) | 실효성 있는 건군 50주년 기념행사 거행 | 1998. 9.15 |
| 172(01-35-07) | 군의 철저한 사고예방대책 추진       | 1998.12. 8 |
| 205(01-35-08) | 군비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         | 1999. 3.23 |
| 207(01-35-09)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철저 대비    | 1999. 3.24 |
| 286(01-35-10) | 노근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 1999.10.12 |
| 312(03-35-11) |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         | 2000. 2.16 |
| 318(01-35-12) | 군 정보화 철저               | 2000. 2.18 |
| 319(01-35-13) |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화           | 2000. 2.18 |
| 511(01-35-15) | 장병정신교육                 | 2001. 4.14 |
| 512(01-35-16) |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기획득사업 추진    | 2001. 4.14 |
| 513(01-35-17) | 장병특기교육 활성화             | 2001. 4.14 |
| 514(01-35-18) | 장병사기 앙양                | 2001. 4.14 |
| 63(01-70-04)  | 국방부의 병무비리 추궁 철저        | 1998. 6.16 |
| 68(01-70-06)  | 북한 잠수정 침투관련 후속조치 철저    | 1998. 6.30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 추진            | 1999. 8. 3 |
| 282(08-70-29) | 2000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 9.21 |
| 48(08-70-03)  | 국정홍보 강화                 | 2000. 1.25 |
| 304(03-70-32) | 각 부처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철저        | 2001. 5.29 |

## 1) 海上防衛를 爲한 新武器體系 確保必要 : 9(01-35-01)

- 해군은 적 잠수함 침투 거부 및 주변해역 방어와 우리를 세계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의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음
-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장비 확보가 필요하므로 국가 재정 문제 등을 고려, 장관을 중심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98. 3.18, 해군작전사령부 순시시)

- 해군력 운용개념 등 중장기 해군력 개선계획 장관보고('98. 4.29)
- '00~'04 국방중기계획에 해군 방위력개선사업 반영
  - 기간 중 총 28개 사업 4조 6,848억원
  - ※ 대북 질적 우위의 전쟁억제 전력 및 미래 핵심전력 기반구축

## 2) 强軍 育成을 爲한 精神敎育 強化 : 88(01-35-02)

- 강군 육성을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공정한 인사, 철저한 훈련을 지시한바 있으나, 정부의 대북 3원칙과 안보와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키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정신과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98. 7. 2, 국정과제 점검 회의시)

- 확고한 대적관 확립,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 등 지휘관에 의한 정신교육 수시 실시
- 정훈장교 및 전문교관에 의한 시사안보교육(매주 수요일 : 정신교육의 날)
- 국방정신교육원 순회교육지원단 교육(603회, '98. 7~9)
- 교육자료 지원
  - 1단계('98. 7. 2~7.22)로 대북정책 관련 교육자료, 윤독용 팜프렛 제작지원

- 2단계('98. 7.23~9.30)로 대통령의 통치철학,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 햇볕정책의 사상과 철학, 대북 3원칙과 안보와의 상관관계 등 정신교육 자료 각 군부대에 제공

### 3) 職級調整 關聯 改善方案 마련 : 89(01-35-03)

- 과거 군사정권시절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능률을 저하시켜 놓았음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상향조정직급 등 군 인력운영실태 분석('98. 7)
  - 군 인력관리체계개선 대책수립('98. 8)
    - 진급 및 보직관리 개선
    - 정년제도 개선 추진
    - 하위계급 최저복무기간 연장으로 상위계급 적체현상 해소
    - 초과인력 조기정리
  - ※ 상향조정 직급 원상회복 및 초과인력 조기정리로 예산절약 및 능률 향상 도모

### 4) 防衛態勢 點檢 : 90(01-35-04)

- 동해 잠수정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 방위태세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할 것 ('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비밀(Ⅲ급)이므로 내용 생략(내용은 보고완료)

## 5) 國防豫算의 效率化 : 136(01-35-05)

-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큼
- 국방개혁을 통해 경직성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 '99년 예산편성시 방위력개선/운영유지분야 조정
  - 방위력개선분야는 '98년에 4조 802억원(29.6%)에서 '99년에는 601억원 증액한 4조 1,403억원으로 편성(30.1%)
  - 운영유지분야는 '98년에 9조 7,198억원(70.4%)에서 '99년에는 1,111억원 감소한 9조 6,087억원으로 편성(69.9%)
    - \* 인건비는 '98년 대비 2,299억원 감소편성
- '00~'04 국방중기재원 배분 조정
  - 방위력개선분야는 1.7% 증액하고, 운영유지비분야는 1.7% 감소 조정
    - ※ 인력중심의 군 구조를 과학·기술 군 구조로 개편

## 6) 實效性 있는 建軍 50周年 記念行事 舉行 : 150(01-35-06)

- 건군 50주년 기념행사는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됨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면에서 위축되어 있으므로 사기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98. 9.15, 국무회의시)

- 중앙경축 기념식(10. 1, 10:00~12:00/ 서울공항)

- 참가인원(33,476명) : 행사병력(13,232명), 참조인원(6,744명), 초청인사(1,080명), 관련인원(12,420명)
- 참가장비(42종 422점) : 신형장비 4종 24점
- 행사내용 : 군악대연주, 의장시범, 기념식, 호국의 불 점화, 분열 및 시민화합행진
- 시가행진(10. 1, 15:00~17:30/ 남대문-광화문지역)
  - 참가제대 : 도보 및 기계화부대, 민·군 제대, 16개 시·도/ 한마음대행진
  - 제2건국 및 국민적 대화합의 장 연출
    - ※ 『국민의 정부』 위상에 부합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승화하여 제2건국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계기 마련

## 7) 軍의 徹底한 事故豫防對策 推進 : 172(01-35-07)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잇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저하 됨
  - 앞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사후 대책을 수립, 보고해 주기 바람('98.12. 8, 국무회의시)
- 군 기강 확립 비상대책회의('98.12)
  - 사건·사고 원인분석/ 대책보고(대통령)('98.12)
  - 제대별 군 기강 확립 지도방문('99.12. 8~'99. 1. 9)
    - 사고 근절시까지 지휘관/참모부대 정밀진단 및 보완
  - '99년 군 기강확립/ 비전투손실 예방활동 지침시달
    - ※ 금번 사건·사고를 교훈 삼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

## 8) 軍備獲得事業의 透明性 確保 : 205(01-35-08)

- 군비획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개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주기 바람('99. 3.23, 국무회의시)

- 국방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 확대방안 강구('99. 4~7)
  - 정보확대방안 실무검토 및 심의·의결하여 시행('99. 7. 1)
- 제도·절차개선을 통한 획득업무의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99. 4~10)
  - 투명성 확보방안 실무검토 후 확정하여 관련사항을 국방획득관리규정에 반영('00. 1. 1)
  - ※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의사결정기준 절차의 계량화 및 관련업체에 사전공지 등을 통하여 군비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9) 北韓의 大量殺傷武器 威脅 徹底 對備 : 207(01-35-09)

- 인구 밀집 지역에 대량살상 무기 사용시 대비책 강구('99. 1. 4, 안보상임위 회의시)
-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일반적인 전쟁의 국면은 우리보다 열세할 것이나 대량살상무기 사용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적이 노리는 전략은 초전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임
  - 반드시 적을 격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99. 3.24, 국방부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대량살상무기 위협평가를 위한 한반도 정보판단서 발간('98. 2)
- 대량살상무기 대응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서 발간('99. 3)

- 대비계획 수립 발전
  - 개념계획 5029완성('99. 3) 및 작전계획 5029완성 등 관련 작전계획 수립
  - 대량살상무기 위협 종합대비책 완성('99. 4.14)
  - 정책부서의 화생전 참모부서 보강 및 비행단, 합대사령부에 화학부대 보강('98.11)
- 한·미 화생전 정치-군사게임('98. 7)
- SCM/ MCM간 연합방위 토의 등 한·미 공조체제 발전('99. 1)
- 국민방호를 위한 유관부처(행자부/서울시) 협조('99. 2)
  - ※ 대량살상무기 위협 관련 대비태세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비책 완성

## 10) 노근리事件에 대한 徹底한 調査 : 286(01-35-10)

- 노근리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여 그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한·미 우호관계에 지장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조사를 추진해 나가기 바람('99.10.12, 국무회의시)
- 국방부 진상 조사반 편성 및 조사착수('99.10.25)
    - 국방군사연구소장 등 연구원을 중심으로 편성
  -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미국자료 795건, 국내자료 70건)
  - 현장 목격자, 피해자, 참고인 등 증언 청취
    - 한측 : 86명(피해자, 참고인 위주)
    - 미측 : 175명(참전장병 위주)

- 한·미 공조 조사활동(실무회의/ 자문단회의)
  - 서울 및 워싱턴에서 14차례 회의
- 조사종결
  - 공동발표문 작성
    - 한·미 대책단회의시 서울에서 공동발표 문안 확정('01.12. 6~12, 7일간)
    - 한·미 공동발표문을 기준으로 각 국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합의
    - 500페이지의 한측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00부 발간하여 정부부처, 군단급 이상 부대, 대학에 배부
    - 사상자 수, 피난민 인솔 및 강제노숙 및 피해자 주장 적극 반영
    - 정부종합청사에서 조사결과 발표('01. 1.12, 10:00)
- ※ 한·미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양국 갈등 현안의 합리적 해결 선례제공 및 추모비 건립, 장학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 발전계기 마련

## 11) 産・學・研・政 協力の 強化 : 312(03-35-11)

- 군·행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첨단기술제품을 구매할시 국내 벤처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00. 2.16,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 국방부는 군 관련사항에 대해서만 추진

- 우수 벤처기업 군납참여 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 조달간담회 확대실시로 조달정보 공개 확대('00. 5)
  - 중소기업청, 벤처협회에 군납참여 관련 서한 발송('00. 7)



-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중소벤처기업 우수개발제품 우선 구매('00. 6)
  - 중소 벤처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6억원('00.11 현재)
- 국산대체품목, 부품국산화, 해외정비장비 국내정비능력 개발참여
  - 국산대체 참여 신청업체 : 9개 업체('00.10 현재)
  - 부품국산화에 기인테크 등 다수업체 참여하여 TUBE ASSY 등 개발
- 벤처기업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
  - 미루정보통신(주)에서 3D-VR을 이용한 상황변화 실시간 적용 시뮬레이션 개발 등
- 대전시 및 대한무역공사 주관 「벤처 군수마트 2000」 행사에 국방부 지원('00. 9.29~10. 1)
  - 목적 : 벤처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개발능력을 군수산업에 접목
  - 국방부 후원내용 : 군납업체 설명회 실시, 국방조달전시관 및 상담소 설치 운영, 군납조달절차 등 자료배포(3종 500부)

## 12) 軍 情報化 徹底 : 318(01-35-12)

- 장병들이 군 생활을 통해 컴퓨터에 대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장래 사회활동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정보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1등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임('00. 2.18, 국방부 업무보고시)

### < 조치내용 >

- 중대급 부대 컴퓨터 교육장 구축 : 6,842개소 설치 완료('00. 3.15)
- 대대급 부대 인터넷 교육장 구축 : 1,615개소 설치 완료('00. 4)
  - 정보검색사 자격 취득 : 507,807명('02.11월말 현재)

- 사·여단급부대 정보화 교육장 구축 : 177개소 구축
- 핵심 정보체계 구축 : 육·해·공군 전술C4I체계 구축 중
- 자원관리체계 구축 : 보급·의무체계 개발완료, 장비·시설·조달체계 개발 중
- 정보통신기반체계(주전산기, PC, WAN, LAN) 구축 중

< 향후 추진계획 >

- 중대급부대 컴퓨터교육장 PC 성능개량
- 대대급 인터넷 교육장 장비 및 회선 증설
- 정보화 관련 다양한 자격증 취득 후 사회 진출 : '02.12월 이후 지속추진
- 사·여단 정보화교육장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 해군 KNTDS 2차, 공군 제2 MCRC, 지상·해·공군전술 C4I체계개발, 합동C4I체계 구축을 위한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성능개량
- KCTC 응용체계 개발 추진
- 시설, 장비정비, 부대조달, 의료체계의 확산 등 핵심기능체계 구축 추진
- 국방정보통신 기반체계 조기 구축 추진('05년)
- 중대급부대 컴퓨터 교육장 구축

### 13) 防衛力改善事業의 效率化 : 319(01-35-13)

-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방위력개선사업이 더욱 효율화 되도록 추진할 것  
( '00. 2.18, 국방부업무보고시 )

- 예산성과금 지급
  - '01년도 예산성과금 관련 24건 심사('01.12.29)
  - 국방투자사업 관련 7건 채택/성과금 지급(5,700만원/ '02. 6월)
  - '02년도 예산성과금 심사/기획예산처 제출 예정('03. 1.31)
-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 연구개발장려금 운용규정 개선/보완('02. 8월)
  - '02년도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신청/심사('02. 8~12월)
  - '02년도 연구개발장려금 지급(48개 과제/ 945명/ 1,085백만원/ '03. 1. 3)

#### 14) 將兵 精神教育 : 511(01-35-15)

- 안보 일변도의 교육을 탈피한 안보와 화해를 병행한 교육실시
- 최근 남북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장병정신교육 강화  
( '01. 4.14, 국방부 업무보고시)

- 추진실적
  - 대상별 교육내용체계 정립
    - 신병 : 군인정신 함양 위주 12개 과목 신설
    - 장병 : 국가안보, 민주시민의식 함양 관련 12개 과목 개편
  - 효용성 있는 교재개발 지원
    - 신병용 기본교재(4,000부) · 영상교재(310질)
    - 장병용 영상 보충교재(대대급/ 52,850질, '98~'02년 11회)
    - 충 · 효 · 예 교육 실무지침서(중대급/ 3,000부)
    - 일일 정신교육교재 : '안보의 창으로 본 365일'(중대급/ 14,000부)
  - 정보화, 과학화시대에 부합한 교육시스템 구축('01. 7.18 개설)

- 정신교육 홈페이지 운용, 전 군 실시간대 자료 제공
- 진중 CATV교체 및 신규설치(185개 부대)
- 부대 정신교육 제도/방법 개선
  - 주간 정신교육용 표준교안 국방일보 제공(연52회, 매회 55만부)
  - 반기 집중정신교육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충·효·예 교육 전 군 확대시행('02년)
- 정신교육지도 및 평가체제보강
  - 합참 전비검열단 정훈검열관 편성(중령 1명)
  - 각 군 전투지휘검열시 정훈평가기능 강화
  - 정신전력 우수부대 선발 포상 : 30개 부대('98~'02)
- 향후 계획
  - 국방대 정신전력부 전문과정 개설('03. 8)
    - 국방대, 국참대 입교 학생, 전문과정 보수교육
    - 정신교육교리/ 정신전력 향상 방안 강구
    - 정신교육 성과 검증을 위한 진단체계 개발 : '03년
  - 「사이버 정신교육지원체제」 구축 추진 : '04년 예산 소요제기
  - 군 전용 위성 TV 방송국 설립 추진 : '04년 하반기 운용

## 15) 透明하고 效率的인 武器獲得事業 推進 : 512(01-35-16)

- 무기획득사업은 일체의 비리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필요성, 가격, 기술이전, 부품획득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한 점 의혹없이 추진하고, 어느 누구도 일체의 청탁을 받거나 해서도 안됨
-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군의 전력증강에 도움이 되는 여부만 기준이 되어야 함('01. 4.14, 국방부 업무보고시)

- 주요 대형사업별로 결재(決裁)기록 유지
- 사업추진팀을 활용한 공정한 사업관리(관련회의 37회 실시)
  - KDX-Ⅲ(11회), F-X(17회), SAM-X(9회) 등
- 투자사업 정보공개 활성화
  -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작성, 비치(방산진흥회 등) : '01. 6.16, '02. 2.28
  - F-X기종 결정 평가방안 공청회 : '01.11월
  - F-X사업 공개 / 설명회 등 : 49회
- 사업 추진내용 국회 보고
  - 국회 요구자료 제출 : 472건(F-X사업 등 국회의원 대면설명 102건)
  - 사업 진행상황 설명 : 6회(방위력개선소위 3회, 정당별 설명회, 당정협의회 등)
- 사업 진행절차 및 과정 적극 홍보
  - 언론 브리핑, 신문/방송 인터뷰, 홍보자료 배포 등
- F-X사업 기종결정 및 집행승인 : '02. 3 ~ 5월
- KDX-Ⅲ사업 전투체계 기종결정 및 집행 승인 : '02. 7 ~ 8월

## 16) 將兵特技教育 活性化 : 513(01-35-17)

- 병사들에게 컴퓨터, 영어, 기술분야 등 특기교육을 활성화하여 군 생활 기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얻은 바가 큰 기간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함('01. 4.14, 국방부 업무보고시)

- 정보화 교육 강화
  - 중대급부대 컴퓨터교육장 구축완료('00. 3.15) : 중대급 6,842개소, 장비 20,526대
  - 대대급 인터넷교육장 구축완료('00. 4) : 대대급 1,615개소, 인터넷 PC 8,075대, 서버PC/ 프린터 1,615대
    - ※ 전역예정장병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 : '01년 213,747명, '02년 151,168명
  - 사/여단급부대 정보화교육장 구축 : 177개소(육군 109, 해군 34, 공군 33, 국직 1)
-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활성화
  - 자격증 취득 대비, 사전 교육여건 조성 : 시험 1개월 전 집중 교육 실시
    - ※ 일과시간이후 자유시간,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여건보장
  - 국가기술 자격증 갖기 운동전개
    - 국가기술 자격증 갖기 운동전개 권장(계속)
    - ※ 자격증 취득 현황 : '75~'01년도(227,189명), '02년도(8,632명)
  - 전산망을 이용한 국가 기술자격증종류 및 일정 홍보
    - 각군 인트라넷/인터넷에 국가기술 자격증 종류 및 '02년도 시험계획 게재
- 영어 생활화 여건 조성
  - 많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생활영어 및 영어단어 게시

- 주 1~2회 취침시간에 팝송 및 일상영어 방송/청취
- 국방일보에 영어회화 게재
  - '01년도 330회 게재 : 생활영어 및 유머영어/ English Clinic
  - '02년도 184회 게재 : 영어 한마디/ 이보영의 생활영어

## 17) 將兵士氣 昂揚 : 514(01-35-1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병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줌과 동시에 엄정한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절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기충천한 군이 되도록 해야함</li> <li>○ 직업군인 가족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람('01. 4.14, 국방부 업무보고서)</li> </ul> |
|--|
- 군 기강 확립에 대한 인식 제고
    - 군 기강확립 특별대책회의 : '01. 7.26, '02.11. 2
    - 군 기강확립 특별 점검단 운영 : '02.11. 7~12.20
  - 취약요인에 대한 적시 적절한 예방지침 시달로 사건·사고 감소
    - 취약시기/계절별 사고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84회)
    - 최근 3개년 평균 사망·사고 대비 19% 감소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절차 개선
    -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제686호, '01. 6.11)
    - 사고처리 신상필벌 기준(제702호, '02. 3.19)
    -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02.12.23)
  - 소부대 행정간소화로 초급간부 업무여건 보장
  - 보수개선

- 기본급 인상 : 8.5%    - 함정출동가산금 인상 : 6,000 → 8,000원
- 해외파견근무수당 개정('02.12.27)
- 군숙소 개선
  - 관사 : 3,650세대    - 독신숙소 : 3,831세대
  - 전세대부 지원제도 개정('02. 2. 1)
- 군인자녀 대학특례입학 확대('02년 43개 → '03년 49개 대학)
  - 장교 자녀 : 15개 → 22개 대학    - 준사관 자녀 : 35개 → 44개 대학
  - 부사관 자녀 : 43개 → 49개 대학
- 면세제도 확대
  - 면세품목 확대 : 탁주 등 6종    - 면세물량 확대 : 14,500천병
  - 면세액 확대 : '02년 353억원 → '03년 404억원
  - 물품위주 운영체제를 면세매장 운영체제로 전환 추진('03년)
- 군 자녀 기숙사 증축
  - 건립지역 : 도봉학사    - 규모 : 100실    - 건립시기 : '04년도

## 18) 國防部の 兵務非理 追窮 徹底 : 63(01-70-04)

- 이번 병무비리는 병무청에서 국방부에 이르는 구조적 비리임
-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병무비리가 없도록 할 것('98. 6.16, 국무회의시)

- 1차 수사 : 모병관 원준희 리스트 수사('98. 5. 2~7.25)
  - 119건 적발, 176명 사법처리
- 2차 수사 : 서울지역 병역면제 조사('98.12. 1~'99. 4.27)
  - 137건 적발, 207명 사법처리



- 3차 수사 : 전국대상 모든 유형의 비리 조사('99. 5. 1~'99. 8.31)
  - 204건 적발, 127명 사법처리
- 기관수사 : 2차에 걸쳐 기무사, 헌병대 중점조사('99. 7.23~12. 7)
  - 2명 사법처리, 8명 기소유예 후 징계처리, 2명 검찰에 이첩
- ※ '98.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4차에 걸쳐 병역면제, 의병전역 등 모든 유형의 병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 군인 60여명을 포함한 총 700여명의 병무사범을 적발하여 의법처리함으로써 병무비리 제보창구(☎02-748-5980) 개설하여 향후에도 제반자료 확보시 끝까지 수사하여 병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발본할 계획

## 19) 北韓 潛水艇 浸透關聯 後續措置 徹底 : 68(01-70-06)

-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판하는 여론을 형성,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판문점 장성급회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의 실상을 확실히 밝히도록 할 것('98. 6.30, 국무회의시)

- 대 국민 홍보
  - 현장 확인 및 잠수정 관련 작전결과 중간발표('98. 6.26)
  - 국방부장관 담화 및 사건결과 설명('98. 6.29)
  - 비정규전 관련 대국민 홍보대책 수립
- 판문점 장성급회담 추진(국방부 - 유엔사 협조)
  - 1~3차 회담시('98. 6.23/6.30/7.16) 동 사건관련 조사결과 및 물증제시, 정전협정 등 위반 항의 및 성의 있는 조치 촉구
  - 집단자살 확인서 서명 후 잠수정 승조원 시신 인계('98. 7. 2)

## 20)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또한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 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 국방개혁 5개년 계획수립추진의 일환으로 상부구조 개편 및 조직정비
  - 국방부 본부 1국 2과 축소('99. 1. 1시행)
  - 유사/공통기능 통합 일환으로 각군 본사를 통합하여 계룡대 근무지원단 창설('98.12. 1)
  - 연구/산하기관 정비하여 550여명 감축('98.12)
- 정부경영진단으로 국방부(소속기관 포함) 기구 및 인력감축
  - 국방부 본부 : 2국 8과, 81명 감축
  - 국립현충원 : 1과, 33명 감축하고 일부 기능 민간 위탁
  - 국군홍보관리소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38명 감축하고 일부기능 민간위탁
  -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 10명 감축하고 일부기능 민간위탁
- 각 군 본부 조직진단 후속조치('99.11)
  - 해·공군 병과교육체계 개선
  - 상무대 근무지원단 통합가능성판단
  - 화학학교 참모부 편성 재검토

## 21) 水害關聯,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전 국무위원은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 격려하고
- 전 공무원은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재민 구호 및 제방 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것.
- 차후에 대홍수나 폭우에도 견디낼 근본적인 복구를 할 것  
(‘98. 8.11, 국무회의시)

- 지리산, 경기북부 수해복구지원(병력 연109만명, 장비 연32,337대)
- 태풍 ‘에니’ 복구지원(병력 연77만명, 장비 연2,911대)
- 지원내용

- |                    |                      |
|--------------------|----------------------|
| - 파손 가옥정리 : 6,520동 | - 산사태 정리 : 105개소     |
| - 고립인원 구조 : 765명   | - 방역 : 127,978ha     |
| - 사채발굴 : 60구       | - 벼세우기/베기 : 10,337ha |
| - 세탁지원 : 81,550kg  | - 급수 : 4,317톤        |

※ 민·관·군 합동지원체제 구축으로 재난극복 및 적극적인 대민지원  
으로 대군 신뢰도 향상

## 22)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감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임(‘98.10.12, 국무회의시)

- 주요인사 상호교환방문(‘99. 3~9)

- 한측 군 인사 방일 : 공군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정보본부장, 기무사령관 등
- 일측 군 인사 방한 : 방위청장관, 공막장, 방위연구소장 등
- 한·일 방위협의회 개최('99. 1~9) : 국방장관회담, 정책실무회의, 정보 교류회의 등 추진
- 함정 상호방문 : 계획에 의거 훈련시 상호방문 추진
  - 한국 함정 방일('99. 8. 6~8, 사세보)
  - 일본 함정 방한('99. 8. 2~3, 부산)
- 공해상에서 해군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99. 8. 2~9)
  - ※ 한·미 동맹관계를 축으로 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관계 및 안보협력 증진

## 23)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98.11.23, 국무회의시)
  - Y2K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 적극 홍보하기 바람('99.12.28, 국무회의시)
- Y2K 대책위원회 구성, 분야별 현장점검으로 Y2K문제 해결
  - Y2K문제 추진진도관리 및 모의시험 실시하여 100% 해결
    - 무기체계 : 677종, 정보체계 : 2,303종, 비정보체계 : 686종
  - Y2K문제 관련하여 북한 및 국제협력

- 북한 Y2K문제 : 판문점 고위 장성급 회담시 2회에 걸쳐 공동해결 제의
- 국제협력 : 각 국 주재 무관을 통해 각 국의 Y2K문제 추진상황 파악  
및 한·미군간 Y2K 문제해결 협력을 위한 의견 교환  
(‘99. 3~12월 중 매월)
- 대 국민홍보 활동 : 국방 Y2K 추진상황 인터넷 게시 및 신문, 방송 등에 홍보

## 24)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인사를 점검해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 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주요직위 보직 자격제도 정착
  - 전군 대령직위 자격요건 설정 : 440개 직위
  - 개인별 경험직책 코드화 등 각 군 인사 데이터 베이스 보완
  - 자격요건에 부합된 보직 적격자 조회 전산시스템 개발
- 능력·전문성 위주의 인사관리제도 정착
  - 전문성, 병과, 직능 고려, 5개(610, 620, 630, 640, 650) 전문직위로 분류
  - 획득 - 교육 - 보직 - 진급의 인사관리체계 구축
    - 야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집행의 최고 전문가 육성
    - 초급 장교시 특기부여로 계급별 경영관리를 통한 전문능력 함양
- 사전 보직예고제 시행
  - 계급별, 병과별 연2~4회 사전보직 심사위원회 제도화
- 공정한 진급심사
  - 심사장소의 완전격리 및 통신차단 등

## 25) 빈틈없는 水害對策 推進 : 264(08-70-25)

-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99. 8. 3, 국무회의시)
- 지난 2년간의 수해를 거울삼아 충분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기 바람(‘99.12.28, 국무회의시)
- 작년과 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비(‘00. 5. 3, 건교부 업무보고시)

- 인명구조, 이재민수용, 도로/제방복구, 농경지정리 등 최대한 지원
- 산사태·철책전도·토지유실·축대/담장 붕괴 등을 예상하여 응급복구 자재마련 등 예방대책 강구

## 26) 2000年 課題의 對 國民弘報 : 282(08-70-29)

- 100대 국정과제와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실천과제들이 2000년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적극 홍보 바람(‘99. 9.21, 국무회의시)
- 기획예산처가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대 국민 홍보를 추진 바람. 특히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예산은 수혜 계층별 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올해 추진한 일과 내년에 해야할 일을 정리하여 홍보 바람  
(‘99.12. 7, 국무회의시)
- 내년도 예산내용과 관련법안 등을 분야별 수혜계층별로 적극 홍보 바람(‘99.12.21, 국무회의시)

- ‘99년도 국방운영성과 및 새 천년 국방정책방향 홍보
  - 출입기자단에 자료배포(‘99.12.23), 프레스센터 브리핑(‘99.12.27, 12.29),

- 국방일보 게재('99.12.27),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99.12.27~계속) 등
-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홍보
  - 국방일보 등 군 홍보매체 활용하여 국방소식지, '00년 국방예산 홍보 팜프렛 배포(6,000부, '99.12.27), 국군방송 대담 해설('00. 1. 4~8)
- '00년 국방예산 홍보 :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3회 개최('00. 1월 완료)
  - ※ 국방업무의 성과와 새 천년 국방비전 제시로 국민들의 국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신뢰도 향상

## 27)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알리겠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 사후적인 홍보보다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함('00. 1.25, 국무회의)
- 적극적 홍보소재 발굴 및 자료제공
    - 주 1회 홍보관계회의 및 일일 브리핑 정례화(보도자료 배포)
  - 오·왜곡 보도 적극 대응
    - 사전에 기획홍보를 강화하여 오·왜곡보도 최소화
  - 인터넷 활용 국방홍보 내실화
    - 일반 네티즌 대상 E-mail 클럽 운영, 다양한 국방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보도자료 및 홍보간행물 배부선 여론 선도계층으로 확대(언론사 논·해설위원 등)
  - 대 언론 유대강화 : 국방정책설명회, 전방부대방문 등

## 28) 各 部處의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 천년 개혁방향을 보고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00년 연두업무보고시에 「국방개혁방향」을 포함하여 보고
  - 목표지향적 방위력개선
  - 연구개발 및 방산(防産)능력 제고
  - 인사 교육제도 개혁
  - 장병사기 및 복지증진
  - 군 사법제도 개선
  - Zero Base 개념 예산편성
  - 정예 정보화 군 육성
  - 신뢰받는 군대 상 확립

## 29)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공직자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 할 것  
( '00. 3.21, 국무회의시)

-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실천지침 시달('99.10.21)
  - 선거관여 금지, 선심행정 등의 자제('00. 2. 3)
  -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한 특별강조지시('00. 2.11)
  - 군 부재자 투표 기본계획 시달('00. 2.18)



- 장관지시사항 시달 및 월간회의시 강조
-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각 군·직할기관 선거 관계관회의('00. 3.10)
- 언론홍보
  - 공명선거 실천지침 전군에 하달(전 언론, '00. 1.13)
  - 정치적 중립, 공명선거 다짐(국방일보, '00. 3.11)
  - 4.13총선 군 부재자투표 투표실시(전 언론, '00. 4. 3)

### 30)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장관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 특히, 부처·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하여 보고할 것('00. 5. 9, 국무회의시)
- 8대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청와대 보고('00. 6. 9)
    - 목표지향적 방위력개선
    - 연구개발 및 방산능력 제고
    - 인사·교육제도 개혁
    - 장병사기 및 복지증진 등 다수
  - 업무보고 내용 추진 독려
    - 장관 주재 월간회의시 추진상황 보고, 강조('00. 3, 5, 7월)
    - 개혁과제 추진 독려공문 시달('00. 6, 9월)
  - 부처간 당정협조
    - 법령안 제·개정 10건
    - 주요 국방정책 및 현안업무 39건

### 31)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시)

- 공정한 진급심사 실시
  - 공정한 진급관리를 위한 장관 주관 간담회/장관서신 하달(‘02. 8월)
    - 학연·지연·군무연 등 각종 연(緣)에 의한 인사청탁 배제
  - 중장(中將)직위 중심 그룹별·계급별 적정 인력구조 설정, 진급심사
  - 4심제(3개 추천위원회, 1개 선발위원회) 진급심사
    - 심사위원 지역별/출신별 균형 편성
  - 진급심사 기간중 참관제도 시행
  - 투명성 제고를 위한 Digital 진급심사제 도입(‘02년)
  - 객관성 보장을 위한 진급평가요소 계량화
  -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진급심사
- 사전보직예고제 시행 : 매년 5월, 11월
  - 보직심의를 통해 자격기준에 맞는 적격자 보직 및 공감대 형성
- 국방부/국직부대 장교인사통제 실시 : 연중
  - 자격기준에 맞는 적격자로 보직 통제
  - 인사통제자료 전산화 관리로 인사통제의 신뢰성 증대
- 인사교류통제직위(이권관련직위) 보직통제 : 연중
  - 장교 및 군무원 인사교류통제직위 조정(‘01.12월~‘02. 2월)
    - \* 장교 221개 직위, 군무원 511개 직위
  - 인사부조리 사고 예방

### 32) 2002年 월드컵 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스스로 무엇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 바람('01. 5.26, 국무회의시)

-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유지
  - 군사대비 실무기획단을 편성, 체계적인 군사대비계획 수립 시행
  -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정보유통체계 구축, 실전훈련(40여회) 실시
- 군 기본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자원 적극지원
  - 인력 : 전야제·개막식, 운전, 어학 요원 등 3,300여명의 전문인력 지원
  - 물자 : 대회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용 침구, 식기류 등 49,534점 지원
  - 장비 : 함정, 고속정 등 장비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유도 및 전야제행사 지원
  - 시설 : 축구장 지원(체육부대 육사 구장제공)

숙박지원(유성스파텔 222실, 제주 해군호텔 60실)

- 대회지원활동과 “봄”조성활동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유도
  - 전국 TMO에 외국인 안내소 10개소 운영, 위급사태에 대비 응급요원과 후송헬기 지원
  -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군악대 퍼레이드, 연주회 120여회 지원. 전쟁기념관광장 이벤트행사, 도라산역의 안보관광지 조성, 민·관·군 위문열차공연 실시 등
  - 민·관·군 축구대회에 129개 팀 참가하여 축구 활성화
  - 16강시 대표선수를 공익근무요원 대상에 포함토록 병역법시행령 개정
  - 꽃동산/꽃길조성, 동전모으기운동, 월드컵 홍보 플래카드 설치, 비인기 지역 경기입장권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 참여유도

# 行政自治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2(09-36-01)  | 행사 간소화 방안 마련              | 1998. 3.26 |
| 52(08-36-02)  | 공무원 부정비리 엄단 조치            | 1998. 5. 6 |
| 61(08-36-03)  | 정부부문의 정보화 책임관제도 도입        | 1998. 5.21 |
| 78(08-36-04)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시대의 정착   | 1998. 6.27 |
| 120(08-36-10) | 공직사회의 변화와 체질개혁 추진         | 1998. 7. 8 |
| 121(08-36-06) | 정부구조 조정 추진                | 1998. 7. 8 |
| 133(08-36-07) | 지방자치단체의 능력향상 지원강화         | 1998. 8. 4 |
| 139(08-36-08) | 지방행정감사 중복 개선              | 1998. 9. 1 |
| 151(08-36-09) | 대형사고 예방노력 강화              | 1998. 9.15 |
| 166(08-36-10) | 이중과세 문제의 적극적 해결           | 1998.12. 1 |
| 173(08-36-11) | 효과적인 공무원포상 실시             | 1998.12.21 |
| 185(08-36-12) | 의미있는 국경일행사 기획             | 1999. 2. 9 |
| 204(08-36-13) | 경찰개혁안 마련                  | 1999. 3.23 |
| 211(08-36-14)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 1999. 3.25 |
| 213(08-36-18) |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검토        | 1999. 3.25 |
| 242(08-36-17) | 경기도 지청 설치 검토              | 1999. 4.24 |
| 246(08-36-18) | 국민 화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          | 1999. 5. 4 |
| 250(08-36-19) | 공직기강 확립 대책                | 1999. 6. 2 |
| 266(08-36-20) | 한자병기 실시                   | 1999. 8.10 |
| 271(08-36-21) |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       | 1999. 8.19 |
| 272(08-36-22) | 유사시 대피훈련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철저 | 1999. 8.19 |
| 285(08-36-23) | 지진대비책 수립                  | 1999.10. 4 |
| 299(07-36-24)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2000. 1.25 |
| 300(07-36-25) | 전자민주주의 시대 선도(인터넷)         | 2000. 1.25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24(08-36-26) |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 2000. 2.22 |
| 333(03-36-27)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 2000. 3.22 |
| 334(08-36-28) | 퇴직공무원 대책 마련          | 2000. 3.22 |
| 335(08-36-29) | ASEM 행사 대비철저         | 2000. 3.22 |
| 364(08-36-30) | 각종사고방지대책 강화          | 2000. 5. 3 |
| 378(08-36-31) | 안전사고의 재발방지           | 2000. 7.18 |
| 401(03-36-32) |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개혁추진      | 2000. 9.28 |
| 459(08-36-33) | 효과적인 폭설피해 보상방안 강구    | 2001. 2.20 |
| 486(08-36-34) | 일선의 부정부패 척결          | 2001. 2.21 |
| 488(08-36-36) |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강구       | 2001. 2.21 |
| 489(08-36-37)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발굴 및 지도강화  | 2001. 2.21 |
| 490(08-36-38) |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          | 2001. 2.21 |
| 491(08-36-39) |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처        | 2001. 2.21 |
| 571(08-36-40) | 봄가뭄 및 안전관리 대책 철저     | 2002. 3.11 |
| 572(08-36-41) | 지방자치제 실천             | 2002. 3.11 |
| 573(08-36-42) | 학교폭력에 철저 대처          | 2002. 3.11 |
| 574(08-36-43) | 선거 공영제 실시            | 2002. 3.11 |
| 597(08-38-44) |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보완대책 마련 | 2002. 4.30 |
| 602(08-36-45) | 재해대책에 만전             | 2002. 7. 9 |
| 10(03-70-01)  | 실업문제 세부대책 수립·추진      | 1998. 3.26 |
| 48(08-70-03)  | 국정홍보의 강화             | 2000. 1.25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4 |
| 149(05-70-10) | 실업대책 내실화             | 1998. 9.15 |
| 153(03-70-11) | Y2K대책 철저 점검          | 1998. 9.15 |
| 157(09-70-12) |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경감노력     | 1998.10.12 |
| 158(03-70-13) |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강구    | 1998.10.12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8.12.31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77(08-70-28) | 불법도청의 근절             | 1999. 9.21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82(08-70-29) | 2000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8-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28(08-70-33) | 해빙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        | 2000. 2.29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52(07-70-36) | 전자정부 조기구현               | 2000. 4.26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67(09-70-40) | 정부기능 조정추진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감사 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2000.10.23 |
| 410(80-70-50) | 설 종합대책 마련               | 2001. 1.31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15(03-70-52) |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관리           | 2001. 4.16 |
| 516(03-70-53)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지원      | 2001. 4.16 |
| 520(08-70-56) | 여성인적자원 개발               | 2001. 4.18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531(07-70-59) |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1. 8. 7 |
| 541(08-70-60) |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2001.11.27 |
| 543(09-70-61) | 연말공직기강 확립 등             | 2001.11.27 |
| 608(08-70-65) | 태풍 및 호우피해 조속 복구         | 2002. 9. 3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5 |

## 1) 行事 簡素化方案 마련 : 12(09-36-01)

- 과거 권위주의 정권때와 같이 학생이나 공무원을 동원하는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 참석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내실있게 거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바람('98. 3.26, 국무회의시)

- 자료수집 ('98. 3~4)
- 각종 행사 내실화 개선방안 시안 작성 ('98. 5)
- 관계기관과의 협의 ('98. 5)
- 각종행사 내실화 방안 보고 ('98. 5)
- 각종행사 내실화 방안 지침 통보 (국무총리지시 1998-13, '98. 5)
  - 각종행사의 학생 참여방법의 개선
    - 형식적· 전시성 행사의 학생동원 금지
    -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는 희망자 위주로 선발
    - 평일 학생동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원 최소화 및 수업 보강
    - 참가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각종의 인센티브 제공
  - 행사내용 변경
    -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현장 종사자 격려, 전시회 등 개방성 행사로 전환
    - 행사시간을 주말 또는 야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의식위주의 진행절차를 영상화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 대상기관
    - 중앙·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 2) 公務員 不正非理 嚴斷措置 : 52(08-36-02)

- 강남구청과 경찰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이들 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부정비리 근절의 계기로 삼을 것  
(’98. 5. 6, 국무회의시)

- 위생업소 부조리 척결을 위한 일제교체감사 실시
  - 기 간 : ’98. 5.11~5.17 (1주일)
  - 대 상 : 15개 시·도
  - 감 사 반 : 15개반 68명
  - 중점감사사항
    - 인·허가 업무 및 행정처분의 적정성
    - 지도단속업무의 적정성
  - 추진실적
    - 총 823건 지적(인허가 80, 행정처분 375, 지도단속 등 368)
    - 신분상 조치 : 250명(징계 29, 인사자료 21, 훈계주의 200)
  - 조치사항
    - 문책·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
    - 제도개선사항은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후 조치



### 3) 政府部門의 情報化責任官制度 導入 : 61(08-36-03)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을 도모하며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부문에 “정보화책임관제도”를 도입할 것  
(’98. 5.21, 제1차 정보화전략 회의시)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CIO제도 도입문제 포함(’98. 2)
-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시 CIO제도 도입방안 보고(’98. 5)
-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대통령훈령 제73호) 제정(’98. 9)
-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보좌관 배치(’98.10)
  - 정보화책임관 지정(53개 중앙행정기관, 전 시도·시군구)
  - 정보화담당보좌관 배치(각 부처 정보화담당관 또는 정보화 부서 과장으로 지정 완료)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운영세칙 제정(정보통신부)(’98. 9)
-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운영(’98.12~)
  - 협의회 개최(7회) \*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운영

#### 4) 中央權限의 地方移讓 등 地方自治時代 定着 : 78(08-36-04)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로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고, 중앙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일을 새롭게 찾아서 해야 할 것임 ('98. 6.27, 국정과제점검회의시)
- 현재 입법예고중인 「중앙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는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98. 7. 8, 국정과제점검회의시)
-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그동안 과중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여 온 바,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98. 8. 4, 국무회의시)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99. 1.29)
-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99. 7.29)
- 대통령 소속하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99. 8.30)
-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구성('99.10.13)
- 위원회 전담지원기구인 지방이양팀 구성('99.10.20)
- 행정계층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99.11)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dpla.go.kr) 개설('00. 2)
- 지방이양행정·재정지원단 규정제정('00. 8. 1) 및 지원단 구성('00.11.30)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 : 145회 / 8천여명
- 워크숍 개최(3회) 및 지방이양자료집 발간(150회 35천여부)
- 법령상 국가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로 국가·지방사무실태분석('02. 1)
- 전자치단체(248개)·교육청(16개)에 「사무발굴기획단」 설치운영

-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적극적발굴 · 중앙권한의 지속적지방이양
  - 총 3,622개 대상사무 발굴, 799개사무 이양확정, 227개사무 이양완료

## 5) 公職社會의 變化와 體質改革 推進 : 120(08-36-05)

-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풍토를 확립하고, 당이 추진하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기강확립 등 종합적인 의미를 갖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경영 마인드가 도입되도록 개혁할 것('98. 7. 8,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공직기강과 신상필벌의 풍토 확립
  - 하절기, 추석연휴, 연말연시, 설날연휴 복무기강확립지침 수립 · 통보 ('98~99. 2)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중 중하위직 비리색출과 병행한 지방자치단체기강 점검('98)
  - 설날대비 공직기강 점검('99. 2)
  - 지방자치단체 부패취약업무 점검('99. 3)
  - 중앙징계위원회의 엄정운영으로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운영 및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
- 「부패방지법」을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당 정책위원회에 통보 및 설명('98. 8)
-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 시행
  -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수립(대통령훈령 제70호, '98. 6)
  - 행정자치부(소방), 정보통신부(우편) 등 9개 시범기관 헌장 제정 공표

(’98. 9~10)

- 시범운영기관 운영실태 분석(’98.12)
-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99. 3)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계획 수립(’98. 6)
  -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사모델 개발·보급(’98. 8)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발표(국무조정실, ’98.12)
-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 주민반응측정시행지침 수립(’98. 7)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반응측정(’98.11)
  - 주민반응측정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98.12)

## 6) 政府構造調整 推進 : 121(08-36-06)

- 정부조직 보완·개편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설치 등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통일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원 개편문제 재검토  
(’98. 7. 8, 행정자치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설치

<추진경위>

- ’99. 3.23 :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설치방안 국무회의 보고
- ’99. 4. 1 :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회제출
- ’99. 5.24 :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시행, 직제제정

<추진내용>

- 21세기 신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부처간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함(3실2국3단4관24과7팀, 248명)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기능을 이관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함(1관 4과, 65명)

○ 통일교육원 개편

<추진경위>

- '98. 8. 4 :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98. 8.31 : 통일교육원 개편안 확정 및 부처통보
- '98.12.31 : 통일교육원 개편완료(통일부직제 개정)

<추진내용>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 통일교육원은 남북대치상황 등을 감안하여 존치하되 단계별 운영개선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특수성을 유지하도록 함
- 1단계로 통일교육원의 하부조직을 대폭 축소(△1부△1과, △29명)하고, 추후 2단계로 통일교육원을 책임운영기관 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함

## 7) 地方自治團體의 能力向上支援 強化 : 133 (08-36-07)

-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에 대하여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권한을 주지 않고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래서는 안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없으면 우수한 인재들도 확보되기 어려울 것임
-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기획 및 업무 능력이 조속히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도 추진할 것  
(‘98. 8. 4, 국무회의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개방형전문직위제 도입(‘98. 2.20)
- 전문직공무원제도를 계약직공무원 제도로 개선(‘98. 9.19)
- 개방형직위제 도입근거 마련(‘00.12.29)
-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01. 6.30)
-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제 운영·지침 시달(‘01. 7.12)
  - 직위지정(‘02.10) : 27개직위(서울12, 광주1, 울산1, 경기5, 충북1, 충남1, 전남4, 경남2)
- 『지방고등고시제도』 개선대책 수립·시행(‘02.11.22)
- 지방공무원관련법령 개정(‘02.12)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

## 8) 地方行政監査 重複 改善 : 139(08-36-08)

- 지방의 경우 행정감사가 너무 많아 자체의 수감부담이 큰 실정임으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98. 9. 1, 국무회의시)

- 행정감사규정 개정 : 완료('98. 9.12)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규정 강화
    - 연간 합동감사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각 중앙부처별 감사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감사계획 확정, 합동감사반 편성 운영
- 합동감사운영지침 수립 : 완료('99. 1)
  -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합동감사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 각 부처의 장에게 통보
- 감사원과의 협의 강화
  - 연간 정부합동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원과 협의 감사대상기관 선정
  -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서 기 감사한 분야(사업·시책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주기적으로 정부합동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
  - 시·도에 대한 부처별 감사는 산발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하여 실시토록 조치

## 9) 大型事故 豫防努力 強化 : 151(08-36-09)

- 각부 장관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부천 가스사고는 소방관들의 노력 등으로 대형사고는 방지되었으나 도처에 사고위험요인이 있음('98. 9.15, 국무회의시)
-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정예화 추진
    - 재난관리자 과정 등 7개과정 1,910명 안전교육 실시
  -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98. 1.18~1.25)

- 47개소, 234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창고극장, 소연극관 등 안전점검 6회('98. 1.7~6.20)
  - 1,852개소 점검, 6,850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해빙기 안전점검('98. 2.10~3.30)
  - 38,673개소 점검, 5,298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재난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98. 2.1~3.31)
  - 60,255개소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D·E급) 11,900개소 지정·관리 등
- 유·도선 안전점검 등 3회('98. 4.25~8.25)
  - 683건 지적, 조치완료
- 재난발생 위험공장 안전점검('98. 4.6~5.30)
  - 811개소 점검, 965건 지적, 조치완료
- 유기시설 안전점검('98. 4.25~5.20)
  - 141개업체, 1,444종 점검, 459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중단된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강구
  - 총 682개소(토목 58개소, 건축 624개소)
- 여름철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98. 6.30~10.24)
  - 3,142개소 점검, 1,161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추석절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98. 9.14~9.26)
  - 재난위험시설·시장·상가·가스시설 등 중점점검



## 10) 二重過歲 問題의 積極的 解決 : 166(08-36-10)

- 해마다 신·구정을 모두 쇠는 것은 문제임. 국민들의 구정선호를 고려하여 신정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음
-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정연휴를 하루로 축소하고, 1월2일 시무식 개최방안을 검토·보고해주기 바람('98. 12. 1, 국무회의시)

- 신정연휴 축소를 위한 공휴일제도 개선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98.12. 5)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개정('98.12.18)
    - '99년부터 1월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관공서 시무식 일자 조정(1. 3 → 1. 2)
  - '99년도 정부시무식 개최 : '99. 1. 2, 09:30

## 11) 效果的인 公務員褒賞 實施 : 173(08-36-11)

- 공직사회의 사기양양과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공무원포상 실시
- 공직자가 잘한일에 대해서는 공적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공직사회를 계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뚜렷한 업적에 대해 정당한 포상을 실시('98.12.21, 국무회의시)

- 공직사회 활성화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 확정('99. 1)
  - 계기별 포상 확대, 기관별 포상활성화 등을 통한 포상기회 및 수혜 범위 확대
  - 공직사회의 인센티브제도로 정부포상 활용계기 마련

- 우수·모범공무원 인사상·경제적·복리후생상 우대시책 강화
- 정부포상업무지침 반영 시달('99. 2)
  - 대상자 공적심사 강화
  - 관례적인 포상 규모는 축소하되 민간인 위주로 운영
  - 감사수범사례 등 우수공무원 수시 발굴·포상
- '99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업무지침 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9-7호)
  - 감사 시 마다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수시 포상('99. 3)

## 12) 意味있는 國慶日行事 企劃：185(08-36-12)

- 국경일 등 온 국민이 경축하는 행사를 관례적인 기념식 위주로 치루지 말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의미를 새길수 있도록 행사를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99. 2. 9, 국무회의시)
- 외국의 국경일 행사 관련자료 수집·검토 ('99. 3~4)
    - 미. 영. 일. 프랑스. 대만 등 5개국
  - 제80주년 3.1절 기념행사 거행 ('99. 3)
    - 세종문화회관 앞 거리공연, 3.1절 관련 장소에서의 만세운동 재현
    - 3.1운동 기념탑 제막식 등 다양한 행사로 국민과 함께 하는 의미있는 기념일 행사 거행
  - 관계기관 실무관계관 회의개최 ('99. 5. 7)
    - 참석：문화부, 국가보훈처, 서울시 등 4개기관 과장급
    - 회의내용
      - 금년도 광복절·개천절행사의 다양화 및 역할분담 협조
      - 향후 국경일 행사 내용의 다양화 등 개선방안 토의

- 회의결과
  - 금년도 관계기관별 기존 문화예술행사 중 일부를 국경일 전후로 조정 실시
  - 국경일 행사내용의 다양화를 위해 매년 문화예술행사 계획수립시 국경일 관련행사 반영 협조
- 제5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99. 8)
  -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등 17개 행사
  - 금군훈련 재현 등 13개 거리공연축제
  - 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46, 지역체육행사 167 등
  - 경축식 외 관련행사 : 국악공연, 단군배달큰잔치문화행사, 학술대회 등 3개 행사
  - 광역시·도 행사 : 10월중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참성단 축제 등 100여개 행사

※ 행사다양화 협조요청 공문시행('99. 8.25 관련부처 및 시·도)
- 제4331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거행('99. 8~10)
  - 경축식 외 관련행사
    - 국악공연, 단군배달큰잔치문화행사, 학술대회 등 3개 행사
  - 광역시·도 행사
    - 10월중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참성단 축제 등 100여개 행사

※ 행사다양화 협조요청 공문시행('99. 8.25 관련부처 및 시·도)

### 13) 警察 改革案 마련 : 204(08-36-13)

- 경찰개혁위원회는 늦어도 5월말까지 자치경찰제도 등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함('99. 3.23, 국무회의시)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 '99. 1.18 경찰개혁위원회 시안 마련
  - '99. 4. 5, 6.23 자치경찰제 추진방안관련 당정협의
  - '99. 7. 9 행자부와 대전·광주지방청 신설관련 소요정원 협의
  - 자치경찰제는 시행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지속 추진
- 경찰개혁방안 마련
  - 경영진단에 따른 경찰 구조조정 실시('99. 5)
  - 교통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99. 5)
  - 파출소 운영제도 개선관련 전국 20개 경찰서 시범운영('99. 6)
  - 청문감사관 신설('99. 6)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허용 및 「참고인 우편진술제」, 「고소·고발 즉일조사제」 등 실시('99. 6)
  - 법학과 출신 300명을 수사요원(경장)으로 특채 추진(매년)
  - 국민만족도 조사실시(매년 7~8월), 조사결과를 치안시책에 적극 반영
- 경찰개혁방안의 발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경찰조직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14) 地方自治 發展을 위한 制度補完 : 211(08-36-14)

-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경우, 부단체장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99. 3.25,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시)
-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개정안 공포·시행('99. 8.31)
- 개정주요내용
  - 권한대행제도
    -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 ※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
  - 직무대리제도
    -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5) 定住外國人의 地方選舉權 附與 檢討 : 213(08-36-18)

- 일본 등에 대하여 우리 교포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 정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99. 3.25,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3회) 및 법률안 초안 작성
  - 일 시 : '99. 5.12, '99. 6.25, '99. 8.26
  - 대 상 :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회의 주요내용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보다는 특례법으로 제정키로 함
- 법안의 명칭은 가칭 「장기거주외국인에대한지방선거권등의부여에관한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정치관련 입법이므로 의원입법으로 추진

- 법률안 주요내용

- 일정요건을 갖춘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의 설정
- 외국인의 거주기간 등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 규정
- 선거운동,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투표참관 등에 대한 특례조항 마련

○ 의원입법으로 추진

- 법률안 초안 당에 제출('99.11.26)
- 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
  - 정부에서 작성된 법률 초안을 기초로 당에서 법률안 작성
  - 당 법사위원회 통과('00.11.17)
  - 당에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제출('00.11.25)

## 16) 京畿道 支廳 設置 檢討 : 242(08-36-17)

-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현지성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경기도 지청을 설치하고 전담부지사를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99. 4.24, 경기도 방문시)

- 지방자치법 개정('00. 1.12)
  - 인구 800만이상 광역시·도에 부시장·부지사를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그중 1인은 특정지역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00. 2.14)
-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산하의 기구·인력 승인조치('00. 1.28)
  - 1실 5국 21과·담당관, 410명 정원책정(북부출장소 207명, 제1부지사 이체 118명, 순증 85명)
- 경기도 제2청 개청('00. 2.25)

## 17) 國民和合을 위한 積極的 努力：246(08-36-18)

- 국민화합은 마치 영·호남간의 교류시책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민화합은 범국민적·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함
- 각 부처가 국민화합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이를 행자부가 통합 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99. 5. 4, 국무회의시)

- 지역차별 및 특혜 불용 의지 천명('98. 2, 대통령 취임사)
-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 지침 시달('98. 7)
- 국무회의('99. 5) 및 차관회의('99.10) 추진상황 보고
- 영·호남 8개 광역단체 출연 「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 지원('00. 2)
- 국민화합을 위한 자치단체 세미나 개최('99.11, '01. 2)

◀ 그간 추진실적('02. 1 현재) ▶

- 자치단체간 교류 3,400건      ○ 지역공동개발사업 160건
- 청소년·문화단체 교류 1,700건      ○ 경제·사회계 교류 2,300건 등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지방선거 이후 주민화합 시책 추진 지시('02. 6)
- 전환기 국민화합 시책추진 철저 강조 지시('02.10)
- ※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민화합 추진지침 시달 예정('03. 1월중)

## 18) 公職紀綱 確立對策：250(08-36-19)

- 일부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은 다시한번 공직기강과 가족의 몸가짐에 대해 반성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고가 되어야 하므로 행자부장관은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해 주기 바람('99. 6. 2, 국무회의시)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시행('99. 6.14)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골프접대 금지
  -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경조금품 접수 제한
  - 5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 등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보완지침 시달('99. 7. 7)
-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시달(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 '99. 8.23)
- 중앙부처 차관, 1급공무원 특별교육 실시('99. 6.11)



- 주요일간신문에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광고 게재('99. 6.19~6.25)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관련, 국무총리 서한 발송 및 휴대용 리플렛 배포('99. 6.28)

## 19) 漢字併記 實施 : 266(08-36-20)

- 국무회의 안건을 보면, 제안설명에는 한자가 너무 많고 법안조문에는 전혀 한자가 없음
  - 한자병기원칙을 잘 지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한자에 익숙한 사람 모두 다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급적 한자를 적게 쓰되 이해가 쉽도록 표기해 주기 바람('99. 8.10, 국무회의시)
- 사무관리규정 개정·공포('99. 8. 7) : 공문서작성원칙에 한자병기조항삽입
    - 규정 제10조제1항 :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도록 함.
  - 국무회의 의안작성방법 변경내용 관계기관 통보
    - 관련 문서번호 : 행정자치부 의정12611-305호('99. 8.20)
  - 규정개정내용 교육시 한자병기 교육('99. 8.25~8.31)
    - 8회에 걸쳐 약 2,250개 기관 교육실시

## 20) 化學武器 使用에 對備한 防毒面確保 : 271(08-36-21)

-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고 적에 의한 화학무기 사용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방독면 보유율이 3%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임
- 방독면을 소지하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므로 방독면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99. 8.19 을지연습 종합보고서)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98~'07) 추진
  - 보급계획 : 1,991만개(정부지원 506, 자율구입 1,485)
  - 총 보급량 : 478만개(24%)
  - '98~'02보급량 : 216만개(11%)
    - 정부지원 : 191만개, 자율확보 : 25만개
- 「다용도방독면」 개발·보급
  - 보급개시 년도 : '00.12
  - '02년까지 보급수량 : 75만개
- 「방독면보급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일자('02. 5.30), 1차 회의('02. 7. 5)
  - 위원구성 : 11명(민간 9, 우리부 2)
  - 국민보급 정책자문 및 방독면 품질향상연구
- 향후 추진계획
  - 방독면보급 10개년계획 지속 추진

| 구 분     | 보 급<br>계획량 | 기보급<br>( '98~'02) | 금후 보급('03~'07) |     |     |     |     |     |
|---------|------------|-------------------|----------------|-----|-----|-----|-----|-----|
|         |            |                   | 계              | '03 | '04 | '05 | '06 | '07 |
| 계       | 1,991만개    | 216만개             | 331만개          | 56  | 56  | 56  | 57  | 106 |
| 정 부 지 원 | 506        | 191               | 315            | 53  | 53  | 53  | 53  | 103 |
| 자 율 확 보 | 28         | 12                | 16             | 3   | 3   | 3   | 4   | 3   |
| 국민개인확보  | 1,457      | 13                |                |     |     |     |     |     |

- 「다용도방독면」 자율보급 권장

## 21) 有事時 待避訓練 등에 대한 教育 및 弘報徹底 : 272(08-36-22)

- 현재 우리 국력은 북한보다 우세하고, 군사력 또한 수도권 이북에서 적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함
- 오늘날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으므로 피난 갈 수 없으며, 안전한 지대로 대피하는 훈련이 중요함
- 국민들이 정부의 지도와 방침에 따르기만 하면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대책을 추진하기 바람('99. 8.19, '99 을지연습 종합보고서)

-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및 교육 홍보강화
  - 훈련일시 : 매월 15일 14:00~14:20 (공습 15분 ⇒ 경계 5분 ⇒ 해제)
  - 훈련내용 :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직장방호, 전시국민행동요령교육·홍보, 화재·화생방방호 등 사태수습훈련 실시
  - TV·라디오를 통한 훈련안내·실황·평가방송 실시
    - 안내방송(3~5분) : TV(KBS, MBC, SBS, YTN, K-TV)  
라디오(KBS, MBC, SBS, CBS, TBS)
    - 실황방송(20분) : 전 라디오 방송
    - 평가방송(4~5분) : 라디오(KBS, MBC, SBS, CBS, TBS)
    - 주요내용 : 주민·차량대피요령, 화생방방호 및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 신문, 유선방송, 생활소식지, 현수막, 가로기 등을 통한 훈련홍보 및 분위기 조성
  - 학교, 직장단체별 자체대피와 대피중 안보관련 및 화생방방호요령 교육 실시
- 전시국민행동요령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02. 7, 수정 보완)

- 『재난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300부 발간배부('02. 4, 수정 배부)
- 『생활속의 위험탈출』 900부 발간배부('02. 8)
-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실시(2월~12월)
  - 풍수해대처요령,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대처요령 등 실기 교육 중점 실시
  - 연간 140만명 교육실시

## 22) 地震 對備策 樹立 : 285(08-36-23)

- 최근 터키·대만·멕시코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함
  - 우선 모든 건물이 내진설계기준이 적합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하며, 특히 송·변전소, 통신시설 등이 내진 설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임
- 행자부, 건교부, 지자체는 법령 정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 강화대책을 포함하여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96.11) 및 보완 (3회: '98. 5, '99. 9, '00. 3)
  - \* 지진방재종합대책은 관계부처에서 관련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 타이완지진을 계기로 현행 대책 보완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99.10. 4)
- 지진대비 경제부처 실무조정회의 (관계부처 1급) 개최 ('99.10.25)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협의조정 ('99.10.29)
- 각 부처 지진방재계획 수정안 최종보완(과장급 회의) ('99.12. 8)

- 정부지진방재종합계획 보완계획 차관회의 ('99.12.23)
- 지진방재종합대책 보완 ('00. 3. 2)
- 지진방재종합대책 실무회의 개최('99.12.13, '01. 2. 6)
- 지진방재 전담조직 설치관련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01. 4.12)
- 지진방재 조기대응시스템 구축회의 ('01. 6.19)
-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01.11.23)
- 내진설계기준 정비·강화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조사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확대 (기존 20개→6개 시설 추가)
    - 소관부처별 법령개정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추진(입법예고 완료)
  - 내진실태조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00. 3.17)
  - 『내진실태조사표 및 작성요령』 작성·통보 ('00. 6.10)
    - 조사표(건축물, 교량)를 관계부처 및 시도에 배포
-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
  - '00~'05까지 기상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진 (92개소 240대)
- 지진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진방재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훈련실시
    - 지진방재담당공무원 실무교육 : 3회 1,254명 ('99.12.13, '01.12.14, '02.12.13)
    - 내진실태조사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1회 1회 798명 ('00.11.21)
    - 지진대비 도상훈련실시 (방재전산훈련 연계) : 2회 ('00. 5.19, '01. 5. 9)
    - 지진대비 실제훈련실시(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 2회 ('00. 4.21, '00. 9.20)
  -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발간·배포
    - 중앙, 자치단체, 방송, 신문사, 대학교 등 3,158개기관 3,300부 배포 ('00.12. 2)
    -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및 중학교 3,726개 학교 4,000부 배포 ('01. 3.15)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추가지정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및 압력용기 등 6개시설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지진방재종합대책(안) 수정·확정('03. 1)
  -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내진성능 보강 추진('00~'05)
  -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및 보강 추진('00~'05)
  - 지진방재교육·훈련 및 대국민홍보강화 지속 추진

## 23) 畫像會議 시스템 構築 : 299(07-36-24)

- 전자(電子)정부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총리실에서 추진중인 화상회의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 장관들은 E-메일로 국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함('00.1. 25, 국무회의시)
- 준비기획단 구성·운영('00. 2~8)
    - 국무조정실장(행정자치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 운영
  - 시스템 설계 기본 요구서 확정('00. 2.19)
  - 제안요구서 작성 및 소요예산(8,187백만원) 확보('00. 3.1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00. 3.24)
    - 계약체결('00. 4.10), 계약액 : 7,746백만원
  -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00. 4~6)
    - 시스템 구축완료('00. 6.11)
    - 시스템 검수 및 시험운영(6.12~6.30)
  - 영상회의시스템 개통('00. 7. 1)

-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시연회 개최('00. 7. 3)
-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제정(총리훈령 405호, '00. 8.30)
- 대전청사 영상회의실 보강공사('00.12)
- 영상회의실 암호장비 설치('00.12. 9)
- 활용실적
  - '00년 : 국무총리주재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15회 443명
  - '01년 :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등 59회 1,633명
  - '02년 : 대통령주재 임시국무회의 등 122회 3,141명
- 추진성과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원격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운영, 정부회의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 집합회의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절약,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24) 電子民主主義 時代 先導(인터넷) : 300(07-36-25)

- 전 공무원이 인터넷과 E-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야 함
  - 장관들은 E-메일로 국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들을 뿐 아니라 정부정책도 알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함('00. 1.25, 국무회의시)
- 전 사무직 공무원 E-메일 ID 보급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E-메일 보급실태 및 보급계획 조사('00. 2~3)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메일 보급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보급대상 : 사무직공무원 373천명)

- 행정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E-메일보급 추진('00. 3~12)
- 사무직공무원 E-메일 보급완료('00.12)
- 공무원 인터넷과 E-메일 활용
  - “2000년 공무원정보화 교육강화 계획” 수립·시달('00. 4)
    - 인터넷 등 기초 활용능력 확보를 교육과정에 반영
  - E-메일을 통한 “자치단체장의 정보화추진 당부” 지시('00. 3)
  - 공무원의 인터넷 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00.11)

## 25) 大型事故의 事前豫防 : 324(08-36-26)

- 여의도 공동구 화재는 평소에 철저히 점검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음.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00. 2.22 국무회의시)
- 동절기 화재대비 철저한 화재예방대책을 세워야 함('00.10. 4, 국무회의시)

-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규정 신설('01. 1.26)
    - 3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200만원이하 과태료
  - 150㎡이상의 지하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01. 3.20)
  - 연면적 600㎡이상 청소년·노약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01. 3.20)
  - 지하구 방화벽·통합감시시설 설치 의무화('01. 3.20)
  -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재 사용 의무화('02. 3.30)
  - 지상층 다중이용업소까지 비상구 설치 의무화('02. 4.12)
  - 찜질방 등 신종다중이용업 7종을 규제, 소방시설 설치 강화('02.10.16)



- 지하공동구 일제 소방안전점검 실시('00. 3. 2~4. 8)
  - 지하공동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시달('00. 5. 1)
-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대책 수립 시달 ('00. 2.19)
  - 소방안전점검표 비치 및 소방검사실명제 실시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및 지침시달('00.12.13 / '00.12.26)
- 주택화재 안전대책 추진('00. 1~'02.12)
  - 무료안전점검·화재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00.11. 1~'01. 2.28, '01.11. 1~'02. 2.28)
  - 대형화재 및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안전관리 강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0. 3. 1~4.30, '01. 3. 1~4.30)
  -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강화 및 합동 소방검사 실시
  - 화재 초동진압태세 확립 :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 실시

## 26) 中小企業 및 小商工人 積極支援 : 333(03-36-27)

-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이나 판로 문제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00. 3.22, 재정경제부 등 5개기관 업무보고시)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3,519개 업체에 4조 2,626억원을 지원하였고,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을 50,076개 업체에 1조 5,0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해 100개국에 502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지역중소건설업체들

의 하도급 대금(1,233건 1조 2,579억원)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직불토록 하였음

-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취득세·등록세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공유지 장기임대 5년 → 20년 허용을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하였고, 지역업체가 공사에 입찰할 경우에는 가점부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중점
  - 지방상권(재래시장, 소매점포)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인하(8%→5%)와 지역건설업의 경영애로사항 해소(지역제한 입찰금액 축소시기 2년연장 등)에 기여
- 또한 지난 2000년 중소기업육성시책 우수기관 13개기관에 표창 및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

## 27) 退職公務員 對策 마련 : 334(08-36-28)

-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취업훈련 등을 통해 퇴임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00. 3.22,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취업관련교육과정 개발·운영(’00~’02)
  - 창업, 영농, 자격증 취득 안내과정 등 4개분야 6개과정
  - ’00/6회 228명, ’01/17회 1,670명, ’02/17회 2,099명
  - ※ 취업관련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농교육이수자중 희망자(87명)에게 농지, 과수 등 현장실습장 지원을 통한 현장실습기회 제공(’02. 5~12)

-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구축·운영을 통한 재취업 지원(연중)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공무원 인력은행을 구축,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WORK-NET)과 연계 운영
  - 구직등록자 925명, 재취업 알선 343명중 155명 재취업 지원
    - 경비, 단순노무, 주차관리, 사무보조, 등
  - 구직등록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안내교육(2박3일) 실시
    - '01/1회 85명, '02/ 2회 219명
- 행정기관내 퇴직공무원 활용가능분야 101종 발굴 지원(연중)
  - 교육·행정, 기술·기능, 환경관련, 각종 위원회 분야 등
  - 민원상담원 등 5,902명 활용 중

## 28) ASEM 行事 對備 徹底 : 335(08-36-29)

- ASEM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수 있도록 특별히 경비문제와 시민예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준비해 주기 바람
- ASEM 준비를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00. 3.22,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ASEM지원 합동협의회』 운영('00. 4)
  -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월드컵문민협 등 5개기관 참여
- 행정자치부 『ASEM 실무대책반』 구성, 운영('00. 4)
  - 5대분야(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 소방안전대책, 교통·거리질서 확립대책, 선진문화시민운동 전개, 도시미관 가꾸기) 선정, 지원
- 서울시와 공동으로 『ASEM 안전관리전담팀』 구성, 운영
  - ASEM 행사장 및 인근지역의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난발생

- 시 신속한 수습, 복구 체계 구축
- 14명(행자부 5, 서울시 및 강남구 5, 시설안전기술공단 2, 전기·가스 안전공사 각 1명)
- 민간단체 보조사업중 ASEM 대비사업 반영
  - 총 19개단체, 18개사업에 847백만원 보조

## 29) 各種 事故防止對策 強化 : 364(08-36-30)

- 교통사고율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씻도록 해야 함. 과속·음주운전 등은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해야 함.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인명존중정신을 함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00. 5. 3, 건설교통부등 업무보고시)
- 교통사고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경력 및 장비를 충동원,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창달
  - 주기적인 음주운전 단속 실시, 무인단속장비 추가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입 등 과학장비에 의한 단속 확대
  - 「질서윌드컵의 날」, 「안전띠착용 생활화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성화 및 NGO 참여확대 추진
    - ’02년 말 현재 안전띠착용율 95% 이상 유지

### 30) 安全事故의 再發防止 : 378(08-36-31)

- 학생들이 수학여행 도중 대형사고를 당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며,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이 안되도록 해야할 것임 ('00. 7.18, 국무회의시)

- 교통경찰 이외 파출소 112순찰차 등 가용경력 최대 활용, 주요 국도 사 고 잦은 지역 순찰활동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수학여행단 교통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 '01년 9,389개교 87,844대, '02년 8,204개교 62,855대 차량호송 실시
- 건교부·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 사고잦은 지점 개선 및 시설보강, 수학여행시 운전자·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31) 地方公企業 構造調整 改革推進 : 401(03-36-32)

-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개혁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임 ('00. 9.28, 충청남도 순시시)

-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마무리
  - 부실지방공기업 정리 14개법인 : 통·폐합(3), 청산(5), 민간위탁(3), 기타(3)
  - 지방공기업 인력감축완료 6,435명(정원 35,392명의 18%)
  - 경영혁신 제도개선 도입(8종)
    - 연봉제, 성과급제, 명예·조기퇴직제, 정년퇴직, 퇴직금지급율조정 등
- 신설공기업 운영실태 점검, 경영혁신 추진
  - '99. 4월이후 신설공기업 32개 점검, 인력 21명 감축, 10개법인 상임이 사 제도폐지

-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경영혁신제도 도입완료
- 경영혁신 이행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인건비 집행지침 시달('02. 9)
  - 지급시기 : '02년 10월, 지급율 : 총인건비의 2%
- 책임경영 체제구축
  - 직영기업 경영평가확대 : 132 → 162개 공기업
  - 경영진단실시 : 17개 공기업진단, 인력 365명 감축조치, 임원해임 2명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강화 통보('01. 5)
  - 공개채용 확대, 설립타당성 검토강화,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 부실공기업 정리 및 인력감축으로 비용절감효과 2,118억원,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33 → 39백만원), 매출규모 증가 14.2% 향상
- 신설공기업(32개법인) 운영실태 점검, 인력 21명 감축, 연간 5억5천만원 인건비절감
- 관주도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항시 자율경영혁신 추진체제로 전환

### 32) 效果的인 暴雪被害 報償方案 講究 : 459(08-36-33)

- 이번 폭설로 재산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됨. 피해보상지원에 있어 법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혜택이 달라야 함
  - 이번까지는 무허가·비규격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소홀히 한채 눈속임으로 용자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거나 법령을 무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차별 대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01. 2.20, 국무회의시)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생업재기를 위해 민·관·군이 합심하여 응급복구 등 조기복구

○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비를 지원

<1. 7~1. 9 폭풍설 피해>

- 피해내용 :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659,020백만원
- 복구소요액 : 815,647백만원(국비152,878 지방비49,384 용자 등 613,385)

<2.15 폭풍설 피해>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재산피해 137,416백만원
- 복구소요액 : 153,890백만원(국비36,887 지방비13,517 용자 등 103,486)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완료하여 보조율 상향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 조치(2차례 개정)

- 1차개정('01. 2. 3)

- 농림시설 지원규모 확대 : 1ha미만 → 2ha미만
- 농림시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 현행 : 국고15%, 지방비5%, 용자60%, 자부담20%
  - \* 변경(상향조정) : 국고25%, 지방비10%, 용자55%, 자부담10%
- 농작물 지원단가의 세분화 및 상향조정
  - \* 농약대(ha당) : 시설채소 49,940원 → 139,000원
  - \* 대파대(ha당) : 일반작물 1,421천원 → 1,575천원,  
인삼 10,451천원 → 10,751천원
- 시설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 \* 김양식시설(책당) 131천원 → 149천원,  
자동화비닐하우스(ha당) 217,400천원 → 250,000천원
-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 \*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5%)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연리5%)

- 2차개정('01. 4.18)

- 축사시설 지원규모 확대
  - \* 국고지원 : 600㎡미만 → 1,800㎡미만, 융자지원 : 600㎡이상 → 1,800㎡이상
- 농림시설 지원규모 확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지원단가인상에 대한 홍보실시(반상회, 팜플렛)
-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 등도 금회에 한하여 규격 및 적법시설로 설치할 시 지원
- 사업성과
  - 신속한 복구비지원과 국고보조율·지원단가 인상, 피해시설 조기복구를 통한 피해농어민의 생업재기 기반을 구축하여 조기 생활안정 도모
  - 표준규격으로 복구토록 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 및 피해재발 방지

### 33) 一線의 不正腐敗 剔抉 : 488(08-36-36)

- 일선의 부정부패 척결
    - 행정업무를 가능한 한 인터넷으로 처리해 국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하더라도 부정부패방지방안 강구와 동시에 철저한 감찰활동 계속 실시
    - 공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는 도덕적 자각심을 향상시키는 공무원 자체교육 실시('01. 2.2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 1,986종의 민원대상, 36개 기관에 도입,
    - 구비서류 발급을 위한 관청방문 축소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분야 20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체제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400여종 확대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01년 운영실적
    - 총18회 113건 적발, 106명 신분상 조치(징계19, 훈계87), 42건 주의·시정조치
  - < 유형별(113건) > - 계약·회계질서 문란 27건, 재산관리소홀·예산낭비 34건, 불법행위 단속방치 25건, 복무기강해이 16건, 민원처리 지연·소홀 5건, 인사관리부적정 등 6건
  - 2002년 운영실적
    - 총34회 400건 적발, 349명 신분상 조치(징계111, 훈계238), 145건 주의·시정조치
  - < 유형별(400건) > - 계약·회계질서 문란 95건, 재산관리소홀·예산낭비 78건, 불법행위 단속방치 30건, 복무기강해이 143건, 민원처리 지연·소홀 23건, 인사관리부적정 등 31건
- 반부패 교육 및 홍보('02년)
  - 부패방지 우수시책 발굴·전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회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패방지관련 교육실시 : 46개 과정 6,851명
  - 공무원 부패방지 직장교육 : 11회 1,154명

### 34) 地方財政의 健全化方案 講究 : 488(08-36-3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사태를 막지 못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만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연계시켜 증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01. 2.2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추진을 위해 경상경비절약, 세입증대 등 자구노력의 결과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 '01.12.31)
  - 적용대상확대 : 기존 11개항목 →13개항목(지방세체납액축소, 지방세세원발굴 항목추가)
    -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 6개 항목
      - ※ 6개 항목 : 지방공무원정원 감축, 비정규직공무원 감축,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읍면동 통합 유도, 지방청사관리 적정화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 : 7개 항목
      - ※ 7개 항목 : 지방세징수율 제고,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과표 현실화, 탄력세율 적용, 수수료 현실화,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 세원발굴
- 교부세감액제 적용기준 마련(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 '01.12.31)
  -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비지출이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의 일부를 감액하는 기준 마련
    - 지방채미승인 예산편성·지출, 투·융자미심사 예산편성·지출, 예산편성기본지침 위반 예산편성·지출, 감사결과 위법한 경비의 과다지출·수입징수 태만 등

### 35) 自治團體間 協力事業 發掘 및 指導強化 : 489(08-36-37)

-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로 대립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을 찾도록 유도해 주기 바람
- 부산과 경남의 경마장 건설문제 대립 해결사례라든가, 낙동강 물관리 대책에 대한 해결과정, 서울 구로구와 광명시의 생활쓰레기·하수 교환처리 합의사례 등 좋은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원-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01. 2.2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광역행정제도 개선
  -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쟁조정기능 강화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의결(‘99. 8.31)
    - 분쟁조정위 직권상정제, 의결기능도입, 위원의 대통령 위촉 등 기능강화
    - 중앙·지방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99.12.31)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례 표준안 시달(‘00. 1)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00. 5.13), 재구성(‘02. 5.12)
- 광역행정제도 활성화
  - 광역행정 활성화 지침 수립·시달(‘00. 6)
  - 광역행정 추진실적 평가(종합평가와 연계) : ‘00, ‘01년 2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실태조사 : 172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분기 1회 이상) 및 분쟁조정 : 6건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 2건

◀ 주요 분쟁조정 사례 ▶

- 서울-경기 의정부, 경전철 역사건립비 부담 분쟁 조정('01. 1.31)
- 충남 아산-경기 평택시, 아산만방조제 및 담수호경계 분쟁 조정('01. 7. 6)
- 서울 강동구-경기 하남시, 자동차액화가스충전소 설치분쟁 조정('01.11. 9)

- 협력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강구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연구추진('02.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제도 발전방안 용역추진('02. 7. 1~11.30)
- 향후 추진계획
  - 광역행정 담당공무원 연찬 : '03. 3~4월중
    - 광역행정지침 시달, 광역행정체계 등 강의, 협력사업활성화 방안 토론 등
  - 분쟁조정회의 수시개최
  - 광역행정 추진실태 평가('02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와 연계 실시)

### 36) 地域經濟 活性化 전력 : 490(08-36-38)

- 올해를 지역경제 발전의 해로 설정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 해주기 바람
- SOC사업 재원을 지방에 우선 배분, 재래시장의 현대적 개발과 주택 개량 사업의 실시를 통한 지역건설업 진흥에 힘쓰기 바람.
-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창업기반 시설 확충, 세제금융지원, 민자 및 외자유치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01. 2.2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I

T·BT 등 벤처기업의 창업여건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산업인프라구축지원, 지역특산물 개발 및 물류유통 촉진 등 시책사업에 특별교부세 980억원을 지원, 9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방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3개년 계획사업 추진
  - 중산·서민층의 생활기반이자 지역경제활성화의 초석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상·하수도 등 지방재래시장 핵심기반시설의 확충 정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특화시장 육성을 '01년부터 3개년 계획사업으로('01~'02)까지 47개소에 4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평가
  -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13개 자치단체에 대해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표창수여
- 향후 추진계획
  - '02년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의 마무리 및 '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속추진
  - 지방재래시장 기반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 '03년도 사업의 마무리 추진

### 37) 災害에 대한 徹底한 對處 : 491(08-36-39)

- 재해는 발생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반복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람('01. 2.21, 업무보고시)

-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태세확립 및 계획수립
  - 시도 방재국장 회의시 재해취약시설 사전대비 철저지시('01. 2.13)
  - 재해사전대비 추진지침시달('01. 2.20)
  - 2001 여름철 재해대책 120일 작전 추진지침 시달회의('01. 6. 5)
-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
  - 지방자치단체별 재해취약지역 자체점검 실시 및 조치('01. 3~5)
  - 재해위험요인 정비 및 방재물자 확보·비축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완료(8,054개소)
    - 수방자재 6종 1,646만점, 응급복구장비 7종 20천대, 구호물자 7종 27만점, 방역물자 등
  - 여름철 재해대비 중앙합동점검 실시(8개부처 5개반 50명, '01. 5.28~6. 2)
    - 발굴된 미흡사항 302건 우기전 정비완료
  - 12개 부처청장 수해우려지역 현지시찰('01. 6.27~7. 9)
  - 수해예방 지역책임담당관 현지점검('01. 6.29~7. 1)
    - 행정자치부 지역책임담당관(국장급) 및 담당급 35명, 시도 및 시군구 방재시설 등 현지확인
  - 태풍 대비 취약요인 중앙부처 합동점검 실시('01. 8. 3 ~8.10)
    - 7개부처 27명, 12개시도 현지점검
- 여름철 재해대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재해예방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배포('01. 3)
    -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 (20분)」 제작, 관공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1,030개)
  - 여름철 풍수해 대비 홍보스티커 제작·배포('01. 5. 2)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차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부착 (총 48,000매)

- 재해예방포스터 제작·배포('01. 6)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배포·게첨 (4,000매)
- 여름철 재해대책 TV4사 홍보방송 제작·방영('01. 6.23~10.15)
  - 재해예방 홍보방송(1분×4개)을 제작하여 KBS, MBC, SBS, YTN에 총 304회 방영
-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재해예방 홍보동영상 제작·표출('01. 5. 7~10.15)
  - 전국 대도시 지역의 131개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동영상 표출
- 태풍대비 홍보비디오 제작·배포('01. 8.18)
  - 전국 대도시 지역의 131개 대형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동영상 표출
- 재해취약지역설정 및 경계강화를 위한 지역재해 예경보제 도입
  - 지역재해 예경보제 추진팀 구성('01. 4)
  - 재해발생우려지역 표준대응요령(SOP) 작성('01 4.30) 및 지역주민교육 실시
  - 232개 시군구별 재해예경보 대상지역도 작성('01. 5.24)
  - 자동우량경보시설확충 (31개 지역)
  - 자동음성통보시스템확충·보강 (218개 지역)
- 사업성과
  -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추진지침을 수립·시달하여 중앙과 지방이 합동으로 재해대비 총력태세를 견지하여 여름철 재해피해 최소화 도모
  - 방재장비 및 구호물자를 “최근 10년간 사용량중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확보”토록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대책을 마련
  - 국민의 방재의식 제고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TV, 대형전광판, 스티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재해예방 홍보활동 전개
  -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태세 구축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경보제”를 추진

### 38) 봄 가뭄 對策 徹底 : 571(08-36-40)

- 심각한 봄 가뭄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자치 단체의 가뭄대책도 잘 점검해 주기 바람에 21세기는 물문제가 식량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공장·가정 등에서 물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02. 3.1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서)

- 2002 봄 가뭄대책 수립
  - 가뭄대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행자부)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가뭄대책수립
  - 봄 가뭄대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등 대책 추진(관계부처 회의 3회 개최)
  - 봄 가뭄대비 논물 가두기 용수확보지시 (5회)
- 봄 가뭄대비 물절약 홍보 추진
  - TV방송, 라디오, 유선방송,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  
(TV방송 352회, 라디오 18회 등)
  - 반상회보 게재 및 홍보물 전단 배포  
(반상회보 1,285천매, 현수막 170매, 홍보책자 78권 등)
  - 물 절약 캠페인 및 각종 홍보교육  
(물 절약 캠페인 29회, 홍보교육 213회/22,274명)
  - 물 절약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홍보스티커 2종 7만매)
  - 전국 대형전광판 및 열차 물 절약 홍보자막 표출  
(전국 대형전광판 130개, 경부선 새마을호 열차내)
  -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물 다량사용업소 홍보 서한문 발송  
(숙박협회등 물다량사용업소 1,078명)



- 가뭄대비 물 절약 세미나 개최  
(‘02. 4.30/한국프레스센터, 학계·공무원 등 300명 참석)
- 특허청, 『물 절약 발명품 코너』 개설(5.14~16, 5개업체, 15천명 참관)

### 39) 地方自治制 實踐 : 572(08-36-41)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골격이나 그로 인한 폐단은 시정해 나가야 함
  - 일부의 지역이기주의,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행정,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해 주기 바람(‘02. 3.1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서)
- 지방선거와 대선 등을 앞두고 전환기 공직자 기강 확립에 기여
    - 총34회 400건 적발, 349명 신분상 조치(징계 111, 훈계 238), 145건 주의·시정조치
    - 직급별(349명) : 정무직 8, 1급 1, 3급 6, 4급 65, 5급 121, 6급이하 148
    - 유형별(400건)
 

|              |     |               |      |
|--------------|-----|---------------|------|
| · 계약·회계질서 문란 | 95건 | · 재산관리소홀·예산낭비 | 78건  |
| · 불법행위 단속방치  | 30건 | · 복무기강해이      | 143건 |
| · 민원처리 지연·소홀 | 23건 | · 인사관리부적정 등   | 31건  |
  - 우수·선행공무원 11명 발굴표창, 금강산여행 및 인사상 우대 부여토록 관할 자치단체에 지시
  - 사회지탄 요인이 되는 비리척결을 통해 국민불편해소 및 개혁 뒷받침

#### 40) 學校暴力에 徹底 對處 : 573(08-36-42)

-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행자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장관들은 잘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02. 3.11, 행자부 업무보고시)
- 홈페이지내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운영, 학교주변 업소의 신고요원 활용 등 신고체계 구축
- 1인1개교 「학교폭력담당경찰관제」(4,822개교에 5,109명 지정)를 운영하여 학교폭력 실태파악 및 교사·학생 상대 면담실시 등 적극적 예방활동 전개
- 학교폭력 단속활동 지속 추진
  - '02년 상반기 특별단속활동 실시(3. 4~4. 3)
- 사랑의 교실, 상담교실, 범죄예방교실 등 청소년교실 운영

#### 41) 選舉 公營制 實施 : 574(08-36-43)

- 최근 정치자금 문제 등 선거공영제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금권선거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선관위, 여·야 정당과 협의하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돈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주기 바람('02. 3.1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안) 마련(3월~5월)
- 개정안 주요내용
  - 미디어 선거운동방식 및 국가부담 확대

- 합동신문광고, TV합동연설회 등 신설
- 신문·방송광고 횟수 증대, 정당정책 신문광고 국가부담 신설 등
- 과다한 선거운동 관련 비용 대폭 축소
  - 정당·후보자 연설회 폐지, 유급선거사무원수 축소 등
- 공영제 확대에 따른 후보자 난립 억제
  - 선거권자 추천 요건 강화 및 기탁금 상향조정(5억→20억) 등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 통합관리, 단일계좌 사용, 정치자금 기부 수표 사용 의무화(1회 100만원 초과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금액공개 등
-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
  - 중앙당조직 축소, 지구당의 구·시·군당 전환, 선거보조금 폐지 등
- 대통령님께 확대방안 검토결과 보고('02. 5.28)
- 선관위에서 이를 토대로 시안마련('02. 8)
- 개정의견 확정 및 국회제출('02. 9. 7)

## 42) 行政機關 週5日勤務制 補完對策 마련 : 597(08-38-44)

-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에 참가하지 못한 검경, 소방관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 이틀간 휴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모범적 사례를 발굴,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02. 4.30, 국무회의시)
-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대상기관 확대 추진
    - 경찰, 우정, 세관 등 24시간 교대부서 근무인력 현황 파악('02. 5.20)
      - 교대근무인력 95,000명(2교대 28,000명, 3교대 67,000명)

- 미 실시 기관 대상 시험 실시 참여여부 의견 수렴('02. 6.24)
  - 참여희망 : 법무부, 대검찰청, 소방기관 내근부서 등
- 행정기관 주5일근무 시험 실시 대상기관 1차 확대 조치
  - '02. 7월중 시험 실시일부터 소방(내근부서), 법무부·대검찰청 본부 참여
- 행정기관 주5일근무 시험 실시 대상기관 2차 확대 조치
  - '03. 1월 부터는 24시간교대기관·토요일일근무기관·교육청을 제외한 미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 실시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 시달('02.12.30)
- 공무원 휴무토요일 여가활용 사례 수집·전파
  -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4~5월중 휴무토요일 여가활용사례 모집
  - 총 137건을 가족활동·자기계발·동호인모임·자원봉사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전 기관에 전파('02. 6.19)

#### 43) 災害對策에 萬全 : 602(08-36-45)

- 장마철을 맞은데다 올해는 태풍이 잦을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니 관계 부처에서는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02. 7. 9, 국무회의시)
- 장마철과 태풍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02. 7.16, 국무회의시)

- 장마·태풍대비 재해대책 추진
  - 매년 6.15~10.15까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설정 운영
  -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상청, 수자원공사, 한전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4시간 재해상황관리체제 유지

- 태풍 등 기상특보시 단계별로 4개기관 16명에서 21개기관 52명의 유관 기관 등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재해사전대비 조치
  - 하천, 저수지, 방조제 등 재해취약시설 6,774개소에 대한 점검·정비 및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 정비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위원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 재점검 실시 미비사항 보완 조치
  -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감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가로등·신호등 정비완료 조치
  -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적치물, 가로철거, 도로측구, 빗물받이 잔재물 제거 및 하수도 준설 등 피해예방 사전조치
  - 행락객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산간·계곡 등 유원지에는 경계구역을 정하고
  -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자동음성통보시설을 확충·보강하여 심야시간 대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 조치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44) 失業問題 細部對策 樹立・推進：10(03-70-01)

-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세부대책 수립추진  
(‘98. 3.26, 국무회의시)
  - IMF이후 실업자 140만명 중 10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으니 중소기업 적극지원하고, 7대 도시의 실업자가 78%이므로 집중 지원  
(‘99. 3.18, 국무회의시)

- 매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수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추진
- IMF 금융위기이후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 대책 일환으로 '98년부터 '00년까지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 '98년에 7,801억원(국비 4,948, 지방비 2,853) 예산, 350천명을 선발 투입하여, 이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6천명, 청소년 102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 '99년에 15,124억원(국비 10,928, 지방비 4,196) 예산, 1,439천명을 선발 투입, 이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60천명, 청소년 20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 '00년에 7,898억원(국비 4,200, 지방비 3,698) 예산, 795천명을 선발 투입하여 이중 중소기업인력지원에 17천명, 청소년 116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 45) 國政弘報의 強化 : 48(08-70-03)

-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알리겠다는 생각만 하지말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 또한 사후적인 홍보보다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하므로 국무위원들은 국민과의 교감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공보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00. 1.25, 국무회의시)

- 오보·과장보도 등 잘못 보도된 기사 대응
  - 해명자료 작성 배포 및 언론사 간부진 등에 설명, 본판 수정 및 기사 확산방지('98. 4~'99.12 : 35건, '00. 1~'00.12 : 84건)
- 사전 홍보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연간·월간·주간홍보계획 수립, 각 실·국 전파  
(연간 : '00. 3.27, 월간 : 월1회, 주간 : 주1회)

-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행자부 홈페이지 및 나라21 게시판 등에 보도자료 게재  
(‘00. 1~’00.12 : 1,086건)
- 각 부처 공보관과 연계활동 강화
  - 중앙부처 공보관회의 적극 참여(정례회의 : 분기 1회, 기타 사안별 수시 회의)

#### 46) 各 部處의 經費節減 勞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 업무의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경비절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정부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제개정
  - 제1차 정부조직 개편(‘98. 2.28) : 1실 4국 4관 9과 160명 감축
    - 구 내무부 + 구 총무처 ⇒ 행정자치부
  - 본부조직의 자율적 개편(‘98. 7. 22) : 2국 5과 51명 감축
  - 소속기관 개편(‘98.12.31)
    - 중앙공무원교육원 : 2담당관 34명 감축
    - 중앙소방학교 : 9명 감축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10명 감축
    - 정부청사관리소 : 38명 감축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설치 : 7부 15과 267명
  - 제2차 정부조직 개편(‘99. 5.24) : 2국 7과 114명 감축, 2관 설치

- 경비절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98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추진계획 수립('98. 5. 9)
  - 자발적 직제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성과금 '99 예산편성('98. 8.20)
    - 51명 감축으로 절약된 1년분 인건비 1,249백만원의 성과금(100%) 중 예산청에서 예산절약으로 인정한 1,144백만원 편성
  - '98 예산절약성과금 지급('99.10)

#### 47)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8.15 경축행사 거리행진 행사예산을 수해대책비로 전용하고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 수재민 위로·격려
  - 각 부처 장관들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 공무원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해대책 추진('98. 8.14, 국무회의시)
- 이재민 구호 및 제방복구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구역을 책임지고 복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감독,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의하여 근원적으로 복구('98. 8.17, 국무회의시)
- 하절기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수립
  - 기상변화로 또다시 수해가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지난해의 수해가 미 복구된 경기북부 일부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99. 5. 4, 국무회의시)

- 수해복구 예산확보 및 수해현장 지원



- 추경예산 9,000억원 반영등 수해복구비 1조 7,474억원 확보 ('98. 9.22)
- 중앙행정기관 직원 자원봉사활동 : 3,634명 수해복구 지원 ('98. 8.11~8.15)
- 행정자치부장관 수해현장방문 수재민 위로·격려(총 4회)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 등 12개 지역(8. 2~8.24)
- 근원적인 복구대책 강구
  - 자치단체별 이재민주거대책 등 행·재정지원 철저 지시('98. 9. 8)
  - 시설물별 복구 및 사업장별 안전·품질관리 철저 지시('98. 9.21)
  - 수해피해 이재민 월동 및 생활안정대책 수립 지시('98.11. 5)
  - 수해복구사업 집행촉진 강화지침 통보('98.11.13)
  - '98 수해복구사업 우기대비 철저 지시('99. 5.13)
  - '99 우기대비 '98 수해복구 미완공사업 추진 철저 지시('99. 6.16)
  - '98 수해복구사업 우기전 마무리 지시('99. 6.26)
-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 주택 3,215동 완공, 농경지 8,953ha 복구완료, 공공시설 22,012건 완공
- 경기도지역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 주택 774동 완공, 농경지 2,060ha 복구완료, 공공시설 3,559건 완공

#### 48) 失業對策 內實化 : 149(05-70-10)

- 공공근로사업 임금이 높아 토목공사장 등의 인부가 유입되는 경우와 실업자가 아닌 가정 주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98. 9.15, 국무회의시)
  - 10조원에 가까운 실업대책비를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추진('98.10.12, 국무회의시)
- '98년 2단계시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 '98. 9.14일 임금단가 3천원 인하 조치하였고, 전업 주부 등 부적격자의 사업참여 배제 및 선발요건 강화
- 자치단체 현지 지도 점검을 '98. 9.14~9.26일까지 8개팀 24개반 72명 투입하여 실시
- 지방자치단체 관계관과 총 6회 회의 실시

#### 49) Y2K 對策 徹底 點檢 : 153(03-70-11)

- Y2K 문제는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98. 9.15, 제42회 국무회의시)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함 ('98.11.23, 제55회 국무회의시 추가)
- Y2K 문제인식 확산 및 기술지원 추진
    - Y2K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98. 4~6, 대구 등 6개소)
  - Y2K 문제해결 정보제공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2000년문제 정보안내센터” 설치·운영('98. 5~)
    - “Y2K 대응방안 모음집”('98. 9), “Y2K 수범사례집”('98.12) 발간보급·활용
  - 행정분야 Y2K 문제해결 추진
    - 자치단체 Y2K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99. 2, 123개 시군구, 45억원)
    - 여권발급시스템과 주민등록, 신원·병적 조회를 연계한 2000년 모의 시험실시('99. 5)
    - 행정분야 Y2K 종합대처방안 마련 및 시달('99. 6)
    - Y2K 문제해결시스템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및 미비점 보완조치('99. 7)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Y2K 추진실태를 격월 평가 및 국무회의보고('99. 9)
- 중앙 및 지방행정분야의 5,419개 시스템에 대한 Y2K문제 해결완료
- 2000년 전환기간 중 Y2K 비상대응('99.12)
  - 행정분야 Y2K 비상대응 종합모의훈련 실시(2회)
  - 행정분야Y2K 비상근무실시('99.12.30~'02. 1. 4)

## 50) 自然災害 및 人的災害 輕減努力 : 157(09-70-12)

-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 양국의 재해대응관련 제도, 재해방지체제 및 시설에 관한 정보·의견 교환을 통하여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경감을 위한 협력 추진('98.10.12, 국무회의시)
- 한국·일본 등 22개국을 회원국으로하는 『아시아방재센터』가 '98년 일본 고베시에 설치됨에 따라, 이 센터사업에 적극 참여 계획
    - '95.12.17~18 : 아시아 방재정책회의 개최 참가(본부장외 1인)
    - '96.10.23~24 : 아시아 방재전문가회의 개최 참가(방재국장외 1인)
    - '97. 6.16~17 : 아시아 방재협력증진회의 개최 참가(지방자치제화재단 동경사무소장외 1인)
    - '98.10.26~27 : 아시아 방재센터연구원 한국방문(스즈키외 1인)
      - 우리나라 재해대책 관련 조직·예산에 관한 자료수집
  - 제2차 한·일 방재회의 개최 ('00.12)
    - '99. 2.15~18 : 아시아 방재센터 주최 제1차 국제전문가회의 참가(재해대책과장외 1인)

- '99. 3.17 : 일본정부 요청에 따른 한·일 국토계획협력회의에 방재분과위 설치 요청(행자부 →건교부)
- '99. 5. 8 : 한·일 국토계획협력회의 방재분과위 설치에 대한 의견
  - 방재분야 협력문제는 양국간 직접협의 (건교부→행자부)
- '99. 5.15 : 한·일 양국간 방재분야 교류협력회의설립 의견제시(한국→일본)
- '99. 7.23 :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1명 아시아방재센터 파견(3개월)
- '99.10. 1 : 아시아방재센터조직운영분담금 \$30,000 납부
- '99.12. 4 : 제 1차 한·일 교류협력 회의 참석 (일본 동경)
- '99.12. 5~8 : 아시아방재센터 제 2차 국제회의 (일본 고베)
- 제 2차 한일 방재업무 교류협력회의 일정('01. 1) 협의 : '00. 11
- '00.12. 4~10 : 아시아방재센터 제 3차 국제회의 참석(일본 고베)
- '00.11.10 : 아시아방재센터 조직운영분담금 \$30,000 납부
- '01. 1.13 : 제 2차 한일 방재회의 개최(서울)
- 매년 정례회의 개최 (한일 번갈아 개최주관)

## 51) 公務員不正腐敗 剔抉方案 講究 : 158(03-70-13)

- 법무부·행정자치부·감사원 등 주무장관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까운 시일안에 보고하기 바람('98.10.12, 국무회의시)
-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대책 수립, 청와대 보고('98.10.14)
    - 중하위직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민행정 취약분야 중점관리
      -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위생·환경·소방·건축·농지·산림) 집중감찰
      - 취약분야 담당자·직무 특별관리 및 장기근속자 순환보직 확행

-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친절운동, 의식개혁을 위한 정식교육 강화
-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개최 정부의회 전달('98.10.20)
-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색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찰활동 실시
  - 기 간 : '98.11. 9~'98.11.18(대통령 해외순방기간중)
  - 대 상 : 14개 시도 대상, 점검반 편성 : 4개반 34명 투입
  -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찰활동 : 42개반 180명
-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감사 실시
  - 공무원 비리·부당처리에 대한 시민제보 점수를 통한 공개감사제 실시
  - 처벌위주의 적발감사 지역, 모범사례발굴 위주의 정책감사 실시
  - 적극적인 업무수행중 실수는 과감히 관용, 소극적 업무처리는 문책
- 「공무원부조리 신고방」운영
  -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98.10.12)
  - 신고대상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비리

## 52)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함
-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 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간부회의, 직원조회를 통한 기관장의 공정인사 지시·교육('02년 7회)
- 합리적 인사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관리개선기획단』 설치('01. 5~12)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을 위한 인사기준과 절차 마련
  -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01. 7.14), 『행정자치부인사관리규정』 개정('02.10. 1)

- 결원직위 및 인사기준 공개 등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실시
  - 담당급이하 전직원의 전보희망부서 및 인사건의사항 수렴('02년 5회, 106직위)
- 과장·담당급 주요 핵심보직에 직위공모제(Job Posting) 도입·실시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망운영과장('01.10.20), 본부 인사담당('01.9. 1, '02. 9.19)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
  - '02년 4·5급 승진, 성과급 지급, 국외훈련 심사시 다면평가 7회 실시
- 지역·학교·경력 등을 고려한 인사운영의 균형안배와 조화 유지
  - 인사정책결정 직계라인에 특정 지역 편중 지양
  - 부처통합에 따른 화합인사
    - ( '98. 7.22~8.10 : 국장급 50%, 과장급 45%, 담당급 51%)
    - ※ 과장급이하 전직원의 인사결과 만족도 조사('98. 9.24~9.25 : 만족 62%)
-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전문직위 지정확대(3→17개 직위), 개방형직위(5개 직위) 공개모집('02년 4회)

### 5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에는야말로 확실한 수해대책을 세워야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피해를 줄이고,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함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특히 민·관·군이 협력체제를 갖추고, 전부처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람
- (‘99. 8. 3, 국무회의시, ‘99. 8.10, ‘00. 3.21, ‘00. 8. 1, ‘00 .9.19, ‘01. 6.19, ‘01 .7.16 추가지시)

- 2000 여름철 재해사전대비 추진지침 시달 (‘00. 2.22)
  - ‘00. 3~5까지 시군구에서 추진한 재해사전대비 전반에 대하여 5.10까지 시도가 자체 점검
  - 중앙합동점검 : ‘00. 5.29~6. 3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6,516개소
  - 재해위험지구 399개소(침수위험 236, 붕괴위험 65, 고립 등 98)
  - 대규모공사장 1,124개소(택지조성 111, 도로교량 203, 기타 810)
  - 방재시설물 4,993개소(배수문 955, 기성제 791, 하수도 등 3,247)
- 수방자재·장비 등 확보 지정
  - 수방자재 6종 1,563만점(포대류, 묶음줄, 말목, 비닐 등)
  - 구호물자 6종 26만점(양곡, 의류, 천막, 침구, 생필품 등)
  - 방역물자 4종 12만ℓ(살충제, 살균제, 예방주사약 등)
  - 응급복구장비 7종 19천대(불도저, 로우더, 덤프, 트럭 등)
  - 이재민 수용시설 9천개소 지정·관리

- 수해방지종합대책 추진(119개과제, 24조원)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완료('00. 2.29)
  - 분기별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청와대 기획조정실)
    - ※ 관계부처협의회 개최: 2.29, 5.24, 6.29
- 방재교육 및 시범훈련 실시
  - 방재교육실시
    - 재해관리자과정 : 50명(4.17~21)
    - 재해실무자과정 : 160명(3.27~31, 5.22~5.26)
  - 방재종합시범훈련 실시(일시 : 5. 25, 14:30~15:45)
    -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상류 의암호 수변
    - 훈련 참가기관 및 인원 : 18개기관 3,000명 (훈련요원 500, 참관 2,500)
- 중앙재해대책상황실 보강계획 수립·시행
  - 사업량 : 재해대책상황실 근무환경 개선 1식, 각종 상황관리장비 보강 1식
  - 사업비 : 58백만원
  - 세부 보강내용
    - 벽체도배 및 도색, 출입구 환경개선, 조명시설 교체 등 인테리어 보강
    - 재해영상관리시스템, 음향시설 보강,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장비 설치 등 각종 상황관리 장비 보강
- 전국단위 방재전산 모의훈련 실시
  - 기간 : '00. 2~6(4회실시, 3일씩)
  - 대상 : 중앙 및 자치단체 248개기관(시도 16, 시군구 232)
  - 방법 : 중앙에서 시달된 피해상황 가상데이터를 시군구에 입력 및 시도, 중앙에서 각종 보고서 출력
-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금년 우기전 '99 피해우심 시군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 구축·운영)

- 2000년 1단계 시범사업 추진

- 사업량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입·설치 46개 시군('99 재해우심 시군)
- 사업비 : 1840백만원 (시군당 40백만원)
- 사업기간 : '00. 5~7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 54) 不法盜聽의 根絶 : 277(08-70-28)

○ 국민의 정부에서 도청·감청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함. 불법도청은 일체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함('99. 9.21, 국무회의시)

-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통신불안감 증대와 더불어 범인 검거를 위한 감청 필요성 증가
- 감청절차를 엄격히 준수, 불법도청을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및 통신비밀 등 사생활보호에 주력
-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직무교양 실시, 지도감독 강화
- 불법도청 등 사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심부름센터 등의 도청기 제작·판매·유통 및 불법 도청행위
  - 1차단속('99. 9.12~12.31) 총276건 413명 검거(구속 122명), 2차단속('00. 2. 1~3.31) 총106건 179명 검거(구속 41명), 3차단속('00. 7. 1~12.31) 총69건 131명 검거(구속 26명)
- 정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청관련 홍보책자 발간·배포
- 감청 및 통신정보업무 관련 자체 내부지침 수립·시행

## 55) 2000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 ('99.12.7, 국무회의시)
- 연말연시 홍보대책 수립
  - 대통령비서실,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및 사기진작대책」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기자회견 ('99.12.20, 인사국장)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보도자료 배포 및 대언론 브리핑 실시
  - 민방위대편성 연령인하 등 30건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브리핑 ('99.12.26, 공보관)
- 2000년 주요사업 홍보책자 15,000부 발간 배포('99.12.23)
- 수방대책 홍보 : 정부부처 합동기자회견('99.12.28,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정홍보처)

## 56)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8-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 바람('00. 2. 1, 제5회 국무회의시)
- 『2000주요업무계획』 제출('00. 2.12)
  - 정부개혁의 차질없는 완수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기풍진작

- 21C형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
- 공명정대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국민 생활안전 확보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지방자치 정착
-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낙후지역 개발
- 국민화합과 지역갈등 극복으로 국민역량 결집
- 새 시대에 부응하는 경찰상 정립
- 2000월드컵축구대회 지원
-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고('00. 3.22)
  -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
    - 전자정부의 실현
    - 비능률 낭비없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일하는 정부』 정착
    -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정부』 실현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자치 정착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 확보

## 57) 解氷期 安全事故에 徹底히 對處 : 328(08-70-33)

-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  
( '00. 2.29, 국무회의시)
- 대형재난취약시설 중앙합동점검 회의('00. 2.26)
    - 장 소 : 중앙재해대책본부상황실
    - 대 상 : 7개부처 40명(문화부, 노동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 대형재난 취약시설 중앙합동점검 및 자치단체 자체점검(2.28~3.18)
  - 21,469개소(축대, 옹벽, 노후교량·건축물 등) 대상으로 1,501개반, 6,246명(중앙 56, 지방 6,190)을 투입, 점검결과 총 4,818개소, 6,654건 지적, 시정조치 완료
- 해빙기 안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KBS, YTN 등 방송홍보 : 94회
  - 서울지역 대로변 전광판 : 1일 40회(3. 5~3.31)

## 58)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
- 선거업무 추진 철저('00. 3.21, 제12회 국무회의시)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 공명선거 관리지침 자치단체 시달('99.12. 1)
  - 광역·기초단체장에게 공명선거 당부 행자부장관 서한문 발송('00. 2.14)
  -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에 대한 행위제한사항 시달('00. 2.23)
  -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에 대한 선거중립 지시('00. 3.15, '00. 4. 8)
  - 공명선거홍보 신문광고 : 중앙10대 일간지 및 5대 경제지('00. 3.20, 3.21)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시 장관지시('00. 3.24)
- 법정선거사무의 철저한 준비 및 차질없는 수행
  - 선거업무편람 등 업무관련 책자 발간·배부(7종 60,500부)
  - 선거지원상황실 설치·운영('00. 1.19~4.20)
  - 선거사무에 적용될 인구수('00. 1.31기준)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00. 2.15)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근거한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00. 2.22~3.21)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비용 공시자료(3종) 마련('00. 3.11)
-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을 위한 정보통신부 협조 요청('00. 3.11)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철저 지시('00. 3.21, '00. 3.23)
-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 선거인수 33,482,387명('00. 3.22~3.26)
- 장애인 투표편의대책 강구 지시('00. 3.23, '00. 3.31)
- 산불발생지역 구주민등록증 발급 등 긴급조치 방안강구('00. 4.12)
- 투표소(13,780개소)와 개표소(244개소) 설치 및 안전관리대책 강구

## 59) 電子政府 早期 具現 : 352(07-70-3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구축, 일하는 방식 개선, IT활용능력 제고,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바람</li> <li>○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 전국민이 정보화에 참여할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바람<br/>( '00. 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li> </ul> |
|---|
- “전자정부구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98~'02)을 수립·추진
  -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확대실시('01. 1~)
    - 교육실적 : 474만명('00년 124만명, '01년 190만명, '02년 160만명)
  - 전 공무원 정보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00.1~)
    - 교육실적 : '00년 451천명, '01년 455천명, '02년 310천명
  - 행정생산성향상 및 의사결정과정의 전자화 추진

- 전자문서시스템 인증시험 및 정부용 표준전자문서시스템(11종) 선정 ('00. 4, '01. 7)
-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실시('00. 7)
- 중앙-시도간 전자문서 유통실시('01. 9)
- 중앙-시도-시군구간 전자문서유통 실시('02.10)
- 전 사무직 공무원 E-메일주소 확대 보급
  - E-메일 보급 및 이용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달('00. 3~4)
  - 기관별 자체보급 추진 및 보급완료('00.12)
- 민원서비스혁신(G4C) 사업추진
  - 민원업무혁신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 ('00.11~'01. 5)
  -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구축 추진('01.10~'02.12)
  - G4C 1단계 시범서비스 실시('02. 2)
    - 인터넷 민원안내 1,000여종, 민원신청 54종,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G4C 2단계 시범서비스 실시('02. 4)
    - 인터넷 민원안내 2,000여종, 민원신청 143종 서비스로 확대 등
  - G4C 본격 서비스 개시('02.11. 1)
    - 인터넷 민원안내 4,000여종, 민원신청 393종 서비스, 20종 주요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
  - 1단계('98~'00) 10개 업무 : 주민, 지적, 차량, 환경, 재·세정, 민원 등
    - 1단계 사업완료로 주전산기 설치(464대) 등 시군구 행정정보화 기반 시설 구축
  - 2단계('00~'02) 11개 업무 : 지역개발, 문화체육, 호적, 재난재해, 민방위 등

- 무인민원발급기(KIOSK) 712대 보급 및 38종 증명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확충
  - 정보공동이용 기반시스템을 통한 생산적복지정보 공동이용서비스 등 실시('00.12)
  - G4C사업을 통해 주민, 호적 등 20종 주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서비스 본격 개시('02.11)
- 전국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
  - 호적정보시스템 개발('99.12) 및 시범운영('00. 6, 수원·충주)
  - 호적부 총 7천만건 입력완료('00. 9) 및 호적정보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완료('00.12)
-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보급('00) 및 운영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개발('00. 1~7) 및 보급('00.12)
  - 공개대상민원이 있는 37개 중앙행정기관 및 248개 전지방자치단체 보급완료('02.12)
  - 공개대상민원 확대 896종 → 1,985종('02)
    - 중앙행정기관 : 325종 → 1,212종, 지방자치단체 : 571종 → 773종
- 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기반구축
  -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완료('99년 중앙-시도간 초고속화, '00년 읍면동까지 LAN구축)
  - 전자정부법 제정('01. 7) 추진
    - 전문기관 조사연구('00. 5~9)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00. 9~10)
    - 정부안 확정('00.11, 국무회의) 및 국회제출('00.11)

## 60)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 · 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지침 시달('00. 3. 8)
  - 3.22 주요개혁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과제 추가(3.23)
- 역점시책 세부실천계획 확정(4.20) - 191개 과제
  - ※ 국정과제 및 자체시책 등 86개 과제 포함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3회
  - 장관주재 1회(4.17)
  - 차관주재 2회(4. 4, 5.23)

## 61) 政府機能調整 推進 : 367(09-70-40)

- 정부가 시대변화에 맞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을 추진바람
-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부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00. 5. 9, 국무회의시)

- 추진경위
  - '00. 2.15~6.19 : 정부기능조정위원회 구성 · 운영
  - '00. 3. 3~4.17 : 정부기능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00. 5. 8 : 정부기능조정방안 공청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
  - '00. 7. 6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제출
  - '01. 1.29 :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 공포
-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 격상하여 경제정책총괄 · 조정기능을 강화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하여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수행

## 62)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상당 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
- 수개월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처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00. 9.19, 국무회의 시)

- 출장소 통·폐합 계획 수립 : '00.10.16
  - 20개 출장소 → 10출장소로 통·폐합
  - 인력감축 : 10명
- 이사회 의결 : '00.12.18
  - 지사 및 출장소설치규정개정
  - 직제규정개정
- 행정자치부 승인 : '00.12.26
- 시행 : '01. 1. 1

### 63)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 관련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 아래 무죄루탄의 기조를 유지하고, 공권력 확보방안 마련하여('00.12.19) 불법폭력시위는 초기부터 엄정대처
- 단순불법행위는 사측의 고소·고발을 받아 처리하고, 불법파업·분규시 적기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법질서 확립
- 시민참관단 운용, 채증장비 보강(캠코더 507대) 등 불법폭력시위 감시체계 구축, 상설부대 교육훈련('02년 상·하반기 2회)으로 대응역량 강화

### 64) 설 綜合對策 마련 : 410(80-70-50)

- 설연휴기간중 물가관리·체불임금·교통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 특히, 교통안전, 치안대책 또한 마련 바람
-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람('01. 1. 9, 제2회 국무회의시)
-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 중앙부처 및 시·도 통보('01. 1.13)
- 재해 재난 예방
  - 재난·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 사전점검(1.8~1.19)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 근무 및 구조구급태세 강화(1.23~1.26)
  - 유도선장 안전점검 및 교육(185개소), 주요도선장 공무원 배치(34개소, 51명)

- 귀성객 수송관리
  - 대중교통 증편, 상습정체지역 우회도로 지정(326개소 12,814km)
  - 폭설·폭풍대비 비상근무(394개반 5,721명)
  - 지하철, 시내버스 연장(새벽 02:00) 및 증편운행(3,1248대)
- 서민생활보호
  -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점검반 운영(728개반 : 1. 8 ~ 1.22)
  - 당직·당번 의료기관 지정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소외계층 위문실시(행자부 31백만원, 시도, 시군구 3,015백만원)
  - 마을단위 민속놀이 개최 등 귀성객 환영분위기 조성
-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확립
  - 행자부-시도-시군구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자치단체별 시민불편신고센터 설치 생활민원 신속처리(6,077건 접수 6,039건 처리)

## 65)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전 국무위원들은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각 부처에서 내년 1월초에 예정된 국·과장급 인사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능력, 개혁성, 청렴도』 등 세가지이며, 배제해야 할 것은 첫째는 지연·학연 등 친소관계이고 둘째는 청탁임 ('01.12.29 국무회의 및 '02. 1.14 연두 기자회견시)

-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01. 3~4)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의견조정
- 인사정책실무협의회 개최('01. 3.29)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수립·시행('01. 4. 7)
  - 실적주의 인사원칙의 구현, 국민대화합 실현을 위한 편중인사 시정 등
- 중앙부처 인사관계관 회의개최('01. 7.25)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의 적극 추진 요청
- 공정한 인사 실행지침 수립·시행('02. 1.16)
  - 「인사운영 혁신지침」('01. 4. 7)의 지속적 추진
  - 국·과장급 등 인사에 '능력·개혁성·청렴도'를 기준으로 반영
    - 「능력과 실적」중심의 승진심사 및 보직부여
    - 개혁성 및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 우대
    - 청렴도 미흡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조치 등
  - 기관별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활성화 : 9개부처 24명

## 66) 地自體 財政浪費 徹底管理 : 515(03-70-5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유치 등 전시성 행사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를 마련
- ('01.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강화('01.1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세수증대 등을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교

- 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97 도입) 운영 강화
  - 인센티브 적용항목 확대 : 8개 → 11개('01) → 13개('02)
- 지방채무관리 강화(「지방채발행계획운영지침」 시달 '01. 5)
  - 채무과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 향후 5년간의 채무 감축목표 설정등 채무관리계획 수립 제도화
  - 감채기금 적립과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우선 사용을 지도
    - '00~'02. 6월말 감채기금 2조 3,613억원 적립, 1조 8,145억원 조기 상환(잔고 5,469억원)
- 투자심사제도 강화(투융자심사규칙 개정, '01. 4. 6)
  - 시군구의 자체심사대상 범위를 축소, 시도로 이관
    - 시군구 자체심사 : 10억원~50억원 미만 ⇒ 10억원~30억원 미만
  - 10억원이상 행사성사업 및 해외투자사업을 중앙심사에 추가
  - 투자심사결과를 국비(국고보조, 교부세, 양여금), 시도비 지원 및 지방채 승인과 연계
  - 투자심사사업에 대해 심사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 재정분석·진단제도 정례화('98년 부터)
  - '01년 재정진단대상 단체(4개) : 제주, 동두천, 경남 의령, 대구 남구
- 지방청사 건립요건 강화
  - 50억원(건축비)이상의 지방청사건립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전문기관 의 사전 타당성 검토 의무화(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01. 9)
- 지방재정전산시스템 보강 및 지방재정정보 인터넷 공개('01. 9)

## 67) 地自體 特性에 맞는 事業開發 支援 : 516(03-70-53)

-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행을 쫓아 모두 IT나 BT사업 등 첨단산업만 유치하고 육성하려고 함
- 이는 중복 투자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성공하기도 어려움. 각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00.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에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IT·BT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지원으로 IT·BT 등 벤처기업의 창업여건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산업인프라구축지원, 지역특산물 개발 및 물류유통 촉진으로 교부세 400억원 지원, 50개 단위사업을 추진
- 지방 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 3개년 계획 추진
  - 지원할 경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대표 전문·특화시장에 대해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상·하수도 등 핵심기반 시설확충 위하여 '01~'02까지 47개시장에 교부세 400억원 지원
-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시 부처와 자치단체간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업무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150억)
    - '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사업 선정 및 추진지침 시달('03. 2월중),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등 지식기반시설 확충·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산업 등을 발굴 지속육성 지원

## 68) 女性 人的資源 開發 : 520(08-70-56)

-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부가 여성관리직 양성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여성을 발탁하려고 해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발탁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할 것임('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서)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정책 추진
  - 여성채용목표제(도입 '95년) 확대실시
    - 1차 확대('99. 1) : 적용대상을 9급으로 확대
    - 2차 확대('00. 1) : 실시기간 '02년으로 연장 및 대상을 기술직으로 확대
  - 정부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위원회관리및운영지침 수립 ('01. 4)
  - 여자 대학생 대상 공직 취업설명회 개최 등
- 관리직여성공무원 육성
  - 관리직여성공무원 육성계획수립('01. 4)
  - 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 수립('02. 3 및 '02. 6)
    - 관리직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 '06년까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10%이상으로 확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1기관 여성국·과장 1인 이상 배치 및 기초 자치단체 여성부단체장 임용 권고
  - 관리직여성공무원 전국대회 개최 : 2회('01. 6, '02. 6)
  - 전국 관리직 여성공무원 6300여명 인적사항 DB구축('01. 6)
- 국공립교육훈련기관 여성공무원 직무능력 및 리더십 향상 교육훈련실시
  - 여성간부양성과정(11주), 여성관리자능력발전과정(1주) 등 4개 과정

## 69) 2002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01. 5.29, 제33회 국무회의시), (8.14, 국무회의시 추가지시)

- 월드컵 붐조성과 문화 시민운동 전개
  - 붐조성 홍보물 2,567천건 설치 및 TV방송 홍보 265회
  - 문화시민 에티켓 보급(35만매) 및 위생업주 친절교육(167회 35천명)
  - 생활 환경대청결 운동, 실천결의 다짐대회, 기초질서 실천운동 등
- 한국팀 필승전략 추진
  - 전통리듬 응원가락을 개발, 한국팀 출전경기에서 응원실시
  - 지자체 등과 협조, 한국팀 경기관람객 붉은 옷입기운동 전개
- 코리안서포터즈 결성운영
  - 10개 개최 도시에서 경기를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구성(총 45개 서포터즈에 62천명)
- 개최도시 환경정비
  - 꽃동산 1,714개소, 꽃길 4,788개소 조성
  - 무궁화 심기(2,276천본), 무궁화 화분 10,570개 배치 등 국토가꾸기
  - 개최도시 도로표지판 정비(3,006건), 화장실 개방운동 전개(22,844개소)등
- 월드컵 준비상황 및 경비·안전대책 현장 모니터링
  - 역 주변 안내표지판 정비, 숙박·관광분야 현장 모니터링
  - 지자체 4대 시책 추진상황 평가, 우수단체 시상 및 시책사업비(10억 3천만원) 특별 지원



## 70) 電子政府事業의 蹉跎 없는 推進 : 531(07-70-59)

-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고,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
    - 행자부 :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민원 사업을 적극 실현
  -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니 관계 국무위원은 각 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 주기 바람('01. 8. 7, 제32회 국무회의시)
-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구축
    -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혁신 기본계획 수립('00. 8)
    - 민원업무처리절차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BPR/ISP)('00.11~'01. 5)
  -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구축 본사업 추진 ('01.10~'02.12)
    - G4C 1단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실시 ('02. 2)
      - 인터넷 민원안내 1,000여종, 민원신청 54종
      -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G4C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확대 ('02. 4)
      - 인터넷 민원안내 2,000여종, 민원신청 143종
      - 국세납세, 사업자등록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G4C 시스템 구축완료 및 본격서비스 개시 ('02.11. 1)
      - 인터넷 민원안내 4,000여종, 민원신청 393종
      - 주민, 호적, 토지대장 등 20종 주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사업추진
    -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의 단계적 확대
      - 중앙행정기관간('00. 7), 중앙-시도간('01. 9)

- 전행정기관간(중앙-시도-시군구간) 전자문서유통 확대시행 ('02.10)
-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체계 구축
  - 문서처리절차 개선방안('02. 4), 사무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02.12)
  -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자화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 추진 ('01.12~'02. 5)
  - 전자문서 시스템 관련 표준 제·개정 ('02.11)
  - 표준전자문서 시스템 인증시험 ('02.12)
-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등을 위한 전자문서유통 관리센터 확충사업 추진('02. 8~12)
  - 기관간 안정적인 문서유통 지원을 위한 중계시스템 구축
  - 인사시스템, 조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 71) 가을 가뭄에 積極 對處 : 541(08-70-60)

- 심각한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절수운동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3대강 물관리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며 가뭄기간동안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준설하여 담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소형댐도 계속 가능한 지역에서 건설해 나가야 함('01.11.27, 제51회 국무회의시)

- '01 가을가뭄대책 세부실천계획 수립
  - 물절약 범국민운동 전개 및 가뭄대비 세부추진계획수립 시행지시(11.30)
    - 언론매체와 반상회등을 통한 집중홍보, 사회단체와 연계한 물 절약 범국민운동 추진
    - 가뭄대책업무 처리지침(S.O.P)에 의거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가을가뭄대책 세부실천계획 적극 추진(12.10)
    -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 72) 年末 公職紀綱 確立 等 : 543(09-70-61)

- 연말연시와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감찰활동 강화  
(‘01.11.21, 제51회 국무회의시)
- 부패척결을 위해 「취약분야 제도개선 기획단」 구성·운영, 행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 강화
    -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의 대상민원 확대
      - 중앙 325종 → 1,416종, 지방 571종 → 774종
    - 「전자입찰제」 도입 확대
      - 138개 지자체 → 217개 지자체 도입
  - 부패방지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시달
    - 경기, 인천, 강원 등 11개과정 450명 부패방지교육 직접 실시
  - 복무기강점검단 구성하여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 실시(‘02. 1~6)
    - 5개팀 30명으로 구성·운영, 총 158건 적발, 36명 징계(중징계4, 경징계 32), 114명 훈계
    - 업무유형별 현황 (158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회계질서 문란 38건</li> <li>· 재산관리소홀·예산낭비 34건</li> <li>· 인사관리부적정 14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행위 단속 방치 26건</li> <li>· 민원처리지연·소홀 20건</li> <li>· 복무기강 해이 26건</li> </ul> |
|--|--|

### 73) 颱風 및 豪雨被害 早速 復舊 : 608(08-70-65)

- 지난 8월초의 집중호우와 금번 15호 태풍 ‘루사’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바람. 장기침수된 3개 지역과 금번 태풍피해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종합대책을 준비 바람(’02. 9. 3 국무회의시)

#### ○ 추진내용

-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 도입관련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원입법) : 8.28
- 특별재해지역 선포관련 법령 개정 : 9. 5
-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 9.13
  - 전국단위 : 총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 3,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 이상인 경우
  - 시도단위 : 총재산피해액이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 1,0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5,000명 이상인 경우
  - 시군구단위 : 총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 2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
  - 읍면동단위 : 총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 4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특별재해지역 선포 : 9.16
  - 8. 4~8.11 호우피해지역 :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범수면, 함천군 청덕면
  -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 ○ 특별지원 범위

- 특별위로금 지원, 주택·농작물 대파대 및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
- 기타 인력·장비·의료 등 타지역에 우선 지원, 금융·세제상 특별지원

#### 74) 冬節期 對策 마련 : 611(05-70-67)

- 전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동절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등 동절기 서민층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2.11. 5, 제46회 국무회의시)

- 동절기 서민고용 안정대책 추진
  -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상설면접장 운영 등 서민고용안정대책 추진
-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타 물가상승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
- 지방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내실 추진
  - 선진유통기법 도입을 위한 교육 등 경영현대화 지도, 전용 제휴카드 발행·공동구매·고객관리 정보화 지원 등
- 이주민 월동대책 추진 철저
  - 컨테이너 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전기,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및 난방시설 재점검, 난방용품 제공 등
- 노숙자,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결식아동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 지역내 유관기관, 종교·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科學技術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5(07-38-01)  |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             | 1998. 4. 9 |
| 16(07-38-02)  |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          | 1998. 4. 9 |
| 17(07-38-03)  | 과학기술자 우대정책              | 1998. 4. 9 |
| 99(07-38-05)  |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혁             | 1998. 7. 6 |
| 100(07-38-06) |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 1998. 7. 6 |
| 101(07-38-07) | 기초과학 육성                 | 1998. 7. 6 |
| 219(07-38-08) | 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            | 1999. 4. 1 |
| 232(07-38-0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         | 1999. 4. 1 |
| 234(07-38-10)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 1999. 4. 1 |
| 258(07-38-12) | 연구개발의 실용화와 산학협동연구 촉진    | 1999. 7.12 |
| 296(07-38-13)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 1999.12. 3 |
| 314(07-38-14) | 첨단기술발전에 따른 불균형 해소       | 2000. 2.16 |
| 329(07-38-15) | 연구여건조성과 내실있는 질적개혁 추진    | 2000. 2.16 |
| 350(07-38-1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 제고   | 2000. 4.20 |
| 406(07-38-19) |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2000.12.19 |
| 460(07-38-21) | 산·학·연 협동 제고             | 2001. 2.10 |
| 461(07-38-22) | 원자력 안전관리 철저             | 2001. 2.10 |
| 529(07-38-25) | 재해대비철저                  | 2001. 7.24 |
| 547(07-38-26) | 여성과학기술연력 채용 확대          | 2001.12.21 |
| 565(07-38-27) |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체험활동 마련 | 2002. 3. 4 |
| 566(07-38-28) | 중소기업 연구시설 공동활용 방안 검토    | 2002. 3. 4 |
| 604(07-38-29) |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 2002. 7.22 |
| 612(07-38-30) |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활용여건 조성     | 2002.11.28 |
| 48(08-70-03)  | 경제정책관련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지시사항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기술교류문제)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35(07-70-22) | 과학기술인력의 병역혜택 확대 검토      | 1999. 4. 1 |
| 264(08-70-25) |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9.12.28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8-70-32) | 각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51(07-70-3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 제고   | 2000. 4.20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407(07-70-52) | 국가적 중요기술의 개발계획 수립       | 2000.12.19 |

## 1) 科學技術政策의 一貫性 : 15(07-38-01)

- 科學技術政策은 一貫性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함
-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국가목표, 전략적 추진분야 등을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科學技術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 ('98. 4. 9, 과기부 업무보고서)

- 科學技術政策의 綜合調整 強化를 통한 政策의 一貫性 확보
  - 『국가科學技術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關連부처 政策調整
- 국가科學技術위원회의 설치·운영
  - 국가科學技術위원회 11회 개최
  - 주요 科學技術政策 심의 및 보고(총 68건)
  -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
    - '00년도 사전조정 : 18개 부처, 122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사전조정결과 예산반영(2조 5,203억원)
    - '01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9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사전조정결과 예산반영(2조 9,492억원)
    - '02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2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사전조정결과 예산반영(146개 사업, 2조 9,095억원)
    - '03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사전조정결과 예산반영(149개 사업, 3조 3,022억원)
- 科學技術基本계획('02~'06) 수립('01.12) 및 연도별 시행계획작성
  - 科學技術基本계획 '02년도 시행계획 수립('02. 7)
  - 科學技術基本계획 '03년도 시행계획 수립('02.12)



## 2) 科學技術政策의 效率的 推進 : 16(07-38-02)

- 科學技術발전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 科學技術정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98. 4. 9, 과기부 업무보고서)

- 科學技術정책의 종합조정 강화
  - 科學技術장관회의를 「국가科學技術위원회」로 격상(科學技術기본법 제정, '01. 1)
    - 국과위 산하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 국가科學技術위원회 연 3회 개최
- 국가科學技術위원회의 설치·운영
  -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
  - 주요 科學技術정책 및 계획 심의를 통한 종합조정 강화
    - 2025년을 향한 科學技術발전 장기비전, 우주개발사업 체제정비 방안, 에너지기술개발전략,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생명공학육성 3단계 기본계획,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
  - 20개 부·청에서 추진한 '00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3조 746억원) 및 평가(161개 사업 2조 5,809억원)
  - 20개 부·청에서 추진한 '0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204개사업, 3조 746억원) 및 평가(161개 사업, 2조 5,809억원 규모)
  - 20개 부·청에서 추진한 '0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218개사업, 4조 4,285억원) 및 평가(167개 사업, 3조 6,298억원 규모)

- 20개 부·청에서 추진한 '0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211개사업, 5조 113억원) 및 평가(146개 사업, 4조 1,194억원 규모) 실시

### 3) 科學技術者 優待政策 : 17(07-38-03)

-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기 바람('98. 4. 9, 과기부 업무보고서)
- 연구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 및 포상('98. 7. 6, 국정과제점검회의시)
- 과학기술자의 사기양양책 수립('99. 7.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발전 여건조성 촉진('99.11.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중시하는 사회조성('99.12.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구여건조성과 내실있는 질적 개혁 추진('00. 2.16, 과기부 업무보고서)

- 독자적인 과학기술 계열의 훈·포장 제도 실시
- 과학기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확충
  - 연구성과에 따른 수익금의 일정비율(50%이상) 연구원 지급 제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지급 인센티브를 기술료의 50%이상 확대
  - 과학기술인 복지증진과 노후보장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
- 과학기술자 이미지 제고
  - 호기심천국, 카이스트(SBS) 등 과학기술관련 TV프로그램 제작지원·방송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통한 홍보 실시
- 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
  - 과학의날 포상 : 훈·포장 36명, 대통령·총리 표창 44명 등('02. 4)
  - 이달의 엔지니어상 신설('02. 3)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종합대책 수립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종합대책 수립·시행(국과위, '01. 7)
  - 여성과학기술 채용목표제 도입·시행('02. 1)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제정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추진
  - 우수연구원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는 「영년직 연구원」 제도 도입('02. 7)

#### 4) 政府出捐研究所의 改革 : 99(07-38-05)

- 연구소 개혁시 연구소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업적에 따라 기관장을 임명하는 공모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98. 7. 6,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경영혁신 주요내용
  - 기능조정 및 조직정비, 인력감축(행정지원인력을 중심으로 감축)
  - 기관운영시스템 개선
    - 기관장공모제, 연봉제 도입, 계약제 및 정년하향 조정 등
-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 인력감축
  -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내부조직정비 축소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연구기획·평가 기능분리 과학기술평가원설립,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과의 일부 중복기능사업 상호이관
    - 조직 및 보직자 수 감축 및 행정지원인력 중심으로 감축
- 기관장공모제
  - KAIST원장 등 임기만료 연구기관장 공모제 실시
- 연봉제, 계약제, 정년하향조정
  - 책임급 65세→61세, 선임급 이하 60세→58세

- 퇴직금제도개선
  - 누진율폐지, 근속 1년당 평균임금의 1개월분 지급
- 행정공시제(경영공시제) 도입 및 행정서비스현장 도입
  -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운영
- 인건비 등 복리후생제도 개선
  - 유급휴가일수 축소, 대학생자녀 학자금보조제 폐지

## 5) 벤처企業의 育成・支援 100(07-38-06)

- 벤처기업 육성은 정보・첨단산업에 국한하여서는 안될 것임. 벤처기업 지원시 첨단산업은 물론 경공업, 중공업 등도 포함하여 발굴・육성해야 할 것임 ('98. 7. 6,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벤처기업 육성・지원
  - 신기술창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시설 등의 종합적 지원
  - 창업보육센터(313개)별 입주기업수 현황(총 339개, '02년말 기준)
    - ・ 과학기술원(97개), 과학기술연구원(59개), 생명공학연구원(25개), 전자통신연구원(27개), 생산기술연구원(22개), 해양연구원(6개) 등
  - 공공연구기관 원천기술의 중소벤처기업 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 ・ '99년 : 31개과제 40억원 지원      ・ '00년 : 27개과제 31억원 지원
    - ・ '01년 : 32개과제 42억원 지원      ・ '02년 : 22개과제 31억원 지원
-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신기술투자조합(MOST 1호 ~ 8호) 결성・운영('98년~'02년간 총 출자액 : 2,383억원)
  - MOST 1호('98.11, 출자 310억원), MOST 2호('99. 5, 출자 430억원)
  - MOST 3호('00. 5, 출자 530억원), MOST 4호('01.12, 출자 213억원)

- MOST 5호 ('02. 8, 출자 170억원), MOST 6호 ('02. 3, 출자 260억원)
- MOST 7호 ('02. 9, 출자 400억원), MOST 8호 ('02.10, 출자 70억원)
- 벤처·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기관 확대
  - 918개('99년) → 1,234개('00년) → 2,116개('01년) → 2,546개('02년)

## 6) 基礎科學 育成 : 101(07-38-07)

- 미국의 저력은 대학의 기초과학발전에서 나온 것임
    -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할 것임  
( '98. 7. 6, 과학기술부 국정과제점검 회의시 )
- 대학 등의 창의적 연구활성화를 위한 목적기초연구사업추진
    - 학제간 연구 및 특정목적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해 특정기초·선도과학자, 우수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구지원계획 수립
    - 특정기초 825개 과제 지원 및 선도과학자(29과제), 여성과학자(110과제), 지역대학우수과학자(406과제)등 총 702억원 지원('00)
    - 특정기초 889과제, 선도과학자(37과제), 여성과학자(215과제), 지역대학(797과제)등 총845억원지원('01)
    - 특정기초 901 과제 지원 및 선도과학자(42과제), 여성과학자(310과제), 지역대학우수과학자(853과제)등 총93,516백만원지원('02)
  - 선도과학자군 육성 및 우수연구집단육성 사업 추진
    - 신규우수연구센터 22개 선정·지원('00)
    - 신규우수연구센터 7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9개 선정·지원('01)
    - 신규우수연구센터 10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8개 선정('02)
  - 기초·원천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운영 : '00년 13기 → '01년 17기 → '02년 →17기
- 연구기기·소재·정보의 공동활용촉진을 위한 과제 지원 : '00년 107개  
→ '01년 110개 →'02년 129개

## 7) 氣象豫報의 正確性 提高(氣象廳) : 219(07-38-08)

-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정확한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99. 4. 1, 과학기술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 수치예보모델 설치 완료('99. 5.31) 및 정상운영('99. 6. 1)
  - 전지구예보시스템 등의 수치예보 검증보고서 발간·활용('99.12.30)
- 전지구예보시스템 개선모델의 운영('00. 2.14) 및 비정수계 지역예보모델(30km), 고해상도 모델(10km, 5km)의 개선 운영('00. 6.16)
- 고분해능 전지구예보시스템의 현업운영('01. 3. 1)
  - 분석일기도 분해능 향상(160km→40km) 및 모델분해능 향상(110km/21층→55km/30층)
- 3차원최적내삽법을 이용한 지역자료동화체계의 현업운영('01.11. 1)
- 수치예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관측자료 입전감시표출시스템 구축('01.12.12)
- 동적선모형을 이용한 3시간 기온예보모델의 시험운영('02. 3.22)
- 앙상블예보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도 제공체계 구축('02. 4.26)
- 지역예보모델을 이용한 한반도지역 면적강수량자료 생산('02. 5.15)
- 전지구모델(T106)에 3차원 최적내삽법을 이용한 앙상블 예보시스템 구축('02. 9.17)
- 전지구·지역모델의 태풍추적프로그램 통합 및 진로 추적법 개선('02.10.18)

- 3차원 최적내삽법(3DOI)을 이용한 전지구모델(T106/L21)의 분석체계 개선 ('02.11.13)
- 개성 및 중강진의 최고·최저기온 추가 및 그래픽 개선('02.12.19)
  - 칼만필터 기법을 이용한 기존 기온예보 표출그래픽 단일화
  - 수치예보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03~'06)
- 향후계획
  - 수치예보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03~'06)
    - 선진자료동화체계의 실용화(3, 4차원 변분법 적용)
    - 전지구모델의 예보능력 향상
    - 앙상블 예측기법을 이용한 +10일 예보 향상, 예보지원자료의 가시화 및 3차원 입체화

## 8) 國家科學技術委員會 機能 強化：232(07-38-0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심의해야 함 ('99. 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제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심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사전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계획 확정 등
- 국과위 기능확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특별위원회 설치(바이오산업기술위원회)
  - 국과위 민간위원 확대(3인→9인) 및 전문위원회 활성화 (나노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1회 개최
- 국가연구개발예산 사전조정실시
  - '00년도 사전조정 : 18개 부처, 122개 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 '01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9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정
  - '02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2개 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 '03년도 사전조정 : 19개 부처, 173개 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계획 심의
  - 과학기술기본계획, IT, BT기술을 통한 전통산업기술개발 방안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 실시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수립

## 9) 國家研究開發事業에 對한 인센티브 反映: 234(07-38-10)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잘한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중복되거나 부진한 사업과 과제에 대해서는 상응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임
- 다만, 부진한 분야라 할지라도 필요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99. 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 '98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 정밀재평가 및 개선 조치사항 통보('99. 4)
- 각 부처별로 '98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밀재평가 및 개선 조치계획 수립('99. 5)
- '98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 정밀재평가



및 개선 조치사항, '00년도 예산 사전조정결과를 제2회 국과위에 보고·확정('99. 7)

- 예산 사전조정결과 A·B등급 사업은 예산확대, C등급은 소폭증액, D·E등급은 축소 또는 중단등 인센티브 반영
- '99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 국과위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99.11)
- '01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제8회 국과위에 보고('01. 7)
- '02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수립('01.12)
  - 제9회 국과위 심의·의결 및 각 부처에 통보
- '02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제10회 국과위에 보고('02. 7)
- '03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수립('02.11)
  - 제11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확정 및 각 부처에 통보

## 10) 研究開發의 實用化와 産學協同研究 促進 : 258(07-38-12)

-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
-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성과를 기업에 넘겨줄 때 참여기관이나 개인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것
-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동사례를 잘 연구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99. 7.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과학기술 발전여건 조성 추진('99.11. 4, 국과위원회시)
-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99.12. 3, 국과위원회시)
-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00. 2.16~21, 국과위원회시)
-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불균형 해소('00. 2.16~21, 국과위원회시)

-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의 실용화촉진을 위한“기술이전촉진법”제정 완료(99.12)
-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입법공고 (‘00. 2) 및 공포(‘00. 6)
- 2001년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00. 9)
- 기술료 수입의 일정액을 기술보유자 및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토록 명문화
  -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 반영(‘00. 6)
    - 내용 : 「 순 수입의 15% 이상은 연구원에게 지급 」
  -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 배분기준 상향조정토록 시행령 재 개정(‘01. 7)
    - 특허관리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50%이상 지급으로 상향
- 미국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 착수 · 완료
  - 과제명 : 「실리콘밸리 산학협동 연구실태 분석」 및 정책자료 활용
  - 연구기간 : ‘99. 9.10~‘00. 3.10

## 11) 科學技術에 대한 投資擴大 : 296(07-38-13)

- 정부와 기업은 상호 협력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기술개발 투자에 최우선을 두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99.12.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연구개발예산을 국민의정부 임기내 정부예산 대비 5%이상으로 확대
    - 2조 7,057억원(‘98년도 3.6%) → 4조 9,556억원(‘02년도 4.7%)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대 조성: 1조 1,153억원(‘02.12월말)
  -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권고
    - ‘01년도 매출액 대비 3.4%→ ‘02년도 매출액 대비 3.0%(‘02년도)→ ‘03년도 매출액 대비 3.3% (5,353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실시('99~'02까지 매년 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및 후속조치 추진
- 국가연구개발예산 편성방향 수립('00년부터 '03년도까지 매년 수립·권고)
  - 연구개발예산편성방향 수립 및 관련기관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전문가 심의 실시(매년)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사전조정결과 관계기관 통보(기획예산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예산 반영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 활성을 위한 각종시책 강화
  - 벤처기업 창업지원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MOST 1~8호) 결성·운영
  - 벤처·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기관 확대
    - 918개 기관 943명 배정('99년) → 1,234개 기관 1,396명('00년)→2,116개 기관 1,751명 배정('01년)→2,546개 기관 1,960명 배정('02년)
  - 신제품개발비용 지원 및 공공기술 실용화 등
    - '99년 64개과제 85억원 지원, '00년 73개과제 100억원 지원, '01년 57개과제 100억원, '02년도 30개 과제 65억원
    - '01~'02년 : 대덕밸리,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권역별 기술이전컨소시엄 선정·지원

## 12) 尖端技術 發展에 따른 不均衡 解消 : 314(07-38-14)

- 지역간 과학기술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00. 2.16,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여기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람('01. 2.16,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99~'04)의 추진
  - 연도별 시행계획('01, '02, '03년도) 수립·시행시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
    -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 혁신거점 육성, 지역별 전략특화 인력양성, 지역 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 지자체 연구개발예산확대 등
-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 추진('00. 5, '01.10, '02.11)
  - 지자체의 과학기술 관련업무의 자문 및 지역수요에 부응
    - 16개 시·도 각 1명의 과학기술자문관 임명 및 자문관협의회 홈페이지 운영
- 과기부에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전담할 “지방과학진흥과” 신설('00. 8)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 능력 강화 및 과학기술 마인드 향상
  - 지방과학기술진흥 Workshop 개최('01.11, '02. 3, '02. 7)
  - 지자체 과학기술담당공무원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Cyber교육 실시 ('02. 3~10)
  - 2002 대한민국과학축전('02. 8, 포항) 및 지역과학축전 개최('02년: 강원 등 7개소)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지방과학기술진흥 개선대책 수립('02.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추진
- 지방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02.12) 및 의견수렴중
-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 확정('00.12)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01. 3)
- 지역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의 확대로 지역전통기술의 첨단화
- 과학기술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전통첨단화연구실 사업 추진('02.11, 5개 연구실 지정)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안의 지속적 추진

### 13) 研究與件 造成과 內實있는 質的改革 推進： 329(07-38-15)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등 과학기술법령체계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00. 2.16, 과학기술부등 5개기관 업무보고시)
- 과학기술법령정비 작업반 구성·운영
    - 작업반회의 개최(6회) 및 차관 주재 법안성안회의 개최(5회)
  - 관계기관 의견수렴
    - 민주당 전문위원(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0. 5.18~6. 7), 공청회('00. 6. 1)
    - 설명회 : 과총, 한림원,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대덕클럽('00. 6. 8, 6.16)
  - 법제처 심사 및 규제개혁 심사
  - 과학기술기본법(안) 재협의(국무조정실, 산자부, 정통부)
  -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개최('00. 7.31, 8. 9, 8.24, 9.26)

- 차관·국무회의 심의('00.10. 5, 10.10)
- 법안국회 제출('00.10.14) 및 국회 본회의 의결('00.12.15)
- 법률 공포('01. 1)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1. 7)

#### 14) 國家研究開發事業의 內實化와 活用度 提高：350(07-38-18)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결과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00. 4.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종합조정지원단」 구성·운영('01. 2)
    - 16개 부처에서 전문가 1인을 추천받아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자료 전산입력 완료('01. 3)
    - 20개 부·청 204개사업 16,812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구성('01. 3)
    - 19개 부·청에서 전문가 추천
    - 평가조정위원회(19명), 과제검토위원회(140명), 사업평가위원회(83명)
  - '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실시('01. 4~5)
  - '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 제8회 국과위에 보고('01. 7)
  - '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수립('01.12)
    - 제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 및 각 부처에 통보
  - '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실시('02. 4~5)
    - 20개 부청 217개사업, 4조 5,283억원
  - '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제10회 국과위에 보고('02. 7)
  - '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 수립('02.11)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확정 및 각 부처에 통보

## 15) 研究開發의 效率性 提高 : 406 (07-38-19)

- 연구비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임
-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형식화 및 관료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전 부처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00.12.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Pool 개선방안 마련
  -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Pool을 개선하여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및 NRL평가위원에 활용
  - 기초과학연구사업 평가인력 D/B 구축·운영
- 연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연차실적평가와 과제선정평가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일수 확대
- 연구책임자의 “자율과 창의” 및 책임을 강조하는 시스템 구축
  - 연구책임자의 참여과제수를 제한하고 협약변경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되, 성실한 실패는 용인(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
- 개발사업비 정산절차 간소화
  - 정산을 협약기간 종료후 1회에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실시
- 조사·분석 사업의 확대
  - 산업기술지도 작성
  -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 추진
  -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 종합·분석을 위한 규정 개정
  - 기술지원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 연구종료후 사후관리제 실시
- 연구비카드제 시행
  - 과기부 및 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비카드제 도입·시행
- 과학기술계 출연(연) 회계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지침(안) 마련
  - 정부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확정
- 출연(연) 경영혁신의 차질없는 추진
  - 예산배정유보된 32개 출연(연)의 경영혁신 완료 경영혁신사항을 '00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 16) 産・學・研 協同 促進 : 460(07-38-21)

- 연구소·대학과 산업체의 협동연구를 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촉진하고, 동 이익이 연구소·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협동연구를 촉진해야 함('01. 2.10,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화
  - KIST-고대간 학연간파견협동연구 시범사업 추진('00. 9~'01. 8)
    - KIST 연구원 3인, 고대 교수 6인이 각각 상대기관에 1년간 파견 추진
  -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촉진방안(안) 국과위 보고
- 산학연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 326개 기관, 20,954건(3000만원 또는 미화 3만\$이상인 장비 대상)
    - 대학 184개, 출연연 31개, 국공립연 104개, 민간연 7개 기관
  - 특성화 장려사업 추진(특수고가기기지원 '01년 15억원, '02년 19억원)
- 산학연공동연구활동강화
  -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 추진('01년 599억원, '02년 652억원)



- '01년 신규센터 7개 지정 및 59개 센터에 599억원 지원
- '02년 신규센터 10개 지정 및 총 69개 센터에 652억원 지원
- 지역연구협력센터(RRC)사업 추진('01년 235억원, '02년 255억원)
- '01년 신규센터 7개 지정 및 총 45개 센터에 235억원 지원
- '02년 신규센터 8개 지정 및 총 53개 센터에 255억원 지원
- 연구성과지원사업 추진
  - '01년 신기술창업지원, 신제품개발지원사업 57개과제에 93억원 지원
  - '02년 신기술 창업, 원천기술실용화, 기술이전조직지원사업 30과제에 65억원 지원

## 17) 原子力 安全管理 徹底 : 461(07-38-22)

- 에너지·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원자력 이용의 혜택이 매우 크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잠재적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안전관리 점검의 정기적 실시 및 결과 공표 등을 통해 원자력 안전 관리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01. 2.10,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수행('01. 1~'02.12)
    - 가동중원전 정기검사 실시(고리1호기 등 16기 수행)
    - 건설중 원전 사용전검사 실시(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 및 비파괴검사업체의 안전심사 및 검사
    - RI 인허가심사 및 검사의 철저
    - 대학, 의료기관 등 RI 이용기관 479개 기관 정기검사 실시 ('01. 1~'02.12)
  -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정비

-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01. 7)
-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01.10)
- 원자력관련 기술기준 정비(과기부장관 고시 48건 제·개정('01. 1~'02.12)
- 위탁업무처리규정 개정('01.10)
- 위탁업무처리세부규정 10건 제정('02.12)
- 원자력안전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
  - 원전안전관련사안 발생시 시민 참여 확대
    - 안전증진기획단 구성·운영, 원자력안전현장 제정 등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개소('02.11)
- 인터넷(과기부홈페이지)게시('01. 1~'02.12)
  - 원전사고·고장등급 평가위원회 활동 9건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8회)
  - 안전전문위원회 안건 (7회)
  - 안전전문분과위원회 안건 (83회)
  - 검사결과 발표 : 정기검사결과 18건, 품질보증검사결과 13건
  - 원자로 정지, 출력변동 등 사고·고장정보내역 공개 : 134건

## 18) 災害對備 徹底 : 529(07-38-25)

- 지난번 수해(7.14~15)에 이어 금번(7.22~23) 호우에서도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200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예측은 여전히 빗나가고 있음. 과학기술부는 슈퍼컴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특별점검해 기상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해 주기 바람('00. 7.24, 국무회의시)

- 기상청 기상예보체계 특별점검 실시
  - 산·학·연 전문가 10인으로 특별점검반 구성
    - 점검기간 : '01. 7.24~26(3일간)
    - 점검내용 : 슈퍼컴 활용 및 분석능력 등 예보시스템 전반
- 개선대책 수립
  - 한반도 지형에 맞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착수
    - 악기상 예측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8인)
    - 직제개정시 반영('02. 6)
  - 슈퍼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슈퍼컴퓨팅 응용 전문기술인력 확보
    - 집중호우 등 악기상 감시와 국지예보의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문산 등 4개관서 증설 및 21인 증원 조치('01.12)
  - 예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및 즉응체제 확립을 위한 국민계도 강화

## 19) 女性科學技術人力 採用 擴大 : 547(07-38-26)

-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일정비율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01.12.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도입
    -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중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
      - '02년 10%, '06년 15%, '10년 20%
  - 국공립 이공계 대학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02. 2.27, 교육인적자원부)

- 근거법령(교육공무원법) 개정추진중(’02.12, 국무회의 심의)
- 과학기술계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소등 공공기관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도입·검토
- 채용목표제 도입·검토를 위해 기관별 여성연구인력 현황 및 최근 3년간  
채용실태조사 실시(’02. 3월 ~ ’02. 8월)
- 공공기관의 채용목표제 추진방안 시안작성 및 공공기관 관계자 의견수  
렴을 위한 회의개최(’02.12.17)
- 향후 ’02.12.17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보완하여 관계부처(지방자치단  
체포함) 및 공공기관과 협의·확정(’03, 상반기)

## 20) 科學文化擴散 및 靑少年 科學體驗活動 마련 : 565(07-38-27)

- 과학문화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체험활  
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02. 3. 4,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 TV 과학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
  - SBS TV의 “ 호기심 천국” 제작 지원( “종이의 힘” 등 총 45회)
  - 과학의 달 특집기획 SBS 모닝와이드 “과학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  
제작·방영 지원( “10억분의 1” 등 총 18편 방영)
  - YTN “웰컴 사이언스” 제작 지원(주 1회, 52편 방영)
  - KBS등 신규 TV과학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차인표의 블랙박스” 23편 방영 등
- 과학지원센터 (Science Shop) 운영 지원

- 과학지원센터의 표준모델 연구(카톨릭대, 이영희 교수)
- 전국 대학에 과학지원센터 설립 운영 장려 및 홍보 활동 전개
- 인터넷을 활용한 청소년 과학마인드 함양
  - 과학인터넷방송국 운영(사이버과학뉴스 등 6개 채널 운영)
  - 사이언스올 운영(초등, 중고등, 교사등 사용자별 채널 운영)
  - 사이버과학연구센터 운영(80여개 이상의 과학반 연구과제 지원 등)
  -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과학주제의 에듀테인먼트 게임 제작 등)
- 사이언스 앰버서더사업 추진 : 저명 과학기술자를 앰버서더로 위촉(97명)
- 청소년 과학 체험 활동 확산
  - 대한민국과학축전('02. 8.10~8.15,포항시), 가족과학축전('02. 4.21), 지역과학축전(7개 지역) 개최
  - 전국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개최('02. 9.15, 여의도 중학교)
  - 과학캠프 개최 및 과학교실 운영 지원(이공계 전공 및 진로 엑스포 등)

## 21) 中小企業研究施設 共同活用 方案 檢討 : 566(07-38-28)

-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여건이 어렵다면 협동으로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02. 3. 4,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서)
- 산업체의 수요에 기반한 첨단연구시설 공동활용 추진
    - Nano분야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Fab.센터 구축·운영
      - 사업기간 : '02~'10(1단계, '02 ~'04)
      - 총사업비 : 2,900억원(정부 1,180억원, 민간 1,720억원)
    - Bio분야 연구지원을 위해 차세대자기공명장치 설치·운영

- '02 ~ '04, 120억원('02년 30억원)
- 산·학·연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 대학과 정부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한 DB를 확충하고, 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 '95~계속, 총 지원사업비('02까지) : 435억원 ('02년 19억원)
- 산업기술연구조합 협동연구활동 활성화
  - 산업기술연구조합 진흥방안에 관한 관계전문가 회의개최('02. 5)등 활성화 방안 지속적 추진

## 22) 科學技術者 處遇 改善 : 604(07-70-65)

- 과학기술자 또는 과학기술 지원생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일등의 과학기술 입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02. 7.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초·중등 과학교육 정상화 추진
  - 과학영재교육 체계 구축
    - 과학영재학교 선정('02. 4 지정, '03. 3 개교) 및 과학고 지원강화('03. 96억원)
    -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교육원 전환('02. 9)
  -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 기본계획 확정('02.12.12) 및 사업공고('02.12.27)
  - 사이언스 엠버서더, 6개대학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지원('02. 7) 등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 확대
  - 이공계 대학 박람회 및 진로자료집 발간('02. 8)등 홍보 강화
- 이공계 대학 교육 내실화 추진
  - 「국가핵심기초연구센터」 설립 기본 계획 확정('02.12.27, 기초과학연구

사업심의위원회)

- 기초과학분야의 전략적 육성 및 과학기술 대분야간 학제적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적 핵심거점을 선정 지원
-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 마련('02.11)
- 사회진출 이후의 비전제시 및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 「젊은과학자 연구활동지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02.12.27,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정('02.11.12)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02.10), 「이달의 엔지니어상」('02. 3), 「올해의 Techno-CEO상」('02.12)신설
  -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기본계획 확정('02.11)

## 23) 海外 優秀科學者 招聘・活用與件 造成：612(07-38-30)

- 해외의 고급두뇌 유치 및 활용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초빙된 우수 과학기술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02.11.2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시)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유치・활용하여 국내 애로기술 해소 및 첨단 원천기술지식획득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처우방안 개선 등의 안정적인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원내용의 현실화와 활용기관의 처우개선 권

고 및 우대선정을 추진함

-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 : '94~계속)
  - 대상 : 박사학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외국인 과학기술자(교포포함)
  - 지원기간('03년 지원예산규모) : 3개월~2년 이내(6,306백만원)
  - 체재비(250~500만원/월), 항공료, 보험료, 이전비, 숙소지원 등 지원현실화
- 해외석학단기유치활용('03~계속)
  - 대상 : 해외 우수대학 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성과 보유자
  - 지원기간('03년 지원예산규모) : 3개월 이내(1,000백만원)
  - 자문료(\$15,000/\*월), 항공료 등 지원현실화
- 해외과학자장기채용('03~계속)
  - 대상 :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정규직 채용)
  - 지원기간('03년 지원예산규모) : 1년~4년 이내(6,306백만원)
  - 급여지원(연봉의 80%), 항공료, 초기정착비용 등 지원현실화
- 해외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수('03~계속)
  - 대상 : 석사 및 박사과정 해당 외국인(35세 미만)
  - 지원기간('03년 지원예산규모) : 석사 2년 이내, 박사 3년 이내(2,500백만원)
  - 체재비(석사 70만원/월, 박사 90만원/월) 등 지원현실화
-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용('03~계속)
  - 대상 : 현지 Lab 구성(현지인력활용) 및 파견
  - 지원기간('03년 지원예산규모) : 6개월~1년 이내(800백만원)
  - 현지 Lab 지원(\$3,000/월), 파견비(\$2,000/월, 항공료)



## 24) 經濟政策關聯 對外弘報 強化：48(08-70-03)

- 경제정책의 혼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관련기관간 협의 완료후 정책을 발표 토록 할 것('98. 4.28, 국무회의시)
-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바람 ('99. 3.16, 국무회의시 )

- 과학기술홍보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 홍보활성대책 수립시행 ('98. 6)
  - 정기적으로 주2회(화, 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정책 등을 발표 하고 기자들과의 토론등을 실시하여 오보등을 사전에 방지
  - 월성원전 중수누출과 관련하여 정부합동(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국정홍보처장, 한국전력공사사장)기자회견을 실시하여 원전관련 현안사항 및 종합점검 추진계획 등을 발표('99.10.20)
  - 보도자료 및 해설자료를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부출입기자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부 정책의 공개 및 투명한 홍보 실시

## 25)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強化：137(03-70-08)-①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발전방향 검토를 위한 기획단구성('98. 9~10)

- 기획단 : 과기부 실·국장급 간부 및 외부전문가(단장 : 과기부차관)
- 실무작업반 : 실·국 서기관급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실(STEPI)실무자
  - 단기·중기 과학기술정책방향 점검('99~'02)
  - 과학기술에 대응한 과학기술부 역할 재정립 및 발전전략 도출('98. 9~10)
- 과기부 단위별 업무분석 [실·국·과 기능분석('98.11)]
-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부처 경영진단('98.11)
  - 과기부 진단기관 : Arthur Andersen Korea/ 안진회계법인
  - 경영진단 결과 시안 발표회 및 공청회('99. 3. 8)
  -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및 정부제출('99. 3.11)
- 정부조직개편 및 후속조치
  -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 및 기능 재조정('98.10)
  - 정부조직개편 시안 마련('99. 3.11~3.15) : 기획예산위원회
  -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의결('99.3.23)
- 과학기술부 조직개편('99. 5.24)
  - 조직(3실 3국 7심의관 21과 9담당관 → 2실 4국 3심의관 21과 5담당관)
  - 인원 : 429명 → 402명(총 28명 감원 : 본부 19명, 국립중앙과학관 8명)
  -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00. 1. 1)
- 경영진단 진단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둠

## 26)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強化(氣象廳) : 137(03-70-08)-②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li> </ul> </li> <li>○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li> </ul> |
|--|
- 
-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98. 2)에 따라 기상청직제개정('98. 2)으로 3급 1인 및 기능직 15인 등 16인을 감축하고 지진·장기예보 전문인력 및 기상관측장비 도입운영 인력 등 20인을 증원
  - 기상부문의 장기비전 제시 및 조직의 최적화 방안 모색
    - 기상기술 및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추진('98. 9~'99. 5)
      - 최종보고서 발간·배포('99.10) : 관련기관 19개소 200부
    - 기상관측 및 서비스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추진('99.12~'00. 9)
      - 최종보고서 발간·배포('99.11) : 관련기관 85개소 400부
  - 경영진단기관 기상조직진단 수검(기획예산위원회 주관 /'98.10~'99. 2)
    - 경영진단결과 중앙부처 조직개편안 발표('99. 5/행정자치부)
      - 기상청 현행체제 유지(인원 증감없음)
    - 기상청 자체 정원 재배정('99. 6)
      - 정원동결에 따라 증원 시급부서 정원 자체 조정(슈퍼컴 운영인력 (+2), 지방청 예보인력 / 각 지방청 증원 1~2인)
  - 경비절감 등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인센티브 부여
    - Y2K 자체해결로 기책정된 예산(83,400천원)절약
    - “자동기상관측장치(AWS) 자료수집 전용회선”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 으로 전환 연간 약 1.4억원 예산절감(승진 인센티브 부여 : 6급→5급 1인)
- 지진관측망장비 구매시 설치비용 등 예산절감(354백만원)
  - 지진관측망 설치시 기상청 직원이 직접 설치로 예산절감(354백만원)
- 경비절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및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경비절감 및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둠

## 27)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 : 138(08-70-09)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격려하고 수해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
- 이재민 구호 및 제방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노력할 것('98. 8.17, 국무회의시)

- 장관 수해지역 방문·격려계획수립
  - '98. 8.14(금 15:30) / 군부대 (경기 벽제) 방문 격려
- 이재민 구호관련 공무원 수재의연금
  - 본부 및 소속기관 전직원 자율 참여 모금계획 수립  
(동아일보, '98. 8. 9 모금액 전달)
- 호우피해 조기수습관련 수해지역복구 자원봉사계획 수립
  - '98. 8.14(금), 10:00~17:00 / 의정부 호원동 중앙염색의 자재창고 토사 제거 등 실시
-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지역 주민돕기 지원
  - 수해복구 일손돕기 실시 / 2002. 9. 7, 충북 영동군 일원 / 40명
  - 전직원 성금 모금액 기탁 (5,000천원 중앙일보사)

〈기상청〉

- 수재민돕기 성금 기탁
  - 기상청 전직원(본청·소속기관) 8월분 본봉의 1% 공제, 언론기관 기탁
- 수해복구인력 지원
  -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지원(41명)

## 28)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뇌과학·뇌공학 공동연구 추진
  - 협력양해각서 체결('99.10. 6)
    - KAIST 뇌과학연구센터/일본 뇌과학연구소
    - 뇌 연구에 관한 공동 워크샵 개최 및 공동연구고제 발굴 등 합의
  - 한·일 뇌과학 공동 워크샵 개최('99.10. 4~5, 일본)
  - 뇌과학공동연구 시범과제 발굴 지원('99년 33백만원)
    - 인공망막칩을 이용한 능동시각센서 시스템(경북대/토요하시과학기술대)
  - 뇌과학 분야 공동연구과제 발굴 지원('00년 80백만원)
    - 효율적인 신호분리를 위한 독립요소기법의 개발 VLSI 구현 (KAIST/RIKEN)
- 제1회 「한·일 과학기술포럼」 개최
  - '99.11.24~26 / 신라호텔
  - 과학기술정책, 신에너지, 생명공학 등 3개 분과 개최
  - 제11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공동연구 제안과제 중 3개 우수연구 과제발굴 지원

- 제2회 한·일 과학기술포럼 개최
  - '00.10.24~26 / 동경 시나카와 호텔
  - 계몽, 우주과학, 해양·지구, 방재, 과학기술정책 등 5개 분과 개최
  - 포럼의 지속적 개최를 건의하는 대정부 협력제안서(Recommendations) 채택
- '98.10,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한 실천계획(Action Plan) “뇌과학 등 신규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검토”에 관한 합의 사항 달성

## 29) 컴퓨터 2000년문제 관련 : 164(07-70-15)

- 이번 APEC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 미국 고어 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부치 일본 수상도 Y2K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여 각국이 찬성하였음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Y2K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99.12.28, 국무회의시)

- 컴퓨터 2000년문제 비상계획수립('99. 2)
- 과학기술정보화 근로사업중 Y2K문제 지원인력을 선발하여 출연기관에 배정('99. 2)
- 원전 Y2K 모의시험 실시
-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수치일기분석시스템 등 일부시스템 시험운영완료('99. 3)
- Y2K문제 실무점검단 실무점검('99. 3)
- 「원전 Y2K평가단」 발대식('99. 4)

- 비정보시스템(항공기상관측장비, 해상기상관측장비)에 대한 문제해결('99. 5)
- 출연기관에 대한 Y2K 합동현장점검 실시('99. 8)
- 원전별(울진, 영광) 자체훈련 및 비상 대응교육 실시('99.10)
- 「원전안전 종합점검」의 일환으로 Y2K 현장실사 실시('99.11)
- 과학기술부문 Y2K 비상모의훈련 실시('99.11)
- 2000년 전환기간중 Y2K 비상대응('99.12.30 ~ '00. 1. 4)
- 윤년문제에 대한 Y2K대응방안 통보('02. 2월초) 및 Y2K비상근무  
( '00. 2.28~'02. 2.29)
- Y2K 문제해결 성공적 완수와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의 점검 성과가 있었음  
<기상청>
- 기상청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대책반 구성·운영('97. 7)
- 기상청 인트라넷상에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코너 운영('98. 6)
  - 문제의 정의, 지침, 영향평가 수범사례, 기상청 종합계획 등
- 기상청 2000년 표기문제 차관회의 제출('98. 7)
-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변환작업 및 시험운영·검증('99. 1~5)

### 30)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함.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 '99. 1.12, 국무회의시 )

- 간부회의 및 정례 직원조회시 인사공정성확보를 위한 현황파악 보고 및

### 추진 대책 지시(장관)

- 정례조회('99. 2. 1)시 장관지시
  - 차관 주관하에 직원고충 처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직장협의회 활동지원 및 직원 고충처리 강구
  - 직원인사 및 후생복지 증진 대책위원회 구성·운영('99. 2. 4)
  - 직원 고충처리 종합대책안 보고·시행('99. 2.20)
-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시행('99. 2.27)
- 5급 일반승진 인원협의 및 승진대상자 결정
  - 실적가점제도 운영지침('99. 4.23)('99.12월 근무성적 평정시부터 활용)
  - 승진대상자 협의('99.11. 6) : 10명(행정5, 전기2, 기계2, 화공1)
    - 직렬간 인원배분시 직렬별 대표자회의 개최 및 직급별 직원 의견수렴 실시로 공정성 확보

### <기상청>

- 승진심사시 심사위원을 각 국·실 골고루 안배하여 위촉
- 5급 승진시 지방기상청 등으로부터 승진후보자를 추천받아 승진에 반영('99. 1.14)
- 기상관련학과가 없는 호남·제주지역의 각 대학에 대기과학과 신설 건의
  - 전북대 등 24개 대학교에 공문 발송('99. 1.21)
- 전직원 개인별 근무희망지 조사·인사에 반영('99. 6. 1)
- 석·박사급 고급 기상인력 공개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특채('99. 6. 4)
  - 박사 7명, 석사 10명



### 31) 科學技術人力の 兵役惠澤 擴大 : 235(07-70-22)

- 과기부, 교육부 및 국방부는 상호협조하여 우수연구인력의 조기교육 및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9. 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벤처·중소기업 병역특례 연구기관 확대
  - ‘99년 : 918개 기관 943명 배정 → ‘00년 : 1,234개 기관 1,396명 배정 → ‘01년 : 2,116개 기관 1,751명 배정 → ‘02년 : 2,546개 기관 1,960명 배정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 동일법인내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완화 (2년→2년이하)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출원기간 연장 (졸업(학위취득)후 1개월 → 6개월)
  - 벤처기업으로의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완화(2년이후 → 상시)
- 전문연구요원제도 홍보기능 강화
  - 연2회 ‘병역특례 지원제도 종합설명회’ 개최 정례화 (1월, 6월) 및 필요시 추가 개최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홍보강화

### 32) 水害防止 綜合對策의 차질없는 推進 : 264 (08-70-25)-①

- 근본적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큰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수해방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99.12.28, 국무회의시)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00. 8. 1, 국무회의시 )
- 철저한 재해예방(‘00. 8. 1, 국무회의시 )

○ 추진개요

- 중점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 중 기상 및 지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수해방지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수행

○ 추진경과

- 2단계 1차년도 추진과제 7개 선정('00.8)

연구기간 및 연구비 : '00. 9. 1 ~ '01. 6.30 / 2,280 백만원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

※ 기상·지진 연구개발 과제(3개) 기상청 이관('01. 7)

- 2단계 2차년도 지질재해분야 추진과제 4개 선정('01. 7)

연구기간 및 연구비 : '01. 7. 1 ~ '02. 4.30 / 1,851 백만원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2단계 3차년도 지질재해분야 추진과제 4개 선정('02.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 '02. 5. 1 ~ '03. 4.30 / 2,180 백만원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따라 진도관리, 단계평가 등 실시

### 33) 水害防止綜合對策의 差跌 없는 推進(氣象廳) : 264(08-70-25)-②

-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큰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대비해 주기 바람('99.12.28, 국무회의시)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00. 3.21, 국무회의시)
- 철저한 재해예방('00. 8. 1, 국무회의시)
- 수해방지에 만전('01. 6.19, 국무회의시)
- 집중호우에 철저 대비('01. 7.16, 국무회의시)

- 악기상감시를 위한 기관신설('01.12) : 문산 등 4개 기관
-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 백령도('00. 7) · 진도('01. 7) 레이더 신설
-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 백령도('00. 7), 속초('01 .6) 고층기상관측망 신설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 동해중부 부이 신설('01. 5), 해양기상관측 등표 탑재 관측(2소)
  - 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 구축(북극렬비도)을 위한 환경조사('02. 3)
- 슈퍼컴을 활용한 독자 예보모델 개발 · 실용화
  - 전지구예보모델의 예측기간 확대 : 5일→10일로
  - 지역예보모델의 분해능 강화 및 물리과정 개선('99. 6)
    - 40km/L23 → 30km/L33
  - 태풍모델(BATS) 진로예측기간 연장(60시간→72시간)('01. 6.13)
  - 태풍예상도 작성 자동처리과정 개발 · 운영('02. 7)
  - 전지구 및 지역모델의 태풍진로 추적법 개선('02.10)
  - 엘리뇨/라니냐 감시 및 장기예측시스템 구축 : '00~'01년
  - 초단시간 강수특성 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 : '00~'02년

### 34)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2000년 정부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수혜계층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바람('99. 9.21, 국무회의시 )
-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분야별로 대국민 홍보시행
- 특히 중산층·서민을 위한 예산등은 수혜계층별 자료를 만들어 관련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99.10. 4, 국무회의시 )
- 올해 우리가 한일과 내년도 새천년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여 홍보('99.12. 7, 국무회의시 )

- 주요업무계획 홍보
  - 과기부장관이 SBS, K-TV, MBC, YTN 등에 출연하여 '00년도 주요업무 및 과학기술 장기발전방향 홍보실시
  - '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비전을 CD롬으로 제작·배포(2,500개)
  - '00년도 과학기술분야의 주요예산 및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 브로셔 제작·배포 : 1,000부
  - '00년도 과학기술관련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자간담회 개최(12.28)
- '99년말 및 '00년도 초에 '00년 정부예산(안) 및 주요 과학기술사업을 홍보하여 대국민 이해증진 노력에 기여하였음
- 〈기상청〉
- '00년도 예산 배정 및 주요업무계획 확정시 보도자료 배포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기상민원 실시('99.11. 9)
  - 제32회 태풍위원회 개최('99.11.22)

- 6시간 예고제 및 주간예보 확대 실시('99.12. 1)
- 겨울방학 사이버 기상교실 운영
- 새천년맞이 이벤트행사 홍보('99.12.31)
- '00년 기상청 예산 및 주요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00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 국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35)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8-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중점개혁과제 보고
  - 일시 및 장소 : '00. 2.16(수) 09:30~10:30/ 과학기술부 회의실
  - 참석자 : 대통령(주재),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과학기술부장·차관 및 간부, 민간자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관계비서관 등 37명
  - 보고내용
    - 21세기 선진국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사업
    - 격차해소·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 창조적 두뇌를 개발하는 과학기술
- 디지털경제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 '01. 2.16 업무보고시 반영하여 개혁방향을 제시하였음

### 36) 公正한 選舉 管理 : 332(08-70-34)

- 이번 총선이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패없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  
( '00. 3.21, 국무회의시 )
- 4.13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 및 공명선거 실현 협조 문서 발송
    - 선거일에 임박하여 예산집행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신중 대처토록 협조·지시(2.24, 국무총리지시 제4호 관련)
    - 공명선거를 위한 고위공직자 지방출장 자제 협조·지시(3.15, 국무총리지시 제11호 관련)
  - 12.19 대통령선거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 및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활동 전개
    - 전 직원 대상 공명선거 및 부정선거방지에 적극 노력 지시
    - 공명선거 홍보물 각 부서 배포 및 홍보포스터 게시

### 37) 國家研究開發事業의 內實化와 活用度 提高 : 351(07-70-35)

- 전 부처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00. 4.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시 )

-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00년 지원 실적 : 372억원
    - ※ 특정연구개발 예산집행실적(422,900백만원) 대비 중소기업지원비율 : 8.8%
  - '01년 지원 실적 : 455억원
    - ※ 특정연구개발 예산집행실적(517,500백만원) 대비 중소기업지원비율 : 8.8%
  - '02년 지원 실적 : 520억원
    - ※ 특정연구개발 예산집행실적(569,500백만원) 대비 중소기업지원비율 : 9.1%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예산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00년 지원 실적 : 11,314백만원
    - 중장기사업 30개과제 7,390백만원 / 실용화사업 21개과제 3,924백만원
  - '01년 지원 실적 : 9,819백만원
    - 중장기사업 19개과제 5,089백만원 / 실용화사업 25개과제 4,730백만원
  - '02년 지원 실적 : 10,695백만원
    - 중장기사업 18개과제 4,595백만원 / 실용화사업 25개과제 6,100백만원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활용
  - '00년도 사업(120억원) : 339개 기관에서 1,736명 활용
    - 이중, 168개 중소기업 지원
  - '01년도 사업(60억원) : 360개 기관에서 656명 활용
    - 이중, 270개 중소기업 지원
  - '02년도 사업(48억원) : 231개 기관에서 523명 활용

- 이중, 128개 중소기업 지원
- 「연구인력증계마당」 운영
-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상으로 구인·구직 알선을 지원('01. 9/ 서비스개시)

### 38)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하며,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장관들은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 '00년도 주요업무계획 관리지침 수립('00. 2.23)
  - 주요업무 과제별 카드화 작성 등 관리
  - 세부추진과제 추진 관리·점검 체계화
- '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00. 3. 6)
- 매월, 분기별 추진현황 관리 점검('00년 4월부터)
- 각 실·국 분기별 추진실적 월간 간부회의시 장·차관 보고
  - 2/4분기 추진실적 보고 : '00년 7월초
  - 3/4분기 추진실적 보고 : '00년 10월초
  - 4/4분기 추진실적 보고 : '00년 12월말



### 39)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 노사간 주요쟁점사항 파악 및 대책방안 강구(4회)
- 기타 노사동정 파악(6회)

### 40)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국민의정부 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 보직·승진 등 인사청탁 배제 및 성과에 입각한 인사평정 실시
  - 공정한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시행
    - 근무평정요소 및 배점방법,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마련('01. 6)
- 학연지연 현황 통계를 유지하여 예상되는 인사청탁 사전에 근절
  - 인사청탁 사전예방을 위한 학교별·지역별 통계 현황조사 실시('01. 3)
  - 인사운영기본계획수립('01.10)
- 다면평가제도 도입추진
  - 승진임용 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방안(案) 마련 ('02. 6)

- 「직장교육강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01. 6. 8)
  - '01. 5.21 장관님 지시에 따라 직장교육강화추진 8대과제를 선정 추진
- 인사고충 상담 창구 개방 및 수시 면담 실시, 인사청탁사례시 명단공개
- 인사운영 등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과장급 희망보직조사('01. 4)
  - 6급이하 직원전보시 의견수렴('01. 6/10)
  - 5급 일반승진 내정인원 선정관련 의견수렴('01.10)
- 공직경험과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상호 파견 실시
  - 한국과학기술원에 공무원 파견(국장급 1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직원을 과학기술정책자문관으로 임명(1명)
- 상하 수평간 의견 수렴 및 상호이해를 위한 통로개설
  - 5급전보시 개인적성을 고려하여 배치
  - 직원 연찬회를 통한 직원 교육 및 현안사항 해결
    - 6급이하 직원 연찬회 실시  
( '01. 6.29~30/경기도공무원수련원) ( '02. 6.28~29/경기양평염광연수원)
    - 5급이상 직원 연찬회 실시('01. 7. 6~7/경기도공무원수련원)
- 장관과의 대화 실시(2회)
  - '01. 9.21 / 10.25

#### 41) 國家的 重要技術의 開發計劃 樹立407(07-70-52)

- 우리 경제의 일류화에 필요한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전통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방안 마련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해 주기 바람
- 첨단 미래기술이 될 나노기술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00.12.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 범부처 차원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01. 7.18)
  - 국내·외 기술동향 및 경쟁력 분석결과와 나노기술(110개 분야)에 대한 기술별 중요성, 발전가능성, 기술수준 및 가용인력, 성장잠재력 등 정밀분석
  - 공청회 개최(5.28) 및 관계부처(11개)·기관 협의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나노종합발전계획 수립(2010년까지 총사업비 : 14,850억원)
  - 21세기초까지 나노기술선진 5대국 진입을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구축 등 3대 중점시책 추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확정)

# 文化觀光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54(06-39-01)  | 청소년의 달 행사 내실화             | 1998. 5. 6 |
| 59(03-39-02)  | 서비스업 관심제고(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관련) | 1998. 5.13 |
| 91(06-39-03)  | 구조조정 노력 강화                | 1998. 7. 2 |
| 94(06-39-05)  | 일본대중문화 개방 준비              | 1998. 7. 2 |
| 95(06-39-06)  | 전통문화 중시                   | 1998. 7. 2 |
| 96(06-39-07)  | 오락성 유희문화 개발               | 1998. 7. 2 |
| 97(06-39-08)  | 영화산업 육성                   | 1998. 7. 2 |
| 98(06-39-09)  | 남북 문화교류 준비                | 1998. 7. 2 |
| 168(06-39-10) |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8.12. 4 |
| 184(06-39-11) | 한자병용 추진                   | 1999. 2. 9 |
| 187(06-39-12) | 복사본 교재 사용 근절              | 1999. 2. 9 |
| 199(06-39-13) | 금강산 관광상품 개발               | 1999. 3.22 |
| 200(06-39-14) | 문화중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 1999. 3.22 |
| 256(06-37-15) | 대형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활용       | 1999. 7.13 |
| 283(06-39-16) | 경북관광공사 설립 추진              | 1999.10. 4 |
| 303(06-39-17) | 지방문화원의 지역청소년 정보화교육 지원     | 2000. 1.24 |
| 307(06-39-18) | 도서관 정보화 추진                | 2000. 2. 1 |
| 341(06-39-19) | 문화·관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 2000. 3.28 |
| 357(06-39-20) | 저작권 보호 강화                 | 2000. 5. 1 |
| 358(06-39-21) | 순수문화예술의 간접지원 방안 강구        | 2000. 5. 1 |
| 359(06-39-22) | 특성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 2000. 5. 1 |
| 360(06-39-23) | 체육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            | 2000. 5. 1 |
| 361(06-39-24) | 골프대중화 추진                  | 2000. 5. 1 |
| 369(06-39-25) | 풍남토성유적 보존대책 추진            | 2000. 5.16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79(06-39-26) | 관광수지 개선대책 마련             | 2000. 7.19 |
| 380(06-39-27) | 남북관광협력 방안 마련             | 2000. 7.19 |
| 381(06-39-28) | 관광개발사업 철저                | 2000. 7.19 |
| 479(06-39-29) | 문예진흥원 재원확충 및 효율적 운영      | 2001. 2.14 |
| 480(06-39-30) |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본격추진          | 2001. 2.14 |
| 482(06-39-32)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 2001. 2.14 |
| 532(06-39-35) |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로 | 2001. 7.31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관련 대외(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부처의 경비절감 노력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183(09-70-17) | 설 연휴대책 - 설문화 개발 및 소개     | 1999. 2. 2 |
| 198(06-70-20) | 국가이미지 개선 강화              | 1999. 3.22 |
| 264(08-70-25) | 해빙기 대형사고 및 수해예방          | 1999. 8. 3 |
| 276(08-70-27) |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2000년 예산(안) 홍보 추진        | 1999. 9.21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611(05-70-67) |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 2002.11. 5 |

※ 525(06-70-58) 「2002년 월드컵 준비철저(’01. 5.29)」는 문화관광부만 국정과제로 별도 관리

## 1) 靑少年의 달 行事 內實化 : 54(06-39-0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달 행사는 형식적, 의례적 행사로 그치지 말고 효율성 있게 하되,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많이 거행할 것<br/>(’98. 5. 6, 국무회의시)</li> </ul> |
|---|
- 청소년의 달 사업추진 계획보고(국무회의/’98. 5. 4)
  - 청소년의 달 기념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한 행사 홍보(25,000부/각급 교육청, 각 지방경찰청, 중앙행정기관, 청소년관련단체 등/’98. 4.22)
  - 다양한 청소년 관련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개최(’98. 5)
    - 청소년대학로축제(대학로/홍사단/5. 2~5. 3)
    - 청소년글짓기·미술·서예대회(올림픽공원/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5. 5~15)
    - 청소년가족캠프(서울중앙훈련원 외 7개지역/한국스카우트연맹/ 5. 9~5.31)
    - 성년의 날행사(한국의 집/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18)
    - 통일기원나라사랑대행진(문산~임진각/한국청소년연맹/ 5.24)
    - 청소년한강축제(한강시민공원/한국해양소년단연맹/ 5.24)
    - 청소년예술큰잔치(수원실내체육관/한국걸스카우트연맹/ 5.31)
    - 기타 각종행사 개최(청소년공연예술제 등 567회)
  - 청소년관련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청소년문제연구세미나 등 109회/ ’98. 5)
  - 장한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포상·격려(67명/ ’98. 5.20)

## 2) 國民과의 對話 後屬措置 관련 : 59(03-39-02)

- 실업자 문제해결과 관련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 많아 산자부 못지 않게 국가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점에 특히 힘써주기 바람('98. 5.13, 국무회의시)

-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 법령 정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령('99. 5.2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령 제정('99. 2. 8), 통합방송법 제정('99.12.28),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99. 6.30), 관광진흥법 개정('99. 1.21), 공연법 개정('99. 2. 8) 등
  - 제도정비 및 개선 :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99. 8.20), 영화진흥위원회('99. 5.28), 영상물등급위원회('99. 6. 7) 구성, 영화, 음반,게임물을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문화산업 특수 분류 제정, 독립제작사 의무 외주제작비율 확대고시<'98(14%)→'02(28%)>, 지상파TV 국산만화영화 의무편성비율 확대 지상파 방송사업자(45%) 등
- ※ 문화산업관련 법령상 총규제의 72.8% 폐지 또는 개선(136건 중 99건),
  - 세제개선 : 방송용기자재(15%), 게임기기(30%)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 등
-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 외국인의 정기간행물 투자참여 확대(외국인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TV·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지분참여 33%까지 확대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지원대상에 관광산업 포함('98.11.14)

- 외국인 국내공연「국가허가제」를 「민간추천제」(영등위)로 전환('99. 5.10)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 추진('00. 1)
- 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제회의 유치·지원('98~'02, 398건 유치)
  - 전문컨벤션 3개소 건립(서울, 부산, 대구) 및 3개소 건립중(제주, 광주, 고양)
- 국제문화 관광축제 개발 지원('98~'02, 123개 축제개발 63억원)

### 3) 構造調整 努力強化 : 91(06-39-03)

- 산하기관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민영화 전이라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
  - 동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출연연구기관(1) : 청소년개발원
  - 총리실 산하「통합이사회」방식으로 개편·이관('99. 1월 완료)
- 공기업(10)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매일신문 등
  - 한국관광공사 : 골프장·호텔 등의 자산매각 및 팀제 강화 등('02) 추진 완료
- 출연·위탁기관(32)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과학연구원 흡수·통합, '99년까지 한시적 기금징수, 스포츠TV(주) 매각 등 추진 완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기금모금 한시화(4,500억원까지), 관광연구원과 통합('02) 등
  - 한국방송광고공사 : 남한강수련원 민간위탁 또는 매각, 경쟁체제 전환('00) 및 업무권한 하부 위임('02) 등 완료



- 언론회관 · 언론연구원 · 언론인금고 : 「한국언론재단」으로 통합('98.12)
- 한국방송개발원 · 한국방송회관 : 「한국방송진흥원」으로 통합('98.12)
- 국고보조단체(40) :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등
  - 조직정비 및 인력감축 등 계획대로 추진
  - '99국고보조금 예산편성과 연계 추진(완료)
  - ※ 전산화단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등 완료('02)

#### 4) 日本大衆文化 開放 準備 : 94(06-39-05)

- 일본대중문화 개방문제는 금년 하반기 일본 방문시까지 방침을 정하기 바람('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 : 지명관 위원장 등 22명('98. 5.13)
    - 회의개최 : 전체회의 7회, 운영위원회 10회
    - 한일문화 심포지엄 개최 : '98. 9.18 / 서울 프레스센터
      - 주제 :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한일관계
  - 일본대중문화 유통실태 및 개방에 따른 과급효과 분석('98. 8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일본대중문화 개방방침 발표
    - < 1차 개방('98.10.20) >
      - 영화 및 비디오부문 :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 한일공동제작 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배우 출연허용 등
      - 출판부문 :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
    - < 2차 개방('99. 9.10) >

- 영화 및 비디오 부문 :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 전체관람가 영화
- 공연부문 : 2000석 이하규모 실내장소에서의 일본대중가요 공연 허용  
< 3차 개방('00. 6. 7) >
- 영화부문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 영화까지 추가 개방
-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 :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를 포함한 각종 국제  
영화제 수상작
- 대중가요 공연부문 : 실내외 구분 없이 전면개방
- 게임부문 :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
- 방송부문 :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등
-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01. 7.12 확정발표)
-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자문단」 연석회의('01. 7.12)를 거쳐 정부방침  
으로 결정

## 5) 傳統文化 重視 : 95(06-39-06)

- 학교에서는 서양예술만 가르치고, 대학 국악과 졸업생 등 전통예술  
전공자는 취직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통문화 소외는 잘  
못된 것임
- 전통문화는 국민의 근본적인 정신문제이므로 이 같은 소외현상은  
시정되어야 함
- 전문가 및 교육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학교음악교과과정 개편 추진(교육인적자원부 협조)

- 제7차 교육과정('00. 1. 1)에 국악비율 상향 반영(15~20% ⇒ 30~40%)
- 제8차 교육과정 개편시 50%이상 확대 예정
- 음악교사 국악연수 실시('98~ )
  - 초·중등학교 음악교사 6,300여명 국악강좌 교육 실시
- 국악강사풀제 사업 시행('02~ )
  - 전국 초·중·고 2,324개교에 국악전공 강사 파견, 국악이론 및 실기 지도
- 전통예술모범학교 선정 및 지원('99~ )
  -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500만원 내외) 총 76개교 지원
-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실시('98 ~ '01)
  - 청소년 대상 전통문화예술 현장교육(총 6,194회)

## 6) 娛樂性 遊戲文化 開發 : 96(06-39-07)

-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퇴근이나 방과후에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희 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바둑·장기, 종이접기 등 민속전통 놀이문화 개발 보급('98~)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98~)
    - 국악, 클래식, 연극, 인형극, 뮤지컬, 영화 등
  - 건전놀이문화 개발에 민간참여 적극유도('98)
  - 가족단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01~)
  - 설·추석계기 민속놀이 활성화 유도('00~)
    - 21개 사적지(고궁, 능원 등), 국립박물관, 미술관 무휴개방 및 한복 착용자 입장료 면제
  - 전통연희극 개발 지원('99~)

- 일식(연희단 거리패) 등 11개 작품
-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 및 시상
  - 이달의 우수게임 매월 1편 선정('97. 2~'01.12, 62편), 2002년 22편 선정
-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98~'02, 대상 : 5편, 우수상 : 19편 등)
- 우수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 제작·지원
  - '99년 36편(5.7억지원), '00년 4회 40편(6억4천), '01년 4회 41편(7억1천만원), '02년 3회 44편(7억2천만원)
- 게임제공업소를 지역문화공간으로 육성
  - 멀티게임장 육성방안 수립('99.10), 게임물 사후관리 점검체계 계획수립('99.10)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99. 2. 8)
  - 게임장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종합게임장' 및 'PC/인터넷 게임방' 근거 마련
- 게임제공업소 바닥면적 기준 제한(500㎡) 폐지 : 건축법시행령 개정('99. 4.30)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법률전문 개정('01. 5.24 공포, 9.25 시행)
  - 청소년게임장 도입을 통한 건전공간화, PC방 등록을 신고제를 거쳐 자유업종으로 전환 등 규제완화

## 7) 映畫産業 育成 : 97(06-39-08)

- 우리영화도 흥행성 있는 세계적인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종합영상지원센터 조성
  -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지속추진 : '97~'00(139억원 투자), '01~'05

(350억원 투자예정)

- 애니메이션기술지원센터 조성('97~'00, 80억원), 영상체험교육센터 조성('97~'99, 54억원), 영상교육원(춘사관) 건립추진('00. 9~'02. 7, 70억원)
- 서울영상벤처센터 조성('98. 9.17, 90억원)
- 영상전문투자조합 설립
  - 벤처영상투자조합 등 7개조합('00, 영화진흥금고 100억원 출자), 무한기술창투 등 3개조합('01, 영화진흥금고 57억원 출자)
- 영화진흥금고 1,700억원 조성('94~'03) : '02.12 현재 1,470억원 조성
- 영상전문인력 양성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84. 3.10~/연36명, 4학기제 운영), 애니메이션예술아카데미 운영('99. 3 ~/연24명, 4학기제 운영), 영화, 애니메이션아카데미 통합 교육공간 확보('01. 9월) 등
- 해외영화제 참가 및 출품 및 해외 마케팅 참가 지원
  - 제53회 칸느영화제 등 총 138개처 124편 374회 출품('00년), 제51회 베를린영화제 등 96개처 176편 431회 출품('01년), 끌레르몽 페랑, MIFED등 참가 지원('01년), 칸느, 베를린, 밀라노 견본시 홍콩 필름마트 등 참가지원('02년)
  - 2002년 제55회 칸트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최우수감독상 수상, 제5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로 최우수감독상, 문소리가 신인여배우상 수상
- 국내 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02. 7월/5억원) : 38개국 172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02.11월/10억원) : 57개국 26편 상영, 전주국제영화제('02. 4월/5억원) : 32개국 266편 상영, 서울여성영화제('02. 4, 3억원) : 21개국 80편 상영

## 8) 南北 文化交流 準備 : 98(06-39-09)

- 안보와 햇볕정책은 표리관계임. 안보는 국방부가 햇볕정책은 문화관광부가 앞장서서 준비해 주기 바람
  -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경제와 문화교류는 협력적임
  - 확고한 안보태세 하에서 교류를 확대하면 북한은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반기에는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8. 7. 2,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남북정상회담 이후 긴장완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세가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주기 바람(’00. 9. 4, 국무회의시)

- 남북 문화교류 학술 연구
  - 북한자료 383권 구입(9,221천원)
- 남북 문화교류 기반조성 사업
  - ‘남북통합문화관’ 인터넷 서비스 개시(’99.10)
- 남북문화·체육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00. 7.25)
-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 남북문화장관 회담 개최(’01. 3.10~3.14)
  - 남북체육 교류(’01. 6.19~22)
  - 금강산관광 활성화 모색(’01. 7.20~22)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총 660명, ’02. 9.29~10.14)
    - 선수단 305명 : 북측항공기 이용, 직항로 이동(’02. 9.23, 27 2회)
    - 응원단 355명 : 만경봉 - 92호, 원산 ↔ 부산 이동(9.28)
  - 2002, 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02. 9. 7, 상암경기장)

- 남북태권도 시범단 교환 시연

- 남측 시범단 : '02. 9.14~17(평양), 북측 시범단 : '02.10.23~26(서울)

## 9) 知識基盤産業 發展對策의 차질없는 추진 : 168(06-39-10)

- 우리의 전통문화산업도 지식산업화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하며, 문화·관광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인식하여 발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98.12. 4,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분야 집중지원체제 구축>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 총 168건의 규제를 2000년까지 70% 정비('99. 9월 현재 총 규제의 59% 폐지·개선)
  - 방송영상산업의 경쟁체제 조기구축 :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참여폭 확대 등
- 5대 전략분야 선정 집중지원(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방송)
  - 문화산업부문의 벤처기업 대상 업종 확대
  - 세제지원 등 문화산업 투자유인책 강화
    -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 문화상품권 구입시 접대비 인정 등

### <문화산업 추진기반 구축>

- 문화산업 기반시설 조기구축('03년까지 완료)
  -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애니메이션 지원센터내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개원('99. 3), (재)게임종합 지원센터 개소('99. 7), 춘천만화이미지정보센터 설립 공사 중('99.12)
-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및 재원조성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령」 제정 완료('99. 7.20)
-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 10) 漢字並用 推進 : 184(06-39-11)

- 한자병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젊은 세대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한자혼용 문제는 신중하게 연구·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99. 2. 9, 국무회의시)
- 한해 45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여 행자부, 문화부 등은 간판과 표시판에 한자와 영문을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99. 2. 9, 국무회의시)
- 한자문화권 외국관광객을 위해 각종 안내판에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99.10.22, 국무회의 시)
- 관광지도와 도로표지판 등도 외국인이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 방법을 점검해야 할 것임('99.11. 8, 관광진흥확대회의시)

- 정부 공문서 한자병기
  - 사무관리규정 개정 공포·시행('99. 8. 7, 대통령령 제16521호)
- 도로표지 한자병기
  - 도로표지규칙 한자병기 확대 발표(건설교통부, '99. 6.26)
  - 고속도로 IC 4개소와 일반국도 4개 시범지역에 한자병기 안내표지판 132개 설치('99. 8.31)
  - 도로표지규칙 개정(건설교통부, '00. 3.18)
  - 주요 관광지 주변 한자병기 「관광지표지판」 설치(전국 333개 관광지, 1,504개 표지판)



- 한문교육용기초한자(1,800) 재조정(교육부 협조)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재조정안 교육부에 통보('99. 6.24)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재조정 추진계획 발표(교육부, '99. 8.11, )
  -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조정·공표(교육부, '00.12.30, 1,800자)
- 도로표지 한자병기 추진
  - 도로표지구칙 한자병기 확대 발표(건설교통부, '99. 6.26)
  - 도로표지구칙 개정( 1차 : '00. 3.13, 2차 : '02. 1. 7)
  - 주요 관광지 주변 한자병기 관광지표지판 설치('02.12, 2,763개 설치)

## 11) 複寫絀 教材 使用 根絶 : 187(06-39-12)

- 대학이 불법 복제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출판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99. 2. 9, 국무회의시)

- 불법복제 단속강화(검·경 협조)
  - 경찰청, 각 지방청의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강화('99. 2/ '00. 3), 검찰청 및 일선 지청의 지적재산권 단속 강화('99. 4/ '00. 4), 지적재산권침해사범단속 실무대책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99. 4), 대한출판문화협회 상설단속반 운영('00 : 적발 1,248건, 고소 87건), 불량·불법출판물(복제물) 합동단속 실시('02. 5.16~19, 우리부, 서울시경, 출판문화협회 등 10개 기관)
  - 대학가 불법복제출판물 단속 실시
    - 신학기(3, 9월)를 중점으로 문화관광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합동으로 대학가 내외

복사업체 일제단속 실시 및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상시 단속 지원  
(’02년 실적 : 불법복제도서 1,735종 , 5,634부 수거)

- 불법복제의 위법성 홍보 및 계도 활동
  - 도서불법복제 대책관련 포럼 개최(’99. 3), 불법 복사·복제 신고센터 스티커 제작 배포(’99. 3/5,000매), 「도서불법복사 복제실태와 근절대책」 자료집 발간 배포(’02. 4월/4,500부),
- 저작권법 개정(’99.12)
  -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 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게 함(대학가 상업적 복사점), 저작권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된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집 제작·배포(’00.10. 3만부, 전국복사업소, 경찰서 등)
- 불법복사·복제근절대책사업비 지원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02, 10월 일천만원)
- 단속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출판및인쇄진흥법 공포 ’02. 8.26)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불법복제출판물 수거·폐기 근거 조항 반영
  - ’03.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

## 12) 金剛山 觀光商品 開發 : 199(06-39-1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경주, 부여, 제주도 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선상 상품개발 및 우리문화와 자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선상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br/>(‘99. 3.22, 문화관광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li> <li>○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br/>(‘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li> </ul> |
|---|
- 
-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 및 연계상품 개발 협의회 개최(‘99. 4)
  - 외래 관광객(‘99.10), 일본 및 교포(‘00.10) 금강산 관광 허용
  - 일본 언론인, 민단관계자 등 금강산 관광상품 개발 답사(‘01.10)
  - 해외언론인 및 여행업자 금강산 연계관광 상품 취재지원(‘01.11 ; 영국 / ‘02. 5~12 ; 일본, 독일, 영국 ; 4회)
  - 해외지사 남북 연계 관광상품 개발(‘00년 26건, ‘01년 7건, ‘02년 5건)
  - 금강산 관광 브로슈어(영, 일, 중간·번) 발간 및 배포(‘01.12~‘02. 9)
  - 금강산 관광 CNN광고(‘02. 6.24, 29 ; 2회)
  - 금강산 외국인관광객용 특별상품 개발 : 관광요금 15% 할인 및 우선 예약 편의제공(‘02. 6. 1~12.31)
  - 금강산내 관광이벤트 활성화 지원(‘02. 2~11 ; 3회)
  -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02.11.13) 및 육로관광 임시도로 완공(‘02.12)

### 13) 文化從事者들에 대한 支援 強化 : 200(06-39-14)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문화 종사자들이 어려움 없이 창조적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 문화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문화예술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예산도 이러한 측면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99. 3.22, 문화관광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법률·제도상의 규제 완화 및 개선
  -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회('99. 5 / '00. 3 / '02. 9)
  - 예술행사 부가세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개정 '99.12)
  - 라이브클럽 합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99.11)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0. 4) 및 자격증 발급('02.12월 현재 601명)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문화관광부 7개, 시·도 108개)
-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 문학창작분야('99~'02, 85억원)
  - 미술창작분야('99~'02, 73억원)
  - 공연예술창작분야('99~'02, 242억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2,065작품), 무대공연장 임대지원(2개소), 대중음악공연장 건립(올림픽홀), 무대용품공동보관소 건립, 대학로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6개소)
  - 전통예술분야('99~'02, 403억원)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전승(공연활동, 경연대회, 전통연희작품 지원 등)

- 전통예술의 보급(우리문화한아름교육, 국악강사풀제 등)
- 전통문화 인프라구축(지방국악원 건립지원, 전통체험마을 조성 등)

#### 14) 大型施設의 徹底한 事後管理 및 活用 : 256(06-37-15)

- 독립기념관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각종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전시물들도 문제가 생기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시설들이 일회성 행사용이 아니라 계속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함
- 특히, 지금 건설중인 월드컵 경기장도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개최 후에도 잘 유지·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관광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기 바람('99. 7.13, 국무회의시)
- 월드컵 개최이후 경기장 활용방안을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람('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 독립기념관 관리·운영 개선 및 활용도 제고 >

- 관람객 위주의 관람여건 개선 및 운영
  - 일요상설 공연마당 개설(성수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01. 4.30)
- 전 전시관(1~7관) 다국어 병기 및 제6전시관 재개관('01. 6.20) 등 전시기법 개선
-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의 추진(정원감축 : 120명('99년) → 89명('00년), 기구조정 : 7부 1연구소 → 2실 4부 1연구소)
-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복원('01.12.19 기념식 개최)

##### <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

- 경기장에 수익시설 설치 및 유치 위한 월드컵경기장 건설관련 법적규제 해소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98. 7)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00. 8)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00.10) 등
- 월드컵경기장 활용도 제고대책 추진
  - 경기장 사후활용 자문단 구성·운영('00. 6)
  - 일본 요코하마경기장 활용현황 조사보고서 발간·배포('01. 2)
  - 월드컵경기장 활용 제고를 위한 개최도시 합동 워크숍 개최('02. 8)
  - 월드컵경기장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 통보('02.11)
  - 서울·인천·대구 등 프로구단 창단 추진
  - ※ 대구FC 창단('02.10.16) 및 2003년도 K리그 참가 예정

## 15) 慶北觀光公社 設立推進: 283(06-39-16)

- 경북을 한국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해 경주관광개발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경주의 불교문화권과 함께 개발('99.10. 4, 국무회의시)
-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 계획 수립('99. 7.24)
  -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계획 변경 요청  
(기획예산처 : '99. 7.24)
  -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계획 변경 재요청(기획예산처 : '99.10. 5)
  - 한국관광공사 경영혁신계획 변경 통보('99.10. 5)
  -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 완료('99.10. 6, 주주총회 의결)
    -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및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 수행

## 16) 地方文化院의 地域靑少年情報化 教育支援 : 303(06-39-17)

- 지방의 어려운 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문화원에 컴퓨터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00. 1.24, 전국문화원장 오찬간담회시)
- 지방문화원 시범 정보화 교육센터설치
  -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지원사업 선정시 지방문화원(2개원) 포함
  - 지방문화원 정보화교육 지원
    - 586급 PC 40대 지원(지방문화원 2개소 각 20대)
    - 교육용 기초교재 200여권 지원
- 지방문화원 컴퓨터 보급
  - '00년 지방문화원 컴퓨터 보급 국고지원(52백만원, 52개 지방문화원)
  - '01년 지방문화원 컴퓨터 보급 국고지원(26백만원, 26개 지방문화원)
- 정보통신부 정보화교육 사업시 문화원 회원(지역주민) 우선선정
  - 우체국 '정보교육센터'내 문화원 회원대상 특별반 구성운영
  - 주부인터넷 교실에 지방문화원 회원 우선 선정

## 17) 圖書館 情報化 推進 : 307(06-39-18)

- 우리가 지식정보를 지향하는데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정보화시대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디지털자료 전용공간 조성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1차년도 144관구축)
    - \* '03년 상반기까지 2차년도 200여개 도서관 구축 진행중
  -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
    - 시범학교(96개교) 설치('01. 7~12)
    - '02년도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02. 3~12, 123개교)
- 도서관 소장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 국가자료 디지털콘텐츠 확충('00~'02)
    - 종합목록 DB 400만건, 목차정보 DB 75만책, 원문정보 DB 19.8만책
  - 대학도서관 목록DB 및 통합시스템 구축
    - 227개 대학, 목록DB 404만종 구축('01~'02)
- 디지털자료의 공유 활용
  -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Ⅱ) 178개 도서관 보급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개발 및 서비스('01. 6)
- 디지털시대 도서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01. 3~6, KDI)
    - 건립기본계획 수립('02)
-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확충('01~'02)
  - 공공도서관 사서 정보화교육 실시(41회 1,660명)



## 18) 文化・觀光産業分野 中小・벤처企業 育成 : 341(06-39-19)

-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문화・영상산업과 관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중기특위와 관계기관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육성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00. 3.28, 중소기업특위 업무보고시)
- 관광분야 벤처기업 육성
  - 관광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00. 4)
  - 우수벤처기업 발굴・포상('00. 9.29)
  -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한국관광연구원 포함('01. 4) 및 평가 실시
  - 벤처기업 증명서 발급요건 완화(매출 증가율 300%→100%)
  - 관광분야 벤처기업 증명서 발급(48건, '02.12월 현재)
- 관광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00~'04)
  - 「새천년관광국민투자조합」('99년 설립)을 통해 관광분야 벤처 창업자금 지원('02.12월 현재 6개 업체 31억원 투자)
-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예정('03년 : 10억원)

## 19) 著作權 保護 強化 : 357(06-39-20)

- 문화예술작품의 불법사용은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창작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임('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무단복사를 방지하고 전자도서관의 전송관련 권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복사전송권 관리센터 설립
  -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법인설립허가('00. 7.10)

- 신탁관리업 허가('00.11.14)
- 2001년도 센터운영 : 단속(2,149종, 5,233부), 계약(복사기 779대)
- 2002년도 센터운영 : 단속(2,525종, 5,634부), 계약(복사기 1,049대)
- 저작권 이용에 관련된 권리정보 DB를 구축하여 이를 온라인상에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불법이용방지 및 합법적 이용을 활성화
  - 저작권 관리정보 DB, 저작물 DB 구축 및 인터넷상 제공
  - 저작권 관리단체 네트워크 구축(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5개 단체)
- 저작권온라인등록 시스템 개발('04년부터 서비스 실시)
  - 민원인이 방문 처리하던 등록신청, 첨부서류제출, 보완,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체제 구현
  - 2단계 사업 완료(사업기간 : '01~'03년) : 온라인 저작권 등록신청프로그램 개발, 기등록된 데이터 통합 등
-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불법복제 단속 지속적 추진
  - 상설단속반 확대('00. 1) : 12인 → 30인
  - 문화관광부 상설단속반 단속 실적('01년도 : 9,323건 / 1,412,566점, '02년도 : 8,644건 / 895,924점)
- 국민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연수·홍보 강화
  - 저작권 국제세미나 개최
    - 「디지털기술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영향」('01.10.29~30)
    - 「WIPO 저작권조약(WCT)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상의 공중전달권의 내용 및 그 제한과 예외」('02. 4.25~26)
  - 제1회 세계지적재산권의날기념 강연회 개최('01. 4.26)
  - 저작권문화학교 운영('01년 1회 60명 수료, '02년 2회 91명 수료)
  - 「생활속의 저작권」 책자 발간·배포(1,500부 배포 / 1,000부 유가판매)

## 20) 純粹文化藝術의 間接支援方案 講究 : 358(06-39-21)

-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순수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기업체가 스스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고,
- 정부는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간접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서)

- 순수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 문예진흥법·시행령, 조세제한특별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 도입 추진('02.12월 현재 115개 지정)
    - 문화지구의 도입 활성화에 위한 금지·제한업종 규정('02. 4.24, 서울시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 문화예술창작 인프라 확충('00~'02)
    - 예술창작스튜디오(15개), 창동 미술스튜디오, 조각공원(21개), 지역문학관(6개), 대중음악공연장(올림픽홀), 무대용품공동보관소, 국립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 유망미술작가 발굴·전시 지원을 위한 인사미술공간, 비영리갤러리 지원
    - 무대공연장 임대지원(2개소), 대학로 공연시설 개선지원(6개소), 무대시설안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 순수예술의 획기적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발표('02.10.30)
- 순수문화예술 수요확충·참여확대를 통한 활성화 지원
  - 열린미술마당(40회), 전국문학강좌·문학캠프(435회), 사랑티켓 확대(10억→22억) 등 순수문화예술 수요 확충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문화예술단체의 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15개 국립기관, 산하단체 및 142개 민간예술단체 참여

- 총 9,122회 운영(공연 5,376회, 강습 2,270회, 전시 1,035회, 이동문고 등 441회)
-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등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활동 활성화 유도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문예진흥법 제10조, '00. 1.12)
  - 기부금 손금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시행규칙, '01. 3.28) 등

## 21) 特性있는 觀光紀念品 開發 : 359(06-39-22)

-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특성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등 외래관광객들이 상품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매년 개최('98년부터 계속)
    - 2002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COEX, '02. 9. 6~9)
      - 시·도 예선전 개최 및 본선 공모전 개최로 우수관광기념품 발굴·육성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업체 저리용자 지원('99부터 계속)
    -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시·도 예선전 및 본선입상업체 대상 저리용자 지원('00년 : 105개 업체, 26억원, '01년 : 87개 업체, 29억원, '02년 : 102개 업체, 30억원)
  - 우수관광기념품 판로확보를 위한 전문판매장 개설 확충('99부터 계속)
    - 한국관광명품점('99), 한국의집문화상품관('00), 한국관광명품점 인사동 지점('01) 및 관훈동 지점('02) 개설·운영중

## 22) 體育施設 및 專門人力 養成 : 360(06-39-23)

- 체육시설 운영 및 마케팅 전문인력 적극양성  
(’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 수립(’00. 8. 2)
- 전국 시·군·구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96명 특별교육 실시(’00.12)
  - 교육내용 : 월드컵경기장 및 시설활용계획, 스포츠시설관리, 스포츠경영마케팅 등
-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의뢰 : ’00.12월 ~ ’01. 4월)
  - 연구사항 : 다양한 체육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정책, 체육시설 건립과 기존시설 활용방안, 체육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기타 관련법 및 제도 등
- 체육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01. 6월)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 94명(공무원 75명, 민간인 19명) 전문교육 실시(’01.11)
  - 교육내용 : 스포츠시설 관리론, 스포츠경영학, 체육시설법론, 안전관리론 등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공청회 등 교육기반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제도 도입에 따른 공청회 개최(’02. 7월)
  - 교육과정 개발(3건) 및 교재개발(스포츠마케터 등 19과목)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스포츠마케터 실무과정(’02.10월, 40명)
  -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실무과정(’02.11월, 30명)
  -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과정(’02.12월, 38명)

## 23) 골프大衆化 推進 : 361(06-39-24)

-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퍼블릭코스 건설확충('00. 5. 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대중골프장조성비를 활용한 대중골프장 건설 확충
  -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손관광지내 9홀 대중골프장 건설추진
    - 약 135천평, 약 220억원 투자, 건축공사 추진중, '03. 6월 준공계획
  - 경기도 파주시 지역에 18홀 대중골프장 건설추진
    - 약 300천평, 약 565억원 투자, 부지매입 완료, 인·허가업무 추진중
  - ※ 경기도 여주 대중골프장 조성완료(약 299천평, 512억원 투자, '00. 6. 3 개장)
- 난지도 9홀규모 공공형 대중골프장 조성추진(국민체육진흥공단)
  - 약 67천평, 109억원 투자, 교통영향평가 완료·환경성 검토 추진중
-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공원내 퍼블릭코스 조성 유도 및 지원(제주, 진주, 각 1개소)
- 골프장 확충기반 조성을 위한 입지여건 완화 등 제도개선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00. 7. 1)시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설치 허용 협의 반영
  - 골프장 시·군·구별 총량제한 완화 관계부처(환경부) 협의중
    - 시·군·구기준 회원제골프장 면적은 총 임야면적의 3%초과 금지  
→ 4~5% 상향조정

## 24) 風納土城遺蹟 保存對策 推進 : 369(06-39-25)

- 풍납토성이 옛 백제의 위례성터라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후손들이 조상의 귀중한 유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보존해야 함
- 문화재 발굴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도 재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문화재를 철저히 발굴·보존해야함('00. 5.16, 국무회의시)

- 풍납토성 보존 기본방향 심의·결정('00. 5.26, 문화재위원회)
  - 경당연립부지 문화재 지정, 외환은행·미래마을부지 발굴조사 후 보존여부 결정, 기타지역 학술조사 후 대책 수립
- 경당연립부지(2,394평) 사적지정고시('00. 7.28)
  - 국비 190억원 주민보상 실시
- 경당연립부지 발굴유적 수습조사 및 보존조치 완료('00. 6.22)
- 외환은행부지(5,061평) 및 미래마을부지(6,474평) 사적지정고시('01. 4.28)
  - 국비 550억원 주민보상 실시
- 외환은행부지 및 미래마을부지 시굴조사 착수('00. 6.28)
- 풍납토성 내부지역 학술적 가치규명을 위한 공동학술조사단 구성('00.10월)
  - 역사·고고·지리·지질학자 등 10명 참여(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
- 풍납토성 내부 일반주거지역 및 외부지역 관리지침 마련('01. 4.12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 문화재 발굴비용 국가부담 범위확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01. 6.30)
-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02.11.22)

## 25) 觀光收支 改善對策 마련 : 379(06-39-26)

-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최근 관광에 따른 순 흑자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00. 7.19, 관광진흥확대회의시)
- 대국민 건전 해외여행 유도 캠페인 실시, 우수여행업체 지정('01년 20개, '02년 20개 총 40개)
  - 국민 국내관광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보제공 강화
    - '내나라 먼저보기' 사업 추진('01. 4~),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실시
    - '가 볼만한 곳'을 매월 10개소 선정, 안내정보 제공
    - 시도별 관광지에 관광해설 담당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배치(1,051명)
    - 우수국내여행상품 공모전 실시('01, 20개 상품, 1억원 지원)
    - 국민관광상품권 보급으로 국민국내관광확대 유도('01. 6발행)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장별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확대
    - 지역별 홍보CF 제작·방영(3만7천회), 관광유치단 파견(24회)
    - 한국관광홍보 포털사이트 tour2korea.com을 구축, 인터넷 마케팅 강화
    - 지정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16개 시·도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운영, 1330 관광안내전화 운영 등 외래관광객 서비스 강화
  - 다양한 먹을거리·살거리·즐길거리 개발
    - 개별관광용 관광코스, 궁중문화프로그램 개발, 전통예술무대 공연 지원
    - 문화관광축제 지원('01년 30개, '02년 29개 축제, 33억원)
    - 음식백화점 개점('00. 5. 4) 및 음식관광 팸투어 실시('01년, 일본, 중국 등 기자 25명), 중국인관광객 먹거리 개발(우수식당 12개소, 전문식당 100개소), 세계음식박람회 개최('02년 5월) 등



- 한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01~'02, 400개 작품, 11.8억원)

## 26) 南北觀光協力 方案 마련 : 380(06-39-2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분야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북을 연결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대북관광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바람('00. 7.19, 관광진흥확대회의시)</li> </ul> |
|--|
- 남측백두산 관광실시('00. 9.22~28, 109명)
  - 동해-장전간 쾌속선 투입 및 2박 3일 관광코스 실현('00. 9)
  - 현대-아태간 육로관광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01. 6. 8)
  - 관광공사-현대간 금강산 사업 업무협정 체결('01. 6.20)
  - 속초-연길-훈춘간 관광루트 개방유도('00. 9, TRADP Commission회의 시 북측에 제안)
  - TRADP 사업관련 제 4차 관광실무반 회의 개최('01. 7월, 몽골)
  - TRADP 관련부처 워크샵('01.12)
  - 남북연계 관광상품개발 및 모객('02 연중)
    - 강원도-금강산, 서울-금강산 연계 남북연계상품 개발 및 모객 (일본인 단체객 100명 및 중국, 유럽 등 개별관광객 등)
  - 북한경제시찰단 방문행사 지원('02.10.28~11. 2)
    - 경주보문단지, 제주중문단지 시찰시 단지개발현황 등 설명

## 27) 觀光開發事業 徹底 : 381(06-39-28)

- 해남화원관광단지 등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사업주체인 관광공사는 관광개발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00. 7.19, 관광진흥 확대회의시)

- 기획예산처에 협조공문 발송, 계획수정 범위 등 협의(‘00. 8.23)
  - 관광공사가 현재 진행중인 해남화원, 경주 감포, 제주중문 등 3개 관광단지개발 완료시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동 혁신계획 수정 요청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재추진중인 4개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기획예산처 경영혁신 방침변경, ‘02. 1.25)
  - 한국관광공사: 제주중문단지, 해남화원단지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주보문단지, 감포단지

## 28) 文藝振興基金 財源擴充 및 效率的 運營 : 479(06-39-29)

-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기금 조성목표액(4,500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예진흥기금은 지원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소액지원 방식과 더불어 집중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문예진흥을 위한 중장기 및 단기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01. 2.14,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 기금 국고반영 요구('01)

- 모금부족분 750억원 국고반영을 요구하였으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모금시한이 당초 2001년에서 2003년으로 2년간 유예됨에 따라 국고반영분 전액이 삭감됨

- 2003년까지 기금모금시한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조성목표액(4,500억) 달성 가능

-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조정 추진('02. 10) : 1조 5천억원(2010년)

○ 기금의 효율적 지원 배분·운영 개선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02. 1)

- 국고성 기금예산 정비

- 2002년도 “문화예술의 해” 등 4개 사업
- 2003년도 “문화환경 가꾸기” 등 8개 사업

- 기금공모사업 평가·심의제도 개선

- 심의위원뱅크제 실시(844명), 현장평가 대상사업 확대(16% → 25%), 국민모니터링제 실시(연 2회, 100명), 공모사업 심사단계 확대(3회→4회)

- 기금운용 위험관리 체계 개선

- 기금운용지침 개정('01. 6) 및 기금운용자문위원회 구성(29명)·운영('00~ )

## 29) 韓國文學翻譯院 設立 本格推進 : 480(06-39-30)

- 우리도 훌륭한 문학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봄.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작업이 미흡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우리 문학작품을 외국인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노벨문학상 후보도 나올 수 있도록 문학번역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01. 2.14,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서)

-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 기본계획 수립('01. 1), 이사회 구성 및 임원진 임명('01. 2)
  - 사무실 확충 이전('01. 3) 및 현판식('01. 4. 3)
  - 2001년 사업예산 27억원 확보(국고 1억, 문예진흥기금 26억)
- 한국문학 세계화를 선도할 우수작 번역 및 출판 지원
  - 고전 작품, 현대 작품 등 번역 지원(107건 ; '01년 68건, '02년 39건)
  - 출판 지원(70건 : '01년 33건, '02년 37건)
  - 영문판 “한국문학 입문서” 발간, 포켓북시리즈 출판지원(20종),
  - 번역 우선 작품 선정 설문조사('01. 7~8)
  - “한국문학번역상” 시상('01.12 / 번역상5, 특별상1)
  - 해외 보급 및 출판 촉진
    - 뉴스레터(국·영), 번역작품 소개집 등 홍보자료 발간
    - 번역 원고의 출판 촉진용 초록집 제작 배포(5개 외국어판)
    - 월드컵 계기 아리랑TV 방영, 번역도서 전시·판매, 메트로북메세 참가 등
-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환경 조성
  - “문학과 번역 서울 심포지엄”('02.12), 국제 워크숍('02. 6)
  - 해외 우수 출판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 다국어(20개어)로 운영되는 “사이버 한국문학관” 개설 추진 등

### 30) 慶北北部 儒敎文化圈 開發 : 482(06-39-32)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만큼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01. 2.14,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북북부 4개시·7개군(안동·상주·문경·영주시, 봉화·울진·영양·영덕·청송·의성·예천군)
- 사업기간 : ’00~’10(11년)
- 소요예산 : 2조2,666억원(국고 4,540, 지방비 5,564, 민자 12,562)
- 사업내용
  - 대상지역을 중, 북, 남, 서, 해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숙박휴양거점 조성
  - 중점정비자원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자원정비

#### ○ 추진현황

- 경북북부 유교문화자원활용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00. 2)
- 정부계획(안) 관계부처 협의(’00. 4~7)
- 정부계획 확정(’00. 7)
- 현재 실시설계, 문화재보수, 관광기반시설 공사 등 사업추진 중

#### ○ 국고 지원내역

- ’00년 : 26개사업, 165억원(문화부 15개 85억원, 문화재청 15개 80억원)
- ’01년 : 62개사업, 320억원(문화부 41개 223억원, 문화재청 28개 97억원)
- ’02년 : 73개사업, 420억원(문화부 43개 311억원, 문화재청 40개 109억원)

#### ○ ’03년중 중간평가 용역 실시

### 31)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觀光産業發展의 契機로 : 532(06-39-35)

-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은 觀光産業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 내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觀光단체, 정부가 하나되어야 함 ('01. 7.31, 제3차 觀光진흥확대회의시)

- 안내체계 개선
  - 觀光안내소 5년간 200여개소 확충, 현재386개소 운영
  - 觀光통역안내전화 1330 개설 및 지속적인 기능확대 : 전용회선확충, ARS 기능추가, 외국에서 통화가능 시설 확충
  - 觀光안내표지판 정비,확충: 2,763개 신설 및 로마자표기 정비
- 숙박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선
  - 수도권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수도권 觀光단지조성 추진 : 국토이용계획 변경완료, 2003년 예산 50억 확보
  - 觀光숙박시설 건설 및 경영활성화 지원 확충(5년간 2,628억원)
  - 월드컵 기간 중 중저가 지정숙박시설(여관·모텔) 운영 및 인터넷 예약망 구축, 월드컵 이후 지속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택시서비스 개선
  - 외국어통역택시 111만대 도입,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 택시종사자에 대한 친절·외국어 교육실시
- 화장실 청결사업 추진으로 화장실 선진문화 구축
  - 청결 모델 화장실 신축지원(67개소), 공중화장실 BEST 10 선정(총 62개소 선정)시설 개보수 관리자 지정 등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추진
  - 월드컵·아시안게임 대비 국민 친절·질서·청결 운동 확산
  - 주요관광도시 중심 시민모니터링제, 각종 관광자료 오류표기 국민 신고제 운영 및 시민의식 함양 교육과 시민운동 전개

## 32) 失業細部對策 樹立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98. 3.26, 국무회의시)
  -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서비스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며, 직업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임('99. 3. 2, 국무회의시)
-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고용창출(총8개사업, 142억원 투입)
    -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 청소년인턴사원 채용, 종합영상자료·전자도서관 DB구축,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등
  - 문화·관광분야 일자리창출(1,682억원)
    - 문화산업진흥기금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문화예술계 전업작가 지원, 한국미디어교육센터 지원 등
  - 자체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의한 일거리 창출효과 제고
    - '98년 : 관광지개발사업, 문화재 보수 등 3개 사업 733억원
    - '99년 : 지방문예회관 건립, 중앙박물관 건립, 월드컵경기장 건립 등 10개 사업, 3,318억원
    - '00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문화산업진흥기금 508억원, 1,077개)
  - 실업기금 확충

- 출국납부금의 3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
- 실업기금 모금을 위한 공연, 전시회 등 개최('98)
- 방송 3사, 방송협회 등에 실업기금 모금 방송 협조요청('98. 4. 9)
- 종교계의 기금모금운동 전개(10개 단체, 총 14억원 모금)

### 33) 經濟政策關聯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국민이해를 도모하고 사후적 홍보보다 사전 기획된 홍보가 중요('00. 1.25, 국무회의시)

- 보도자료 배포시 유관인사 사전협의 확인
  - 주요보도자료는 언론사 편집국 및 논설위원실에 별도 배포
- 주요정책 발표시 대언론 사전설명회 개최
  - 정책발표 전에 대언론 사전설명회 개최
- 오보 사전예방 및 오보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예술의전당 개혁안 승인지연 보도,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논란, 일본 극영화 완전개방 검토기사에 대한 해명 등 326건 대응조치



### 34)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주기 바람('98. 8.11, 국무회의시)
- 
-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을 위한 계획 수립('98. 5.28)
    - 제도개선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월 기본급의 200%이내, 연 2회 지급)
  - 「문화관광부예산절약성과금추진위원회」 구성·운영('99. 5~)

### 35)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 수해현장 방문하여 수재민 위로·격려
  - 각 장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
  - 이재민 구호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적극 노력
  -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구역을 책임지고 복구하고, 정부는 이를 지도·감독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98. 8.17, 국무회의시)
- 
- '98 수해피해복구 사업추진('98. 8~'99.12, 국민관광지 8개소)
    - 피해시설(관광시설) 응급복구('98. 8)
    - 관광지 수해피해 복구('98. 8~12)

- 해빙기 및 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철저 지시('00. 3.29)
  - 체육관련 시설 안전관리 대책수립 지시('00. 4. 6)
  - 다중이용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자치단체 또는 시설주 자체 안전점검 ('00. 4~5)
- 월드컵경기장 공사현장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대책 수립 추진 ('00. 4. 3)
  - 경기장건설 관련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 철저 대비
    - ※ 관계부처 합동점검 : '00. 5. 8~5.22
- 우기철 대비 체육관련 시설사전 수해예방대책 철저 지시('00. 5.23)
  -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한 응급복구 대책 수립 철저 등
- 장마철 대비 체육시설 수방대책 강구('00. 6.22)
  - 운영중 골프장 및 공사 중인 골프장 수방대책 철저

### 36)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3-70-08)

-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문화부장관은 문화개방과 교류문제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98. 5.13, 22명)
    - 운영실적 : 전체회의 17회, 심포지엄 3회, 워크숍 3회 개최
  - 일본대중문화 개방 추진
- < 1차개방('98.10.20) >

- 영화 및 비디오부문 : 4대국제영화제 수상작, 한일공동제작 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배우 출연허용 등
- 출판부문 : 일본어판 출판만화, 만화잡지

< 2차 개방('99. 9.10) >

- 영화 및 비디오 부문 :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 전체관람가 영화
- 공연부문 : 2000석 이하규모 실내장소에서의 일본대중가요 공연 허용

< 3차 개방('00. 6. 7) >

- 영화부문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12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 영화까지 추가 개방
-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 :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를 포함한 각종 국제 영화제 수상작
- 대중가요 공연부문 : 실내외 구분 없이 전면개방
- 게임부문 : 게임기용 비디오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물
- 방송부문 :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등

○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중단('01. 7.12 확정발표)

- 「일본 역사교과서 대책반-자문단」 연석회의('01. 7.12)를 거쳐 정부방침으로 결정

○ 공연예술행사 교류('98~'02, 방문 : 137회, 초청 : 124회)

○ 무대예술 전문인력 일본연수('98년, 15명)

○ 제3국 관광객 한·일 공동유치 지속 추진

- 한·일 관광장관회담 개최('00. 3.25~26, 센다이 및 오사카/'01. 9.25.서울)
- 한국관광공사(KNTO), 일본국제관광진흥회(JNTO)간 업무협정 체결 및 해외마케팅 공동 추진협약('01. 5.11)

○ 한·일 관광 교류 촉진

- 월드컵 개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등
- Korea Grand Sale('00. 4. 7~5. 7, '01. 4. 6~5. 6, '02. 5.31~6.30)
- 일본지역 한국관광 유치단 파견('00~'02, 동경, 오사카 등 12개도시)
- 한국문화관광주간 행사 실시('01~'02, 후코오카 등 11개 도시)
- 한·일·중 연계 오리엔트 크루즈 추진('00. 4)
- 한·일 체육교류
  - 정부간 실무자회의 개최('00. 3월, 동경/ '01. 4월, 서울/ '02. 3월, 동경)
  - 성인생활체육교류('98~'02, 669명), 청소년체육교류('98~'02, 540명), 우수주니어선수교류('98~'02, 849명) 등
  - 월드컵 개최도시 자치단체장 회의('99. 6 / '00. 6)
- 한·일 정부간 청소년교류의 지속적 확대
  - '98년~'02년까지 (총384명 : 초청 185명 / 파견 199명)
- 한·일 취업관광 프로그램(WHP)시행 지원
  - '99년~'02년 한·일청소년 취업관광프로그램 교류실적(총 6,066명 / 파견 4,800/초청 1,266명)

### 37) 컴퓨터 2000年 問題 관련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 미국 고어 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부치 일본수상도 Y2K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여 각국이 찬성하였음.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

- Y2K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 임('99.12. 국무회의시)

- 우리부 소관 Y2K문제 대상분야 점검·조치('98. 3~'99.11)

- 문제점검 및 문제해결 추진

- 각 문제발생 시스템에 대한 문제해결 완료

- 문제해결의 조치완료에 대한 자체선언 추진('99.12)

- 연도전환기간중의 비상대책반 운영('99.12.31~'00. 1. 3)

- 정보·비정보분야의 문제발생 점검 및 응급복구 지원체제 구축
- 연도전환에 따른 정보·비정보분야의 운용 점검

### 38)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 특히, 특정고교 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99. 1.12, 국무회의시)

- 승진, 전보 등 인사운영시 인사원칙 준수
  - 능력·청렴성·헌신성 등 인사원칙 준수
  - 출신지역(출신고 포함) 안배
- '03. 1. 1, 현재 실국장급(행정직, 별정직) 지역안배 현황(27명)
  - 서울/경기 7명(25.9%), 영남 9명(33.3%), 호남 5명(18.5%), 충청 5명(18.5%), 기타 1명(3.3%)
  - 서울고/경남공고/전주고/경북고 각 2명(각 6.8%), 기타 각 1명

### 39) 설 連休對策-설 文化 開發 및 紹介 : 183(09-70-19)

- 금년에 구정이 명실상부한 설 휴일이 되었음을 계기로 새로운 설 문화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설 문화를 소개하는 등 명예로운 전통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임('99. 2. 2, 국무회의시)

- 「설」 문화 3대 캠페인 전개
  - 설날 연휴 한복입기, 가족이 함께 모여 세배하고 덕담 나누기, 윷놀이 등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하기

- 문화예술기관 주관 「설」 맞이 문화행사 개최(설 연휴 기간중)
  - 개최기관 : 문화재청,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12개 기관
  - 행사내용 : 설날맞이 '전통예술무대', 설날 민속축제, 민속놀이마당 등
- 설 연휴 한복입기 운동 전개
  - 고궁, 박물관, 미술관의 한복착용자 무료 입장
  - 방송 출연자 한복입기 권장 등 TV를 통하여 한복입기의 생활화 유도
  - 한복의 세계화 이미지전 개최, 생활한복장터 개장 등
- 각 지역별 「설」 맞이 문화행사 개최
  - 지역예술인·문화예술단체와 연계, 특색있는 향토민속예술축제 개최
  - 설 관련 세시풍속의 관광자원화
    - 관광객에게 세시풍속의 체험기회 제공(고궁, 남산골 한옥마을 등)
- 설날 미풍양속 홍보
  - 홍보자료 “설날 고향가는 길”(10만부) 및 “우리 우리 설날은”(3만부) 제작·배포
  - 문화인물 책자에 설 관련 내용 수록·배포(2만5천부)
  - TV 등을 통한 설의 유래와 풍속, 각종 문화행사 소개

#### 40) 國家이미지 改善 強化 : 198(06-70-20)

- 지금, 우리는 상품수출, 자본유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문화관광부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 3.22, 국정개혁 보고서)
- 대국민 교육강화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람  
(‘00. 2.29, 국무회의시)

- 문화한국 이미지 선양
  - 권역별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99~’02)
    - 아메리카 : 월드컵 홍보 국립국악원 중남미순회공연(‘01.10, ’02. 4), UN한국문화축제(‘02. 5) 등
    - 유럽 : 대통령 유럽순방 계기 한·불 친선음악회(‘00. 3), 월드컵 홍보 유럽·아프리카 문화사절단 파견(‘02. 3), 프랑스 한국문화종합 소개행사(‘02. 9) 등
    - 아시아 : 중국내 「한국문화의 달 행사」 개최(‘01. 9), 월드컵기념 동남아공연(‘01.12),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 공연(‘02. 8) 등
  - 한국영화 해외순회 상영회 개최 : 70개국 120회 상영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문화행사 개최(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6회)
  - 제3차 ASEM 계기 문화행사(‘00.10/COEX 컨벤션센터) 개최
- 한국문화 C.I. 홍보
  - C.I.영상물(김치·태권도·불국사/석굴암·한복·한글), C.I.화보(김치·태권도), C.I.소개책자(5개국어), 포스터·우편엽서 제작·배포
- 해외한국문화원을 해외홍보거점으로 육성



-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99~'02)
  - 한국문화강좌(728회), 한국어강좌(90회), 한국문화공연·전시(217회), 우수 한국영화상영회(421회) 등
- 4개 재외문화원 개원 20주년 계기 특별홍보

#### 41) 解氷期 大型事故 및 水害豫防 : 264(08-70-25)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등 확실한 수해대책을 세우고, 민·관·군이 함께 노력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며,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의 재기를 지원해야함('99. 8. 3, 국무회의시)
- 해빙기에는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람('00. 3.21, 국무회의시)
- 장마철에 대비해 빈틈없는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함. 작년의 경험을 살려 대책을 잘 세운 지역은 피해가 적었던 점을 상기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기 바람('00. 8. 1, 국무회의시)
- 관계부처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1. 6.19, 국무회의시)

- 해빙기 및 봄철 안전 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 실시
  - 해빙기 및 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철저 지시('00. 3.29/ '01 .2.15)
  - 다중이용시설, 민간체육시설 등 지자체 또는 시설주 자체 안전점검 실시('00. 4~5월/ '01. 4~5월)
- 시·도에 장마철대비 수해예방대책 수립, 보고토록 통보 및 시·도의 수해예방대책 수립('00. 4)
  - 월드컵경기장 공사현장 해빙기 대형사고 및 수해 예방대책 수립('00. 4)
  - 월드컵경기장 공사현장 관계부처 합동점검('00. 5. 8~5.22/ '01. 6.25~6.30)

- 체육시설 재해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01. 5.29~6. 2, 행정자치부 주관)
- 우기 대비 체육관련시설 사전 수해예방 철저히시('00. 5.23/ '01. 6.19)
- 제주월드컵경기장·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태풍피해 방지대책 강구('02. 9)

## 42) 8.15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새천년을 맞는 각 분야의 국정개혁 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개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8.15 후속대책을 잘 실천함으로써 새천년을 시작하는 국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임('99. 9. 7, 국무회의시)

-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발전 기반 구축('99~'02, 187억원)
-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여건조성
  - 문학분야('99~'02, 85억원), 미술분야('99~'02, 65억원), 공연예술분야('99~'02, 180억원, 2,065작품)
-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및 지역특화관광 개발(국고 50% 보조)
  - 7대문화관광권의 50개 지역특화관광 개발 육성('00~'02, 467억원)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지원('00~'02, 1,231억원)
  -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지원('00~'02, 612억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속 확충('99~'02)
  - 청소년수련관 확충지원(89개소, 71,589백만원, 신규 개관 44개소)
  -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지원(115개소, 22,186백만원, 신규 개관 98개소)
- 소외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지원(464회 179,425명/'99~'02)

- 소외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원(117회/'00~'02) 등
- 청소년 및 가족단위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 청소년 문화공간 지속확충 및 운영활성화 기반조성('03) 등

#### 43) 2000年 豫算(案) 弘報 推進 : 282(08-70-29)

-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 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임. 동결기
-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임
-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홍보가 매우 중요함('99. 9.21, 국무회의시)
-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의 對국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장관 기자회견('99. 9.27)
  - KBS 등 3개방송 8~9시 메인뉴스 리포트 보고
  - 9.28자 중앙일보 등 11개 일간지 게재(국민일보 장관 특집 인터뷰)
- 장관 TV 생방송 출연 홍보(9.27) : KBS 뉴스라인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수록(9.27)
- '99년 문화관광부 주요실적 홍보(12.23) :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주요 언론기관
- 리프렛 제작배포

- '00년도 예산 집중 홍보
- “설” 등 각종 계기시 문화유관기관 등 활용
  - 「문화의 세기를 여는 우리의 약속」('00. 2)
  - 「문화, 새천년 한국을 움직이는 힘」('00. 5)
- '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장관 기자회견

#### 44)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7대 개혁과제 선정 보고('00. 5. 1)
  - 새천년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
  - 문화정보화로 지식 강국 구현
  - 21세기 아시아 관광중심국 도약
  - 스포츠로 건강하고 신명나는 사회조성
  -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
  - 포용정책을 선도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

#### 45)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하며,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각 사업별 코드번호부여 관리
  - 17개 정책과제, 63개 실천과제
- 업무보고 내용 철저 추진 지시
  - 추진실적과약 및 철저 시행지시('00. 5.25)
  - 실·국장 회의시 지시('00. 6. 2)
- 추진실적 점검
  - 추진상황 중간 점검(9월, 10월)
  - 중점추진과제 최종 점검(12월)

#### 46)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음. 상당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
-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00. 9.19, 국무회의시)

- 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지침 시달 ('00. 9.21, 9.28)
  - 산하단체별, 지적사항별 개선조치계획 수립 ('00.10 완료)
- 지적사항 조치이행 독려 및 지속 점검·관리
  - 개선조치 요구사항 철저 이행 독려 및 점검 ('00.10~ )
  - 월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파악·작성 및 제출('00.10~12, 예산처)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정 → 대학생 학자금 용자로 전환('00. 12.15 노·사 보충협약 체결 및 '01년도 용자예산 반영)
-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일수 산정 개선 → 2000.12.15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연차수당 제외( 노사 보충협약 체결)
- 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00.10월), 투명한 회계처리(집행용도 명확히 기재) 및 2001년 예산 편성시 품위유지비 제외

##### < 한국문화진흥(주) >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정 → 용자제도로 전환(노사합의 및 규정개정, 이사회 의결)
- 경영평가지표 설정 부적정 → '01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현

실에 맞게 설정

- 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01년도 예산 편성시 품위유지비 삭제

#### 47)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 단체협약 체결('00.12.20)
-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노사합의('00.12.15)

< 한국문화진흥 >

- 단체협약 체결 완료('00.10. 1) 및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노사협력('00.12.28)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사 공동 평화선언결의문 채택('02. 5.30)

< 독립기념관 >

- 노사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의 추진(정원감축, 기구조정,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단축, 매·수표원 폐지 등)

< 한국관광공사 >

- 노사화합 선포식 개최('01. 6.25), 공기업최초 연봉제 타결('01.10)
- '03년 임단협 공기업 최초 타결 타결('02. 3)

< 예술의전당 >

- 노사간 대화의 활성화 및 경영정보 제공 등
- < 한국언론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 조직 및 인력정비, 퇴직금제도 개선 등 노사합의하에 큰 문제점 없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98~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파크텔 민간위탁 관련 노사협의회 6회 개최 ('00.11~'01. 3)
- 국민체육진흥공단 '01~'02 단체협약 관련 노사협의회 16회 개최('01. 2~'02.12)
- < 대한체육회 >
- 대한체육회 임금, 직원복지 관련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회의 8회 개최 ('00.11~'02. 6)

#### 48)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

- 보직관리 원칙 준수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보완
  -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보완
  -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전보인사 실시



- 인사청탁자 리스트 작성 · 공개 추진 : 해당사항 없음

#### 49) 冬節期 火災豫防 徹底 : 611(05-70-67)

-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전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라며, 동절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서민층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02.11. 5, 국무회의시)

- 본부 및 소속기관 동절기 화재예방 실시('02.11.11~16)
- 관광시설운영 관련 협회에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 지시('02.12)
  - 관광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철저
  - 노후화된 전기·가스설비 등의 조기개선 및 가스·유류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 올림픽스포츠센터(둔촌, 분당, 일산, 평촌)의 시설물에 대한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점검 추진('02.12~'03. 3)
-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동절기 화재예방 철저시행
  -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시행(수시 점검)
  - 화재 예방 및 동절기 안전교육 강화
- 문화재 및 시설물 관련 소방시설 점검 강화(동절기)
  - 불조심 표어·포스터 부착('02.11. 1~'03. 2.28)
- 문화재 공사현장 안전사고예방 철저 지시('02.12.27)

|       |
|-------|
| 農 林 部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4(03-40-02)  |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 1998. 4.16 |
| 103(03-40-03)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진입제한 폐지 재검토 | 1998. 6.29 |
| 104(03-40-04) | 축산물 판매 부조리 단속 철저       | 1998. 6.29 |
| 105(03-40-05) | 행정규제 개혁강화              | 1998. 6.29 |
| 128(03-40-06) |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 대책수립     | 1998. 7.14 |
| 189(03-40-07) | 농협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강구       | 1999. 2.22 |
| 223(03-40-08) | 경제림 조성과 첨단임업의 발전       | 1999. 4. 6 |
| 342(03-40-09) | 농민을 중산층로 육성            | 2000. 3.30 |
| 343(03-40-10) | 한우 사육기반 유지             | 2000. 3.30 |
| 344(03-40-11) | 구제역 확산에 철저히 대처         | 2000. 4. 4 |
| 441(03-40-12) | 농외소득 증대방안 강구           | 2001. 2. 7 |
| 443(03-40-14) | 농업금융제도 개혁              | 2001. 2. 7 |
| 447(03-40-18) | 농업 벤처산업 지원 대책 강구       | 2001. 2. 7 |
| 449(03-40-20) | 남북 농업협력 강화             | 2001. 2. 7 |
| 450(03-40-21) |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2001. 2. 7 |
| 533(03-40-22) | 쌀 수급대책 마련              | 2001. 8.20 |
| 540(03-40-23) | WTO체결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      | 2001.11.20 |
| 594(03-40-24) | 농업경쟁력 강화(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 2002. 4.25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국정홍보 강화                | 2000. 1.25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 1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철저대비    | 1998.11.23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 예방         | 1999. 8.10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2000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 9.21 |
| 304(03-70-32) | 각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54(08-70-38) | 산불 등 재해복구               | 2000. 4.26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41(08-70-60) |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2001.11.27 |
| 609(03-70-66) | 추석 종합대책 마련              | 2002. 9. 3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6 |

## 1) 푸른숲 가꾸기 事業의 效率的 推進 : 34(03-40-02)

- 수목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간벌·잡목처리를 통해 숲을 정리하여 산림을 경제성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푸른숲 가꾸기사업이 이번에 실업자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98. 4.16, 농림부 업무보고시)
- 5년간 1,328천ha의 산림자원 육성 : 산림자원 육성목표 달성
    - ‘98 : 254천ha(95%), ‘99 : 284천ha(98%), ‘00 : 276천ha(102%)  
‘01 : 229천ha(108%), ‘02 : 285천ha(100%)
    - 경제림 육성대책 수립(‘01. 3. 5)
      - 경제림육성 : (‘01)262만ha → (‘30)350만ha
      - 목재자급율 : (‘01)6% → (‘30)30%
  -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 : 실업대책 목표 달성
    - ‘98~‘02 : 15,575천명(계획 15,292천명)에게 일자리 제공(102%)
  - 귀농정착 지원
    - 근로자 기술교육실시  
‘98 : 1,454명(97%), ‘99 : 4,235명(94%), ‘00 : 2,644명(59%)  
‘01 : 2,018명(81%), ‘02 : 1,067명(102%)
    - 자활영림단 편성·운영
      - ‘01 : 13개단(171명), ‘02 : 18개단(215명) 편성·운영
  - 산물수집 및 활용 : 초과달성
    - ‘98 : 44천m<sup>3</sup>(110%), ‘99 : 120천m<sup>3</sup>(120%), ‘00 : 130천m<sup>3</sup>(130%)

'01 : 106천m<sup>3</sup>(133%), 민유림 산물활용장비 지원(378백만원)

'02 : 50천m<sup>3</sup>(100%), 민유림 산물활용장비 지원(292백만원)

※ 산업용재 및 축산폐수 정화용 톱밥을 공급하여 국산재 활용 촉진  
및 환경개선에 기여

-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대책 사업에서 주요정책 육림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산림녹화 성공국가 → 산림자원조성 모범국가로 발돋움

## 2) 大企業의 畜産業 參與進入制限 閉止 再檢討 : 103(03-40-03)

○ 최근 양축농가의 여건악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진입제한 폐지는 재검토('98. 6.29,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당초 축산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허용을 검토하였으나, IMF 이후 어려워진 농가의 경영여건 및 정서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유지기로 함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계획(안) 마련 : '98. 7.23
-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안) 마련 ; '98.10. 7
- '98.12.17 축산법 개정안 국회 의결(개정안 제21조,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폐지는 농림부 장관이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함

### 3) 畜産物 販賣 不條理 團束 徹底 : 104(03-40-04)

- 산지의 축산물가격은 크게 내렸는데도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임
- 국세청과 협조하여 고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담합행위 등이 발견되면 법에서 정한대로 강력히 제재를 해야 할 것임('98. 6.29,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농림부,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대책회의 실시('98. 7. 3)
  - 축산물 소비자가격 실태조사 및 고가격유지업체 세무조사, 가격담합행위단속대책 협의
- 농림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서 업소별 축산물가격 실태조사('98. 7. 6~7.15)
- 쇠고기 소비자 가격인하 협조 공문을 보건복지부, 재경부,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에 시달('98. 8.26, 9.21)
- 축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농·소·정 연대로 유통협약을 체결하고, 축산물 브랜드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축협과 한농 주관으로 2차에 걸쳐 쇠고기 할인판촉 행사를 개최토록 함
- 슈퍼,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도 식육판매를 적극 장려하여 상호 경쟁을 통해 산지가격하락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
- 고가격 유지업체 156개소, 가격담합 의심업체 21개소를 국세청 및 공정위에 2차에 걸쳐 통보('98. 8. 7, 9. 2)하여 세무조사 및 불공정행위조사 의뢰
- 한우 산지가격은 '98. 6월 현재 전년말대비 17.3%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4.9% 하락에 그친 상태였으나,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98.11월 현재 전년말대비 9.5% 하락하여 상반기에 비해 상당수준 하락
  - ('97. 2) △4.3% → ('98. 6) △4.9 → ('98. 7) △6.2 → ('98.11) △9.5

-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동기 대비 '98.10월에는 2.3%, 11월에는 8.8% 증가하여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98. 1~7)  $\Delta 10.4\%$   $\rightarrow$  ('98. 8)  $\Delta 1.7$   $\rightarrow$  ('98. 9)  $\Delta 0.2$   $\rightarrow$  ('98.10) 2.3  $\rightarrow$  ('98.11) 8.8

#### 4) 行政規制 改革強化 : 105(03-40-05)

- '98년도 내에 농림부 총규제의 50%이상을 개혁 ('98. 6.29,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98년 중 농림부 총규제 701건의 51.8%(362건)를 폐지, 23.6%(165건)를 개선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98.10)
  - '98.10.26 제1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 규제정비계획 확정(75.2%)
    - \* 폐지 362건(51.6%), 개선 165건(23.6%),
  - '01. 6 까지 추진실적(실적/총규제)
    - 512건/701건(73%)
      - 347건 폐지, 165건 개선
  - 약용작물의 음·식료품 활용 규제개선,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개선 등을 제37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제70차 규제위에서('00.11.10)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고시개정토록 확정
  - 인삼제품의 재분류 및 관리일원화 등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규제정비를 제4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법률 개정공포('01. 1.26)
  -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건의를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국민과의 대화마당에 규제개선신고코너 신설('00. 5)

- 규제개혁 홍보책자 발간('99. 4)
- 유관 기관, 단체 등 10천부 배포

## 5) 牛乳 및 쇠고기 需給安定 對策樹立 : 128(03-40-06)

- 수급불균형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수립('98. 7.14, 국무회의시)

- 우유 수급안정대책
  - 젖소 송아지 전량 수매
  - 젖소 저능력우 30천두 자율도태 추진
  - 우유판매업소와 유업체 공장과 직거래 유도로 판매가격 인하
  - 남북한 어린이용 분유 보내기운동, 우유한잔 더 마시기 운동 전개
- 쇠고기 수급안정대책
  -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처 대폭 확대
    - 슈퍼,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도 식육판매를 적극 장려
  - 가격담합행위·폭리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
    - 고가격유지업소(1,564개소), 가격담합 의심업소(21개소) 국세청 및 공정위 통보
  - 농가 자가도축 허용과 수출확대
  - 큰수소 수매를 중단하고 중수소 수매 및 암소 수매
    - 중수소 수매 : 19,925두, 암소 수매 : 8,457두
  - 수매육 방출의 탄력적 조절
-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98.12월 현재 전년말대비 9.5%나 하락하고, 쇠고기 소비가 '98.11월 현재 전년말대비 6.7% 증가로 전년수준으로 회복



- 한육우 사육두수도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98. 6월 2,750천두에서 '98.12월 현재 2,382천두로 367천두가 감소
- 산지소값이 '98. 8월 148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12월현재 210만원으로 회복하여 안정세 유지
- 분유재고량도 16천톤에서 12월 9천톤으로 내려가 안정세 유지

## 6) 農協 監査 結果에 대한 對策강구 : 189(03-40-07)

- 농협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난 부조리와 비능률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99. 2.22, 국무회의시 )

- '99. 3. 6 농·축협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대통령께 보고(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원인과 대책 포함)
  - 〈 주요 보고내용 〉
  - 감사원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원인과 대책
  - 일선 회원조합 개혁방안
    - 경제사업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육성,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협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일선조합의 합병 등
  - 협동조합중앙회 개혁방안
    - 농·축·임·삼협 등 4개 중앙회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개편 및 슬림화,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 확립 등
- '99. 3. 8 정부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
  - 농·축·임·삼협 중앙회를 1개로 통합하여 「저비용·고효율」 구조 실현

- 일선조합을 유통·경제사업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
- 중앙회와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을 일  
반은행 수준으로 강화
- 새로운 협동조합법 제정·공포('99. 9. 7)
- 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와 설립기획단을 구성
- '00. 7. 1 통합 중앙회 출범

## 7) 經濟林 造成과 尖端林業의 發展 : 223(03-40-08)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림(造林)에는 성공했지만 경제림 조성에는 실패했음
  - 1930년대부터 경제림 조성에 힘을 기울여 온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목재 수출국이 된 사례를 거울삼아 이제부터라도 경제림 육성에 노력해야 함
  -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임업을 첨단임업으로 발전시켜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바람('99. 4. 6, 국무회의시)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추진
    - 추진실적 : 82천ha(114%)
      - '99 : 19천ha(119%), '00 : 22천ha(110%), '01 : 21천ha(117%),  
'02 : 20천ha(111%)
    - 「경제림육성대책」 및 「'99나무심기추진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 조림  
추진방향을 정립('99. 3)
    - 나무심기 기간을 확대 조정하여 추진('00)
      - 3.21~4.20(1개월)→3. 1~4.30(2개월)

- 산주소득증대를 위한 밤나무 노령목개량 조림용 묘목대 국고보조지원
  - '00 : 1,000ha, '01 : 1,087ha, '02 : 1,090ha
- 우량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관정 및 간이온실 시설비 지원(관정 20공, 간이온실 16동, '02)
- 활엽수 조림확대를 위한 상수리 용기묘 조림 추진(200ha, '02)
- 경제림 육림사업추진
  -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 '99 : 284천ha(98%), '00 : 276천ha(102%), '01 : 229천ha(108%), '02 : 285천ha(100%)
- 첨단 임업기술 개발
  - 배양관련 대규모 탱크설계 및 기술개발 : 5톤('99)
  - 대용량 생물반응기 대량생산 기술개발 : 1건('00)
  - 민두릅 체세포 복제 및 순화 포트묘 육성보급
    - '00 : 110천본, '01 : 24천본, '02 : 110천본
  -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산삼 부정근의 대량생산 방법 특허등록 및 매각 (특허등록 '01, 매각 '02)
- 경제수조림 및 육림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여 경제림 육성계획
  - 조림('01~'07) : 151천ha
  - 육림( " ) : 1,820천ha

## 8) 農民을 中産層으로 育成 : 342(03-40-09)

- 농업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재해보험, 가축공제, 자조금제 도입 등 경영안전 장치를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 농가소득안정으로 농업인을 중산층 수준으로 육성  
(‘00. 3.30, 농림부 업무보고서)

- 농작물재해보험
  - ‘01년에 사과, 배를 대상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02년에는 보험대상품목을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까지 확대하고 정부 지원확대, 보장수준 다양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재해발생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원(‘02.12)
    - 6953 농가에게 총 34억원 지급
- 가축공제
  - ‘97~‘99 3개년간 소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 ‘00년부터 공제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축종도 돼지·말(‘00)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
- 자조금제도
  - 농축산물 자조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00. 5.30)
  - 법령정비 : 농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00. 6)
  - 자조금 조성(3개품목) : 참다래(‘00. 6), 파프리카(‘00. 9), 겨울배추(‘02. 1)
  - ‘03년 자조금 추진중인 품목(7개품목) : 사과, 감귤, 포도, 마늘, 고랭지 채소, 난, 선인장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02. 5.13)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02.11.14)
    - 축산분야에 의무자조금제도 도입(대상축종 : 소·돼지·닭 등 13개축종)

## 9) 韓牛 飼育基盤維持 : 343(03-40-10)

-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00. 3.30, 농림부 업무보고시)

###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실시
  - '00년부터 전국확대실시 ('00년 가입실적 : 75천농가 206천두, '01년 잠정 : 380천두)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의무화하도록 축산법 개정 ('00.12)
  - 안정기준가격 90만원 ('01부터 120만원),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20만원 ('01부터 25만원)
- 한우다산장려금제 시행
  - 안정제 가입암소를 대상으로 3산이상 암소사육농가에 장려금 지급
    - 3~4산 : 10만원 ('00.11월부터 20만원)    · 5산이상 : 20만원 ('00.11월부터 30만원)
    - \* '00년 지원실적 : 66천두, 76억원, '01년 5월까지 지원실적 : 58천두, 117억원
- 한우거세지원사업 추진
  -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한 한우수소를 거세하는 농가에 대하여 두당 20만원 지급
    - '00년도 : 64천두 93억원    · '01년도(5월까지) : 41천두 57억원

###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방지대책 추진>

- 공정한 축산물 거래유도를 위한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등급별 구분판 매지역 확대
  - 소도체 등급거래지역 확대 : ('99) 158개지역 → ('00. 1) 162개지역

- 쇠고기 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지역 확대
  - ('99) 도청소재지 등 19개시 → ('00. 7) 전국 79개시 지역
- 유전자를 활용한 한우고기 판매기술 실용화 연구
  - 유전자 지물법, 임의증폭 다형분석법 등 분석기법 개발추진 (농진청)
-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 '00 실적 : 77,759개소 점검, 2,631건 적발, 포상금 127백만원 지급

## 10) 口蹄疫 擴散에 철저히 對處 : 344(03-40-11)

- 구제역 문제에 대해 축산농가의 붕괴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
  - 구제역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보상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축산물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육류소비를 늘리는 등 축산농가 살리기 캠페인 전개('00. 4. 4, 국무회의시)
- 구제역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살처분 및 이동제한조치, 소독 실시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 구제역 발생지역(3개도, 6개 시·군)의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의 사육가축 살처분·매물(182농가, 2,216두)조치,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우제류 가축 전두수 예방접종 실시(1, 2차 1,523천두) 및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등 긴급방역비 지원
  - 축산농가의 조기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수립·추진
    - 살처분농가 보상금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1,539억원(수매결

- 손 1,210억 포함)
- 가축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실시 : 444천두
-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실시
  - 구제역 방역 홍보 4종 170천부, 시식회 총 100여회 개최 및 소비 촉진 홍보물 제작 배부
-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등 가축방역 추진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보완
  - 중앙과 지방 방역조직의 연계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시달('00. 8.31), 방역실시요령 개정('00. 8.19)
-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01. 2.24~4.30)
  - 특별대책협의회 설치운영(3회) 및 총리주재 특별회의개최(2회)
  -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공동방재단운영) : 월4회
  - 축산농가 홍보교육 강화 및 국경검역 강화 (홍보물 40만부, 합동담화문 50만부 배포)
-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 조치 및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특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단기간내 구제역 근절 및 확산방지 성공
  - '01. 9.19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8개월 앞당겨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

## 11) 農外所得 増大方案 강구 : 441(03-40-12)

-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주어야 하며, 지역특산물 개발, 지역문화와의 접목 등 다각적인 수입원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01. 2. 7, 농림부 업무보고시)

- 농외소득대책반 구성·운영

- 농진청, 산림청, 유관기관·단체를 망라하여 농촌공업팀과 녹색관광팀으로 구분하여 운영('01. 2~5)
- 농촌경제 연구원을 통해 농외소득관련 연구용역 실시('01. 2~12)
  - 농가 계층별 소득 증대방안 연구 실시
- 그린투어리즘, 농공단지 등 국내 현장조사 : '01. 2월하순~4월중순
  - 그린투어리즘 실천마을 조사
    - 여주군 상호마을, 포천군 교동마을 등
  - 시·군 등 지자체의 추진사례 수집분석
    - 지역축제현황, 순창군 등 선도 시·군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사례 등
- 농외소득 중장기 추진계획 확정('01. 5.31)
  -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을 유치
  - 농촌지역의 1차(농업), 2차(농·특산가공), 3차(민박·음식물판매 등)산업의 연계발전으로 농외소득 확대 추진
  - 지자체 단위의 지역축제 등과 연계 등

## 12) 農業金融制度 改革 : 443(03-40-14)

-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의 고금리 해결 등 농업금융 지원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01. 2. 7, 농림부 업무보고시)

- 조합상호금융 개혁
  - 상호금융 금리인하
    - '02.11 현재 상호금융대출금리는 '00말에 비해 3.28%p 낮아짐
    - ('00말) 10.72% → ('01. 6) 9.55 → ('01.12) 8.66 → ('02.11) 7.44
  - 기간가산금리 폐지('01. 3.26) : 연간 207억원 부담경감추정



- 저금리 농업용 상품개발('01. 3.19) 및 지원 ('02.11 현재 : 52,431억원)
- 농업인 신용도에 따른 신용평점시스템(CSS)도입('02. 4)
- 상호금융제도·기능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체제 구축('01. 8)
-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시행('01.12) : 32개조합 합병완료, 85개조합 MOU체결
- 정책금융 지원체계 개선
  - 금리체계를 7 → 5단계로 정책자금 지원조건의 개선 및 금리인하
    - 관광농원개발사업등 16개사업 : 8.0% → 5.5%('01.10)
    - 미국종합처리운영자금 : 5.0% → 3.0%('01. 7) → 0%('01.11)
    - 쌀전업농 농지매입자금 : 4.5% → 3.0%('02. 1)
    - 농축산경영자금등 37개사업 : 5.0% → 4.0%('02. 7)
  - 정책자금의 종합자금화 지속 추진
    - 농기업경영자금, 축산전업경영자금 통합('01. 1)
    - 관광농원개발 등 4개사업을 종합자금 제도로 통합('03. 1)
    - 농업정책금융 사업타당성 투자모형 평가 체계구축('02. 8)
- 농신보 제도개선
  - 농신보법 시행령을 개정('01. 7)하여 보증여력확대(17 → 20배)
    - 보증여력 : ('00말) 14.4천억원 → ('01말)18.6천억원 → ('02말) 19.4천억원
  - 1억원초과 보증시 연대보증인 입보제도 폐지('01. 6.30)
  - 부분보증제 도입예정('03년 상반기중)
    - 농업종합자금, 5천만원이하 일반자금, 비농업인정책자금부터 단계적 도입

### 13) 農業 벤처사업 支援對策 강구 : 447(03-40-18)

- IT, BT 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된 농업벤처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01. 2. 7, 농림부 업무보고서)
- 농업벤처 전용펀드 조성
  - MAF-무한 Agro-Bio 벤처펀드 1호(100억원) : '01.12
  - MAF-KBIC Agro-Bio 벤처펀드 1호(80억원) : '02.12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농업분야 전문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02.11)
- 농업분야 창업보육센터 3개소 설치
  - 서울 농생대('00.11), 농촌경제연구원('01. 2), 한국 농업전문학교('01. 2)
-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개최('02. 6~10)
-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02.11)

### 14) 南北 農業協力 強化 : 449(03-40-20)

- 북한은 농업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관개, 비료, 농약, 품종개량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01. 2. 7, 농림부 업무보고서)
- 대북 식량 및 농자재 지원
  - 「우리농산물 나눠먹기」 추진('01. 3.23~4. 7) : 사과 4천톤, 배 3천톤, 감자 5천톤
  - WFP를 통한 옥수수 지원 : 20만톤
    - '01. 3.28~5.15 : 중국산옥수수 10만톤, '02. 2.28~4.30 : 중국산 옥수수 10만톤

- 비료 지원 : 50만톤
  - '01. 4.26~5.30 : 20만톤, '02, 4.25~ : 20만톤 , '02. 9.13~10.25 : 10만톤
- 제주도 감귤·당근 지원 ('01.12~'02. 1) : 14,000톤(감귤 10,000, 당근 4,000)
- 국내산 쌀 40만톤 차관지원('02. 9.19~'03. 1.20예정)
- 남북 농산물 반·출입 활성화
  - 4대경협합의서 후속조치로서 남북간 청산결재(안) 구체화('01. 5)
    - 청산결재 대상 품목과 거래한도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 반입물품 품목조정(삭제 : 감귤 등 8품목, 신설 : 고추장 등 8품목)
- 북한농업연구 추진 : 16건
  - '01 : 남북농업의 상호보완성증대방안 등 8과제
  - '02 : 북한의 농업부문과 연관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분석 등 8과제
- 남북한 농업전문가 공동참여 학술대회 개최('01.12.19~20, 북경)
  - 주제 : 남북농업기술협력의 성과와 향후 사업방향
  - 참석 : 남한 21명, 북한 10명
- 북한농업지원협력단 구성('01. 4)·운영
  - 농림부 농정국장(단장), 통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등 참여

## 15) 女性農業人 支援 強化 : 450(03-40-21)

- 여성농업인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탁아시설을 갖추어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살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01. 2. 7, 농림부 업무보고시)

-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01)
  - 사업자 선정(4개소) : ‘01. 3
    - 충북 영동, 충남 서천, 경북 안동, 경남 진주
  - 사업비 지급 : 30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02)
  - 사업자 선정(9개도, 18개소), 국고지원 : 850백만원
  - 센터 운영실적(‘02.10월말)
    - 고충상담 : 2,290건, 영유아보육 : 376명, 방과후학습 : 75명, 교육 및 단체활동 : 989일 24,209명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자 선정기준 고시제정(‘02.10)
  - 향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01/’02 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 시달
  - 11개 시·도 및 87개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00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평가회 실시(‘00.10)
  - 13개 시·도 담당공무원 교육 및 ‘01년 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01.11)
  - 홍보실시

- 87개 시·군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홍보전단 10만부 배포('00.12)
- 보도자료 배포('00.12, '01. 9, '02. 1), KBS 제2TV 「고향의 아침」 홍보('01. 2)
- 163개 시·군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홍보전단 20만부 배포('02. 1)
- 각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시 독려('01. 2, '02. 6) 및 추진실태 점검('01. 3 : 4개도, 12개 시·군, '02. 6 : 9개도, 18개 시·군)
- 추진실적
  - 계획/실적(인원, '01) : 1,760명/1,703명 (96.8%)
  - 계획/실적(인원, '02) : 3,200명/2,345명 지원('02.11월말 현재 73%)
- '03년부터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한 모든 농가로 지원범위 확대 추진

## 16) 쌀 需給對策 마련 : 533(03-40-22)

- 쌀 수급조정 등을 통한 가격유지대책을 강구하고 경제성 있는 쌀 관리방안도 마련
  - 국제경쟁력 있는 작물을 선택, 집중지원하여 농가소득도 올리고 세계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01. 8.20, 제34회 국무회의시)
- 농가벼 매입을 확대하여 가격안정 도모(1,468만석, '01)
    - 정부(575만석)·농협(341)·RPC(552)를 통해 농가벼 매입을 확대
    - RPC경영안정화 지원 강화로 민간부문 벼 매입 촉진
      - RPC매입자금 금리인하(3%→무이자) 및 지원규모 확대(1조 850억원)
  -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관리 대책 추진
    - 정부벼 공매를 중단 조치

- 고미 100만석을 주정용 공급('01.11~'02. 7), 가공용 쌀 10%인하 공급('02. 5) 등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부쌀 공급가격 인하 : '02. 2(70%로), '02. 9(70%→50%로)
- 쌀소비 촉진운동(Love米 캠페인) 적극전개
  - TV-CF 방영('02.10) 및 홍보대사(축구스타)를 활용한 신문 광고('02.11~12)
  -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02.11), Love米 크리스마스 행사('02.12), Love米 콘서트('02.12)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실시
- 쌀 수급안정대책본부를 운영('01. 9~12)하여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
-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종합대책 마련('02. 4)
  - 중장기 발전방안('01. 9) 및 검토방향('01.12) 제시
  -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본회의 상정 심의('02. 6.17)
    - '02년산부터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대북 쌀 지원 40만톤('02. 9~'03. 1) 등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하위법령 제정('02.12)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반 편성 운영
  - 4개반, 20명(총괄, 채소특작, 과수화훼, 식량작물)
- 대책시안 토론회 및 대책안 마련 (3차)
  - 채소류 일관기계화, 고려인삼의 수출시장 개척, 과실의 종합생산인증제, 화훼를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 등 추진
-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확정
  - 경영체별 분석 등을 보완하여 경쟁력 제고대책 확정

## 17) WTO締結에 따른 農業對策 마련 : 540(03-40-23)

- 도하의 WTO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민·정부·전문가 등이 지혜를 모아 우리농업이 나아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01.11.20, 국무회의시)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의결('01.12)
  - 본 위원회 구성('02. 3) : 농어업인·학계·정부 등 30인 이내 구성
  - 쌀산업종합대책 및 농지제도 개선 ('02. 6.17, 본위원회)
    -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균형을 도모하되 가격하락에 대응한 소득보전장치를 마련하고, 민간 유통활성화 및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등
  - 농어촌복지제도개선(9.18, 본위원회)
    - 보건지소·진료소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부과체계 및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
  -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안) 마련(12.23, 본위원회)
    - 농어업·농어촌의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의 안정성장과 다원적 기능 제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투융자 및 추진체계 개선 등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02. 6) : 후계농업인 육성 등 37개 사업
- 경영회생제도 도입('03부터)
- 농가 부채정감 조치 확대('03. 1부터)
  - 중장기 정책자금 및 연대부증 피해자금 금리인하
    - 정책자금 : 연4~5% → 연3%, 연대보증피해자금 : 연5% → 연3%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03부터)

- 1ha미만 농가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실업계→실업계·인문계)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학기당 1만명/50만원 → 1.5/200
-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조 확대('03부터)
  - 국민연금 보조액 국고지원 : 최저등급보험료의 1/3→1/2로 확대 지원
-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농어촌교육발전 방안(시안) 마련(교육부)
  - 농어촌 교육발전 위원회 구성('02. 3) : 농촌교육전문가 9인 및 농림부
    - 농촌학교 중장기 비전,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농촌교사처우개선 방안 등
- 중장기 농촌보건의료 개선 및 농촌복지제도 방향 마련
  - 농특위 논의를 통해 농촌보전 의료체계 확충 및 영유아보육, 농어민 연금, 건강보험, 노임 및 여성복지 개선방향 논의

## 18) 農業競爭力 強化(消費者 中心으로 轉換) : 594(03-40-24)

-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함
    - 농업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함. 모든 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함
  - ( '02. 4.25, 농림부 업무보고시)
- 농산물품질인증의등급기준을 고품질위주로 상향조정
    - 표준규격의 중간등급이상에서 최상등급으로 상향조정
    - 맛, 당도 등 품질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우수농산물도 품질인증
    -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에 근거마련(공포 '02. 7.13)
  -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공급확대



- 농산물 품질인증실적 : 65품목, 246천톤('02)
-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증실적 : 11천ha, 291천톤('02.11)
-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품 출하농가 조치강화
  - 안전성조사결과 부적합품은 폐기·출하연기·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품을 출하한 자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시·도에 통보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벌칙 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벌칙강화 등 단속의 실효성 제고
  -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회의결('02.11. 7), 공포('02.12.26), 시행('03. 6.27)

## 19) 失業細部對策 樹立 :10(03-70-01)

-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함. 모두가 노력하여 실업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해야 함
- IMF이후 증가한 140만명의 실업자중 1백만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함
- 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실업대책을 집중 강구해 주기 바람('98. 3.26, 국무회의시)

-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
  - 지원조건 : 가구당 2,000만원한도, 연리 5.0%, 2년거치3년상환
  - 지원실적 : 800억원을 4,600가구에 지원
    - '98 : 2,335가구, 400억원, '99 : 1,958가구, 350억원, '00 : 307가구, 50억원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98 ~ '00)
  - 전국 240개 기관, 1,000개 사업장에서 1일평균 18,000명의 실업자가 참여하여 연인원 4,272천명 고용
  - 115,000ha의 숲을 가꾸어 주어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
  - 128,000m³의 간벌재등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 톱밥조사료, 표고자목, 펄프재, 보드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820만불의 외재 대체 효과를 거둠
-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 지원실적 : 7,405백만원을 지원하여 353천명 고용
    - '99 : 3,886백만원, 219천명, '00 : 3,519백만원, 134천명

## 20)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정책의 혼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협의를 완료 후 정책을 발표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
-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함
  -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임('01. 1.25, 국무회의시)

-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와 일반 대중매체 활용홍보
  - 시사대담프로(일요진단, 집중조명 등) 및 농업관련 방송프로 출연 홍보, 일간지·전문지 등 대담 및 기고, 주요현안 광고(공익광고 MB C)·농림부 홈페이지·전광판 활용 등을 통한 입체적 홍보 추진
- 언론기관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로 오보확산 방지
- 현장농정회의(3회), 이동장관실 운영(102회), 명예장관실 운영(31회)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농정 실천, 언론인 대상 해외 선진농업국가 및

국내 선진농업현장 안내로 농업에 대한 이해도 고취

- 중앙부처 공보관회의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부처간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 차관(경제홍보위원회 참석), 공보관(중앙부처 공보관회의 참석)
- 세미나, 이슈관련 간담회 개최 등 언론과의 공조체제 구축
- 순회교육(23회), 간담회(107회), 토론회(126회), 공청회(19회) 등을 통한 홍보추진
- 농림업 종합정보지 『OK 농정』 160만부, 홍보용 멀티비전, 비디오테이프·CD, 홍보간행물 등 홍보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농정추진방향을 입체적으로 정리·홍보

## 21) 각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強化 : 137(03-70-08)

- 각부처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지속적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 강화
- 경비절감 등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추진 ('98. 8.11, 국무회의시)

- 경비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예산절약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 추진계획 및 성과금 관련사항 통보('99. 3)
  - '99상반기 예산성과금지급에 따른 인센티브제 추진위원회 개최 및 기획예산처에 지급요구('99. 7)
-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성과금 지급 : 3백만원
    - 총예산 4,520백만원, 절약액 3,145백만원
  - 수입현미 운송제도 개선에 대한 성과금 지급 : 29백만원
    - 총예산 123,282백만원, 절약액 397백만원
- 경비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홍보자료 배포('99. 8, 895부) 및 홈페이지 게재

## 22)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부처 장관은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 위로·격려, 각부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공무원 및 각 기관은 수해대책 사업 신속히 추진 ('98. 8.11, 국무회의시)</li> </ul> </li> <li>○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복구대책 수립('98. 8.17, 국무회의시)</li> </ul> |
|---|
- 
- 농림부 및 각 시·도 재해대책상황실 주야간 비상근무, 피해지역 현지점검 및 일손돕기
  - 부문별 피해복구 기술지원단(688명) 현지 파견 응급복구 지원
  - 침수농작물 및 파손된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촉구
  - 침수농작물 양수기 동원 조기 물빼기 실시
    - 물빠짐 촉진을 위해 양수기 1일 407대 동원
  - 농약외상 공급으로 물빠진 농작물 긴급 병해충방제 실시
    - 농약 무상지원 : (주) 경농 9,440ha, 농협중앙회 12,560ha분
  - 파손된 용·배수로, 양수장 등 수리시설 2,901개소 응급복구 완료
  - 수해지역 농기계 긴급수리 봉사
    - 5개 업체(대동, 국제, 동양, 아세아, LG기계)
  - 피해가축 매몰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실시
    - 가축방역반 운영 : 61개반 374명, 방역차량 31대
    - 농림부, 축협 합동 폐사가축 처리 및 방역 현지지원반 파견(7개반 14명)
  - 정부양곡 안전지대 이고 및 건조완료
    - 벼 423톤 RPC 건조 및 쌀 6.3톤 주정용 공급
  - 7.31~8.12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예산 1차 지원조치

- 지원액 : 1,063억원(예비비 885억원, 재해대책융자금 178억원)
- 농업재해지원기준의 확대 및 강화 조치
  -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학자금면제대상 확대(지원대상 2ha미만 → 5ha미만)
- 생계안정 및 복구에 원활을 위하여 농업부문복구자금 신속지원 조치
  - 총복구지원액 : 2,734억원(국고 1,541, 의연금 8, 융자금 460, 지방비 725)
- 농업재해지원기준 강화로 피해농가 지원확대
  -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면제 지원대상 범위확대
  -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비중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조정으로 농가부담 경감

## 23)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음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방일성과의 실효성은 양국간에 문서로 합의한 43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부에 달려있음('98.10.12, 국무회의시)
- 한·일 고위급(차관급)농업협력위원회 개최관련 일본측과 협의('98.12.8~'99. 1.12)
  - 양측은 한·일 농업각료회의로 격상하여 매년 서울과 동경에서 교환 개최기로 합의('99. 1.20)
  -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의 협조체제 강화

## 24)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철저 대비 : 164(07-70-15)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컴퓨터 Y2K문제 발생에 대비 철저('99.12.28, 국무회의시)

- 실태조사 실시 ('99. 2~3) 및 전문가현장지도 ('99. 5~6)
- 본부 및 소속기관 Y2K문제 추진실적 종합평가 실시 (10회)
  - '99. 6월말기준 본부 및 소속기관 100% 완료
- 농업용시설 Y2K 핸드북 발간 배포('99. 8)
- Y2K 비상조치요령 스티커 제작배포('99.11월말)
- Y2K 상황실 운영 (본부, 소속기관 단체, 제조·공급업체, 관련협회 및 단체, 농업정보119요원 등 연계운영 실시)
-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별로 윤년문제 이행기능 테스트 실시 ('00. 2.21~25)
-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별 각 2명씩 비상대기 근무 실시 ('00. 2.28~2.29)
- Y2K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25)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99. 1.12, 국무회의시)

- 능력, 청렴성, 헌신성 및 지역안배 등 인사원칙에 의한 인사실시
  - '99. 6.11자 국장급 인사시행
    - 지연·학연·연공서열 등을 배제하고 업무추진능력(전문성), 청렴성, 헌신성, 성과 및 실적, 인화·통솔력을 기준으로 하되, 승진자는 직렬·지역적인 면을 고려
  - '99. 6.12자 과장급 인사시행
    - 전문성(업무능력), 청렴성, 헌신성, 개혁의지, 성과 및 실적, 인화·통솔력 등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지연·학연·연공서열·외부청탁 등 일체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를 실시

## 26) 解氷期 大型事故와 水害豫防 : 264(08-70-25)

- 수해를 통해 겪은 경험을 살려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세워주기 바람('99. 8.10, 국무회의시)
-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99.12.28, 국무회의시)
- 장마철에 대비해 빈틈없는 수해예방대책을 강구('00. 3.21, 국무회의시)
- 장마철의 홍수피해가 없도록 예방조치에 만전('00. 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비('00. 5. 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00. 9.19, 국무회의시)
- 장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01. 6.19, 국무회의시)

- '99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
  - 농경지 4,692ha, 수리시설 1,923개소 복구완료
- 재해대비 수리시설 안전점검 실시 ('99) : 취약시설에 대해 개보수 실시
  - 3월중 시설관리자 자체점검(26천개소), 4월중 중앙확인점검 완료

- “수해방지종합대책(’00~’09)”의 차질없는 추진
  - ’00~’09까지 61,263억원(국고 60,012, 지방비 1,251)을 투입, 단계적으로 추진
  - 주요 추진실적
    - 농림부 소관 7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수립(’00. 2.02)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개정 완료(’00. 6. 7)
    - 안전진단 150개소 실시, 개보수 366개소 추진
    - 노후 방조제 보강 추진 : 300개소, 680억원
    - 상습침수농경지 일제조사(3~8월) 등 현장조사를 거쳐 하천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배수개선종합정비계획 수립(’01. 9)
    - 배수개선사업 추진 : 118지구, 2,226억원
    - 취입보 등 설치완료(50억원 투입)
    - 수리시설 개보수 : 353지구, 2863억원(’02)
    -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 285지구, 773억원(’02)
    - 배수개선 : 108지구, 2,252억원(’02)
-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 추진
  -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완료
- <’00년도>
  - 농경지 1,468ha 및 수리시설 1,690개소 복구완료
- <’01년도>
  - 농경지 1,425ha 복구완료, 수리시설 884개소 복구완료
- ’02년도 여름철 재해방지대책 추진
  -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책임 관리
  - 수방자재·장비 지정·관리



- 가마니 491천매, 마대 11,807천포, 말목 401천본, 비닐 59천롤 등
- 굴삭기 1,874, 도저 77, 덤프트럭 1,575, 기타 589대 등
- 수해복구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하여 유사시 긴급지원 복구
  - 농기공 기술직 직원 861명
- 3. 1~4.18, 5. 1~5.30 기간중 저수지, 방조제 등 재해관련 수리시설 26천개소(전체 63천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일제점검, 취약시설 191개소 중점관리
- 피해시설 응급복구
  - 9.10까지 제5호 태풍 “라마순”, 8월집중호우,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농경지 17천ha와 수리시설 6,695개소 응급복구 완료
- 피해시설 항구복구 추진상황('02.12.17현재)
  - 농경지 : 복구대상 16,858ha  
설계중 322ha(1.9%), 공사중 11,299ha(67.0%), 완공 5,237ha(31.1%)
  - 수리시설 : 복구대상 6,590개소  
설계중 484개소(7.3%), 공사중 5,842개소(88.7%), 완공 264개소(4.0%)
- 피해시설은 내년 4월말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복구계획으로 추진중
- 수해방지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추진중 3개과제)
  -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개보수 추진
  - 기존 방조제의 안전성 재검토 및 보강
  - 상습침수 농경지 조기 해소

## 27) 8.15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새천년을 맞아 각 분야의 국정개혁 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농업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 ('99. 8.15, 8.15경축사시)
- 농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완화대책 강구('99. 9. 7, 국무회의시)

- 연대보증 관련 2000년도 예산 반영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 4,260억원
-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99.10.11)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농·축·임·삼협중앙회, 농신보
- 농업인 연대보증규정 제정관련 의견 제출('99.12. 3)
- 농업인 연대보증규정 제정 심의회 개최('99.12.23)
- 연대보증 부담완화 세부지침 시달('99.12.26)
- 연대보증대출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 '00. 1~6까지(예상 대상금 : 약 6조8천억원)

## 28) 2000년도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00년 예산(안) 홍보추진('99. 9.21, 국무회의시)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99.12. 7, 국무회의시)
- '00년 예산안의 적극 홍보('99.12.21, 국무회의시)

- 순회교육, 현장방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홍보
  - '00년 농림부문 예산증액 및 농정성과 홍보(보도자료 배포, 기자단 설

명, K-TV 자료 송부, '99.12~'00. 1)

-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 홍보(농업관련기관 등에 유인물 제작·배포, '99.12~'00. 1)
- '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중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전문지(농민신문, 농업인신문)에 게재
- 홍보용 리플렛 제작, 비디오테이프 제작, 홍보간행물 발간 등
  - '00년 농림부문예산 홍보리플렛 제작(237천부)·배포(농업인, 농업인단체, 시도 등 '00. 1)
  - 농정교육 홍보용 비디오테이프·해설책자 제작·배포('00. 1)
- 농림부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정보센터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
  - 신지식농업인,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업인 등 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수록하여 사이버 홍보 및 판매·지원
- 시사대담프로(TV, 라디오) 출연을 통한 홍보
  - KBS-1TV(장관, '00. 1), KBS-1라디오(장관, '00. 2), SBS라디오(장관, '00. 1)
- 월간지 대담 및 기고
  - 협동조합개혁 및 21세기 농정비전(월간지),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내일신문), 밀레니엄 농업의 비전과 우리농업의 미래(농축산신문), 주요농정 성과 및 새천년 농정비전(전문지)
- 신문광고('00. 1)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시책」, 「농가부채대책」, 「새천년 새협동조합중앙회」 등
  - '00년도 농업예산의 내용을 농업인·농업관련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 등

## 29) 각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업무보고시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새천년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농정개혁과제 보고('00. 3.30)
  - 보고내용 : 선진국형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첨단 농업기술 실용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산물 수출확대와 농업통상협력강화, 농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 파워포인트 보고 및 서면보고, 「정보화교육용 이동버스」 시승
- 보고주제로 삼았던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정보격차 해소, 첨단기술농업 등이 최근의 경제흐름 등과 잘 부응하여 대통령의 “농림부가 21세기를 충실히 대비하고 있고, 1년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을 느낀다”는 평가를 받음

### 30) 산불 등 災害復舊 : 354(08-70-3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피해자들이 재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예방 및 산불초기진압장비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00. 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li> </ul> </li> <li>○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킬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00. 5. 2, 국무회의시)</li> </ul> |
|--|
- 
- 산불피해 복구 지원
    - 주택복구에 145억원과 산림 응급복구에 60억원 지원
    - 농업시설 피해복구에 63억원과 대체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영농자금 100억원 지원
    - 대체소득작목개발을 위해 72억원과 송이 등 산림소득 피해에 51억원 지원
  - 산불예방
    - '00년 추경 및 '02년까지의 예산으로 헬기 6대(초대형 1), 경비행기(1대), 무인감시카메라(45), 밤비바켓(180) 등 장비체계 마련
    - 진화용 헬기배치를 위한 격납고 설치로(현재 7개소 완료) 헬기의 초동진화능력 향상
    - 산불관리통합규정에 규정된 진화지휘체계를 산림법으로 격상 법제화
      - 개정법률 공포('01. 1.26)
  - 격납고 설치 및 장비확충을 예정대로 추진

### 31)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 특히 부처간·당정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
- 연말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 바람  
(‘00. 5. 9, 국무회의시)

- 금년도 업무보고내용중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달(20개과제)
  -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00. 6)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00.11)
- 업무보고내용에 따른 단위실천과제 선정(13개 주요정책, 60개실천과제)
  - 업무보고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보고(‘00. 9)
  - 실천과제 추진현황 및 달성도 점검 및 보고(‘00.12)
    -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 업무보고내용을 주요업무 및 단위실천과제 등에 반영하여 적극추진함과 동시에,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업무보고 내용의 달성도 제고에 기여

### 32)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감사결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심각,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li> <li>-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00. 9.19,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추궁
    - 감사결과 주의사항관련자에 대한 주의 촉구 및 처분요구사항 통보('00. 9)
  -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냉장 포함) 개선대책 추진
    - 유급휴가제도,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개선
    - 퇴직금제도 개정 :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을 월할계산 방식으로 변경(12. 4)
    - 한국냉장 연·월차휴가 보상기준 개정 :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맞게 보상기준 개선(12.20)
    - 한국냉장 섭외성 경비 과다 집행 시정 : '01년 섭외성경비 예산을 법인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12.28)
  - 농업기반공사 개선대책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00. 9.20, 조치완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기로 결정하였던 120억원을 공사자본금으로 원상회복 조치
    - 비상임이사 선임의 적정 관리('01. 3.23, 조치완료)
      - 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비상임이사(이석우, 설광원) 면직
      - 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소속된 법인에는 연구용역을 위탁하지 않도록

#### 관리강화

- 비상임이사 임용제청시 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의 임직원 출신 인사 추천 배제
- 연차휴가 일수 과다산정으로 퇴직금 과다지급('00.12.27,조치완료)
- 감사원 재심결과 노동부 지침을 수용('00.12.27)하여 당초 지적사항에서 제외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33)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00.10.23, 국무회의시)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제2단계 개혁 추진을 위한 농협구조개혁본부 설치('00.12)
  - 복수노조 통합추진 지원으로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 농축인삼협중앙회 인사규정 통합('00.11) 및 전산망 통합('00.12)
    - 인삼협 노조 해산('01.10.26)
  - 경영개선을 위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01. 4. 1)
  - '0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공동 평화선언('02. 5.23)
  - 축협중앙회 노동조합 고용안정협약 체결('02. 8)
- 농수산물유통공사
  - 노사간의 대화창구 마련을 위해 경영진과의 간담회 및 노사 실무접촉(수시)
  - 신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전개



- 사내 인트라넷에 직원의견 개진란 개설운영('01.11)
- 노사화합 “유통인한마당제”개최('01.11.30)
- 한냉민영화를 위한 인력구조조정관련 노사합의('01.10.22)
- 노·사대화를 지속적으로 재개하여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고,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농업기반공사
  - 복수노조 통합완료('01.12)
  - 신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간부 특별교육('01.11.4~11. 6)
  - 기업경영 및 노사관계 전문가 초빙교육('01.11. 8)
  - 노조통합 지원 및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리자 한마음교육('01.10. 8~10.19)
  - 공기업 노사관 및 경영능력 배가를 위한 관리자교육('01.11.15~12.15)

### 34) 人事請託 根絶：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집단평가제도 보완 추진
  -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인사를 위한 집단평가제도 보완('01. 8)
  -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에 의한 근무평정 시범실시(농진청)
  - 다면평가제 실시
-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제도 운영

- 공정한 인사심사를 위한 성과평가 강화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 심사대상자에 대한 실적평가자료의 내실화
- 이달의 농림공무원 등 업무추진 유공직원 적극 발굴 포상
- 인사운영계획 및 인사기준에 대한 조직내 의견수렴 활성화
  - 농림부 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의견조사('02. 5.10)
  - '02 농림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02. 1.23)
- 승진심사시(연구직) 어학능력 반영 : 어학 30%(농진청)
- 과장급 직위 승진시 적격성 평가 실시(농진청)
  - 보직관리규정에 의한 보직완료자 대상(개인발표, 집단토론 등)
- 연구성과 마일리지시스템 승진심사 반영(농진청)
- 근무환경 고충의 적극적 해결
  - 열린 인사마당 개설 및 운영('02. 4~)
  - 본부와 소속기관간 인사교류 활성화('02년도 실적)
    - 본부 → 소속기관 전출 : 41명, 소속기관 → 본부 전입 : 36명
- 「농업연구대상제」 신설 : 특별승진 및 해외연수 등 실시
- 자율학습공무원 및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농진청)
  - 직원능력개발비 최대한 확보, 지원강화 : 637명 41,093천원
  - '02년 연구모임 운영비지원 : 10개모임 1,000천원

### 35)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541(08-70-60)

- 가뭄기간동안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는 준설하여 담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천수답은 재배종목을 바꾸어 관정개발 투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01.11.27, 국무회의시)

- 저수지 준설사업
  - '01.10~11월중(2회) 시·도지사를 통하여 준설대상조사
  - '01.10~12월기간중에 2차례에 걸쳐 가뭄대책비 195억원(국고123, 지방비72)을 지원하여 저수지준설 완료
  - 623개 지구(준설량 4,324천m<sup>3</sup>)
- 소규모 천수답 등은 재배작목 전환
  - 작목전환을 위하여 '02년부터 휴경논 생산화중단 추진 ('02 고품질쌀생산대책 지침시달 : '01.12)
  - 작목전환을 위하여 논에 콩나물콩, 청예용 옥수수(사료용)재배시 소득차액 보전 (사업지침시달 : '01.12)
  - 작목전환에 용이하도록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 재배규제 해제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선 시달 : '01.12)
  - 논에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작목전환 기피 방지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선 시달 : '01.12)

### 36) 秋夕 綜合對策 마련 : 609(03-70-66)

- 추석 종합대책 마련('02. 9. 3, 국무회의시)
- 추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격점검, 주요품목의 확대 공급 등 제반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02. 9.10, 국무회의시)
- 농축산물 성수품(쌀, 쇠고기, 사과, 배 및 배추 등 10개 품목) 확대 공급 (9. 2~20)
-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특별단속(9. 1~19)
  - 농림부(농관원), 시·도, 사법경찰관리, 명예감시원 등 3,957명
  - 1,041개 위반업소 적발(허위표시 570, 미표시 471), 전년 대비 5.4% 증가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특판행사 실시 및 홍보(9. 6~20)
  - 전국 3,072개소의 판매장과 직거래장터(46개소)를 통해 염가판매
  - 특판행사 실적(농협) : 3,270억원, 전년 대비 26.7% 증가

### 37) 冬節期 對策 마련 : 611(05-70-67)

-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동절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등 동절기 서민층 애로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2.11. 5, 국무회의시)
- 임시김장시장 개설(857개소, '02.11.25~12.20)) 및 대책 상황실 운영
  - 김장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산지·소비지 동향 등 추진상황 점검
  - \* 농림부, 농진청, 시·도, 농협에 설치·운영

- 계약재배물량 출하 확대(41.6천톤)
  - 1,600톤/일 (계획대비 45% 증)
-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 추진
  - 농경지 : 연내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이전 완공예정
    - 전체 16,858ha중 복구완료 8,267ha(49%), 공사중 8,591ha(51%),
  - 수리시설
    - 전체 6,590개소중 복구완료 1,505개소(23%), 공사중 5,084개소(77%),
  -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28지구 중점관리
    - 3차에 걸쳐 수해추진상황 점검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추진
  - '02년실적 : 1,789천명, 45,482ha
    - 동절기(4/4분기) : 246천명, 6,150ha
  - '03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실업자중 기술이 뛰어나고 자활의지가 있는 실업자를 전문임업 경영인으로 양성(자활영림단 사업 추진)

# 産業資源部

## □ 指示事項 目録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8(03-41-01)   |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방향 설정      | 1998. 3.19 |
| 30(03-41-03)  | 중소기업 지원                | 1998. 4.21 |
| 72(03-41-04)  | 교역량 확대하에서 무역수지흑자 달성    | 1998. 6.26 |
| 73(03-41-05)  |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 1998. 6.26 |
| 74(03-41-06)  |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등 행정개혁 강화 | 1998. 6.26 |
| 75(03-41-07)  | 산업자원부 역할 강조            | 1998. 6.26 |
| 76(03-41-08)  | 에너지 절약                 | 1998. 6.26 |
| 79(03-41-09)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 1998. 6.27 |
| 114(03-41-10) | KOTRA의 원스톱서비스체제 강화     | 1998. 7.21 |
| 152(08-41-11) | 대형사고 예방노력 강화           | 1998. 9.15 |
| 161(03-41-12) | 수출증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수립    | 1998.10.20 |
| 177(03-41-13) | APEC 투자박람회 준비 철저       | 1999. 1.20 |
| 179(03-41-14)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 1999. 1.28 |
| 218(03-41-16) | 「밀라노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1999. 3.31 |
| 257(03-41-17) |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지원     | 1999. 7.12 |
| 325(03-41-19) | 제조업과 지식정보산업의 병행 발전     | 2000. 2.29 |
| 355(03-41-21) | 경제문제에 철저히 대처           | 2000. 5. 2 |
| 420(03-41-24) |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 2001. 1.20 |
| 10(03-70-01)  | 부처별 실업대책 추진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13(03-70-07) | 재계와의 협력 강화             | 1998. 7. 7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82(03-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3(03-70-42) |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 2000. 8.29 |
| 384(03-70-43) |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준조세 경감      | 2000. 8.2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2(03-70-46)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2000.10.23 |
| 407(07-70-52) | 첨단 미래기술이 될 나노기술 개발       | 2000.12.1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609(03-70-66) | 추석종합대책 마련                | 2002. 9. 3 |

## 1) 不實企業의 早速한 整理方向 設定 : 8(03-41-01)

- 기아, 한라, 한보 등 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할 것('98. 3.19, 업무보고시)

- 기아, 한라, 한보 등 부실기업의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안)을 대통령께 보고 완료('98. 4. 8)

### <기아>

- 국제 경쟁입찰로 조속히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국제 경쟁 입찰공고('98. 7.15)
- 기아 입찰 주요 경위
  - 1차 및 2차 입찰 유찰을 선언('98. 9.1, 9.23)
  - 3차입찰에서 현대가 낙찰자로 선정('98.10.19)

### <한보>

- 채권금융단은 국제입찰을 통해 매각기로 결정('98. 4.20)
- 채권금융단은 M&A 전문회사인 미국의 BTC(Bankers Trust Company)를 매각주간사로 선정, 계약 체결('98. 7. 2)
- BTC와 채권금융단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12.15 입찰 실시
  - 동국제강(A, B지구 일괄인수), 해외업체 1개사(B지구 설비 일부 인수) 응찰

### <한라>

- 한라그룹은 18개 계열사 가운데 4개사만(한라중공업, 만도기계, 한라건설, 한라시멘트) 정상화시킨다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98. 6)
- \* 나머지 14개사는 청산, 매각, 합병
  - 미국의 로스차일드사로부터 브릿지론으로 4개사의 부채를 상환하여 재



- 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으로 만든 뒤 신규 투자자본을 유치
- 4개사의 구조조정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모두 동의하므로써 한라중공업은 회사정리계획 인가, 나머지 3개사는 화의 인가

## 2) 中小企業 支援 : 30(03-41-03)

-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지원이 부진하다는 것은 문제이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중소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연구개발해 나가는 장점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98. 4.21, 국무회의시)
  - 전부처의 연구개발비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00. 4.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회시)
- '98년부터 5년간 13,693업체에 4조3,83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체질개선 및 IMF이후 국가산업기반의 조속한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 자동화율은 48.7%('98) → 57.4%('99) → 63.2%('00)로 지원전에 비해 지원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99. 2)
    -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 '02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2,500억원을 지원하였고, '99년 이후 현재까지 5만여건, 1조1,600억원의 자금지원, 10만여건의

창업 및 경영상담, 4,555개 지역 상권조사를 비롯해 창업설명회, 소자  
본신산업박람회 등 각종 지원활동을 실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운영
  - 지원실적 : ('00) 4,358억원 → ('01) 5,478억원 → ('02) 5,500억원(14.9%)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 신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비의 75%, 1억원 이내 지원
  - 연도별 지원규모 확대
    - 지원예산 : ('00) 600억원 → ('01) 861억원 → ('02) 993억원
    - 지원업체 : ('00) 996개사 → ('01) 1,300개사 → ('02) 1,540개사

### 3) 交易量 擴大下에서 貿易收支黑字 達成 : 72(03-41-04)

-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가 400억불로 예상된다는 것은 큰 성과이며  
수출을 계속 확대하여 교역량 확대하에 무역수지 흑자가 달성되도  
록 노력할 것('98. 6.26,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범부처적 총력수출지원체제 운영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개최('98. 3.27, 7.10)
  - 수출지원대책위원회(3회), 무역투자애로타개대책반(4회), 수출비상대책  
반(7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타결
  - 수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연말수출 점검 및 독려
- 수출입금융애로 해소
  - 수출보험공사가 L/C수취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전액보증('98. 7. 1)
  - 대기업의 무역어음할인 활성화대책 수립('98. 8.20)
  -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 확대, 중소기업무역상에 대한 완제품무

역금융 지원('98. 10.20)

- 수은의 수출환어음 매입대상 확대, 종합상사의 CP한도초과분 해소기간 연장 등 종합상사의 수출입금융 지원(12월중)
- 유희설비 수출에 대하여 무역금융 지원('98.12.14)
- 외화자금 53억불을 수출입금융에 지원
- 수출보험공사 4천억원, 신용보증기관에 4.4조원의 재정자금 출연으로 보험보증여력 확충
- 무역인프라 확충 :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장(전시장 3,000평) '99. 2 완공
-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 : 11개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치('98.12.11)
- 수출기업의 사기진작
  - 「이달의 무역인상」 제정 시상(8월)
  - 무역의 날 포상 확대('98.11.30)

#### 4) 外國人投資誘致 努力 強化 : 73(03-41-05)

-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강화
    - 한·미 투자포럼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성과가 있도록 할 것
    -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찾아가면 외국인투자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 ('98. 6.26,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시)
  - 외국인투자 노력의 가속화
    - 원스톱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것
    - 투자상담이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워진 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할 것('98.11.10, 국무회의시)
- 한·미투자포럼 후속조치 강구

- 한·미투자포럼 사후관리 전담팀 구성('98. 6.20)하여 진전사항 관리
- 방미 후속조치 점검 관계부처 회의 개최('98. 7.18)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직접처리민원제, 일괄처리민원제, 자동승인제 도입 등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98.11.17 시행)
  - 해외투자 거점무역관에 투자유치 전담관제를 운영(30명)('01.12)
  - KISC의 종합행정지원실을 법제화하고 외국인투자 민원처리 기능강화('02. 1)
-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발굴·해결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 투자유치 유망산업에 대한 CD-Rom, 비디오, 성공사례집 등 홍보자료 발간 및 「Cyber KISC」를 통한 투자환경, 제도 등 홍보('99. 7 이후)
-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의 전개
  - 민관합동 유치단 파견으로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강화(연 10회 이상)
  - 다국적기업 CEO 50여명을 초청하여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한국의 투자환경 부각

## 5) 國民行政서비스 改善 등 行政改革 努力強化 : 74(03-41-06)

- 개혁차원에서 금년에 규제를 50%이상 철폐해야 함
- 공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나서 일부 업체는 금년내에 실현하도록 할 것
- 산하기관 정비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조하여 팔 것은 팔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경영혁신 할 것은 경영혁신을 하여 과감하게 추진할 것('98. 6.26,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정부의 기존규제 50%이상 폐지방침에 의거 '99.12 총 규제 667건중 51.3%인 342건을 폐지 완료
- 규제개혁관련 법률 정비완료
  - 군납에관한법률, 수출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 완료
  - 대외무역법 등 32개 법률 개정 완료
  - 대외무역법시행령등 51개 하위법령 개정완료
- 공기업 민영화 계획 수립('98. 7. 3)
  - 산자부 소관 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진 :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하기관 정비계획 수립('98. 8)
  - 산자부 소관 3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폐지, 민영화 또는 매각, 경영혁신(경상비 절감, 출연·보조금의 감축, 경쟁체제 전환, 인력감축 등)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98. 7~'02.12)
  - 포항종합제철 : 정부 및 산은 지분 26.7%를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00. 9)
- 대한송유관공사 : 기존 주주사에 대한 정부주식 매각으로 민영화 완료('00.11)
  - 한국중공업 : 전략적 제휴, 경쟁입찰 등 지분매각으로 민영화 완료('00.12)
  - 한국종합화학 : 수산화 알루미늄공장 등 자산매각으로 민영화 완료('01.10)
  - 에너지관련 3개 공기업은 개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영화 추진 중
    - 한국전력 : 구조개편기본계획 수립('98.11), 발전부문 분할('01. 4) 및 민영화 추진
    - 가스공사 : 정부지분 매각 및 증자('99.12), 관련법안 국회제출('01.11)
    - 난방공사 : 안양·부천사업소 매각('00. 6),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추진

## 6) 産業資源部 役割 強調 : 75(03-41-07)

-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간의 사이를 잘 연결하여 경제를 이끌 것
- 금융·기업구조조정이 끝나면 산업자원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새 출발  
(‘99. 6.26,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조직 재편
  - 창업자금 지원확대 : (‘99) 7,500억원 조성 → 8,431억원 지원(3,075업체)
  -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설치·운영(‘99. 9)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운영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 (‘98) 3,442억원(R&D 예산의 8.4%)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자금 지원 확대
  -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 전국 이공계대학 총 258개 대학중 96개 대학 참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
  -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중소기업과 종합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11월) : 권역별(서울, 광주, 전주, 부산)로 개최
- 지식기반 산업화 Action Plan 수립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99. 1)
  - 주요 업종별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99.12)
  - 산업발전법(2. 8)·시행령(5.13)·시행규칙(5.18) 공포 및 시행

- 주요업종별 경쟁력강화 간담회를 통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추진('00. 2~6)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계획 수립('00. 4) : 5대부문, 83개 실천과제 추진

## 7) 에너지 節約 : 76(03-41-0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에너지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00. 9.19,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에너지 저소비형산업 구조정착
    - '02년말 535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VA) 체결로 12,399억원 절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으로 1,999건의 시설개체를 통하여 1,649억원 절감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 냉장고 등 고효율기기의 기준강화 및 고효율 인증 품목 확대(23개품목)
    - 절전형기기 보급촉진제도 신설 및 대상품목의 지속적 확대 (15개품목)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에너지테크노마트를 개최하여 기술개발 성과 및 신기술 정보 제공
  - 에너지절약 범국민적 실천운동 전개
    - 산업체 에너지관리자 및 관계공무원 교육
    - TV, 전광판등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홍보 및 에너지교육 책자발간 배포
  -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점검 등 에너지절약 사후관리 강화
    - 에너지절약 점검반을 편성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집중 점검
  - 대체에너지 기술 및 개발보급 확대

-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에 433개 과제 2,347억원을 투자
-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7개 과제 17억원을 투자
- 대구, 광주 등 2개소를 선정 Green Village 조성
-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중국 희토류, 유연탄광 직접개발 진출 추진
  -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 추진(3개국 공동 조정위원회 개최)
  - 베트남에서 대규모 유전발굴 성공 및 카스피해 유전개발 진출추진
- 해외 자원외교 역량강화
  - 제1차 한·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 개최('01. 8)
  - 제5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개최('02.12)

## 8) 團體隨意契約制度 改善 : 79(03-41-09)

-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할 것 ('98. 6.27, 공정위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단체수의 계약제도 운영상의 경쟁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마련('98. 7.20, 중소기업대표와의 간담회시)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개정고시 ('98.12.30)
    - 진입제한요소 제거를 위하여 조합의 자체운영 규정을 폐지
    - 제도운영상 경쟁요소 강화하기 위해 물량배정 기준을 하향조정
      - 동일업체 25% → 20%, 상위업체 60% → 50%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 10점 이내
  - 단체수의계약물품 대상수를 20% 축소 지정·공고 ('98.12.31)



- 단체수의계약물품 : ('98) 258개 → ('99) 206개(△52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구매대상물품의 지정)개정 ('99. 2. 5)
- '98년 물품수를 기준으로 '0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

## 9) KOTRA의 원스톱서비스體制 強化 : 114(03-41-1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TRA의 원스톱서비스체제강화('98. 7.21, 국무회의시)</li> <li>○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 확보노력 강화</li> <li>○ 수출증대를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세일즈활동 및 KOTRA의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 경주('98.10.21,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KOTRA를 외국인투자 전담서비스 기구로 개편
    - KOTRA 투자조직개편방안 확정('98. 6. 5)
    - 제1차 조직 및 기능개편완료('98. 7. 1) : 1실 3처 12팀(95명)
  -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98.11.17)하여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 기능강화
    - 현물출자완료확인, 체류자격부여 및 사업자등록 등 총 7개의 민원을 직접처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공장설립 등 5개의 일괄처리민원 및 개별처리 대행권한 부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요청권 부여(법 제15조)

## 10) 大型事故 豫防努力 強化 : 152(08-41-11)

- 주택가에 산재한 가스충전소를 도심 밖이나 안전지대로 이전하도록 할 것('98. 9.15, 국무회의시)
- 최근 부천 가스폭발사고 등을 볼 때,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가스관련시설을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철저한 가스안전대책을 서둘러 수립·추진해 주기 바람('98.11. 5, 국무회의시)

- 도심지내 가스충전소 현황 파악
  -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소재 현황
  - 안전거리 미확보업소 현황
- 가스충전소의 도심밖 이전방안
  - 이전대상 : 주거 및 상업지역(자연녹지 및 공업지역은 주위환경을 감안,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이전 대상여부 결정)
- 이전대상업소를 선정후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등 융자지원(예특자금)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생산녹지지역에 가스충전소 건축이 가능토록 조치(건설교통부)
- 국유지·시유지(시·군·구유지 포함)등 이전부지 알선(시·도지사)
- 이전부지의 매입·매각에 따른 세금감면 장구(재정경제부)
- 전국 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98. 9.14~16)
  - 610개 충전소 중 345개소 지적('98.10. 9~16 및 '99. 1.25~2. 9) 및 개선완료
- 그린벨트지역에 LP가스충전소 이전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00. 7. 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법 '99. 2. 8, 시행령 '99. 6.30, 시행규칙 '99. 3.12 및 '99. 7. 1 개정 완료)
  - 충전소 저장·충전설비의 안전거리기준 강화
  - 가스용품검사 강화 및 충전원 특별교육 신설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배상한도 확대 등

## 11) 輸出増大를 위한 徹底한 對備策 樹立 : 161(03-41-12)

- 요즘 국제경제여건을 보면 미국이 두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EU 국가들도 금리를 내렸음. 또한 일본 엔화도 절상되고 있는 바 수출증대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추진할 것('98.10.20, 국무회의시)
  - 수출증진 노력 강화('99.10.12, 국무회의시)
- 총력수출지원체제 운영
    - 수출지원대책 회의개최(2회), 무역동향점검회의(2회), 산업설비수출증대 방안 실행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6.30), 종합상사간담회(7회), 수출품목담당관회의 개최(월1회)
    - 업종단체수출지원대책회의(1회), 수출점검 및 지원을 위한 수출입상황실 운영(상시)
  -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정
    - 무역전시산업육성, 전자무역기반구축,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기반구축사업 등, 입법예고('99. 5.17), 공청회 개최('99. 5.28)
  - 수출보험법 개정 추진 : 이자율변동보험 및 환변동보험 등
  - 무역인프라 확충 : 서울무역전시장 준공, 본격운영('99. 5),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부지 확정('99. 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 : 전국 11개 시도에 16개 수출지원기관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 12) APEC 投資博覽會 準備徹底 : 177(03-41-1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정상회의('98.11)에서 우리가 제안하여 채택된 APEC 투자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금년('99. 6)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br/>( '99. 1.20,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시)</li> </ul> |
|--|
- '98.12.13 행사기본계획 수립
  - '99. 1.11 행사추진체제 구축·운영
    - APEC 투자박람회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및 실무추진대책반 (Task-Force) 구성·운영
  -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
    - APEC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행사안내브로슈어, 회원국참고용 매뉴얼, 공식카타로그 등 홍보물 제작·배포
  - 투자전시회 및 투자환경설명회 준비
    - 국가관 신청 접수 및 배치계획 확정, 한국관 전시내용 및 설명회 내용 확정
  -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연사 선정
  - 후원기관(Sponsorship) 확보 : UNCTAD, IFC, ADB, 세계은행, UNIDO, MIGA
  - 인터넷 홈페이지 및 Cyber Mart 개설·운영
    - 회원국별 홈페이지를 구축, 잠재투자자에게 사전 열람기회 제공 ('99. 3 개시)
    -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등 주요행사를 전세계에 실시간(Real time) 생중계

### 13) 外國人投資促進을 위한 與件 整備 : 179(03-41-14)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편한 나라”로 만들어 한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함
- 투자여건을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만들고 정치, 노동, 경제분야의 구조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투자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해야함
- 환율의 안정적 운용, 행정체계 간소화, 물류체계 개선, 협력관계 모니터링 등 외국인투자기업대표 등이 건의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 당사자는 물론 참석자 전원에게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을 통보하고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99. 1.28, 외국인투자기업대표 오찬간담회시)

-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추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투자환경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의뢰(재경부, '99. 2)
  - KIEP에서 수행한 “외국기업의 영업환경 선진화 방안”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완료('99.10)
-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개최('99 4회, '00. 4)
  - 주한 외국상공인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투자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천안, 진사, 양산, 전북과학 산업단지
- 외국인투자환경 홍보
  - SJC 등 주한외국인상공단체와의 간담회('00.10, 11)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설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애로 및 생활애로 해결

-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 대책 추진
  - 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개선 토론회 개최('00. 4.26)

#### 14) 「밀라노프로젝트」의 蹉跌없는 推進 : 218(03-41-1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역을 「아시아의 밀라노」로 육성할 것을 지시<br/>( '99. 3.31, 중기특위·산자부 국정개혁 보고서)</li> <li>* 대구방문시('98. 4.30)에도 대통령께서 대구지역 섬유산업 지원의지 천명</li> </ul> |
|---|
- 대구지역 섬유산업 중심업종인 제직·염색산업의 기술·정보·물류·인력 등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확립
    - \* 패션·디자인, 어패럴 등 수요 견인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로 전환 추진('02년말 기준 총사업 진도율 73%)
  - 섬유제품의 고급화·고부가가치화(6개사업)
    -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 염색가공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제품 개발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대 업체 섬유정보 지원사업 추진
  - 패션·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구축(3개사업)
    - 역사, 문화, 마케팅적 요소를 결합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패션문화 집적지 조성을 위한 패션·어패럴밸리조성 공사착공('01.12)
    -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개관('01. 3.22) 및 패션정보 제공사업 추진
  - 섬유산업의 인프라 구축(2개사업)
    -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섬유종합전시장 개관('01. 4.19) 및 섬유패션기능 대학 확대개편('00.12) 추진
  - 경영안정 및 지원기능 강화(6개사업)
    - 섬유소재·염색가공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 및 출연사업 추진
    - 생산성향상, 폐수처리 시설확충, 직물비축 협동화사업 등 융자사업 추진

## 15) 民間分野의 研究開發投資 擴大 支援 : 257(03-41-17)

-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R&D부문에 투입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99. 7.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R&D투자 유인
  - 한국기술거래소설립('00. 4.10) : 민간투자128.5억원 등178.5억원
  - 기술거래·평가제도의 법적기반마련을 위한 『기술이전촉진법』 제정('00. 1.28)
- 기술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민간의 R&D투자 확산
  - 전국 주요대학을 지역기술개발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기술 혁신센터(TIC)의 확충
  - 산·학·관 공동연구기반 거점으로서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 산·학·연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고급연구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노력을 강화
  -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술이전거래에 대한 50% 소득 감면
    - 테크노파크 등 기술인프라 사업에 지원시 기부금 손금 인정
    - 기술개발투자 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 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
-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및 기술거래소 설립으로 기술거래 활성화,
-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기술인프라 구축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지원,
- 민간의 R&D투자 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등을 추진하여  
⇒ 2000년 민간의 R&D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98) 82,848억원(△11.3%) → ('99) 87,187억원(5.2%) → ('00) 103,967억  
원(19.2%) ('01. 8 과학기술부)

## 16) 製造業과 知識情報産業의 並行 發展 : 325(03-41-19)

- 최근 제조업의 사기가 낮아지고 주식가격도 정보통신부문에 비해 좋지 않음.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본이 되는 만큼 경제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제조업과 병행하여 발전해 나가야 함. 제조업도 정보화를 통해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00. 2.29, 국무회의시)

- 주요업종별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추진
  - 생물, 조선, 반도체, 디자인, 자동차, 부품 · 소재, 광산업 등 13개 산업의 경쟁력강화 간담회 개최(2~6월)
- 산업발전심의회 개최('00. 7.14)
  - 10대 주력산업 및 신산업 · 미래산업에 대한 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 수립에 지식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화 부문을 포함하여 수립
  - '지식기반 신산업 발전'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총 5대 부문 83개 실천과제 수립
  - 산업부문 정책토론회 개최('00. 3.11)
- 신산업과 기존 제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 · 추진
  -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수립하여 기존 주력산업과 IT산업등 21세기 돌파산업의 균형발전 방안 수립
  - R&D 역량 강화를 국가혁신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전략 수립



- 신지식인 양성계획의 수립 추진
  - 전자상거래 인력 수급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11월)
  - 광산업 및 초전도 전문인력 양성기반 및 전문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 구축

## 17) 經濟問題에 徹底히 對處 : 355(03-41-21)

- 무역수지대책 수립
    - 경제문제 철저히 대처 관련
    - 금년들어 수입급증에 따른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산자부장관은 2000년도 무역흑자목표 120억불 달성에 어려움이 없는지 계획을 세워 보고('00. 5. 2, 국무회의시, '00. 5.16, 국무회의시)
-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 주력품목 중심으로 수출독려활동 강화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확대 추진(연중 계속)
    - 무역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수출입상황실 운영 등 수출점검체제를 연중가동하고 업계애로를 적극 해소
  -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플랜트 수주 확대
    - 고위급 인사의 현지방문을 통한 민관합동 수주지원 등으로 '00년 84억불, '01년 10억불, '02년 99억불 수주 달성
    - 플랜트 타당성 조사사업 지원('02) : 13개 프로젝트, 20억원 지원
    - 플랜트수출협의회 구성('01. 3) 및 회의개최를 통한 수주활동 강화
  -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가 확대
    - 참가지원 : '00년 (131회/2,780개사), '01년 (137회/2,940개사), '02년 (145회/3,197개사)
  - 강력한 수입절감대책 추진

- 에너지 절감대책의 강력한 추진 및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창출
-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지급 폐지를 통한 수입절감('00. 6. 1)
- 수출입실적
  - '00 : (수출) 1,723억불 (수입) 1,605억불 (무역수지) 118억불 흑자
  - '01 : (수출) 1,504억불 (수입) 1,411억불 (무역수지) 93억불 흑자
  - '02 : (수출) 1,628억불 (수입) 1,520억불 (무역수지) 108억불 흑자

## 18) 地域均衡發展 政策의 推進 : 420(03-41-24)

- 지역균형발전은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 졌으나, 이제는 각 지방이 중심이 되어 IT, BT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함('01. 1.20,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서)
- 지역별 세부추진사업 평가
    - 시도별 지역산업발전계획 제출('01. 1~2)
    - 지자체별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1차평가 실시('01. 2.28)
    -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01. 5~12)
  -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확산
    -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01. 2.26)
    - 지역별공청회 : 대전·충청권(9.19), 강원도(9.25), 대구·울산(9.26), 전북도(10. 8), 전남도(10.10), 제주도(10.12)
    - 시도경제국장회의 개최('01. 3.13, 12. 6, '02. 3.27, 11.27)
    - 13개 시도별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10회, '02. 1~4)
  -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세부사업(27개, 국비1.1조원, '02~'06)의 본격적인 추진('02 국비 600억원 지원)

- 세부 사업별 재단법인 설립 및 각 지역별 R&D 사업의 기획·평가 기구를 설립토록 하여 자생적 지역산업 기반 조성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지역산업진흥의 법적 기반을 마련('02.12)

## 19) 部處別 失業對策 推進 : 10(03-70-01)

○ 각 부처에서는 실업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98. 3.26, 국무회의시)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
  - '98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 667건에 대해 554건의 정비계획을 수립
  - '00.12 총 531건의 규제를 정비(폐지 357건, 완화 165건 등)
  - '00.12 등록된 규제 건수는 총 351건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00.12.20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14,840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 투자건수는 4,0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9.1% 증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 경남 양산('00. 3), 전북과학산업단지('00.11)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통한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강화
    - 대유럽 투자사절단 파견('00. 3), 대일 부품소재 투자사절단 파견('00. 5, 9)
  -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체제 강화
    - Amcham, SJC 등 외국기업이 제기한 경영·생활 애로사항(115개) 개

## 선방안 마련('00. 9)

-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산업정보DB구축사업
    -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20종의 산업정보 DB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기개발된 30종의 DB를 유지·보수
    - 사업비 총 60억원(공공근로 인건비 2,974백만원), 연인원 112,812명 고용
  -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사업('00.12 종료)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전산화
    - 사업비 총 10억원(공공근로 인건비 463백만원), 연인원 12,109명 고용
  - 상권분석DB구축사업('00.11 종료)
    - 창업이 용이한 59개 업종을 선정, 실업인력을 고용하여 서울시내 동업종에 종사하는 점포의 유형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DB 구축
    - 사업비 총 10억원(공공근로 인건비 700백만원), 연인원 19,300명 고용

## 20) 經濟政策 關聯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각 부처간 협의를 거친후 발표하고, 오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98. 4.28, 국무회의시)
- 기획홍보강화 및 각 부처간 홍보활동 연계 강화('00. 1.25, 국무회의시)

| 2000년 홍보업무 추진실적 |       |          |                            |          |             |
|-----------------|-------|----------|----------------------------|----------|-------------|
| 보 도 자 료 배 포     | 1366건 |          | 장 · 차관<br>홍보활동<br>실      적 | 기      고 | 15회         |
|                 |       |          |                            | 방송출연     | 34회         |
|                 |       |          |                            | 강      연 | 38회         |
|                 |       |          |                            | 언론인터뷰    | 53회         |
| 신문 · 방송광고 실적    | 신 문   | 93건 343회 |                            | 기자간담회    | 56회         |
|                 | T V   | 10건3179회 |                            |          |             |
|                 | 라디오   | 7건1512회  |                            |          |             |
| 브      리      핑 | 230회  |          | 홍보 간행물<br>제작 · 배포          | 책      자 | 52종411,650부 |
|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 223건  |          |                            | 팜 프 렛    | 21종278,900부 |
| 홍 보 대 책 회 의     | 40회   |          |                            | 영상간행물    | 5종 1,330개   |
| 홍보기획단 운영        | 40회   |          |                            | 포 스 터    | 18종 91,350부 |
| 외신 스크랩 배포       | 310회  |          |                            | 표      어 | 4건 40,000부  |

- 기획홍보 추진방안 수립 및 시행
  - 기획홍보방안 수립
  - 홍보대책위원회 및 홍보기획단 운영, 홍보과제 선정 등
  - 쾌적한 취재환경을 위한 기자실 정비, 영상취재 지원을 위한 기자실 정비
- 사전홍보 강화를 통한 오보예방 및 언론오보에 대한 적극 대응 등

## 21) 財界와의 協力 強化 : 113(03-70-07)

- 정부는 기업의 수출증진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98. 7. 7, 국무회의시)

- 정부·업계 합동의 수출지원대책회의 개최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장관 주재 수출촉진대책회의 등 각종회의를 통해 수출애로 해소 및 총력지원체제 구축(연중 계속)
  -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6회 개최(‘98. 3, ‘98. 7, ‘99. 1, ‘00. 3, ‘00.11, ‘02. 5)
- 수출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수출입상황실 운영 등 일일 수출입점검체제를 연중가동
  - 수출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격려 및 애로점검(매주, 장·차관)
  - 300대 수출기업 상담역제도 운영 :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02. 3)
- 무역인프라 확충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99. 2)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00. 1) 제정·시행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 수립(‘00. 9)
  - 해외 전시회·박람회참가 지원 확대
    - 참가지원 : ‘00년(131회/2,780개사), ‘01년(137회/2,940개사), ‘02년(145회/3,197개사)
  - 전자무역 기반 조성 :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 수립(‘01. 5)
  - KOTRA의 해외무역관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사화 추진(‘00이후)
    - ‘02.12 852개 업체가 1,351개 지사 운영중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추진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제정('00. 5) 이후,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
  - 지정현황 : 3,376개 업체('00년/1,027개, '01년/1,203개, '02년/1,146개)
- 11개 수출지원센터별 수출지원위원회, 지역별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등
- 향후계획
  - 수출기업의 애로를 신속 파악·해소하여 '03년 수출의 사상최고 1,750억불 달성 지원

## 22) 各部處의 經費節減 勞力 強化 : 137(03-70-08)

-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 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일선지방사무소(마산·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의 기능분석을 통한민간 이양가능 분야 민간위탁 추진('98. 9.12)
    - 위탁분야 : 공단관리, 홍보업무
    - 예산편성('99) : 위탁인원 인건비 6개월분 반영
    - 직제조정 : 정원감축 14명('00년까지)
  - 예산절약 인센티브 전담기구 설치 운영('98.11. 4)
    -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수립 : 추경사업 등 주요사업집행상황 점검
      - 예산절약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각 실국별 자체검토
    - 부내 전산망(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절약성과금제도의

홍보를 통해 전직원의 참여 유도

- 2000년 성과주의 예산편성('99. 5)
  - 성과주의 예산편성 대상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인프라 확충 등 산업기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개발

## 23)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138(08-70-0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장관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 대책에차질이 없도록 할 것('98. 8.11, 국무회의시)</li> <li>○ 수해복구 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민 구호 및 제방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기관은 적극 노력할 것('98. 8.17,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수해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98. 8.25시행)
    -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협동화자금, 회생특례자금 등 우선지원(20개 업체, 17억원)
    -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113개업체, 345억원, 2,342만불)
  - 하반기 만기도래 정책자금 상환기간 6개월 연장(구조개선자금：760개 업체, 157억원 연장)
  - 수해업체의 수해피해액에 대해 2억원까지 간이특례보증 지원((479건, 321억원('98. 9말))
  - 수해로 인한 납기지연 중소기업의 불이익 면제 추진
    - 지체상금 면제 및 납기연장：재정경제부('98. 9. 5)
      - 조달청, 철도청 등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 및 기간 연장토록 지시



- 수해중소기업 침수설비 점검 및 복구지원
  - 「수해복구긴급기술지원반」 운영(12개반 35명)
    - 장비보수 등 현지방문 : 365개업체
    - 기술지도 : 35개업체
- 전력 및 가스시설 복구지원
  - 한전 : 인력 11,749명, 도급업체 15,204명, 장비 8,847대
  - 전기안전공사 : 인력 2,794명, 자재 14,056점(전선 23,230M)
    - 전기요금 감면(19,543호, 17백만원) 및 납기연장(17,299호, 720백만원)
  -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업체 : 인력 2,262명, 장비 736대, 용품 15,373개(소요경비 17,824천원)

## 24)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앞으로 각 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한·일 투자촉진협의회 개최(1차:'98.12, 2차:'99.12, 3차:'00.11, 4차:'01.12)
    - 무역·투자확대, 한·일 BIT, 한·일 FTA, 투자애로사항 개선, 부품·소재분야 협력, IT 분야 산업협력 등에 합의
  - Korea Super Expo(한일교류제) 개최
    - Korea Super Expo 개최 : 1회('00.11 동경), 2회('01.11 오사카), 3회('02. 6 치바)
    - Japan Festival in Korea 개최 : 1회('01. 2 서울), 2회('01.11 부산), 3회 ('02.10 광주)
  -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에서의 협력
    - 수출촉진단 방일 및 한국우량제품전시회 개최(연중)
    - 아시아테크노페어 전시회 및 동경환경전 참가

- 큐슈·호쿠리쿠·토호쿠지역과의 지방간 경제교류회의 개최(연1회)
- 중소기업 대일기술자연수 및 일본전문가초청 기술지도 실시(연중)
- 부품, 전기·전자, 정보산업 등 산업교류 촉진
  - 한·일 부품소재산업협의회 회의 개최 : 총 3회('01. 5, '02. 3, '02.11)
  - 부품소재무역·투자사절단 교환, 일본투자조사단 방한(연2회)
  - 한·일 벤처기업투자마트21 개최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성('02. 2) 및 회의개최(1차:'01. 2 베트남, 2차:'01.10 제주, 3차:'02. 2 가고시마, 4차:'02. 9 경주)
- 경제인 교류 확대
  - 한·일 경제인회의 개최(제34회 : '02. 4 히로시마)
  - 중견경제인교류촉진단 파견

## 25) 컴퓨터 2000年 問題 解決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이번 APEC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 되었음('98.11.23, 국무회의시)
  - Y2K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99.12.28, 국무회의시)
- 주요산하기관, 단체 등의 Y2K문제 해결 독려, 지원 및 홍보
    - Y2K문제 해결 추진현황 점검(8회)

- Y2K관련 세미나 개최(3회)
- Y2K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개최(8회)
- 민간부문 중점관리기업 75개사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3월)
- Y2K문제 정보 공유를 위한 토론회 개최(3회) 등
- 제도개선 협의 등을 통한 Y2K문제 해결 지원
  - Y2K문제 해결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공공기관의 Y2K관련 용역발주에 수의계약 허용
- Y2K관련 대책·지침 마련
  - 각 실·국 및 관련기관에 지침 배포 및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재(8월)
- Y2K관련 비상대응체제 수립 및 모의훈련 실시
  -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분야(2회)
  - 한전 등 7개 기관 점검(12월)
  - 자체모의훈련(11월) 및 종합모의훈련(12월) 개최
- 산자부 소관분야 Y2K 추진현황 보고
  - 대 국무총리 보고(1월)
  - 장관 및 국무회의 보고(6월)
  - 대책협의회 보고(14차)
  - 관계장관회의 보고(12월)

## 26)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1급회의에서 지시사항 전달 및 과장급이상 출신지역·출신학교별 현황 파악 지시 및 향후 인사방향·인사원칙 제시('99. 1.13)
  -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 지양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조직에 대한 신뢰감 조성
- 정부조직개편('99. 5.24)에 따라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제2기 내각의 시대적 사명 및 목표에 발맞추어 인사 단행('99. 6.12)
  - 연공서열 위주에서 탈피하여 각 직책에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선정·배치
- 실물경제 부문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인사 단행('99. 9. 9)
  - 현재의 업무실적과 전문지식, 능력에 기초한 보직부여

## 27)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264(08-70-25)

-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해대책을 수립·추진('99. 8. 3, 국무회의시)
-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사항을 책임 점검할 것('99. 8. 3, 국무회의시)
-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향후 잔여 우기대비 인명피해 예방 및 산사태·옹벽붕괴등 피해방지 철저('01. 7.16, 국무회의시)

- 수해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등 수해대책 수립·추진
  -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수해대책반 설치·운영('99. 8. 1)
  - 경기도 중소기업 수해지원 종합센터 설치·운영('99. 8. 5)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 지원방안, 전기·가스시설 복구지원 방안 마련('99. 8)
  - 경기·강원지역 수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연천소수력댐 허가 취소('99.11.24)
- 시설분야별 안전점검 강화
  - 전력분야 : 총 270,394개소 점검
    - 중점점검 : 산악·하천·해안·경사지·상습침수지역 등
  - 가스분야 : 총 393개소 점검
    - 중점점검 : 해안·경사지·낙뢰다발·상습침수·공사지역 등
  - 광산·석유·집단에너지 및 산업시설분야 : 총 2,758개소 점검
    - 중점점검 : 광산·경사지·공업단지·상습침수·공사지역 등
- 수해 및 안전사고 우려시설 보수·보강
  - 사전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및 지속적인 수시점검 실시

- 동절기, 해빙기 및 우기대비 사전 점검결과 지적시설을 우기전 최우선 보수·보강 조치
- 우기전 항구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응급조치후 우기중 특별관리(주기적인 순회점검 및 호우시 수시점검 등)
- 수해예방·복구체제 구축 및 상황관리 강화
  - 비상연락 체계의 확인 및 정비
  - 수해발생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 유지

## 28) 來年度 課題의 對 國民 弘報 : 282(03-70-29)

-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에 해야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할 것('99.12. 7,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주시 바람  
( '99. 9.21, 국무회의시, '99.10. 4, 국무회의시, '99.12.21, 국무회의시)
- 2000년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 홍보
    - 공보관, 주요업무 관련 기자실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
  - 장·차관, 최근의 경제현황과 2000년도의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전 제시
  - 주요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 2000년 예산(안) 재원 및 주요사업별 예산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99.10)
    - 2000년 예산 대국민 홍보자료 작성("세계 일류경제를 지향합니다.") 및 홍보
      - 예산 설명자료 국무회의 보고('00년 제1회 국무회의)
      - 언론기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예산설명자료 2,000부 배포

## 29)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업무보고시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 정책」 수립
  - 국가기술혁신체제의 확립, 전자상거래 확산기반의 조성, 산업의 지식기반화 등 경쟁력 제고 및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여건 조성
  - 안정적인 무역수지흑자 기반의 구축 및 세계적인 투자마당의 조성
  -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의 추진
- 2000년도 업무보고 완료('00. 2.16)
  -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산업혁신정책」 보고
  - 2000년 업무계획 보고(서면보고)

## 30)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하고,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업무보고 세부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00. 3)

- 업무보고 내용을 「국가기술혁신체제의 확립」 등 8개분야로 분류하고 세부실천 과제로 「지역기술혁신체제」 등 161개 과제를 발굴
- 총161개 세부실천과제별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중점 평가 및 점검대상과제 선정('00. 5)
  - 세부실천과제 8개분야 161개 과제중 중점 점검 및 평가대상과제로 6개 실천과제를 선정[국가기술혁신체제의 확립(5개), 전자상거래 확산 기반의 조성(7개), 산업의 지식기반화등 경쟁력제고(14개),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여건조성(8개), 안정적인 무역수지흑자기반의 구축(12개), 세계적인 투자마당의 조성(6개),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의 추진(10개)]
-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계획 제출('00. 6)
  - 2000년 상반기중 업무계획 추진상황 평가('00. 7) : 평가대상 62개 과제 중 2개과제는 완료, 60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평가
  -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대통령비서실, 9월) :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62개 과제별 추진현황,향 후계획 및 문제점/대책을 점검
  - 2000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점검(대통령비서실,12월) :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62개 과제별 추진현황, 달성정도 및 부진사유/향후계획을 점검

### 31) 地方經濟 活性化 對策 樹立 : 383(03-70-42)

- 최근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좋지 않고, 지방경제의 또 하나 문제점은 물류문제로서 현재 지방의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단기 지원대책의 강화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예산 2,350억원을 집행
-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형 특별보증금 총 29,049억원 지원
- 하도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유관기관 등을 통해 독려
- 대기업 403개의 거래실태조사후 226개에 대해서 미지급금 31.3억원을 지급토록 시정조치
- 우수 및 불공정거래업체현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 : 149개 업체

○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 지방경제의 당면문제에 대한 기초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
  - 재래시장 실태조사와 유형별 활성화 방향 정립
  - 지방공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 기존 지역산업 진흥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감리위원회의 감리 완료
- 지방건설 활성화·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경제장관간 담회(10.27), 당정협의(11.01)를 거쳐 확정하고 세부추진계획 마련 및 지자체 지침 시달(시도경제국장회의:11.14)

## 32) 企業에 대한 規制緩和 對策 : 384(03-70-43)

- 최근 정부와 경제단체간의 대화에서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있고,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음. 이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임
- 특히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음. 기업인들이 기업을 자유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기업의 개혁체감도가 큰 핵심규제의 완화
  -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개선대상 핵심규제 발굴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에 개선권고(환경관리인 교육방법의 개선 등 7건)
-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01. 7~8)
  - 전국 404개 기업을 대상으로 511건 과제발굴
  - 수용 205건, 수용곤란 156건, 계속검토 50건.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승강기 검사기준고시개정안등 65건에 대한 규제심사('01. 1. 1~12.31)
  - “규제개혁 실무지침” 작성·배포('01. 6)
-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수립('01. 7)
- 핵심규제의 발굴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33)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공기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여 개선을 추진('00. 9.19, 국무회의시)

- 추진 계획
  - 산업자원부 및 공기업 등 산하기관 지적사항(124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00.10. 2)
    - 지적사항 : 총 124건(산업자원부 3건, 38개 산하기관 121건)
  - 자체(본부)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조치계획 수립·추진

- 한국종합화학(주)와 출자회사 존치 부적정 등 3건
- 산하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기점검 및 이행 독려
  -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조치결과 확인·관리(37개 기관, 97건)
- 추진 실적('02.12.31 까지)
  - 자체(산업자원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3건)
    - 한국종합화학(주) 및 출자회사에 대한 해산 결의 및 청산절차 개시('00.11.30)
    - 산하기관별 자율적인 경영평가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통보('00. 9. 7)
      - 단계적 추진 대상기관에 조속한 이행 촉구('00.12.18)
    - 석탄 관련 공적기관 기능조정 방안 마련('01. 7)
      - 다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처리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계속('00. 6~)
  - 산하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 개정추진중 일부 공기업 민영화(포철, 한중 등)로 제외 : 53개 과제
    - 노동부 유권해석 적용으로 제외 : 10개 과제
    - 개선완료 : 55개 과제
    - 추진중 : 3개 과제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부적정(1개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급여성경비 집행 부적정(1개기관),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1개기관)

### 34) 4大部門 12大 核心 改革課題의 蹉跎 없는 推進 : 392(03-70-46)

- 재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금융·기업부문 개혁은 연내에,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내년 2월말 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00. 9.19, 국무회의시)
- 우리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있고 앞으로 몇 개월간이 우리경제에 중요한시기로 관계장관들은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00.10.31, 국무회의시)

-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 마련
  - 철도차량은 출자전환 및 채권단 부채이관 완료('01. 4)
  - 항공기 통합법인은 주주3사 증자 완료('01. 1) 및 채권단 출자전환 완료('01. 2)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포철은 정부 및 산업은행 보유지분 완전매각을 통해 민영화 완료('00.10)
  - 한국중공업은 (주)두산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주식매각대금 납입 완료('01. 3)
  - 한국종합화학은 대주중공업에 매각 완료('01. 3)

### 35)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 노사간 협의 노력 강화 유도 및 관계부처 협력유지
  - 노사정 간담회 개최('01. 1.29, 2. 2, 2.21) 노조측 면담(5.25, 3. 2) 등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분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방위 홍보를 통해 구조 개편의 우호적 형성 유도(한국가스공사, 난방공사 파업시)
  - 산업단지공단 노사분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01. 6. 8, 6.29) 정부 차원 대책논의
  - 주요일간지에 발전노조 대국민호소문 발표('02. 3. 6) 및 KBS라디오 인터뷰(3. 6), KBS TV출연(3.17), 당진화력발전소(3.10), 명동성당(3. 1) 방문 파업사태 조속해결 당부
  - 4.2총파업대비 관계부처 대책회의(3.27, 3.30, 4. 1) 및 월드컵대비 노사 안정대책 회의(5. 7, 5.15, 5.21)개최, 국정행사의 차질없는 실시
- 노사분규의 부정적 영향확대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전력노조 파업대비 『합동비상대책반』 구성·운영('00.11.19~'01. 4)
  - 파업장기화시(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전사적 비상기구 운영 계획 수립('02. 2. 8~2.28)
-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유지
  - 한국전력공사 발전부문 6개자회사로 분리하는 민영화방안 수립('01. 4)
  - 한국가스공사 구조개편관련 법률안 국회제출('01.11) 및 상임위 상정('02. 4)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추진 계획 확정('01. 1) 및 관련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02. 1)
  - 산업단지공단 열병합발전소 경영권 매각(인수자: STX컨소시엄, 지분 40%, '02.11.22)
  - 반월·구미열병합발전소 민영화 관련, 노사화합 무분규를 선언하는 결의('01.11.27) 유도

### 36) 尖端 未來技術이 될 나노技術 開發 : 407(07-70-52-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미래기술이 될 나노기술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00.12.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시)</li> </ul> |
|--|
- 나노기술의 산업화추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인 「나노기술산업화전략」 수립('01. 7)
  - 나노기술 산업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산·학·연 추진체계인 「나노기술산업화위원회」 구성('01. 7)
  - 나노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나노소자(포항공대), 나노 소재(KIST), 나노공정(KETI) 등 3개의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구축하여 '01~'05년까지 135억원 지원('01. 7)
    - 나노정밀가공TIC('99, 산업기술대), 나노입자TIC('02. 4, 경원대) 등 지역별 거점도 확대
  - 산업화 유망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지원
    - '01년 230억원에서 '02년 300억원으로 확대
  - 나노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촉진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산업발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시 개정('01)
  - 나노기술 중소·벤처기업의 산업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01~'03년까지 6개 과제에 30억원 지원('01.12)
  -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길이, 입자, 박막의 표준화 연구개발에 '02~'06년까지 100억원 지원('02. 3)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나노기술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노기술산업정보망 구축 지원('02. 3)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조성”과 세제 및 자금지원을 통해 나노 기술 전문기업의 창업 및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업 배치법」 개정('02.11)

### 37)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인사청탁은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며,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시)

-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른 객관·투명한 인사행정 실시로 인사청탁근절
  - 각종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실시
    - 서기관 일반승진 행정10명, 기술 4명('02. 3)
    - 5급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관 승진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02. 4)
    - 서기관·사무관 일반 및 특별승진 심사('02. 8)
  - 인사계장 직위공모제 실시
    - 인사계장 직위에 대해 직원들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임자 선발 ('02. 6)
  - 직원별 희망 전공분야·보직 수시파악하여 인사 등에 반영
    - 내부 인트라넷상 인사애로접수창구(인사만사)를 설치하여 전보인사시 수요접수 및 반영('02.10)
    - 7급 신규직원 희망부서 파악('02. 4)
    - 수습사무관 및 승진사무관 희망부서 파악 및 전보인사의 반영('02.11)
  - 상무관 및 해외 파견자 공개 모집 및 선발('02. 6, 11)
    - '02 추계 : 호주, 뉴욕, 허드슨 연구소, 화란 등
    - '03 춘계 : APERC, OECD/IEA, 캐나다.경제연구소 등
  - 단기교육훈련(한국외국어대, 단기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 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회확대 및 선발방법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 공정한 인사의지 천명 등을 통해 인사청탁관행을 사전예방
  - 차관님 월례조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의지 천명
  - (‘02. 4·6·7·9·10월 조회시)

### 38)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것
- (‘01. 5.29, 국무회의시)

- 주요 사업내용
  - 우리상품의 기술력,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월드컵관련 수출촉진이 유망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및 마케팅 지원
  - 월드컵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연계
- 서울스포츠(SPOEX) 레저전(무역협회)
  - 스포츠·레저용품 및 관련서비스 전시(‘02. 3.21~24, COEX)
- 월드컵 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중기청)
  - 월드컵 개최도시에 유망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02. 1~7)
- 일류상품 국내전시회 및 종합수출상담회(산자부)
  - 일류상품, Good Design상품 및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종합수출구매 상담회 개최(‘02. 6. 1~4, 서울무역전시장)
- 일류상품 해외로드쇼(산자부)
  - 일류상품 해외전시회 개최 및 월드컵홍보관 설치 운영
- 월드컵종합박람회 개최(중기청)
  - 유망상품 전시 및 월드컵이벤트 개최(‘02. 5.31~6. 5, 서울무역전시장)



- 코리아수퍼엑스포 개최(산자부)
  - 일본현지에서 엑스포형 종합전시회 개최('02. 6.19~23, 동경)
- 2002 한·일 공동패션쇼 개최(산자부)
  -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패션쇼 공동개최,서울('02. 5.25), 동경('02. 6.22)
- 외국CEO초청(산자부)
  - 투자 유망기업의 CEO초청(50~60인), 수출 및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02. 5.28~6. 2)

### 39) 秋夕綜合對策 마련 : 609(03-70-66)

- 금번 추석에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체불임금, 귀성객 수송대책, 기업 자금공급,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이를 통해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심기 일전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02. 9. 3, 국무회의시)

※ 추진계획 제출은 생략하고 정기실적 보고시 추진실적만 제출

- 산하단체·관련업체에 체불임금, 귀성객 수송대책수립,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협조토록 조치

# 情報通信部

## □ 指示事項 目録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5(07-42-01)  |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                    | 1998. 4.17 |
| 36(07-42-02)  | S/W 산업 진흥방안                    | 1998. 4.17 |
| 37(07-42-03)  | 민영화 추진                         | 1998. 4.17 |
| 38(07-42-04)  | 정보화 수준 강화                      | 1998. 4.17 |
| 122(07-42-05) | 규제개혁 50% 이상 달성                 | 1998. 7.10 |
| 132(07-42-06) | 재외기업인 활용 강화                    | 1998. 7.10 |
| 169(07-42-07) |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8.12. 4 |
| 170(07-42-08) | 신지식인상 정립                       | 1998.12. 4 |
| 171(07-42-09) | 디지털TV 및 CDMA 기술 유망수출품목으로 적극 개발 | 1998.12. 4 |
| 220(07-42-10) |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1999. 4. 1 |
| 221(07-42-11) | 우체국의 역할 강화                     | 1999. 4. 1 |
| 245(07-42-12) |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 1999. 5. 4 |
| 288(07-42-13) | 정보화 역기능에 철저히 대처                | 1999.10.22 |
| 339(07-42-14) | 정보통신 산업발전                      | 2000. 3.27 |
| 340(07-42-15) | 주부 인터넷교육 홍보 강화 및 후속대책 강구       | 2000. 3.27 |
| 387(07-42-16) | 최근의 경제상황에 슬기롭게 대처              | 2000. 9.26 |
| 475(07-42-17) | IT 인력 및 기술개발 강화                | 2001. 2.19 |
| 546(07-42-21) | 전자정부 국제심포지움 개최준비에 만전           | 2001.12.24 |
| 575(07-42-22) | 불건전한 정보유통 방지                   | 2002. 3.13 |
| 576(07-42-23) | 세계시장 진출                        | 2002. 3.13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 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9. 8. 3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53(03-70-11) | Y2K 대책 철저 점검<br>※164(07-70-15)과제와 통합관리 | 1998. 9.15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 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77(07-70-28) | 불법도청의 근절                               | 1999. 9.21 |
| 282(08-70-29) | 2000년도 예산안 및 과제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51(07-70-3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 제고                  | 2000. 4.20 |
| 366(09-70-39) |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 결과에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25(06-70-58) | 월드컵 대비 철저                              | 2002. 3. 5 |
| 545(02-70-62)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추진                  | 2001.12.24 |

## 1) 컴퓨터 利用能力 培養 : 35(07-42-01)

- 정보화사회에 대비 모든 국민이 컴퓨터 이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함
- 전국민이 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  
(’98. 4.1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전국민 컴퓨터 교육 강화(’99. 4. 1, 정보통신부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국민들이 인터넷과 E-Mail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  
(’00. 1.25,국무회의시)
- E-Mail을 생활화해야 함. 모든 면에서 전국민이 정보화되어야 함  
(’00. 3.2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98. 6)
- 우체국 여유허간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강화(’98. 6)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결성·지원(’98. 6)
-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10개 부처 공동으로 각계 각층의 국민의 정보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02년까지의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00. 6)하여 ’02. 6 현재 1,380만명 교육
-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02.12 현재)
  - 전국 116개 우체국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 농·어민,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 전국 2,773개 우체국에 인터넷플라자를 설치하고 866개 읍·면·동사무소에 정보이용시설 설치 지원

## 2) S/W産業 振興方案 : 36(07-42-02)

- 부가가치가 높은 S/W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98. 4.1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서)

- 전국 18개 지역에 S/W지원센터(25개 창업지원시설, 6개 공용장비지원시설)를 설치하여 S/W창업기업에 창업공간, 개발장비, 경영지원서비스 등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S/W창업 활성화를 유도
  - ※ 센터설치 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전주, 강릉, 안산, 충북, 울산, 안양, 제주, 포항, 마산, 목포, 고양, 용인
- 주요 S/W산업 집적지 7개 지역을 지역 소프트웨어타운으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IT진흥기관 설립 및 지역 S/W산업 집적화·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S/W산업 성장거점 구축
  - ※ 소프트웨어타운 지정 지역 : 부산, 광주, 인천, 춘천, 대구, 전주, 대전
- 매년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해외수출 지원
  - ※ '01년의 경우 32개국 61명의 바이어가 참가업체와 1:1 미팅을 통해 1,200만불의 수출 계약(상담) 달성
- 해외 마케팅채널 구축(1,000여개), 해외 전시회 지원(318업체), SI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내 S/W기업 해외진출 지원('98~'02년까지 S/W산업 수출 연평균 74%씩 증가)
- 향후 소프트웨어타운 및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는 지역 IT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해외마케팅채널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 3) 민영화推進 : 37(07-42-03)

- 사업분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손을 떼고, 민간에게 넘겨 주도록 해야 함. 우정사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98. 4.1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우정사업은 장차 민영화를 추진하되, 민영화 전이라도 경영혁신 등 개혁을 철저히 추진할 것 (‘98. 7.10,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우정사업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 1차 개정(‘98.12.30, 법률 제5,601호)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
  - 2차 개정(‘00. 4.12, 법률 제6,196호)
    - 우정사업본부 설립(우정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책임경영체제 강화)
    - 기업적 경영요소 도입을 위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 본부장을 공개모집, 계약직을 채용하여 책임경영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00. 7. 1자 우정사업본부 발족
- 우정사업경영혁신을 위한 「OPEN2001운동」 추진 : ‘98. 6.15~‘00. 2. 3
- 우정사업의 경영혁신 추진
  - 우체국 통폐합 (20개국 통합/ 59명 감축) 및 집배권역 광역화(432개의 집배국 통합, ‘00.10)
  - 감독우체국 관리기능 광역화 (4급 19개국/ 5급 20개국, ‘00.11)
  - 체신청장에게 조직관리 권한 확대(‘00. 8)로 조직관리의 자율성 부여
  - 사무관 심사승진제 도입 (‘00.11)
  - 소속우체국 단위로 상여금 차별 지급(‘99. 4) 및 상여금 지급제도 개선(‘00. 8) 등 경영평가 제도 개선
  - 우체국회계시스템 개선 및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의한 평가제도 도입

- 7대 우편전략상품 선정 및 마케팅 전담조직 구성 (전국 4·5급관서 220개국)
- 국내 최초로 우체국 금융분산시스템 구축·운영('00. 6)
- 우체국서비스 현장 제정·공포('00.10)
- 민간택배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포사업팀」 구성·운영('00.11)
- 공무원 인력감축 : 5,742명('98년 2,184명, '99년 1,212명, '00년 1,348명, '01년 998명)

#### 4) 情報化 水準 強化 : 38(07-42-0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수준이 세계 22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되도록 노력<br/>( '98. 4.1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서)</li> </ul> |
|---|
- 정보화 통계의 체계화
    - 정보화통계집 발간 및 정보화통계 DB 구축('99.12)
    - 국가정보화지표 측정('00. 6)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
    - 전국 144개 주요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국가망 사업 완료('00.12)
    -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01. 6)
    - 초고속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02.12월말 현재 1,040만 가구 가입)
  - 국민정보화교육
    -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99. 3) 및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00. 6)을 수립하여 '02. 6월말 현재 장애인(10만), 농어업인 (14만), 노인(44만), 주부(43만) 등 1,380만명을 교육

○ 장비(PC) 보급

- 저가형 인터넷 PC 보급계획을 수립('99. 7)하여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에 저가형 인터넷 PC 및 중고 PC 23,305대를 보급('02.12월말 현재)

## 5) 規制改革 50%이상 達成 : 122(07-42-05)

- 규제개혁을 철저히 시행하여 금년내 50% 이상 꼭 달성하도록 할 것 ('98. 7.10, 정보통신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금년말까지 기존규제의 50% 이상 철폐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98.10.12, 국무회의시)

○ '98년도 규제정비계획 재검토('98.10.16)

- 실·국별 개선 및 존치대상 사무의 폐지 가능여부 검토

○ 규제 추가 폐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98.10.16)

- 장·차관 주재 대책회의 및 토론회 개최(3회)
- 규제개혁 관계 실·국장 회의 개최(기획관리실장 주재)
- 규제개혁 관련 실무책임자 회의 개최 등

○ '98년도 규제 추가 폐지계획 수립('98.10.30)

- 규제 342건중 182건(53%) 폐지, 70건(20%) 개선

○ '98년도 규제정비 관련법령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등 17개 법령 개정

○ 규제개혁성과 홍보

- 장·차관 출입기자 간담회 및 언론·외신 인터뷰
- 홍보책자 발간·배포(5,000부) : '99. 1
- 중계유선방송을 통한 홍보(860개사) : '99. 1
- 인터넷 게시(국문, 영문) : '99. 2



## 6) 在外企業人 活用 強化 : 132(07-42-06)

-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시 이종문씨가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했는데 후속협의를 잘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8. 7.10, 정보통신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스탠포드 대학에 S/W벤처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IT벤처 CEO 등을 중심으로 스탠포드 벤처비즈니스 연수과정의 파견을 통해 국내 IT벤처비즈니스 활성화 및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
    - ※ 총 140명 수료(’99년 42명, ’00년 48명, ’01년 50명)
- 한·카네기 S/W전문인력 교육 협력사업
  - S/W개발방법론, CMM 등 선진 S/W공학기법을 도입하여 국내 S/W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
  - ’00년부터 2년간 총 22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35명(기업체 21명, 대학 9명, 연구소 6명)의 S/W공학 핵심인력양성
    - ※ 총 105명 수료(’00년 35명, ’01년 35명, ’02년 35명)
- 향후계획
  - 미·스텐포드대학 및 카네기멜론대학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CMM 심사원 및 S/W공학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

## 7) 知識基盤産業 發展對策의 蹉跌없는 推進 : 169(07-42-07)

- 정보통신산업은 미래를 좌우하는 분야로 공공부문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관련되며 정보화가 잘 되어야 구조조정도 뒷받침되고 경쟁력도 갖게 됨. 각 부문 정보화 추진과 이에 따른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98.12. 4,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정부조달업무 전자화 추진
  - 조달 EDI 활성화 방안을 수립('99. 2)하여 조달 EDI 사업을 완료('01. 4)
  - 공공기관 전자조달거래지원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01.12)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02. 9)
- CALS 시범사업 추진
  - 기업간 전자거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99. 8)하여 전자, 자동차, 건설, 국방 등 4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 완료('00.11)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중소기업 ERP 시범구축사업 추진('99. 9~'00.10)
  - 중소기업정보화지원단사업(23개 업체 ERP 구축 지원, 22개 업체 개별 업무 지원, 65개 업체 컨설팅) 완료('00. 6)
- 전자상거래 추진
  -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활성화계획 수립·추진('99. 2)
  -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99. 7)
  - 우체국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 개시('99. 7)
  - 모범상점 인증제도 실시('99. 8)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00. 2)
  -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수립('01. 3)
  - 전자서명법 개정('01.12)

## 8) 新知識人像 定立 : 170(07-42-08)

- 누구든지 고등교육에 의한 학력이 없어도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에 따라 지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지식인상을 세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98.12. 4,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 「신지식인운동 추진반」을 구성하여 신지식인 운동을 범부처적으로 추진('98.12~)
  - 구 성 : 정통부, 교육부, 산자부 등 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반장 : 정책 기획수석실 정책3비서관, 간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에 신지식인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99. 2)
- 정보화정책 전문지 '정보화로 가는길'에 매월 신지식인 소개
- 지속적인 사례발굴 및 홍보 추진

## 9) 디지털TV 및 CDMA技術 有望輸出品目으로 積極開發 : 171(07-42-09)

- 디지털TV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망 수출품목으로 적극개발 추진 ('98.12. 4.,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개최지원 : 매년
- 세계에서 7번째로 디지털지상파 TV방송 개시 : '01.10
- 디지털위성방송 시작 : '02. 3
-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추진
  - 보급대수 103만대 : '02.11말 기준
  - 디지털방송관 조성·운영 :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 대화형 디지털방송기술 등에 7년간('96~'02) 686억원 지원(정부 501억원)
-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추진
  - 디지털방송 전환지원 : '02년 400억원 지원
  - 디지털장비 관세감면 추진 : 1,349억원에 대한 91억원 관세감면('01~'02)
  - HDTV용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지원 : '02년 150억원 지원
- 향후계획
  - 디지털 유선방송 본방송 실시 및 위성HD방송 시작 : '03년
  - 지상파 및 위성 DMB 조기 도입
  - 세계 최초로 전국토 대상 디지털방송(HDTV) 실시 완료 : '05년
  - 디지털방송전환을 위해 '07년까지 4,300억원 지원('03년 : 500억원)
  - 차세대 지능형 방송(SmarTV)기술 개발에 1,255억원 지원(정부 905억원 지원)

## 10) 専門人力 養成과 일자리 創出 : 220(07-42-10)

- 세계 경제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2002년까지 70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임 ('99. 4. 1, 정보통신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대학 등 정규 및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IT전문인력 양성
- 초고속 기간망, 가입자망, 위성 고속인터넷망 구축 등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
  - 전국 144개 주요지역에 초고속국가망 구축 및 781만 가구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01.12월말)
-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 실시
  - 저소득층 학생(50만명), 공무원(2,297명), 장애인(27천명), 노인(85천명)

등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 정보통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CDMA 등 정보통신 기  
기산업의 해외진출 추진
  -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가와 협력 방안 협의

## 11) 郵便局의 役割 強化 : 221(07-42-11)

- 우체국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뿐만아니라 슬픈 소식도 전달하면서  
애환을 같이 해왔음
- 앞으로는 우편배달이나 통신이외에도 문화공간, 컴퓨터교육장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우체국상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람  
(‘99. 4. 1, 정보통신부 국정개혁보고서)

-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센터 및 문화공간 조성
  - 주민의 정보화 수준제고를 위한 정보교육센터 설치 : 116개소
    - ※ ‘99년 34국, ‘00년 32국, ‘01년 25국, ‘02년 2국
  - 우체국 여유허간에 인터넷플라자 설치 : 2,758국
    - ※ ‘99년 174국, ‘00년 986국, ‘01년 761국, ‘02년 837국
  - 지역정보 등 정보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전국 231국
-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정보·물류·금융서비스 국민접점 기지 구축
  - 인터넷쇼핑몰(e-POST) 취급품목 확대(632품목 6,512종)
  - 인터넷우체국 개국(‘00.12),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확충
- 우체국직원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 직원의 정보이용능력 평가 : 2회(‘00.11, ‘02. 5)
  -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01~‘02)

- 정보문화센터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 : 정보보호과정 등 21과정 2,842명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정보활용과정 등 57과정 10,030명
- 사이버 교육 : PC활용 등 11개 과정 9,432명
- 직원 맞춤형 정보화교육('02. 8~11) : IT정책 등 4개 과정 90명
- 직원 정보화자격증 취득 활성화('02.12월말 현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11,776명(전 종사원의 41.3%)
  - ※ 공공행정서비스부문 고객만족도 4년연속 1위 및 '02년도 행정서비스  
현장 평가결과 대상(대통령상) 수상
- 향후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 등

## 12) 컴퓨터 바이러스 對策 : 245(07-42-12)

- 컴퓨터 바이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고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기술 적극 개발('99. 5. 4, 국무회의시)

- 전담팀 구성
  -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컴퓨터 바이러스방지 전담팀 구성('99. 6)
  -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구축·운영('00. 4)
- 컴퓨터 바이러스 예·경보체계 강화
  - '00년 : 보안권고문 43건, 보안기술문서 11건, 사고노트 4건 배포
  - '01년 : 보안권고문 81건, 보안기술문서 11건, 사고노트 16건 배포
  - '02.11 현재 : 보안권고문 93건, 보안기술문서 12건, 사고노트 3건 배포
- 전국민 컴퓨터 바이러스 홍보 실시
  - 일반국민, 주요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월간 및 비상예보 실시
  -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바이러스 점검 스티커 및 예방수칙 배포

- 정보화역기능 공청회 개최('99. 9)
-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매월 15일) 지정·운영('01.10)
  - 플랭카드,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배포
  - 언론,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실시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기술 개발·보급
  - 네트워크용 unknown 바이러스 탐지 및 차단시스템 개발('99.10~'00.12)
  - 바이러스 및 해킹관리시스템 개발('00. 7~'01.12)
  - 컴퓨터 바이러스 시험·분석망 구축 완료('01.12)

### 13) 情報化 逆機能에 徹底히 對處 : 288(07-42-13)

- 음란물 유통, 해킹, 통신비밀침해 등 정보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은 사회 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99.10.22, 국무회의시)
- 사이버범죄, 인터넷 음란물 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막아주고, 청소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더한층 노력해야 함('00. 3.2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정보보호 기반조성 강화
  - 정보화역기능 방지 종합대책 마련 및 국무회의보고('99.10)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00. 8)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01. 1)
  -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 지원('01. 6)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01. 7) 및 시행규칙('01. 8) 공포·시행

- 사이버테러 방지
  -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국무회의보고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00. 2)
  - 정보보호기술훈련장 구축('01. 6)
  - 4개 정보시스템(주민등록, 국세통합, 수출입통관, 시·군·구 행정정보)의 백업센터 구축 완료('02. 6)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00. 4)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00. 6)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구성('01.12)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및 건전정보문화 환경 육성
  - 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 시행('00. 4)
  - 네티즌 윤리강령 제정 선포('00. 6)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 시행('01.11)

#### 14) 情報通信 産業發展 : 339(07-42-14)

- 정보통신산업,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콘텐츠, IMT-2000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국가발전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함 ('00. 3.27, 정보통신부 연두업무보고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02. 1.14) · 동법 시행령('02. 8.14) · 동법 시행규칙('02. 9. 7) 제정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02.12)
- 영세한 디지털콘텐츠기업의 콘텐츠제작·개발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 록 지역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장비구축 지원('00~'02)
  - 춘천, 부산, 전주, 제주, 광주 등 5개 지자체 133억원 지원
-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교류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영상콘텐츠전문투자조합을 민·관 공동결성(500억원)
- 디지털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체에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페어(Fair) 개최('00~'02) : 3회 개최
- 수출 유망한 우수 디지털콘텐츠 상품·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지원을 위한 DC대상 시상('01~'02) : 39개 제품 시상
- IT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00~'02) : 967개 기업, 1,704억원
- IMT-2000 비동기식 개발 단축방안, 무선인터넷 플랫폼 및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계획수립('00~'02)
- IMT-2000 사업자선정 및 CDMA 국내·외 홍보활동 강화('00~'02)
  - ※ '02년말 국내 이동통신산업 규모는 20조 4,647억원으로 성장(내수 6조 2천억원, 수출 114억원)

## 15) 主婦인터넷教育 弘報強化 및 後續對策 講究 : 340(07-42-15)

- 주부 100만명에 대한 인터넷교육에 대해 10만원의 수강료중 7만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함
  - 또한, 주부인터넷교육에 대한 홍보가 좋아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임 ('00. 3.2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서)
- 언론매체, 전광판,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전국에 120여개 전광판을 통한 홍보('00. 7)

- 매월 신문광고 실시
- 지역별로 유선방송, 전단지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
- 지정학원 추가지정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
  - 288개 학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1,000여개 학원에서 주부인터넷교실 운영
  -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급반 신설 운영('00. 5)
- EBS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실시('00. 7~)

## 16) 最近 經濟狀況에 슬기롭게 對處 : 387(03-42-16)

-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해 있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했기 때문에 공동이니셔티브를 발표하자고 한 것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지만 더 노력  
해야 함('00. 9.26, 국무회의시)

- 한·일 양국간 IT분야 교류와 산업계의 협력 활성화
  - 제1차 한·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한·일 IT이니셔티브」 후속 추진  
계획전반에 관해 협의('00.10, 일본)
  - 양국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일본의 우정성, 통산성의 담당국(과)  
의 contact point를 교환기로 합의
- 전자상거래 협력
  -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호  
연동 시험 추진을 위한 MOU 체결('01. 6, 일본)
  -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3차 회의시 개인정보보호마크 상호인정  
MOU 체결('02. 2)
- 양국 산업계 협력

- Korea IT 심포지엄 개최('01. 9)
  - 국내 IT제품 소개 및 수출상담
  - 한국 30개, 일본 52개 업체 참가
- 매년 ICU 학생 1명을 NTT에 인턴쉽으로 파견('01. 7~8에 1명 파견)
- ICU 공학부와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간 연구교류협정 체결('01. 7)
- 부산 IT기업 사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01. 8, 일본 후쿠오카)
- 향후 한·일 양국간 산·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IT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지속 추진

## 17) IT人力 및 技術開發 強化 : 475(07-42-17)

- IT분야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람. 이동전화, 디지털 TV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1. 2.19,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IT분야 인적지원 확충을 위하여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마련('01.12)
- 정규교육기관의 IT분야 정원확대를 통하여 인적자원 확충(총 147개교)
  - ※ 대학원 34, 대학 44, 전문대 44, 실업고 25
- 해외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IT분야 해외유학 지원, 외국 우수 인력유치, IT전문가 객원·겸임교수 활용
- IT 핵심·원천기술을 적기에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02.12)

- 차세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4세대이동통신기술, 지능형통합정보방송 (SmarTV)기술, 차세대인터넷서버기술, 초고속광가입자망기술, 차세대능동형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 등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국책기술개발에 지난 2년간 800억원 지원
-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S/W콘텐츠, 핵심부품, 컴퓨터 분야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체 단독으로 개발하기 곤란하며 2~3년내 개발 후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 지난 2년간 5,422억원 지원('01년 3,155억원, '02년 2,267억원)
- 향후 S/W, 서비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0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20만명의 IT전문인력 양성 등

## 18) 電子政府 國際심포지엄 開催準備에 萬全 : 546(07-42-21)

- APEC 전자정부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우리의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교역과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준비('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회의시)

- 심포지엄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기본계획 수립('02. 1.22)
  - 협약 체결('02. 2.28)
  - 사전 준비회의 개최('02. 2. 7~ 8)
- 심포지엄 개최 및 후속조치 추진
  - 전자정부 국제심포지엄 개최('02. 7. 2~ 5)
    - 전자정부 현안사항 및 APEC 협력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 전자정부 서비스 및 관련 솔루션 전시회 개최
- APEC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전략보고서 채택
- 심포지엄 결과 및 전략보고서를 APEC 고위급회의에 상정('02. 8)
-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상정('02.10)

## 19) 不健全한 情報流通 防止 : 575(07-42-22)

-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어 자살, 범죄, 마약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관계부처는 이러한 부작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람('02. 3.13,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서)

-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 강화
  - 건전한 온라인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 출범('02. 3)
  -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02. 4)
  - 사이버페트론티즌 선발('02. 4)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이행현황 실태조사('02. 4)
  - '인터넷 119' 사이트 오픈('02. 5)
  - '월드컵 사이버 지킴이 대회' 개최 및 시상('02. 6)
-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 한·일간 등급 DB 교환 약정서 체결('02. 3)
  - 해외불건전정보 등급 DB 구축 : 163,106건('02.10)
-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사이버공동체 조성
  - 청소년권장사이트 목록집 발간·배포('02. 3)
  - 정보통신의 날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음악회' 개최('02. 4)
  - 한국정보문화센터내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개소('02. 4)

- 교사, 학생, 공무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02. 6)
- 청소년 권장사이트 모니터링 실시('02. 6~7)
- 깨끗한 사이버 세계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02.11)

## 20) 世界市場進出 擴大 : 576(07-42-23)

- IT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 S/W, 디지털콘텐츠 등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시켜 나가야 함('02. 3.13,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02. 1) 등 법·제도 및 기본계획 마련('02.12)
- 세계주요시장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채널 발굴(6개국 127개) 및 디지털콘텐츠 수출전담 에이전트를 배치(3개국 5명)하여 국내 우수 업체의 해외수출 지원
- 국내 우수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화 지원(49개 업체),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국내 5회, 해외 2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49개 업체)등
- 주요 S/W산업 집적지 7개 지역을 지역 소프트타운으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IT진흥기관 설립 및 지역 S/W산업 집적화·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S/W산업의 성장거점을 구축
- ※ 소프트타운 지정 지역 :부산, 광주, 인천, 춘천, 대구, 전주, 대전
-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98년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8개 해외IT지원센터(iPark)를 설립·운영하여 '02년말까지 수출 176백만불, 투자유치 55백만불을 지원
- 신흥 IT국가간 정부차원의 협력채널 강화
  - 한·베 총리회담 개최('02. 4. 9)
    - LG전자, 베트남 CDMA-2000 시스템 공급업체 확정
  - 한·미얀마 IT차관회담 및 IT협력포럼 개최('02. 4, 미얀마)

- 동남아 IT시장개척단 파견('02. 4, 인도, 인니, 캄보디아)
- 아시아IT장관회의 개최('02. 6. 1, 서울)
  - 서울 IT선언문 채택
- CDMA CEO포럼 개최('02. 6, 서울)
  - 우리나라 CDMA 우수성 홍보
- 유라시아 IT시장개척단 파견('02. 9, 터키, 루마니아)
- 스페인 · 러시아아 IT시장개척단파견('02.10, 스페인, 러시아)
- IT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러시아, 싱가포르, 터어키 등 9개국 해외 IT전문 전시회 중소기업체 참가지원
  -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 26개국 46개팀 202명 파견('02. 7.31~9.27)
  - ASEAN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 사업 수행
    - 국제정보격차해소 포럼 개최('02.11.13~14, 서울)
    - 동남아 IT 기술정책자문단 파견('02.11.21~27, 베트남, 미얀마)
    - 캄보디아 정보접근센터 개소('02.11.25)
- IT산업 해외홍보 강화
  - 영문백서 및 통계자료집 발간('03. 1)

## 21) 部處別 失業 綜合對策 樹立 : 10(03-70-01)

-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대책을 수립할 것 ('98. 3.26, 국무회의시)
-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함. 모두가 노력하여 실업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해야 함('99. 3.16, 국무회의시)

- 정보통신관련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98~'00)
  - 실업대책을 5,199억원의 규모로 추진하여 70천여명의 고용 창출
- S/W벤처기업 등에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 지원
  - 중소기업 신규채용 훈련비 지원('98~'99) : 1,280개 업체, 3,308명 지원
  - S/W인력 DB구축(2,408명), 해외취업 541명, 국내취업 1,473명 지원 ('98~'99)
  - Year 2000 대응기술, 민간부문 정보화기술, S/W 상품화기술 및 전자상거래 촉진기술개발을 위한 분야별 융자사업 시행(160개 업체, 450억원)
  - S/W창업지원 및 산업육성을 위한 S/W지원센터 설치(18개소)하여 164개 업체를 통하여 900여명의 고용 창출
- 정보화 근로사업 확대 시행 및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강화를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
  - 정보화근로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기반 조성사업 실시
    - '98~'01년까지 4,402억원을 투입하여 41개 부처(청) 154개 사업으로 6만여명의 고용 창출
  -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고용인력 2,132명, 2차원 이미지(388,038건) 동영상(4,914분) 개발
  - 학교 컴퓨터교육 인력양성 지원 : 1,380명 교육 실시
  -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통하여 '00.12월말까지 394억원을 투입하여 18,698명을 교육하고 14,293명 수료, 7,550명 취업(취업률 52,8%)
  - '01년 IT전문교육실시 : 일반 IT교육과정(43개 교육기관, 2,665명 교육), 국제공인자격(IRC)과정(97개 교육기관, 12,217명 교육)
  - 소년소녀 가장 등 1만여명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S/W기술교육('00)



## 22) 經濟政策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기관 등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적극적인 자세로 대 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99. 3.16, 국무회의시)

- 언론오보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및 직접해명 실시(70건)

| 구분<br>년도 | 해명자료배포 | 직접해명 | 정정·반론 | 법적대응 |
|----------|--------|------|-------|------|
| '98      | 6      | 2    | -     | -    |
| '99      | 21     | 6    | -     | -    |
| '00      | 26     | 8    | 1     | -    |
| 계        | 53     | 16   | 1     | -    |

- 주요정책 및 사업의 보도발표 등 적극적 홍보 실시
  - 중점홍보과제 및 계기별 홍보 : '사이버코리아21' 계획, 주부인터넷교육, IMT-2000 정책방향 등
  - 보도자료 배포 : 1,291건
  - 정보통신뉴스레터 61-64호(매회 10,000부) 발간 : 주요 여론주도층에 배포
  - 장·차관 일간지, 경제지, 인터뷰 및 TV·라디오 대담 및 기고 : 161회
  - 장관 정보통신정책토론회 개최(출입기자 초청) : '99. 5, 9, '00. 4, 11
  - 지역기관 방문 홍보 및 홈페이지 및 전문지 게재 등

## 23) 各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強化 : 137(03-70-0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li> </ul> </li> <li>○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li> </ul> |
|---|
- 인력감축
    - '98~'00월까지 인력감축 실적 : 4,744명(감축목표 4,744명의 100%, 정  
원상 감축 실적임)
    - '98년도 2,184명, '99년도 1,212명, '00년도 1,348명
      - \* 집배 1,319명, 우편 1,555명, 계리 1,230명, 기타 978명
  - 사업부문별 인력절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지원
    - '00년 4/4분기까지 명예퇴직수당(2913명) 86,314백만원 집행
  - '00년 예산배정시 경직성 경비 자체절감계획 수립 시행(총 357억원)
    - 자체 예산절감 실적
      - '98년도 : 498억원(통특 485억원, 보특 13억원)
      - '99년도 : 1,133억원(통특 1,126억원, 보특 7억원)
      - '00년도 : 654억원(통특)
  - 인센티브 제도 운영
    - '00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 인터넷 역경매 방식으로 구매비 절약(지급액 : 104백만원)
      - 운송망 개편으로 운송료 절감(지급액 : 6백만원)

## 24) 水害關聯 大統領 指示事項 : 138(03-70-11)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 및 위문 격려 및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수해복구 만전 ('98. 8.11, 국무회의시)
- 호우로 인한 통신피해 복구를 위한 통신복구지휘소 운영('98. 8)
    - 정보통신부내에 7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정부로 구성·운영
  - 월릉산에 TRS 중계기를 설치하고 무선단말기 지원(21대)
  - 호우피해지역 봉사활동 참여('98. 8)
  - 수재의연금 모금 기탁(170,679천원)
  - 수해지역 장관방문 위로 격려(남양주전화국, 남양주 운수리일원 피해지역)
  - 무궁화위성을 통한 이동용위성통신장비(SNG) 설치운용
    - 이재민 수용소 수용 : 10회선(경기도 장흥)
  - 서울, 경기지역 이재민 수용소 긴급 무료전화 가설
  - 금촌, 아산지역에 침수된 전화국의 긴급복구 수행
  - 가입자 댁내설비 일제무료 정비
  - 의정부 등 5개지역 수재민가옥 양수지원
  - 전화요금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요금감면 효과 5억원)

## 25) Y2K對策 徹底 點檢 : 153(03-70-11), 164(07-70-1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2K문제는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것<br/>(‘98. 9.15, 국무회의시, ‘98.11.23, 국무회의시)</li> <li>○ Y2K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심시켜야 할 것(‘99. 5. 4, 국무회의시)</li> </ul> |
|---|
- 
- Y2K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부의 Y2K대책반에 관련 부처 및 민간전문가를 확충하여 「Y2K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99. 2)
  - 중점관리분야의 750개 주요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99. 2~11)
  -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비용 융자
    - 정보화촉진기금(‘99, 200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99, 100억원)
    - 실직전산인력과 SI업체를 활용하여 2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순회진단 및 컨설팅 지원(168억원)
  - 「Y2K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전 국민 Y2K 대응안내문 배포(300만 부) 분야별 모의테스트, 전국 PC점검의 날, 중소기업 순회상담 등 다양한 행사실시(‘99. 5.24~29)
  - GPS문제, 99버그 등 Y2K와 유사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Y2K상황실과 분야별 주관부처가 합동으로 비상근무 실시(‘99. 8, ‘99. 9)
  - Y2K 문제해결 추진현황 및 정부차원의 비상대비계획 등의 최종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하에 2차례 걸쳐 관계장관회의 개최(‘99. 9~12)
  - 민간 정보통신업계와 협력하여 Y2K 긴급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의원, 자영업자 등에서 발생한 Y2K문제를 신속히 해결(‘99.12~)

## 26)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경제부처장관들은 투자·일본수출입은행 차관도입·무역문제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마무리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  
(‘98.10.12, 국무회의시)

- 아·태초고속 정보통신 선도시험망 공동연구
  - 회선증속 : 2Mbps→8M(‘99. 3)
  - 아시아 주요 관리기관(APAN, 한국 KISDI, 일본 CRL)에 각 연구망을 상호 연결키로 하는 MOU체결(‘01. 6)
- 멀티미디어콘텐츠 민간 상호교류 촉진
  - 한·일 통신협력위(‘99. 5)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일본 디지털미디어협회간에 멀티미디어콘텐츠분야 상호 교류 추진 합의(‘99. 5)
  - I-Park 동경센터 설립(‘01. 7)
- 양국 연구소간 상호협력
  - 한·일 통신협력위(‘99. 5)에서 ETRI-CRL간 초고속위성 공동실험 등 연구개발 합의
  - ETRI-CRL간 연구분야 확대 협의(‘00.10)
- 전자상거래 협력
  - 한·일 통신협력위(‘99. 5)에서 CNK-TELESA간 SET방식 적용, 결제 및 인증시스템 구축(INGECEP)에 합의
  -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국간 전자서명 상호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호 연동 시험 추진을 위한 MOU 체결(‘01. 6, 일본)
  - 한국, 일본, 싱가포르 3국간의 상호인증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향후 연구작업반의 작업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개최(‘02. 2)

## 2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

- 상위직급의 승진·전보 인사시 출신지별 분포상황을 고려, 특정 지역·학교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안배 등을 반영한 인사 추진
  - 이를 위해 「출신지별 통계자료」를 인사보조자료로 추가·활용('99~)
  - ※ 출신지역 구분 : 경인(서울·경기), 강원, 충청(충북·충남), 호남(광주·전북·전남), 영남(부산·경북·경남), 기타(제주·북한·해외 등)
- 본부의 선호직위 및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에 대하여도 동일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 시행
  - 이를 위해, 본부 핵심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운영('01. 6~)
-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실적주의 인사관리체계 확립
  - 5급이상으로의 승진시 3년간, 6급으로의 승진시 1년간의 업무수행실적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승진심사시 평가자료로 활용('01. 6~) 등

## 28) 빈틈없는 水害對策 推進 : 264(08-70-25)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전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주기 바람('99. 8. 3, 국무회의시)
- 경기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정부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적었음.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00. 8. 1, 국무회의시)

- 재해대비 재난관리계획 수립·추진 ('01. 8)
  - 통신, 우정, 전파, 재난위험시설 관리계획 등
- 재해대비 종합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시설 보수·보강 ('02. 3~5)
  - 대상시설 : 정보통신 전체시설(전국우체국 및 집중국 등 3,000개소)
  - 추진일정
    - 1차(3.11~3.16) :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 2차(4. 1~4.10) : 청·직할기관 등 감독기관 점검
    - 3차(4.29~5.11) : 본부 확인·점검(건축·전기 등 전문직 합동점검)
- 재해대비 여름철 수해방지대책 시달 ('02. 6)
- 재해기간중 재해상황 관리체제 확립('02. 7~10)
  - 재해상황실 구성(3명), 중앙재해대책본부 파견(1명)
- 재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 실시('02. 7~11)
  - 통신회선의 이원화 구성(99.7%)으로 장애발생시 긴급절체
  - 지역별 긴급복구조 편성·운영 (2,888조 15,477명)
  - SNG(2대), M/W(22대), TRS(572대) 등 긴급통신 구성용 장비 확보·운용

## 29) 不法盜聽의 根絶 : 277(07-70-28)

- 불법도청은 일체 남용 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함
-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99. 9.21, 국무회의시)

-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00. 4. 1시행)
  - 통신자료 제공 절차 및 처벌규정을 강화
- 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시행
  - 통신비밀보호업무 시행요령 제작 배부(‘00. 4. 4)
  - 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설명회 개최(‘00. 6.16)
  - 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시행(‘00. 6.10)
  - 전기통신감청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시행(‘01. 9. 1)
- 통신비밀보호법령 개정 추진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견 법무부에 통보(‘00.11. 9)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01.12.29)
  -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02. 3.25)
-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 공개
  -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통계 발표(매년 3, 9월, 반기별)



### 30) 2000年度 豫算案 및 課題 弘報: 282(08-70-2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li> </ul> |
|--|
- 내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보도발표 등 적극적 홍보
    - 연말연시 홍보대책 수립시행
      -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올해 추진한 정책성과  
(‘시외전화지역번호 통합’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사이버 코리아21계획’ 등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 분석 '99.12.23)
      - '00년 예산과 연계한 주요정책 및 내년도 정책방향  
(‘정보화촉진 정책’ 및 새천년 사업소개 '99.12.21)
      - ‘Y2K 비상대비태세 및 대응요령’ 등 현안사항 : 수시발표
    - '00년이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업무강화 추진계획 수립
      - 장관 신문(잡지) 인터뷰 및 TV방송 출연
      - 언론인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추진
      -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정보통신전문잡지 게재 등

### 31)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각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나갈 개혁방향을 보고</li> <li>○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 보고('00. 2. 1, 국무회의시)</li> </ul> |
|--|
- 주요업무 계획 수립 : '00. 2. 1

- 각 실국업무 보고(안) 작성방향에 대한 실국회의 : '00. 2. 2~ 2.10
- 우리부 연두업무 보고(안) 수립 : '00. 3.18
  - 지식정보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지원
    -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게시, 보고책자 및 CD배부·홍보

## 32)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선거관리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li> <li>○ 선거업무 추진 철저('00. 3.21, 국무회의시)</li> </ul> |
|---|
- 선거우편물 소통계획 및 통신지원 대책 마련
    -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선정 및 지휘기구설치 운영
    - 통신지원회선 및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원 대책 수립
    - 통신사업자와 선관위가 사이버공간상에서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관련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운영
  - 투표율 제고 및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
    - 자체 구내방송실시(3회) 및 투표율 제고 홍보계획 시달
    - 부재자 신고요령 시달

### 33) 國家研究開發事業의 內實化와 活用度 提高 : 351(07-70-35)

- 전 부처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늘려 나가야 할 것임('00. 4.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시)

- 중소기업 전용자금 설치·운영
  - 개인사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특허 등 우수한 신기술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00~'02) : 242개 과제선정·지원 (265억원)
- 중소기업 우대자금 운영
  - 정보통신기업체를 중심으로 유망분야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00~'02) : 725개 과제선정·지원 (1,439억원)

### 34)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실천과제 선정

- 15개 정책과제, 37개 단위실천 과제 선정 : '00. 5.31
- 선정된 실천과제의 각 실·국 통보 : '00. 6.22
- 해당 실천과제에 대한 실·국 자체계획 수립·시행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 2/4분기 추진상황 점검 및 국무조정실 제출 : '00. 7.10
  - 3/4분기 추진상황 점검 : '00. 9
  -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국무조정실 제출 : '00.12. 7
  - 연두업무보고 추진상황 자체 평가 : '00.12

### 35)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 지적에 대해 철저한 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
- KT(한국통신)의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 사장 주의 조치 ('01. 9.22)
    -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등 성과급제도 개선 ('01. 9.22)
    - 유급휴가제도를 노사협의를 거쳐 폐지('01. 9. 1)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에 입각한 지급기준 마련('00.11)

### 36)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 사전에 대화하여 설득하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원칙을 갖고 대처하기 바람  
(‘00.10.23, 국무회의시)

#### ○ 정보통신부

- ‘00년도 임금협약 체결(‘00. 2) : 봉급,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
- ‘00년도 상·하반기 노사협의회 개최(‘00. 6, 12)
- ‘01년도 상·하반기 정기체신노사협의회 개최 (‘01. 6, 12)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대회 개최 : ‘00. 7
- 현안사항에 관한 노사간담회 개최 : 14회
- 전국체신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개최(‘00. 4, ‘01. 4) 및 여성간부워크숍 지원 (‘00.10)
- 전국체신노조 지부임원 교육 지원 (‘01. 6.12~6.15 공무원교육원)
- 체신노조 체육대회 개최 지원 (‘01. 7.13 공무원교육원)
- 체신노조 간부세미나 개최지원(‘01. 8.31~9. 1 공무원교육원)

#### ○ 한국통신

- KT의 노사분규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및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합의사항 도출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
- 노사간 평화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호노력과 전사적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노사 합의 (‘01. 3.13)
- 조합과의 지속적인 교섭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표명과 조합 설득 작업 전개로 114분사 합의 도출을 통한 구조조정 마무리(‘01. 6. 9)

- '94년 이후 최초로 임단협 무분규 타결('01. 9. 1)
-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경영이념 확산 및 노사안정 도모  
(노사문화정립 교육 등 총 66회 10,524명 교육실시)

### 37)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국민의 정부 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으니 인사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01. 2. 6, 국무회의)
- 인사청탁의 근절을 위한 공정한 인사환경 조성
    - 인사청탁 배격과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강화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사지침을 마련·시행 (정보통신부 인사운영 기본계획, '01. 6.29)
    - 승진 심사시 인사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
    - 승진심사 기준 등 인사원칙을 심사 사전에 공개
      -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계획, 4·5급 공무원의 전보인사계획 등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및 절차를 정비·개선
    -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상담내용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력개발상담제도를 도입·활용('02. 1.10)
    - 과장급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직급별 「평정서열결정위원회」를 구성·운영('01. 1)
    - 승진심사 절차의 명확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훈령으로 제정·운영 (5급으로의승진임용규정, '01. 6)
    -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및 면접평가를 도입·운영('01.12, '02.10)

### 38) 월드컵 對備 徹底 : 525(06-70-58)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80여일 남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임
  -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안전문제가 관건임. 우리는 작년말부터 월드컵 안전개최를 위해 비상한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 왔음
  - 앞으로도 대테러 및 홀리건 대책 등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하여 반드시 사고없고 안전한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02. 3. 5, 국무회의시)

- 2002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 : '02. 3.27
- 월드컵 통신망 이원화 구축 등 안전대책
  - 주요통신시설 월드컵 대비실태 안전점검 (통신구 14, 주요전화국 5)
  - 경기장별 대회통신 긴급복구 모의훈련 실시 (IMC, 서울상암등 10개경기장)
  -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테러대비 과학보안장비 보강 (24개 시설에 35억 투입)
- 대회참가단에 대한 위해우편물 차단대책
  - 우편물 안전검색장비 확대보급 (X-Ray투시기 19대, 소형금속탐지기 1,000대)
  - 우편물 안전검색 모의훈련 ('02. 4.30~ 5. 2)
  - 우편물 책임검색 강화 ('02. 5. 1~7.15)
    - 우편물 검색용 스티카 5,000만매를 제작하여 우편물 검색시 부착 활용
    - 월드컵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요기관 앞 배달우편물 이중검색 실시
- 월드컵관련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 「해킹·바이러스 대응지침」 제작 배부 ('02. 5, 500부)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배부 ('02. 4, 12,000매)
  - 월드컵기간중 주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 월드컵안전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시 : 장관표창 32명

### 39)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法令整備 早期推進 : 545(02-70-62)

-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개선된 행정 프로세스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관계법령의 정비와 필수적이므로, 법령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야 함
- 특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것임  
(‘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 점검회의시)

-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전자서명법 개정·공포(‘01.12) 및 시행령 공포(‘02. 6.10)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BPR) 수립
  - 정부기관 전산환경 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02. 7)
  -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02. 8)
  - 혁신방안의 단계적 추진전략 제시(‘02.10)



|           |
|-----------|
| 保 健 福 祉 部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0(05-43-01)  | 종교계의 복지참여 활성화             | 1998. 4.10 |
| 21(05-43-02)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철저            | 1998. 4.10 |
| 22(05-43-03)  | 병원의 의약품 구입비리 근절           | 1998. 4.10 |
| 124(05-43-04) | 한시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            | 1998. 7. 8 |
| 125(05-43-05) |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 방안마련 | 1998. 7. 8 |
| 126(05-43-06) |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적극 추진         | 1998. 7. 8 |
| 181(05-43-07) |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1999. 1.27 |
| 182(05-43-08) | 노인복지 담당부서 격상방안 검토         | 1999. 1.27 |
| 188(05-43-09) | 국민연금실시에 대한 홍보 강화          | 1999. 2. 9 |
| 190(05-43-10) | 국민연금실시에 철저한 보완과 차질없는 시행   | 1999. 2.22 |
| 262(05-43-11) | 수해로 인한 보상기준의 일관성 유지       | 1999. 8.24 |
| 301(05-43-12) | 설 연휴 소외 계층 위문             | 2000. 1.25 |
| 306(05-43-13) | 복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 2000. 2. 1 |
| 345(05-43-14) | 노인복지대책 강화                 | 2000. 4.24 |
| 370(05-43-16) |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6.27 |
| 421(05-43-18) | 고 이수현군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강구     | 2001. 1.30 |
| 429(05-43-21) | 금연대책 적극 추진                | 2001. 1.31 |
| 430(05-43-22) | 양성자 가속치료가 설치              | 2001. 1.31 |
| 536(05-43-23) | 콜레라 등 후진국병 방지대책 추진        | 2001. 9.11 |
| 555(05-43-26) |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           | 2002. 2. 8 |
| 556(05-43-27) |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마련          | 2002. 2. 8 |
| 583(05-43-28) | 식단 간소화 시민문화운동 추진          | 2002. 3.27 |
| 10(03-70-01)  | 종합실업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49(05-70-10) | 실업자 대책 내실화              | 1998.10.12 |
| 157(09-70-12) | 방일 후속 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183(09-70-17) | 설 연휴 대책                 | 1999. 2. 2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 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 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대국민 과제 홍보               | 1999. 9.21 |
| 298(03-70-31)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1999.12.28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2(08-70-41) |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           | 2000. 8.2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2000.10.23 |
| 410(08-70-50) | 설 종합대책 마련               | 2001. 1. 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21(05-70-57) | 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      | 2002. 2. 6 |
| 561(05-38-37) | 종교시설을 이용한 탁아사업 추진       | 2002. 2.22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철저        | 2001. 5.29 |
| 531(07-70-59) | 전자정부의 차질없는 추진           | 2001. 8. 7 |
| 608(08-70-65) | 태풍 및 호우피해 조속 복구         | 2002. 9. 3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5 |

## 1) 宗教界의 福祉參與 活性化 : 20(05-43-01)

- 종교계가 복지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정책적 입장에서 종교계 지도자와 논의해서 추진할 것  
(‘98. 4.1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종교계 복지사업 관계자 협의회 구성
  - 종교계 복지사업 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 정기개최(‘98 하반기)
    - 한국 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발족(‘98. 6. 5)
    - 협의회 간담회 개최(‘98. 6.24, 7.30)
- 종교계 복지사업 참여기회 확대
  - 종교계 지도자 면담 및 협조 요청 : 각 종단에 편지발송(‘98 하반기)
    -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지덕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 총 12인을 장관이 직접 방문 또는 면담
  - 종교계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개설지원(‘98. 6~‘99. 6) : 종단별 복지활동 정보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종단 내 복지활동 관심 제고 및 참여 지원
    -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간담회시 지원계획 설명(‘98. 6.24)
    - 9개 교단에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개설지원(‘98.10)
    -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센터 개설현황 중간 점검(‘99. 2)
    -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센터 개설 마무리(‘99. 5)
  - 종교계 인사의 사회복지계 참여 확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98 하반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에 종교계 인사 포함(‘98. 7)

## 2) 食品・醫藥品 安全管理 徹底 : 21(05-43-02)

- 미국의 FDA와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식생활 안전보장에 철저를 기할 것('98. 4.1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 먹는 것에 대한 부정행위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육성('00. 4.24,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 식품과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은 반공익사범으로 처리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1. 1.3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 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조직 신설
  -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분비독성과 신설('00. 5)
  - 식품위해사범 단속강화를 위해 「중앙기동단속반」 신설('01.10)
  - 의약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평가과 신설('02. 5)
- 식품위해사범 벌칙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02. 8)
  - 징역 5년 이하 → 7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과징금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식품·의약품 등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위해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및 단계적 확대(97개 업소 지정)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02. 8)
  - 원료의약품신고제(DMF) 도입 및 시행('02. 7)
- 기능성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02. 8)
- 식품 등 규격·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

- 식품 규격·기준 개정 현황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고시 횟수   | 4    | 1    | 2           | 5    | 6    |
| 제·개정 건수 | 112  | 48   | 1,274(전면개정) | 103  | 400  |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규격·기준 개정 현황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고시 횟수   | 4    | 1    | 2    | 5    | 6    |
| 제·개정 건수 | 156  | 71   | 168  | 46   | 96   |

- 의약품 등 규격·기준 개정 현황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고시 횟수   | 10   | 9    | 10   | 11   | 13   |
| 제·개정 품목 | 374  | 30   | 224  | 187  | 786  |

※ 의약품 등 : 대한약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항생물질

의약품기준, 기능성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

○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의약품 수거·검사 강화

- 국민 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 실적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11 |
|-----------|--------|--------|--------|---------|---------|
| 수거·검사(건수) | 71,450 | 91,569 | 94,400 | 100,490 | 86,572  |
| 부적합(건수)   | 3,681  | 3,878  | 3,059  | 1,372   | 1,080   |

-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실적

| 구 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수거·검사(건수) | 3,014 | 2,938 | 3,012 | 2,335 | 2,336 |
| 부적합(건수)   | 127   | 232   | 47    | 35    | 54    |

○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

- OECD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GLP) 구축

- 일반독성시험분야 전산화사업 완료('99.12)
- 유전독성시험분야 전산화사업 완료('00.12)
- 발암성시험 분야 전산화사업 완료('01.12)
-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기준에 적합한 생물학적 제제 실험동 신축 중 ('03. 2월 완료예정)

### 3) 病院의 醫藥品 購入非理 根絶, 醫療界 非理剔抉 : 22(05-43-03)

- 병원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비리가 많아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런 비리를 근절할 것 ('98. 4.1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들이 고가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병원과 제약회사가 결탁하여 고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차액을 챙기는 등 병원비리는 없어야 함 ('99. 4.28, 보건복지부 국정개혁 보고시)

- 의약품 비리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 개혁방안 등 개선 대책수립('98. 9.19)
  -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불체계 개선
-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단장 : 차관) 구성·운영('98.10. 7)
- 의약품 유통계획 세부추진계획 확정('99. 8.13)
-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의약품 포장에 바코드 부여 의무화('99.10. 1,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 의약품 유통정보센타 전담사업자 선정 및 기공식('00. 4.17)
  -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00. 4.~'01. 5)
  - 주문거래 시스템 운영개시('01. 7. 1)

- 제약회사, 도매상 공동 출자의 『의약품물류센타』 설립 : 의약품 보관 및 배송
  -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임원으로 구성된 물류조합설립위원회 운영('99. 1.19)
  - 물류조합 발기인 대회개최('99. 8.20)
  - 물류센타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출자금 모금 ('00. 9, 147개사)
  - 물류조합구성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01. 3.27)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법인설립 허가('01. 7. 5)
-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및 자료분석('98. 9~'99. 1)
    -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550개 기관조사
  -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
    - 기본계획 확정('99. 8.13)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99.11.15)
  -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 실시(계속)
    - 반기별 1회 실시
    - '00년 상반기 사후관리 실시에 따라 보험약가 3.0%인하('00.10. 1)
    - '00년 하반기 사후관리 실시에 따라 보험약가 8.67%인하('01. 3. 7)
    - '01년 사후관리 실시에 따라 보험약가 인하 : 평균 5.35%인하('01. 8. 8, 1,715개 품목), 평균 6.15%인하('01. 9.20, 663개 품목), 평균 2.89%인하('02. 3. 8, 323개 품목), 평균2.98%인하('02. 6.27, 782개 품목)
    - '02년 상반기 사후관리 실시에 따라 보험약가 인하 : 9.14% 인하('02. 6.29, 776개 품목), 9.62%인하('02.11.13, 72개 품목)
-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가미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의 현실화 추진
  - 의료보험 약가인하 30.7%('99.11.15)

- 진료수가 조정 : 약가 인하와 상계하여 인상
  - 제1차 진료수가 인상 12.8%('99.11)
  - 제2차 진료수가 인상 6%('00. 4)
- 의약분업에 따른 초기비용 보전
  - 진료수가 조정 9.2%('00. 7)
- 원가 보전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조정
  - 진료수가 조정 : 6.5%('00. 9), 7.08%('01. 1)
  - 환산지수 조정 : -2.90%('02. 4), 2.97%('03. 1)

#### 4) 限時生活保護事業의 積極 推進 : 124(05-43-04)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31만명을 책정하였으나 4만여명이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임. 예산도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유감임. 하반기에는 잘 시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98. 7. 8,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한시적 생계보호자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량 조정('98. 8.)
  - 생계보호자 77,500명 → 155,500명, 자활보호자 232,500명 → 155,500명
- 실업대책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합동회의시 사업의 적극 추진 독려 ('98.10)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사업 추진 독려('98.10~11)
- '98. 8월 사업량 조정 이후 생계보호자가 급증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 됨
  - '98.12.18 현재 309천명 보호 중, 추진율 99.4% 추진
    - 생계보호(실적/추진) : 170천명/155천명, 추진율 109%
    - 자활보호(실적/추진) : 139천명/155천명, 추진율 89.6%



- 결식아동 세대, 임대아파트 및 의료보험료 장기체납 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
- 일선 사회담당 공무원의 생활보호 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 5) 醫療保險 統合時 保險料의 公平한 賦課方案 : 125(05-43-05)

- 봉급자의 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노출되지 않아 봉급자들이 의료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실현할 것
- 또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현 제도를 시정,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할 것  
(‘98. 7. 8,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지역 자영자에 대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방안 마련(1단계)
  - 전국의 농어민, 자영자 등에 대하여 능력비례 보험료부과의 원칙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체계를 통일, 소득·재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세대별 정액보험료는 폐지
    - ‘98. 4월 연구용역 실시(‘98. 5~9까지)
    -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정책토론회 실시(‘98. 7)
    - ‘98.10월부터 전국 지역피보험자(2,200만)에 대하여 적용
-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방안 마련
  -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방안 연구용역 실시(‘98.12~‘99. 7 )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연구용역 실시(‘00. 3~‘01. 4 )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모형 및 지역간 보험료 분담 방안
  -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 ‘02. 1. 1 시행

## 6) 都市 自營業者 國民年金 적극 推進 : 126(05-43-06)

- 금년 10월부터 전국민연금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상황을 보아 국민연금법을 우선 처리토록 할 것  
(‘98. 7. 8,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전국민 연금 확대준비
  -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적용 준비를 위해 '97. 1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동으로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실무추진반」
  - 자영자 소득과약 방안에 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 기존 제도의 기본골격을 가지고 확대시행 가능성 및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98. 2.16부터 3.14까지 서울시 반포3동 등 4개 지역에서 당연적용 가입대상자 15,63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사업 실시
- 국민연금법개정안 공포('98.12.31 법률 제5623호)
  - '99. 4. 1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 국민연금 당연 적용 : 전국민 연금실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급여수준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0%로 하향 조정하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65세가 되도록 함

## 7) 老人團體에 대한 支援方案 講究 : 181(05-43-07)

- 노인 단체들이 공동 입주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중앙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연구  
(‘99. 1.27, 노인의 해 사업계획 보고대회)

- 중앙노인복지회관 건립지원
  - 총 사업비 66억 중 ‘02년 15억(설계비 등) 확보했으나, 노인단체의 사업계획 변경·확대(2,000억원 규모)를 요청하는 청원을 국회 제출(‘00. 9)로 미집행
  - ‘03년 대지 구입 및 설계비 등으로 20억원 확보
-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정부예산 지원확대
  - 사전 준비행사 및 효도 박람회 등 사업추진비 지원 : 189백만원(‘99. 4)
  - 노인지역 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및 한마음 3세대 걷기대회 경비 등으로 추가지원 : 277백만원(‘99. 7)

## 8) 老人福祉 擔當府署 格上方案 檢討 : 182(05-43-08)

- 노인의 비중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를 격상시키는 방안강구(‘99. 1.27, 보건복지부 노인의 해 사업계획 보고대회)

- 고혈압, 치매 등에 대한 노인보건 시책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보건과 신설  
(‘99. 5.24)
- 노인보건복지국 신설(안)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나(‘00. 5.30), 노인보건과 신설로 국으로의 격상은 추후 검토과제로 결정
  - 3개 과 28명 규모(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진흥과, 노인보건과)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대, 업무의 다양화와 노인복지 관련 국제적(OECD, WHO 등) 흐름에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노인보건복지국 격상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조속한 국 신설 방안 추진 제시('02. 7)

## 9) 國民年金 實施에 대한 弘報強化 : 188(05-43-09)

- 국민연금실시에 대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 노력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음
-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이 정확히 알려지도록 하고, 장관의 TV출연이나 신문기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99. 2. 9, 제5회 국무회의시)
- 국민연금보험료 문제에 봉급자들의 불만이 연일 언론에 보도됨
  - 자영업자가 이익을 보고 봉급자의 희생만이 크게 보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실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함('99. 5. 4, 제16회 국무회의시)

- 대국민 홍보활동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합동으로 홍보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홍보활동 전개('98. 7월부터)
  - 공단에 외부전문가를 단장으로 하는 홍보기획단 및 지역홍보실시단을 구성하여 기존의 홍보체계를 개편하고 「비상홍보종합대책」을 수립('99. 3. 2)
- 매체홍보 전략
  - TV 캠페인 및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 언론기관, 대학교수,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관계자 등에 대한 대담, 강연, 간담회, 설명회(세미나) 실시
-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금글짓기 대회를 실시하는 등 미래의 가입자인 청소년에 대한 조기 홍보활동을 강화
-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통하여 제도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법 그리고 연금수급권자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상을 TV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

## 10) 國民年金의 徹底한 補完과 蹉跎없는 施行 : 190(05-43-10)

- 국민연금은 노령화 시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의견 수렴과 국민연금제도 적극적 홍보, 공단의 관료주의 타파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여론 수렴, 신고기간의 적절한 조정 등 철저한 보완을 통해 국민연금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고, 각 부처는 적극 지원바람('99. 2.22, 제6회 국무회의시)
- 국민연금 확대 시행 전까지 보완하여 차질없이 시행 ('99. 3.30, 제11회 국무회의시)
- 국민연금제도 정착 및 기금의 투명한 운영('99. 4. 7, 국정개혁 보고서)

- 형평성 문제해소를 위한 소득상향 조정
  - 전체 평균소득월액 : 1,096천원('99. 4) → 1,349천원('02.10)
    - 사업장 : 1,440천원('99. 4) → 1,689천원('02.10)
    - 지 역 : 785천원('99. 4) → 977천원('02.10)
- 납부예외자의 소득신고 전환
  - 2002. 10월까지 1,658천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
    - 납부예외율 : 54.5%('99. 4) → 43.0%('02.10)

- 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 및 민간위탁투자비중 확대
  - 수익률 : 4.69%('00) → 8.99%('01)
  - 위탁투자금액 : 2,000억('00) → 1조 8,000억('02)
    - 벤처, 해외투자 등으로 민간위탁투자 실시

## 11) 水害로 인한 補償基準의 一貫性 維持 : 262(05-43-11)

- 수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문제이며, 정부를 원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수해희생자 보상금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수재의연금재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람('99. 8.24, 국무회의시)

- 수해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마련('99. 9. 7)
  - 사망·실종자 : 1,000만원/명, 부상자 : 500만원/명, 주택 전파 : 300만원/동  
주택 반파 : 150만원/동, 침수 주택·상가 : 60만원/세대·상가  
월동 대책비 : 30만원/세대, 연료비 : 12~36만원/세대
  - 이재민 구호 2개월 : 12만원/세대, 이재민 구호 4개월 : 24만원/세대  
이재민 구호 6개월 : 36만원/세대
- 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 개정 -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02. 8.30)

## 12) 설 連休 疎外 階層 慰問 : 301(05-43-12)

- 설 연휴를 맞아 정부 각 부처 간부들이 소외계층을 위문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리에게 보고하기 바람  
(‘00. 1.25, 국무회의시)

- 어려운 이웃 위문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등이 소외계층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267천명이 5,815개 시설 방문, 1,587백만원 상당 위문
    - 생활보호대상자 등 위문 : 314천명이 29,721세대 방문, 1,515백만원 상당 위문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이 소외계층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23천명이 5,063개 시설 방문, 2,477백만원 상당 위문
    - 생활보호대상자 등 위문 : 70천명이 493,739세대 방문, 12,049백만원 상당 위문
- 사회복지시설 자체행사 실시
  - 전국 350개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위해 윗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위안행사 개최
  - 노인·아동·장애인 시설에서 차례상 차리기, 사랑의 떡국나누기 등 실시

### 13) 福祉政策의 一貫性 있는 推進 : 306(05-43-13)

-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적자원의 개발과 복지정책이 대단히 중요함
- 분야별 관계 장관회의 설치를 계기로 정책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복지정책이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복지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관계 장관회의 설치('00. 3. 6)
    -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대통령비서실 등을 중심으로 설치
  -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실천방안 심의·조정
    - 1차 회의 : 빈곤 퇴치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계획 등('00. 3. 9)
    - 2차 회의 : 노인·장애인 일거리 대책 마련 등('00. 4. 3)
    - 3차 회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 ('00. 4.20)
    - 4차 회의 :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확대방안 등('00. 5.10)
- ※ '00. 7월부터 사회장관회의로 바뀌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



## 14) 老人福祉對策 強化 : 345(05-43-14)

- 늙어서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며, 노인의 행복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임. 노인의료제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보건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건강한 노인에게는 직장을 주거나 일감을 알선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00. 4.24,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서)
- 노년층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대책 강구  
(8.15 경축사 후속조치)
- 자식이 직접하는 사적인 효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회적 효 또는 공적인 효가 병행되어야 함(‘01. 5. 8, 국무회의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 요양시설 7개, 전문요양 31개, 치매요양병원 10개 지원(‘02)
    - ※ 요양시설 8개, 전문요양 35개, 실비요양시설 28개, 치매요양병원 9개 지원예정(‘03)
  - 치매요양시설 확충·운영(29 → 47개소)
  - 노인본인부담금 감면대상 확대(70세 → 65세)
  -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방향”설정
    -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수요, 공급, 재원조달방식 및 재정추계 등에 관한 연구용역 완료(‘01.12.26)
    -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02.11)
- 일거리마련 등을 통한 사회참여 지원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추진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20개소 운영)

- 노인 일거리마련 사업실시(253개 시·군·구 - 월 40만원)
- 공동작업장 지원확대(27개소 - 개소 당 600만원)
-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지원(70개소 - 개소당 월 50만원)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지급 기준 완화('02)  
(지급단가 5,000원씩 인상, 재산기준 4,000만원 → 가구당 5,040만원)
  -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 : 일 81천명(937개소)
- 체계적·종합적인 노인대책 수립
  - 소득보장, 취업지원, 건강보장, 교육·문화·여가 기회확대, 실버산업활성화,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57개 과제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02. 7.15) 및 과제별·연도별 실행계획('02.10. 2)마련

## 15) 醫藥分業의 蹉跎없는 推進 : 370(05-43-16)

-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00. 6.27, 국무회의시)
  - 의약분업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처('00. 6.20, 국무회의시)
- 대국민 홍보·교육('00~'02)
    - 의약분업 시행 초기
      - 공무원, 시민 등 200만명 교육
      - TV 200회, 라디오 610회 홍보, 리플렛 등 900만부 제작·배포
    - 의약분업 시행 2년 후 성과 및 평가 홍보

- 조선일보 등 15개 일간지에 광고 게재 및 의·약계 호소문 발송
- 대국민 홍보 리플렛 배포 및 기자 간담회 개최
- 의·약계의 신뢰회복 및 참여 유도
  - 의·약계 요구사항 수용
    -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금지 및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 제공
  - 의료제도발전특위 및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위 구성·운영
  -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단체와 면담
  -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운영
  -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중앙 및 특별 감시단 구성·운영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 전문·일반 의약품의 재분류 및 공휴일·연휴시 당번약국 운영
  -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허용 등

## 16) 故 李秀賢君에 對한 政府 支援方案 講究：421(05-43-18)

- 이국땅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이수현군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강구 ('01. 1.30, 국무회의시)

- 훈장 등 영전수여('01. 1.30)
  - 국민훈장 석류장
- 의사자 심사결정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 : 128,400천원

## 17) 禁煙對策 積極推進：429(05-43-21)

- 담배는 암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등 피해가 많음
  -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금연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솔선하여 금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TV에서 인기있는 주연들이 멋진 포즈로 담배 피우는 모습 등은 방송사와 협력해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바람  
(‘01. 1.3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국무회의에 금연종합대책보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발표(‘01.11)
- TV드라마 등의 흡연장면 방송 자율규제 강화
  - TV방송의 흡연장면 규제대책회의 실시(‘02. 2.19)
  - 주요방송사(KBS, SBS)의 흡연장면 추방결의(‘02.12)
- 금연사업확대를 위한 관계법령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03. 7, 시행예정)
  - 정부청사, 학교, 병원, 유치원 등 금연시설로 지정
  -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등
- 금연공익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교육강화
  -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금연공익광고 실시(‘02. 2~12)
  - 학생, 직장인, 군인·전투경찰 지역주민 등 금연교육실시(‘02. 1~12)
- 흡연자 건강생활 지원
  - 40대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등 건강검진 실시(5,500명)
  - 흡연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400개소)
- 금연 포털사이트운영 및 교육자료 보급(‘01~‘02)
  - 초등·중등, 고등학생 대상별 금연비디오 제작·배포

## 18) 陽性子 加速治療機 設置 : 430(05-43-2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나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암 치료기술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임</li> <li>○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가속치료기(Proton Therapy)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01. 1.3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li> </ul> |
|---|
-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의뢰('01. 5)
    - 한국보건사회진흥원
  - 양성자치료기도입추진단 구성('01. 1)
    - 하버드대학, Loma Linda 병원 등 방문조사
  - 사업계획서 작성
    - '02년 예산 100억원 확보, '03년 230억, '04년 150억 확보(계획)
  - 자문변호사 선임계약('02. 4~'05. 3, 환자 치료시까지)
  - 양성자 치료기 구매계약 체결('02. 6)
    - 벨기에 IBA사(방사선치료기 전문제조회사), 금액 358억
  - 건축설계 완료('02.10.28)
    -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390백만원
  - 건축공사 입찰('02.12.16)
    - 연구동 건립 등 공사와 통합 추진, 시공회사 두산중공업(주), 입찰금액 387억
  - 향후 치료센터완공, 검사 및 시험 가동('04. 8~'04.12)
  - 환자진료 개시('05. 1 예정)

## 19) 콜레라 등 後進國病 防止對策 推進 : 536(05-43-23)

○ 최근 콜레라를 비롯하여 홍역, 말라리아 등 후진국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 보건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후진국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처바람('01. 9.26, 국무회의시)

- 전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 「역학조사반」 연중 편성·운영으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 : 총 260개반
    - 중앙 : 2개 반, 시·도 : 16개 반, 시·군·구 : 242개 반
  - 전염병 감시 모니터망 확대운영(민간 병·의원, 약국 등 19,430개소)
  - 콜레라 보조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75개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340개소)
- 전염병 정보 관리강화
  - 전염병 관리요원 전문화 추진
    - 일선 전염병 전문요원 집중 교육실시(750명, '02. 3.18~3.28)
    - 신규 역학조사관(공중보건 의사) 전문교육 실시후 각 시·도 배치(23명)
  - 전염병 발생 사전 예측·예보제 실시 및 전염병 정보망 확충
    - 17개 질환에 대한 2,600여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관리
    -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전염병 정보망』 확충 :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120개소 및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48개소
- 『말라리아 퇴치 10개년 계획』 수립·시행('01~'10)
  - 말라리아 위험지역(강원, 인천, 경기 등 DMZ 접경 12개 지역) 특별관리 및 방역활동 예산지원 : 170백만원
  - 남북 공동 말라리아 퇴치사업 전개 : 대북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지원
    - 치료 및 소독약품·장비 등(60만달러), 검사요원 훈련비(3,500만원)

- 대국민 개인 위생수칙 교육 및 홍보강화
  - 범국민 캠페인 전개, TV·라디오 등 언론활용 홍보 및 전단, 스티커 제작 배포 및 보건위생교육 실시 등

## 20) 國民年金에 대한 對備策 마련 : 555(05-43-26)

- 국민연금의 장래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미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여 잘 해결해 나가주기 바람  
(‘02. 2. 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 전망과 제도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 이를 위해 사회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발족(‘02. 3. 19)
  - 산하에 제도발전 및 재정분석전문위원회 설치
    -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 현행제도 내실화 방안, 급여 합리화 방안 마련
    - 재정분석전문위원회는 재정추계 모형 및 각종 변수 확정, 재정추계 실시
- ’02.3월~12월까지 국민연금발전위원회 4회, 제도발전전문위원회 17회, 재정분석전문위원회 10회 개최
-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발전방안 및 장기재정 안정계획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03. 3)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보고 및 국회제출 (‘03.10)

## 21) 國民健康保險 財政安定對策 마련 : 556(05-43-27)

- 국민건강보험도 우리에게서 큰 관심사인데 작년 일년동안 어느 정도 기초는 잡아 놓았다고 생각됨
- 앞으로 보다 철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금년 안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국민앞에 제시해주시기 바람 ('02. 2. 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건강보험 재정안정 보완대책 수립·시행
  - '01. 5월 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이후 지속적인 추가보완대책 시행으로 재정안정기조 회복
    - 당기 적자규모 '01년 2.4조원 → '02년 7,600억원으로 축소
    - '03년 보험료 8.5%, 수가 3% 인상조정으로 균형재정달성 여건조성
  - 정부지원 50% 법제화, 징수율 제고 등 보험료 수입 확충노력으로 재정수입 기반 확대
    - 정부재정지원 : 30,139억원 (국고 25,747억원, 담배부담금 4,392억원)
    - 징수율 제고 : 지역보험 누적징수율 당초목표 95%→99.5%로 높임
  - 강도높은 급여비 절감대책과 수가인하(△2.9%)조치로 급여비 증가율을 한 자리수(4.9%)로 억제
    - '97년~'01년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 : 21.7%
- 앞으로 재정안정대책을 착실히 시행, '03년 균형재정달성, '06년까지 재정적자 완전해소 추진



## &lt;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전망 &gt;

(단위 : 억원)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지 출  | 140,511 | 146,510 | 159,787 | 179,884 | 203,292 | 229,661 |
| 수 입  | 116,423 | 138,903 | 160,206 | 183,399 | 212,176 | 245,733 |
| 당기수지 | △24,088 | △7,607  | 419     | 3,515   | 8,884   | 16,072  |
| 누적수지 | △18,109 | △25,716 | △25,297 | △21,782 | △12,898 | 3,174   |

## 22) 食團簡素化 市民文化運動 推進 : 583(05-43-28)

- 식단 간소화 문제는 권장만 해서는 안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몽해 나가야 함
- 식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식단 간소화를 시민 문화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02. 3.27, 환경부 업무보고서)

- 식단간소화 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개최('02. 6.24)
  - 기존 인센티브 외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 식단간소화사업추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22,000개소 → 25,000개소)
- 식단간소화 운동 교육·홍보강화
  - 음식물낭비방지를 위한 실천일기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02. 6)
    - 전국 3,500개 초등학교, 35,000부 제작 배포
- 국정홍보처 전광판 활용 홍보('02. 6~계속)
- 관련단체에서 식단간소화 실천 결의대회('02.12. 6~7)
  -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주관, 충북 수안보

-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공무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110명
- 식단간소화 시민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03. 2)
- 식단간소화 시민문화운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03. 3)
- 식단간소화 사업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우수실천업소, 시·도, 관련 공무원 등 표창실시('03. 3)

## 23) 綜合 失業對策 樹立 : 10(03-70-01)

- 종합실업대책을 숙지하고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98. 3.26, 국무회의시)
- 『서민생계안정대책본부』 설치, 저소득 실직자 등의 생활안정사업 추진('98. 3.30)
    - 시간제 근로자 등 저소득 임시·일용직 근로자(가족포함 311천명)를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 지원('98.12.18 현재 309천명 보호)
    - 자활보호 265천 가구에 15만원씩 월동생계비 398억원 지원('98.11.25)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특별취로사업 실시(연인원 1,733천명 참가)
    - 노숙자에게 잠자리 제공, 전문상담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전개(200억원)
      - 노숙자 쉼터 138개소 설치, 종합서비스 제공(4,000명/일)
      - 종교·봉사단체 등에서 무료급식소 36개소 설치 운영
  -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57만명으로 확대하여 보호(사업비 국고 3,366억원)
  -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자활보호자에게도 생계비 지원(사업비 국고 2,340억원)
  -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실시

|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
| 예산(국고, 억원) | 250 | 1,000 | 5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br>제정으로 자활사업으로<br>통합실시 |     |
| 인원(천명/월)   | 41  | 63    | 42  |                                  |     |

- 노숙자에 대한 무료급식, 잠자리 제공, 일자리 알선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추진(사업비 국고 171억원)
  - 보호인원 4,500명, 무료숙소 138개소, 무료 급식소 174개소, 의료구호 41개소, 상담소 149개소, 유료봉사원 600명

## 24) 經濟政策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정부의 홍보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
-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이루고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  
(‘00. 1.25, 국무회의시)

- 오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 보건복지정책 관련 현안사항 설명 및 간담회 등 실시
    - 설명회 : 444회, 간담회 : 80회, 정책세미나 : 14회(‘98~‘00)
- 효율적인 오보 대응체계 확립
  - 자체교육교재 「바람직한 공보업무」 제작 및 배포(‘98)
  - 오보 발생시 적극 대응체계구축 등
- 신문, 방송 등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372건(‘98~‘00)

- 방송출현, TV광고, 신문광고 및 홍보물 제작('98~'00)
  - 의약분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출범 등 제작방송
  - 새천년 복지비전 2010,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비디오 등 제작배포

## 25)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 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계획 수립·시달('00. 2.17)
- 2000년도 예산절약 실적보고('01. 1.29) → 예산절약성과금심의위원회
  - 행정경비 : 관서운영비 등 445백만원 절약
  - 사업비 :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개·보수공사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묘지관리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146백만원 예산절감
- ※ 다만, 사업비 예산 절약사업이 당해 연도 비예산 사업인 관계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6) 水害關聯 大統領 指示事項 : 138(08-70-09)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전 국무위원은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격려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해대책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 수해복구 만전('98. 8.17, 국무회의시)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설치·운영
  - 4개 반 13명, 24시간 비상근무(연 243명)
- 이재민 구호
  - 사망·실종자(322명)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 국고 507억원, 의연금 109억원
  - 대한적십자사 구호활동 : 인원 10,705명, 구호품 11종 84천점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구호활동 : 구호품 1,455천점
- 방역활동
  - 방역소독 : 17,501회
  - 예방·관리대책 홍보 : 전단 319,360매, 가두·마을방송 2,556회, 방송출연 등
  - 점검반 파견 및 순회 지도 : 21개 반, 30개 보건소
- 의료지원
  - 2,044개 의료지원반(7,314명) : 이재민 99,417명 진료
  - 의약품 등 지원
- 위생지도
  - 270개 점검반(1,080명) 편성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급식관리 등 지도
- 중앙재해대책본부 파견 : 우리부 직원 파견

- 준비태세 확립
  - 전국보건소에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27) 失業者 對策 內實化 : 149(05-70-10)

- 동절기를 대비하여 서울시에서 노숙자 수용소를 설치했지만 노숙자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발생한 노숙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98. 9.15, 국무회의시)
-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방안 보고('98.10.12, 국무회의시)
- 실업자 및 노숙자 대책('98.11.10, 국무회의시)

- 노숙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안정화 차원의 대책 추진
  - '99. 3월 6,500명/ '99.12월 5,500명/ '00.12월 5,200명/ '01년12월 4,800명/ '02.10월 4,200명
- 노숙자 쉼터(117개소) 내 알콜중독 예방, 심리치료, 사회성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 실시('99하반기~)
- 거리노숙자를 위한 이용보호시설(Drop-in center)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운영('02. 3)
- 향후 노숙자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및 노숙자 쉼터를 분야별로 전문화

## 28)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방일 성과의 실효성은 양국간의 문서로 협의한 43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정보·의견 교환실시 ('98.10.12. 국무회의시)

- 대통령 방일시 양국간 사회보장제도 정보교환 추진에 합의('98.10)
- 표제 협정 체결을 위해 상호 정보교환 등 일본측에 협조요청('98.10.19)
- 일본 후생성에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제1차 설명회 개최('00.10.31~11. 1)
-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본 후생성장관 면담 ('01. 8.31)
  - 한·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조속 추진에 합의
-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은 협정 체결교섭의 조속한 개시를 희망('01.10.15)
- 한·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예비회담 서울개최 ('01.12.20~12.21)
- 한·일 사회보장협정 제2차 예비회담 동경개최 ('02. 6.18~19)
- 한·일 사회보장협정 초안 송부 ('03. 1)
- 한·일 사회보장협정 1차 실무교섭회담 서울개최('03. 상반기)

## 29)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98.11.23, 국무회의시)
- Y2K 문제 발생에 대비('99.12.28, 국무회의시)

- 보건복지분야 Y2K 대책반 구성('98. 4)
  - 의료기관의 Y2K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전담반 발족·운영('99. 3)
- Y2K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 Y2K 문제해결 독려를 위해 전국 병원장에게 장관서한 발송('99. 2)
  - 의료분야 Y2K 문제해결 세미나 개최(서울 및 지방순회 총 9회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Y2K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기인증 심사절차 등 교육실시('99. 8)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Y2K란 개설·운영
- 의료기관 현장점검 및 문제해결 지원
  - 규모별 표본병원에 대한 실무점검('99. 2)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Y2K해결실태 일제조사('99. 6)
  - 진척도가 미진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99. 7~9, 10, 11월 총 3회)
  - Y2K문제해결 완료기관 현장 확인·점검실시('99.12)
  - 윤년문제 대상장비를 소유한 병·의원 현장점검 및 지도
- Y2K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전국 병·의원의 자기인증제 실시
  - Y2K 미해결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발동
- 2000년 전환기간('99.12.30~'00. 1. 4)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 합동 비상대책반, 시·도 Y2K 상황반 설치·운영
  -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1,035개소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총 1,050개 기관에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윤년문제 대응 의료분야 비상근무 실시('00. 2.28~2.29)
- 의료분야 정상운영 선언('00. 1. 4)



### 30)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99. 1.12, 국무위원회시)

-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공서열식 근평제도』 개선('98.12)
  - 능력과 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평 실시 : 1,009명
- 과장급 공무원의 『희망보직관리제도』 시행('99. 1.12)
  - 본인이 제출한 희망부서의 업무계획서를 평가하여 보직 부여
- 업무추진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자를 국장급 직위에서 배제('99. 1.12)
- 『근무성적평정지침』 마련·시행('99. 2.27)
  - 우리부 실정에 맞는 평정요소별 가·감점 기준마련 및 실적가점제 부여
- 『별정직공무원 공개채용 실시방안』 마련·시행('99. 3.31)
- 조직관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1급 기관장 공개모집('99. 3~8)
  - 국립보건원장, 국립암센터소장의 채용계획을 신문에 공고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개최로 자격 심사 후 공개채용

### 31) 설 連休 對策 : 183(09-70-17)

- 실업자 가정, 노약자,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회분위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99. 2. 2, 국무회의시)

- 따뜻한 설 보내기운동 추진
  -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이 소외계층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217천명이 5,417개 시설 방문, 2,430백만원 상당 위문
- 생활보호대상자 등 위문 : 268천명이 490천명을 방문, 7,025백만원 상당 위문

### 32)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기 바람('99. 8. 3, 국무회의시)
- 철저한 수해대책 수립('99. 8.10, 국무회의시)
- 추석 대책 만전('99. 9. 7, 국무회의시)
-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99.12.28, 국무회의시)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00. 3.21, 국무회의시)
- 철저한 재해예방('00. 8. 1, 국무회의시)

- 재해구호물자 확보 · 관리 및 신속 · 공정한 배분체계 확립
  - 재해구호물자 소요량 및 관리 · 운영실태 파악('99. 8. 3)
  - 재해구호물자 확보 · 관리 철저 및 공정배분 지시('99. 8.17)
- 신속한 이재민 구호('99. 8~9)
  - 총체적 수해복구 참여
    - 자원봉사자 5,464명, 의료진료요원 5,095명,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참여
  - 이재민 구호비 신속 지원
    -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
  - 방역 및 급식관리 철저 :
    - 방역반 현장투입 : 소독 8,410회, 예방접종 49,868명 실시
  - 기타 의연금 470억 배분, 재해구호비 287억, 특별 · 명절위로금 330억원 지원

- 재해구호 체계 정비
  - 각 시·도에 재해구호물품의 세트화 권장으로 신속·정확한 배분 유도
  - 재해구호법령 개정('01.12)
- '03년 권역별(수도권34억원, 남부권 22.7억원)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 33) 8.15 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국정개혁 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져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
- 8.15 후속대책을 잘 실천함으로써 새 천년을 시작하는 국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99. 9. 7, 국무회의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
  - 시행준비 예산 마련 84억원('99. 9)
  -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추진단)』 발족('99.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WorkShop 개최('99.12.29)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00.10.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00. 7~8)
  -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 600명(총 4,800명)
- 의약분업 실시준비
  - 의약분업 실시 시행방안 확정('99. 9.17)
  - 의약분업 기본계획 수립('99.11.19)
  -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99.12)
  - 의약분업 실시 홍보('99.10~'00.12)
  - 의약분업 실시('00. 8. 1)

### 34) 對 國民課題 弘報 : 282(08-70-29)

- 내년도(2000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15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것  
(‘99. 9.21,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예산(안) 홍보추진 (‘99.10. 4, 국무회의시)
- 내년도 과제의 대 국민 홍보 (‘99.12. 7, 국무회의시)

- 국정과제 브리핑 실시
  - 보건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정례 브리핑제도 도입
    -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의약분업 정착, 국민연금 등 주요정책방향 및 추진실적의 브리핑 실시(‘00~’02, 467회)
- 매년도 보건복지예산안 설명(‘00~’02)
  - 사업단위별 관련자료에 의한 기자단 설명회개최
-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홍보(‘00~’02)
  - 홍보물 제작
    - 새천년 복지비전 2010, 의약분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 TV 및 라디오, 신문을 통한 정책 및 계도광고
    - 의약분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출범 등 관련 제작 방송
    - 약물남용, 금연, 절주, 음식물 줄이기 등 관련 제작 방송
  - 주간지, 지방지, 전문지, 월간지 등에 국정과제 홍보 지속 추진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강화
    - 정책자료, 홍보자료, 새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 인터넷 미디어, 전광판 광고

### 35)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主力 : 298(03-70-31)

- 정부는 내년에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주력해야 함
- 관련법이 마련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조기 집행하여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지원해야 함('99. 9. 7, 국무회의시)
- 소득분배 개선대책 강구
  -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분배 문제에 관심이 큼. 정부는 이 문제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국민의 바람대로 분배도 IMF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함('00. 1. 4, 국무회의시)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
  -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수당 지급(50천원 · 인/월, 102,539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총194개소), 가구장애인 자립자금융자(933가구 140억원)
  - 보육사업의 내실화
    - 저소득층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저소득층 106천명, 만 5세아 87천명)
  -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 재가노인복지시설 100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53개소,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49개소, 가정봉사원 파견 100개소, 주간보호 100개소, 단기보호 27개소
- 사회보험의 내실화
  -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 체계 마련
    - 지역가입자 통합 보험료 부과체계방안 마련 : '98. 10월부터 전국 지역 의료 보험료부과 체계를 통일, 소득 · 재산에만 보험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00. 7)

- 의료보험 전체통합 실현('00. 7. 1)
-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제고
  -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출연 등 광고 선전 활동 전개(TV광고 12,709회, 라디오 광고 7,242회, 대담프로그램 참여 82회) 등
- 국민연금의 철저 보완과 차질 없는 시행 : '99. 4. 1부터 연금확대 실시
- 기금운용의 전문화·내실화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운용본부」 설치('99.11. 5)
- 국민의료기반 확충 등
  - 암 조기발견 사업 :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실시
    -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 추진('99~'02.12현재)  
(위암 201,555건, 자궁암 508,158건, 유방암 331,723건)
    - 저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 45만명
  - 암연구사업
    - 암정복 추진 연구사업실시 : 수행완료 222과제, 연구진행 22과제
  - 암예방·홍보사업
    - 전국 16개 도시 순회 암 예방 관련 강연 실시(홍보 VTR 10편, 공개 강좌 43회, 홍보상담 5,000건) 및 홍보용 책자(140,000부) 발간 등

### 36)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 방향을 보고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  
(‘00. 2. 1, 국무회의시)

- ‘00년도 보건복지부 중점개혁과제 보고(‘00. 4.24)
  - 새천년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방향 :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10년 세계 일류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03년까지 기반 구축
  -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6대 중점 개혁과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② 취약계층의 복지사업 강화 ③ 사회보장의 내실화 ④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⑤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⑥보건산업의 육성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 보건복지행정 혁신
    - ①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②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③ 열린 보건복지행정 구현 ④ 디지털 보건복지행정체계 구축
- 홍보 : YTN 중계, 기자간담회 및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37)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이번 총선이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패없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
- 정부는 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거기간 중이라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00. 3.21, 국무회의시)

-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선거개입이 없도록 지침 시달(’00. 3)
- 각 실·국별 공명선거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00. 3)
- 우리부 소속 공무원들이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선거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그 가족 및 이웃에 대하여도 부패없는 공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 38)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 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주요업무의 자체 점검·관리계획
  - 2000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계획(’00. 5)
  - 주요 업무별 평가체계 및 방법



- 세부추진과제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일정 등
-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00. 5)
-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리·점검
  - 반기별(6, 11월)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지적사항은 보완 추진

### 39) 秋夕連休와 疎外階層 慰勞 : 382(08-70-41)

- 추석명절을 맞아 공직자 및 민간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방문·위로하고 민생현장을 살펴 국민과 함께 하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공무원의 소외계층 방문 확대
    -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직원 등이 소외계층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217천명이 5,417개 시설 방문, 2,430백만원 상당 위문
      - 생활보호대상자 등 위문 : 268천명이 490천명을 방문, 7,025백만원 상당 위문
  - 어려운 계층에 대한 추석지원 확대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추석명절 특별위로금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위로금 지급(190억원) : 거택보호자 111억원, 시설보호자 12억원, 한시생계보호자 67억원
      - 이주민 특별위로금 지급(50억원) : 추석명절위로금(226세대, 113백만원), 침수주택수리비(7,139세대, 4,258백만원), 연료비·월동대책비·주거보조비 등(639백만원)
  - 명절 분위기조성
    - 민간단체행사 등을 통한 명절분위기 조성 : 복지단체별로 위로행사 추진
      - 한국복지재단 : 사랑의 송편 나누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쪽방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생필품 구입 지원
- 사회복지관(153개소) 노숙자 차례상 차리기 등

#### 40)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 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하여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구조 조정시 공공부문노사분규에 대한 철저 대비
  - 노사협력을 위한 직장 분위기 쇄신 운동 추진
    - 구조조정관련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등
    - 구조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할 것임을 노조측에 이해·설득
- 퇴직금 제도 개선
  -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01. 5. 8)
- 특별퇴직 등 실시로 인원감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 조기퇴직 등 실시(1,086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원 감축 : 12,357명('00. 7. 1) → 11,413명('01. 1. 1)  
→ 10,454명('02. 1.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원감축 : 1,193명('00. 7. 1) → 1,158명('01. 1. 1) → 1,163명('02. 5.31)

#### 41) 설 綜合對策 마련 : 410(08-70-50)

- 설 연휴를 맞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람('01. 1. 9, 국무회의시)

- 공직자의 소외계층 위문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국장급 이상 공직자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
  - 25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방문 결정토록 함
  -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주위의 불우이웃 방문토록 권장
- 민간복지단체의 참여
  - 전국 사회복지관(332개소)에서 무의탁 노인, 저소득 가정,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차려드리기, 설상차리기 등의 행사실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 소재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독거노인, 모자보호시설에 생필품과 난방비 지원(6억원)
    - 지회별로 미인가시설, 재가 장애인, 고엽제환자 등 지원(13억원)
  - 한국복지재단
    - 소년소녀가장, 재가 장애인, 시설아동 1,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안행사, 떡국 대접하기 행사 실시
  - 전국 푸드뱅크에서는 푸드뱅크(198개소)별로 식품기탁 사업을 강화하여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재가복지대상자 등을 집중 지원
  - 노숙자 쉼터 “서울자유의 집”에서 노숙자 쉼터 100개소의 입소자 및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설날 아침 합동차례를 지내고, 쉼터 대향 옷

- 놀이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 상품 지급
- 태평양복지재단은 (주)태평양에서 화장품 10억원 어치를 기증받아 전국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전달

## 42)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 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li> <li>○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기 바람<br/>(‘01. 2. 6, 국무회의시)</li> </ul> |
|--|
-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인력의 채용
    - 보건직 공무원 19명(7급 5명, 9급 14명) 제한공개경쟁 채용 및 배치(‘02. 1.25)
  - 동일 직위 장기(2년~3년)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운영
    -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전보 실시
      - 4, 5급 공무원 전보시 2년 이상 근무자 22명 전보(‘02. 3.28, 5.15)
      - 6급 이하 공무원 전보시 2년 이상 근무자 63명 전보(‘02. 5.13)
    - 전보 대상자 선정 전에 전보기준(2~3년 이상 근무자, 미근무분야 배치 등)을 마련한 후 대상자에 대한 개별 검토에 의하여 전보조치
  -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
    -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가 아닌 동료,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를 ‘01년 승진 심사부터 반영
      - 행정, 보건사무관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실시(‘02. 5. 4)

43) 女性の 職場生活を 위한 與件 造成 : 521(05-70-57)

44) 宗教施設을 利用한 託兒事業 推進 : 561(05-38-37)

- 젊은 직장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육아문제일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여성도 사회의 주체로서 국가·사회·가정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서)
- 보육문제 해소를 통한 여성 사회진출 확대(‘02. 2. 6, 여성부 업무보고서)
-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탁아사업을 하게되면 정부예산도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문광부와 복지부가 잘 협조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02. 2.22,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서)

-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보육발전 기획단 설치·운영(‘00.11~‘01. 7)
- 보육비전 및 세부과제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담은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확정발표(‘01.12.13)
-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02. 3. 6)
-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관련 부처간 협조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당정협의 개최(‘02. 3.19)
- 2002년 추가예산(528억원) 지원기준 마련 및 시·도 수요조사(4월~5월)
- 범정부적 차원의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02. 5.14, 6.14)
- 전국 보육서비스 수급실태조사 착수(‘02. 5~10)
- 종교시설 활용 보육시설 소요조사 계획 작성(‘02. 3)
- 종교시설 활용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실시(‘02. 3~4)
-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수립(‘02. 5~6)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 3인에서 전체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02. 7. 1)
- 종교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02. 1. 1)
- 농어촌, 폐광지역 종교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보육교사 인건비 1명 지원('02. 1. 1)
- 향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규모 조정(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및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조치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 45)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徹底 : 525(06-70-58)

-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01. 5.29, 국무회의시)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 안전 문제 대처 철저 및 대테러·홀리건 대책 수립 ('02. 3. 5,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전염병 관리대책
    - 전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
      - 「전염병 정보망」 운영 및 「역학조사반」 연중 편성 운영(총 260개반)
      - 비상방역 근무확대 실시 : 종전 5~9월 → 변경 4~10월
    - 생물테러 대비 대응태세 완비
      - 개최도시 주요병원(121개소) 중심 감시망 구축('02. 4)
    - 공항, 항만 등 출입 검역강화
      - 전국 13개 검역소에 『특별검역조』를 편성하여 철저한 검역실시('02. 5)
  - 식품위생 대책

-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침시달('01. 8.30)
- 식품영업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강화
  - 『식품영업자 자율위생 관리수칙』을 영업자에게 배포('02. 1)
- 식품제조·접객업소 영업자 특별위생 교육실시 : 1,150회 582천명('02. 1~5)
- 대량환자 발생대비 응급의료 체계강화
  - 현장 진료반(총 20개팀)과 이동 응급병원 세트를 구성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12개 응급의료 정보센터(1339)에 안내인력 및 상담의사 확충('02. 4)
- 『월드컵 상황실』 운영('02. 5. 1~7. 6)
  - 구성 : 실장(차관), 실무지원팀, 의료지원팀, 전염병·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등 각 팀당 2명

#### 46) 電子政府 事業의 蹉跎없는 推進 : 531(07-70-58)

- 전자정부 수립은 국민의 정부 핵심과제로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 수립,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 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 아울러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
  - 복지부 : 4대 보험의 연계정보화 사업에 철저('01. 8. 7, 국무회의시)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전자정부 추진과제로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확정 ('01. 5)
  - 「사업추진기획단」 및 「실무추진반」 구성·운영 ('01. 6)
  - 정보연계시스템 ISP 수립 ('01. 8.30~12.29)

- 주무기관 및 소요예산 분담 방안 확정 ('01.12.31)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50%      | 25%      | 14%    | 7%       | 4%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발('02. 3~'03. 1)
  - 개발사업자 : LG-CNS & POS-DATA 컨소시엄
- 노동조합 내방 면담시 사업취지 설명('02. 5.11) 및 portal 시연회('02. 6.20)
- portal(www.4insure.or.kr) 서비스 개시 ('02. 7. 1)
- 공통업무 일괄접수시스템 기능 테스트 : '02. 6.10~6.15(1차), '02.7.22~7.26(2차)
- 정보연계시스템 통합테스트 : '02. 8. 6~8.24(1차), '02. 8.26~9. 7(2차)
- 각 기관별 4대 보험 정보연계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실시('02.10.16~11. 1)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소('02.10.31)
- 4대보험 전 지사 시험실시('02.11. 4~'03. 2. 2)
-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 전면 시행('03. 2. 3)

#### 47) 颱風 및 豪雨被害 早速 復舊 : 608(08-70-65)

-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과거 금모으기 운동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모금운동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하여 피해를 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람('02. 9. 3, 국무회의시)

- 사상최고의 의연금 모금 : 총 1,446억원 모금
  - 7대 종단 대표 및 종교계 대표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02. 8.27)
  - 7대 종단대표 '국민에 대한 호소문' 발표('02. 8.27),



-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공동으로 의연금 모금호소광고 실시('02. 9. 9)
-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 공동으로 모금참여 국민에 감사광고 실시('02.10. 1)
- 의연금 모금호소와 모금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감사서신발송('02. 8 및 '02.10)
- 수재의연금을 많이 기탁한 개인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감사패 수여('02.10.22)
- 위로금 등으로 총 1,320억원 집행
  - 낙동강 하류지역 등 집중호우 이재민에게 위로금으로 186억원 지원('02. 8.30)
  - 태풍 '루사'로 인한 이재민에게 위로금으로 589억원 지원('02. 9.17)
  - 특별재해지역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추가금 482억원 시·도 지원('02.10.18)
  - 50~80% 피해 농가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으로 40억원 추가 지원('02.12.10)
  - 기타 태풍 '라마손' 등 기타 피해 이재민에게 위로금으로 3억원 지급
  - 긴급구호물자 구입자금 20억원('02. 9 및 11월)
- ※ 집행잔액 126억원은 타 재해 준비금 등에 사용 예정

#### 48) 冬節期 對策마련 : 611(05-70-67)

-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전 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등 동절기 서민층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02.11. 5, 국무회의시)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 추진상황 현장지도·확인('02.11. 5~11.29)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요보호계층 발굴실적, 결식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실태 및 각종 생활시설의 화재예방 운영실태 등 점검
  -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및 노숙자 쉼터 등 총 81개소 점검
  - 기초·가정·장애인복지심의관이 각각 팀장이 되어 동시에 점검(총 15개조)
- 향후 저소득층 집수리 대상가구를 3만('02년) → 5만('03년) 가구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03.1월 시행
    -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재산보호범위를 최고 약 1.5배 확대
    - ※ 저소득층 약 25천 가구 추가 보호

|       |
|-------|
| 環 境 部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05-44-01)  |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보전기능의 일원화            | 1998. 4.10 |
| 115(05-44-02) | 철저한 오염현장 감시체계 구축                 | 1998. 7. 6 |
| 116(05-44-03) | 환경오염자에 대한 처벌강화                   | 1998. 7. 6 |
| 117(05-44-04) |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종합처리대책 수립           | 1998. 7. 6 |
| 118(05-44-05) | 폐자원 수거운동의 지속적 추진                 | 1998. 7. 6 |
| 119(05-44-06) | 청소년의 환경운동 참여 활성화                 | 1998. 7. 6 |
| 226(05-44-07) | 수돗물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 1999. 4. 7 |
| 227(05-44-08) | 민간환경단체와 협력 강화                    | 1999. 4. 7 |
| 228(05-44-09) | 대형개발사업 사전환경영향평가 강화               | 1999. 4. 7 |
| 315(05-44-11)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 2000. 2.17 |
| 316(05-44-12) | 동아시아 국가간 국제환경협력 강화               | 2000. 2.17 |
| 317(05-44-13) | 국민의 환경보전인식 제고                    | 2000. 2.17 |
| 431(05-44-14) |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호                     | 2001. 2. 5 |
| 432(05-44-15) | 환경정책 홍보강화                        | 2001. 2. 5 |
| 436(05-44-19) |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 2001. 2. 5 |
| 438(05-44-21) |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의 보완            | 2001. 2. 5 |
| 439(05-44-22) | SOFA 협상 후속조치 철저                  | 2001. 2. 5 |
| 579(05-44-24) |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                | 2002. 3.27 |
| 580(05-44-25) | 4대강 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                 | 2002. 3.27 |
| 582(05-44-27) | 지구환경문제해결 노력 및 황사관련 국제<br>환경외교 강화 | 2002. 3.27 |
| 10(03-70-01)  | 실업종합대책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대<br>책을 수립 추진 | 1998. 3.26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홍보노력의 강화, 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철저한 대책수립 및 신속복구                   | 1998. 8.17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br>(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12.28) | 1999. 8. 3 |
| 276(08-70-27) |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2000년도 예산안 홍보추진                        | 1999.10. 4 |
| 304(03-70-32) | 각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5-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1.12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처                       | 2000.10.23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541(08-70-60) |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2001.11.27 |
| 539(03-31-35) | 중국의 WTO 가입대비 철저                        | 2001.11.12 |

## 1) 自然環境保全과 海洋環境保全機能의 一元化 : 24(05-44-01)

- 자연환경보전기능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해양환경보전업무의 중복성 문제는 환경부에서 검토하여 국무회의나 대통령에게 보고바람('98. 4.10, 환경부 업무보고시)

- 자연환경 보전기능 통합('99. 5.24)
  - 산림청의 야생조수 보호기능을 환경부의 자연생태계 및 야생 동·식물 보호기능에 통합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이관 및 인력 11명 이관, 국립환경연구원에 야생동물과 신설
- 해양환경 보전기능의 적정 수행부처 검토('99. 7.29)
  - 대통령비서실 검토 및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
  - 정부경영진단 결과 해양환경보전업무는 현행체제를 유지

## 2) 철저한 汚染現場 監視體系 構築 : 115(05-44-02)

-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나, 현행제도나 법령준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오염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수립하되 하천을 소유역별로 나누어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처벌하는 철저한 현장감시체계를 갖출 것('98. 7. 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한강환경감시대 조직을 확대·개편('98. 9)
  - 본대에 환경사범수사반 등 3개반을 설치하고 하부에 소유역별로 4개 지대 설치

- 환경감시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대설치 근거 및 인력 조정(당초 93명 → 조정 214명)
-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 등 처벌강화
  - 환경사범경찰관리에 의한 수사건수가 '98년 297건에서 '99년 858건으로 증가(12건의 환경사범을 구속 수사)
-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 분석·평가('99. 2)
  - 지자체별 지도·단속실적을 평가하여 언론기관에 공표
- 민간 자율 환경감시대 구성·운영('98. 2)
  - 모니터 요원, 민간단체 등으로 민간자율 환경감시대를 구성하여 상수원주변의 오염행위 감시·계도
- 과학적 지도·단속방안 마련('99. 6)
  - 과학적인 지도·단속방안의 연구를 실시('99. 1~6)하여 단속방안 마련
-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신설('02. 8) 및 4대강 환경감시대 정규조직으로 개편('02. 8)
  - 중앙환경감시기획단설치운영규정 제정('02. 8)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공포('02. 8) 및 시행규칙 발효('02. 8)
- 배출업체 단속권 등 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02.10)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개정·공포('02. 8)

### 3) 環境汚染者에 대한 處罰強化 : 116(05-44-03)

- 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벌과금을 대폭 증액하여 오염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도록 할 것  
(‘98. 7. 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전문을 개정(‘99.12.31)하여 환경오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및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법 제4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태계를 파괴한 자에 대하여 처벌(법 제5조제3항)
  - 매매를 목적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에는 징역과 그 이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법 제6조)
  -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그 이득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법 제7조)

### 4) 零細畜産農家の 畜産廢水 綜合處理對策 樹立 : 117(05-44-04)

- 축산폐수는 수질오염의 주범이므로 농림부 및 축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영세축산업자의 축산폐수를 종합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98. 7. 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영세축산농가 축산폐수 관리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99. 2)
- 축산폐수처리 및 자원화대책 수립
  - 발생·수거단계에서부터 자원화·처리까지의 과정을 고려한 종합대책 추진(농림부)
- 팔당호 주변 축산분뇨처리종합대책 수립·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분뇨종합대책(안) 검토('98.10, 환경부, 농림부)
  - 팔당유역 축산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계획 및 액비화 관리방안 추진 ('99.12, 환경부→농림부, 경기도 등)
  - 축산폐수 액비저장탱크 시범사업 추진('01, 1,304백만원)
    - 용인(10,000m<sup>3</sup>), 여주(2,300m<sup>3</sup>), 이천(400m<sup>3</sup>), 가평(1,600m<sup>3</sup>)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 가동·건설중인 65개 공공처리시설 전반적인 시설개선 추진
    - 40개 시설 운영중, 25개 시설 공사중
-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
  - 개별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농림부 농특회계 1,375억원)

## 5) 廢資源 收去運動의 지속적 推進 : 118(05-44-05)

- 폐자원 수거운동은 자연환경보호와 경제력 소득증대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만큼 연중 계속해서 추진함으로써 일상 생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98. 7. 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98. 5 설치한 폐자원수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폐자원수거운동 전개



- 지역별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민간수집상 등이 연계한 폐자원 수거 행사 전개
-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함 점검 및 사후관리
- 폐자원 수거운동이 국민 일상생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사업 강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본격시행 준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과 재활용비용 등 세부사항을 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요청('02.10), 시행규칙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02.10)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 전개('02)
  - 7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음식업단체·시민단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
  - 홍보비디오(3,400개), 홍보만화(4만부), 책자(3만부), 홍보포스터(46만6천부) 등 제작 배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내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기술 전시회 개최('02. 2)
  - 자원화시설별 표준화된 시설설치 및 운영지침서 작성·배포('02. 3)
  - 음식물쓰레기 사료에 대해 GR 인증규격 제정('01.12)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으로 지정('02. 3)

## 6) 靑少年의 環境運動 參與 活性化：119(05-44-06)

- 국민들의 環境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環境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一生동안 몸에 배게됨
- 상·하수도시설, 소각장 등 環境시설 現場견학을 통해 環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98. 7. 6, ’99. 4. 7, 環境부 國政개혁 報告書)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環境교육 프로그램 운영
  - 環境교육·홍보단 및 環境교실 운영(강사단 구성 및 학교 등 1,009회 강사지원)
  - 環境교육·홍보단, 環境교실 수요조사 및 제도안내(홈페이지)
  - 環境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유치원·초·중·고등학교 26개교)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실시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원사업 추진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공모(’02. 2)
  - 269개 기관·단체 등에서 우수 프로그램 접수
  -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 205개 기관에 815백만원 지원
  - 체험환경교육 지도자 워크숍 개최(’02. 4)
- 향후 계획
  - 環境교육·홍보단 운영(계속)
  - 청소년 環境교실 운영(계속)
  -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계속)

## 7) 수도물 節約을 위한 다각적인 努力 講究 : 266(05-44-07)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는 선진국보다 많아 물을 아껴쓰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물 소비 억제를 위해 수도물 값 인상,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절수기기 설치확대 등을 추진하기 바람
-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물절약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 아껴쓰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99. 4. 7, 환경부 국정개혁 보고서)

- 수도요금 현실화
  -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지침」 제정·시달(’01. 7)
    - 누진체계 개선,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기반 마련 등
- 노후 수도관 교체
  - 관망의 진단 등 개량 및 부식방지기술 개발 계속 추진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연차별 추진
    - ’00년 : 2,271억원 투자, 노후수도관 2,140km, 취수시설 178건 개선
    - ’01년 : 1,332억원 투자, 노후수도관 2,515km, 취·정수시설 241건 개선
    - ’02년 : 2,248억원 투자, 노후수도관 2,446km 교체
- 물절약 홍보·광고
  - 매년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 물의 날 기념식, 선전탑 설치, 홍보책자 제작 배포
  - 물절약 게임 경진대회(’02. 5) 및 물절약 실천 결의대회 개최(’02. 6)
    - 어린이 및 주부 등 홍보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물절약 홍보·광고 실시
    - 물절약 TV광고, 신문광고, 홍보책자,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등

## 8) 民間環境團體와 協力 強化 : 227-05-44-08)

- 환경문제는 국민·민간환경단체의 협력 없이는 안되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99. 4. 7, 환경부 국정개혁 보고서)

-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운영
  -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운영
  - 종교단체 환경실천 대토론회 개최
  - 민간 환경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 여성계대표 간담회 개최('02. 5)
    - 민간 환경단체 친선 체육대회 개최('02.10)
    -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02.10)
    -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 개최('02.11)
- 민간환경단체에 재정적 지원 강화
  - 국고보조사업비 지원(5년동안 38개 단체에 7,222백만원 지원)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기금지원(5년동안 611개 단체 2,811백만원)
  - 각부처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환경분야 지원 협의
    - '02년 환경분야 42개 단체에 1,012백만원 지원

## 9) 大型開發事業 事前環境影響評價 強化：228(05-44-09)

- 과거에는 개발이 지상명령이며 환경은 사치라는 잘못된 사고를 하여 대형개발사업을 할 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 사례가 있음
- 대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바람  
(‘99. 4. 7, 환경부 국정개혁 보고서)

- 중요한 대형 국책사업의 입안시 타당성 조사 제도화
  - 500억 이상 대형개발사업의 경우 각 단계별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0. 7)
-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계획 및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민간사업 포함)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확대(‘00. 8)
  - 관계전문가 및 환경단체로 구성된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회 확대운영(‘01. 1)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작성·보급(‘00. 8)
- 전략 영향평가 개념의 도입
  - 대형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전원·수자원개발, 교통, 관광 등 각 분야별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완료(‘00.10)
- 정책연구회 구성·운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개발원 등 관련 전문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으로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형개발사업

- 환경친화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99. 5)
- 환경정책국에 국토환경보전과 신설('00.10)
  -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 10) 環境紛爭調整制度의 活性化 : 315(05-44-11)

- 민원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 불안이나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함.
  -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00. 2.17, 환경부 업무보고서)
- 환경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대화 및 홍보교육
    - 분쟁조정위원회에 사회단체장을 위촉하여 주민설득 및 신뢰도 제고('00. 3)
    - 환경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관계자의 홍보 요원화('00. 5)
      - 환경분쟁조정홍보단구성·운영규정 제정 및 홍보단 위촉(25명)
    -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체 관계자 특별 교육 23회 실시('00. 6)
    - 환경분쟁제도 안내 및 포스터 및 사례집 발간·배포
      - 소식지 발간(매월 2,000부), 안내 팜플렛(1,000부), 홍보 소책자(30,000부), 지하철 광고(400량), 환경분쟁예방 홍보물 제작·배포(150개 건설사)
  - 환경분쟁 발생지역의 현장확인 강화('00. 3)
    -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
      - '00년 60건, '01년 121건, '02년 263건
    - 환경분쟁지역 민원상담 실시('00. 4)
      - 현장방문상담 23회

- 환경피해 분쟁현황 파악 및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00. 4)
- 환경분쟁 현장조사 전담팀 설치('00.11)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대책 추진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교육('00. 3)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순회교육('01. 3)
  - 환경분쟁조정 관계 공무원 연찬회 개최('00.11)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 목표 상향 조정('99년 14건 → '00년 30건)
    - 사건처리 : '00년 35건, '01년 46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일부 부여
  -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공포(법률 제6831호, '02.12.26)

## 11) 東아시아 國家間 國際環境協力 強化 : 316(05-44-12)

-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00. 2.17, 대통령 업무보고서)
-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체제 강화
    -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개최('02. 4, 서울)
      - 황사대응 등 공동협력방안 협의
    -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참가('02. 6, 울란바토르)
      - 자연생태보전 등 신규사업 검토 및 핵심기금 운용방안 논의
    - 제11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참가('02.12, 중국 해남도)
      - 동북아 5개국 및 국제기구 참가, 수질·대기·환경교육·WSSD 성

과 등에 대한 논의

- 동남아 개도국과의 환경협력사업 추진
  - 제7차 APN 정부간 회의 참가('02. 3, 마닐라)
  - 대아시아 환경경영협력 워크숍 개최
- 제1차 ASEAN+3 환경장관회의 참가('02.11, 라오스)
  - ASEAN 10개국과 한·중·일간 환경협력방향 및 우선적 협력가능분야 논의
- 다자협력 사업추진
  - ASEM 환경장관회의 참가('02. 1, 북경)
  - 한·중·일 3국간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UNEP/GEF와의 협력사업 추진(중국, 몽골, 러시아)
- 양자간 환경협력 및 환경정책 대화의 활성화
  - 중, 일, 러, 몽골, 베트남과의 양자협력 강화
  - 한·베트남 환경협력 실무회의('02. 5)
  - 한·일 환경협력 실무회의('02. 2, 서울, '02. 5, 북경)
  - 한·몽골 환경협력 실무회의('02. 6, 울란바토르)
- 환경정책 대화의 활성화
  - ESCAP 제58차 총회 참가('02. 5, 방콕)

## 12) 國民의 環境保全認識 提高：317(05-44-13)

-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00. 2.17, 환경부 업무보고서)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교육·홍보단 운영(831회)
  - 환경교실 운영(178개교)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26개교, 128백만원 지원)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국 체험 학습장 안내책자 제작·배포(20,000부)
  -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3,000부, 시·도 교육청, 환경단체 등)
- 체험환경교육 지원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원(205개 기관 818백만원 지원)
- 환경단체 협력강화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운영
  -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운영
  - 민간환경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 환경보전 실천의식 강화
  -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각종 홍보행사 개최(282개 기관 361건)

### 13) 非武裝地帶 生態系 保護 : 431(05-44-14)

- 우리민족 분단 50년사에서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DMZ의 잘 보전된 생태계라 할 수 있음
-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계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인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남북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바람  
(’01. 2. 5, 환경부 업무보고시)

- 한반도 비무장 지대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통일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01. 2)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추진계획정부안 수립('01. 4)
  -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01. 6 ~ '02. 3)
  -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련 관계전문가 회의개최('02. 2)
  -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리방안 마련('02. 7)
- 생태계 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이북지역 생태계 조사('01.10)
  -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작성('02. 3)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및 국제분위기 조성
  - 유네스코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 회의참석 및 유네스코·북측관계자 협의('01. 9)
  - 유네스코등에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련 협조요청('02. 8)
- 남북한 협의추진
  - 한국 MAB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북한의 MAB위원장에 전달('01. 4.30)
  - 유네스코 관계관 방북, 북측 관계자와 협의('01. 5.22 ~ 29)
- 향후계획
  - 남북회담 의제에 포함, 북측과 협의를 통하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대상지역 선정,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 및 지정신청서 작성

## 14) 環境政策 弘報強化 : 432(05-44-15)

- 우리나라의 환경정보가 국제사회에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고,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제기구의 동향파악 및 신속한 정보입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람('01. 2. 5, 환경부 업무보고서)

- 국내 환경정보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 환경부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 제공
  - 「Green Korea 2002(특별판)」 발간 및 배포('02. 6, 10,000부)
  - '02년 주요환경정책, 천연가스 보급계획 등 각종 환경정책 홍보책 발간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등 주요 국제환경대회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 적극소개
- 국제 환경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 기능강화
  - 국제 환경정보 수집·분석 기능강화
    - 본부와 주재관/파견관간의 네트워크 유지,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활동 전개
    - 국제환경정책자문회의 개최 및 이슈·협약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국내 주재 국제기구, 외국공관 및 상사와 면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교환 추진
  - 외국 환경정책 및 동향보고서 발간·보급
    - 지구환경동향 매주 발행('02. 2. 2 이후 45회 발간)
    - 국제환경동향 보고서 격월 발행

## 15) 環境影響評價의 公正性和 專門性 強化 : 436(05-44-19)

○ 시화호나 새만금호 등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전문가가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기술적 능력향상 대책을 마련·추진해 주시기 바람('01. 2. 5, 환경부 업무보고시)

- 평가과정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확대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연구용역(KEI, '01. 7~11)
  -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LG CNS, '01.12~'02.10)
-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운영('02. 5~9)
    - 평가제도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평가서 작성 및 검토지침의 작성
  - 도로사업에 대한 지침작성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 개최('02. 5)
  -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기법 연구용역 추진
    - 수행 : 한국도로교통협회 · KEI, 기간 : '01.10~'03.12
- 향후계획
  - 연구용역 및 평가제도개선 포럼 운영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도로사업에 대한 평가서 작성·검토지침 마련

## 16) 市場原理를 바탕으로 한 環境政策의 補完 : 438(05-44-21)

- 21세기의 環境정책에서는 시장원리를 통한 규제가 중요함. 단속과 병행해서 기업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어 환경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함
- 기업이 환경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평가가 떨어지게 해야 하며, 은행 대출시에도 환경설비투자가 잘 되어 있느냐가 반영되도록 해야 함.
- 또, 선진국의 기업환경회계기업이 정부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환경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1. 2. 5, 環境부 업무보고서)

- 기업 環境정보공개 시범사업 추진
  - 기업 규모,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環境정보 공개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10개 업체)
    - 環境관리조직, 環境투자실적, 環境오염관리실태 등 30여개 항목
  - 기업의 環境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적용('02. 5)
  - ISO TC 207 국제회의 가이드라인 발표 및 홍보('02. 6, 남아공)
- 금융기관의 기업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
  - 금융기관의 기업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을 위해 기업환경정보 공개지원 추진
    - 기업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 제정·보급('02. 5)
    - 2차 시범사업, 環境원가회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범적용 추진('02. 6)
    - 環境성과 지표개발 적용 시범사업 추진 및 기업환경성과 평가개량화 시범사업 업체 선정('02. 6)
- 향후계획
  - 시범사업결과 및 은행연합회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 도입방안 수립

## 17) SOFA 協商 後續措置 徹底 : 439(05-44-22)

-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타결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후속작업이 중요한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기 바람
-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한미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문제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01. 2. 5, 환경부 업무보고시)

### ○ SOFA 이행절차 마련

- 환경오염사고시 미군기지 출입, 공동실사 절차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 공동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마련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간 서명완료('01. 7)
  - 미 국방부 승인과정에서 공동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 대한 수정안 제시('01.11)
  - 미 국방부 수정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01.12)
  - 공동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협정체결('02. 1)
-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개정 추진('01.12)
  - 미측에서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초안 작성중(한국법령 영역 등)

### ○ 향후계획

- 미측의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우리측 검토 및 조정 등 양측협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 18) 首都圈 大氣質 改善 特別對策 推進 : 579(05-44-24)

-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개막에 대비하여 대기 등 환경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02. 3.27, 환경부 업무보고시)

-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 등 구성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3개 시·도 파견직원으로 구성·운영('02. 4)
  -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02. 4)
    - 대책 필요성, 목표설정, 총량규제 등 총 12개 그룹으로 구성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시안) 마련(7월) 및 각계의견 수렴
  - 지자체, 지역별 업계 간담회,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회의, 공개 토론회, 지역별(서울, 인천, 경기) 공개 토론회 등 개최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 확정('02.12)
  - 계획기간 : 2003~2012년(10개년)
  - 대기질 개선목표 : PM10은 도쿄( $65 \rightarrow 40 \mu\text{g}/\text{m}^3$ ), NO2는 파리( $35 \rightarrow 22 \text{ppb}$ ) 수준으로 개선
  - 정책수단 : 지역배출허용 총량관리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차 도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 소요재원 : 10년간 총 6조원
  - 기대효과 : 대기오염 피해비용 연간 3조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연간 1,270명 저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 특별법(안) 마련('02. 8), 관계부처 협의('02. 9) 및 입법예고('02.10)
- 향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수도권 특별법 국회제출

## 19) 4大江 特別法の 蹉跎 없는 推進 : 580(05-44-25)

-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하류지역이 다같이 이익을 보는 win-win 정신을 기초로 한 선진적 수질개선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람('02. 3.27, 환경부 업무보고서)
- 수계별 특별법 하위법령(안) 지역의견 수렴 및 제정
    - 하위법령(안)에 대한 지역간담회 개최(대전, 전남 보성, 경북 안동)
    - 3대강 대표 및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대표 간담회 개최('02. 1)
    -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시행령 '02. 7.13, 시행규칙 '02. 7.29)
  - 수변구역 지정 추진
    - 수변구역 대상지역 현지 합동조사 실시('02. 4)
    - 3대강 수계 수변구역 지정·고시('02. 9)
      - 8개 시·도, 23개 시·군·구, 823.25km<sup>2</sup>
  -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 시·도 통보
      - 낙동강수계('02.10),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02.11)
    - 목표수질 설정수계구간 고시
      - 낙동강수계('02.10),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02.11)
  -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 3대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02. 7)
- 4대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심의·의결('02.11)
- 광역적 유역자치관리체계 구성·운영
  -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발족('02. 5)
- 향후계획
  - 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을 위한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

## 20) 地球環境問題解決 努力 및 黃沙관련 國際環境外交 強化 : 582(05-44-27)

- 황사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정부는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에도 적극 힘써서 식목 등 황사대책을 마련하고 공동협력 해 나가기 바람('02. 3.27, 환경부 업무보고시)

- 황사피해 방지대책 추진
  - 황사발생 예상시
    - 미국(AQI)의 미세먼지 농도별 인체영향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별 국민행동요령 마련('02. 4)
    - 황사 예·경보제 도입 실시('02. 4, 기상청)
    - 대기자동측정망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기상청으로 On-line 송부('02. 4)
    - 황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사전통보(행정자치부)
  - 황사발생시
    - 황사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시·도교육청 대응지침 마련('02. 4)

- 소관부처별 피해저감대책 마련(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 황사종료후
  - 황사로 인한 피해 파악 및 재해대책 예산지원 검토(행자부)
- 국제적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 마련
  -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강화
    - 황사방지사업에 GEF 재원 활용('03. 2~'04. 8, 100만불)
  - 중국의 생태환경 복원 및 조림사업 지원
    - 제4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 회의시 생태환경복원 사업 및 황사 저감방안 집중 논의('02. 4, 서울)
    -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 지원('01~'05, 5백만불 지원)
- 향후계획
  - 황사 예·경보제가 실효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상청과 업무협조 강화
  - 한·중·일 3국 외교를 강화 및 UNEP, 지구환경금융(GEF), ESCAP 등 협조체제 강화

## 21) 失業綜合對策에 대한 部處別 細部推進對策을 樹立推進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98. 3.26, '99. 3.16, 국무회의시 )

- 환경산업 육성
  -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산업발전전략」 수립·확정('01. 1)

- 21세기형 유망환경기술 개발·보급
  -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 219개 연구과제 확정 및 추진('01. 9, 500억원)
  - 환경기술 평가업체 벤처기업 지정 등 보급방안 마련('01. 5)
  -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지원('02.12, 750억원)
  - 환경벤처펀드 조성('02. 7, 110억원)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상설전시관 설치('01. 7)
  - 민·관 합동 환경산업 수출협력단 구성·운영
- 환경전문인력 양성 활용대책 추진
  - 국립환경연구원에 환경분야 대졸자 취업능력 향상과정 개설('02)
- 국립공원 정화사업 추진
  - 2001년 국립공원 정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간 일평균 964명 고용, 예산 7,209백만원 집행
  - 2002년 국립공원 정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간 일평균 740명 고용, 예산 5,517백만원 집행
- 재활용품 수거·선별사업 추진
  - 2001년 재활용품 수거·선별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간 일평균 1,295명 고용, 예산 8,283백만원 집행
  - 2002년 재활용품 수거·선별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간 일평균 730명 고용, 예산 5,798백만원 집행

## 22) 經濟政策 관련 對外弘報 強化, 弘報努力의 強化,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관련 대외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의 혼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협의완료 후 정책을 발표하고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할 것('98. 3.16, 국무회의시)</li> </ul> </li> <li>○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적인 홍보보다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함 ('00. 1.25,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 유관기관과의 공보업무 협조강화
    - 경제홍보위원회 및 중앙부처 공보관회의시 정부중점 홍보과제 선정협의
  - 언론오보 해명 및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 인사에게 시정사항 홍보
    - 오보 등 대응체계 구축·운영
      - 오보 등에 대한 해명자료 각 언론사 논설·해설위원 및 유관기관 배포
  -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논설·해설위원 환경정책 설명회 등 실시(5회)
    - 논설·해설위원 현장 탐방 실시(제주도 생태탐방 등 7회)
    - 환경홍보대책위원회, 환경홍보자문위원, 환경홍보사절 위촉·운영
    - 방송 PD 간담회 개최 및 방송 자료집 배포(수시)
    - 주요 환경시책에 대해 장관 언론 기고,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
  - 국정홍보 강화
    -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책 홍보
    - 낙동강 등 3대강 특별법 제정·시행
    - 환경월드컵 추진 대책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참가대책
-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

## 23) 각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제35회 국무회의시)

- 「환경부예산절약성과금제도」 지침 수립·시행('98. 5)
-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을 심의할 「환경부예산절약및인센티브운영심의회」
- 운영지침 수립·시행('98. 5)
- '99년도 예산 편성시 조직 및 정원조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절감 편성
  - 인건비 △1,724백만원(△5.5%), 기본사업비 △3,136백만원(△10.3%)
- '98년도 환경부 예산절약 및 인센티브운영심의회 개최('98.12.28)
  - 청사청소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던 방식을 일용직(청소인부)을 고용하여 수행함으로써 3,023천원의 예산을 절약한 금강수질검사소에 성과금 602천원 지급 결정

## 24) 水害관련 徹底한 對策樹立 및 迅速復舊 : 138(08-70-09)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 각 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각 부처는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수해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98. 8.17, 국무회의시)

- 수해대책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심의시 수해대책 예산반영(360억원)
- 기관장 수해현장 방문·격려('98. 7.31~8.18)
  -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계곡, 장흥 국민관광단지 등 방문하여 격려
- '98. 7.31~8.18 기간중 분야별 수해대책 추진
  - 국립공원 수해복구대책 추진
    - 국립공원관리공단내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119구조대,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구조대를 편성 조난자 구조작업 실시
  - 쓰레기 수거·처리대책 추진
    - 수해지역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토록 조치
    - 수해지역 쓰레기 처리비용 국고 지원 협의
  - 비상급수 대책 추진
    -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먹는샘물 7,718상자 무상지원
    - 수해지역 취·정수장 응급복구 및 정상가동 지원을 위한 긴급기술 지원반 편성·운영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환경관련 시설물 항구복구 사업추진
  - '98. 9.10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관련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

심의·확정 및 재해복구비 360억원 배정완료('98. 9.22, 9.30)

- 피해시설물 현황

- 국립공원, 도·군립공원 228개소, 상·하수도시설 474개소, 폐수처리 시설 7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4개소

## 25)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음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환경협력공동위 강화 및 환경정책 대화의 활성화

- TEMM4 대비 한·일 실무회의 개최('02. 2)
- 제8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참가('03. 2)

○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력강화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관심 프로그램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한 노력 강화 합의

○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제4차 한·중·일 3국 장관회의 개최('02. 4, 서울)
  - 동북아 환경개선 및 협력증진을 위한 9개 협력 프로젝트 추진
  - 동북아 및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공동 관심사항 논의
- 제8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참가('02. 6, 울란바토르)
  - 동북아 환경,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등 논의
- 제11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참가('02.12, 중국 해남도)
  - 동북아 5개국 및 국제기구 참가, 수질·대기·WSSD 성과 등에 대한 논의

-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태복원사업 공동 참가
  - 황사관련 한·일 양자간 협의('02. 5, 북경)
- 지구환경전력연구소 제8차 평의회 및 제10차 비공식 회의 참가('02. 6, 일본)
  - 아시아 지역의 기후정책 및 환경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토의
- 제1차 ASEAN+3 환경장관회의 참가('02.11, 라오스)
  - ASEAN 10개국과 한·중·일간 환경협력방향 및 우선적 협력가능분야 논의

## 26) 컴퓨터 2000년 問題관련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98.11.23, 국무회의시)

- 정보시스템 Y2K 문제 해결
  - 정보시스템 Y2K 문제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98. 4)
  - 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98. 7)
  - 본부 주전산기 등 장비교체 및 응용프로그램 재개발
    - PC Y2K 문제 해결 완료('99. 4)
    - 본부 주전산기 교체 및 지방청 주전산기 문제해결 완료('99. 5)
    - 대기오염감시망 등 응용프로그램 변환 및 이식('99. 6)
  - 비상계획 수립 및 보완
    - 시스템 검증 및 시험운영('99. 6)
    - 비상계획수립 적정성 확인 및 미비점 보완('99. 7)
    - Y2K 문제해결 자체선언 실시('99.12)



○ 비정보시스템 Y2K 문제해결

- Y2K 문제 대상시스템 현황 파악('99. 2)
- 대상시설별 문제해결 대책수립 및 시행('99. 4)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 비상계획 수립 적정성 확인 및 합동현장점검('99. 8)
  - 자체 모의훈련 실시('99.11)
  - 정부 Y2K 종합 상황실 주관 합동모의훈련 실시('99.12)

## 2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담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해야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접거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함. 특히, 특정고교출신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승진심사시 업무능력, 경력 등과 함께 출신지역도 고려
- 과장급 이상 전보시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여 전보
- 6급이하 승진심사시 예비심사 회의 개최
  - 필요한 경우 과장급, 계장급으로 구성된 예비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공정성 제고
- 5급→4급 및 6급→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도입·운영

## 28)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근본적인 수해대책 강구하고 향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경예산을 수정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재기를 지원 ('99. 8. 3, 국무회의시)
- 수해지역 구호물자의 비축부족과 물자공급지연에 다른 반성
  - 금회 수해 경험을 살려 항구적인 복구 대책수립('99. 8.10, 국무회의시)
-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지난 2년간의 수해를 거울삼아 충분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99.12.28, 국무회의시)
- 장마철에 대비해 빈틈없는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함 ('00. 3.21, 국무회의시)

### <1999년도>

- 각 분야별 수해대책 추진
  - 상황실 설치, 국립공원 안전관리, 쓰레기 수거·처리, 비상급수대책 등 추진
- 수해피해 환경관련 시설물 응급복구
  - 상하수도 355개소, 분뇨·폐수·폐기물시설 48개소, 공원시설 88개소
- 수해시 대처 수범사례 전국 전파
- 취약시설 위험 환경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국립공원시설을 중점점검

### <2000년도>

- 사업분야별 수해방지대책 추진
  - 상·하수도, 쓰레기, 분뇨, 국립공원 등
- 하수관거 관리제도 개선

-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자치단체에 시달
- 하수관 통수능력 증대를 위한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
-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을 통한 수해발생 최소화
  - 오·폐수 불법 배출업체 정부합동 단속(환경부, 검찰, 자치단체) 실시
  - 장마철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 사업장 특별점검(지방청)
  - 국립공원 일제 안전점검 실시 및 취약시설 보강(2회)
- 환경분야 수해방지 종합점검·관리대책 시달 및 수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29) 8·15 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276(08-70-27)

-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대책 수립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99. 9. 7, 국무회의시)
-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성 검토강화
    -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등에 환경성 검토실시('00. 7)
    - 환경성 검토지침이 포함된 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00. 9)
  - 천연가스버스 보급 본격화
    - 천연가스버스 운행 및 충전소 가동('02년말 2,746대 운행)
    - 천연가스버스 차종확대 및 경유차량 조기퇴출 유도
    - 사업촉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충전소 설치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부산·경남지역 용수 확충대책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창원, 함안)
  - 물절약 대책 추진
    - 절수기기 설치사업 연차별 추진

- 수도요금 현실화
-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연차별 추진
- 중수도 설치확대 추진
- 물절약 홍보 및 광고 실시

### 30) 2000年度 豫算案 弘報推進 : 282(08-70-29)

-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주기 바람
- 특히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예산 등을 수혜계층별 자료를 만들어 관련 단체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2000년 예산 홍보자료 작성·배포('99.12)
  - 「환경부 예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팜플렛)
    - 5,000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민간환경단체 배포
  - 「저공해 천연가스버스로 도시환경을 깨끗이」
    - 2,000부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버스운송조합 등에 배포
  - 야생동물 보호 홍보 관련 리플렛 제작 및 TV 캠페인 광고
    - 리플렛 20,000부를 제작하여 수렵·밀렵 관련 단체 등에 배포
    - TV 캠페인 광고('99.12~'00. 1, KBS-TV 20회 방영)
    - 서울시내 전광판(66개소)에 홍보
  - 물절약 홍보 추진
    - 물아껴쓰기 홍보물(텐트카드 및 스티커) 12만부를 제작하여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배포
- 잡지, 언론기관, 환경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2000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배포('99. 9)
- 2000년도 예산안 개요 홈페이지에 게재('99. 9)
- 나라경제 11월호 기고
  - 「특집 2000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2000년 예산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99.12)
- 2000년 예산관련 K-TV 인터뷰 실시('99.12)

### 31) 각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방향을 보고해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주요환경정책 대통령 보고('00. 2.17)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등 8개분야 63개 단위사업

### 32) 公正한 選舉管理 : 332(05-70-34)

- 이번 총선이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특히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패없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00. 1.12, 국무회의시)

- 공명선거를 위한 지시사항의 신속·전파

- 공명선거 실현에 관한 지시통보('00. 2.25)
- 고위공직자 지방출장 자제 등 공명선거 관련 긴급 지시('00. 3.18)
- 월례모임을 통한 기관장 교육 강화
  - 월례 모임시 장관 훈시('00. 3. 6, 4. 8)

### 33)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연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매월단위로 파악
    - 각 실·국 단위로 소관분야 자체점검 실시
  - 추진사항 점검보고회의 개최
    -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상황 점검·관리 계획수립 보고('00. 5)
    -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 34)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 改善 : 386(03-70-45)

-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 수개월 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

○ 추진계획 개요

- 감사원에서 '00. 4.27~6.10 기간중 실시한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등 3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22건이 지적되어 2001년까지 개선완료

○ 환경부

- 경영실적평가와 인센티브상여금 제도운영 부적정
  - 기관자체실정에 맞도록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 상향조정방안 도입 검토

○ 한국자원재생공사

-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 개선
  - 노사합의에 의해 노조 전임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조정('00.12)

○ 환경관리공단

- 노조전임자 과다 운영 개선
  - 노사합의에 의해 노조 전임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조정('00.12)
- 연·월차 휴가보상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
  - 연·월차 보상에 대한 산출방식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기준으로 적용('00.12)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과다보유 개선
  - 이용률이 낮은 전용회원권 4구좌를 매각토록 노사합의('00.12)
- 섭외성 경비 과다집행 개선
  - '01년도부터 법인세법상 손금인정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집행
- 퇴직금제도 개선 대가로 복리후생비 등 부당인상 개선
  - '00년도 임금협약서중 복리후생비 인상 관련사항을 철회('00.12)

○ 국립공원관리공단

- 주택자금 융자·지원 부적정

-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자금 대출이자율로 조정('00.10)
- 연·월차 휴가보상제도 운영 부적정
- 연·월차 보상에 대한 산출방식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기준으로 적용('00.10)

### 35)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處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환경관리공단
    -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교육용 사업장 조기지정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 노사협의회 합의를 통하여 후생복지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00.12)
    - 전문인력 채용건에 대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합의('01. 6)
  - 한국자원재생공사
    - 노사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노사분규 사전예방
  - 국립공원관리공단
    - 노사협상 정례화를 통하여 후생복지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01. 4)



### 36)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선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01. 5.29, 국무회의시)
-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함
  -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남은 기간동안 대회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 대회를 치르기 바람('01. 8.14, 국무회의시)

- 월드컵 개최도시 대기질 개선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01, 744대 운행→ '02, 2746대 운행)
  -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공회전 금지 등 제도개선
  - 대회기간중 자동차 부제, 도로 청소 등 오염저감 방안 마련
- 도시환경 정비
  - 경기장 주변 비위생 매립지 정비(서울 난지도 등 5개소)
  - 도시생태공원 및 자연형 하천 정비
    - 서울 난지도 월드컵 공원조성, 푸른대구 가꾸기 등
  - 도시녹화사업, 음식물 쓰레기 감량, 가로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
- 친환경적 대회운영 준비 및 추진상황 평가
  - 환경친화적인 월드컵 대회 운영지침 제정('01. 8)
  - 대회 개최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10개 월드컵 개최도시별 담당(국장)지정 및 민관 합동점검('02. 5)
    - 월드컵 32개 전 경기대회에 민관 합동 환경 모니터링 실시('02. 6)
    - 전국 자전거 시민 대행진, 클린업 리더 발대식 등 캠페인 실시

### 37) 가을가뭄에 積極 對處 : 541(08-70-60)

#### ○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심각한 가을가뭄 극복을 위해 절수운동 필요
- 3대강 물관리특별법 통과 되어야 함('01.11. 7, 국무회의시)

#### ○ 물 절약 대책 추진

- 물절약 절수기기 설치사업 추진
  - 기존 주택 524만가구에 절수기 설치
  - 전국 7천여 학교에 절수기 설치 완료
  - 숙박시설 등 물수요가 많은 곳에 절수기 설치(190만개)
- 수도요금 현실화
  -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시행(누진제개선, 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 노후 수도관 교체
  - 관망의 진단 등 개량 및 부식방지기술 개발 계속 추진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연차별 추진
- 중수도 설치확대
  - 중수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01. 9)
- 물 절약 홍보·광고
  - 물 절약 범국민운동본부 발족('00. 2)
  - TV, 신문 등에 물절약 홍보·광고 실시
- 3대강 물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 추진
  - 3대강 물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 및 공포('02. 1)

### 38) 中國의 WTO 加入對備 徹底 : 539(03-31-35)

- 중국시장이 개방되면 다른 나라들도 많이 들어 올 것이므로 우리도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01.11.12, 국무회의시)

- 환경산업의 중국환경시장 진출기반 구축
  - 중국환경시장 진출확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제2차 한·중·일 환경산업 라운드 테이블 공동개최(‘02. 7.23~24, 일본)
  -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 및 환경산업협력회의(‘02. 7, 11) 개최
  - 상해국제환경전시회 참가 및 지방순회설명회 개최(‘02.11.22~27, 상해, 서안, 장사 3개 지역)
- 환경산업 수출협력단 구성·운영
  -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구성하여 북경(‘02. 4) 및 상해(‘02.11) 파견
    - 국제환경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마케팅
    - 한국관 설치·운영
- 중국에 환경행정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제도적 지원 추진
  - 국장급 주재관 중국 파견(‘01.10)
  - 한국환보기술전시청 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02. 4)

# 勞 動 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7(03-45-01)  | 노사정위원회 발족                          | 1998. 4.28 |
| 66(06-45-02)  | 6.18발표된 기업부실판정 결과 후속조치의 철저한 추진     | 1998. 6.19 |
| 193(03-45-04) | 각종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br>(노사정위원회 법적 근거마련) | 1999. 3 .2 |
| 275(03-45-06) | 추석대책의 만전                           | 1999. 9.17 |
| 295(05-45-07) | 노동계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 1999.12. 7 |
| 337(05-45-09) | 노사참여형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 2000. 3.24 |
| 440(05-45-10) |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 2001. 2. 2 |
| 577(05-45-13) | 인력수급불균형 대책수립                       | 2002. 3.18 |
| 578(05-45-14)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                     | 2002. 3.18 |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 9.21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2(08-70-41) |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                      | 2000. 8.2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92(03-70-46)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br>(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br>연성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 2000.10. 4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대비 철저   | 2000.10.23 |
| 410(08-70-50) | 설 종합대책 마련  | 2001. 1. 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14 |
| 531(07-70-59) | 전자정부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4대보험의<br>연계정보화 사업에 철저)                                | 2001. 8. 7 |
| 545(07-70-62)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추진  | 2001.12.24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5 |

## 1) 勞使政委員會 發足 : 47(03-45-1)

-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근거법령과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
- 노사정위원회의 1차 합의사항 90건중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은 적극 홍보하여 오해를 해소시킬 것('98. 4.28, 국무회의시)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추진
  -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설득 노력 전개
  - '98. 6. 3 위원회 출범, 민주노총도 정부설득을 수용하여 '98. 6. 5 노사정위원회 참여 결정
  - 부당노동행위·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금융산업실업대책위원회 등 구성·운영
- 제1기 노사정합의사항 이행현황 및 제2기 위원회의 출범 필요성 홍보
  - 수시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 간담회 개최
    - 『제1기 합의사항 이행현황』 및 제2기 주요의제안 언론발표('98. 5. 4) 및 유관 기관 배포
    - 언론사 논설위원회 간담회 개최('98. 4.27, '98. 5.22~5.23)
    - 『노사정위원회, 왜 참여해야 하나』 등 홍보자료 작성, 언론사 및 유관기관 배포
  - 노동뉴스 등 자체매체 활용·홍보
    - 『노동뉴스』 배포(72,000부), 『월간노동』 및 『노동교육』 등 게재
    - 정부간행물 제작소 홍보자료 작성·배포(5만부)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으로 산업현장의 갈등을 장내로 수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난 극복과 원활한 개혁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 6.18 發表된 企業不實 判定結果 後續措置의 徹底한 推進 : 66(06-45-2)

- 부실판정기업에 종사해 온 근로자들의 과도한 실업발생을 방지하고 해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98. 6.19, 경제대책 조정 회의시)

- 퇴출유형에 따른 고용안정지도
  - 분리독립, 자구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도하여 17개소, 10,318명 고용유지 완료
  - 법인의 합병,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양수회사에서 고용승계토록 지도하여 12개소, 3,040명 고용승계 완료
  - 자산매각의 경우 매입자가 관련근로자를 최대한 재고용토록 지도하여 5개소, 1,588명 재고용 완료
  - 회사청산의 경우 최단시일내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21개소, 3,318명의 직장잃은 근로자중 1,162명 계열사 등 재취업 완료
- ※ 고용변동상황(‘99.12.20현재)
  - 고용승계 및 유지 : 14,946명(전체의 64.0%)
  - 실직후 재취업 확인 : 1,162명(5.0%)
  - 실직후 거취불명 : 7,233명(31.0%)
- 퇴직금 등 금품청산 지도

- '99.12.20현재 금품 미청산 현황 : 3개소, 1,091명, 62억원
- 부실기업에 종사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안정 및 금품청산 등을 적절히 지도함으로써 과도한 실업발생을 방지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

### 3) 各種 改革措置의 蹉跎없는 推進(노사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 193(03-45-0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은 외국에도 선례가 있는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99. 3. 2, 국무회의시)</li> <li>○ 노사정위원회의 항구적 기구화 ('99. 4. 8, 보건복지부·노동부 국정개혁보고회의시)</li> </ul> |
|---|
-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의 항구적 기구화를 위한 기틀 마련
    - 노사정위원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99. 5.24)
    - 노사정위원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99. 8. 6)
    - 노사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99. 9.28)
  -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로 위상강화 및 실질적인 노사정 정책협의기구로써의 역할 제고

### 4) 秋夕對策에 萬全 : 275(03-45-0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노임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99. 9.17, 국무회의시)</li> </ul> |
|---|



- '99 추석절 체불액은 1,863개업체, 49천명에 2,005억원이었으며 체불청산 및 신규발생 예방을 위하여 『'99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수립·시행
  - 9. 6~9.22까지 노동부 본부에는 “체불임금 청산지도반”, 지방관서(46개소)에는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
  - 9.13~9.22까지는 본부 및 전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정부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대금 조기 지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일시적 자금난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요청
- 임금체불액 총 2,005억원(1,863개업체, 49천명) 중 42.9%에 해당하는 1,061억원(969개업체, 22천명) 청산하여 높은 사업성과를 보임.
  - 미청산 체불임금 944억원에 대하여는 체불청산을 계속 지도하였으며
  - 2개월이상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생계비 대부(총예산 200억원 : 1인당 500만원 한도)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 '99.12.20 현재 근로자 2,524명, 97억원 대부

## 5) 勞動界 問題에 대한 對策樹立 : 295(05-45-07)

- 노동계와의 문제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
  -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양측이 서로 타협할 여지가 있는 만큼 노동부 장관은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기 바람 ('99.12. 7, 국무회의시)
- 노사정위원회 특위·소위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노사간의 견해차이를 해

소하여 합의안 마련

- '99년 동 위원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안)을 정부에 건의('99.12.15)

○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의견 조율 및 당·정 협의

- 정부는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의 소모적인 논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여 '99.12.28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는 노사의 반대 및 총선일정 등의 이유로 처리유보,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노사의 재논의 요구에 따라 '00. 4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은 '00.12.21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 전임자 급여문제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노사정위원회는 금년 2월내 합의도출을 위하여 '01. 1. 9부터 노사정 간 사회의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한 결과
  - '01. 2. 9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06.12.31까지 5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

○ 조속한 입법의 추진 : '01. 3.28 법률안 공포·시행

- '01. 2.17 당정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제219차)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결정
- '01. 2.19 이상수 의원 등 13인의 12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중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

- 환노위(2.23), 법사위(2.27) 의결을 거쳐 2.28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사간 참여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노사간 신뢰형성 및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6) 勞使參與型 職業能力開發體制 構築 : 337(05-45-09)

-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노사가 참여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00. 3.24, 노동부 업무보고시)

-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수립(‘00. 5)
- 직업능력개발3개년계획에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포함하여 수립(‘00.10)하고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확정(‘00.12)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실천기준 개발(‘01. 4) : 리더십등 6개범주 19개 지표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시범운영(‘01. 7~‘02. 6)
  -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훈련컨소시엄 주체와 중소기업 490여개사 참여
- 노사합의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요건 완화(‘01. 7)
- 근로자직업훈련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01. 7)
  - 근로자학습재원 조성, 직업훈련정책과정에 노사 참여 확대 등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공동 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 유도
  -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 배포(40,000부, ‘01.10~‘02. 3)
-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02.12 완료)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모델 시범적용(‘02. 5~현재 삼성코닝, 한국안센 등 4개소)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성과분석('02. 9)
  - 훈련컨소시엄 시행전 대비 훈련실적 13배 증가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지침시달('02.11)

## 7) 中小企業 勤勞者 保護 : 440(05-45-10)

-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복지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01. 2. 2, 노동부 업무보고시)

-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 '00.10.23 노·사·정 법제정 합의
  - '00.11.25 법안 국회제출(민주당 신기남 의원 등 118인 공동발의)
  - '01. 2.23 법안 환노위 심의 의결
  - '01. 6.26 법안 법사위 심의 의결
  - '01. 7.18 법안 본회의 의결
  - '01. 8.1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 '01.12.27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정
  - '01.12.31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
- 성과배분형 신(新) 우리사주제도 도입
  - 기업의 자사주·금전 출연 유도, 장기보유방안 마련,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도개선
  - 기업출연금 손비인정, 근로자주식구입비 소득공제, 대주주출연금 소득

- 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저율과세 등 세제지원방안 마련
- 근로자복지기본법령 제정('02. 1 시행)을 통하여 노동부문에서의 생산적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성과급방식의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복지향상 및 노사협력 제고를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토대 구축

## 8) 人力需給不均衡 對策 樹立 : 557(05-45-13)

- IT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인력수급대책을 보완해 주기 바람('02. 3.18, 노동부 업무보고시)
-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 재해예방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Clean 3D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유도
    - '02.11월 현재 3,098개 Clean사업장 인정, 자금지원결정 5,879개 사업장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Clean 3D업체 등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면접을 실시하는 『동행면접』 활성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02.11월 현재 4,886회 실시, 7,699명 참여, 2,789명 취업(취업률 36.2%)
  - 『인력수급전망인프라 구축』추진,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정기적인 청년패널조사 실시, 종합직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연계지원을 강화함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2~2010)』 발간·배포('02. 4)
    - '01년도 1차 『청년패널조사』실시결과 분석('02.11) 및 2차 청년패널 조사 실시
  -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및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연계지원 강화를

- 위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의 지속적인 추진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하여 제조업 등 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활성화
  - 기간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직종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02. 1) : 훈련수당 10만원→20만원, 훈련시 훈련비 전액지원 등
- 중소기업과 대기업 및 훈련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컨소시엄 사업 확대(6개소→15개소)
  - 훈련컨소시엄 참여업체('02.11월말 현재) : 6개기관(896개업체),  
5,623명훈련실시
- IT인력양성('02.11월말 현재 38,537명 실시 중)
  - 자바 프로그램 등 기업의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실시

## 9) 外國人勤勞者의 人權保障 : 578(05-45-14)

- 한국기업들의 횡포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2. 3.18, 노동부 업무보고서)
- '01.12.20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산업연수생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 : 연수취업기간조정(연수2년+취업1년→연수1년+취업2년), 연수취업자는 노동부가 관리하고, 연수 추천단체에 대해 정기 감사 실시 등
    -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연수취업요건, 연수취업계약, 연수취업자의 사업장 이동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 제정('02.12.18)

- '02. 3.12 불법체류자의 급증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 수립하여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02. 3.25~5.25)을 설정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03. 3월까지 출국유예기간 부여  
: 불법체류자 256천명(92%)이 자진신고
- '02. 7.18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 서비스분야에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서비스분야취업관리제』를 도입('02.12. 6) : 11.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근거 마련
- '02. 3.22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수립·시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중 임금체불 취약업체 580여개소를 선정·수시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217회, 13,324명) 및 홍보(교육용비디오테이프 3,000개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 10) 經濟政策 關聯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홍보노력의 강화('99. 3.16, 국무회의시)
- 국정홍보 강화('00. 1.25, 국무회의시)

- 오보대응 철저 등 홍보강화 지시
  - 국정홍보업무 강화 및 오보대응 철저('99.11.16)
  - 전자홍보 강화('00.11.18)
  - 노동정책 홍보 강화('00.12.14)
- 언론사 등 매체홍보('00. 1. 1~'00.12.31)
  - 보도자료 배포 : 636건
  - 홍보물 제작·배포 : 167건
  - 신문·방송광고 : 150건
  -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 66건
- 장·차관 홍보활동
  - 기고 : 33건
  - 방송출연 : 13건
  - 언론사인터뷰 : 40건, 언론간담회 : 50건
  - 현장홍보활동 등 기타 : 126건

## 11)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경영진단 실시
  - '98.11. 2~'99. 2.28 : 경영진단 실시하고, 경영진단결과 보고서를 토대



로 조직개편 단행 ('99. 5.24)

○ 2차 정부조직개편 단행('99. 5.24)

- 정원조정 : 총 정원 2,847명 → 2,699명(Δ148명)
- 조직개편
  - 본부 : 2실4국8관22과9담당관 → 2실4국6관21과9담당관(Δ2관 Δ1과)
  - 소속기관 : 청 노사협력과 폐지하고 근로감독과로 기능통합 및 산업  
상담원 전원감축

- 고용보험징수업무 민간위탁 : '99.10. 1(근로복지공단)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민간위탁 : '01. 1. 1(산업인력공단)

○ 예산절감

- '99예산 자체절감계획 수립·시행
- '99예산비목의 2~4%에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설정

'99 예산 절감현황<일반회계>

| 구 분   | '99예산   | 절감대상액  | 절감목표액(A) | 4/4까지절감액(B) | 절감율(B/A) |
|-------|---------|--------|----------|-------------|----------|
| 총 계   | 454,694 | 97,368 | 3,668    | 3,475       | 94.7%    |
| 노 동 부 | 38,641  | 25,081 | 1,466    | 1,380       | 94.1%    |
| 산하단체  | 416,053 | 72,287 | 2,202    | 2,095       | 95.1%    |

※ '99예산은 전체 예산액중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절감대상  
비목에 해당되는 예산임

## 12)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138(08-70-09)

- 각 부처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98. 8. 1, 국무회의시)
- 이재민 구호 및 제방복구 등 수해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적극 노력할 것('98. 8.17, 국무회의시)

- 호우피해 사업장 지원 종합대책 수립·시행('98. 8.10 ~ 8.23)
  - 호우피해 복구지원 : 침수설비 절연저항 측정등 1,667개 사업장에 안전 점검 및 기술지원
  - 산재예방 및 시설개선지원 : 중소기업사업장 11개사 303백만원지원
  -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호우지역 집중지원 : 1,829개소 수해피해지역에 289,635명 투입하여 축대 및 제방보수 등 수해복구 지원('98. 8.11~9.30)
  - 수해지역주민 무료진료 :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안산병원의 의료진 연인원 60명 투입하여 수해피해주민 302명 무료진료 실시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28개 사업장 899백만원
- 노동부장관 수해지역 현장방문 ('98. 8.13)
  -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빙그레, (주)삼일공사 등 침수피해 사업장
- 노동부공직자 수해의연금 모금 기탁 ('98. 9. 2)
  - 소속 공무원 3,250여명의 수재의연금 2,594만원 동아일보사 기탁
    - ※ 산하단체 자체모금된 수재의연금 3,707만원을 별도 언론기관에 기탁
- 수해지역 인력지원
  - 본부 직원 41명은 '98. 8.14 수해지역인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단지에서 복구작업 실시, 소속기관·산하단체 직원들은 해당시·군·구 소재 수해지역에 인력지원

○ 수해피해 직원지원

- 직원 2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13) 訪日 後續推進 徹底 : 157(09-70-12)

- 금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음
-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한·일 고위급 노사정 교류(매2년)

- 아국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일('98.12.20~23) : 노동부장관(단장) 등 7명
  - 주요합의사항 : 고위급 노사정 교류 정례화,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 5개항
- 일본 고위급 노사정대표단 방한('00. 9. 7~9) : 노동대신(단장) 등 10명
  - 의 제 :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방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 대한 한·일의 국제협력」
  - 합의사항 : 아·태지역 개도국대상 한·일 공동프로젝트 실시

○ 한·일 실무급 노사정 교류(고위급교류가 없는 해)

- 일본 노사정 실무대표단 방한('99.12. 1~4) : 노동성 대신관방심의관(단장)등 7명
  - 주요협의사항 : 21세기를 맞이하는 노사정의 협력강화 방안 논의 및 세미나 개최 등
- 아국 노사정 실무대표단 방일('01.12.13~15) :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등 7명

- 주요협의사항 : 취업구조 다양화 문제 및 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최초의 6자 연석회의 개최)
- 한·일 양국 노·사·정간의 이해와 협력 증대
  - 정보교환 및 양국 공동프로젝트(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ILO 세미나) 추진

#### 14) 컴퓨터 2000年 問題關聯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98.11.23, 국무회의시)
  - Y2K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바람
  -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99.12.28, 국무회의시)
- Y2K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 각 기관에서 매월 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서 보고한 후 노동부 Y2K 대책반에 통보토록 계획 수립
  - 보유자원의 Y2K 문제해결
    - 평가대상 : 20,177대 → 문제발생 및 해결 : 3,837대
  - 노동부 및 산하기관 Y2K 비상대응 모의훈련실시(‘99.11 ~ ‘99.12)
  - 노동부 및 산하기관 Y2K문제해결 자체선언완료(‘99.11.12)
  - 전환기간중 Y2K비상대책반 운영
    - ‘00년 전환기간중 「비상복구팀」 지정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복구 대비 체제 유지
    - ‘00년 전환기간중 노동부 및 산하기관(8개기관 9종의 시스템)문제 발생

치 않음

- 윤년문제 대응방안 수립 및 비상근무실시
  - 노동부 및 산하기관 윤년문제 점검실시('02. 2.24~27) 및 비상근무 실시('00. 2.28~29)
- Y2K문제 상황종료('00. 3.31)

## 15)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 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99. 1.12, 국무회의시)

- 고급공무원등의임용에관한인사운영지침 제4조(심의기준)의 내용중 대상자의 능력, 청렴성, 헌신성 요소 등을 강화하여 인사관리
  - 4급이상 공무원 승진임용시 심의기준에 능력, 청렴성, 헌신성 등의 요건을 강화하여 심의 선정
  - 4급 승진자 전원을 지방배치하여 지방관서 활력 도모
- 4급이상 공무원의 특정지역별, 특정고교출신별, 출신대학별 인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역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 16)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국가위기나 재난을 맞아 정부가 국민속에 파고들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 것임  
(‘99. 8. 3, 국무회의시)
-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99. 8.10, 국무회의시)

### ○ 사업장 지원

- 수해사업장 기술지원 및 안전점검 실시(854개소)
- 재해예방시설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 9개소, 161백만원
- 산재보험료 부담경감
  - 호우발생이후 납기도래한 보험료 '00. 3.10까지 기한 연장하고, 동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연체금 면제 : 23개소, 142백만원
- 고용보험료 부담경감
  - 호우발생이후 납기도래한 보험료 '00. 3.10까지 기한 연장하고, 동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연체금 면제 : 19개소, 65백만원

### ○ 대민 지원

- 수해지역 무료진료(산재의료관리원) : 수해지역 이재민 대상으로 '99. 8. 4~8.16까지 무료진료 실시(466명)
- 노동부공직자 수재의연금 모금기탁 : 노동부 공무원 2,847명은 수재의연금 2,400만원을 모금하여 '99. 8.12 MBC, 조선일보사에 기탁
- 공공훈련기관 교직원 및 훈련생 수해복구 지원 : 14개기관, 652명 참여
- 공공근로인력 수해지역 투입 : 99,561명

## 17)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15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니, 각 부처 장관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99. 9.21, 국무회의시)
  - 중산층·서민을 위한 예산은 수혜계층별 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 ('99.10. 4, 국무회의시)
  - 내년과 새천년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99.12. 7, 국무회의시)
  - 각 부처는 새천년 첫해의 나라살림을 예산의 내용과 관련법안들을 분야별·수혜계층별로 국민에게 적극 홍보('99.12.21, 국무회의시)
- 
- '00년 예산 홍보
    - '00년 예산 홍보팸프렛('00년 예산 이렇게 짜였습니다)제작·배부('99.12)
      - 수 량 : 5000부
      - 배부처 : 본부, 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산하단체 등
    - 산하단체 간행물을 통한 '00년 예산 홍보('99.12)
      - 월간 : 『안전보건』
      - 내용 : '00년 노동부 예산
  - 간행물을 통한 '00년 노동부 예산 홍보('00. 1)
  - 『2000년 달라지는 노동행정』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배포('00. 1)
  - 새천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과제 및 그에 대한 예산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

## 18) 各 部處의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 경쟁력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개혁방안 마련 보고
  - '00. 3.24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동부문 국정개혁 보고서』 마련 보고
  - 주요보고내용
    - 노동여건변화와 중점과제
    - 과제별 개혁 추진계획
    - 21세기형 선진노동행정 구현
- 구체적인 개혁방안실천(How to do) 추진
  - '00. 9.18 『국정2기 노동개혁 추진단』 설치('01. 2월까지 한시 운영)
  - 11대 노동개혁과제 선정(자체)
    - ① 근로시간단축, 휴일·휴가제도 개선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③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및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④ 모성보호 관련 제도개선 ⑤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⑥ 외국인력활용제도 개선 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시행 ⑧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운영혁신 ⑨ 직업 능력개발 3개년 계획수립 ⑩ 노동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확대방안 강구
  - 과제별 월별 추진성과 점검회 개최 : 4회
  - 노동개혁 평가단 운영(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 26명) : 2회
- 홍보



- 기자간담회: 26회, 신문·방송 인터뷰: 43회, 보도자료: 33회, 기고: 15회
- 신문방송광고: 13회, 홍보물: 19회, 강연등: 77회

## 19)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철저한 實踐 : 366 (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00. 5. 9, 국무회의시)
- 노동시장정보망 확충 : 시스템 정비 및 확충('00.10 1차, '01. 2 2차 기능 개편 완료)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를 포함한 종합제도개선안 마련('00. 7)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00.12)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04. 1월 시행) 및 산재보험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00. 7)
  -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배포
    - 미래유망 50개 직종에 대한 훈련기준 및 커리큘럼 등을 포함한 훈련프로그램 개발('00. 2) 및 훈련프로그램을 CD로 제작, 훈련기관등에 배포('00. 3~4)
  - 원격화상훈련·인터넷통신훈련 등 활성화 : 인터넷통신훈련 콘텐츠 개발('02.11)
  - 직업훈련정보망 개선 완료('01. 5)
  -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매년 10%씩 기능장려금 증액 지급
  -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
    -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00. 5.17)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00.10.23)

- '02. 9.25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10.17)하였으나, 11. 5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정부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
- 임금채권보장법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99.12.3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완료('01. 8.14),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전사업장에 적용('01.11. 1)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시범운영 (843개 사업장, 935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00. 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공포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화 및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률 상향조정 : 2%→2~5%
-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조치
  - 50인 미만 사업장 기술 및 자금지원 확대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안법 적용을 위한 법령·규정 등 개정 ('00. 8)

## 20) 秋夕連休 와 疏外階層 慰勞 : 382(08-70-41)

- 체불임금 해소 등 추석연휴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바람  
( '00. 8.29, 국무회의시)

- 2000년 추석절 체불액은 1,283억원(1,607개업체, 30천명)이었으며 체불 청산 및 신규발생예방을 위하여 『2000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수립·시행
  - 8.14~9. 9까지 노동부 본부에는 “체불임금 청산지도반”, 46개 지방관서에서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
  - 8.23~9. 9까지는 본부 및 전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실시

- 100인 이상 사업체 5,000개소에 대해 체불청산 협력공문 발송
- 정부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대금 조기 지급토록 관계부처에 협조요청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일시적 자금난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요청
- 임금체불액 총 1,283억원(1,607개업체, 30천명) 중 785억원(593개업체, 23천명)을 청산하여 지난 5년간 추석체불 청산율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함
- ※ 청산율 : 17.8%('96) → 30.7%('97) → 44.4%('98) → 52.9%('99) → 61.2%('00)

## 21) 公企業監査 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00. 9.19, 국무회의시)
- 근로복지공단
    - 경영실적 평가제 도입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
    - 연·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할증률 폐지)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
    - 즉석식 복권사업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외상매출금 확보방안 강구
  - 산재의료관리원
    - 경영실적 평가제 도입 및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로 전환
  - 한국산업안전공단
    - 자체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정 및 인센티브 지급방안 수립

-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로 전환
- 연·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
  - 연·월차휴가수당 산출방법 개선 및 체력단련휴가 폐지
  - 국제훈련센터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 학교법인 기능대학
  -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국민주택자금 대출 이자율 수준으로 상향조정
  - 예산편성 범위내에서의 특별성과급 등 지급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 지급
  -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운영 및 조합원 자격관련 부적정한 단협 내용 개선

## 22) 4大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蹉跎없는 推進 : 392(03-70-46)

- 금융·기업부문 개혁은 연내에, 공공·노동부문 개혁은 내년 2월말 까지 반드시 완료('00.10. 4,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 4대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부터는 튼튼한 기반위에 안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함('00.10.23, 국무회의시)

- 열린 경영 확대를 통한 노사신뢰 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기업경영설명회 우수사례집, 경영정보 공개방법 안내책자 등 배포(263,000부)
  - 노조간부 등에 대한 기업경영 이해 제고교육 실시(11회, 756명)
  - 노사협의회 중점지도사업장 선정 및 지도 : 5,582개소 7,642건('01~'02)

- 작업장혁신 지원을 통한 노사공동이익 증진
  - 작업장혁신 컨설팅 실시(20개소) 및 작업장혁신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2회)
  - 작업장혁신시범사업장 선정(146개소 : '01~'02), 매뉴얼(CD) 제작·배포(1,000개소) 및 우수기업 현장연수(6회, 136개사, 248명 : '01~'02)
- 노사협력인프라 구축 등 신노사문화 확산 지원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198개사 : '00~'02) 및 신노사문화대상 선정제도 실시(26개사 : '00~'02)
  - 취약사업장 노무관리진단서비스 실시(삼척의료원등 28개사 : '01~'02)
  - 노사화합 동서한마음행사(3회) 개최 등 노사화합행사 : 8,607회('99~'02)
-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
  -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00. 5.17)
  -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00.10.23)
  - 관계부처 협의 후 국회제출(10.17), 국회 환노위에서 노사가 정부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개정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11. 5)
- 근로자복지기본법('01. 8.14), 동법 시행령('01.12.27), 동법 시행규칙('01.12.31)제정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 제정·보급('00. 1. 3)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지침』 제정·보급('00.10.23)
-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제정·보급('00.12.22)
-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제정·보급('00.12.29)

## 23) 公共部分 勞使紛糾에 對備 徹底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 노동계와의 대화채널 마련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조정활동 강화 >

- 양대 노총 및 공공부문 산하연맹 대표자 및 간부 등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지도
- 주요사업장 집중관리
  - 분규발생소지가 있는 중요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사업장으로 선정, 집중 관리로 분규 사전예방
    - ※ '01년도 43개소중 서울지하철공사 등 20개소 분규 예방
    - ※ '02년도 57개소중 KBS, KT 등 32개소 분규 예방
- 분규발생시 조기타결
  - 대형사업장 분규발생시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조기 타결함으로써 분규의 확산·장기화 방지 : 발전('02. 2.25~4. 2), 가스·철도('02. 2.25) 분규 조기타결

### < 합법적, 합리적 노사관행 확산 >

- 발전('02. 2.25~4. 2), 병원('01~'02) 등의 불법파업 또는 폭력시위,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대처로 합법적, 합리적 노사관행 확산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자율 해결 관행 확산으로 불법분규 감소추세
  - '00년 67건(26.8%) → '01년 55건(23.4%) → '02년 56건(20.1%)

### < 연대투쟁의 예방 및 파급효과 최소화 >

- 주5일 근무제 반대 등 지속적인 대정부 연대투쟁에 대하여
  -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천명과 비판여론 확산으로 연대투쟁의 과급효과 최소화
  - 특히, 발전노조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02. 4 .2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사전예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노사관계의 틀 마련

## 24) 설 綜合對策 마련 : 410(08-70-50)

- 설 연휴기간중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게 됨. 물가관리, 체불임금,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특히 인명사고가 없도록 교통 안전에 각별히 노력해야 함. 치안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기 바람('01. 1. 9, 국무회의시)
- '01. 1.16 국무회의시 『설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수립·보고
    - 동 대책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불청산한 결과
      - 임금체불액 총 3,095억원중 1,299억원(42.0%) 청산, 1,796억원(375개업체, 28천명) 미청산
      - 59개업체 1,931명에게 65억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으로 지급
      - 체불근로자 2,024명에게 28억원 생계비 대부

## 25)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국민의 정부들어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학연·친소관계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됨
-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01. 2.14, 국무회의시)

- 인사청탁 근절방안 기본계획 수립('01. 3)
- 인사청탁 근절방안 시행 주요내용
  - 승진(직위승진), 승진심사 등에 있어서 다면평가 실시
  - 승진후보자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자질검증 실시
  - 자체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
  - 부처내 인트라넷을 통한 승진예정자 알림, 일사일정 예고 등을 통한 인사행정 검증기능 강화
  - 장관이 직원 월례조회, 간부회의, 임명장 수여식 등을 통해 인사청탁 근절을 수시 지시
  - 업무추진실적 우수기관(부서) 및 친절공무원에 대한 우대
  -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연고지 배치 등 인사를 통한 고충사항 해소
  -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능력개발기회 균등 부여
- 인사청탁 근절 노력이 조직 전체로 정착
- 다면평가,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 승진내정자, 인사일정 예고제 실시로 인사행정의 신뢰성 향상
- 인사행정을 통한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 26) 電子政府事業의 蹉跎없는 推進(4대保險의 連繫 情報化事業에 徹底) : 531(07-70-58)

-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라며, 복지부·노동부는 4대 보험의 연계정보화 사업에 철저히 추진해 주기 바람('01. 8. 7, 국무회의시)
- 정보화전략계획수립('01. 9월~12월)
- 사회보험포털서비스(4insure.or.kr) 개시('02. 7. 1)
  - 사회보험안내, 전자민원안내, 전자민원신청, 보험료조회/납부 서비스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자격업무 one-stop 신고체제 구축
  - 1개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4대보험 업무가 한번에 처리되도록 개선('02.11. 4)
- On/Off-Line 공통업무 공동접수 서비스 본 사업 실시('03. 2. 3)

## 27) 電子政府 具現을 위한 法令 整備推進 : 545(07-70-62)

-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개선된 행정 프로세스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관계법령의 정비와 필수적으로, 법령정비를 조기에 추진('01.12.24, 전자정부 종합점검회의시)
- 제도정비 관련법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시행규칙도 상반기 중 제정하여 올 가을부터 전자정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02. 5. 7, 국무회의시)
- 보건복지부·노동부 법제도개선반 구성('02. 1.21)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의뢰('02.12.10)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복지부·노동부장관 고시로 공통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02.11)
- 고용보험시행규칙 개정 및 근로복지공단 서식규정 개정('03. 1)

## 28) 冬節期 對策 마련 : 611(05-70-67)

-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전 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 실업자에게 공공근로 등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 ('02.11. 5, 국무회의시)
- 공공근로 등 현재 실시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15만명 참여중) '0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동절기 중 31천여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업대책 시행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7.5천명), 실업자직업훈련(17천명), 구인업체개척 사업(694명),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3,458명), 대학생중소벤처기업 체험(3천명) 등
  - 신규 졸업예정자 및 대졸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청년취업지원 강화
    - 중소기업 밀집 79개 공단대상 『일제구인수요조사』('02.10.14~11.13) 실시
    - 졸업예정자 『일제구직등록』('02.11.18~12.14) 실시
    - 졸업예정자 대상 '02.10월부터 지역별로 총 25회의 채용박람회 개최
    - 재학생 및 졸업자의 직업탐색, 구직기법 교육 및 직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직업지도프로그램』 도입('02.10)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       |
|-------|
| 女 性 部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56(05-06-01)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 1998. 5.12 |
| 57(05-06-02)  | 가정주부의 권익확대                     | 1998. 5.12 |
| 239(05-06-03) | 생활·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                | 1999. 4.12 |
| 321(05-06-04) | 전업주부의 GDP 산정방안 강구              | 2000. 2.21 |
| 330(05-06-05) | 여성부 신설 준비                      | 2000. 2.21 |
| 552(05-06-06) |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2002. 2. 6 |
| 48(08-70-03)  | 홍보노력의 강화                       | 1998. 4.28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82(08-70-29) | 2000년 예산안 홍보지시(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19(05-70-55) | 여성인권 개선                        | 2001. 4.18 |
| 520(08-70-56) | 여성인적자원 개발                      | 2001. 4.18 |
| 521(05-70-57) | 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조성              | 2001. 4.18 |

## 1) 知識・情報化社會 對備한 女性の 競爭力 強化 : 56(05-06-01)

-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기 바람. 특히 문화산업에서는 창의적인 여성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함  
(‘98. 5.12,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개발 연구용역 실시(‘99.11)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2~‘05) 여성부문 세부계획 마련(‘01.12)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제고」 시행계획 수립(‘02. 7)
- 문화분야 지원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 지원(‘01. 6~12) : 5개 단체 3300만원
  - 여성단체 문화사업 지원
    - 문화학교 운영지원(228개교 10억원)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99~‘00) : 35개 기관 605회 실시
-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내실화
  - 전국 46개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부 이관 및 장기발전방향 정립 (‘01. 1~4)
  - 신규 설립(‘01.12) : 광주북구,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창원 등 7개 지역
  - 2003년도 센터운영비 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 추진
    - 센터당 평균지원액 : 29,996천원(12개 센터 지원)
  - 여성폭력피해자 무료 직업훈련교육 지원(‘02. 6~12)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중 희망자
- 2002년 전업주부 재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 실시('02. 8~11)
- 32개 여성인력개발센터, 500백만원(여성발전기금)
- 여성유망직종 개발 및 홍보
  - 여성유망직업·신직업 연구용역 실시('02. 8)
  - 2002 여성신직업페스티벌 개최('02. 9.12~1. 5)
  - 여학생 진로지도, 신직업 소개, 강연회, 적성검사, 백일장 등 : 4만여명 관람

## 2) 家庭主婦의 權益擴大 : 57(05-06-02)

- 주부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반영, 가정폭력의 예방 등 가정주부의 권익신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98. 5.12,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근절되어야 하며, TV등에 대한 모니터 사업지원 등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99. 4.12, 여성특별위원회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가사노동 위성계정 첫 산정('02. 2.28)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강화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반 확충
      - 상담소 : 120개소('00)→142개소('01)→158개소('02)
      - 피해자보호시설 : 27개소('00) → 29개소('01)→31개소('02)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5월 가정의 달 : 경찰청 및 여성단체와 공동실시

- TV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01. 9~12)
  - 대상 : TV 뉴스 및 드라마
  -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 개발(책자발간) 및 TV 프로그램의 남녀 차별적 요소 개선 및 협조요청('02. 3, 방송작가 협회)
-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을 위한 남녀평등방송상 시상식 추진('99~)
  - 선정기준 : 남녀평등의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 시상내용 : 매년 5~6개 프로그램 수상(‘아줌마’, ‘난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등)

### 3) 生活・意識改革을 위한 努力 : 239(05-06-03)

- 과거의 잘못된 의식을 개혁하고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활・의식개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라며, 여성계의 이러한 운동에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람  
(‘99. 4.12, 여성특별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는 의식・생활개혁운동 전개
  - 역량결집을 위한 구심체로서 「의식・생활개혁여성협의회」 발족('99. 5)
  - 실천다짐을 위한 지역여성대회 개최('99, 5개지역)
  - 탈세추방, 여성소비자의 힘으로('00. 3~9, 대한주부클럽)
  - 농촌지역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00. 4~7, 전국여성농민회 총조합)
  - 음식물쓰레기 캠페인 실시('01. 7~12, 고향생각주부모임)
  - 영호남 여성지도자화합 한마당('00. 7, 여성단체협의회)

- 의식·생활개혁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 여성지도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대국민 개혁의식 확산('99. 4~8)
    - 연찬회(2회), 지도자 회의(5회), 실무위원회(9회) 개최
  - 신지식인운동 확산 전개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99.12)
-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의식·생활개혁 전개
  - 자원봉사관리자 연찬회 개최('99.11)
- 성비불균형 개선을 위한 범 국민운동 전개
  - 학생, 교사, 일반인 대상 교육 실시('99. 8~12)
- 신지식인운동
  - 여성신지식인 운동추진을 위한 전국순회 부모워크샵('00. 3~4)
  - 사랑의 며느리 봉사대 운영('00. 5,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 한마음 공동체 운동
  - 지역사회 주민 노인봉사 프로그램('00. 5~12)
- 바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샵('00. 8~10)

#### 4) 專業主婦의 家事勞動價値 GDP 算定方案 講究：321(05-06-04)

-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평가하여 GDP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00. 2.21, 여성특위 업무보고서)

-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작업
  - 무보수 가사노동가치 평가단 구성·운영('00. 6.22 / '01. 1. 8 / '01. 6.22)
- 주부가사 노동가치 평가모델 개발 ('00. 8~'01. 4)
  -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01. 4.27)

- 주부가사 노동가치의 GDP 산입방안 강구
  - 가사노동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01. 7~12)
- 가사노동 위성계정 첫 산정('02. 2.28)

## 5) 女性部 新設 準備 : 330(05-06-05)

-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여성부로의 조직개편을 충분히 준비할 것  
( '00. 2.21,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시안 마련
    - 여성특별위원회 소회의,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개편시안 마련
    - 학계, 여성단체 전문가 간담회('00. 3)
  - 개편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 16개 시·도 여성정책과 의견수렴('00. 4)
    - 여성단체 의견수렴('00. 3)
    - 공청회 개최('00. 4)
    -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설명회 참석('00. 5)
  - 정부조직법 개정
    - 국무회의 심의·의결('00. 7)
    - 국회 심의·의결('01. 1)
  - 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법령정비
      - 여성부직제·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정('01. 1.29)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01. 1.29)



- 인원·예산 이체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 6) 性賣買 根絶을 위한 對策 마련 : 552(05-06-06)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강제매춘 및 인권침해 상황을 척결하기 위해 여성부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검·경 등 관련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02. 2. 6, 여성부 업무보고시)

-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관련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02. 2~6)
  - ※ 구성 : 여성부(총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서울시(8개 부처)
- 성매매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교육 강화
  - 성매매근절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02. 4~12)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총3회, '02. 6~11)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02.11)
  - 전국 초·중·고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97.3%) 및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94.7%)
  - 효과적인 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전국 10개 교육청/ 40백만원)
  - 성매매관련 채권채무관계 무효규정 홍보스티커 19,833부, 「선불금 사기사건처리관련 교양안」 책자 520부, 「윤락가인권침해 대처방안」 책자 8,330여권 제작·배포
- 성매매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 성산업규모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전국조사 연구용역 추진('02. 3~12)

- 대검, 전국 검찰, 경찰에 ‘성매매관련 범죄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시달(‘02. 7.26)
- 대검, 전국 검찰에 ‘미군기지주변 외국인여성 등 인신매매관련 범죄 단속강화’ 지시 시달(‘02. 8.29)
- 대검, 6대 지검 강력부장 간담회 개최 및 인신매매관련 범죄 단속강화 지시(‘02. 9.11)
- 인신매매관련 사범 1,131명 단속, 569명 구속(‘02.10 기준)
- 풍속업소의 불법퇴폐행위 73,333건 단속(‘02. 1~11)
- 대여성범죄 전담수사반인 여검기동수사반에서 미성년윤락사범 1,371명 검거(‘02. 1~11)
- 경찰일선에 윤락가 등 중점단속 대상 시달 및 집중단속(윤락관련사범 5,217건 10,695명 검거)
-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지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활성화 및 동시통역시스템 실시
  -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02. 3~7)
  - 선도보호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02년 12월 현재 25개소)
  -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현장상담센터 운영(서울, 전북)
  - 외국인을 위한 「성매매예방·보호」 리플렛 제작·배포(25,000부)
  - 관련부처 성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 개최 ‘국제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방안’ 논의(‘02. 9. 6)
  - 외국인 고충상담실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밀입국 알선자등 처벌 규정강화 등)

## 7) 弘報努力 強化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를 강화할 것('98. 4.28, 국무회의시)
- 정부의 홍보논리와 홍보노력이 부족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

- 홍보물 발간
  - 「여성백서」 20,000부('00. 1)
  - 「성희롱 없는 사회」 30,000부('00. 4)
  - 「알기 쉬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0,000부('00. 4)
  - 영문 「여성특위 홍보」 10,000부('00. 8)
  - 「성희롱 퇴치, 남녀평등 시작」 450,000부('00.11)
  - 「평등세상을 위한 첫걸음」 30,000부('00.11)
  - 「국민의정부, 여성의 삶,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3,500부('00.11)
- 리플렛
  - 「남녀차별신고」 10,000부('00. 4)
  -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15,000부('00. 6)
- 광고
  - 성희롱예방 비디오 제작('00. 7)
  - 여성인권문제(가정폭력) TV 홍보('00. 7)
  - “공회전 금지” 신문광고('00.11)
- 포스터
  - 성희롱예방(20,000부), 여성주간(14,000부), 여성멀티미디어(2,000부)

## 8) 컴퓨터 2000年 問題 解決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소유 컴퓨터 대부분 2000년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된 586이상 기종이며, 486급 이하(2대)는 '99년도에 586급 기종으로 교체할 예정
- 한국여성개발원의 경우도 여성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당시 2000년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9)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99. 1.12, 국무회의시)
- 열린 보직제 시행
  - 직원 보직변경시 희망보직을 추천받아 심사 후 결정
- 5급 승진 심사시 담당관의 평가를 거쳐 승진심사에 반영
-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수렴
  - 직장협의회 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

## 10) 2000年 豫算案 弘報 指示(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하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여성정책 홍보
  - 「여성백서」 책자 발간(10,000부)
  - 홍보 리플렛 제작(국문 : 10,000부, 영문 : 2,000부)
- 대중매체 성차별개선
  - 홍보영상 제작(1편)
  - 대상별 홍보 리플렛 제작(1,000부)
- 여학생 과학친화적 프로그램 실시
  - 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
- 유엔여성특별총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 여성주간 행사 실시('00. 7. 1~7)
  - 포스터·홍보탑·홍보깃발·팸플렛 제작
- 평등문화 확산
  - C-TV 및 City Vision홍보 등 영상자료 제작
- 여성멀티미디어 s/w공모전(2회)
  - 광고 및 홍보자료 발간
- 남녀차별 개선 관련
  - 팸플렛·영상물 제작 및 전광판·지하철 광고

## 11)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00. 5. 9, 국무회의시)

- 2000년도 업무계획의 월별 추진실적 점검
  - 소관부서별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취합·검토('00. 7)
  - 월별 업무계획 추진실적 점검('00. 8~11)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GDP 산입방안 강구 관련
    - 무보수 노동가치 평가단 회의 개최('00. 6)
  -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관련
    - 행정자치부와 합동지도점검 실시('00.11)
    - 지방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회의 개최('00.12)
- 추진실적 보고
  -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월별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00. 8~11)

## 12)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01. 2. 6, 국무회의시)

- 인사청탁 배제를 위한 직원 공개모집 ('01. 2/'02. 3)
  - 일반직, 별정직, 개방형직위, 기능직 공개모집

-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신설부처에 맞는 인사관련 규정 제정
  - 여성부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01. 7.16)
  - 여성부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 ('01. 7.19)
  - 다면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개정 ('01. 8.28/'02. 9. 9)
- 능력 및 실적에 따른 포상 및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제도」 운영 (2001년 10월부터 현재)
  - 과장 보직승진, 5급 승진심사, 우수·모범공무원 선정시 반영
-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제고를 위한 「희망 보직제」 실시('02. 3. 8)
  - 직원의 90%를 희망보직에 따라 배치

### 13) 女性人權 改善 : 519(05-70-55)

-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함('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서)

-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기능강화('02.12 현재)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의 ONE-STOP보호망 체계확립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 대책 마련·추진('01. 8)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 체크리스트 서식화 및 성폭력응급키트의 개발·보급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범위의 확대, 성폭력피해를 준응급질환으로 지정 등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확충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217개소('01. 6) → 234개소('01.12) →

262개소('02.12)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36개소('01. 6) → 38개소('01.12)  
→ 40개소('02.12)
-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 신규 설치('01. 7) : 전문상담소 7개소,  
지정상담소 16개소
-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신규설치('01.12)  
※ '02.12 현재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 9개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개소임
-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강화
  - 상담소 : 21억원('01) → 26억원('02) → 29억원('03)
  - 피해자보호시설 : 6억원('01) → 9억원('02) → 12억원('03)
- 가정폭력·성폭력 업무 관련조직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성폭력 전담수사반인 여경 기동수사반 증설
    - 전국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 완료('01.12) : 6개 지방청(25명) →  
14개 지방청(57명)
  - 수사관계자에 대한 여성폭력 관련 교육 강화
    - 법무연수원 : 여성범죄수사실무반 신규개설 ('01.10)
    - 수사보안연수소 : 여성정책 전문교육과정 신설 ('02)
  - 가정폭력·성폭력·1366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01~'02)
  - 성폭력 업무 관련 종사자별 업무매뉴얼 개발('02.12)
- 인권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성폭력추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계기별·계절별로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연계 홍보 실시
  - 여성긴급전화 1366 집중홍보 : 여성부 출범 1주년 계기('02. 1~)



- 가정폭력 예방홍보실시 : 5월 가정의 달 계기('02. 5)
- 성폭력 예방홍보실시 :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02.11.25) 계기
- 가정폭력·성폭력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성폭력분과 구성('01. 8), 가정폭력분과 구성('01. 9)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창구 마련

#### 14) 女性人的資源 開發 : 520(08-70-56)

-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함. 여성을 발탁하려고 해도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부가 여성관리직 양성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서)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시달('02. 3. 6)
    -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2006년 12월까지 10%이상 확보
  - 여성고위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정부안 확정('02.10.28)
  -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2001년도 위원회 관리 및 운영지침 수립·통보('01. 4.24/ 9.24)
  - 행정부문 성인지적 통계생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01. 5~11)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인지적 통계생산 방안 연구 용역 실시('02. 4~6)
  - 공무원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워크숍 실시 ('02.12.21)
  - 관리직여성공무원 전국대회 개최('01. 6.27/'02. 6.25~6.26)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안 연구 용역 실시('02. 6~10)
  - 여성채용목표제 추진

- 2001년도 여성합격을 : 행정고시 25.3%, 외무고시 36.7%, 7급 16.0%, 9급 38.2%
- 2002년도 여성합격을 : 행정고시 28.4%, 외무고시 45.7%, 7급 26.5%, 9급 48.6%

## 15) 女性の 職場生活を 위한 與件 造成 : 521(05-70-57)

○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보육문제임. 그러나 보육 문제의 해결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민간과의 협조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 마련('01. 4.18, 여성부 업무보고서)

- ‘국가보육발전계획’ 수립·홍보('02. 1)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제시
- ‘보육사업활성화방안’ 마련('02. 3. 6)
  - 보육관련 3개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확충 및 질 개선방안 마련(추가예산 528억 확보)
- 영아보육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용역 실시('02. 5~12)
- 반포청사어린이집 개원·운영('02. 4)
- 보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협의 강화
  - ‘보육사업활성화방안’ 후속조치 협의(보건복지부, 노동부, 재경부 등)
  -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 참여(교육인적자원부 주관, '02.11 이후)

# 建設交通部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03-46-01)   |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        | 1998. 3.11 |
| 23(04-46-02)  | 자동차 10부제 운영방안연구     | 1998. 4.10 |
| 43(03-46-03)  | 경부고속철도 준비철저         | 1998. 4.16 |
| 45(03-46-05)  | 토목사업·주택건설사업의 적극적추진  | 1998. 4.16 |
| 46(02-46-06)  | 중국의 해외여행자유화 추진      | 1998. 4.16 |
| 106(04-46-07) |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     | 1998. 6.29 |
| 107(04-46-08) | 항공산업 육성             | 1998. 6.29 |
| 108(04-46-09) | 효율적 물류모델 연구         | 1998. 6.29 |
| 109(04-46-10) | 도시철도 건설시 철저한 계획수립   | 1998. 6.29 |
| 110(04-46-11) | 규제개혁                | 1998. 6.29 |
| 111(04-46-12) | 철도경영혁신              | 1998. 6.29 |
| 145(04-46-13) | 공공사업 투자의 효율성 강화     | 1998. 8.27 |
| 192(03-46-14) | SOC예산 조기집행 이행       | 1999. 3. 2 |
| 224(04-46-15) | 영월댐 건설계획의 합리적 검토    | 1999. 4. 7 |
| 225(04-46-16)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 1999. 4. 7 |
| 279(04-46-17) | 고속전철 차량도입관련 낭비사례 시정 | 1999. 9.21 |
| 280(04-46-18) | 아파트 안전대책 수립         | 1999. 9.21 |
| 287(04-46-19) | 한자병기의 철저한 실시        | 1999.10.22 |
| 293(04-46-20) | 항공편 확충              | 1999.11. 8 |
| 363(04-46-22) | 경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5. 3 |
| 395(04-46-23) | 신도시 개발문제에 신중히 대처    | 2000.10.16 |
| 400(04-46-24) | 백제권개발사업의 철저한 추진     | 2000. 9.28 |
| 419(04-46-25) | 노후 주택개량사업의 적극 추진    | 2001. 1.20 |
| 493(04-46-26) | 전월세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  | 2001. 3. 5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96(04-46-27) | 해빙기 안전점검 철저             | 2001. 3.13 |
| 551(09-46-28) | 부정부패 척결 및 세수증진          | 2002. 2. 4 |
| 586(04-46-29)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2002. 4. 3 |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06(04-70-21) | 아파트 관련비리 척결             | 1999. 3.23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70(08-70-26) | 전세값 상승에 대한 대책 강구        | 1999. 8.24 |
| 282(08-70-29) | 2000년 예산안 홍보 추진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28(08-70-33) | 해빙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        | 2000. 2.29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3 |
| 382(08-70-41) | 추석연휴 소외계층 위로            | 2000. 8.29 |
| 383(03-70-42) |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수립           | 2000. 8.2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2000.10.23 |
| 410(08-70-50) | 설 종합대책 마련               | 2001. 1. 9 |
| 517(03-70-54) | 해외순방시 외자유치사업의 실현        | 2001. 4.1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541(08-70-60) |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             | 2001.11.27 |
| 609(03-70-66) | 추석종합대책 마련               | 2002. 9. 3 |
| 611(05-70-67) | 동절기 대책 마련               | 2002.11. 5 |

## 1) 外國人의 土地取得 許可 : 3(03-46-01)

- 「外國人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98. 3.11,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外國人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령 개정·시행 : ‘98. 6.26
  - 外國人(外國법인 포함)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 철폐
  - 外國人의 토지취득 절차 간소화
  - 상호주의와 군사지역 토지취득제한 규정 등 최소한의 관리수단만 존치
- 外國의 토지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外國人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IMF 금융지원 이후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
  - ※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外國人 토지취득은 1만2천609건, 1억3백만858천㎡ 늘어 났으며, 2002.9월말 현재 外國人 보유토지는 1만9천4백건에 1억4천182만7천㎡(4천2백9십만3천평)으로 여의도 면적(850만㎡, 행정구역기준)의 16.7배에 달함(금액으로는 18조7천억원 규모)

## 2) 自動車 10部制 運營方案 研究 : 23(04-46-02)

- 交通체증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환경보전에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차량 10부제와 같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함  
(‘98. 4.10, 환경부 업무보고시)
- 대기오염 방지와 교통원활화를 위해 10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98. 4.14, 국무회의시)

- 자동차 10부제 추진계획 수립('98. 5.27)
  -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위주로 실시중인 자율10부제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계획 마련
- 「부제은행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98. 6.17)
  - 시·도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시행
- 관계기관 및 경제단체·시민단체 등에 자율 10부제 홍보 등 협조 요청
  -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찰청('98. 6.20)
  - 전경련, 교통안전공단 등 60개 기관·단체에 「홍보책자」 제작·배포('98. 7.15)
-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 추진('98. 7.15, '98. 8. 7, 8.11)하였으나 관계기관(행정자치부 및 보험감독원)의 반대로 추진 보류
- 시·도 자율 10부제 추진상황 실태점검 실시(8개 시·도, 구, '98. 9. 9~ 9.17)
- 부제은행의 의무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추진
  - 방침결정('98. 8. 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8.11~9.17)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98.10.21) 및 본회의 심사(11. 6)결과 의무적인 10부제 시행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본방침과 배치됨을 이유로 우리부 개정안 철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법 개정 추진 철회('98.11.18)

### 3) 京釜高速鐵道 準備徹底 : 43(03-46-03)

-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이므로 최선을 다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원활한 공사추진과 경제성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변경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98. 4.16,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경부고속철도는 현재의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1단계로 기존선을 활용하여 우선 개통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함. 이제까지 기술·안전문제를 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영업측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바람('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서)

- 경제성있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안 마련
  - IMF 등 경제여건을 감안,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98. 4월부터)
    - 유관기관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전면 재검토
    - 감사원,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사업성 분석팀을 구성,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 등 검토
    - 경부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24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98. 7.31)
    - 1단계 : 서울~대구간 신선건설, 대구이남구간 및 대전·대구 도심통과구간 기존선 전철화('04. 4 개통)
    - 2단계 : 대구~부산구간 및 대전·대구도심구간 신선건설(2010)
- 경부고속철도 준비철저
  - 경부고속철도운영준비종합계획 수립('99. 4.28)

- 개통시까지 추진해야될 과제를 분야별·단계별로 종합·체계화(추진 과제를 6개 주요과제, 16개분야, 42개 업무, 102개 단위업무로 세분)
  - ※ 6개 주요과제 : 운영체제구축, 고속철도 영업전략 수립, 시설물유지 보수 및 운영, 시운전, 건설과 운영의 연계강화, 개통준비 등
- 기관별(건교부,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운영준비 역할분담 및 매분기 별 추진현황 점검·보완

#### 4) 土木事業・住宅建設事業의 積極的 推進 : 45(03-46-05)

○ 국가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은 고용효과가 크고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98. 4.16,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공공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99년 13조4천억원, ’00년 14조2천억원, ’01년 15조2천억원, ’02년 15조9천억원 등 정부 SOC예산을 확대·집행
  - 경기부양 효과증대를 위해 매년 건설교통부 SOC예산중 8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발주
- 임대주택 등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건설사업도 활성화하여 주택건설을 매년 확대하여 ’99년 40만호, ’00년 43만호, ’01년 53만호, ’02년 64만호(추정)의 주택을 건설
- 외환 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감면확대와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
  - 2003년 6월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하고, 2002년말까지 구입한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



## 세 감면 등

- 주택금융 저변확충을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
- 민간자금이 SOC분야로 유입되도록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편하고, 표준심사협약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확립
- BOT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진작의 관건인 자금조달 문제해결을 위해 금융기관 참여 인프라펀드 추진 등 금융·세제 지원

## 5) 中國의 海外旅行自由化 推進 : 46(02-46-06)

- 우리나라가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국이 되는 문제는 향후 호금도 부주석의 방한시 성사되도록 건설교통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기 바람 ('98. 4.16,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서)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호금도 부주석 방한관련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지정 추진을 위한 면담자료 송부('98. 4.27)
- 중국이 우리나라를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 발표('98. 5. 5)
- 「중국인 해외여행자유화국가」 한국 지정 후속실무회의 개최('98. 6. 1~2)
  - 중국인 단체 한국관광 허용대상지역 지정(9개시·성)
    - ※ 4개시(북경, 상해, 천진, 중경시), 5개성(산둥, 광둥, 안휘, 강소, 섬서성)
  - 전담여행사 지정 : 중국측 34개, 한국측 35개
  - 단체관광객수 : 인솔자 포함 9명이상
  - 비자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여행사 초청확인서 등 총 3종으로 대폭 간소화

## 6) 土地公社의 企業保有土地 買入 : 106(04-46-07)

- 토지공사의 부채상환용 기업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질없이 추진
- 추진중인 3조원의 기업토지 매입이 끝나면 그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서)

- 기업의 부채상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98~’99 동안 5차에 걸쳐 386만평, 2조 6,155억원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하였음
  - 권역별로는 수도권 45%, 영남권 43%, 기타지역 12%이며
  - 용도별로는 공업지역 41%, 주거지역 33%, 상업지역 18% 등임
-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부실채권의 상환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금융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7) 航空産業 育成 : 107(04-46-08)

- 우리 항공사의 경우 작년말 이후 승객감소, 환차손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정을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항공노선확충 및 공급력 증대를 위한 각국과의 회담 개최 및 회의 참석
  - ‘98. 6~12 : 체코, 헝가리, 대양주, 필리핀, 일본, 카자흐스탄, 호주, 몽고, 네팔 등과 항공회담 개최

- '99. 1~12 : 일본, 키르기스스탄, 독일, 홍콩, 태국, UAE, 호주, 네덜란드, 이집트, 싱가포르, 영국 등과 항공회담 개최
- 우리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
  - 한·중·일 항공협력세미나 개최 : '99. 2
  - 아·태 항공국장 회의 및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참석 : '99. 9
  - 한일 실무회의 참석 : '99.10
  - APEC 교통실무그룹 회의 참석 : '99.11
- 항공분야 외국인 투자확대, 항공운임 규제완화, 항공사 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등 제도개선
  - 항공법('99. 2 공포, '99. 8 시행), 항공법시행령('99. 8 공포·시행), 항공법시행규칙('99.12 공포·시행) 개정 완료

## 8) 效率的 物流모델 研究 : 108(04-46-09)

- 물류흐름의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연구할 것  
( '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서)
- 물류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물의 기·종점(O/D)조사 ('98. 8~12)
    - 화물 품목, 화물의 수송 기점 및 종점, 화물수송 톤수, 화물의 수송톤수 및 비용(조사기간·기관 : '98. 7 ~ '98.12, 교통개발연구원)
  - 기 종점(O/D)조사 자료의 정리·분석 및 전수화('99. 1~'00. 3)
    - 조사자료를 기초로 표본 O/D작성
    - 각 Zone의 사회경제지표·화물수송실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정
    - 교통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 및 전수화
  - 물류흐름의 국가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모델 구축 방안 연구용역 시행

(’99. 3~’00. 3)

- 21세기 물류비전(모델) 제시(’00. 5)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실현 (동북아 물류중심지)
  - 화주와 함께하는 고품격 맞춤물류 (고객만족)
  - 이음새 없는 매끄러운 흐름물류 (화물운송체계의 효율화)
  - 인터넷 기반의 가상공간 물류 (첨단 지식물류체계 구현)
  -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개방물류 (적극적인 마케팅 물류)
  - 환경친화·안전지향의 녹색물류 실현 (선진물류)

## 9) 都市鐵道 建設時 徹底한 計劃 樹立 : 109(04-46-10)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철 건설사업을 수송수요와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원조달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98. 6.29,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지하철 건설계획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98. 7.29)
  - 도시철도 건설·운영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 지하철 건설·운영 개선대책(안) 마련(’98. 8)
- 지하철 건설사업 “표준평가지침(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98.10)
- 「지하철 건설·운영 개선대책」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방향 전달 (’99. 3. 8)

- 건설계획의 조정
  - 시공중인 노선은 가급적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시별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공기 및 연차별 건설물량을 조정하고 단계별 개통방안을 강구
  - 계획중인 노선은 교통수요, 노선과 시스템의 적정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착수하되, 수요가 적은 노선은 경량전철로 건설
- 지자체의 자체재원 조달능력 확충방안 강구
  - 중장기적으로 민자유치, 민간운영 등을 검토
-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적용할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 수립·시달('99. 5.29)

## 10) 規制 改革 : 110(04-46-11)

-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만을 남기고 소관 규제 의 50%이상을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것
- 공사의 설계·감리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감독하는 대신 전문용역회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사전규제」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바람  
( '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서)

- 건설교통부 소관 총 규제 917건중 69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정비 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98.11. 4)
- 폐지 467건(50.9%), 완화 232건(25.3%)
  - ※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사무중 누락 규제사무 151건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폐지 36건(23.8%), 완화 68건(45%)]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관련부처 협의 : '98. 7.31
  - 개정내용 : 보증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개선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을 책임감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한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98. 8.10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요청 : '98.11.26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99. 1.21
-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증 업무요령 시달 : '99. 1.28(관보게재)

## 11) 鐵道經營革新 : 111(04-46-12)

- 철도경영혁신을 적극 추진('98. 6.29, 건설교통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철도 민영화는 80년대부터 거론된 사항임. 금년에는 반드시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월까지의 철도구조개혁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01. 1.20,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철도고객서비스현장 개정·선포('00.12.20)
  -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현장 평가 대상 수상('01. 2)
  - 열차안내방송(영어, 일어, 중국어) 전 열차로 확대시행('02. 5.20)
- 고객중심의 제도 및 서비스 개선
  - 새마을호 출입문 인접좌석 운임의 5% 할인('01.12.22)
  - 승차권 반환수수료 하향조정 및 승차변경 취급제한제도 폐지('99. 2.25)
  - 철도회원전용 인터넷홈페이지(www.barota.com) 개설('00. 4.29)
  - 실향민을 위한 망배열차(서울역~도라산역) 운행('02. 2.12)
  - 고객관리를 위한 철도고객센터 개관('01. 2. 5)
- 고객수요 유발을 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 Cyber Train(PC방 객차) 확대운행('99.10. 5)
- 종합관광상품 개발운영
  - '99년중 15개 상품, '00년중 20개 상품, '01년중 33개 상품
  - '02년도 태백산 눈꽃열차, 국제꽃박람회기차여행 등 총 1,823회 운행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개발
  - 한중공동승차권 판매('00. 2. 1) 및 한일통합패스 개발('02. 5.25)
  - 외국인을 위한 관광상품개발 시행
    - 일본인백제문화관광상품('98.11.19), 한국식문화체험관광상품('00. 5.10)등
- 구조개혁 관련 법률 성안 및 국회 이송('01.12.17)
-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01.12.28)
- 철도시설공단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운영('02. 2)
- 추진 실행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체제 구축 실행방안」 용역 등 3건 완료
  - 현재 「철도청 산하단체 처리 및 부대사업활성화 방안」 등 2건 추진
- 철도노조 등 구조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주력

## 12) 公共事業 投資의 效率性 強化 : 145(04-46-13)

- 국고절감을 위해 입찰제도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현행 입찰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토지보상면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분산매수함으로써 낭비가 많으므로,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98. 8.27, '99년 예산 중간보고서)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 : '98.10. 1
- 대책시안 마련 (추진단) : '98.12.30
- 대통령께 특별보고 : '99. 3. 5
- 종합대책 수립·추진 보고(장관 방침) : '99. 3. 9
- 종합대책 설명회 개최 (발주기관, 건설업계 관계관 등) : '99. 3.23
- 종합대책 추진 통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 '99. 3.25
- '99. 4월부터 종합대책에 따라 각 주관부처별로 제도개선 추진하여 52개 세부추진과제 모두 완료
  - 「적정 사업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업중 불합리한 기본계획의 변경,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을 방지 :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4~19 개정('00. 3)
  -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하여 신규사업의 착수에 신중을 도모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99. 5)
  -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VE제도」를 도입 :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6 개정('00. 3)
  - 적정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사시행을 못하도록 「선보상-후시공」 원칙을 제도화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99. 5)
  - 담합·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점수를 기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 : 적격심사기준 제8조 개정('99. 4)
  - 공사 관계자들의 책임감 고취를 위한 「실명제」 도입 : 건기법 시행령 제38조의 17('00. 3)
- 향후 제도개선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13) SOC豫算 早期執行 履行 : 192(03-46-14)

- SOC사업 50%를 조기 집행하기로 한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주기 바람('99. 3. 2, 국무회의시)
- 총액예산(총3.4조원)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년보다 3개월이상 앞당겨진 '99. 1.14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발주의뢰 및 공사착수
- 선금 지급비율 상향 조정
  - 도 로 공 사 : 정부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 시행('99. 2. 1)
  - 수자원공사 : 정부예산사업에 대하여 정부권고기준(20~50%)보다 높은 50~7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예산 조기집행 관련 회의
  - 사업시행청별 '99예산 조기집행계획 수립('99. 1.30)
  - 조기집행 1/4분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99. 3.27)
  - 예산조기집행 실적 점검·평가회의 개최('99. 5. 8)
-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은 사업추진이 원활한 사업으로 예산조정

### 14) 寧越댐 建設計劃의 合理的 檢討 : 224(04-46-15)

- 영월댐건설은 물부족 문제뿐 아니라 홍수피해방지 문제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분석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99. 4. 7, 건설교통부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후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월댐 건설 계획 추진 중단 결정

- 공동조사단 구성 : '99. 8.26
  - 물수급, 홍수, 댐안전, 환경, 문화 5개 분과
- 공동조사단 조사 : '99. 8.26~5.19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 '00. 6. 5
- 영월댐건설예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 : '00.11.24

## 15) 社會間接資本施設의 蹉跎없는 推進 : 225(02-46-16)

-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경영 및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해나가기 바람
- 서해안고속도로는 착공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양대축을 형성하여 경부축의 수송 수요를 분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99. 4. 7,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인천국제공항>

- 인천공항은 1단계 355만평, 최종단계 1,435만평의 부지위에 여객터미널, 활주로, 유도로, 관제탑, 교통센터 등을 건설하여 신생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비즈니스 트래블러 등 국제항공기관과 해외언론으로부터 종합만족도 측면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능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기능 증대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초부터 2008년말까지 2단계사업을 추진 중.
- 4000m급 활주로 1개를 비롯해 68대 주기능력을 갖춘 계류장, 연간

14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탑승동, 화물터미널 등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 공사 설립('99. 2)이후 지속적인 외자유치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국고지원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재무구조로 공항건설 분야에는 외자유치실적이 없으나 인천공항 제 2 연육교는 외자유치 완료단계임
  - 제 2 공항접근로의 확보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제 2 연육교를 건설하기 위해 영국 AMEC사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으로, '03년 초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 국내 자본유치는 인천공항 입점한 은행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02. 9. 2 외환은행 2,400억원을 끝으로 5,250억원(4.5~5.04%, 만기 3~5년)을 전환사채로 발행
- 인천공항 재원조달 문제
  - 인천공항의 열악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항공사 자구노력
    - 유흥지 개발 등 신규수입원 개발을 통한 비행공수익의 증대
    - 단기 고금리차입의 장기저리전환등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
    - 1단계 건설공사시의 40%에서 2단계 공사시에는 50%까지 상향 조정토록 하였음.
  -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수익자산 국유화 추진중
- 외국인들의 관심유도
  - 공항구역 내에 관세자유지역(60만평), 국제업무지역(15만평)을 조성하고 무역·물류업체를 유치할 계획. 부지조성과 병행하여 입주업체 유치활동중.

- 관세자유지역에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감면혜택을 주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줌.

#### <서해안고속도로>

- 당초 서해안고속도로는 2002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01년에 당진~서천, 군산~무안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전 구간 개통 완료(353km)
  - '99년까지 3개 구간 개통 : 116.2km
    - ※ 인천~안중(70.3km), 서천~군산(22.7km), 무안~목포(23.2km)
  - '01년말 나머지 3개구간 개통 : 236.8km
    - ※ 안중~당진(18.8km), 당진~서천(103.7km), 군산~무안(114.3km)

### 16) 高速電鐵 車輛導入關聯 浪費事例 是正 279(04-46-17)

- 감사원에서 지적된 고속전철 차량의 과다도입 문제에 대해 그 내용과 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99. 9.21, 국무회의시)

- 대통령께 고속전철 차량도입관련 내용 및 대책을 서면 보고('99. 9.22)
  - 최근 감사원에서 '94. 6 체결된 차량구입계약(46편성, 920량)이 잘못되어 4,974억원의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 이는 2004년 고속철도 1일 이용승객을 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148천명, 감사원은 113천명으로 수요예측을 다르게 한데서 기인한 것임
  - 교통개발연구원은 인구, 지역총생산, 자동차수 등 교통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를 추정하였는 바

- 최근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소득증가로 고급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일반철도, 고속버스, 항공 승객들중 상당수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차량 46편성 구매는 필요함.
  - 수요부족으로 일부 차량이 남을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인 기존선 전철화구간(호남선, 장항선, 경전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현 시점에서 구매계약 변경은 국제신인도, 위약금, 기술이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어 '04. 4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호남선에도 고속철도 차량이 운행될 예정임.

## 17) 아파트 安全對策 樹立 : 280(04-46-18)

-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백 동의 아파트 건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보고해 주기 바람('99. 9.21, 국무회의시)
- 공동주택 안전관리 수립·보고 : '99. 9.27
  - 노후 위험공동주택 재건축자금 융자기준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반영 : '99.10. 7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이하의 노후위험주택
    - 호당융자한도액 : 3천만원
    - 이율 : 연 3.0%
    - 융자기간 : 5년거치 15년상환
  - 시도안전담당관 회의개최 : '99.10. 1

- 특별관리대상 안전점검실시 : '99.11. 8~11.16
- 특별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철저지시 : '99.12. 8

## 18) 漢子併記의 철저한 實施 : 287(04-46-19)

- 한자사용권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 각종 안내판에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람 ('99.10.22, 국무회의시)
- 우리나라 관광객의 7할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는 이제 세계어가 되고 있으므로 한자·로마자 병기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관광지도와 도로표지판 등도 외국인이 불편없이 볼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방법을 점검해야 할 것임('99.11. 8, 관광진흥 확대회의시)

- 「도로표지규칙」 개정 : '00. 3.18
  - 도로표지의 관광지도 표지 규격상세도에 한자를 추가하였고, 한자의 규격을 한글 크기의 80%에서 90%로 확대 ('00. 3.18)
  - ※ 국제연합의 「도로표지및신호기에관한협약」에 도로표지는 2개 언어 이하로 표기토록 규정
- 한자병기 관광지도표지의 확대설치 추진
  - 30대 관광거점지역에 2,282개, 고속국도상 15개 IC에 116개 등 전국적으로 5천여개의 한자병기 표지판 설치('01.12 기준)

## 19) 航空便 擴充 : 293(04-46-20)

- 일본,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항공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99.11. 8, 관광진흥 확대회의시)

### ○ 주요 추진내용

- 서울/나가사키 복항
  - 수요감소로 운항중단('97. 6. 1)하였던 서울/나가사키 구간을 '99.12.18 부터 대한항공에서 주 2회 운항 재개
- 서울/동경 공급좌석 증대
  - 운항기종 변경, 좌석 개조 등으로 주 417석 공급 증대('99.12.17)
- 항공회담 개최
  - 한/베트남('00. 1.21) : 베트남항공 운항 재개시까지 우리측 주1회 추가운항
  - 한/인도네시아('00. 5.31) : '00.10월말 여객 주3회 증회
  - 한/홍콩('00. 6. 9) : 한/홍콩간 여객 주3,080석 증대, 화물 주200톤 증대
  - 한/일('00. 6.16) : 서울/오사카 등 양국간 공급력 증대(주 약9회 증대)

## 20) 京釜高速鐵道の 差跌없는 推進 : 363(04-46-22)

- 지난 '97년까지 5년동안 공정율이 15%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2년 사이 46%까지 진척되었음. 예정대로('04. 4) 개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호남고속철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00. 5. 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 기본방향 : '98. 7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1단계사업 중점 추진
- 사업개요
  - 1단계('04. 4 개통) : 서울~대구간 신선건설,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부산구간 기존선 전철화
  - 2단계('10 개통) :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부산 신선건설
- 추진현황
  - '02.12.31현재 11조 1,479억원을 투입, 전체공정 92.6% 달성(계획 92%)
  - 기존경부선 시설정비 및 전철화사업 87.1%(계획 88%)
  - 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구축 연구용역('01. 5~'03. 1) 및 운영준비중  
합계획 보완·재수립('01.12) 시행 등 착실한 운영준비
  - 2단계 대구이남구간공사를 2년 앞당겨 '02년에 조기착공
- 향후 추진계획
  - 계획공정에 의거 지속 추진('03 98%, '04. 4 100%)
  - 운영준비종합계획의 철저한 시행으로 완벽한 개통준비
  - 2단계사업(대구이남구간) 공사 본격 추진
-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시행중  
(교통개발연구원, '01. 5~'03. 6)
  - 향후 추진계획 : '03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착수



## 21) 新都市 開發問題에 慎重히 對處 : 395(04-46-23)

- 신도시개발 문제는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론수렴, 수도권 과밀억제 시책 등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할 것임. 경제장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해주기 바람('00.10.16, 국무회의시)
- 판교개발은 찬반의견이 첨예하니, 당정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되 조속히 검토 할 것('01. 1.20,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당정협의회 6회 개최
  -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 논의
  - 판교 벤처단지 규모 논의
- 경제장관 간담회 4회 개최
  -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방안 논의
  - 판교 벤처단지 규모 논의
- 화성 계획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1. 4.30)
- 판교 계획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01.12.26)

## 22) 百濟圈 開發事業의 철저한 推進 : 400(04-46-24)

- 백제문화는 해양과 대륙문화를 아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문화의 기초를 세운 우수한 유산으로서 국제적으로도 가치있는 것임
- 백제권 개발사업은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추진하기 바람
- 이를 통해 동쪽에 경주, 서쪽에 부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임('00. 9.28, 충청남도 방문시)

- 추진실적 개요
  - 위치 및 면적 : 충남·전북 일부지역 (1,915km<sup>2</sup>)
    - 충남 : 공주시, 부여군 전역, 논산시 두마면 일원 (1,620km<sup>2</sup>)
    - 전북 : 익산시 일원 (295km<sup>2</sup>)
  - 사업기간: '94~'05
  - 사업량 (51건)
    - 문화유적 발굴·정비 (14건)    · 교통망 확충 (10건)
    - 관광휴양 시설 (11건)            · 도시환경정비 등 (16건)
  - 투자계획 사업비 : 2,822,462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 '02년 상반기까지 10,568억원을 투자(공정 37.4%)
    - 총 51개 사업중 11개사업 완료, 32개사업 추진중
- 백제권 문화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

## 23) 老朽 住宅改良事業의 적극 推進 : 419(04-46-25)

-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임시숙소 마련등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01. 1.20,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01년도부터 3년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1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도시 서민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공공이 전국 496개 주거환경개선지구(기존지구 274, 신규지구 222)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받아 주택을 개량

| 사업계획 |          | 연차별 투자계획(전년도 추진분) |       |          |       |          |       |
|------|----------|-------------------|-------|----------|-------|----------|-------|
|      |          | '01년도             |       | '02년도    |       | '03년도    |       |
| 지구수  | 사업비      | 지구수               | 사업비   | 지구수      | 사업비   | 지구수      | 사업비   |
| 496  | 16,000억원 | 283               | 4,000 | 324(188) | 6,000 | 269(192) | 6,000 |

- ※ 재원분담 : 국고 50%, 지방비 40%, 교부세(행자부) 10%
- '02년까지 국고 3,640억원을 포함 총 7,680억원을 투입하여 36개 지구를 준공, 460개 지구는 추진중
- '02년까지 4,410세대에 841억원이 용자지원되었고, '03년에도 1,095억원을 지원할 계획(용자조건 : 호당 2~4천만원, 연리 5.5%)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잘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지속적인 국고지원 필요
  - 추진중인 496개 지구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04년까지 국고지원 완료
  -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로 발굴하여 향후 '05년부터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지원(260여개 지구, 1조4천억원 소요)

## 24) 傳月貰 問題에 대한 緊急對策 마련 : 493(04-46-2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세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대책수립 보고('01. 3. 5, 국무회의시)</li> <li>○ 전월세 대책 마련('01. 3.13, 국무회의시)</li> </ul> |
|---|
- 전국 전·월세 동향조사('01. 3. 8~3. 9)후 전·월세안정 종합대책 마련 보고 및 확정('01. 3.16)
  - 세입자 보호강화
    -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확대(1,500만원→보증금의 70%까지 지원(서울 2,450만원, 광역시 2,100만원, 기타 지역 1,750만원)) 및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연 7%→연 5.5%) 및 임대보증금 산정시 적정이자율 인하(연 7.5%→연 5.8%)
    - 국민임대주택 '03년까지 20만호 건설(당초 10만호)
  - 전·월세 서민에 대해 융자지원 제고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수급불안 요인 조기불식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

## 25) 解氷期 安全點檢 철저 : 496(04-46-2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01. 3.13, 국무회의시)</li> </ul> |
|---|
- 해빙기대비 시설물 및 건설공사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 특별안전점검단 구성 : '01. 2. 9
  -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본부기동반(30명) 각 지역별 점검반(6개 기관 55명) 산하기관 점검반(4개 기관 35명)으로 편성
- 특별안전점검 실시 : '01. 2.12~4.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205 개기관 853개 시설물 및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점검결과 1,224건 지적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부실벌점 부과
  - 안전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건설현장등의 유공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수여
- 해빙기대비 간부급(본부 실·국장)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지하철, 철도, 도로, 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점검실시 : '01. 3.19~3.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14개 기관 23개 시설물 점검
- 시공중인 주요구조물 안전점검
  - 시공중인 장대교량, 터널 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01. 4. 9~4.14
    - 본부점검반 및 지역점검반 합동점검 : 88명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8개 기관에서 시공중인 장대교량 및 터널 등 196개소 점검

## 26) 不正腐敗 剔抉 및 稅收增進 : 555(09-46-28)

- 앞으로 각종 비리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모든 공사나 계약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02. 2. 4,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공사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를 게시하는 건설공사현장 안내표지 및 건설공사 완공표지판 제도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01. 1.26, 동법시행규칙 개정 '02. 9.18)
  - 건설공사현장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기술자를 기재한 표지를 게시
  - 공사완료시에 공사수행 참여자의 성명, 상호 등 실명을 기재한 표지를 영구적으로 설치

## 27)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주력 : 586(04-46-29)

- 집값안정은 경제안정은 물론, 국민복지 및 사회안정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국민임대주택,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도심내에 방치되고 있는 주택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서민에 대한 담보요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 바람 ('02. 4. 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주택가격 안정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람('02. 4.23, 국무회의시)

- 차질없는 주택건설 및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
  - '00년도 433천호 건설 → '01년도 53만호 → '02년도 55만호(계획)건설  
※ 2002년도 건설실적은 64만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11월말 기준 56.8만호)
  - '03년이후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포함하여 총 500만호의 주택 건설을 추진('02. 5.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
- 주택자금 지원 강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거치조건을 완화

- 수도권외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주택(25.7평이하)까지 지원  
(‘02. 3. 1)
- 1년거치 19년 상환외에 3년거치 17년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02. 7. 1)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02년도말까지 지원키로 하였던 것을  
‘03년에도 계속 지원키로 함(신규 2,225억원, 계속사업 4,000억원)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전용 85㎡이하) 연 6.0%로 집값의 70%까  
지 지원(최고 7천만원)
- 도시영세민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확대
  -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보증금을 2,500~3,500만원→ 3,000~  
5,000만원까지로 확대(‘02. 3.11)하고,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 융자금  
리를 7.0~7.5%→ 6.5%로 인하(‘02.12. 9)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 융자금리를 연 7.0~7.5%→ 6.5%로 인하(‘02.12. 9)
- 도심내의 단독주택지 재건축시 주민동의 요건을 100% → 80%로 완화
- 연소득 1천만원 이상으로서 집주인의 확약서 제출할 경우 연소득의 2배  
까지 보증한도 인정(‘02. 4.27)
-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02년 8.9대책·9.4대책·10·11대책 등)
  -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35세이상의 5년이상 무  
주택 세대주에 대한 신규주택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을 적용
  -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양도세 실가과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강화
-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추진
  -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계속 추진
  - 주택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주택시장 과열시 서민주거안정대책 적기 마련

## 28) 經濟政策관련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에 대한 혼선에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관련기관간 협의를 완료한후 정책을 발표토록 할것</li> <li>○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li> <li>○ 국정홍보 강화('00. 1.25, 국무회의시)</li> </ul> |
|--|
- 
- 건설교통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업무 총괄조정
    - 주요정책·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홍보방법·시기·대상 등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매주1회)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 및 필요시 기자단에 브리핑(수시) 실시
  - 국토난개발 방지대책, 경의선복원 추진, 인천국제공항 개항준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월별 중점홍보과제로 선정 및 서울시 전광판·여론 주도층·인터넷을 통한 집중홍보 실시
  - 조·석간 가판신문 스크랩 및 오보 등에 대응
  -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활동 계획 수립시행
    -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주요 여론 주도층(600여명) 및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사정보 자동배달을 신청한 서비스신청자(15,000명)와 건설교통 정책관련 모니터요원(260명)에 대해 E-Mail, FAX, 우편, 인터넷을 통해 보도자료를 수시 제공 등



## 29) 각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 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함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 바람('98. 8.11, 국무회의시)

- 「경영진단결과」 및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건설교통부 조직 개편 : '99. 5.24
- 본부조직 : 1실 2심의관(국) 5과 감축
- 지방 소속기관 개편내역
  -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직급 하향조정(4급→4·5급)
  - 지방국토관리청 경리과+관리과 → 건설지원과로 통합
  - 국립지리원 측지연구담당관 신설
- 인력감축 129명 감축(정원 3,358 → 3,228) : 본부 : 41명, 소속기관 : 88명
- 인센티브제도(예산절약 성과금제도) 운용 : '99~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소요조사(본부, 산하기관) : 전년도 12월
  - 예산절약성과금대상 심사 : 다음연도 1월초
  - 예산절약 성과금 기획예산처심사 : 다음연도 3월~4월
  -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 다음연도 5월
- 철도청 조직의 Slim화
  - 철도청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 구축
    - 사업본부제 실시 및 중간관리계층 폐지
      - 본청 9개 국·실을 10본부 1실로 재편하여 기능강화 ('00. 1. 1 시행)
      - 5개 지방철도청을 폐지하고 현업 역·소의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무소 설치 ('00. 1. 1. 시행)

- 현업기관(역·소)을 통합하여 광역화 및 거점관리화 ('99.10. 1 시행)
- 철도경영개선계획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절감 추진
  - '99년 인력절감 : 1,506명 (33,270명 → 31,764명)
  - '00년 인력절감 : 2,346명 (31,764명 → 29,418명)

### 30) 水害復舊 萬全 : 138(08-70-09)

- 2차 추경예산에 수해복구비를 반영하는 등 복구재원 확보에 기할 것
  - 각부 장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여 수해현장을 방문·독려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 '98. 8.11, 국무회의시 )
  -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홍수나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근원적인 복구가 되도록 할 것( '98. 8.17, 국무회의시 )
- '98 수해복구사업 4,852건(하천 3,105, 도로 1,746, 이주단지 1)은 계획기간에 차질없이 완료
    - 사업기간 : '98~'99
    - 총사업비 : 657,254백만원(지방비 290,616백만원 포함)
    - 주요사업내용
      - 하천 3,105건 1,442km(국가하천 117건 63km, 지방1급하천 49건 18km, 지방2급하천 2,939건 1,361km)
      - 도로 1,746건 335km(국도 262건 47km, 지방도 721건 138km, 군도 763건 150km)
      - 주택이주단지 1건 20동 23세대

- '98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를 계획기간내 완공하여 조기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31)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98.10.12, 국무회의시)
- 한·일 항공실무회담('98.11.25) 및 한·일 항공회담을 개최('99. 1.19~1.21)하여 운항횟수 증회 및 신규노선 개설
  - 주요 수익노선인 한·일 노선의 운항회수 증회 및 신규노선 개설로 국적항공사의 경영수지 개선 및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

### 32)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APEC회의에서도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Y2K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바라며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99.12.28, 국무회의시)
- 컴퓨터 2000년 문제 추진대책반 운영('97. 5)
    - 본부,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Y2K 문제해결 추진

- 정부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 추진
-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점검
- 문제해결을 위한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및 건교부 추진상황을 지속 홍보
- 비상대비체계 구축
  - Y2K문제로 인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기관별·시스템별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대비체계 구축 완료
- 모의시험 및 모의훈련 실시
  - 중점관리기관을 중심으로 모의시험 실시('99. 5~6)
  -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99.11~12)
- Y2K 문제해결 자체선언 및 인증실시('99.12.16)
- 「Y2K 종합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2000년 전환기간('99.12.31~'00. 1. 4) 중 비상근무

### 33)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시 능력과 지역안배를 최대한 배려
    - 승진인사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승진인사

- 4급이상 승진시(77명)출신지역을 감안(영호남 각 31%, 기타 38%)
- 전보인사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간 전보인사
- 주택도시국장등 18개선폭직위에 대한 적임자 선정시 지역안배 중시
-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시행('02. 2)
  - 인사기준 공개 및 인사청탁 배격으로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
  - 능력과 실적에 입각하여 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기관장 의지 표명
  - 다면평가제도 및 특별승진제도 활성화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운영('02. 9)
  -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보직관리의 합리적인운영에 기여
- 직위별 전문가 채용을 위한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 토지국장등 6개직위 지정·운영
  - 민간전문가를 교통정보기획과장으로 전부처 최초 개방형직위(4급)에 임용
- 개인의 능력(실적)에 따른 보직경로 강화
  - 단계별(3단계)보직경로 재설정('02. 8)
-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실시(수시)
  - 자기혁신, 조직발전, 제2건국운동 의식개혁 등

### 34) 아파트 관련 비리 剔抉 : 206(04-70-21)

- 아파트관리 비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와 감독을 할 것('99. 3.23, 국무회의시)
- 아파트관리 비리는 주민들의 무관심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하되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99. 3.25,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입주자대표의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가 아파트관리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함
- 입주민의 관심과 감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관리업무의 집행절차를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용하도록 함
- 관리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관리비항목을 세분화하고, 관리비 부과시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아파트관리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아파트관리의 기본원칙인 『주민자치』의 틀을 유지하면서 입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강화

※ 추진실적

-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입법예고('99. 5. 1~5.21)
- 법제처 심사의뢰('99.10)
- 공포시행(공동주택관리령 : '99.10.30, 공동주택관리규칙 : '99.12. 7)

### 35)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장마철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수해대책을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99. 8. 3, 국무회의시)
-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동안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산사태 옹벽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람('01. 7. 2, 국무회의시)

- '01년 수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

- '01년 수해복구사업 총 1,793건중 1,791건은 '02년 우기전(6월말)까지 완료, 나머지 2건은 우기전까지 홍수에 취약한 주요 공종을 우선 완료하고 '02년 말까지 전체 공정완료
  - 전체 1,793건(2,894억원) : 하천 835건, 도로 581건, 주택 377건
-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건설교통부 소관은 48개 과제임(투자사업 29, 제도개선 17, 기구신설 2)
  - '01년까지 27개 과제완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령 제정등 제도개선 16건
    - 강화도에 강우레이다 설치등 예산사업 10건
    - 하천관리과 기구신설 1건
  - ※ 수계치수 및 다목적댐 건설 등 예산사업 23건에 29,757억원 투입
  - '02년도에 19개 과제를 추진하여 12월말까지 3개 과제는 완료, 나머지 16개 과제는 장기계속 과제로 지속적 추진중
    - '02년 완료과제 : 기존 하천시설물의 치수안전도 재검토 등 예산사업 3건
    - ※ 수계치수 및 다목적댐 건설 등 예산사업 18건에 7,342억원 투입
  - 추진 시기 미도래한 2개 과제를 포함 18개 장기계속 과제 '09년까지 모두 완료

### 36) 傳賃값 上昇에 대한 對策講究 : 270(08-70-26)

- 최근 전세값 상승은 일부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세값 앙등은 문제가 있음
    - 건교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전세값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99. 8.24, 국무회의시)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지역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엄정대처 바람('02. 1. 8, 국무회의시)
- 
- 임대주택건설 확충과 주거안정 자금지원 확대
    -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01년 35천호, '02년 51천호를 건설하고, 2003년내 8만호 건설추진
    -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호당 용자한도액을 확대(3,000만원 → 3,500만원)하고, 지원금리를 인하(4%→3%)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호당 6,000만원, 연리 5.5%)
  -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 '99년 861억원 → '00년 1,664억원 → '01년 1,431억원 지원 → '02년 102억원(추정)
  -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빈방실태조사를 통하여 전세수요의 적정 분산 유도 ['02. 1.22~2. 9(서울시)일간 조사결과 빈방이 전월세물량의 16.4%를 차지]



### 37) 2000年 豫算案 弘報 推進 : 282(08-70-29)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100대 국정과제와 8.15 후속대책 등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임('99. 9.21, 국무회의시)
-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2000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의 대 국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00년 예산(안) 홍보계획수립 보고(대통령비서실) : '99. 9.29
- '00년 예산(안) 홍보
  - 건교부 홈페이지 게재 : '99. 9.22
  - '00년 예산(안) 총괄적 홍보(건교부 출입기자) : '99. 9.22
- '00년 건교예산(안) 관련 대담 : '99. 9.29, YTN 차관
- '00년 SOC예산 대 언론 홍보(출입기자) : '99.12.22
- '00년 SOC예산 홍보물(팜플렛) 제작·배포(2000부) : '99.12
  - 산하공사·공단 및 유관기관 배포
-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99.12
- '00년 주요사업을 각 사업별로 홍보 : '99.12

### 38) 각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00년도 업무계획 수립
  - 업무계획 수립 및 제출(서면보고) : '00. 2.12
- 국정개혁 보고 : '00. 5. 3
  - 국민 기초생활환경 개선
  - 지방의 자율적 발전기반 구축
  - 고효율의 Digital 국토 조성
  -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도약
  -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수도권, 건설산업 정책 등 핵심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후속 계획 수립·추진

### 39) 解氷期 安全事故에 철저히 對處 : 328(08-70-3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br/>( '00. 2.29, 국무회의시)</li> <li>○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00. 3.21, 국무회의시)</li> </ul> |
|---|
- 건설교통부에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 현장점검 실시
    - 특별안전점검단 구성 : '00. 2.10
      -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철도·지하철반, 구조물반, 수자원반, 총괄반등 5개반 50명으로 편성
    - 특별안전점검 실시 : '00. 2.14 ~ 3.31
      - 대구지하철 본부등 51개기관 563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결과 943건 지적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부실벌점 부과
- 안전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건설현장등의 유공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수여
  - 「안전점검 기동반」으로 축소·편성하여 수시점검 실시 : '00. 4. 1 ~ 4.30
-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에서 해빙기 대비 점검실시
  - 지하철, 건축물, 교량 등 건설공사에 대해 점검실시 : '00. 2.14 ~ 2.26
  - 산하기관 자체 발주공사 점검실시 : '00. 3. 2 ~ 3.15
-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지시 및 간부급 현지점검
  - 산하기관에 해빙기 및 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지시 : '00. 3. 3
  - 본부 간부 공무원이 지역별로 주요건설현장과 노후아파트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 '00. 3. 7 ~ 3.10

#### 40)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철저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보고내용을 정부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에 포함,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 상·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및 추진상황 점검
    - 주요 정책과제 및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 2회(상·하반기)

- 간부회의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하여 추진 독려
  - (확대)간부회의 개최 7회, 산하기관 및 단체장회의 개최 3회
- 실천과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점검·보고
  - 업무보고 관련 66개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청와대 보고 : '00.12.20
- 수도권, 건설산업 정책 등 핵심과제에 대한 후속계획 수립 및 추진
- 업무별 미진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안 제시

#### 41) 秋夕連休 疎外階層 慰勞 : 382(08-70-41)

- 물가안정, 교통대책, 체불임금해소 등 추석연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특별수송대책기간('00. 9. 9~9.13) 설정
  -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 수립('00. 8)
  - 임시열차, 고속버스 예비차 등 증강운행
    - 임시열차 400편, 3,386량 증강운행
    - 고속버스 예비차 373대 투입
    - 연안여객선 782회 증회 운항
    - 임시 항공기 198편 증회 운항
  - 교통소통 및 분산 추진
    -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총 137km 전용차로제 실시
    - 고속도로IC 진·출입 통제(하행 16개, 상행 10개소)
  - 안전·편의대책 및 홍보추진
    - 교량, 철도건널목 안전점검

- 안내지도 20만매 제작
- 심야도착 귀경객을 위하여 지하철, 심야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운영
- 교통사고는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1999년 추석보다 각각 33%, 48% 감소
- 사망자 97명('99년 145명), 부상자 3,778명('99년 7,252명)

## 42) 地方經濟 活性化對策 樹立 : 383(03-70-42)

- 최근 지방경제와 서민경제가 좋지 않음. 특히 지방건설업의 경기가 좋지 않음. 이런 사태는 주택보급율이 100%에 가까워졌는데도 건설업자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주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보고해 주기 바람('00. 9.26, 국무회의시)
- 부실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01. 8.25)
    - 토건업 50㎡, 토목·건축업 33㎡ 등 사무실 보유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자기준을 토목업 4→5인, 건축업 3→4인으로 강화하는 등 등록기준 강화
  - 부적격 건설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건설업체 등록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는 갱신제도를 도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02. 9.18)
  -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여 기준미달업체는 퇴출 또는 영업정지 조치
    - 부실업체 실태를 연중 조사하여 '02.11 현재 조사대상 60,884개사중

55,435개사(91.9%)를 조사완료하고, 11,927개사(21.5%)를 행정처분 조치 또는 진행중

- 비수도권지역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감면('00)과 전국에서 구입하는 고급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03년 6월말까지)
- 지방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신시가지 개발계획도 원활히 추진

#### 43)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00. 9. 6)
  - 처분요구사항 : 건교부10건, 건교부 산하기관(자회사 포함) 130건, 철도청 및 철도청 산하기관 5건 등 총 145건
- 매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종합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00.12월말 현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 총 145건 중 109건 조치완료 (75.2%) 나머지 36건은 조치중
  - '01.12월말 현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 총 145건 중 143건 조치완료 (98.6%) 나머지 2건은 조치중
  - '02.12월말 현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 총 145건 조치완료
- ※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대통령령 제16911호 '00. 7.22) 산하 점검평가특별위원회내 「공기업 등 경영점검·평가단」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종합평가

## 44)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분규 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통보('00.11.10)
  - 산하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노사분규 대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00.11.15~ )
- 부산교통공단의 파업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내 「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 수립(육상교통국 '00.11.27)
  - 본부장 : 육상교통국장, 상황실장 : 육상교통국 과장
- 산하기관 노사협상 실적
  - 대한주택공사 :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연대집회시 합법집회유도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01. 5. 1, 6.24)
  - 한국수자원공사 : 현안사항의 무분규타결로 선진노사문화 기틀마련
  - 한국도로공사
    - 영업소 신·증축시 유지보수 대기실 설계반영 등 4개 안전 협상타결('01. 3)
    - 2001 임·단협 체결(11.15)
  - 한국토지공사 : 주공과의 통합문제가 주요안전쟁점이나 쟁의발생 없음
  - 인천국제공항공사 : 상호신뢰기초로 노사협의 관행정책 예방적 노무관리 강화

- '01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개최('01. 7.26~8.27)
- '01년 임금교섭 타결(12.31)
- 한국공항공단 : 노사 대화창구의 효율적 운영, 경영 및 근로자이해정보의 공유
- 교통안전공단 : 노사 대화창구 상시 개방, 노사협의회·간담회 등 노사 대화로 분규 사전차단
- 부산교통공단 : 임금인상(7%), 해고자 복직 등 안전 타결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노·사간 상호협력관계 전환추진, 대화를 통한 현안사항(감사원 지적사항 등) 해결, 공단경영진에 대한 노조간부 및 직원들의 불신감 해소
- 한국감정원 : 경영수지악화에 따른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노사공동선언 : '01. 5.30)
- 노조의 잦은 대화로 노사화합 분위기 제고 및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 공기업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노사의 공동대체 분위기 조성

#### 45) 설 綜合對策 마련 : 410(08-70-50)

- 설 연휴기간 중 많은 사람이 귀향하게 되므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주기바람('01. 1. 9, 국무회의 시)
- 특별수송대책기간('01. 1.20.~1.26) 설정
  -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 수립('01. 1)
  - 임시열차, 고속버스 예비차 등 증강운행
    - 임시열차 455편, 4,311량 증강운행
    - 고속버스 예비차 387대 투입



- 연안여객선 557회 증회 운항
- 항공기 총 2,589편 운항
- 교통소통 및 분산 추진
  -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총 137km 전용차로제 실시
  - 고속도로IC 진·출입 통제(하행 16개, 상행 10개소)
- 안전·편의대책 및 홍보추진
  - 교량, 철도건널목 안전점검
  - 안내지도 20만매 제작
  - 심야도착 귀경객을 위하여 지하철, 심야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교통소통이 전년에 비하여 원활하였음에도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각각 47.9%, 50.8% 감소
  - 사망자 62명('00년 119명), 부상자 2,301명('00년 4,676명)

#### 46) 海外巡訪時 外資誘致事業의 實現 : 517(03-70-54)

- 민자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경우 수입도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럽, 캐나다, 일본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은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01.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외자유치 성과
  - 대구~부산고속도로 : 다이치강교은행(일본) 1억불 대출약정 체결('01. 7)
  - 부산~김해경전철 : SYSTRA(프랑스)사와 760만불 유치약정 체결('02.12)
- 향후 계획
  -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 AMEC사(영국) 10억불 투자 예정

(‘02년중 1단계사업 착수 예정)

- 인천국제공항철도 : ‘03. 8월까지 내·외자 조달방안 확정 예정

#### 47)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  
(‘01. 5.29, 국무회의시)

- 건교부에 월드컵 교통종합 대책반 설치(‘01. 5.31)
- 고속도로·국도의 도로표지 정비(565개소)완료 한자병기표지판 설치확대
- 월드컵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구성·운영(‘02. 5.16)
- 일본, 중국 등 국제항공노선 확충(주 136회 추가)
- 임시편·전세편 항공편, 임시열차·객차 증결 운행 등 추가 운행
- 항공, 철도 등 보안·안전대책 추진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02. 5.31~6.14일까지 9~21시까지)
- 개최도시 교통국장 특별교통대책회의 개최(4회, ‘01.12.10, ‘02. 4.10, 5.14, 6. 5)
- 경기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 시행(서울,부산,인천,수원,전주:의무적2부제)
- 셔틀버스 전체 56개 노선 654대 운행
- 시내버스 129개 노선 1,589대 노선연장 및 변경 운행
-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심야 연장운행
- 경기장 주변 교통통제 및 교통수요 관리 대책 시행
- 한·일 월드컵 교통실무협의회 개최 : 제1차(‘01. 5. 8~9, 과천), 제2차(12.12~13, 동경), 제3차(‘02. 4. 4, 동경)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도부문 사업추진계획 수립('01. 9)
- 월드컵 붐조성 및 성공기원을 위한 철도인 다짐한마당 행사개최 ('02. 3.26~29)
- 철도청 수송대책본부 운영('02. 5.16~7. 1)
- 개최도시 철도수송 지원을 위한 열차증편 운행('02. 5.16~6.30)
  - 임시열차(114개 열차), 객차증결(228개 열차), 임시전동열차(272개 열차)
- 여객 안내서비스 개선 및 외국인 철도이용 편의 제공
  - 국·영문 열차시각표 제작·배부(10만부)
  - 외국인 통역(영·일·중)안내서비스 제공
  - 외국인 환전서비스 제공(9개역, '02. 5.16~7. 2)
- 열차내 동영상정보시스템 설치·운용(새마을호 445량)
- 월드컵 개최도시 주변 시설개량 역광장·구내 및 선로변 정비
  - 성산역 임시승강장 설치('02. 5) 및 경기개최일 임시열차 운행
  -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26개역), 역광장 소공원 조성(8개역)
- 2002월드컵 철도여행정보 웹사이트 개발·운영(<http://2002.korail.go.kr>)

#### 48) 가을가뭄에 積極 對處 : 541(08-70-60)

- 심각한 가을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절수운동이 필요함
- 3대강 물관리특별법(한강관리법 기통과)이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가뭄기간동안 저수지를 준설하여 담수량을 늘이고, 소형댐도 계속 가능한 지역에서 건설 추진('01.11.27, 국무회의시)

- 다목적댐의 단계별 용수공급

- '01. 9.28~'02. 4월말까지 정상공급량의 68%~81%를 공급하여 15억톤의 용수확보
- 수력발전댐의 용수 공급 위주 운영
  - '01.10. 1~'02. 4월말까지 수력발전을 평상시보다 33% 감축하여 1.5억톤의 용수확보
- 광역상수도과 지방 상수도간 비상관로 연결방안 검토
  -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결가능지점 3개소(충주시 수회리, 보령시 웅천·청소읍) 검토 선정
- 신규댐 건설 추진
  - 댐건설장기계획('01~'11) 수립('01.12) 및 단계적 댐건설 추진

#### 49) 秋夕綜合對策 마련 : 609(03-70-66)

-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귀성객 수송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2. 9. 3, 국무회의 시)

- 특별수송대책기간('02. 9.19.~9.23) 설정
-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 수립('02. 9)
-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02. 9.19~9.23)
- 임시열차, 고속버스 예비차 등 증강운행
  - 임시열차 368편, 2,398량 증강운행
  - 고속버스 예비차 350대, 1,110회 증회 운행
  - 연안여객선 929회 증회 운항
  - 임시 항공기 256편 증회 운행
- 교통소통 및 분산 추진

- 경부고속도로 서초IC~신탄진IC 총 137km 전용차로제 실시
- 고속도로IC 진·출입 통제(하행 11개, 상행 9개소)
- 확장 공사중인 고속도로·국도 조기준공 및 임시개통
  - 부분준공 개통 :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5개소
  - 기간중 임시개통 : 국도 4호선 서천군사~오석간 등 19개소
- 안전·편의대책 및 홍보추진
  - 안내지도 49만부 제작 배포, 상습정체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
  - 심야도착 귀경객을 위하여 지하철, 심야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운영(특별수송기간)

## 50) 冬節期 對策 마련 : 611(05-70-67)

-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처는 물론 전부처가 관심을 갖고 동절기 대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등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아울러 동절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등 동절기 서민층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2.11. 5, 국무회의시)
-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 인하('02.12. 1)
    - 전세자금 융자금리를 0.5%~1.0%p 인하하여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완화 (연 7.0~7.5%→6.5%)
    - 65세이상 노인 부양세대에 대한 우대금리를 5.0%로 인하(5~5.5%→5.0%)
  -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02.12. 1)

- 용자금리를 0.5%~1.0%p 인하하여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  
(연 7.0~7.5%→6.5%)
- 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시기 연장 및 지원자금 확대
  - 당초 금년말 대출신청분까지 지원키로 하였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내년이후에도 계속지원('03년 지원규모 : 6,225억원)
- '03년도 국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추진
  - '03년 재정소요 확보(예산 6,426억원, 국민주택기금 16,738억원)
- 서민·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및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내년이후에도 계속지원

# 海 洋 水 産 部

## □ 指示事項 目録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2(08-47-01)  | 해양경찰기능재정립 방안            | 1998. 4.15 |
| 123(06-47-02) | 장보고대사 연구                | 1998. 7.10 |
| 231(03-47-03) | 해양수산정책의 선진화             | 1999. 4. 3 |
| 365(08-47-04) | 해상치안질서 확립 및 여객선 안전운항    | 2000. 5. 4 |
| 454(03-47-08) | 해양인적자원능력 향상             | 2001. 2. 8 |
| 457(03-47-11) | 신해양산업 발전                | 2001. 2. 8 |
| 589(03-47-13) | 동북아물류 중심지 구축            | 2002. 4.19 |
| 590(03-47-14) |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대처          | 2002. 4.19 |
| 591(03-47-15) | 해양환경 보호                 | 2002. 4.19 |
| 592(03-47-16) | 해양경찰 위상정립 및 선원복지 향상     | 2002. 4.19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38(03-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57(09-70-12) | 방일 후속조치 철저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문제 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191(02-70-18) |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대국민설득 강화   | 1999. 3. 2 |
| 196(02-70-19) | 한·중 어업협정의 차질없는 준비 및 추진  | 1999. 3. 9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비         | 2000.10.23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1) 海洋警察機能 再定立 方案 : 32(08-47-0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이 해양특성에 맞는 독자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능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br/>(‘98. 4.15,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li> <li>○ 해양경찰의 업무를 혁신하고 해경의 신분을 일반·공안직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br/>(‘98. 7.10,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li> </ul> |
|---|
- 해경선진화추진실무위원회 구성·운영(‘98. 7, 2회)
    - 위 원 : 위원장 박용섭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외 9명
    - 기 능 : 해양경찰선진화 기초작업 수행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 실무위원회 실무작업반 운영(‘98. 8, 5회)
    - 위 원 : 박용섭 교수외 2인
    - 기 능 : 해경기능선진화 기초작업 수행
  - 선진 해양경찰제도(영국,일본) 연구(‘98.12. 6~’98.12.31)
  - 정부기능경영진단 실시(‘98.11~’99. 2)
  -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한 기능 재정립 방안 확정(국무회의, ‘99. 3.30)
  - 해양경찰청직제 개정(‘99. 5.24)
    - 차장제 신설 및 해양경찰신분 현행체제 유지
  - 「해양경찰헌장」 제정, 「해양경찰의 날」 지정 등으로 독자성 확립
  - 장비강화예산(5,026억원)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해상교통문자방송 업무인수 등 해양경찰기능 강화



## 2) 張保臯大使 研究 : 123(06-47-02)

- 장보고 대사의 업적이 국민들에게 잊혀진 역사로 매몰되어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장보고 대사를 철저히 연구하여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98. 7.10,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사업 분위기 조성
  - 월간 해상왕 장보고 N·E·W·S지 발간(매월 1만부 발행, '99.10.~ 계속)
  - 역사교사 장보고 중국내 유적답사('01. 6/183명, '02. 5/240명)
  - 장보고 캐릭터 개발 상표등록('02.10, 96건)
- 재조명·평가사업
  - 해상왕 장보고 연구자료 집대성 연구('00. 4~'03.12)
  - 장보고 시대 무역선 복원('01~'03)
  - 장보고 국제학술회의 개최('01.10, COEX)
- 해양문화·예술사업
  - 해상왕 장보고 밀레니엄 기념우표 및 우표첩 발행('00. 1)
  - 해상왕 장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00. 3)
  - 해상왕 장보고 상징조형물 건립('00. 5)
  - 해상왕 장보고 창무극 공연('00.11~12)
  - 역사서 “입당구법순례행기” 주석 번역 발간('02)
  - KBS역사스페셜 『천년전의 벤처, 해상왕 장보고』 방영('01. 1.27)
  - 장보고 애니메이션(2편) 제작·방영('00.11~'02. 7)
  - 해상왕 장보고 역사소설 “해신” 연재('01. 8~'02. 7, 중앙일보)

- 장보고를 주인공으로 한 PC게임 “해상의 빛” 제작('02.12)
- 선양 및 성역화 사업
  - 일본 교토 엔리쿠사에 장보고 기념비 건립('02. 1)
  - 완도군 장보고 축제 지원('00~'02)
  - 완도군 장보고 동상 건립 작품 공모 및 설계('01. 6~'02.11)
  - 김제시 이주지 기념비 건립('01. 2~'02. 9)

### 3) 海洋水産政策의 先進化 : 231(03-47-03)

- 수산진흥종합대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가기 바람  
( '99. 4. 3, 해양수산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수산진흥종합대책 수립 추진경과
  - 새로운 수산정책수립기획단 구성·운영 및 수산진흥종합대책 4차 시안 수립('99. 4~6)
  - 당정협의 의견수렴 및 시·도, 수협 등 관련업계, 관계부처 의견 수렴 ('99. 4~10)
  - 국무회의 보고 및 수산진흥종합대책 확정('99.10.22)
- 주요내용
  - < 기본방향 >
    -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형어업」, 「기르는어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과 안정적인 어업생산 증대도모
    - 본격적인 「유통구조개혁」과 종합적인 「어촌개발」의 적극 추진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촌지역의 진흥도모

< 중점추진과제 >

- 새로운 어업질서(EEZ체제)에 맞게 연근해 어업 재편
- 양식단지 조성, 바다 목장화 사업 등 기르는 어업 육성 추진
- 유통시설 현대화, 정보화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어업기반 시설 및 소득원 확충과 신지식어업인 육성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개발
-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 광역경비체제 구축 및 해양오염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해경 장비 확충

< 투융자 규모 >

- '99 ~ '04(6년간) : 6조 7,597억원 투융자

#### 4) 海上治安秩序 確立 및 旅客船 安全運航 : 365(08-47-04)

- 해상치안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어선의 안전을 보호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야 함
- 동남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 방지를 위해 인접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잘한 것이며, 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바람('00. 5. 4,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우리어선의 안전조업 확보
  - 동서해 특정해역 경비함정 상시배치로 월선, 피랍, 피습 방지
  - 어로보호협의회 개최 및 특정해역 출어선 안전교육 실시
  - 긴급보고 통신훈련 지속 실시 및 출어선 선단편성을 위한 어민계도·홍보 활성화
-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 주권수호를 위한 영해선 중심 순찰활동 강화
-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간 대책회의 및 중국어선 단속 모의훈련실시
- 영해 및 EEZ위반 중국어선 나포 등 강력 대응
- 광역경비세력 확충을 위한 대형함정 및 항공기 도입배치
-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현장위주의 철저한 안전점검 확행 및 안전교육실시
  - 명절, 피서철 특별수송안전대책 시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해적행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주변국 해상치안기관과 협력체제 유지
    - 한러, 한일, 한중 해상치안기관장 회의 매년 각1회 개최 등
  - 북서태평양 해상치안기관장 회의 등 다자간 협력강화
  - 말레이시아 해양경찰과 정례회의 합의('01)

## 5) 海洋人的資源能力 向上 : 454(03-47-08)

- 선원등 해양인적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선원 처우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선원들이 안심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 한편, 항만운영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선진화되도록 할 것  
( '01. 2. 8,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우수선원양성
  - 선원교육기관 및 제도의 합리적 개편 · 운용
  - 해기품질관리체제 구축과 해기사 면허제도의 개선(IMO 보고, '01.12)
  - 선원승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병역특례제도 확대시행, '01. 3)
  - 선원정책중장기발전계획 수립('02.12)

## ○ 선원복지증진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01. 6) · 운영으로 선원의 복지 및 고용 업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행기반 마련
- 선원 최저임금 인상(15.1%)으로 선원의 생활안정 도모('01. 9)
-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편으로 육상근로자와의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01. 8. 1)

## ○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 PDP를 국내 교육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교재개편('01.12) 및 종사자 교육 실시(68명)

## ○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 확충 · 보강

- PTMS시스템 확충 · 보강(울산, 동해, 포항, 대산항)
- 완도항 신설 추진('01~'05)

##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보강

- 전문교육(PTMS 영어, 승선훈련, 현장실습 등)의 지속적 실시(13회 152명)

## 6) 新海洋産業 發展 : 457(03-47-11)

- 해양 바이오산업, 해양 에너지산업 등 신해양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태평양 심해저와 대륙붕에 대한 자원탐사도 강화하기 바람('01. 2. 8,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 해양 바이오산업 개발

- 해양 유용신물질 연구개발사업(5개 과제) 추진('01. 4~'02. 2)
  - 서해갯벌 갯지렁이로부터 고분해용 슈퍼효소 추출 및 남해 해조류로부터 노화억제물질 추출(6개 유용신물질 특허출원)

-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 시화호·가로림만(조력), 울돌목(조류) 후보지 해양조사('01.10 ~ '02. 3)
  - 가로림만 조력발전 최적화기법 개발 및 개념설계('01.12~'02. 5)
  - 울돌목 조류발전 타당성 검토 및 수차현장 실험('02. 1~'02. 8)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 '01년도 신규 10개 기업의 신규 기술개발과제 선정('01. 4~9)
    - ※ '00년 선정된 계속과제 10개 포함, 총 23개 기업 지원('02)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관련규정 개정('01.12)
    - 지원규모(3억원/3년→2억원/2년) 및 정부지원금 환수율(100%→50%) 조정을 통한 수혜 확대
- 태평양 심해저 탐사
  - 태평양 실효역 정밀 자원탐사 60일간 수행('01. 7~9)
  - 상업생산에 대비하여 채광 및 채련 등 관련기술 개발('01. 4~12)
  - 단독 개발광구 7.5만km<sup>2</sup> 확정('02. 8)
- 대륙붕 한계획정 조사
  - 대륙붕 한계획정을 위한 탐사연구 수행(5,000km)

## 7) 東北亞 物流中心地 構築 : 589(03-47-13)

- 서해안 고속도로는 관광코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 인천·아산·군산·목포항 등 서해안 도시들이 대중국·동남아 진출을 위한 항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주기 바람  
( '02. 4.19,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부산신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Hub Port)으로 집중육성

- '11년까지 부산신항 25선석, 광양항 24선석 개발
  - ※ 급증하는 화물량의 적기처리와 중심항만 지위 선점을 위하여 개발규모 확대예정(49→63선석)
    - 부산신항 : 방파제 완공, 컨부두 9선석, 투기장 가호안, 항로준설 등 시행중('02년까지 15.2%추진)
    - 광 양 항 : 컨부두 8선석 운영중, 2-2단계 및 3-1단계 8선석 등 시행중 ('02까지 21.7%추진)
- '13년까지 총 400백만평 국제물류단지 조성
  - 항만배후부지를 가공·조립·검사·유통·마케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종합 물류단지로 개발(부산 288, 광양 112만평)
- 부산항은 803만TEU('01기준)을 처리, 세계3위 컨테이너처리 항만으로 부상
- 광양항도 개장 5년만에 100만TEU('02기준) 처리, 중심항만으로 성장
- 기타신항만 및 주요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추진
- 서해안 주요항만 개발
  - '11년까지 인천항 60선석, 평택항 67선석, 군산항 19선석, 목포항 20선석 개발
    - 인천항 : 76선석 운영중, 관공선부두 및 고철부두 착수 추진 등
    - 평택(아산)항 : 17선석 운영중, 동측일반부두, 국제여객부두 및 컨부두 추진 등
    - 군산항 : 25선석 운영중, 남측안벽 및 북방파제 등 추진
    - 목포항 : 18선석 운영중, 다목적부두 및 대불부두 등 추진

## 8) 水産業與件變化에 能動對處 : 590(03-47-14)

- 수산업도 세계와 경쟁하여 이겨야하므로 IT, B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02. 4.19,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 연구비(’01~’02) : 152억원 투자
    - ※ 연구비 총투자계획 : ’95~계속, 265억원
  - 주요 추진일정
    - ’02. 3-4월 : 사업계획 확정 및 연구과제 조사
    - ’02. 6월 : 연구과제 공모·조사
    - ’02.10월 : 협약체결
  - 주요 연구성과
    - 어빠로부터 칼슘의 회수 및 칼슘흡수 촉진제 연구
    - 항 바이러스 기능성 식품자원으로서 해조류 연구
    - 참치 정소로부터 핵산 복합 물질의 개발 및 제품화 연구
    - 넙치의 질병예방치료를 위한 항생제 대용 특수면역 단백질 개발 연구 등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전문인력(어업인후계자) 육성 및 어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 어업인후계자 육성
    - 일반후계자(581명), 전업어가(151명) 경영지원 : 219억원(융자금) 지원
  - 어업인 정보화 교육 : 9,257명(기초 6,264명, 경영 2,993명)
  - 정보화교육 인프라 구축 : 31억원 지원
    - 원격영상시스템 구축 : 13개소
    - 어촌정보사랑방 선정 : 100개소, PC 100대 보급



## 9) 海洋還境 保護 : 591(03-47-15)

-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개혁은 물론 육상과 연계된 정책 및 사후통제가 필요함
- 국민들이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02. 4.19,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
  - 「육상기인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추진
    -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법안 계류('02.10)
  - 민·관협력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바다사랑 시민연대」 구성·운영('02. 5)
  - 해안가 방치폐기물 모니터링 실시 및 1사1연안 가꾸기 운동 전개('02. 3~'02.12)
- 해양환경보전 홍보·교육
  - “세계습지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02. 2)
  - 해양보전을 위한 홍보 책자 및 교육교재 개발
    - 해양보전사업 성과 홍보물 제작·배포('02. 6)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교재 2종 개발('02.12)
-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 습지보호지역 : 전남 진도 갯벌('02.12)
  - 생태계보전지역 :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02.10), 제주 문섬('02.11)
- 해양환경보전 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 추진
  - 전국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공모·사업비 지원 : 총 18건 선정, 12천만원(연중)

- 표준적인 해양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02.12)
- 2,000부 제작 배포 및 PDF 파일로 보급

## 10) 海洋警察 位相定立 및 船員福祉向上 推進 : 592(03-47-1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 위상정립 및 선원복지향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월드컵 기간중 바다의 안전은 해양경찰이 책임지고 담당해 주기 바람</li> </ul> </li> <li>○ 장기간 승선하는 선원들이 가정문제 때문에 승선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종합적인 선원복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2. 4.19,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li> </ul> |
|--|
- 청장직급 상향, 기획관리관 신설, 지방청 신설 등 조직체계 선진화 추진
    - 「해양경찰 발전기획단」 설치·운영('01.12)
    - '03년도 소요정원 요구안 행정자치부 제출('02. 4)
    - 「해양경찰 종합 발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보고('02.11)
  - 광역 경비세력 증강을 위한 함정·항공기 연차별 확보계획 수립
    - 대형함정 건조 : 소요 54척, 보유 13척, 건조중 5척, 추가확보 36척
    - 항공기 도입 : 소요 30대, 보유 10대, 도입중 2대, 추가확보 18대
  - 전문교육훈련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찰학교」 신설 추진
    - 부지매입 및 설계비 예산안 편성, 기획예산처 제출('02. 5)
  - 해상테러, 밀입국 등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해난사고 방지 등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 월드컵 해상치안 단계별 해상경계근무 강화 및 해상안전 상황실 운영
    - 해양경찰청장 일선서 치안실태 확인·점검('02. 4~'02. 6)

- 국제여객선 보안경찰관 승선 등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 대테러 전담부서 설치 운영 및 대응장비 보강
- 해상대테러 협력 및 국제간 공조체제 구축
- 선원복지대책 수립('02. 7)
  - 선원보험제도 개편 추진
  - 선원복지사업의 활성화 등
- 선원보험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02. 3 ~12)

## 11) 失業細部對策 樹立 : 10(03-70-01)

- 실업종합대책에 대한 부처별 세부대책 수립·추진  
( '98. 3.26, 국무회의시 )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 고용창출을 통하여 연안지역의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 '98년도 : 6개월간 2,885명 상시고용(연인원 50만명 이상)
    - 공공근로사업 추진
      - '99년도 :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142천명을 고용, 해양쓰레기 약 8천톤 수거 처리
      - '00년도 : 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120천명을 고용, 해양쓰레기 약 7천여톤 수거 처리
  - 항만건설공사 조기집행
    - '98. 3/4분기 배정예산 조기배정(3건) 및 2차 추경예산 편성 집행
      - 45건, 1,250억원(연인원 87만명 고용효과 발생)

## 12) 經濟政策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후 정책을 발표하도록 할 것
  -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 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책수립 및 홍보활동진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00. 1.25, 국무회의시)

-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
  - 언론오보 발생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정책설명회 개최
    - 일시/설명자 : 매주 수요일 11:00 / 해당실 · 국장 및 산하단체장
    - ※ 주요사안은 장 · 차관 직접 설명
  - 오보 및 왜곡보도 적극 대응(87회)
- 해양수산정책의 국민적지지 기반강화
  - E-Mail을 통한 대국민 홍보자료 전송(1,700여명)
  - 대중적인 장소를 이용한 홍보추진
    - 지하철 광고 게시 (5호선 608량, ’00. 5. 1~’00. 7.31)
    - 전자식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20회)
  - 장 · 차관 등 해양수산 주요인사 방송출연 등 대언론접촉강화(175회)
- 해양수산 전문기자 양성
  - 출입기자단 현장취재 기회 부여(37회) 및 출입기자에 대한 안내교육 프로그램 운영

### 13)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 : 138(03-70-09)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
-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 격려하고
  -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각 장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수해대책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  
(‘98. 8.11, 국무회의시)

- 수해대책비 2차 추경예산 일괄반영 : 9천억원
- 기관장 수해현장 방문 수재민 위로 : ‘98. 8.14(충남 태안)
- 복구예산조치 및 복구사업 추진 : ‘98. 9.11

### 14) 訪日 後續措置 徹底 : 157(09-70-12)

- 방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감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임  
(‘98.10.12, 국무회의시)
- 경제부처장관들은 투자, 일본 수출입은행 차관도입, 무역문제 등 경제문제를 착실히 마무리 할 것

- 협정체결을 위해 실무회담 17차례 개최(‘96. 5 ~ ‘98.11)
- 한·일 어업협정 가서명(‘98.10. 9)
- 한·일 어업협정 정식서명(‘98.11.28 / 일본 가고시마)

- 한·일 어업협정 국회 비준 동의('99. 1. 6)
- 제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99. 7.22 / 동경)
  - '99년도 양국 EEZ 입어교섭 타결  
(한국 : 1,704척 / 149,218톤, 일본 : 1,601척 93,773톤)
- 제2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99.12.28 / 서울)
  - '00년도 양국 EEZ 입어교섭 타결  
(한국 : 1,639척 / 130,197톤, 일본 : 1,601척 93,773톤)
- 제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00.12.23 / 동경)
  - '01년도 양국 EEZ 입어교섭 타결  
(한국 : 1,464척 / 109,773톤, 일본 : 1,459척 93,773톤)
- 제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01.12.28 / 서울) : 등량원칙 적용
  - '02년도 양국 EEZ 입어교섭 타결  
(한국 : 1,395척 / 89,773톤, 일본 : 1,395척 89,773톤)
- 한·일 협정발효후 3년간 상대국 EEZ 입어 조업실적을 비교하면 우리  
측이 82,596톤, 일본측은 45,603톤을 어획하여 어업적 실익 확보

(단위 : 척, 톤)

| 연도별  | 우 리 어 선 |         |        |       | 일 본 어 선 |        |        |       |
|------|---------|---------|--------|-------|---------|--------|--------|-------|
|      | 합의척수    | 할당량     | 어획량    | 소진율   | 합의척수    | 할당량    | 어획량    | 소진율   |
| 1999 | 1,704   | 149,218 | 27,335 | 18.3% | 1,601   | 93,773 | 22,117 | 23.6% |
| 2000 | 1,639   | 130,197 | 31,422 | 24.1% | 1,601   | 93,773 | 7,293  | 7.8%  |
| 2001 | 1,464   | 109,773 | 23,839 | 21.7% | 1,459   | 93,773 | 16,193 | 17.3% |

## 15) 컴퓨터 2000問題 關聯 : 164(07-70-1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2000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점검할 것('98.11.23, 국무회의시)</li> <li>○ Y2K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li> </ul> |
|--|
- Y2K문제 종합추진대책 수립시행('98. 8)
  - 민간선박부문 Y2K문제 종합지원대책 수립시행('98.12)
  -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모의시험 실시('99. 5)
  - Y2K문제해결 자기선언 실시('99. 8)
  - 항만 및 선박입출항 안전대책 수립시행('99. 8)
    - 입출항선박의 Y2K문제를 확인·점검하여 항만내 사고예방
  - 민간Y2K전문가와 항만시설 및 여객선 합동현장점검 실시('99. 9)
  - 해양수산 및 민간선박분야 Y2K 비상대응훈련 실시('99.11~'99.12)
  - Y2K문제해결 민간선박 2,224척 외국홍보 및 인터넷 게시('99.12)
  - 2000년 전환기간중 이상없이 비상근무 종료('99.12.30~'00. 1. 4)
  - 윤년위험일 이상 없이 비상근무 종료('00. 2.28~'00. 2.29)

## 16)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정리해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 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현황 비교분석
  - 대상 : 4급이상 공무원
  - 기준 : '98. 2 / '99. 1현재
  - 결과 : 특정지역 및 특정고교 등에 편중된 사례 없음(일부 특수직렬 제외)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 승진심사위원회에서의 엄격한 심사 : 업무전문성, 추진력, 조직장악력 등 조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 대상자 선발
  - 투명한 인사절차 운영 및 직원참여 확대 추진 : 보직, 승진심사 등에 동료·상사평가제 도입, 잉여인력 정리대상자 선정시 직원참여
  - 승진인사시 출신지역 고려·안배 : 3급 이상으로의 승진시 지역안배, 4급 이하로의 승진시에도 특정지역, 특정출신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평가 및 승진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다수인의 일반적 평가와 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층평가제 도입
    - 인사위원회 운영시 전원합의제로 운영함으로 심도있는 토론 개최



## 17) 韓・日漁業協定에 對한 對國民說得 強化 : 191(02-70-1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 국민 설득노력 전개('99. 3. 2, 국무회의시)</li> </ul> |
|--|
- 대 국민 홍보대책반 구성·운영('99. 3 ~ '99.12)
    - 언론 및 국민 홍보활동 전개(출입기자단 설명회 등 28회, 방송출연 및 기고 등 37회)
    - 어업인 홍보 및 계도 활동(지역별 어업인설명회 및 관련업계 협의회 등 25회)
    - 홍보물 제작·배포(리플렛, 팜플렛 등 1,300부)
  - 학계, 어업인대표 등 협상 이해관련자와 연찬회 개최('99. 8.24~25)
    - 어업협정 결과 및 '02년도 협상추진 방향 등 설명
  - '99년도 일본 EEZ입어시 애로사항 및 '00년도 입어협상대비 현지 실태 조사('99. 8.30 ~ 9.11)
    - 부산 등 13개지역 시·도, 수협, 지역별·업종별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TV, 라디오의 토론회 및 기획프로그램 출연
    - 해양법 학자 및 수산관련 전문가의 신문기고를 통한 홍보 등

## 18) 韓・中漁業協定の 蹉跎없는 準備 및 推進 : 196(02-70-19)

- 한·중 어업협정의 차질없는 준비 및 추진('99. 3. 9, 국무회의시)
    - 한·일 어업협정을 교훈으로 한·중 어업협정은 실무협상 등에 있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 한·중 어업협정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 조속히 마무리, 어민피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01. 2. 8,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 양국어선 조업실태 파악으로 입어교섭(안) 전략 마련
    - 우리어선 해구별·수역별·시기별 조업실태 조사('99. 4 ~ '00.10)
    - 우리어선 중국측 수역 입어희망 조사('99.11 ~ '00. 7)
    - 위성영상판독을 통한 중국어선 조업동태 파악('00. 2 ~ '01. 6) 등
  - 대 어업인 의견수렴 및 홍보활동 강화
    - 어업협상대책협의회 및 어업인 자문단 구성, 운영('99. 4 ~ )
    - 학계, 업계, 어업인 대표 등과의 합숙연찬회 및 간담회, 설명회 개최(15회)
    - 어업협상 홍보기획단 구성, 운영('00. 5 ~ '01. 6)
  -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수산당국간 실무회담 개최('99 ~ '01, 16회)
  - 양자간 조업문제 최종 타결 및 한·중 어업협정 정식 서명('00. 8. 3)
  - 한·중 어업협정 국회비준 동의('01. 2.28)
  - 한·중 수산고위급(차관급)회담 개최로 협정 발효일자 및 현행조업유지 수역의 범위(북위 29도40분) 등 쟁점사항 타결('01. 4. 5)
    - 상호 EEZ 입어규모(초년도) : 한국 1,402척, 60,000톤 / 중국 2,796척 110,000톤
  - 제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01. 6.25 ~ 26)
    - 과도수역 조업척수 합의 : 한국 1,829척 / 중국 5,500척
  - 한·중 어업협정 발효('01. 6.30)

## 19)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99. 8. 3, 국무회의시)
  -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없이 추진
    - 특히, 지난 2년간의 수해를 거울삼아 충분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99. 12.28, 국무회의시)
  - 해빙기 대형사고와 수해예방('00. 3.21, 국무회의시)
  - 지난해 12월 수해방지대책을 세웠음, 작년과 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대비해 주기 바람('00. 5. 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철저한 재해예방('00. 8. 1, 국무회의시)
    - 8~9월에 태풍과 집중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람
  - 수해방지에 만전('01. 6.19, 국무회의시)
    - 관계부처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재해대책에 만전('02. 7. 9, 국무회의시)
  - 태풍 및 호우피해 조속 복구('02. 9. 3, 국무회의시)
- 
-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용역시행 : '00~'02, 4건 8.5억원
    - 조위관측소 증설 : '01~'02, 5개소 10.3억원
    -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00~'09) 수립·고시('00. 6.29) 및 침수·침식방지사업 추진: '00~'02, 9개소 218억원
    - 목포·군산 해수침수지역 정비사업 : '00~02, 107억원
      - 목포항만시설보강 : '00~'02(101억원), 군산하구수리현상조사(6억원)

- 우기대비 항만(어항)시설 지방해양수산청별(11개청)로 일제 안전점검 실시 : '00. 6
- 항만(어항)공사장 수방단 및 수산재해예방 독려반 편성하여 재해위험지역 및 수산피해 예상지역 순찰활동 실시 : '00. 8. ~10
-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 피해복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계획 수립, 산하기관에 시달 : '00. 9
- 여름철 수해예방대책 수립시달 및 해양안전종합대책회의개최 : '02. 7.25
- 2002 수해복구추진계획 수립시행 : '02.10.10

※ 向後 推進計劃

- 연안재해 방지를 위한 조위상승연구사업 : '03년 완료, 1.5억원
- 목포항 기존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 '03~'04, 148억원
- 조위관측소 9개소 증설 : '03~'06, 27.6억원
- 연안상습 침수지역 198개소 정비 : '03~'09, 819억원

## 20)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00년 예산의 적극 홍보('99.12.21, 국무회의시)
  - 새천년 첫 해의 예산내용과 관련법안 등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 기자 간담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부
  - 해양수산정책 '99성과 및 '00년도 추진계획
  - 장·차관 기자단 간담회(일간지 및 전문지) 개최('99.12.22, 23)
  - '00년 해운항만·수산부문 예산관련 설명회 개최(2회) 및 보도자료 배부

- '00년 각 실·국 및 소속기관·단체 주요정책 기자단 설명회 개최(13회)
- 홍보자료 작성 및 배부
  - 희망의 새 천년, 청색혁명을 통해 해양부국을 만들겠습니다(12,000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수산으로(10만부) 등 5건 작성 및 배부
- TV / Radio 등 방송출연
  - 장·차관 및 주요정책 담당자들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15회)
- 언론사 기고
  - 대한매일, 「국정탐방」에 해양수산정책비전 기고(장관) 등 5건

## 21)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 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00. 2. 1, 국무회의시)

- '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통령께 서면 보고('00. 2.12) 및 직접보고('00. 5. 4, 해양수산부)
-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내용(6대 과제)
  -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광역해양 주권수호 및 안전체계 강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의 구축,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생활 향상, 선진 해양과학기술국가 건설, 국민과 함께 해양시대 전개

## 22)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5(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하며, 보고내용을 보면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했음을 실감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차관)
  - 기 간 / 보고자 : '00. 6. 7 ~ 6.23 / 각 실·국 담당과장 및 사무관
  - 내 용 : 대통령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등에 포함된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 15과제
- 주요업무 및 주요쟁점사항 점검(장관)
  - 신임장관 주요업무보고 : '00. 8. 8 ~ 10, 실·국장 및 담당과장
  - 국정감사 주요쟁점보고 : '00.10.11 ~ 14,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및 담당과장
- 주요개혁과제 추진상황 종합 점검 및 자료 제출
  - 제출처 : '00.12. 9, 대통령비서실
  - 내 용 : 6대과제 54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 '00년 주요업무계획의 철저한 실천으로 추진사업의 조치완료 등 정상추진
  - 부산신항·목포신외항 민자사업 착공, 수협 구조조정 및 한·중 어업협정 정식 서명 등

## 23)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對備 : 386(03-70-45)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상당부문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정부도 상당부문 책임이 있음
- 공기업의 감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고 소관부서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업무 추진 ('00. 9.19, 국무회의시)

-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 지원부서 인원조정(직제규정 개정 '00. 9)
    - 지원부서 인원을 52명(49%)에서 41명(39%)으로 조정
    - 직제규정세직상 9명까지 임명할 수 있던 이사대우를 6명까지로 조정
    - 21명까지 임명토록 되어있던 “1급 또는 2급” 직위를 “1급 또는 2급” 6명, “2급” 15명으로 조정
  - 사내복지기금 부당집행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단('00. 7) 및 행정실장 임문택외 2명 주위처분 및 전액환수 조치('00.10)
  - 비상임이사 선임 부적정 : 공단 자회사 출신 사외이사 해임('00.12)
  - 경영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상여금 제도개선
    - 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00.12~'01. 4 / 170백만원)
    - 업적평가 및 능력평가제도 도입(인사관리규정 개정, '01. 8)
    -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제도 도입(보수규정 개정, '02. 1)

## 24)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 : 노사협의회 개최
  - 사내복지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안) 1차 협의('00.11)
  - 취업규칙 및 보수개정안, 연봉제 시행관련사항 협의('01. 1)
  - 개방형 직위 도입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관련사항 협의('01. 2)
  - 경영실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도입방안 용역관련사항 협의('01. 4)
  - 취업규칙 변경(3급이하 정년 58세 → 57세, '01.10))
  -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 견학('01. 9)
  - 임직원 한마음 워크숍('01.11)
  - 사내복지기금 운영권, 직제규정 개정,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협의('02, 3회)
- 수협중앙회
  - '00년 노사협의회 개최 : 2회('00. 6. 8, '00. 6.19)
  - 인원감축실시방안 노사협의(7회, '01. 2. 9~14)
    - 직급별 감축인원 합의 및 퇴직자 배려방안 협의 등
  - 인원감축 완료 : '01. 2.28
    - 정원 2,166명에서 1,835명으로 331명 감축



## 25) 人事請託 根絶 : 422(08-70-51)

-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 내리도록 해 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시)

- 다면평가제 실시
  - 대상 및 시기 : 과장직위, 4급 및 5급으로 승진심사시
-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체제 확립
  - 인사 정기평가제 도입 등 인사운영기본계획 마련(’01. 7)
-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체제 확립
  -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사명 계획서 작성(’00.12~’01. 1)
  - 실·국장이 소속부서 과·계장을 선임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 제고
  - 학연, 지연 등 정실인사 배제
    - 승진등 인사시 학연, 지연등 정실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하 및 동료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 실시
  - 인사신문고 인터넷사이트 설치·운영(’02. 9)
  - 실적과 능력에 의한 엄격한 인사심사(해양경찰청)
    - 인사운영 혁신기본계획 수립·추진(’01. 5.26)
    - ’02년 정기인사대비 근무희망지 파악(’01. 9)
    - 인사예고제 계획수립 시달(’01.12.10)

# 企 劃 豫 算 處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1(03-21-01)  | 예산편성시 수요기관과의 대화         | 1998. 3.26 |
| 25(03-21-02)  |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1998. 4.13 |
| 27(03-21-04)  | 국민과 함께 하는 산하단체 정비       | 1998. 4.10 |
| 58(03-21-05)  |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강화        | 1998. 5.13 |
| 60(02-21-06)  | 공기업예산 조기집행              | 1998. 5.13 |
| 134(03-21-07) | 사업완성 위주의 예산편성           | 1998. 8.11 |
| 135(03-21-08) | 농정예산 편성방향의 개선           | 1998. 8.11 |
| 141(03-21-09) | 중소기업 지원강화               | 1998. 8.27 |
| 142(03-21-10)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과 인센티브 강화 | 1998. 8.27 |
| 143(03-21-11) |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지원 강화       | 1998. 8.27 |
| 144(03-21-12) | 공무원 보수체계 재검토            | 1998. 8.27 |
| 146(03-21-13) | 지역현안사업 관리 철저            | 1998. 8.27 |
| 148(03-21-14) | 예산집행 평가 철저              | 1998. 8.27 |
| 154(03-21-15) | 중기 재정계획 수립              | 1998. 9.24 |
| 155(03-21-16) | 기금 정비 방안의 수립            | 1998. 9.29 |
| 156(09-21-17) | 정부 경영진단의 효율적 추진         | 1998. 9.29 |
| 178(03-21-18)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 1998.10.26 |
| 195(08-21-19) | 정부 조직개편의 신속한 마무리        | 1999. 3. 9 |
| 202(08-21-20) |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의 원활한 추진     | 1999. 3.23 |
| 214(03-21-21) | 추경예산의 원만한 국회심의와 차질없는 집행 | 1999. 3.29 |
| 215(03-21-22) | 2000년 예산편성 방향           | 1999. 3.27 |
| 216(08-21-23) | 차질없는 공공부문 개혁추진          | 1999. 3.27 |
| 233(03-21-24) |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 1999. 4. 1 |
| 291(08-21-26) | 과학기술 발전여건 조성촉진          | 1999.11. 4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75(08-21-27)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조기발족          | 2000. 6.28 |
| 535(03-21-29) | 금년도 예산집행 철저             | 2001. 9.11 |
| 598(03-21-30) |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2002. 5. 3 |
| 48(08-70-03)  | 경제정책 관련 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64(08-70-25) |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            | 1999. 8. 3 |
| 282(08-70-29) | 2000년 예산 홍보 추진          | 1999. 9.21 |
| 284(03-70-30) | 국가채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홍보   | 1999.10. 4 |
| 298(03-70-31) |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1999.12.28 |
| 304(03-70-32) | 각 부처 업무보고시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53(03-70-37) |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            | 2000. 4.26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67(09-70-40) | 정부기능조정 추진               | 2000. 5. 9 |
| 384(03-70-43) |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준조세 경감     | 2000. 8.29 |
| 386(02-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2(03-70-46) | 4대부문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9.19 |
| 422(08-70-51) | 인사청탁 근절                 | 2001. 2. 6 |
| 515(03-70-52) |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관리           | 2001. 4.16 |
| 516(03-70-53)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지원      | 2001. 4.16 |
| 517(03-70-54) | 해외순방시 외자유치사업의 실현        | 2001. 4.16 |
| 525(06-70-58) |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       | 2001. 5.29 |
| 531(07-70-59) |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2000. 4.26 |
| 545(07-70-62)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 추진   | 2001.12.24 |

## 1) 豫算編成時 需要機關과의 對話 : 11(03-21-01)

- 금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각 부·처 및 시·도와 대화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임. 이런 기회를 통해 국가 재정사정과 수요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무리한 예산 요구 등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임('98. 3.26, 국무회의시)
  - 지자체 및 각계 대표와의 대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함. 서로의 입장과 설명을 듣고 양보하는 장이 되도록 각자가 정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철저히 할 것 ('98. 4.13, 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시)
  -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함
    -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결과에 승복할 것임 ('98. 4.13, 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시)
- 
- 예산자문회의 개최
    - '98년 3월 신설하여 연도별로 매년 2회 실시(3월, 9월)
    - 참석자 : 각 부 차관, 시·도부지사, 시민단체, 경제계·언론계 민간위원 등 49명
    - 내 용 :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각계 대표의 의견수렴 및 재정분배 원칙, 지역현안사업 논의 등
  - 예산정책연찬회 개최(매년 4월 실시)
    - 참석자 : 각 부·처·청 기획예산담당자 등 200여명
    - 내 용 : 행정·재정개혁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수요자와 함께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개최

## 2) 豫算節約 인센티브 制度 導入 : 25(03-21-02)

- 예산절약에 앞장설 경우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상응하는 보상이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할 것  
(‘98. 4.13,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서)
-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 마련
  - ‘98. 5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 ‘99. 2 예산회계법 개정
  - ‘99. 9 예산성과금 규정 제정
  - ‘01.12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성과금지급
  - ‘98.12 ‘98 성과금 지급 : 9개기관 43억원(127억원 절약)
  - ‘99. 8 ‘99 상반기 성과금 지급: 9개기관 42억원(323억원 절약)
  - ‘00. 4 ‘99 하반기 성과금 지급: 10개기관 68억원(18,164억원 절약)
  - ‘01. 4 ‘00 성과금 지급 : 16개기관 74억원(14,171억원 절약)
  - ‘02. 3 ‘01 성과금 지급 : 11개기관 22억원(10,300억원 절약)

## 3) 國民과 함께 하는 傘下團體 整備 : 27(03-21-04)

- 산하단체 정비와 예산편성 작업은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모두가 개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외국 자본의 참여·허용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임(‘98. 4.10,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서)

- 산하단체 정비관련 공청회 개최
  - 출연기관 : '98. 4.20, 5. 8
  - 공기업 : '98. 6. 9
- 인터넷·PC통신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98. 4~6)
  - 공기업 : '98. 4.27~5.30 실시, 445건 응답
  - 산하·유관단체 : '98. 5.29~6.14 실시, 547건 응답
- 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수시 개최
  - 전체회의 17회, 분과회의 25회
- 나라살림대화방을 통한 의견 수렴
  - 나라살림 대화방 운영 : 산하단체 정비 및 예산편성 관련 국민의견 수렴 ('98. 6. 1~7.31)
- 노조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 70여회

#### 4) 政府出捐研究機關 構造調整 強化 : 58(03-21-05)

-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노조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 각 부처도 협력하여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98. 5.13, 국무회의시)
- 출연연구기관에도 철저한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며, 민간연구소와도 경쟁해야 함('98.10.27, 국무회의시)

- 유사·중복기능 정비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98. 7)
  - '99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 20% 절감 조치
-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 ('98. 7)
  - 연구기관 예산중 기본연구비를 제외한 정책연구비는 구분하여 각 부처

- 예산에 계상 → 공공, 민간기관간 연구과제 경쟁 발주
-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특위 협의 3회 ('98. 9.11, 18, 25)
    -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조와 협의
  - 「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정('99. 1)
    - 연구회 설립 근거 마련
    - 기관장 공모제 및 자율·책임 경영체제 도입
    - 기관평가제도 도입 등
  - 5개 연구회(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연구회) 설립 ('99. 3)
    - 부처 소속의 출연연구기관 43개를 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 연구회를 통한 중복기능 조정 추진
    - 매년 기관평가를 실시, 기관장 연봉 및 예산 차등지급 등

## 5) 公企業豫算 早期執行 : 60(02-21-06))

- 공기업예산도 이를 조기에 집행하도록하여 일자리 창출·중소기업지원 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하여 주기 바람('98. 5.13, 국무회의시)
- 추진계획 개요
    - 정부투자기관의 공공투자사업이 조기집행되도록 정부예산 조기 배정
    - 공공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회사채 적기 인수
  - 추진내용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예산을 '98. 3/4분기까지 배정완료

| 기 관 명     | 계(억원)  | '98상반기 | 3/4분기 |
|-----------|--------|--------|-------|
| 도 로 공 사   | 12,979 | 7,174  | 5,805 |
| 수 자 원 공 사 | 5,455  | 5,455  | -     |
| 농어촌 진흥공사  | 170    | 100    | 70    |
| 계         | 18,604 | 12,729 | 5,875 |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투자기관의 회사채 6,766억원을 상반기에 인수('98. 6.30)
- 담배인삼공사
  - '98. 6.16 예산 조기집행 협조공문 시행
  - 예산조기집행실시('98. 3/4분기까지 사업비의 98.2% 집행)
- 한국조폐공사
  - '98년 사업집행 498억원(추정)중 360억원을 상반기중에 집행(72%)

## 6) 事業完成 爲主의 豫算編成 : 134(03-21-07)

○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자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추진중인 사업의 완성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것 ('98. 8.11, 국무회의시)

- 사업완공 위주로 예산편성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우선 지원

※ 신규(50억원 이상) 및 완공(300억원 이상) 사업 비교 (억원)

|                | '98           | '99          | '00           | '01            | '02           |
|----------------|---------------|--------------|---------------|----------------|---------------|
| · 신규사업<br>(개소) | 2,436<br>(11) | 528<br>(4)   | 4,926<br>(11) | 6,891<br>(9)   | 2,247<br>(16) |
| · 완공사업<br>(개소) | 4,650<br>(6)  | 8,939<br>(7) | 8,705<br>(12) | 23,515<br>(19) | 5,872<br>(14) |



## 7) 農政豫算 編成方向의 改善 : 135(03-21-08)

- 농어촌예산 편성방향을 생산기반확충 위주에서 물류·유통개선 위주로 전환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98. 8.11, 국무회의시)
- '99년 예산 편성시 농·수산물의 제값 보장을 통한 실질소득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유통부문에 집중투자 : 4,471 → 7,175억원(60.5% 증가)
  - 투·융자예산중 유통부문 비중확대 : ('98) 7% → ('99) 15%
  - 농축산물유통개혁을 집중적으로 강화 : 3,096 → 5,488억원(76.9% 증가)
  - 임·축산물의 직거래 확충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신규시설 지원을 확대(538억원)
    - \* 생산기반조성 투자 축소: 42,773 → 35,753억원(16.4% 감소)
- 2000년 예산 편성시에도 유통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물류·유통의 활성화 기반 조성 : 7,175 → 10,640억원(48.3% 증가)
  - 투·융자예산중 유통부문 비중확대 : ('99) 15% → ('00) 20%
    - \* 생산기반조성 투자 축소: 35,753 → 33,414억원(6.5% 감소)

## 8) 中小企業 支援 強化 : 141(03-21-09)

- 농어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99년 예산은 경쟁력 있고 자구노력을 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것 ('98. 8.27, '99예산 중간보고시)
- 중소기업 지원 : '98년 대비 9.2% 증액('98년 39,931억원 → '99년 43,613억원)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분야 지원 확대 : 37.7% 증액(10,056억원 → 13,846억원)

(억원)

| 구 분                | '98    | '99    | 증감    |      |
|--------------------|--------|--------|-------|------|
|                    |        |        |       | %    |
| 합 계                | 10,056 | 13,846 | 3,790 | 37.7 |
| ▪ 산업기술개발 지원        | 7,049  | 7,553  | 504   | 7.1  |
| ▪ 무역, 수출, 외국인투자 지원 | 1,336  | 2,218  | 882   | 66.0 |
| ▪ 지역산업진흥 지원        | -      | 120    | 120   | 순증   |
| ▪ 정보화 지원           | -      | 217    | 217   | 순증   |
| ▪ 기타 중소기업 지원       | 899    | 994    | 95    | 10.6 |

-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내실화 : 0.4% 감액(29,875억원 → 29,767억원)

(억원)

| 구 분               | '98    | '99    | 증감     |       |
|-------------------|--------|--------|--------|-------|
|                   |        |        |        | %     |
| 합 계               | 29,875 | 29,767 | △108   | △0.4  |
| ▪ 신용보증 지원         | 13,000 | 12,900 | △100   | △0.8  |
| ▪ 수출보험기금 지원       | 4,000  | 3,000  | △1,000 | △25.0 |
| ▪ 중장기금 및 산기반기금 지원 | 11,025 | 13,067 | 2,042  | 18.5  |
| ▪ 공제사업, 어음보험 등 지원 | 1,850  | 800    | △1,050 | △56.8 |

## 9) 社會間接資本 投資의 效率性和 인센티브 強化 : 142(03-21-10)

-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 '98. 8.27, '99예산 중간보고서)

- 종전 민자유치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민간투자제도의 틀을 재정비('99. 4. 1)
  - 1종 및 2종 시설구분에 따른 투자방식 제한을 철폐
  -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환리스크에 대한 보전
  - 민자관련 One-stop 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 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조치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100→300→1,000억원)
- 민간투자지원을 위한 인프라펀드 설립(약 3,400억원 규모)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10) 文化産業 및 觀光産業 지원 強化(03-21-11)

- 문화산업은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산업이며 외화가득율이 높은 산업이므로 적극 지원할 것
  - 전통문화를 적극 개발하고 국제회의 유치 등도 힘쓸 것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할 것 ('98. 8.27. '99예산 중간보고서)

- 문화산업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대 지원
  - '99. 9월에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02.12월 말 현재 2,225억원 조성)
  - 「영화진흥공고」에 1,500억원의 정부출연 실시('99~'03)
  -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01. 8)하고, 인력양성, 마케팅활성화 등에 '02년 500억원, '03년 550억원 지원
  - 최근 5년간 문화산업 예산 지원 실적  
( '99) 1,001 → ( '00) 1,787 → ( '01) 1,475 → ( '02) 1,958 → ( '03) 1,890억원
-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에 적극 지원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총사업비 5.4조)」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총사업비 2.2조)」에 '00~'03에 각 2,293억원, 1,378억원의 예산을 지원

- 생태·녹색관광개발 등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육성·개발을 위하여 '02 예산에 712억원, '03예산에 864억원의 예산을 지원
- 「한국방문의 해」('01~'02)로 설정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전통축제의 세계적 관광축제 개발·육성,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공예품 등 관광상품의 제작·판매 등에도 예산을 확대 지원
- 최근 5년간 관광산업 예산 지원 실적  
( '99) 789 → ( '00) 1,057 → ( '01) 1,912 → ( '02) 2,189 → ( '03) 2,475억원

## 11) 公務員 報酬體系 再檢討：144(03-21-12)

- 단계적으로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할 것
-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포상 등 명예도 부여하도록 할 것
- 근무성적 평가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성과급이 온정주의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열심히 일한 부서와 직원들이 받도록 해야할 것('98. 8.27, '99예산 중간보고서)

-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과 실적 위주로 개편
  - 3급 국장급이상 에 대해서는 '99. 1월부터 연봉제 실시
    - 직위비중, 책임도, 업무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연봉범위 설정
  - 과장급이하 는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제도 실시

|               |                    |                    |              |
|---------------|--------------------|--------------------|--------------|
| <u>상위 10%</u> | <u>10%초과 40%이내</u> | <u>40%초과 90%이내</u> | <u>하위10%</u> |
| 월 기본급의110%이상  | 80%                | 40%                | 0%           |

## 12) 地域 懸案事業 管理 徹底 : 146(03-21-13)

- 각 지역의 신규사업 소요가 많은 줄 아는데 철저히 완공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기 바람
- 광역지자체장 회의시 예산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것('98. 8.27, '99예산 중간보고서)

## ○ 사업완공 위주로 예산편성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내 완공을 위한 연차소요 우선 지원

※ 신규(50억원 이상) 및 완공(300억원 이상) 사업 비교

(억원)

|        | '98   | '99   | '00   | '01    | '02   |
|--------|-------|-------|-------|--------|-------|
| · 신규사업 | 2,436 | 528   | 4,926 | 6,891  | 2,247 |
| (개 소)  | (11)  | (4)   | (11)  | (9)    | (16)  |
| · 완공사업 | 4,650 | 8,939 | 8,705 | 23,515 | 5,872 |
| (개 소)  | (6)   | (7)   | (12)  | (19)   | (14)  |

## ○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 일 시 : '98 ~ '02, 9월초
- 참석자 : 16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예산처 관계자 등
- 내 용 : 예산편성방향 및 지역현안사업 논의

## 13) 豫算執行 評價 徹底 : 148(03-21-14)

-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가 있는지 집행결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사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할 것('98. 8.27, '99예산 중간보고서)

- 원활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집행상황 집중점검
  - '99년 상반기중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280개의 주요투자사업을 선정하여 11차에 걸친 「예산집행상황특별점검단회의」 개최
  -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01년 하반기중 10회, '02년 13회의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 출연연구기관 고가장비 도입·이용실태 조사 용역실시('99. 7.21~8.27)
- 주요재정사업을 선정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출장, 부진사유 파악 및 해소대책 수립
  - '99년 200개 사업, '00년 310개 사업, '01년 및 '02년 300개 사업선정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 부진사유 파악 및 해소대책 등을 수립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참고
- 주요점검사업 및 정책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행상황을 조사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 '98, '99년 30개 사업, '00, '01년 20개 사업, '02년 30개 사업을 선정

#### 14) 中期財政計劃 樹立 : 154(03-21-15)

-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금년말까지 수립해 주기 바람
- 이를 통해 경제운영 및 집행을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침이 되도록 할 것('98. 9.24, 국무회의시)

- 세출분야,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 10대 분야별 투자계획 심의('98.10. 1~28)
- KDI연구용역 결과 발표('98.10.15)
- 의견수렴 및 중기재정계획 발표
  - 중기재정 운영방향 세미나 개최 ('98.11.13)
  - 각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98.11.17~18)
  - 3당합동 경제협의회 보고('98.11.24)
  - 경제장관간담회 및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 개최('98.12.24)
  - 국무회의 보고 및 중기재정계획('99~'02) 발표('99. 1.19)

## 15) 基金 整備 方案의 樹立 : 155(03-21-16)

- 각종 기금이 부처 편의에 따라 그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용
  - 범부처 차원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수립·보고해 주기 바람('98. 9.29, 국무회의시)
- 1차 기금 정비 실시(기금관리기본법 개정, '99.12.31)
    - 11개 기금 폐지, 8개기금을 3개로 통폐합
      - 폐 지 : 과학교육, 진폐, 도서관·독서진흥, 임업진흥, 재외동포, 새마을국민, 서울대병원, 방송문화진흥, 기능장려, 교통안전, 한국장학
      - 통폐합 : 공공자금+국채관리→공공자금관리, 과학기술진흥+과학재단+과학기술문화→과학기술진흥, 농수산물가격안정+종자+인삼산업진흥→농수산물가격안정
    -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9개 기타기금의 공공기금화
  - 2차 기금 정비 실시(기금관리기본법 개정, '01.12.21)

- 5개 기금 폐지, 6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
  - 폐 지 : 우체국보험, 염안정, 새마을금고안전, 도로교통안전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통폐합 : 참전기념사업+보훈→보훈, 산업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산업기반+중소기업창업및진흥→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을 폐지하여 “기금”으로 일원화

< 연도별 기금수 현황 >

| 연도별 | '99 | '00 | '01 | '02 |
|-----|-----|-----|-----|-----|
| 기금수 | 75개 | 61개 | 61개 | 58개 |

※ 법률구조기금('03. 1), 국민투자기금('03. 4), 국제교류기금('04. 1) 등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

## 16) 政府經營診斷의 效率的 推進 : 156(09-21-17)

- 부처간 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전부처로 확대한 것은 잘한 일임
- 경영진단은 정부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그 결과가 정부기능 재조정 및 효율화로 연결되어야 함('98. 9.29, 국무회의시)

- 경영진단기관 선정('98.10.21)
  - 민간전문가, 각 부처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
- 경영진단 개시('98.11. 2)
  - 중앙정부 17부·2처 4위원회를 9개 분야로 분류하여 진단하고, 지방정부는 시범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진단



- 경영진단 최종보고서 접수('99. 2.28)
- 경영진단에 근거한 기능 재조정을 통해 정부효율성 향상

## 17) 地方交付稅의 法定交付率 上向調整 : 178(03-21-18)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배분방식을 개선할 것  
( '98.10.26, 행자부 업무보고서)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99.12.28)
    -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 내국세의 13.27% → 15.0%
  - 지방교부세 규모 증가 : '99, 6.7조원 → '00, 7.7조원 → '02, 12.0조원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연구용역 실시('99. 6.15~8.20)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99.12.28)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단순화  
(29항목 47세항 → 12항목 28세항)
    - 과표 현실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8) 政府組織改編의 迅速한 마무리 : 195(08-21-19)

- 4대부문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이 뒤처지고 있으며,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와 관료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혁은 필연적인 시대의 요구임
  -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충분한 의견수렴후 정부안을 만들어야 함
  - 특히 정부내 논의과정에 양당 정책위의장을 참여시켜 공동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 주기 바람('99. 3. 9, 국무회의시)
- 정부조직개편방안은 기구의 축소·확대도 중요하지만 기능조정을 통해 국정을 원활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

- 정부운영 및 기능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99. 3. 8)
-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 마련('99. 3.23)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공포('99. 5.24)
  - 경제정책 조정 및 예산기능 보완
    - 경제정책조정회의 신설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 신설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 효율적인 국정홍보기능을 위한 국정홍보처 신설
  - 집행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 제도신설

## 19) 政府運營 및 機能調整의 圓滑한 推進 : 202(08-21-20)

- 이번에 수립한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은 국가운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임
- 이제 공직사회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국무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함
- 국무위원들은 민간의 건의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야 하며, 그 책임자로서 확실히 실천해야 함
- 이와함께 국민권리 침해사항이 쉽게 구조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구제제도를 확충해야 함('99. 3.23, 국무회의시)

- 경쟁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임용제 도입
- 능력·성과에 의해 평가하는 성과관리제 도입
-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을 책임운영기관화
-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
  - 사이버토론회, 사이버브리핑, 인터넷신문고 등
- 국세심판기능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99. 5)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대상 확대('99. 7)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강화 및 구제대상 확대('99.12)
-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20) 追更豫算의 圓滿한 國會審議와 蹉跌없는 執行 : 214(03-21-21)

- 추경예산의 원만한 국회심의와 차질없는 집행
    -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실업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현재 180만명인 실업자가 하반기에는 150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람('99. 3.29, 재경부·기획위 국정보고서, '99. 3.30, 국무회의시)
- 추경예산(안) 국회심의회 차질없게 대응
    -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대로 의결되도록 국회심의회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국회 통과('99. 4.27)
  - 국회통과후 예산·자금 배정계획을 조속히 작성하고 국무회의에 상정
    - 추경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예산·자금 배정계획을 조속히 작성·확정
    - '99. 5.11 예산·자금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하여 추경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
  - 추경예산사업이 원활 집행되도록 점검
    - 추경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점검 추진
      - 실업대책 관련 예산사업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소관 부처에서 원활한 집행이 되도록 독려
      - 총리실 실업대책기획평가단에서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정부지원인턴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집중점검을 실시
  - '99년 4/4분기 실업률 4.6%(101만명), 연중 실업률 6.3%(135만명)

## 21) 2000년 豫算編成 方向 : 215(03-21-22)

- 2000년 예산은 지식, 정보, 문화, 관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치중하는 예산이 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모든 산업을 지식산업화하고, 모든 국민을 신지식화를 촉진해야할 것임
-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중에 하나는 전국 광역단체의 시장, 도지사를 초청하여 공개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배분해 준 것임
  - 이러한 점을 살려 금년에도 더욱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람 ('99. 3.27, 기획예산위 국정개혁보고 회의시)

- 예산정책토론회 개최('99. 6.22~ 7.15)
  - 벤처·중소기업, 교육, 농어촌, SOC, 문화관광, 정보·신지식, 생산적 복지 등 7개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99. 9. 7)
  - 기획예산처 장관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
- 수요자와 함께 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자문회의 개최('99. 9.16)
- 21C 지식기반사회 대비하여 지식·정보·기술·문화예산을 집중지원하고 미래 신인력 양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둔 2000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99.10. 1)하여 국회에서 2000년 예산 최종확정('99.12.18)

## 22) 蹉跎없는 公共部門 改革推進: 216(08-21-23)

- 정부조직 축소에 이어 기능조정을 했음. 미비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앙정부가 2001년까지 25,90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산하기관이 2001년 까지 60,696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함 ('99. 3.27, 기획예산처 국정개혁보고회의시)
- \* 제1차 정부조직개편시('98. 2.28) 2000년까지 17,587명을 감축키로 한 것을 제2차 정부조직개편시('99. 5.24) 감축인원을 25,900명으로 확대하고 목표연도를 2000년에서→ 2001년 으로 조정
- \* 산하기관도 당초 2002년까지 60,696명을 감축키로 한 것을 '99. 3.27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2000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01년으로 조정

- 관리번호 392(03-70-46)의 “4대부문의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과제와 통합관리로 실적은 동 내용을 참조

## 23) 政府 研究開發豫算 擴大 : 233(03-21-24)

- 연구개발예산이 현재 3.5%이나 2002년까지는 정부예산대비 5%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하기 바람
- 먼 앞날을 내다보고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동시에 단기적인 과제해결도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9. 4.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 1998~2003년간 국가연구개발(R&D)예산을 정부예산대비 5%수준으로 대폭 확대

- 정부예산대비 R&D 투자 비중을 '98년 3.6%에서 '03년 4.8%로 확대
- 5년간 일반회계 평균증가율은 8.1%인 반면 R&D 예산은 매년 평균 14.5% 증가

(억원)

|          | '98     | '99     | '00     | '01     | '02       | '03       |
|----------|---------|---------|---------|---------|-----------|-----------|
| 일반회계(A)  | 755,829 | 836,851 | 887,363 | 991,801 | 1,096,298 | 1,114,831 |
| (증가율, %) | (13.3)  | (10.7)  | (6.0)   | (11.8)  | (10.5)    | (1.7)     |
| R&D (B)  | 27,024  | 31,055  | 36,433  | 42,690  | 49,556    | 52,987    |
| (증가율, %) | (△2.4)  | (14.9)  | (17.3)  | (17.2)  | (16.1)    | (6.9)     |
| * B/A    | 3.6%    | 3.7%    | 4.1%    | 4.3%    | 4.5%      | 4.8%      |

-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에 따라 유망분야에 집중 투자
  - IT·BT·N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에 전략적으로 집중투자  
(R&D 전체예산대비 29.6%, '03년 기준)
  - 다양하고 창조적인 선진국형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98) 18.5→('03) 19.5%로 확대
- R&D 예산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추진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
  - R&D 투자효율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업별 타당성·우선순위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철저히 분석한 결과 적정수준인 정부예산 대비 4.8% 반영
- ※ 2002년 예산요구사업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적 중복사업
  - : 계속사업 153개중 33개 사업, 신규사업 19개중 7개 사업

## 24) 科學技術 發展與件 造成 促進 : 291(08-21-26)

- 연구소 및 대학에도 계약제와 연봉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
  - 기획예산처는 과기부 등 기타 부처 소속 이공계 연구기관에 대해 실시 ('99.11.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 연구회 소속 이공계 연구기관의 계약제, 연봉제 도입 완료 ('99)
  - KDI, KIST, ETRI 등 연구회 소속 43개 출연연구기관 대상
  - 전직원을 계약제(3년단위)로 전환
  -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지급 실시
- 원자력(연) 등 과기부 소속 연구기관의 계약제, 연봉제 도입 완료 ('00. 3)
- 국방과학(연) 등 국방부 소속 연구기관의 계약제, 연봉제 도입 ('00.11)

## 25) 政府革新推進委員會 早期發足 : 375(08-21-27)

- 민간인들이 다수 참가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조속히 발족하여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자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00. 6.28, 공공부문 혁신대회시)

-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제정
  - 대통령령 초안마련('00. 5)
  -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의('00. 6)
  -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 제정 · 공포('00. 7.22)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00. 8.23)
  - 위원장, 정부위원 6명,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명
- 실무위원회 구성('00. 9.26)
- 점검평가특별위원회 구성('00.10.19)

## 26) 금년도 豫算 執行 徹底 : 535(03-21-2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는 집행상태를 보고</li> <li>-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시정('01. 9.11,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매월 2차례씩(10회) 개최
    - 재정활성화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그린벨트내 학교 신·증축, 택지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 융자금리 인하추진
  - 제1차 추경예산 및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상황 점검
  - 하반기 재정집행실적 발표 및 보고
    - 각부처별 상반기 및 3/4분기 예산집행실적 공표('99.10.10)
    - 경제장관간담회 보고('99.10. 8, 12. 6, 12.17)
    - 총리소속 기관장 회의 보고('99.10.31) 및 경제수석 보고('99.12.27)

## 27) 政府傘下機關의 效率的 管理方案 마련 : 598(03-21-30)

- 정부 산하에 500여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법적 근거나 기능, 규모 등이 다양하고 방만하게 운용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산하기관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02. 5. 3,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에 「정부산하기관 관리 효율화 방안」 보고 ('01. 8)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02. 5)
  - 사후 경영평가 시스템 도입, 방만경영 억제, 경영투명성 제고 등
- 관계부처 협의('02. 6~8) 및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 설명('02. 8)
  - 법 제정 필요성, 추진상황, 법안내용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 및 법제처 심의('02. 9~10)
-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 제출('02.10.18)

### 〈2002년도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 '02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시달('02. 1)
  - 상시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고객위주의 개혁에 역점 등
  - 기 계획된 경영혁신 과제 마무리 등 8개 분야 추진할 내용 예시
- 「'02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확정('02. 4)
  - 214개 기관, 2,880건 과제
- 분기별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02. 5, '02. 7, '02.10)
  - 3/4분기까지 추진계획(1,021건) 중 916건 완료(90%)
- '02 산하기관 경영혁신 이행실적 점검·평가('02.12~'03. 2)

## 28) 經濟政策關聯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정책의 혼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각 부처는 관련기관간 협의를 완료한 후 정책을 발표토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 등 유관 인사들에게도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li> </ul> </li> <li>○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알리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사후적인 홍보보다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함 ('00. 1.25,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 재정정책 및 공공개혁 등 주요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관련자료 사전배포 및 언론사 간부 등 여론주도층 인사에 충분한 사전 설명
    - '98. 4.28~'00.12.31까지 585건의 보도자료 배포(주 평균 4건)
    - 장·차관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주1~2회 실시
    - 주요정책 발표시 장·차관 방송출연 및 언론인터뷰 실시(매년 60여회)
    - 주요보도자료에 대해 학계, 언론계등 여론형성층 900여명에게 E-mail로 배포
  - 신문 및 방송 보도내용을 매일 점검하여 오보가 있을 시는 편집국장, 경제부장 등 관련 언론기관 인사에 적극 해명
    - 오보발생 사전 모니터링체제 시행(신문 가판기사 점검 및 해명자료 배포)
    - 보도자료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2회 교육 실시
  - 주요사안은 정책 입안단계부터 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홈페이지 등 의견 수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등 정책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수렴 실시

- 나라살림, 기금운용, 공공개혁백서 등 홍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간

## 29) 各 部處의 經費節減 勞力強化 : 137(03-70-08)

-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기바람 ('98. 8.11, 국무회의시)

### ○ 공공요금 절감

- 행정단일망 전화회선 생활화로 전화요금 절감('00. 7)
  - 행정단일망 사용 계도 : 3회('98. 7. 7, 7. 8, 10.26)
- 개인용 PC의 절전모드 상용화로 전기료 절감('00. 8)
- 사무기기는 절전형 기기로 구입하여 전기료 절감
- 동절기에 전열기등 전력 과다소모제품 사용 억제
  - 동절기 사용억제 계도 : 2회 ('99.10.13, '99.11.22)

### 30) 水害復舊關聯 大統領 指示事項：138(08-70-09)

- 8・15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거리행진을 취소하고, 동 행사 예산을 수해대책비로 전용하여 주기 바람
- 수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격려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 수해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각 장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수해대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98. 8.11, 국무회의시)
- 앞으로 똑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의하여 대홍수나 폭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근원적인 복구가 되도록 할 것('98. 8.17, 국무회의시)

- 수해현장 구호사업 등 추진
  - 수해복구현장 인력 지원：10명, 1일간('98. 8.14)
  - 수해 의연금 전달('98. 8.25)：250만원(KBS)

### 31) 컴퓨터 2000年 問題關聯：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98.11.23, 국무회의시)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 미국 고어 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부치 일본수상도 Y2K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여 각국이 찬성하였음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Y2K 문제 발생에 대비('99.12.28, 국무회의시)
  - Y2K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을 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
  - 특히, 국민들이 주의할 사항과 준비할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임

- Y2문제 대응체계 종합점검 완료 선언('99.12. 2)
  - 우리처 Home page를 통하여 Y2K문제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포
- Y2K Zero Day절차 시행
  - 목적：2000년 전환기간 중에 Y2K문제를 최종 점검하여 위험을 최소화
  - 실시기간：'99.12.30(목) 09:00 ~ '00. 1. 2(일) 24:00
  - 주요조치사항
    - 전산자료백업('99.12.30)
    - 문제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정보·비정보 자원에 대하여 자료백업을 실시
    - 시스템 Shut Down 실시('99.12.31)
    -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시스템에 대한 Shut Down 실시

- 최종확인 및 문제해결('00. 1. 1 ~ 업무시작일 전)
- Shut Down시킨 모든 시스템을 Power On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
- 문제발생시 즉시 해결
- 비상대책반 운영
  - 목적 : Y2K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업무상 피해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
  - 임무 : Y2K문제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대응조치  
Y2K문제상황을 행자부 Y2K비상대책반으로 통보(상황관리시스템 이용)
  - 운영기간 : '99.12.31(금) 12:00 ~ '00. 1. 3(월) 12:00
- 행정분야 Y2K 관련시스템 정상운영 선언('00. 1. 1)
  - 2000년으로 연도 전환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비정보 시스템의 Y2K 문제가 없음을 선언
  - 2000년 1월 3일자로 모든 Y2K 문제 완료

### 32)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99. 1.12, 국무회의시)
-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 목표관리제 및 근무성적평가지 능력과 실적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 포상, 성과급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시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학연, 지연 등의 특정인맥 집중을 지양
  - 신규채용, 전출입 등 인사교류시 특정인맥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
  -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향후 인력충원시 여성 및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 정보화, 어학, 신지식교육 등 다양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능력개발과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유도
  -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등을 통해 직원 복지수준의 실질적 향상 도모
- 보다 폭넓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

### 33) 徹底한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신속한 수해복구와 이재민 재기를 지원하고 수해 복구소요중 지방비 부담을 철저히 이행할 것  
(’99. 8. 3, ’99. 8.10, 국무회의시)

- 재해대책예비비 추경편성(’99. 8.11)
  - 1조 7,100억원(당초 6,700억원 + 추경 1조 400억원)
- ’99. 9.10 충청·영남지방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 총복구소요 883억원중 국고 616억원(69.8%) 지원, 지방비 227억원 부담
- ’99. 10월 중순 태풍(앤 및 바트) 피해복구 지원
  - 총복구소요 2,414억원중 국고 1,541억원(63.8%) 지원, 지방비 692억원 부담



### 34) 2000년 豫算弘報 推進 : 282(08-70-2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예산(안) 홍보 추진 및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 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며,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 있음</li> <li>-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 9.21, '99.10. 4, '99.12. 7,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홍보물 발간·배포
    - 「2000년 나라살림, 새천년을 준비합니다」('99. 9), 「희망의 새천년 첫 예산 알아봅시다」('99.10),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99.12), 「희망의 새천년을 열어가는 2000년 나라살림」('00. 2) 등을 발간·배포
  - TV, 신문 등 언론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홍보 강화
    - KBS, MBC, YTN 등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예산관계자들이 토론회, 뉴스, 인터뷰 등에 출연하여 예산 홍보('99. 9) 및 언론사 간부와의 정책 토론회 개최
    - 우리처 홈페이지(www.mpb.go.kr)에 '2000년 나라살림'과 부문별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 게재
  - 2000년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홍보
    - 추경내용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작성·배포('00. 6)
    - 우리처 홈페이지를 통한 네티즌 대상 홍보
    - 「나라살림」에 추경예산 내용 수록·홍보('00.10)

### 35) 國家債務 現況에 대한 正確한 內容 弘報 : 284(03-70-30)

- 언론에서는 국가채무를 보증채무까지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국가채무 이외에 국가채권에 대한 홍보 필요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99.10. 4, 국무회의시)

- 정책세미나 개최('99.10. 1)
  - 내용 : 국가 채권·채무의 현황과 대책
  - 대상 : 기획예산처 출입기자단
- 국내 주요 일간지에 국가채무 관련 홍보 실시('99.10.15)
  - 제목 : '나라빚, 위험수준 아니다'
  - 주요내용 : 정확한 국가채무 규모는 108조원('99년말 기준),  
국가채무의 정의, 향후 국가채무 관리방안
- 국내 일간지에 국가채무 현황에 대한 광고 게재('00. 3.16)
- '국가채무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홍보 자료 작성·배포(2차례)
  - 일자 : '99.10.25~12.31, '00. 3
  -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언론·금융·교육기관, 각종  
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등
- '국가채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도자료 작성·배포('01. 5. 4)
  - 주요내용 : 국가채무 정의, 국가채무 현황('00년말), 외국과의 비교 등

### 36) 中産層과 庶民生活安定에 主力 : 298(03-70-31)

-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고 예산도 편성되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99.12.28, 국무회의시)
-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배문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00. 1. 4, 국무회의시)
-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므로 관련부처가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바람('00. 9.26, 국무회의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 전국민의 기초생활 보장('03, 수급자 150만명)
  - 최저생계비 3%인상(4인기준 '02, 99만원 → '03, 102만원)
  -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03. 1)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확대(장애인, 학생 10~15% → 30%)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복지지원 강화
  - 저소득층 노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2.6~5만원/월)
  -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02, 980억원 → '03, 1,240억원)
  - 저소득층 보육지원 강화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02, 106천명 → '03, 119천명)
    - 만5세아 무상보육(86,982명) 및 취학전 장애아 무상보육(4,285명) 실시
  -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02, 990천명 → '03, 1,244천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02, 220억원 → '03, 263억원) 등 국민건강 증진

- 전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정착 지원
  - 국민연금 지원('02, 922억원→ '03, 1,079억원)
  - 건강보험 지원('02, 25,747억원→'03, 29,395억원)

### 37) 各 部處 業務報告시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중점 추진해야 할 국가과제
  - 4대부문 구조개혁 : 민주 시장경제 시스템 완비
  - 지식정보혁명 가속화 : 지식정보 강국 실현
  -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
  - 남북 협력사업 지원 :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공공부문 개혁
  -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경쟁과 성과원리 도입
    - 책임운영기관제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공무원 개방형임용제도 도입 등
  -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개혁추진
    -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추진
    - 공기업 민영화 실천

○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 전자정부를 앞당겨 열린 정부·투명행정을 실현
  - Cyber 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채널 구축 등
- 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 자율경영혁신, 민원 반으로 줄이기, 개혁 공감대 확산 등
- 재정운영을 복지사회구현에 중점 :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촉진, 교육·정보화·R&D 투자 확충 등

### 38) 國家資産의 效率的인 管理 : 353(03-70-37)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자산을 내 것과 같이 아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국가자산 관리에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수입을 늘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00. 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각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부동산의 생산적 활용 협조 요청(‘00. 5)
- 공공부동산의 생산적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00. 7),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00.10)
- 청주합동청사 건립(‘01.11.29)
  - 노동, 보훈, 통계 등 3개 기관 입주
- 춘천합동청사 착공(‘01.11. 6)
  - 법무, 노동, 환경, 보훈, 통계 등 5개 기관 입주
- 남대문세무서 부지를 부동산신탁방식으로 개발 추진(‘01.12~‘02.12)
  - 분양형개발신탁 가능성 여부 확인·검토(‘02. 2~6)
  - 향후 객관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 39)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을 위하여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li> <li>-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 · 보고해 주기바람('00. 5. 9, 국무회의시)</li> </ul> </li> </ul> |
|--|
- Cyber 공간을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00. 5)
    - 공공부문 개혁 포털사이트 구축
      - “사이버 신문고”, “이달의 개혁테마”, “개혁 되돌아보기” 코너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발표 기회 확대
  - 예산업무 정보망 구축('00. 5)
    - 52개 전부처를 정부고속망으로 연결하여 예산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 처리
  - 지식관리 시스템 개통 · 운영('00. 3)
    - 생산된 모든 지식 및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하여 전직원이 공유
  - 시민단체와 함께 7대 민생분야 집중개선
    - 시민참여 핵심민생 개혁과제 추진
      - “시민제안심의회”를 거쳐 식품, 위생, 주택, 건축, 노동, 복지, 교육, 환경, 경찰, 교통 등 7대 핵심민생 분야 선정('00. 6.19)
      - 시민단체와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17개 핵심민생개혁과제의 추진방안을 확정('00.10.19)하여 추진
  - 공공부문 개혁확산 · 모범사례 전파
    - 정부개혁포럼 개최('00. 5.15~5.18) :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 '00년도 공공부문 혁신대회 개최('00. 6.28), 사이버 국민제안대회 개최('00.10. 9) 등

#### 40) 政府機能 調整 推進 : 367(09-70-40)

- 정부기능조정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시대변화에 맞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람
-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부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
- 교육은 과거와는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교육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함.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함
- 여성부의 경우도 여성들이 이미 사회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섬세한 감각과 치밀함을 갖춘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국가적인 주요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하는 것임
- 청소년 분야를 여성부가 함께 관장할 것인지의 문제도 국무위원들이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기 바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설치·운영('00. 2~6)
  - 전문연구기관 외부용역('00. 3~4)
  - 정부기능조정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00. 5. 8)
-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공포('01. 1)
  -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경제부총리제 신설
  -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부총리제 신설
  - 여성정책기능의 간화를 위해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 개편

#### 41) 企業에 대한 規制緩和와 準租稅 輕減 : 384(03-70-43)

- 최근 정부와 경제단체간의 대화에서 기업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있고 준조세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준조세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음. 이는 경제 경제발전의 저해요소임
- 특히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준조세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음. 기업인들이 기업을 자유롭게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00. 8.29, 국무회의시)

- 전경련 등 사업자단체로부터 준조세 정비방안 접수('00.10)
  -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00.12)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01.12)
      -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부담금 신설심사 등을 위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을 통한 운용에 대한 통제장치 구축
    - 중복성 부담금 등 12개 기금의 폐지·통폐합을 통한 기업의 부담완화
      - 통·폐합(4개→2개, '02. 1. 1) :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대체조림비→대체조림비
      - 폐지(9개, '02. 1. 1)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교통안전분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방조제관리비, 수자원시설 수익자부담금, 수자원시설손괴자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의료보험사업자 부담),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 \* 표시 부담금은 2004. 1. 1일 폐지 예정
- 징수유예(1개) :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 : '02. 1. 1일부터, 수도권 : '04. 1. 1일부터)



## 42)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 수개월 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 9.19, 국무회의시)

- 감사원 지적사항 등 방만경영 개선방안 강구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평가
    -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계획 수립·제출('00.10)
    -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평가단」 구성 및 점검·평가 ('01. 1, 제5차 정부혁신위 보고)
    - 평가결과, 미개선과제는 '01년 경영혁신과제로 추진토록 조치('01. 3)
  -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2001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00.10)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 구조조정 추진실적 관련 평가지표의 가중치 상향 조정('00.10)
- 개혁성과와 예산의 연계
  - 경영혁신실적을 반영하여 2000년도 공기업 인건비 예비비 차등지급, 평가결과 부진기관에 대해 2002년도 출자금, 출연금 등 정부예산지원 조정 반영('01)
  - 개혁성과를 예산에 반영
    - '00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감사원지적사항 이행실적을 반영('01. 6)

#### 43) 4大部門 改革의 蹉跎없는 推進 : 392(03-70-46)

-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을 '01. 2월까지 완성해서 안정속에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함('00. 9.19, 국무회의시)
- '01. 2월말까지 개혁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후부터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개혁을 해나가야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01. 1.22, 국무회의시)

- 공공부문 인력감축
  - '98~'01년까지 141천명의 공공부문 인력감축
    - 중앙정부 22.4천명 인력감축
    - 지자체 56.6천명, 공기업 41.7천명, 산하단체 20.6천명 인력감축
- 공기업 민영화
  - 11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8개사
    - 한전, 지역난방,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 추진중
- 공기업·산하기관 방만경영 쇄신
  - 방만경영사례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00. 1),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미 개선사례는 '01년 경영혁신과제로 추진토록 조치('01. 3)
  - 퇴직금누진제 개선
    -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9개 기관 등 219개 경영혁신대상기관 및 37개 공공금융기관 모두 개선완료

○ 민생개혁과제의 발굴·추진

－ 준조세 정비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부담금 부과실태·규모 등을 국민에 공개

－ 핵심민생개혁과제 선정·개선

- 교육, 환경 등 7대분야 17개 과제 선정, 15개 과제 개선방안 심의·확정

#### 44) 人事請託根絶：422(08-70-51)

-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 학연, 친소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

- 전 국무위원들은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며,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  
(‘01. 2. 6, 국무회의시)

-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인사청탁소지 근절

－ 인사청탁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02. 1. 2)

－ 지연, 학연, 친소관계등을 배제한 균형잡힌 인사를 실시

-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01.12.27)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 마련

－ 부처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

－ 전보인사기준을 공표하는등 인사운영에 대한 객관적 기준 정립

－ 전문직위제 도입(‘02.10.28)등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노력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 동호회 구성, 직원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 사기진작 도모

-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방안 수립

- 다면평가 등 각종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인사와 관련된 처내 의견수렴을 보다 활성화

#### 45) 地自體 財政浪費 徹底管理 : 515(03-70-52)

- '02년은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 자치단체들이 건물 신축, 국제행사, 경기 유치 등 전시성 행사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01.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공공시설 건립시 타당성조사 의무화 및 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
  - 지자체 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시 타당성조사 의무화
    - 타당성조사 근거조항 신설(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01. 9, 행자부)
  - 공공시설 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
    - 표준면적 산정기준 마련 용역실시('01.12~'02. 5, 행자부)
    - 지방청사 표준면적산정기준 지자체 통보('02. 8, 행자부)
- 재정패널티제 도입
  - 지자체의 위법사항 등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패널티제 도입(지방교부세법 개정, '01.12, 행자부)
-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비
  - 지자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마련('01. 5), '02년 예산에 동 정비방안을 반영하여 총 12개 소관 125개 국고보조사업 정비

#### 46) 地自體 特性에 맞는 事業開發 支援 : 516(03-70-53)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01.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4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 대구 섬유산업('99~'03), 광주 광산업('00~'03), 부산 신발산업('00~'03), 경남 기계산업('00~'04)
  - '01, 2,775억원, '02, 2,318억원 국고 지원
- 3대권역 9개 시·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01. 5~12)를 통하여 신규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지원
  - 대전·충남·충북 권역 : 전자, 생물(의학·동물자원)
  - 전남·전북·제주 권역 : 자동차 부품, 기계, 생물(자생식물, 농업)
  - 울산·경북·강원 권역 : 자동차, 전자, 생물(의료, 환경)
  - '02년 692억원, '03년 1,936억원 등 '06년까지 11,067억원 국고 지원 계획

#### 47) 海外巡訪時 外資誘致事業의 實現 : 517(03-70-54)

- 민자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경우 수입도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럽, 캐나다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은 금년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01. 4.1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 투자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 등으로 선정하여 관리
  - MOU체결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01. 4)

- MOU체결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가관리사업에 대해 사업유형별로 사업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02. 5)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별 애로요인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
- SOC 민간투자지원단회의 및 실무자급 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 추진현황
  - 직접투자에 의한 지분참여의 경우 부산신항만 1,170억원, 송도만수하수처리시설 254억원 등 12개사업에 총 6,728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추진중임
  -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조달은 대구부산고속도로 1,200억원, 대전천변고속도로 1,385억원 등 6개사업에 총 7,652억원 규모가 추진중임

#### 48) 2002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 525(06-70-58)

-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하여 각 부처는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01. 5.29, 국무회의시 )
  - 월드컵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  
( '01. 8.14, 국무회의시 )
- 성공적인 월드컵개최를 위한 재정 지원 : 6,831억원
    - 경기장건설 지원 : 4,817억원(국고 2,714억원, 기금 2,103억원)
    - 경제·문화·안전·환경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적극 지원

- 총지원액 : 1,910억원(문화 338억원, 환경 1,026억원, 기타 546억원)
- 외빈초청, 국가홍보, 경찰의 안전활동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104억원)
- 경기개최지역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 등을 통해 행사준비에 철저
  - 부산, 인천, 광주 등 10개 월드컵 개최지역에 대한 수차례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개선조치 시행('01~'02)
  - 월드컵경기대회개최와 관련한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

#### 49) 電子政府事業의 蹉跎없는 推進 : 531(07-70-58)

- 지식정보화혁명은 새천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도 전자정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00. 4.26, 대통령 업무보고서)
-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우리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애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할 것('01. 4.16, 대통령 업무보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G2B 시스템 활성화 혁신계획(BPR/ISP) 수립 용역완료('02. 1)
  - G2B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02. 4)
  - G2B 시스템 구축완료 및 서비스 개시('02. 9)
-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
  -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구성('00. 6~8)
  - G4C 혁신계획(BPR/ISP) 수립 용역 완료('01. 6)
  - 1단계 서비스 개시 ('02. 2)
    - 민원안내(1,000여종) 및 50여종의 전자적 민원처리서비스
  - 2단계 서비스 개시 ('02. 4)

- 민원안내(2,000여종) 및 143종의 전자적 민원처리서비스
- 본격 서비스 개시 ('02.11)
  - 민원안내(4,000여종) 및 393여종의 전자적 민원처리서비스
  - 주민등록, 호적 등 20종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 향후 G2B 및 G4C 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추진

## 50) 電子政府具現을 위한 法令整備 早期 推進 : 545(07-70-62)

-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 개선된 행정 프로세스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으려면 관계법령의 정비와 필수적이므로, 법령 정비를 조기에 추진해야 할 것('01.12.24, 전자정부구현 종합점검회의시)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들을 조기에 개정하여 전자정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02. 5. 7, 국무회의시)

- G2B 관련 법령 개정시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지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완료 (개정 : '02. 7.30, 시행 : '02. 9.30)
    - 종전 관보나 신문에 의하던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토록 의무화(제33조)하여 조달단일창구 실현
    - 전자입찰의 법적 지위를 강화(제39조)하여 오프라인 입찰을 배제한 전자적인 방법만 가능한 전자입찰 집행 허용
    - 부정당업자제재통보 및 게재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의무화(제76조)하여 업체정보 관리 체계화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총계약실적 보고 의무화(제94조)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완료 (개정 : '02. 7.30, 시행 : '02. 9.30)
    - 복수 계약자 선정을 통해 공급과정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을 유도(제



7조의 2)할 수 있는 복수물품 경쟁계약제도 도입

- 수요물자 대금의 수요기관 직접 지불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수요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지급 가능(제12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개정 : '02. 8.24, 시행 : '02. 9.30)
  -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의 각 공공기관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1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완료 (개정 및 시행 : '02.11.29)
  - 지역제한 입찰의 예외없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의무화(제70조)
  - 부정당업장제재통보 및 제재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의무화(제71조)하여 업체정보 관리 체계화

# 國務調整室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4(09-11-01)  | 실업대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점검      | 1998. 4. 6 |
| 28(09-11-02)  | 신속한 규제철폐               | 1998. 4.14 |
| 67(09-11-03)  | 규제정비계획 재수립             | 1998. 6.17 |
| 147(03-11-04) | 과감한 규제정비를 통한 예산절감 철저   | 1998. 8.27 |
| 174(09-11-05) |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재입법 추진   | 1999. 1.12 |
| 197(02-11-06) | 국정혼선의 방지               | 1999. 3.16 |
| 238(06-11-07) |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추진에 대한 지원    | 1999. 4.12 |
| 265(09-11-08) | 규제개혁 성과의 점검            | 1999. 8.10 |
| 269(09-11-09) | 장애인 관련법 단일안 마련         | 1999. 8.24 |
| 289(09-11-10) | 안전의식 강화의 전기 마련         | 1999.11. 2 |
| 290(08-11-11) | 과학기술발전 여건 조성 촉진        | 1999.11. 4 |
| 297(09-11-12) | 규제개혁 입법 추진             | 1999.12.21 |
| 376(09-11-13)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2000. 6.28 |
| 390(09-11-14)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 2000. 9.19 |
| 391(09-11-15) | 현장, 지방 중심의 규제개혁        | 2000. 9.19 |
| 411(09-11-16) | 반부패 대책 마련              | 2001. 1. 9 |
| 492(09-11-17) |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추진      | 2001. 3. 5 |
| 537(09-11-18) | 테러예방대책 마련              | 2001. 9.25 |
| 588(05-11-19) |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 2002. 3.27 |
| 601(09-11-20) | 포스트월드컵 대책 마련           | 2002. 6.25 |
| 605(09-11-21) | 8.15경축사 후속대책 추진        | 2002. 8.19 |
| 158(09-70-13) |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마련      | 1998.10.12 |
| 543(09-70-61)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 2001.11.27 |

## 1) 失業對策資金의 效率的 執行點檢 : 14(09-11-01)

- 실업대책은 주관부처와 지자체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자금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98. 4. 6, 국무회의시)

- 실업대책위원회 설치('98.12. 4)로 정부 실업대책 종합·조정
  -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재정·행자·복지·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실업대책사업의 종합·조정
  - '98.12 ~ '99. 9까지 7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99종합실업대책, 각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추진계획, 실업대책 강화방안 추진계획 등을 심의
    -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조정기능 강화
- 실업대책기획평가단 설치('99. 1. 4)로 상시 점검·평가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 노동부, 행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실업대책 기획평가단을 설치, 상시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공공근로, 직업훈련, 한시생활보호, 정부지원인턴제 등 주요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
- 경기회복과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자 감소('99. 2. 178만명 → '99.11. 97만명)
- 실업대책사업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
  - 공공근로대상자 선발제도, 임금단가 조정
  - 실업 D/B 조기구축을 통한 부적격차 참여배제 및 이중수혜 방지 등
    - ※ '00년 5월 이후 실업률의 하향 안정추세와 업무조정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실업대책기획단을 해제('00.10)하고, 실업대책사업의 종합·조정 기능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관하여 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02.11)

## 2) 신속한 規制 撤廢 : 28(09-11-02)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조속히 철폐할 것('98. 4.14, 국무회의시)
- 입법사항을 제외하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항은 각부 장관 책임하에 신속히 시행토록 할 것('98. 6.17, 국무조정실장 보고서)

- '98. 6월까지 자체정비계획을 수립·제출토록 35개 전 부처청에 시달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규제,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등 법령 미근거 규제는 '99. 1. 1부터 자동 실효되며, 향후 법령 미근거 규제를 운용시 담당자의 문책방침 시달
- 기존규제 일제 정비
  - '98.10월까지 전문가 심사소위(48회) → 분과위원회(46회) → 전체위원회(9회) 심의 등 3단계에 걸쳐 총 103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별 정비계획 집중 심사·조정
  - 전체 10,968건의 규제중 3,681건(33.6%) 폐지, 3,263건(29.7%) 개선
  - 위원회에서 확정된 규제개혁사항 중 법률개정과 관계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만으로 정비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완료토록 각 부처에 시달
- 법령미근거규제 일제 정비
  - '98. 6.2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609건의 법령미근거규제를 발굴, 1,013건을 폐지하고 596건은 법령·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자체정비계획 제출
  - '98. 6.24 각급 행정기관에 법령미근거규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차 강조

- 231건의 법령미근거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총 1,840건 중 1,534건(83.4%) 폐지, 306건(16.6%) 근거 마련

### 3) 規制整備計劃 再樹立 : 67(09-11-03)

- 각 부처에서는 금년내에 기존 규제의 50% 이상을 정비(폐지 또는 완화)하는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재수립토록 할 것  
(‘98. 6.17, 국무조정실장 보고시)
-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도 책임을 지고 금년말까지 기존규제의 50%이상을 철폐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  
(‘98.10. 2, 국무회의시)
- 정부의 중요한 업적인 규제개혁의 의미와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반론권도 적극 활용할 것(‘98.12. 1, 국무회의시)

- ‘98. 10월 35개 전 부·처·청에 기존 규제정비계획의 재수립을 지시
  - 기존 규제 50% 정비목표 설정과 중요 규제 누락, 건수 위주의 정비계획 수립 등 문제점 보완지시
  - 폐지비율 50% 달성을 위한 추가 폐지 계획을 각 기관장 책임하에 작성 · 제출토록 전부처에 시달
- ‘98. 11월 재경부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645건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는 등 「‘98 기존규제 추가정비계획」을 재수립

| 정비계획 | 총규제수   | 폐지(%)       | 개선(%)       | 존치(%)       |
|------|--------|-------------|-------------|-------------|
| 당 초  | 10,968 | 3,681(33.6) | 3,263(29.7) | 4,024(36.7) |
| 변 경  | 11,125 | 5,430(48.8) | 2,411(21.7) | 3,284(29.5) |

-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 홍보계획을 수립, 범정부 차원의 홍보대책 추진
  - 신문광고 3회, 주요 일간지 규제개혁 성과보도 36회, 장관관 및 전문가 특별기고 10회, TV·라디오 출연 등 8회, 부처별 전문지 및 월간지 게재 24회 등 실시

#### 4) 과감한 規制整備를 통한 豫算節減 徹底 : 147(03-11-04)

-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정비결과 절약된 비용과 인력을 예산에 반영할 것('98. 8.27, '99년 예산 중간보고서)
- '98.10.16 '98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심의결과를 기획예산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규제정비계획 심의결과에 따른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조직 및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

#### 5) 修正變質된 規制改革法案의 再立法 推進 : 174(09-11-05)

-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며 외국 자본을 자유롭게 유입하게 하는 것임.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데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음
  -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부분에 대해 관계장관은 즉각 재입법을 추진하고, 미제출한 법안도 서둘러 마련할 것('99. 1.12, 국무회의시)
- 규제개혁방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규제개혁법안을 일괄 조사하고,

## 재입법 추진

- '98. 11월 확정된 기존규제 일제정비 결과에 따라 344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98개 법률이 '98년 정기국회를 통과
- 통과된 법률 중 국회심의 과정에서 규제개혁방안의 취지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수정된 경우 이에 대한 재입법 추진 검토
- 국회심의 과정에서 규제개혁방안의 본질을 해치는 방향으로 수정된 18개 법률 (먹는물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대해서는 재입법안을 마련 하여 국회에 제출

## 6) 國政混線의 防止 : 179(02-11-06)

- 당정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혼선이 빚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는 만큼,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책임있는 일처리와 당정·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해 주기 바람 ('99. 3.16, 국무회의시)

- 차관회의를 통한 협조요청 : 2회
  - 주요정책의 부처간 협의 및 조율강화 : '99. 3.11
  - 국정혼선방지 관련 당부사항 : '99. 3.19일
    -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정부정책 수립·발표시에는 반드시 관계부처간 협의토록 조치
    - 전국민과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중요한 정책사안들은 차관회의에 보고, 밀도있는 토의와 사전조율 이행
- 부처·당정간 긴밀한 업무협조 당부 공문시달 : '99. 3.25, 전부처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확정, 발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부처간은 물론 당정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 정부정책이 발표된 후에 국민들에게 부처이기주의나 당정간 마찰로 인하여 혼선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경주

## 7) 學校用地確保特例法 推進에 대한 支援 : 238(06-11-07)

○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에 대하여 총리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려 주기바람('99. 4.12, 교육부 국정개혁보고 회의시)

- '99. 4~'99.10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7차에 걸쳐 교육부, 건교부, 행자부, 경기도 등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마련
- '99.12.29 동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 국회교육위원회 박범진의원외 33인 의원입법 발의
- '00. 1.28 법률 제6219호로 동법 개정 공포
- '00.12.20 대통령령 제17015호로 동법시행령 개정 공포
- '00.12.29 시민참여 핵심민생개혁 추진과제로 선정
  - ※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 7차에 거쳐 회의 개최
- '02. 2. 4 대통령령 제17504호로 동법시행령 개정 공포
- '02.11. 8 동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박승국의원외 21인 의원입법 발의
- '02.12. 5 법률6744호로 동법 개정 공포
- 주요개선 내용 : 동법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과 형평성 문제를 보완
  - 개발사업 범위 확대
    -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 조



치 법에 의한 300세대 규모이상의 사업을 동 법 제2조2호의 개발 사업의 범위에 추가

-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자 규정

· 개발사업지역에서 거주해 온 기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 12개 시·도가 '01. 1. 1~'02. 9.30까지 부과·징수한 부담금은 658억원을 부과하여 42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705억원을 학교용 지부담금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교부하였음.

## 8) 規制改革 成果의 點檢 : 265(09-11-08)

- 1998년 기존규제의 50%를 폐지하였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철폐하기로 한 규제가 실제로 없어졌는지 점검할 것 ('99. 8.10, 국무회의시)

※ 현장·지방중심의 규제개혁 : 391(09-11-15)와 유사내용으로 실적은 동내용의 실적을 참고

## 9) 障礙人 關聯法 單一案 마련 : 269(09-11-09)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직업재활법 제·개정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의견을 신속히 조정하여 단일안 마련 ('99. 8.24, 국무회의시)

- 법안명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함
  - '99.1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0년 7월 1일 시행예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의 주무부처는 노동부로 함

- 다만, 직업지도·적응훈련 등 직업재활과정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심리·의료 재활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양부처 협조하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본계획안 및 공단사업계획·예산안의 양부처 사전협의, 공단 비상임이사(당연직 제외)중 1/2을 보건복지부 장관 위촉 등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장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
- 기금운용 및 배분
  - 노동부장관이 전체 기금을 운용하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과 예산을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반영(별도계정 분리 안함)
  - 분배비율은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분의 1로 함
-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 실시기관을 정규취업 알선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육성·지원
- 장애인고용 지원형태의 다양화
  - 장애인 의무고용·지정고용(현행) 외에도 보호고용·지원고용·자영업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2%이상)하되,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채용비율을 5%로 상향조정

## 10) 安全意識 強化의 轉機 마련 : 289(09-11-10)

- 우리사회에 안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일대 전기가 되도록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내각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99.11. 2, 국무회의시)
- \* '99. 6.30 화성 씨랜드 및 '99.10.30 인천노래방 화재사고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

- 대책수립기구 설치('99.12~'00. 7)
  -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수립기구 설치 근거인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400호, '00. 2. 2) 제정
  - 동 기획단에 공무원 18명(12개부처)과 민간전문가 11명(11개기관) 파견 근무('99.12~'00. 7) \* 단장 : 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
- 안전관리 종합대책(100대과제) 수립 · 국무회의 보고('00. 9. 4)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우선적 과제 : 36개
    - 다중이용 취약시설과 노후 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각종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 확립 등
  -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 22개
    - 건설사업의 투명화와 건설감리제도 강화
    - 각종 안전기준의 표준화 및 안전검사 합리화 등
  - 현장중심 및 전문성 위주의 기능 강화 : 9개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지하공동구 시설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시장경제원리를 통한 재난보상기능의 활성화 : 5개
    - 보장성 및 저축성 확대를 통한 보험제도의 강화

-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기능 제고 등
  - 민간주도적 안전문화운동의 정착 : 11개
    - 안전띠 착용율 제고 및 교통위반단속의 과학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
  - 안전관리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 6개
    - 안전관리 총괄·조정부서의 설치·운영
    - 안전분야의 정보화 촉진 및 「통합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
  -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 과제 : 11개
    -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안전관련 법률의 통합·정비 등
-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00. 9)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동 대책을 각 부처에 시달('00.12),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는 체제를 구축

## 11) 科學技術 發展與件 造成 促進 : 290(08-11-11)

- 연구소 및 대학에도 계약제와 연봉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함('99.11. 4, 국무회의시)
-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쟁력과 책임연구체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출연 연구기관의 전 직원에 대하여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 대상기관(43개 출연연구기관)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14개 기관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9개 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4개 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7개 기관

- 공동기술연구회 소관 9개 기관
- 추진기간 : '99. 5~11월
- 추진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적으로 계약제·연봉제 도입 완료

## 12) 規制改革 立法 推進 : 297(09-11-12)

- 국회심의 과정에서 규제개혁법안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 ('99.12.21, 국무회의시)

-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의 재입법 추진 검토
  - 국회 수정법률 중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의 경우, 상당수의 단체가 이미 해당법률을 개정하여 복수단체간 서비스 경쟁 촉발·독점 사업기관화 방지 및 단체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법률개정안의 폐기로 인하여 사업자 단체간 형평성 시비 등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재입법 추진을 검토
- \* 재입법 추진대상 사업자단체 관련 법률
  - 약사법(보건복지부)
  - 의료법(보건복지부)
  - 변호사법(법무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교통부) 등 4개 법률
- 재입법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

- 민주당 개혁 추진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재입법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02년 중에도 당정협의 및 소관 상임위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사업자 단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13) 知識情報化社會 具現을 위한 規制改革 推進 : 376(09-11-13)

- 지식정보화 시대로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개혁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00. 6.28,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시)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빨리 마무리지워야 할 것임. 현재 남아있는 규제가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규제인지 아니면 장애가 되는지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00. 9.19, 규제개혁 보고회의시)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각 부처에 기 시달(국무총리 지시 '00-25호, '00. 9.27)
  - '00, '01년도 추진대상 과제 총81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규제개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추진완료
  - \* 주요 추진과제
    -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조달청)
    - 신기술 개발 진흥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특허청)
    -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산자부) 등
  - '02년도 제2단계 지식정보화 추진대상 29개 과제를 선정, 규제개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대통령께 보고하고 '02년도 규제정비지침에 포함, 각 부처에 시달 ('01.11.29)
- '02년 추진대상과제 총 29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주요 추진과제

- 금융신상품 개발관련 규제완화(재경부)
- 대국민 의료기관 정보제공 허용범위 확대(복지부)
- 산업보건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노동부) 등

#### 14) 電子政府 具顯을 위한 規制改革 : 390(09-11-14)

- 정보화기술을 정부혁신에 활용하고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00. 9.19, 규제개혁 보고회의시)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01.10 ~ '02.11.30(237억원)
  - 전자정부 단일창구 공동운용시스템 구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 제정·시행
  - '01. 7. 1, 제정·시행
  - 전자서명 사용근거, 전자민원 처리대상 인터넷 공표 등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02. 3.25, 개정·시행
  - 전자문서를 통한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지 규정, 민원사무편람 및 민

원사무처리기준표 등의 인터넷 게시 근거 규정

-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서비스 추진
  - 1단계 서비스('02. 2) : 민원신청 54종, 민원안내 1,000종
  - 2단계 서비스('02. 4) : 민원신청 143종, 민원안내 2,000종
  - 3단계 서비스('02.11) : 민원신청 393종, 민원안내 4,000종
-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의 PC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전과정의 온라인화” 실현
  -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업무분석·설계 및 정보화계획 수립

## 15) 現場・地方 中心의 規制改革 : 391(09-11-15)

- 법령등의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됨. 지방자치단체나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것이 하위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것  
(‘00. 9.19, 규제개혁 보고회의시)

- 중앙부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실시
  - '00년 하반기, '01년 상·하반기, '02년 하반기 네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
  - \* '00년 하반기 : 11.20~11.28 (총 12개기관, 78건 적출,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확인
    - 중앙부처 규제정비사항이 자치단체조례에 반영되도록 조치
    - 감사 및 사고발생에 대비한 법령미근거 서류 과다 징구 등 시정
  - \* '01년 상반기 : 5.21~ 5.30 (총 16개기관, 127건 적출, 시정조치)



- 일부 중앙부처에서 규제위의결 정비계획이 국회심의유보, 관계부처 협의지연으로 미이행사례 적출
- 규개위 심사 없이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 하위규정 제·개정 사례 시정조치
- \* '01년 하반기 : 1단계(10. 8~10.18), 2단계(10.29~11. 9)에 걸쳐 총25 개기관, 감사원과 합동감사
- 중앙부처에서는 중점 점검 당시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관행 또는 행태에 의한 규제 및 미등록·누락규제 적출
- 상위법령규제 폐지 후 하위규정에서 부활하는 등 형식적 규제 실적 관리 적출
- \* '02년 하반기 : 5. 8 ~ 6.26 중 14개 기관, 69건 적출, 시정조치
- 고시·훈령·예규 등 하위규정의 제·개정시 법정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신설·강화 사례 적출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위주 운영사례 적출

## 16) 反腐敗 對策 마련 : 411(09-11-17)

- 앞으로 부패척결활동을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감사·처벌과 함께 특히 제도적으로 부정부패문제에 대처해야 함 ('01. 1. 9, 국무회의시)

-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패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제도개선 추진
  - 범국가적 부패척결 분위기 조성 및 각급 행정기관에서 마련한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4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태 및 성과를 점검·평가(대통령 주재 보고회의 개최, '01. 7. 4)

- 불투명한 규제 정비, 전자정부의 구현,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등
- 부패방지법의 제정('01. 6.28)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02. 1.25)
  - 적발·처벌위주의 부패척결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환경·의식의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 구축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제정('0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및 가동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도개혁기획단」을 구성하고('01. 2), 전자입찰구매제도, 청렴계약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단속실명제, 행정정보공개 등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운영
- 반부패 및 공직기강관계 장관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
  - '02년에는 반부패 및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주재:국무총리), 반부패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정례적으로 가동하여 사정기관간 협조를 통한 반부패 대책 추진의 효율화(장관회의 3회, 실무위원회 6회 개최)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 동지수가 48위('00년) → 42위('01년) → 40위('02년)로 점차 개선

## 17) ‘國民과의 對話’ 後續措置 推進：492(09-11-17)

- 국민과의 대화시 제기된 문제와 설명·약속한 사항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당부처가 민원사항, 약속사항 등을 챙겨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총리 중심으로 노력하고
  - 질문자에게도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성실히 답변해 줌으로써 국민과 정부 사이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01. 3. 5, 국무회의시)

-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추진 총리지시 시달('01. 3. 8)
  - 국민과의 대화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지시
  - 질문자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신 사항, 국민적 관심사항은 질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토록 조치
- 국무총리 주재, 주무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상황 점검('01. 3.24)
  - 국민과의 대화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19개 과제중
    - 14개 과제는 기추진중인 과제를 보완하여 시행
    - 4개 과제는 제도개선등을 통해 새롭게 추진
    - 1개 과제는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
  - 정책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조치

## 18) 테러豫防對策 마련 : 537(09-11-18)

- 테러대책 강구를 위해 Task Force를 구성하고 전 국민이 참여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01. 9.25, 국무회의시)

- 정부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01. 9.12이후)
  - 국무조정실에 '정부종합상황지원반'을 두고 외교·안보·경제·대테러·시도 등 5개 대책반 운영
- 관계부처 합동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테러방지종합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국방부·행자부·정통부·복지부·환경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Task Force를 통해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01.10.20~10.31)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11. 2, 11. 5) 및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11. 6)를 통해 「테러방지종합대책」 확정·발표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12.29)를 통해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상황 점검
- 「테러방지법(안)」 국무회의 의결('01.11.27)
  - 국정원 제정안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의 이견조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국회제출

## 19) 地球環境問題 解決努力：588(05-11-19)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연내에 비준할 수 있도록 준비
  - 온실가스의 단계별 감축대책도 마련 ('02. 3.27, 환경부 업무보고시)
- 교토의정서 비준
    -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02. 3. 5)에서 교토의정서 비준 방침을 확정하고 외교부의 비준문안 작성(3월), 법제처 심사(4~5월)국무회의 의결(7. 2)을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이송(7.11)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10.30)후 비준서를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기탁('02.11. 8)함으로써 비준절차 완료
  -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
    - 제1차 종합대책('99~'01)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회의, 산업계 및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02. 3. 5)에서 제2차 종합대책을 확정
    - 경제조정관 주재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02. 5.31)에서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심의, 확정

- 동 종합대책에서는 자발적 협약 체결, ESCO사업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활용 등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대책,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정책, 대중교통확충 및 LNG버스 보급 확대 등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대책, 단열시공의무화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등 건물부문의 감축대책, 매립지 메탄가스 발전 등 폐기물부문의 감축대책, 숲가꾸기 및 해외조림 확대 등 산림흡수원 확충정책 등을 포함
- 매년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실적을 검토·평가하여 대책을 보완·발전시키고 향후 '05년부터는 5~10년의 기후변화협약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

## 20) 포스트월드컵 對策 마련 : 601(09-11-2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컵을 계기로 전세계에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를 국민단합에 활용,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각은 노력해 주시기 바람</li> <li>○ 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월드컵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02. 6.25, 국무회의시)</li> </ul> |
|--|
- 국무총리 주재 포스트월드컵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포스트월드컵 대책 검토('02. 7. 3)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개최, 대책·확정 발표('02. 7.16)
  - 포스트월드컵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02. 8.16, 차관회의 보고)
  - 국무총리 주재 포스트월드컵대책 점검회의 개최('02.11.26)

- 재정부, 행자부, 문화부, 산자부, 정통부 등 6개기관의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점검

## 21) 8・15慶祝辭 後續對策 推進：605(09-11-21)

- 금번 8.15경축사에서 6대과제가 제시되었음
- 첫째, 포스트월드컵대책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함
  - 정부가 국민참여는 물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둘째,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셋째,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금번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합의된 사항의 실천에 주력해야 함
- 넷째, 중산・서민층대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계속 노력하여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 나가야 함
- 다섯째, 앞으로 남은 대선은 더 한층 확고하게 중립을 지켜야 함
  - 선거사범은 철저히하고 공정하게 단속해서 이번 대선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하고 훌륭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섯째, 부산아시안게임은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 월드컵을 치러냈듯이 함께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동계올림픽과 201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2. 8.19, 국무회의시)

- 주무차관회의('02. 8.16)에서 「8.15경축사 후속조치 추진방안」 논의
  - 4대 분야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검토・조정

- 국무회의(8.19)에 「8.15경축사 후속조치 추진방향」 보고
  - 4대 분야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검토·조정
  - 추진실적은 분야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
  - 8.20부터 과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실시
- 분야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계획 세부점검
  - 경제분야 8.20, 교육인적자원분야 8.21, 통일외교안보분야 8.22, 사회분야 8.22

## 22) 公務員의 不正腐敗 剔抉方案 講究 : 158 (09-70-13)

- 국민의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 부패가 여전히 큰 문제임.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 바람('98.10.12, 국무회의시)
- 중하위직 공무원의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 실시
    - 기간 : '98.10.12 ~ '98.12.31
  - 「부패방지종합대책」 발표('99. 8.17)
    - 10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9개 연구기관을 통하여 연구용역
    -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6개 취약분야(건설·건축·위생·세무·경찰·환경)를 포함한 100대 반부패 추진과제 마련, 발표
    -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지침 시달('99. 8.30)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
    -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정 : '99. 9. 1
    -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국민 모두 참여하에 부패를 예방하고 감시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신설
      - 민간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

'99. 9.10

- 반부패 교육·홍보 추진
  - 반부패 교육·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75,000부) 발간·배포, 반부패 관련 비디오 영상물 제작·방영, 옥외전광판 광고, 지하철 홍보포스터 게재, 인터넷 신고사이트 개설 등
  - TV 방송출연 및 관련 인쇄매체 기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반부패 홍보 및 분위기 확산
- 중하위직 대상 집중감찰활동 실시로 기강문란자 2,438명을 적발하여 901명 중징계, 1,537명을 경징계 조치

## 23) 年末年始 公職紀綱 確立對策 推進 : 543(09-70-61)

- 연말연시를 맞아 기강이 해이되기 쉬움. 특히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잘 점검해 주기 바람('01.11.27, 국무회의시)

-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개최
  - 행자·법무부 등 주요부처 관계 장관회의('01.12. 7) 개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수립
-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및 엄중 조치
  - 정부합동점검반, 부처자체점검반을 통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01.12.12~'02. 2.15)
  - 해양경찰청 차장 비리, 교원인사관련 비리 등 비위행위 50여건 적발·조치
  - 기관장을 중심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찰을 강화하여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       |
|-------|
| 法 制 處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67(09-14-01) | 규제개혁 입법의 차질없는 추진   | 1998.12. 1 |
| 610(09-14-02) | 정부 입법 신속추진         | 2002.10.22 |
| 10(03-70-01)  | 실업세부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       | 1998. 4.28 |
| 137(03-70-08) | 각 부처의 경비절감 노력강화    | 1998. 8.11 |
| 138(03-70-09) | 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 1998. 8.11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366(09-70-39) | 금년도 업무보고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1) 規制改革 立法의 差跌없는 推進 : 167(09-14-01)

- 정부가 기존규제의 절반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임
- 관련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개혁의 성과가 그대로 실현되도록하여야 함
- 규제개혁관련 일괄정비법은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일인 만큼 당정간의 협의와 국회의장단 및 국회사무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내에 꼭 통과되도록 할 것('98.12. 1, 국무회의시)

- 고위당정협의 및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 전개
  - 국무총리 주재 고위당정협의('98.12. 1)
  - 법제처장의 여당 등 방문 규제개혁관련 일괄입법의 연내처리 협조 당부

| 일 자 | 12. 7(월)    | 12. 8(화)          | 12.10(목)                | 12.16(수)           |
|-----|-------------|-------------------|-------------------------|--------------------|
| 면담자 |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 정책위의장, 정무수석과 사전협의 | 원내총무, 정책기획수석, 법제처장 3자회담 | 원내총무,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 법제처장의 야당 방문, 정책위의장에게 협조 당부('98.12. 9)
- 법제처 각 국장의 국회방문, 소관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설득('98.12. 3)
- 규제개혁관련 일괄입법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협의
  - 국무회의 · 차관회의 보고('98.12. 1, 12.11, 12.14)
  - 국무총리소속 기관장회의 보고('98.12.14)
  -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보고('98.12.15)
  - 국회 상임위별 입법추진상황 일일점검 및 입법추진방향 조정
  - 규제개혁관련 입법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여 청와대(정책기획수석)에 일일보고

- '98년도 정부제안 규제개혁관련법안 340건을 연내에 조기 심사하여 국회에 제출, 271건을 연내에, 37건을 '99년 1/4분기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였음.

## 2) 政府 立法 迅速推進 : 610(09-14-02)

- 정부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입법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연내 입법 계획이 되어 있던 법안들은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장하여 마무리 할 것('02.10.22, 국무회의시)
- '02년 정기국회 이후 입법추진이 지연된 35건의 법률중 금년도 입법추진 철회예정인 11건 제외시 조치가 필요한 법률은 24건으로, 24건중 9건은 국외제출 완료하고, 나머지는 '03년도 입법추진중

## 3) 失業細部對策 樹立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것.('98. 3.26, 국무회의시)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함 ('99. 3.16, 국무회의시)
- 3차에 걸쳐서 정보화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연인원 140,400명을 고용하여 실업문제해결에 기여
    - 1차 사업 추진내용('98.12. 1 ~ '99. 5.31)
      - 고용인력 : 연인원 27,000명 고용

- 2차 사업 추진내용('99. 5. 1 ~ '99.11.30)
  - 고용인력 : 연인원 46,000명 고용
- 3차 사업 추진내용('00. 3. 2 ~ '00.10.31)
  - 고용인력 : 연인원 67,400명 고용
-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하여 법률 6,000건, 대통령령 18,000건, 총리령·부령 30,000건, 법제자료 30,000건을 입력하여 연혁법령 데이터베이스 완성 및 입력완료된 연혁법령데이터베이스를 일반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검색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완성

#### 4) 經濟政策 對外弘報 強化 : 48(08-70-03)

- 동강댐 문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예로 들어보면 한쪽 논리에만 치우쳐 있으며, 2000년대 물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홍보논리와 홍보노력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할 것 ('98. 4.28, 국무회의시)
- 대중매체를 통한 법령홍보
    - TV
      - YTN, K-TV: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등 54건 홍보
    - 케이블TV
      - 서울강남C-TV, 서부산C-TV, 부산낙동C-TV, 서대구C-TV, 대전한밭 C-TV, 대구푸른방송 등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143건 858회 홍보

- 라디오
  - TBS, TBN: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등 65건 홍보
- 일간신문 및 법률전문지 : 주간공포법령을 52회 작성·배포하여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 1,070건 홍보
- 법률전문지를 통한 행정심판재결례 소개
  - 판례월보 24건, 고시연구 22건, 고시계 19건
- 월간 법제지 발간·배포
  - 새법령해설 및 법제자료 등을 수록한 법령홍보지 월간 『법제』를 12회 63,600부 발간하여 특별소비세법 등 새법령 797건을 홍보
- 새법령소식지 발간·배포
  - 24회 480,000부를 발간하여 소비자보호법 등 138건 홍보
- 각계입법의견 조사·분석, 배포
  - 53회에 걸쳐 ‘허점 많은 정치자금법 고쳐라’ 등 199건 각계입법의견을 간부들에게 배포
- 인터넷을 통한 홍보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법령신문고』란 개설 홍보
- 지하철광고를 통한 홍보
  - 서울·부산·대구 지하철에 『법령신문고』(’00. 3월부터), 『행정심판 홍보』(’00.10월부터) 광고문안 부착 홍보
- 전화카드를 통한 홍보
  - 행정심판홍보용 전화카드 5,000개 제작,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00. 9)
- 책자를 통한 홍보
  - 행정심판질의응답집 900부 발간,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00. 4, 6)
  - 행정심판재결례집 600부 발간,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00. 9)

- 법제처 영문홍보책자 1,300부 발간, 주한외국공관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00. 7)
- 『법령신문고』 팜플렛(만화) 86,000부 발간, 행정기관 민원실 배포
- 일간신문 광고를 통한 홍보
  -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28개 주요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통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42건 홍보
- 새로운 법령홍보수단 발굴 및 법령홍보
  - '99. 4월부터 대도시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진 케이블TV를 통한 법령홍보수단 발굴
  - '00. 4.18부터 TBN(대전교통방송) 라디오방송매체 활용 홍보
  - 전광판 광고를 통한 홍보(6~12월)
  - '00년 6월부터 국정홍보처 E-mail 클럽서비스를 통하여 법령신문고홍보(1일 5~6회 표출)
- 법령홍보효과 등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00. 5)
  - 월간 『법제』 구독자 등 5,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새법령소식』에 입법예고내용 수록 등 개선의견 반영
- K-TV(「오늘의 국정」 국정대담 코너)를 통한 법제처 주요업무의 홍보('99.10. 4, 10. 8)

## 5) 各 部處의 經費節減 努力強化 : 137(03-70-0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li> </ul> </li> <li>○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br/>(‘98. 8.11, 국무회의시)</li> </ul> |
|--|
- ‘98년도 예산중 경상사업비 집행시 자체절감계획에 의하여 12,551천원의 경비를 절감함.
  - 복사용지 등 12,230천원의 재활용품 구입, 간부회의자료의 이면지 재사용 및 소모물품 절약 등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함

## 5) 水害關聯 大統領指示事項 : 138(03-70-09)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국무위원은 서로 분담해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격려하고 전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98. 8.11, 국무회의시)</li> </ul> |
|---|
- 수재의연금 2,426,000원 모금, 중앙일보사에 기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수해지역 복구에 40명 공무원 참여

## 7) 컴퓨터 2000年 問題關聯 : 164(07-70-1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세계적인 중요한 문제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철저히 대비할 것(‘98.11.23, 국무회의시)</li> </ul> |
|--|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합동으로 실무점검반 구성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 개인용컴퓨터 · 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2000년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전수 조사 실시
- 전 전산장비에 대한 확인 · 점검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함.

## 8)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 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 특히 특정 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출신지역별 · 출신고교별 4급이상 현황 파악 후,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한 인사를 하되, 출신지역별 · 출신고교별로 고려한 인사 실시

## 9) 今年度 業務報告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 · 보고 할 것.('00. 5. 9, 국무회의시)

- '00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함으로써 계획의 철저한 실천을 도모
  - '0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심사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시행



○ '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정부입법법률안 200건 국회 제출, 121건 통과
- 법령신문고 개설(2.26) 및 법령모니터요원 운영(3월부터)을 통한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의견 987건 접수
-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법령 1,002건중 799건을 입법예고하도록 하여 입법예고율 80% 달성
- '00년도 행정심판청구사건 8,844건 처리, 90일이내처리 8,763건으로 99.1% 신속처리
  - 인용 1,900건으로 21.5% 국민권리구제 강화
- 영문경제법령집 단행본 6,200부를 발간, CD롬 7,000개를 제작하여 아셈 회의(ASEM) 참가국 대표,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배포
- 법령연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률 6,000건, 대통령령 18,000건 등 54,000건의 법령연혁정보 및 법제자료 30,000건을 입력하여 보다 풍부한 법제정보 제공 기틀을 마련
- 자치단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 2,853명에게 실시, 자치입법 관련 법령상담 39건으로 지방자치 입법활동 지원

# 國 政 弘 報 處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02(08-13-01) | 국정홍보활동 평가                  | 2000. 1.25 |
| 10(03-70-01)  |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 1998. 3.26 |
| 48(08-70-03)  | 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198(06-70-20) | 국가이미지 개선 강화                | 1999. 3.22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26(02-33-06) | 해외에서의 국가안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 2000. 2.29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544(06-33-14) |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에 대한 대책강구 | 2001.12.22 |
| 601(09-11-20) | 포스트월드컵 대책 마련               | 2002. 6.25 |
| 605(09-11-21) | 8.15 경축사 후속대책 추진           | 2002. 8.19 |

## 1) 國政弘報活動 評價 : 302(08-13-01)

○ 국정홍보처는 정부 각 부처 홍보활동을 양적·질적으로 정기 평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00. 1.25, 국무회의시)

- 국정홍보활동 분석·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상·하반기 2회)
  - 평가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1개 부처
    - 경제부처 : 13개 부처
    - 비경제부처 : 8개 부처
  - 평가방법 : 홍보활동의 질적·양적평가 이행을 위해 홍보전문기관 용역 활용
    - 민간전문 PR회사 및 대학 전문연구소 공동
  - 주요보고내용
    - 장·차관 국정홍보활동, 주요홍보이슈 추진실적, 홍보간행물 발간·배포 실적, 기획홍보과제 추진상황 등

## 2) 失業問題에 積極 對處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98. 3.26, 국무회의시)

-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 사업명 : 한국관련 영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내용
    - 한국관련 영문정보관문(Portal Site) 구축

- 사이버한국관(Cyber Korea Center) 구축
- 사업기간 : '99. 4 ~ '99.12.10
- 고용인원 : 1일 240명(8개월 상시고용, 연인원 57,000여명)

### 3)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함
-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사후적인 홍보보다 사전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함
- 국무위원들은 국민과의 교감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공보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98. 4.28, 국무회의시 )

-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정기조사 31회, 수시 및 인터넷 E-mail 조사 각 5회)
- 「국정모니터」제도 활성화
  -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모니터 의견수렴(2,387건 투고 접수) 및 주요의견 월간 「뜻모아 소리모아」에 수록 발간(월 5,000부)
  - 「사이버 국정모니터」 운영(300명)을 통한 네티즌의견 수렴(1,492건 접수)
- 국정현안에 대한 사전기획홍보 강화
  - 국가적 주요이벤트에 대한 기획홍보(국정홍보자문단 구성·활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홍보이슈 민간컨설팅 실시(37건)
- 국정홍보 조율·협력강화
  - 국정홍보처와 각 부처간 홍보협력·조율채널인 「공보관회의」 강화(18회)
  - 현안발생시 홍보실무협의회 수시개최(57회)

#### 4) 國家이미지 改善強化 : 198(06-70-20)

○ 지금 우리는 상품수출, 자본유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이미지가 필요함. 문화관광부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9. 3.22, 국정개혁 보고서)

- 한국문화 바로알리기 사업의 체계적 시행
  - 수요자 중심의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  
(해외여론주도층 등 대상 11종 966,900부)
  - 외국문헌의 한국관련 오류 시정
    - 백과사전 감수(프랑스 Quid등 2개국 5종), 동해표기 홍보 영문지도 제작·배포(8,100부), 인터넷 오류시정 활동 강화 등
  - 주한 외국인 대상 역사·문화 강좌개최(’99.11.15~11.26, 참가인원 : 1,137명)
  - 해외 청소년 대상 Essay Contest(인니 등 11개국 총 7,000여편 응모)
-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정보관문(Portal Site) 구축(<http://www.korea.net>) 및 인터넷 활용 홍보 강화
-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국가 주요정책 홍보강화
  - ASEM, APEC, 대통령 순방 등 주요 국제행사 등 계기 활용 집중 홍보
    - 해외 TV매체 한국소개 방영(20개국 74매체 290회), 정책홍보간행물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11종 42,700부) 등
  - 재외 한국문화홍보원 개원 계기 전통예술품 지원
    - 오사카(47종 120점) 및 독일 문화홍보원(전통공예 및 회화 21종 67점)

- 재외동포 한인행사 및 재외공관 한국소개용품 지원 : 78종 7,059점
- 밀레니엄 계기홍보
  - 월트 디즈니월드 「한국공방」 설치운영('99.10~'00.12) 및 공연행사 개최('99.12.19~'00. 1. 3)

## 5) 내년도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기획예산처가 준비한 2000년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99.10. 4, 국무회의시)

- 정부보유매체 활용 홍보전개

### < KTV >

- 2000년 정부예산 관련 국회 생중계(시정연설, 예결위 심의과정 등) 및 시청자특강, 오늘의 국정, KTV 시사토론 등 KTV 프로그램 활용
- 정부예산 및 각 부처 주요정책과제 집중 홍보

### < 국정신문 >

- 국정신문 기획시리즈(새천년, 새비전)
  - 부처별 혁신, 서비스 개선, 비전제시
- 2000년 예산 어디에 쓰나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대통령 신년사 전문 게재 등

- 홍보간행물 발간·배포 활용

-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99.12.24, 30만부),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열어갑시다.”(’99.12.21, 10만부), “IMF 2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99.12. 7, 100만부)

## 6) 海外에서의 國民安全 및 國家이미지 提高 : 326(02-33-06)

- 최근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납치·강도 등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00. 2.29, 국무회의시)

- 외국언론 대상 홍보
  - 외국언론 취재지원(초청 및 방한외신기자 1,254명 취재지원 등), 외신 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23회)
  - 정책참고자료(13종 30,500부) 시리즈 제작·배포 등
- 영문 종합홈페이지 ‘korea.net’ 본격 운영(시범운영 실시 : ’00.11. 1~)
  - 인터넷 영자신문 ‘korea.net News’ 정부정책자료 등재(매일 20~30여건)
  - 한국관련 영문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한국관련 12개분야 11,000개 영문사이트 체계적 연결)
- 문화한국 이미지 대외 선양
  - 6개 재외 문화홍보원 운영 내실화  
(독일(koreaheute)·중국(한국의 창) 현지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 해외 한국문화 행사 개최 지원  
(공연행사(12회) 및 영화제 개최(13개국 81편 상영) 등)
  - 한국소개 홍보자료 제작·배포(44종 867,100부)
-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지속 추진

- 한국관련 오류시정 : 한국관련 인터넷 오류 사냥대회 개최(2회, 오류적출 521건), 세계 유명 지도제작사 및 주요 언론사 등 대상 “동해” 표기 홍보 지속 확대 등
- 미국 중·고교 대상 한국관련 학습 부교재 개발·보급  
(미국전역 14,030개 중·고교 대상)
- 주한외국인대상 역사문화강좌(연 1,204명 수강) 및 한국이미지 여론조사('00. 2.28~3.25, 581명 대상)실시 등

## 7)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00. 5. 9, 국무회의시)

- 주요계기 언론 취재보도 적극지원
  - 남북정상회담('00. 6.13~15), 대통령 순방 등 계기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 국정홍보 조율 및 지원 강화
  - 국정홍보 조율·협력강화(「공보관회의」(18회), 「홍보 실무협의회」(57회) 개최)
  - 정부부처의 홍보역량 제고 지원(민간컨설팅 지원 : 37건, 각 부처 국정홍보활동 분석·평가 : 상·하반기)
- 국정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홍보추진
  - 계층별·대상별 차별화 홍보(20~30대 타겟 「야호 코리아」 창간(월간 10만부), 시각장애인대상 홍보 실시(2회) 등)



- 소구력 있는 정부광고 캠페인 실시(「지식정보강국」 등 7개 주제 9편)
- 사이버 국정홍보 기능 강화(사이버 대변인 「알림이」(Allim.i) 신설운영 등)
- 「KTV」 편성 및 운영 쇄신(국정홍보 전문채널로 특성화·차별화)
- 국정에 관한 여론수렴기능 강화
  - 다양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사」 실시(정기조사 31회, 수시조사 5회)
  - 「국정모니터」(1,000명) 활용, 국민여론 수렴  
(2,387건 투고 접수, 주요의견 「뜻모아 소리모아」에 수록)
  - 언론모니터를 통한 여론수렴 적극 실시  
(주요 중앙 및 지방일간지, TV·라디오 등 대상)
- 조직적, 체계적 해외홍보 추진
  - 외국여론 대상 홍보 강화
    - 외국인론 초청(13개국 29매체 74명), 방한외신 취재 지원(28개국 207매체 1,180명) 및 정책참고자료 제작·배포(13종 30,500부) 등
    - 외신오보 및 왜곡보도 대응(20개 매체 23건)
  - 영문종합 홈페이지 'korea.net' 본격 운영  
(정부 주요 정책자료 신속 소개, 매일 20~30여건)
  -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 지속 추진
    - 에세이 콘테스트 실시(영국 등 12개국, 총 7,006편 응모)
    - 한국관련 오류사례 발굴, 적극 시정  
(해외 오류사례 165건 수집, 인터넷 오류사냥대회 2회 개최 등)
    - 주한외국인 대상 「역사문화」 강좌 개최('00. 9.25~10. 6) 및 「한국이미지 여론조사」 실시('00. 2.28~3.25) 등
  - 해외홍보 유관기관간 긴밀협력 체제 구축(「대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3회))

## 8) 韓國을 訪問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에 대한 對策 講究 : 544(06-33-14)

-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찾아온 방문객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에게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고양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01.12.22,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대회 준비상황합동보고서)

- 현지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 미국 등 6개 문화홍보원 및 아르헨티나 월드컵 홍보관 설치·운영
  - 월드컵 개막식 및 경기 응원행사(영국·독일 등)
  - 월드컵 계기 사진전시회(미국 등 8개국) 및 캐나다 “Korea Week” 등 다양한 event 병행 실시
- 외국언론 활용 홍보
  - 언론인 취재지원(초청 : 10개국 12매체 30명, 방한외신 : 15개국 151매체 253명, 상주외신 : 12개국 80매체 221명)
  - 각 국 언론 한국 특집보도 방송
    - 외신보도 : 방송(45개국 119매체 270회), 신문(20개국 141매체 2,276회)
    - 미 공영방송 PBS 한국특집 방영(8회)
- 해외홍보물 제작·배포 활용
  - 홍보간행물(‘Welcome to Korea’ 등 기본간행물 4종 258,000부, ‘Dynamic Korea’ 등 수시간행물 4종 52,000부 등)
  - 홍보영상물(‘Enjoy Korea 2002’ 등 10종 8,500여벌)
  - 국내외 항공사 활용 홍보(홍보비디오 2종, 화보집 등)
- 정부대표 영문홈페이지 ‘korea.net’ 활용 홍보

- 월드컵조직위 배너 등재, 월드컵 홍보코너 운영, 다국어(영어·중국어 등 6개국) 서비스 실시 등
- 국가상징 영문 캐치프레이즈 ‘Dynamic Korea’ 활용 홍보
  - 영문예세이 콘테스트('02. 1.29~2.28), 국내 영자지 특집('02. 5.20~6.30, Korea Times 39회, Korea Herald 36회 게재)
  - ‘Dynamic Korea’ 홍보물 제작·배포(CD 영어 10,000부, 비디오 1,900벌, 홍보책자 5,000부 등)

## 9) 포스트 월드컵 對策 마련 : 601(09-11-20)

- 우리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고, 이번 월드컵 대회도 세계의 평가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음
  - 금번 월드컵을 계기로 전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를 국민단합에 활용,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각은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월드컵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02. 6.25, 국무회의시)
-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
    - 국가이미지 관리체제 구축·활용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규정」 제정('02. 7. 2, 대통령훈령 제105호)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4회)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실무대책반(Task Force) 구성·운영('02. 8. 1~12.31)
  - 국가이미지 관련 여론수렴

-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언론인 및 임원대상(총 1,314명) 「국가이미지조사」 실시('02. 9.29~10.15)
- 「국가이미지 포럼」 개최 지원
- 월드컵 성과 지속 홍보
  - 「태극기」 주제 TV·라디오 대상(16개 TV 및 7개 라디오) 캠페인 시행('02. 8.10~9.30)
  - 각 시·도별 지역홍보행사 개최('02. 9~11월, 서울 등 15개 지역)
  - 정부 가용매체 집중 홍보
    - 야호 코리아 「월드컵 특집」('02. 7~8월호, 10만부)
    - KTV 프로그램 활용 : 다이나믹 코리아('02. 6.27~7. 7, 15회), 코리아 2002(7.15, 1회), KTV 파워토크('02. 7. 8~7.12, 10회), 기획특강('02. 7.16~9.15, 26회), 생방송 e-Korea(47회), SB은행물 수시방송(17종 1,460회) 등
    - 주간 국정뉴스 월드컵 기획 특집('02. 7.22, 9.30자)
    - 「열린정부 알림마당」 등 인터넷 홈페이지 집중 활용
- 국가이미지제고 해외홍보 지속 추진
  - 관련기사 분석 및 외신대상 홍보
    - 외신기사집 발간('02. 7.20, 1,500부), 외신 DB구축(방한외신 850명), 대통령 친서전달(방한외신 70개국 3,700명), 일본 주요언론 논설위원단 초청('02. 7.22~7.27)
  - 현지홍보행사 개최
    - 월드컵 후속홍보 공연행사 개최(이경화 무용단, '02. 7.21~8.24, 스페인 4개 도시)
    - 월드컵 후속홍보 사진전('02.10월~12월, 영·미 등 5개국 14개처)

- 후속 홍보물 발간·배포
  - 홍보영상물 'Dynamic Korea'('02. 8.31, 8개어, 1,200벌)
  - 홍보간행물 'Korean Experience With the World Cup'(영어 20,000부)
  - 정기간행물 'Pictorial Korea' 및 'Korea Now' 활용 관련기사 게재
- 정부 대표 영문홈페이지 'korea.net' 월드컵 후속홍보 코너 운영

## 10) 8.15 慶祝辭 後續對策 推進：605(09-11-21)

- 다섯째, 앞으로 남은 대선은 더한층 확고하게 중립을 지켜야 됨
  - 선거사범은 철저히하고 공정하게 단속해서 이번 대선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하고 훌륭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섯째, 부산아시아게임은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 월드컵을 치러냈듯이 함께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동계올림픽과 201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02. 8.19, 국무회의시)

### < 대통령 선거관련 공명선거 홍보실적 >

- 공명선거 캠페인 시행
  - 신문광고('02.12. 9~10, 총 34개지), 인터넷(14개 사이트), 잡지(11개지, 12월호) 광고시행
- 전국 128개 전광판 활용
  - 「공명선거 구현」, 「투표절차 홍보」(중앙선관위, 2~12월)
  - 「공명선거·투표참여」,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행정자치부, '02. 6~12월)
- 가용매체 활용, 공명선거 실천의지 부각
  - 월간 만화잡지 「야호 코리아」(월 10만부)에 주제 반영

- KTV 정책포럼, 세미나 중계실, 생방송 e-Korea 등 KTV 프로그램 활용 집중 홍보
- 주간 국정뉴스 공명선거 관련 특집발간(11. 4/12. 2/12. 9/12.16/12.23자)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실적 >

○ 정부 가용매체 집중 활용

-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아시안게임 기념」 이벤트 실시  
(‘02. 9.13~10.14, 총 120,779명 참여)
- 월간 「야호 코리아」 AG 특집게재(‘02. 8~10월호, 각 10만부)
- 전국 128개 전광판 활용 AG 홍보(동영상, 1~10월)
- KTV 프로그램 활용 : KTV 특강, KTV 정책포럼, 생방송 e-Korea 등  
활용 AG 집중 홍보

○ 해외홍보 적극 실시

- 해외홍보 협력 구축 및 상황반 운영
  - 제10차 대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02. 8.29)
  - AG 계기 국가홍보 관계기관 회의(‘02. 9. 3)
  - 재외문화홍보원(북경·오사카)에 상설홍보부스 설치·운영(프레스센터화)
- 해외언론 초청 및 방한외신 취재지원
  - 부산 MMC내 ‘외신취재지원센터’ 운영(‘02. 9.25~10.15)
  - 상주 및 방한외신 대상 취재 지원 및 AG 홍보자료 제공
  - Vietnam News 편집국장 등 베트남 언론인 초청(‘02. 8.21~8.27)
- 해외홍보이벤트 개최, 현지 붐 조성
  - 국립무용단, 인도 등 6개 지역 순회 공연(‘02. 9. 1~9.11)
  - 재외공관 특별홍보행사 개최(성화봉송행사 지원, 한국영화제 개최 지원 등)
  -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대상 해외이미지 여론조사 실시(‘02. 8~12월)

- 홍보물 제작·활용

- 영상물('Dynamic Korea' 등 10종 527벌) 및 홍보자료 배포('Welcome to Korea' 등 10종 16,200부) 등

- 정부대표 홈페이지 활용 홍보(조직위 배너 및 관련기사 등재 등)

- 'korea.net' 아시안게임 홍보코너 운영
- 주오사카 문화홍보원 등 재외홍보관 홈페이지 운영 등

< 2010 동계올림픽 및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

○ BIE 총회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제131차 BIE 총회('02. 7. 2, 파리) 및 제132차 총회('02.12. 2~3) 참석 및 홍보활동 지원

○ “대외홍보실무협의회” 개최 BIE 유치관련 해외홍보 지원방안 협의 (2회, '02. 8.29, '02.11.28~29)

○ BIE 회원국 주재 홍보관 BIE 유치홍보활동 전개(언론사 및 관계자 접촉 등)

○ 외국 언론대상 홍보 적극 추진

-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취재 외신 대상(BIE 유치홍보자료 제공 등)
- 호주 AFR지 아태담당국장 초청('02.11.11~16, 여수홍보자료제공 및 설명회)
- 상주외신대상 홍보
  - F·T 서울특파원 등 대상 여수홍보자료 제공 및 설명
  -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자료 Press Release
  - 동계올림픽 유치위 관계인사 브리핑, Press Tour 추진('03.1월중)

○ 정기간행물 활용 홍보

- 'Pictorial Korea' 관련 기사 게재(세계박람회 : 4회, 동계올림픽 : 1회)
- 'Korea Now' 관련 기사 게재(세계박람회 : 2회)

○ 'korea.net' 활용 홍보

-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배너 등재 : '01. 4.26~'02.12. 4, 관련기사 등재 : 69건, 매거진 등재 : 4회 등)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배너 등재 : '02. 9. 6~, 관련기사 등재 : 6건, 매거진 등재 : 1회 등)



# 國 家 報 勳 處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60(01-15-01) | 전쟁관련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제고  | 1998.11.23 |
| 10(03-70-01)  | 실업대책 수립             | 1998. 3.26 |
| 48(08-70-03)  | 홍보노력 강화             | 1999. 3.16 |
| 137(03-70-10) | 경비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8)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366(09-70-39) |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7(03-70-48) |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    | 2000.10.23 |

## 1) 戰爭關聯 施設物の 管理 및 活用提高 : 260(01-15-01)

- 전쟁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통사람들은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뜻 깊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잘 관리해 주기 바람
- 외국인이 방문하면 전쟁관련 시설을 꼭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99. 7.12, 6.25 50주년기념사업단 사업계획 보고서)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01.12), 및 현충시설 관리규정(대통령령, 총리령) 제정('02. 3월 시행)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기반 조성
  - 관리번호 부여, 관리주체 지정, 관리비 부담, 관리내용 등 규정
- 시설상시 관리
  -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시설 785개소 분석
  -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자료 D/B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
  - 인근학교와 자매결연, 자원봉사 실시
- 국민교육 등 활용도 제고
  - 시설물 도록 발간 보급 : 3,000부
  - 탐방 프로그램 개발·보급(3,000부) 및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재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www.bohun.go.kr](http://www.bohun.go.kr) 보훈자료실란에 게재
  - 해외참전용사용 영문안내서 등 제작 보급으로 외국의 참전용사 및 관광객이 우리나라 전쟁 관련 시설을 방문토록 유도
    - 도감 발간 및 CD 제작(각 1,000부)
    - 각국 대사관, 외국보훈기관, 방한 참전용사에게 배부
  - 시설물에서의 사생대회, 백일장 행사 개최
    -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백일장 등 개최

## 2) 失業對策 樹立 : 10(03-70-01)

- 금번의 종합실업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음
- 각 부처에서는 실업종합대책을 숙지하고 부처별로 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98. 3.26, 국무회의시)
- IMF이후 증가한 140만명의 실업자중 1백만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했으므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
- 20대 실업자가 전체의 41%에 달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실업대책을 집중 강구해 주기 바람('99. 3.16, 국무회의시)

- 취업보호제도 개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99. 3)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실업자에 대하여는 재취업, 특별대부등 지원
- 우선보호 협조
  - 구조조정 은행, 부실퇴출기업체에 보훈대상자 우선보호를 협조의뢰
  - '99년말 1,692명 → 2000년 11월말 664명으로 실직자 1,028명 감소
- 취업 및 재취업 지원
  - 취업
    - '99년 : 취업목표 7,000명 → 8,350명 취업으로 119%, 실적 거양
    - '00년 : 취업목표 7,500명 → 8,455명 취업으로 113% 실적 거양
  - 재취업
    - '99년 : 573명,
    - '00년 : 79명('00. 11월말)
- 대부특별지원

- '99년 : 198명, 1,807백만원
- '00년 : 36명, 479백만원('00. 11월말)

### 3) 弘報努力 強化 : 48(08-70-03)

- 동강댐 문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예를 들어보면 한쪽 논리에만 치우쳐 있으며, 2000년대 물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홍보논리와 홍보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99. 3.16, 국무회의시)

- 사업별 홍보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사전홍보, 기획홍보의 강화
  - 보훈정책 결정시 구체적 홍보계획 수립시행
    - 보훈정책중장기발전방안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 2000년 보훈예산, 달라지는 보훈시책 홍보
    - 이 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매월 집중홍보
  - 보훈행사 계획수립시 이벤트행사 개발
    -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거북이마라톤대회 등 시민참여행사
    - 열린 음악회, 나라사랑음악회 등 국가유공자 위로행사 전개
- 보훈공무원의 홍보마인드 제고
  -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언론매체 참여권장
    - 중앙·지방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고, 인터뷰, 독자투고 활동전개
  - 보훈정책홍보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차장을 중심으로 각 실·국장 참석, 정책홍보 등 협의
- 보훈업무 홍보책자 발간
  - 책자 및 비디오 등 다양한 기획홍보물 창출
  - 6월 홍보책자 『보훈, 함께하는마음』, 『보훈, 나라사랑』 발간(각 2만부)
  - 보훈표어·포스터 현상공모 및 제작·배포(15만부)
  - 호국문예수기집(15천부), UN참전기념물도감(1천부), CD롬(1만개)
  -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00년 보훈사업개요(2천부)
  - 국가유공자와 유족등을 대상으로 보훈신문을 월1회(193,000부) 발행·배포

#### 4) 經費節減 努力強化：44(03-70-10)

- 각부처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예산절감 노력강화
  - 부처 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
  - 경비절감에 대하여는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98. 8.11, 국무회의시)
-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시행계획 수립 산하기관 시달('99. 5. 4)
    - 예산절감 성과금제도 추진목적 및 방향
    - 성과금 지급대상 및 성과금 지급 전담기구 설치내용
    - 성과금 지급액 산정기준 등
  - 예산절약 성과금제도 홍보('99. 9.17)
    - 예산성과금 홍보자료 팜플렛 산하기관 배포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사항 게재내용 안내
  - 예산절약 실적 및 성과금 지급신청('00. 1.21)
    - 직원 결원운영, 관보 구독량 감축, 당직인원 감축, 보일러공 인건비 절감 4건
    - 예산절약액 525백만원, 성과금 요구액 262백만원

- 예산성과금 조정결과 통보서 접수('00. 4.25)
  - 관보구독량 감축, 당직인원 감축 2건 채택(성과금 6백만원)
- 예산절감 성과금 (2명 : 600만원) 지급('00. 4.28)
- 2001년도 예산절감계획 수립시달('01. 2.15)
  - ※ 절감목표 :350백만원(관서운영비 261, 여비33, 업무추진비56)

## 5) 水害復舊 萬全 : 196(08-70-11)

- 전 국무위원은 수해현장을 방문 수재민을 위로 격려
-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철저한 수해대책 수립
-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참여토록 독려 수해대책 신속 추진 ('98. 8.11, 국무회의시)

- 수재지역 · 군부대 등 위로격려
  - 수해 중상이 국가유공자 안병호 위문 : 위문금 80만원전달
  -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위문 : 위문금 500만원 전달(차장)
  - 공군방공포사령부외 2개지역(위문금 각 300만원 전달)
  - 의정부시 재해대책본부 위문 : 위문금 30만원 전달(차장)
- 수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
  - 수재민 돕기 성금 50만원 서울신문사 기탁
  - 직원수재의연금 모금 KBS기탁(570백만원)
  - 수해지역 자원봉사활동 전개(수해복구지원) : 26개기관, 450명 인력지원 : 의정부시 호원동 두산APT지역
- 수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신속한 수해대책으로 조기 생활 안정 도모

- 수해지역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계 : 865가구 545,500천원)
  - 인명피해 : 5가구 12,000천원
  - 주택피해 : 189가구 198,000천원
  - 기타피해 : 671가구 335,500천원
- 수해지역 국가유공자 생활안정대부 지원(계 : 354가구 1,192,000천원)
  - 주택개량 : 26가구 146,000천원
  - 생활안정 : 305가구 721,000천원

## 6) 컴퓨터 2000年 問題關聯 : 164(07-70-15)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었음
  - 미국 고어 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부치 일본수상도 Y2K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여 각국이 찬성하였음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98.11.23, 국무회의시)

- 국가유공자 자력, 보상금 등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분석 및 변환
  - 변환 프로그램수 : 818본
  - 변환 자료건수 : 4,302,601건
  - 날자 항목수 : 2,285개
- 보훈병원 Y2K 문제점검 (‘99. 1.25~1.30)
  - 5개 보훈병원 입·퇴원 전산운영자료 및 첨단 의료장비 Y2K 문제점검
- Y2K 시험 및 종합점검
  - 컴퓨터 Y2K 문제해결 추진진도 평가 지침에 따른 이행 상태점검

-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험실시 ('99. 2. 1~3. 3)
- 「PC 점검의날」 추진계획 수립 ('99. 5.24~5.29)
- 「Y2K 비상 대비계획」 수립시행
- Y2K 자체 모의훈련 ('99.11.19)
- 외부전문가 Y2K 심사 ('99.11.27)
- 연도 전환기 비상근무 ('99.12.31~'00. 1. 3)
- 「'00년 윤년 대비계획」 수립 ('00. 2.17~2.23)
- Y2K 종합점검 결과
  - 년도, 나이, 일자 및 윤년 등 관련 프로그램 실험실시 결과 정상
  - PC에 대한 Y2K 문제해결 완료
  - 외부전문가 (한국정보통신 기술사 안기상) Y2K 심사결과 우수
  - 시스템 날짜 변경으로 연도문제 점검결과 정상

## 7) 公正한 人事行政 : 237( 08-70-18 )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서 해야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도 해야함. 즉 능력과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 ('99. 1.12, 국무회의시)

- 보직관리
  - 능력, 참신성을 고려한 보직부여
  - 전보등의 시행 전·후 여론 수렴을 통한 사전(후) 검증강화



- 전문업무 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산하기관)
  - 전보 : 3급 9명, 4급 25명, 5급이하 285명
- 승진관리
  -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실적에 따른 성과분석 및 자료관리
  - 승진심사시 심사위원 교체와 평가방법 다면화
    - 승진 : 2급 2명, 3급 2명, 4급직위승진 1명, 4급 1, 5급 5명, 6급이하 28명
  - 연공서열 위주의 우대평정 지양

## 8)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을 위하여 각부처 장관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연말에 각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 해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주요업무 점검·평가 계획 수립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3월)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수단·일정 등
  - 주요업무 평가계획 수립(5월)
    - 주요업무별 평가체계 및 방법, 점검·관리 일정 등
- 점검시스템 구성, 운영
  - 단위사업별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12회)
    - 문제점 발견 및 대안 개발 → 간부회의에서 토의 등 실시
    - 주요현안 체계적 관리(카드화)

-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 기획관리관실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월말 성과분석 실시(12회)
- 추진상황 점검 회의·보고
  - 확대간부회의 개최(4회)
  - 주간 실국장회의를 정책토의 중심으로 운영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개최(4회)
  - 전국보훈관서장 및 과장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평가보고회 개최(2회)
  - '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청와대 보고 : '01. 1.12
- 평가·점검 결과 '01업무계획 반영 등 환류조치

## 9) 公企業 監査結果에 따른 徹底한 實踐 : 386(03-70-45)

-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 수개월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00년 9.19, 국무회의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퇴직금 누진제 폐지 ('00.11월 완료)
  - 채무확정 : '99.12.31
  - 단수제 적용시기 : '00. 1. 1부터
- 대학생자녀 학자금 용자 전환 ('01.12.12.완료)
  - 학자금 지원 제도개선 동의 : '01.12.12

- 복리후생규정 개정 ('01. 2.28.이사회 의결)
- 시행시기 : '01. 1. 1
- 섭외성경비 법인세법상 한도액 범위내 편성 ('00.12.31.완료)
  - '01년 예산편성시 세법상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 ('00.12월)
  - 시행시기 : '01. 1. 1
- 합성수지사업 정리 ('01. 1. 1.완료)
  - 경영개선 추진 : 인력감축 23명,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7억원 시행
  - '00년 결산결과 3억원 흑자전환
- 향후 추진 계획
  - 노동조합전임자 정부기준 운영 (추진중) : 현행 13명→조정 8명 (△5명)
  - 노·사 계속 협의 추진

## 10)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 397(03-70-48)

-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 필요함.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
-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00.10.23, 국무회의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노·사간 협의 및 설득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
  - 노·사 협의기구 설치
    - 대표위원 : 기획이사
    - 위 원 : 의료이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총무부장, 서울병원 관리부장, 서울병원 총무과장

- 노사 협의 개최 8회 (정기 4, 임시 4)
- 임단협 교섭 24회
- 합리적인 정당한 요구 수용
  - 아웃소싱 대상직종 권익 최대한 보장 노력 (노조 설득)
    - 현 근무자 퇴직시까지 신분보장
  - 노조 요구사항 수용
    - 부족인력 단계별 충원, 명예퇴직제도 신설 등

# 中央人事委員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38(08-09-01) |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2000. 3.25 |
| 462(08-09-02) | 지연·학연 등 정실인사 배제         | 2001. 2.13 |
| 463(08-09-03) | 과학기술 공무원의 확보·활용         | 2001. 2.13 |
| 464(08-09-04) | 여성·장애인 공직진출 확대          | 2001. 2.13 |
| 465(08-09-05) |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활용    | 2001. 2.13 |
| 467(08-09-07) |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 2001. 2.13 |
| 600(08-09-08) |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강구           | 2002. 5. 9 |
| 48(08-70-03)  | 국정홍보 강화                 | 1998. 4.28 |
| 282(08-70-29) | 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5. 9 |
| 396(08-70-47) |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 2000.10.16 |

## 1) 民·官交流 活性化 方案 마련 : 338(08-09-01)

-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공사부문간 이해 증진 및 협조 강화를 위하여 민·관교류를 실시하되, 성급한 실행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속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00. 3.25,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

- 민간근무 휴직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00. 5~'00.10)
  - 휴직허용대상, 휴직기간, 부작용 방지대책, 인사관리방안 등 추진방안 수립
    -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00. 2)
    - 전경련, 중기협 등 민간경제단체와의 협의 추진('00. 2~3)
    - 대기업, 중소기업 등 91개 민간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00. 3~5)
  - 민간근무휴직제 추진방안 실무협의('00. 5~10)
- 민간근무휴직제 실시 법적 근거 마련('01. 3~'02. 7)
  - 국가공무원법 개정
    - 개정안 입법 예고('01. 3)
    - 중앙인사위원회 심사('01. 7)
    - 법제처 심사('01.10)
    - 국회 통과('01.12.20) 및 개정('02. 1.19)
  - 공무원임용령 개정('02. 1~7)
    - 임용령 개정 기본계획안 수립('02. 1.25)
    -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실무개정팀 구성('02. 2.15)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상정('02. 2.20)
    - 관련부처 실무협의 실시('02. 2.15, 2.27, 3.12, 3.22, 3.29)
    - 관련부처 의견조회('02. 5.11~5.16)

- 입법예고('02. 5.17~6.5)
- 중앙인사위원회 심사('02. 6.12)
- 공무원임용령 개정('02. 7.10)
- 민간근무휴직 실시('02. 7~)
  -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수립('02. 7.31)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기업 및 공무원 수요조사('02. 8)
  - 민간근무휴직 기본계획 수립('02.10.17)
    - 기본계획 민간기업 홍보 및 공무원 채용설명회 개최 병행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개최(3회)
    - 휴직 기본계획 심의('02.10.15)
    - 휴직대상 민간기업 선정기준 등('02.11.8)
    - 휴직대상 공무원 선정('02.12. 7)
  - 대상 민간기업과 개별 휴직계약 체결('02.12. 7~)
- '03년중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민간근무휴직 실태점검 및 평가 실시계획

## 2) 地緣・學緣 등 情實人事 排除 : 462(08-09-02)

-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
- 한 사람의 청탁 때문에 전체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인사문제의 가장 큰 폐단인 청탁을 배제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
-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불공정이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01. 2.13,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현직자 및 역대 정부의 선호직위 재직자 보직실태 조사('01. 1~2월)
  - 역대 정부의 정무직, 선호직위 재직자와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현직자 보직실태 등
- 공직인사채신대책 발표('01. 3.16)
  - 장·차관 인사시 출신지 교차 임명 고려
  - 각 부처별 선호직위에 대한 특정지역 과다점유 해소 노력
  - 다면평가제, 중앙인사위 인사심사를 통한 실적주의 인사 확립
  - 직무성과급제, 인사행정전담부서 등 신인사제도의 도입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01. 3~4)
-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각 부처 통보('01. 4. 7)
  - 실적주의 인사원칙 구현을 위하여 인사청탁의 배격, 인사심사의 강화,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승진·채용·보직관리 분야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확립

### 3) 科學技術 公務員의 確保・活用：463(08-09-03)

- 과학기술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핵심이므로 우수한 과학기술 공무원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01. 2.13,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확보·육성 방안’ 연구용역 실시('01. 4~10)
    - ※ 연구용역보고서 주요내용
    - 전문인력의 확보 및 처우개선



- 기술고시제도·특별채용제도 개선, 과학기술분야의 병역특례 대상기관을 정부부처로 확대, 경력산정의 합리화, 자격수당 신설 등 과학기술인력의 처우개선
- 인적자원의 개발
  - 공공-민간간의 과학기술인력의 인적교류 활성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할 기술직 및 행정직 고위정책 공무원의 재교육 강화
- 인사시스템의 재구조화
  - 연구개발직 신설, 복수직렬제도의 개선, 과학기술분야의 직렬신설 및 과학기술 직렬간 교류성 확보
-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01.11~'02. 3)
-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직렬별 정·현원, 행정·기술 복수직위 지정 현황 및 재직자 자료 조사·분석('02. 3~6)
- 과학기술공무원 확보·육성방안 추진상황 보고('02. 6)
- 중앙행정기관 기술직공무원 통계분석 및 육성방안 보고('02. 7)
- 과학기술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02. 7.29)
  - 정부내 기술직 정·현원 현황, 계급별 기술직 점유율, 복수직위내 기술직 보직 현황 등
- 마련된 방안을 유관기관인 행정자치부에 통보('02. 8)
  - 기술직 채용 확대, 기술직 정원·복수직위 조정을 위한 협의 진행중

#### 4) 女性・障礙人 公職進出 擴大：464(08-09-04)

- 여성공무원들이 최근 수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간부직 등에서는 아직 부족하므로 해당 전문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장애인들이 신체조건에 맞는 직종에서 몇몇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임용·배치시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01. 2.13,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

〈공직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중·장기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 45개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현황 조사(‘01. 4~5)
-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01. 5.29)
- 관련 부처·단체 관계관 회의 (‘01. 6. 4)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01. 9.28)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01.10.31)
  - 출산휴가기간 연장 : 현행 60일 → 90일(‘01.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신설 등을 위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01.11.13)
  - 30일 이상 육아휴직시 매월 20만원 지급(‘01.11. 1부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02. 1.19)
  -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 : 자녀 만1세 미만 → 만3세 미만
  -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02. 3.26)
- 각 부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자체계획 수립 제출(‘02. 4~6)

- 휴직일수(육아휴직 포함) 공제방식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02. 4.18)
  - 휴직일수 계산방식을 일(日)할 계산에서 월(月)할 계산으로 변경
-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 참석('02. 6.27)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방안 보고
-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협의('02. 7~9)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수립·시행('02.10)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01. 4~8)
- 장애인공무원 현황조사 및 분석('01. 4~5)
-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회의 참석('01. 7) : 국무조정실 주관
-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방안’ 마련('01.12)
  - 검토보고서를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에 송부
- 외국의 장애인공무원 제도 조사분석 및 자료집 발간('02. 4)
-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지침 개정 추진중

## 5) 人事政策支援시스템의 成功的 構築・活用 : 465(08-09-05)

-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은 정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전자정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01. 2.13,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

-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착수 : '00년
  - 인사정책 8대 개혁과제로 선정('00. 2)
  -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 확정('00. 7)
  - 1단계 사업 계약체결, 사업 착수('00.10)
  - 「인사정책지원시스템추진단규정」 공포('00.12)
-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 '01년
  - 공무원 인사전반 분석, 업무재설계 및 시스템 개발('01. 1~7)
  - 전자정부 구현 11대 과제의 하나로 PPSS사업 선정('01. 5)
  - 프로그램 개발 완료, 4개 시범부처 시스템 적용('01. 9)
  - PPSS 확대 적용계획 수립 및 실시 준비('01.10~12)
-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본격 확산·보급 : '02년
  - PPSS 운영지원센터(call center) 오픈('02. 1)
  - 31개 중앙부처에 확산·보급('02. 5~10)
  - 2단계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안정화('02. 5~12)
  - PPSS 개통식 및 시연회 개최('02.11~12)

## 6) 公務員의 삶의 질 향상 : 467(08-09-07)

-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레저, 근무여건 등에 각별히 유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01. 2.13,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

-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기 수립('00. 7)
  - 공무원 처우개선, 문화복지 및 자기개발 지원 확대, 근무여건 개선, 인적자원관리 개선, 직업 만족도·자긍심 제고 등 5대 과제 27개 소과제

-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우수사례집 발간·배포('01. 4)
  - 「자체 문화프로그램 운영」(농림부) 등 총 23개 우수사례 소개(19개 기관)
  - \*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 우수사례집 배포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사이트 개설·운영('01. 5)
  - 삶의 질 추진과제 홍보, 각 부처 우수 추진사례 및 민간과 외국의 모범사례 소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 「2001년도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01. 7~11)
  - 공무원 삶의 질 실태조사, 주요 외국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사례 소개,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의 평가 및 보완방안 도출
- 2001년도 각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평가('01.12)
  -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2001년도 인사행정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로 활용
  - \* 농촌진흥청, 기상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됨
- 2002년도 각 부처별 추진상황 점검('02. 7)

## 7) 退職公務員 活用方案 講究：600(08-09-08)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고 있어 안타까움.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현재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담당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학교주변 환경관리·독거노인 방문·장애인 지원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 '02. 5. 9,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

-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기본계획 마련 : '02. 6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 : '02. 6
  - 자원봉사 분야 개발 등 퇴직공무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
- 퇴직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02. 9~10
  -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무원연금'(月刊誌)에 퇴직자 자원봉사활동 안내(광고 게재)
  - '상록 자원봉사단' 모집
    - ※ 214명 모집, 80명 1차 교육실시('02.11.23~26, 수안보 상록호텔)
- 퇴직공무원 인력정보 DB구축 및 퇴직자 통계 구축 : '02.11~12
  - 인력정보 DB 및 통계에 필요한 항목 선정
  - 전자인사시스템(PPSS)에 퇴직자 DB 및 통계 프로그램을 마련중

## 8) 國政弘報 強化 : 48(08-70-03)

-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함께 얻어야 함
-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임
- 또한 사후(事後)적인 홍보보다 사전(事前)에 기획된 홍보가 중요하므로 국무위원들은 국민과의 교감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공보관들은 서로 연계하여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00. 1.25, 국무회의시 )

- '00. 2.19 : 2000년 주요업무계획 홍보
  - 공직분류체계개편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 고시제도 개선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
- 주요정책 홍보시 관련부처와 협조 조치

## 9) 來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올해 우리가 한 일과 내년과 새 천년에 해야할 일을 잘 정리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부처는 올해 추진한 일과 새 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홍보
    - '99. 9. 1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가계지원비 등) 발표
    - '99. 9.29 : 공무원 특수지 전면 정비
    - '99.10.12 : 국가인재DB 웹사이트 개설
    - '99.11.15 : 개방형직위제도 실시(개방형직위 선정결과 발표)
  - '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홍보
    - '00. 2.19 : 중앙인사위원회 '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 고용휴직제 실시, 고시제도개편 등

## 10) 各 部處 改革方案 報告 : 304(08-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 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향을 보고해 주기 바람
  -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00. 3.25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업무보고
  -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개방형 임용체제 구축
  -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체제 개편
  - 공무원 삶의 질 향상 등

## 11)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함,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가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00. 5. 9, 국무회의시)

- 매주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주례 간부회의시 점검
- 분기별로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단위실천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
- 각종 인사제도 개선, 직무분석 실시, 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추진에 있어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와 긴밀히 협의



## 12) 公務員 人事制度의 改革 : 396(08-70-47)

-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외교관의 계급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문성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이러한 제도는 다른 부처에도 널리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공무원 인사제도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나 가야 할 것임('00.10.16, 국무회의시)

- ‘공무원 보수등급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00. 4~8)
- 외교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시범 실시('00. 5~12)
- 외무공무원법 개정('00.12.29) : 계급제 폐지, 과장급 이상 직위공모제 도입
- 건설교통부·국세청·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 실시('01. 3~12)
- 외무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개정('01. 6.30)
  - 보수등급제 도입
  - 직무분석 실시 근거 신설
- 해양경찰청·조달청·농촌진흥청 직무분석 실시('02년)
- 국가공무원법 개정·공포('02. 1.19)
  - 특별채용제도 합리화,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시간제공무원제 도입 근거 신설
  - 명예퇴직수당 관련 제도 개선,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근거 신설
  - 임용권 위임 확대, 직위해제 요건 강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2. 1.26) : 특채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무원임용령 개정('02. 7.10) :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02. 7.13)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 도입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개정('02. 7.13) : 명예퇴직수당 환수  
근거 신설, 별정직·고용직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신설

## 中小企業特別委員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508(03-07-01) | 중소기업 자금대출강화방안 마련 | 2001. 4. 9 |
| 509(03-07-02) | 소상공인 적극 지원       | 2001. 4. 9 |

## 1) 中小企業 資金貸出強化方案 마련 : 508(03-07-01)

-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직 중소기업신용을 평가하고 이에 바탕한 대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01. 4. 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 특위에 「정책자금개선분과위」 설치 및 운영
  - 「정책자금개선분과위」를 특위내에 설치(01. 4월)
    - 중소기업과 관련된 7개 부처 등 11개 기관이 참여
    -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절차 간소화와 신용대출 확대 등을 검토
  - '02.12월까지 12차례 회의 개최
- 정책자금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책자금안내시스템(www.finainfo.go.kr)」 개통('01.11월)
    -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약 320종을 검색
  - 동 시스템에 사이버 무료 상담제도 및 e-mailing 시스템 구축('02. 9월)
- 정책자금 관련절차 간소화 추진
  - 정책자금절차개선 추진방안 마련('02.11월)
    - 표준서식 채택, 심사기한 30일원칙 준수 등 3개 부처 39개 자금에 대해 '02년부터 적용
  - 정책자금 절차개선 추진실태 점검('02. 7월, 9월)

## 2) 小商工人 積極 支援 : 509(03-07-02)

- 소상공인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인간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도 중요함
  - 5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82만건에 달하는 상담과 85천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음
-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계속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해야함  
(’01. 4. 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99. 2 ~현재)
  -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성 분석, 창업아이템 선정 등 창업 및 경영상담과 자금추천, 창업매뉴얼 발간·보급, 창업교육, 설명회 개최 등 현장지원업무 수행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5만여건, 1조 1,600억원 지원
    - \* 2002년도 소상공인지원자금 : 2,500억원
  - 10만여건의 창업 및 경영상담, 4,555개 지역 상권조사를 비롯해 창업설명회, 소자본 신산업박람회 등 각종 지원활동을 실시
- 1999년 이후 6만여업체에 15만여명의 고용효과를 실현

# 公正去來委員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6(03-16-01)   |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 1998. 3.16 |
| 80(03-16-02)  | 공정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 1998. 6.27 |
| 349(03-16-03) |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2000. 4.18 |
| 425(03-16-06) |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   | 2001. 1.29 |
| 48(08-70-03)  | 경제정책관련 대외 홍보강화  | 1998. 4.28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80-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76(08-70-27) |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br>(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1999. 9. 7 |
| 282(08-70-29) | 대국민 과제 홍보   | 1999. 12.7 |
| 304(03-70-32) | 각 부처의 개혁방안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공정한 선거관리  | 2000. 3.21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내용의 차질없는 실천   | 2000. 5. 9 |
| 392(03-70-46) | 4대부문 12대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br>· 부당내부거래감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br>·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2000. 9.19 |

## 1) 카르텔 一括整理法 制定 : 6(03-16-01)

- 카르텔 일괄정리법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므로 적극추진 할 것  
(‘98. 3.16,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서)
-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99. 2. 5, 공포)하여 개별 법에 근거를 둔  
전문자격사나 보수결정, 단체수의계약제도, 입찰담합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경성카르텔 20개를 ‘99. 2월 폐지

## 2) 公正委員 權限 및 機能強化 方案 : 80(03-16-02)

- 공장위의 조사권한 및 기능확대가 필요한 바, 면밀히 검토후 보고해  
주기 바람(‘98. 6.27,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부당내부거래 조사실효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한시적으로 신설
- 기업결합시정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이관 등(‘99. 5, 완료)

## 3) 電子商去來의 公正한 競爭秩序 : 349(03-16-03)

- 전자상거래상 불공정행위나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  
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00. 4.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서)
- 전자상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감시를 위한 ‘전자상거래감시반’ 설치·운영  
(’00. 4, 완료)

#### 4) 外國企業의 不公正去來行爲에 對應：425(03-16-06)

- 우리기업이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국제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01. 1.2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서)
- 외국기업의 불공정 사례조사(’02. 2~12)
    -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 일본, 미국 및 독일 국적의 6개 흑연전극봉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11,242백만원) 부과
    -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국내기업의 역외적용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01.11)
    - 국내업체 관계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5) 經濟政策關聯 對外 弘報強化：48(08-70-03)

- 경제정책의 혼선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기관간 협의 후 정책 발표
    - 잘못 보도된 것은 반드시 해명하고 편집국장 등에게 시정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할 것(’98. 4.28, 국무회의시)
- 주간 보도계획은 각 부처 공보담당관실과 협의 후 작성
  - 주관국은 주요정책 발표시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후 보도자료 생산
  - 오보 및 과장보도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 사전에 기획된 홍보추진('00. 4, 완료)

## 6) 컴퓨터 2000年 問題 關聯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것임  
( '98.11.23, 국무회의시)
- Y2K문제 대책수립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확인·검증후 Y2K문제해결  
완료 자체선언('99. 9) 및 실제검증 완료('99.12)

## 7)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능력과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인사를하고, 특정고교출신이 인맥을  
지배해서는 안됨('99. 1. 1, 국무회의시)
- 승진·임용시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함  
( '99.12)

## 8) 8.15 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出資總額制限 制度 導入) : 276(08-70-27)

- 새천년을 맞는 각 분야의 국정개혁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출자총액제한 ('99. 9. 7, 국무회의시)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99.12.28) 및 시행령 개정 ('00. 4. 1, 시행)
- 30대집단의 출자동향 및 구조 점검('00. 7)
- 30대집단 임직원 교육실시('00. 2, 9 : 2회 실시)
- 출자한도초과액 기한('02. 3.31)내 무리없는 해소를 유도('01. 6)

## 9) 對國民 課題 弘報 : 282(08-70-29)

- 올해 추진한 일과 내년에 추진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언론을 통한 홍보(보도자료,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 강연·기고를 통한 홍보
- 대외 홍보 및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배포('00.12)

## 10) 各 部處의 改革方案 報告 : 304(03-70-32)

-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시가 바람  
- 투명한 행정구현,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확대 등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 전자상거래발전 환경조성
- 소비자 정보제공 및 피해방지 강화
- 독과점 구조·담합관행 개선, 업무역량 강화 등 ('00. 4)

## 11) 公正한 選舉管理 : 332(08-70-34)

- 공명선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특히 공무원 선거불개입, 부패없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  
히 단속해야 함('00. 3.21, 국무회의시)

- 공명선거실현에 대한 국무총리지시 전파 ('00. 4)  
- 고위공직자 지방출장자제 지시통보, 홈페이지 선거안내 및 안내방송  
실시 등

## 12)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內容의 철처한 實踐 : 366(09-70-39)

-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특히 부처간 당 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 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세부적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단위 실천과제별로 목록 작성 관리
- 추진실적 중간점검 및 내용 비서실에 송부
- 최종 추진실적 점검('00.12)

## 13) 4대부문 12대 核心改革 課題의 蹉跎없는 추진: 392(03-70-46)

- 관계부처 장관은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야 할 것임
  - 부당내부거래감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00. 9.19,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 부당내부거래 감시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01. 1.16부터 시행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진행 중)
  - 출자한도초과액이 해소 기한내에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되,
  - 미해소된 출자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그 대상주식을 공시도록 함

# 金融監督委員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62(03-20-01)  | 금감위 분발촉구              | 1998. 6.16 |
| 69(03-20-02)  | 정리은행 인수등 철저           | 1998. 6.30 |
| 81(03-20-03)  | 금융감독기관 직원교육훈련 강화      | 1998. 6.28 |
| 82(03-20-04)  | 구조개혁기획단 직원 신분문제 조치    | 1998. 6.27 |
| 112(03-20-05)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도덕적해이 극복    | 1998. 7. 7 |
| 180(03-20-06) | 경기활성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9. 1.30 |
| 308(03-20-07) | 신용불량자 사면조치의 이행        | 2000. 2. 1 |
| 377(03-20-08) | 워크아웃제도의 보완            | 2000. 7.10 |
| 394(03-20-09) |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        | 2000.10. 4 |
| 398(03-20-10) | 금융감독원 쇄신              | 2000.10.31 |
| 568(03-20-11) | 대출문화의 혁신              | 2002. 3. 8 |
| 569(03-20-12) | 주가조작에 엄중 대처           | 2002. 3. 8 |
| 570(03-20-13) |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       | 2002. 3. 8 |
| 10(03-70-01)  |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 1998. 3.18 |
| 48(08-70-03)  | 홍보노력의 강화              | 1998. 4.28 |
| 65(03-70-05)  | 부실판정기업의 협력업체 대책마련     | 1998. 6.19 |
| 113(03-70-07) | 재계와의 협력강화             | 1998. 7. 7 |
| 159(03-70-14) |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확보 노력강화    | 1998.10.12 |
| 164(07-70-15) | 컴퓨터 2000년 문제관련        | 1998.11.23 |
| 175(08-70-16) | 공정한 인사행정              | 1999. 1.12 |
| 276(08-70-27) |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 | 1999. 9. 7 |
| 282(08-70-29) | 2000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     | 1999.12. 7 |
| 304(03-70-32) | 각 부처 업무보고는 개혁방안을 보고   | 2000. 2. 1 |
| 332(08-70-34) |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홍보 강화     | 2000. 3.23 |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366(09-70-39) |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 | 2000. 6. 9 |
| 385(03-70-44) |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         | 2000. 9.19 |
| 386(03-70-45)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     | 2000. 9.19 |
| 392(03-70-46) | 4대부문 12대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 2000.10. 4 |
| 399(03-70-49) |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         | 2000.10.31 |

## 1) 金監委 奮發 促求 : 62(03-20-01)

- 금감위는 금융감독 및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98. 6.16, 국무회의시)

- 금융감독기능 강화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제도 도입
  - 금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회계기준 선진화 등
- 5대 그룹 구조조정
  - 재계-정부-금융기관 합동간담회(‘98.12, ‘99. 4. 8)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99.11)
    - 5대그룹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20개 실천사항 합의
    - 채권금융기관의 5대그룹 구조조정 이행실적 점검(월별) 및 독려
    -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점검 및 부채비율 200% 감축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등
- 6대 그룹 및 64대 중견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간 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 제정(‘98. 6)
  - 금융감독원 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98.11~)
- 중소기업 구조조정
  -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전담관(은행검사역)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파악 및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점검·독려(‘98. 6)
  - 우선지원 및 조건부지원기업에 대한 일괄 여신만기연장 조치 시행(‘98. 7~99. 6)

## 2) 整理銀行 引受 등 徹底 : 69(03-20-02)

- 은행 구조조정시 원칙을 지키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것  
(‘98. 6.30, 국무회의시)

- 5개 정리은행 인수
  - 5개 정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작업 및 인수 완료(98. 9)
  - 정리은행 인가 취소(‘98. 9)
-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
  - 5개 정리은행 부채초과분 지원(‘98. 9) : 5.8조원(예금보험공사)
  - 5개 정리은행 및 인수은행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서 매입(‘98. 9) : 7.3조원 정리
  - 5개 인수은행 증자지원(‘98.12) : 1.2조원
-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 5개 정리은행 직원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고용토록 인수은행에 지도하여 재고용 계약 체결(‘98.10)
-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최소화
  - 만기도래 여신의 연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 거래기업에 대한 기존의 신용공여한도 인정 등 업무지도
  - 관련법의 개정에 의한 법적 시비 등 문제점 최소화



### 3) 金融監督機關 職員 教育訓練 強化：81(03-20-03)

- 최근의 금융부실 및 금융위기가 금융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교육훈련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감독기관 직원에 대한 연수강화 지시  
(‘98. 6.27,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회의시)

- 금융감독관련 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연수의 내실화
  - 「금융감독부문 연수강화 세부시행방안」 수립·추진(‘98. 7)
  - 금융감독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직급별·단계별\* 업무능력개발연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 연수과정 이수율 의무화(‘00.1.1부터 시행)
    - \* Core과정(4~5급) → Specialist과정(2~5급) → 종합감독과정(2~3급)
  - 직급별 연수학점의무이수제 및 감독분야별 금융전문역제도 도입(‘02. 1부터 시행)
  - 금융감독관련 자체연수 및 국내 전문연수기관 개설과정 파견연수 지속 실시
    - ‘98년: 1,177명, ‘99년: 1,298명, ‘00년: 1,441명, ‘01년: 1,543명, ‘02년: 1,654명
  -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PC 등을 활용한 정보처리능력 배양연수 실시
    - ‘00년 : 794명, ‘01년 : 382명, ‘02년 : 74명
- 외국 선진기법 도입 및 금융감독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
  -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에 파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
    - ‘98년 : 72명, ‘99년 : 76명, ‘00년 : 79명, ‘01년 : 80명, ‘02년 : 89명
  - 금융감독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학술연수 실시(‘99년이후 실시)

- 해외정규(2년) : 37명, 해외연구(1년) : 24명,  
국내정규(2년) : 39명, 국내연구(1년) : 17명

#### 4) 構造改革企劃團 職員 身分問題 措置 : 82(03-20-04)

- 구조개혁단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98. 6.27,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별도정원 인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협의
    -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98. 7)
    - 구조개혁기획단 근무 공무원을 '99.12월말까지 별도정원 인정(12명)
    -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00.12월말까지 연장(5명)
  - 대통령 훈령 제정
    - 행자부·법제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통령훈령인 「구조개혁기획단설치및운영규정」 제정('98.11)
    - 「구조개혁기획단설치및운영규정」을 개정('00. 1)
- \* 구조개혁기획단 :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구조조정 추진상황의 점검 및 사후관리,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IMF·IBRD 등과의 협의 및 합의 사항의 이행점검 등을 담당

## 5) 構造調整過程에서의 道德的 解弛 克復 : 112(03-20-05)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퇴출금융기관 금융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98. 7. 7, 국무회의시)</li> </ul> |
|--|
- 관계기관 법적 조치
    - 회사가 정리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장은증권(주)를 상업상 특별배임죄(제622조)로 검찰에 통보('98. 7)
  -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 동화은행 등 5개 정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 실시('98. 8~9)
      - 검사결과 여신취급이 부적격한 94개 업체에 1조 3,016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부실 자회사에 대해 변칙적이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1조 1,794억원을 지원
  - 관련법규 위반자 조치
    - 장은증권(주) 대표이사 이대림 해임권고
    - 동화은행장 이재진외 임원 55명 문책조치
    - 불법행위자 170명(임원 22명, 직원 148명)을 형사고지 또는 통보

## 6) 景氣活性化 對策의 蹉跎없는 推進 : 180(03-20-0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부와 금감위는 금융경색 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야 함. 신용경색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조사기능이 발전되어야 함('99. 1.30, 경제부처 실·국장 초청오찬시)</li> </ul> |
|---|
- 「중소기업 신용평가모델 혁신방안」 Workshop 개최('99. 1)

- 10개 신용등급, 업종별 8개 모형, 위험별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신용평가모델 구축
- 동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신용평가모델」을 구축·운용토록 지도('99. 2)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체계적 지원 및 기업개선작업 활성화 유도
  - 은행여신거래 중소기업 38,014개('99. 6월말현재)에 대한 3단계 분류 실시
    - 우선지원 기업 : 14,811개, 조건부지원 기업 : 21,110개, 기타기업 : 2,093개
  - 우선지원기업 및 조건부 지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 '99.12월말까지 76조 502억원 지원계획 수립
- 중소기업 금융애로의 적극적 해소를 위해 금감원 본부 및 지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 설치·운영('99. 1)
  - '99. 1~'02. 9월중 접수건수 401건, 처리건수 401건
-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 22개 전은행('99. 7)
- 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모니터링
  - ('99년) 148.7조: 67.2%(총기업실적대비) → ('00년) 164.5조: 69.0% → ('01년) 150.3조: 76.1% → ('02.11) 188.5조: 79.1%

## 7) 信用不良者 赦免措置의 履行 : 308(03-20-07)

- 생계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들을 사면토록 했으나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음.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긴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신뢰성이 유지되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신용불량자 사후관리기록 삭제

- 삭제실적('00. 4.24 현재) : 468,178건

- 소액연체자 기록 일괄삭제 442,444건
- 금융기관 자체심의 삭제 25,734건

○ 삭제기준

- 일괄삭제

- '97.11. 1~'99.12.31기간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00. 3.31까지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
- 대출금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에 의한 주의거래처로서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에 의한 주의거래처로서 등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

- 금융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한 삭제

- '97.11. 1~'99.12.31 기간중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나 '00. 3.31까지 상환을 완료한 자중 위 일괄삭제 대상이 아닌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
- 개별 금융기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기록삭제를 결정한 경우

## 8) 워크아웃制度의 補完 : 377(03-20-08)

- 워크아웃제도가 폐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오히려 법정관리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음.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00. 7.10, 국무회의시)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에 입각한 워크아웃 추진방향 지도
  -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00. 4~5)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워크아웃기업별 추진방향 지도('00. 5)
  -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워크아웃기업 20개사 정리방향 발표(채권단, '00.11)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해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협약의 자율운용과 관련,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추진방향 분류('00.11)
  - 워크아웃 추진방안 점검 지도('01. 8, '02. 1) 및 지도방향 수립('02. 3)
  - 워크아웃 부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02. 5)
  - 워크아웃기업 경영관리단장 면담 실시 및 원활한 워크아웃추진 지도('02. 7)
- '02.12월말 현재 워크아웃적용 83개 기업의 현황
  - 조기정상화 55개사(66.3%), 워크아웃 중단 16개사, 계속 추진중 12개사
- 워크아웃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 도입('00.1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00.12)
    - 채권금융기관간 CRV 설립협약 체결('01.12)
    - '02.12월말 현재 4개 워크아웃기업(신우, 오리온전기,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대우캐피탈) CRV 등록
  - 워크아웃 진행중 회사정리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기존의 워크아웃 플랜을 정리 계획안으로 제출토록 하는 사전제출제도 도입('01. 4)
  -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규칙의 명확한 정립과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01. 9)

## 9) 道德的 解弛 防止對策 樹立 : 394(03-20-09)

- 부실기업 매각,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00.10. 4, 4대 부문 합동보고회의)

-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검사 실시('00.11월말 현재 279개 기관)
  -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자에 대한 문책 및 형사조치하고 예보에 통보하여 민사조치 지원(임직원 2,169명 문책, 이중 1,043명은 수사기관에 고지)
-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00.11)
  - 금융기관별 상시감시요원을 지정하여 밀착 모니터링 실시
  - 금융사고제보센터 설치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시행
- 신제도 조기정착 유도로 경영투명성 제고
  - work-shop 개최 등 FLC제도의 조기정착 지도('00.10)
  - 금융기관에 대한 FLC 및 내부통제제도 이행실태 점검('00.11~12)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경영진·채권단의 도덕적해이 방지 지도
  - 금감원·채권금융기관 합동으로 실태검사 실시('00. 7) 및 검사결과 나타난 회사 경영진, 채권단의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조치 시행
    - 관련기관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및 공정위에 통보('00. 9)
    - 여타사항에 대하여는 채권단을 통하여 조치 및 지도('00. 8)
  -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도('02. 3~5)
    - 대우전자 등 워크아웃 부진 5개 기업에 대한 구사주 경영권 배제, 경영진 교체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도모

## 10) 金融監督院 刷新：398(03-20-10)

- 금감원은 이번 일을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클린금감원으로 거듭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함. 기구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 철저히 자정노력을 해야 함. 부정에 연루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임  
(‘00.10.31, 국무회의시)

-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자를 1,2급 직원까지 확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01.4) 및 「직원의재산등록신고등에관한세칙」 제정(‘00.11)
- 감사실 확대개편(인력 5명 증원 배치, ‘00.11)
- 직원윤리규범 강화
  - 직원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개정·시행(‘00.11)
-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 신탁의 예탁금 대출한도 승인제 폐지(‘00.12)
  - 유가증권 인수감독기능을 증권업협회로 이양(‘00.12) 등
- 검사시스템의 개선
  - 특정부문에 대한 회계법인앞 검사위임방안 마련(‘00.11)
  - 기능별 검사인력 pool제 운영(‘00.11) 및 기관별 상시감시요원 지정(‘00.10)
  - 감사원 복무수칙 개정 및 일일복명제 도입(‘00.11) 등
-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허가 처리상황 공개(‘01. 2)
- 감독규정 제·개정시 사전예고지침 마련 및 시행(‘00.12)
-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3인(변호사1, 법학교수2) 추가 영입(‘00.11)
- 직원의식개혁 차원에서 임직원으로부터 서약서 징구(‘00.12)



## 11) 貸出文化의 革新 : 568(03-20-11)

- 지금까지는 담보대출이 상식화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중심의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문화의 개혁이 있어야 함  
(‘02. 3. 8,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서)

- 신용여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업신용정보 집중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
    - 기업신용정보 집중대상 기업대출금 범위를 1억이상 기업 대출금에서 모든 기업 대출금으로 변경(‘02. 4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02. 9시행)
  - 기업신용위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1회 「신용위험분석사」(CRA)자격시험 실시(제1차시험: ‘02. 7, 제2차시험: ‘02.11)
  - 분식회계 근절 등을 통한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현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철저한 감사 촉구(‘02. 1)
    - LG산전 등 13개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적발 및 검찰 고발 조치(‘02. 3)
    - 금융회사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02. 3)
    - 한원마이크로웨이브 등 44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02. 4, 6, 10, 12)
    - 공개예정기업 우선감리실시방안 마련(‘02. 7)
    -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등을 위한 회계제도개혁방안 발표(‘02.11)
- 신용여신 취급관행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독려
  - 분기별 신용자금 취급실적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02. 3, 6, 9)
  - 기업신용여신 취급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20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진은행에 대하여 지도 실시(‘02. 7)
  - 신용여신 취급 우수은행(기업, 한미)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포상 실시(‘02.12)

## 12) 株價操作에 嚴重 對處 : 569(03-20-12)

- 주가조작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한국 주가가 저평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주가조작이 계속 존재한다면 금감위가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중하게 단속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02. 3. 8,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서)

-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실시 및 강제조사권 행사
  - 코스닥 종목 A사에 대해 금감위 조사기획과·금감원·증권업협회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시세조종혐의가 확인된 동사의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고발 조치('02. 8)
-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02. 3~12 기간중 협의회를 6회 개최하여 조사업무의 제도·실무적 개선방안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시장감시시스템을 금감위 및 금감원이 공유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02. 4)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혐의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부당이득 50억원)까지 벌칙을 강화('02. 4)
  - 불공정거래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영업점 폐쇄(3개) 및 영업정지(6개) 등 강력한 제재 시행('02. 4, 9)
  - 불공정거래 연루 투자상담사 등에 대해 종전 최고 5년 이하의 등록취소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자격취소로 취업제한 강화('02. 3)
- 조사업무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온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위한 「온라인주문매체정보인식

시스템」 구축('02.12)

-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 상장·등록법인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02. 3~12, 21회 실시)
  - K-TV 국정 초대석('02. 3), YTN 경제와이드 출연('02. 4) 및 증권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광고 2편 제작·방영('02.10)
  - 「증권시장불공정거래 판례집」 및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책자 발간('02.12)

### 13) 第2金融圈에 대한 監督 強化 : 570(03-20-13)

- 제2금융권의 금융사고는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함. 옥석을 가려내어 제2금융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기 바람  
( '02. 3. 8,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시)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사·감독 강화

#### 【신용협동조합】

- 회계분식 점검('02. 3, 4) : 40개
- 여유자금 운용실태 점검('02. 2) : 95개
- 신탁중앙회 임원조합에 대한 종합검사('02. 6) : 4개

#### 【여신전문금융】

- 경영권이전 여전사 인수자금 적정성 점검('02. 3) : 2개

#### 【종합금융회사】

- 전체종금사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02. 9, 10) : 3개

○ 경영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신용협동조합】

- 부실신협정리대책반 구성·운영('02. 9)
- 부실신협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를 통하여 신속히 퇴출 : 140개

【상호저축은행】

- BIS비율이 4%에 미달하는 저축은행 점검('02. 4) : 7개
- 부실예측도가 높은 저축은행 점검('02. 4, 8, 9, 10, 11, 12) : 16개
- 7개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02. 2, 8)

【여신전문금융】

- 자산건전성취약(5등급) 리스사 점검('02. 4, 7) : 4개
- 적기시정조치 유예중인 여전사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점검('02. 8) : 13개

○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검사 강화

- 금융비리 정보수집을 위한 감찰반 운영 : 171개 점검
- 현금피탈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실태 점검 : 116개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협 경영진 회의 개최('02. 1)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실태 점검 : 130개
- 사고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기동점검 : 52개

## 14) 失業問題에 대한 積極 對處 : 10(03-70-01)

- IMF이후 증가한 140만명의 실업자중 1백만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함('98. 3.18, 국무회의시)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직 발생의 최소화 도모

- 금융기관의 퇴출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수금융기관들에 의한 퇴출기관 직원의 재고용 등 고용승계 적극 유도('99.12)
- 청산은 최소화하면서 합병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 실직발생을 가급적 최소화('99.12)
-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직금융인에 대해서는 재취업 알선 및 재교육 기회 부여
  -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에 「전직금융인 재취업센터」를 설치하고 퇴직자 인적사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00. 3)
    - 금융부문 경력자 채용수요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적극 알선 ('00.12월 현재 1,665명 재취업)
  - 금융연수원 등 금융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실직 금융인에 재취업교육 실시
    - '98년 : 955명, '99년 : 2,308명, '00년 : 354(금융연수원)

## 15) 弘報努力의 強化 : 48(08-70-03)

- 정부가 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 국민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98. 4.28, 국무회의시)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추진성과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를 도모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의 적극 생산·배포
      - '99년 : 780건, '00년 : 781건

- 금융·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강연, 언론사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에 적극 참여
  - '99년 : 118건, '00년 : 97건
- 금융감독정책 등에 대한 부서장 기자간담회(주 2회) 및 출입기자 업무설명회(월 1~2회) 개최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등 금융정책관련 홍보자료 7종 제작·배포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등 주요현안관련 신문광고 3회 실시
- 금감위(원) 간부의 언론사 간부 등 여론 선도층과의 지속적인 대담 추진
- 인터넷 홍보 강화 및 협회 등 관련기관과의 홍보협조체제 강화

## 16) 不實判定企業의 協力業體 對策 마련 : 65(03-70-05)

- 부실판정기업들과 거래해 온 협력업체들의 권익보호와 존립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98. 6.19,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금융기관별 중소기업지원 점검 전담관 파견 및 악성루머 일제단속 실시
    - 은행별로 전담관을 지정 파견(‘98. 6~12)
      - 담당은행의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활동상황, 기업부실판정결과 후속조치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립·해결
    - 루머단속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자금경색설 등 상호비방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을 설치하여 금융거래상 애로 해소

- '98. 4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되었던 「금융애로대책반」 업무를 인수('99. 1)
- 중견·중소기업 여신의 만기연장방안 수립·시행('98. 6, 12)
- 전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실태 점검 및 독려('98. 6~12)
  - \* 자금지원 현황은 '01년말까지 모니터링
- 중견·중소기업 여신의 만기연장을 통한 자금경색 해소에 기여
  - ('98년 81조 2,591억원, '99년 73조 612억원)

## 17) 財界와의 協力 強化 : 113(03-70-0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도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br/>('98. 7. 7, 국무회의시)</li> </ul> |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결합채무제표 조기도입('00년→'99년)('98. 2)
    - 외부 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에 대한 처벌 강화('98. 2)
    -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회계수준으로 대폭 개정('98.12) 등
  - 상호지급보증 금지
    -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채무보증 금지('98. 2)
    - 금융기관의 상호채무보증 요구행위 금지('98. 4)
  - 재무구조의 개선
    -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부인을 조기 실시('02년→'00년)('98. 2)
    -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활성화('98. 2)
    - 주채권은행과 주계열사간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98. 4) 등
  - 핵심부문의 설정
    - 계열사정리 등 구조조정계획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98. 2)

- 기업분할제도 도입('98.12)
-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98. 2)
  - 상장법인의 사회이사 선임 의무화('98. 2) 등
- 퇴출관련제도의 개선
  - 「회사정리법」을 개정('98. 2, '99.12)하여 회사정리 절차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채권자의 역할을 강화
  - 의무공개매수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98. 2)

## 18) 經濟回復對策의 實效性確保 努力強化：159(03-70-14)

- 경제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많음. 주무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되도록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98.10.12, 국무회의시)

- 대출금리인하 지도
  - 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토록 지도('98.10)하고 그 이행실태를 현장점검('98.10~12)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납입유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을 수립·시행('98.10)
- 「중소기업지원특별대책반」등 설치·운영



- 각 은행 등에 「중소기업지원 특별대책반」 및 「중소기업 금융애로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지도('98.10)
- 금융감독위원회에 「중소기업금융 애로대책반」 설치·운영('98. 4)
- 금융기관장 일선기관 방문 등 고충처리
  - 각 감독원장·협회장·보험사사장들이 일선 대출창구 및 중소기업체를 방문, 고충처리

## 19) 컴퓨터 2000年 問題關聯：164(07-70-15)

-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음.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98.11.23, 국무회의시)

- 금융기관의 컴퓨터 '00년 문제에 대하여 '98년부터 매분기별 진행현황을 파악·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강화
- 금융기관이 여신 심사시 거래기업의 '00년 문제 대응현황 평가를 반영토록 권고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컴퓨터 '00년 문제 해결 촉진('98.11)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00년 문제 대응현황을 포함토록 규정화('98. 7)
- 보험 약관에 '00년 문제와 관련된 면책 조항 추가('98. 7)
- 금융기관의 '00년 문제 해결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 금융기관 '00년 문제 해결지원 방안 수립('99. 1)
    - 은행·증권·보험 분야 및 학계 교수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립(6회)
    - 금감원에 Y2K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중요 금융기관 560개에 대한 현장점검

- 유사시 최소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
- Y2K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99.12.31 및 '00. 1. 3 양일을 금융휴무일로 지정
-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공동망에 대한 종합테스트 3회 실시
- 세기말 전후 기간중 Y2K 종합상황실 가동('99.12.29~'00. 1. 7)
- Y2K 특별대책팀을 '00. 3월말까지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20) 公正한 人事行政 : 175(08-70-16)

- 인사는 능력, 청렴성, 헌신성에 기초해야 하며, 국민적 단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해야 함. 장관들은 자기부처의 인사를 점검해 보고 편중을 시정해야 함. 특히 특정고교출신 인맥이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것임('99. 1.12, 국무회의시)
- 금감위 자체인사시 특정학연, 지연, 인맥에 따른 편중인사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 실시
    - 과장급이상 간부의 출신지역별, 학교별 현황 점검
    - 전보 및 승진인사시 업무추진능력, 해당직위의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청렴성, 개혁성을 반영하여 시행

## 21) 8·15 慶祝辭 後續對策의 徹底한 實踐 : 276(08-70-27)

- 새천년을 맞는 각 분야의 국정개혁방향이 8.15 경축사에 담겨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특히, 재벌 개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 원칙을 금년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고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방지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람('99. 9. 7, 국무회의시)

- 기업구조조정의 5대원칙 마무리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 조기 도입 및 외부감사인·회계관계인에 대한 처벌 강화('98. 2)
    -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회계수준으로 대폭 개정('98.12)
  - 상호지급보증금지
    - '98. 4. 1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00. 3월말까지 해소('98. 2)
    - '98. 4/4분기중 이종업종간 채무보증액 13.1조원 전액 해소
    - 신규채무보증 금지조항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
  - 재무구조의 개선
    - 부채비율 200% 달성계열에 대하여는 주채권은행 자율점검체제로 전환('00. 5)
    - 재무구조개선 이행여부 최종판단 참고지표인 종합신용평가지 수익성 부문에 대한 비중을 상향조정('01. 7)
    - 부채비율 위주의 양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채비율 및 종합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접근방식으로 전환('02. 5)

-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말)396% → ('99년말)215% → ('02.6월말)136%
- 업종전문화
  - 구조조정계획의 재무구조개선약정 포함('98. 2) 및 기업분할제도 도입('98.12)
  - 총 8개 사업구조조정 업종중 “석유화학, 자동차”업종을 제외한 6개 업종의 사업구조조정 마무리
- 책임경영강화
  -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및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선임 의무화('98. 2)
  - 기관투자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98. 9)
- 제2금융권의 지배 구조개선
  -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사항을 관련법률에 반영('00. 1)
  - 사외이사의 총이사수 1/2이상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22) 2000年度 課題의 對國民 弘報 : 282(08-70-29)

- 올해 추진한 일과 새천년을 여는 내년에 해야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대통령 주재 간담회 보고
    - 금감위원장의 ‘기업·금융개혁 관련 인사 오찬간담회’ 보고('99.12.21)
    - \* 보고제목 : 기업·금융개혁 추진실적
  - 기업·금융구조조정 관련 홍보책자 발간
    - IMF 경제위기 이후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실적 등을 정리하여 홍보책자 발간('99.12.21)

- \* 책자제목 : 구조조정의 추진경과 및 실적 - IMF 2년의 극복과정
- 기관장 및 간부의 강연 및 TV 좌담회 출연 홍보
  - 금감위원장, 전경련 초청 강연('99.12. 9)
    - \* 강연제목 : 구조조정 2년의 평가와 새천년의 과제
  - 금감위원장,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99.12.16)
    - \* 강연제목 : 21세기의 금융산업 - 원년의 과제
  - 금감위 부위원장, 인천경영포럼 강연('99.12. 2)
    - \* 강연제목 : 기업경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방향

## 23) 各 部處 業務報告는 改革方案을 報告 : 304(03-70-32)

- 금년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새천년을 맞아 추진해 나갈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람.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등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국가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방안을 보고해 주기바람('00. 2. 1, 국무회의시)

- 새천년을 맞이하여 금감위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서면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00. 2)
  - 「2단계 금융·기업개혁 추진계획」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00. 2)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두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00. 3)
- <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 >
  - 기본 정책방향
    -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

○ 중점 추진과제

-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대응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내실화
- 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기반 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회사 건전성감독의 강화

## 24) 官治金融 論難에 대한 弘報 強化 : 332(08-70-34)

-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설명하기 바람. 인사청탁, 대출 압력을 못하게 해야하며, 모든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가야 함('00. 3.23,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시)

- 인천상공회의소에서의 금감위원장 강연시('00. 3)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치금융을 혼동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관치금융은 없음을 강조
-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신문광고 게재('00. 3)
  - 목 적 : 관치금융의 의미를 설명하고, 관치금융은 없음을 광고함으로써 관치금융 오해의 소지를 제거
  - 광고내용 : “관치금융·정경유착이 부른 IMF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IMF 위기 극복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00. 7월 금융노조의 은행파업시 금감위원장, 금감위(원) 간부 등이 방송출연 등을 통하여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00. 7)
  - 방송출연 : 12개 방송매체 총 27건
  - 기자실 브리핑 및 간담회 등 : 「은행권 파업관련 정부입장 설명」 등 총 9건
  - 신문기고 추진 : 「금융대란예보 - 관치금융만 탓할 수 있나」 등 총 10건

- 여론 선도층과의 대담 추진 : 언론사 경제부장 등과의 대담 등 총 5건

## 25) 今年度 部處別 業務報告 內容의 徹底한 實踐 : 366(09-70-39)

- 각 부처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데 대해 치하함. 중요한 것은 보고내용을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것임.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부처간·당정간 협조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연말에 각 부처가 보고한 업무계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점검·보고해 주기 바람('00. 5. 9, 국무회의시)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00년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과 점검을 위해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세부실천 과제(49개)”를 선정('00. 2)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단계 금융 및 기업개혁 추진반」(반장 : 금감위 부위원장) 구성('00. 2)
  - 과제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
  -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의 실천계획(4대부문 12대과제)을 수립하여 월별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정책 조정회의 등에 보고
  - '00년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정부심사평가의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반기별 자체심사평가 회의 및 정부심사평가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00. 7, 11)하여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
-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 대통령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점검, 대통령비서실에 보고('00. 9, 12)
  - '00.12월 현재 총 41개 실천과제중 29개 과제는 완료, 12개 과제는 정상추진중

## 26) 證市安定과 經濟不安心理 解消 : 385(03-70-44)

- 증시 불안에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몫임
-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기업,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신속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밝은 전망을 갖도록 해야 함('00. 9.19, 국무회의시)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392, 03-70-46)” 지시사항에 통합되었으므로 추진실적은 동 지시사항의 추진실적을 참조

## 27) 公企業 監査結果에 대한 徹底한 改善 : 386(03-70-45)

-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상당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소관부처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00. 9.19, 국무회의시)

- '00. 4~6월동안 실시된 금감위 및 16개 관련기관의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영혁신제도운영, 조직·인력구조, 인건비 및 복리후생, 퇴직금제도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과 관련 총 125건을 지적받음
- 동 지적사항을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조치계획을 제출받아('00.10) 이행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02.12월말현재 112건이



완료되고 13건이 정상추진중임

- 미완료과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설득을 통하여 동 추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 28) 4大部門 12大 核心改革課題의 差跌없는 推進 : 392(03-70-46)

- 재정부 장관 등은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00. 9.19,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 지난 1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임 ('00.10.23, 국무회의시)
- 관계장관들은 개혁과제 완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00.10.31, 국무회의시)
- 2월말까지 개혁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그후부터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개혁을 해 나가야 함('01. 1.22, 국무회의시)

- 은행구조조정 추진
  - '00. 6월말현재 BIS비율 8%미달 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등 6개 은행이 제출('00. 9)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조치('00.11)
  - 조흥·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은 승인하고,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등 4개 불승인은행 및 경남은행은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이 포함된 (수정)경영개선계획 승인
  -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업무개시('01. 4)

-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 한국 및 대한투신증권은 재무구조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며, 현투증권은 푸르덴셜 등을 상대로 해외매각을 추진중
  - 조선생명 등 10개 부실보험사를 공개매각·계약이전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대한생명은 한화컨소시엄에 매각 완료('02.12)
  - 금고·신협은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불법·부실회사를 지속적으로 정리
-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별 자체 신용위험점검 및 처리
  - 채권은행별 '신용위험점검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분류 실시('00.10)
  - 287개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52개사를 정리대상으로 분류('00.11)하여 '02.12월말현재 48개사 정리
  - 회생가능기업 235개사는 채권금융기관 책임하에 재무개선약정 체결 및 자금지원을 통해 정상화 추진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 채권금융기관의 대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차입금 기준 모니터링시스템을 총신용공여기준으로 개선하여 가동('00.10)
  - 워크아웃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순수 자율협약으로 전환('00.12)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도관련 법·감독규정을 정비('01. 8)
  - 은행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01. 3)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01. 9)을 통해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정리대상기업을 선정·정리토록 조치

## 29) 市場의 信賴回復을 위해 努力 : 399(03-70-49)

- 현재의 경제문제 해결은 시장원리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투명하게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특단의 홍보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00.10.31, 국무회의시)

-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국제유가 폭등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 등과 관련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Blueprint) 및 대우자동차 매각관련 시장불안요인 해소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00. 9)
-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민·주택은행 합병의 당위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00.12)
- ’02년을 「금융이용자보호 및 증시불공정거래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민금융·은행·증권·보험 등 전분야에 걸쳐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신뢰회복을 도모(’02. 1~12)
  - 기자간담회 활성화 및 정책설명을 위한 반상회보 게재, 홍보 팜플렛 등 제작·배포
    - 반상회보 : 「불법 유사수신행위 우수제보자 포상금액 상향 조정」 등 11건
    - 홍보 팜플렛 및 책자 제작·배포 등 : 「시장경제 토대구축,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5건
  - 지하철 객실광고, 전광판광고, 청사현판광고 등 홍보매체 개발
  - 위원장 방송출연·강연 : 30건, 인터뷰 및 기고 : 14건, 기자간담회 : 35건

# 非常企劃委員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67(01-17-01) |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 | 1999. 8.16 |
| 137(03-70-08) | 각 부처의 예산절감 노력 강화          | 1998. 8.11 |
| 138(08-70-09) | 수해복구 만전                   | 1998. 8.11 |

## 1) 發生可能的 모든 狀況에 對한 徹底한 對策 講究 : 267(01-17-01)

- 각 부처는 전시계획에 나타난 상황에만 대응하면 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임('99. 8.16, 을지국무회의시)

- 2001 충무기본계획 작성·시달('00. 5)
  - 21C 안보 및 시대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충무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대책 신설
    - 전시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 대도시 소요양곡 조기반입 및 편입지역 확대
    - 전상자 진료를 위한 한방병원 활용 및 채혈대상자 범위 확대 등 내용보완
- 2001 충무집행계획 승인('00.10)
  - 발생 가능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이버테러 대응책 등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사항을 발전시키고 을지연습 및 확인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충무계획을 발전시킴
- 정책연구용역 실시('00. 3~11)
  -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시 충무계획 작성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실시

### <과제명>

- 자동차, 건설기계, 동원지정을 및 계획된 시간 동원가능성 판단(국방대학교 장문석 박사)
- 남북평화공존시대의 국가동원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정병호 교수)
- 접적지역 주민이동 및 수용대책(육군사관학교 이동훈 교수)

## 2) 각 部處의 豫算節減 努力 強化 : 137(08-70-08)

- 각 기관은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 노력 강화
-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98. 8.11, 국무회의시)

-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98. 8.~’00.12)
- 분기별 자체 심사평가를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확보(‘98. 8.~’00.12)
- 자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분위기 조성(‘98. 8.~’00.12)
  - 실·국장급으로 인센티브 전담기구 설치·운영
    - 예산절감 성과금제도에 대한 교육강화, 예산절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실효성 확보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보고체계 확립으로 생산성 향상
  - 각종 회의자료에 이면지 활용, 소모성 물품 구입억제 및 각종 인쇄물 유인시 적정 부수 산정으로 인쇄경비 절감

### 3) 水害復舊 萬全：138(08-70-09)

- 각 기관은 전 공무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수해대책사업 신속 추진
- 각 장관은 서로 분담하여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 위로·격려
- 수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전 기관이 적극 노력·지원  
(‘98. 8.11, 국무회의시)

- 을지연습(훈련)의 조정 실시(‘98. 8)
  - 수해지역의 재해대책 관련기관 및 피해복구 관련기관을 을지연습(훈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수해를 입은 56개 기관(시·군·구 포함)
    - 농림부：농작물 침수 및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 관련 산하기관
    - 정보통신부：전화 긴급복구 및 지원기관(10개 기관)
    -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등 6개 기관
  - 장비·인력동원훈련, 긴급복구훈련 등 수해복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훈련종목을 취소(축소)하여 장비 등이 실제 복구현장에 투입되도록 함
    - 건설기계동원훈련, 긴급복구훈련 등 5개 종목

青少年保護委員會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94(05-19-01) | 청소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1999.12. 7 |



## 1) 靑少年對策의 蹉跌없는 推進 : 294-05-19-01

-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주역들임. 우리는 이들의 원하는 바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함. 이번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음.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의 안전한 보살핌 속에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99.12. 7, 국무회의시)
- 청소년 윤락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00. 1.12, 중앙경찰서 청소년 윤락행위 단속활동에 대한 격려시)

### ○ 기본계획 및 방침 수립 시달

-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수립 및 각 부처 시달(국무총리지시 제99-30호, '99.12. 7)
- 「청소년보호 특별대책회의」(관계부처 차관) 개최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수립 시달( 국무사회 82590-15호, '00. 2.14)

### ○ 주요 추진내용

-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 실시(3회, 256개기관 및 단체)
  - 지방자치단체 102,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64,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58, 청소년보호시설·단체 34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실시('02. 5월)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점검회의 운영(총 8회 개최)
  - 국무조정실장 주재(1회), 시민사회비서관 주재(7회)
-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 250개협의회 824개반 4,072명 구성, 68회 회의, 합동단속 2,817건, 교

육·홍보 517회 등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10개부처 및 16개시·도)
-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 및 점검·단속
  - 전국 티켓다방 실태조사 및 단속(총 8회 단속, 49개업소 고발 조치)
  - 지역별·계절별 단속 및 홍보(부산 등 11개 취약지역 해수욕장, 5종 10,500부 홍보전단 배포)
  - 기타 전국의 화상전화방 운영실태 점검(서울 등 13개 도시), 서울지역 가출청소년 집결지 실태조사(1회), 청소년고용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서울 등 6대 광역시 소재 14개 고등학교) 등 실시
- 청소년유해환경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 미성년자 불법고용, 주류판매업소 등에 관한 처벌규정 강화, 청소년 고용·출입,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00.12월, 식품위생법 개정)
  - 청소년보호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01. 4월), 경찰서장·학교장·보호자 등에의 일탈사실 통보제 도입('01. 8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
- 청소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 학교운동장(교육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문광부) 개방 추진(수련관82, 문화의집92, 수련원163, 야영장82개소 등)
  - 청소년 선호시설 설치 및 청소년전용공간(Green Zone)시설((서울시 등 시·도) 확충(수련관21, 야영장2, 테마파크2, 유스테크14, 서바이벌게임장2)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교육부), 상담활동(문광부), 취약청소년에 대

한 보호·지원(복지부) 강화 등 추진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 3차에 걸쳐 1,283명 신상공개
- 선도보호시설 설치확대(여성부, 25개소),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 지원, 신가정교육운동 사업 추진 등 청소년 성보호정책 추진

大統領 諮問 政策企劃委員會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52(05-01-02) | 생산적 복지 개념 연구 | 1999. 6.14 |

## 1) 生產的 福祉 概念 研究：252(05-01-02)

- 정책기획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덧붙여 일할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 벌 수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임  
(’99. 6.14, 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 ○ 주요추진 내용

-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응한 생산적 복지의 정립방향 연구, 보고서 작성, BH에 보고(’99. 7.19)
- 생산적 복지 개념 정립
  - 사회의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
  -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복지제도를 의미함
  - 생산적 복지는 개인의 자립·자조·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 제도의 확립도 포괄하는 개념임
- 생산적 복지의 추진 필요성 제시
  - 생산적 복지는 적극적,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와 시장경제
  - 생산적 복지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도 어려움
-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과 3대 기본원칙을 제시
  - 기초생활 충족의 원칙
  - 자립, 자조, 자활 지원의 원칙
  - 복지제도의 민주화와 효율적 운영의 원칙

- 생산적 복지의 6대 추진 방향 제시
  - 국민 기초생활 보장
  - 일을 통한 복지
  - 서민의 중산층화 지원
  - 민주적·참여적 복지
  -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화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131(01-01-01) |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철저 | 1998. 7. 4 |

## 1) 民主平統에 대한 支援 徹底 : 131(01-01-01)

- 정부 기구개편으로 민주평통사무처가 통일부로 통합되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법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
- 평통위원은 보수·중도·개혁세력을 모두 포함시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해 가는 용광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향후 평통위원 구성시 젊은 세대를 과감히 포함시켜 45세이하와 여성이 각각 20%정도 포함되도록 할 것  
(’98. 7. 4, 통일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민주평통사무처 독립기관화로 효과적인 지원 체계 확립 (’99. 5.24)
- 국내외 통일여론수렴 등 민주평통 활동 법적 근거 구체화
  - 민주평통법 개정 (’01. 7.24)
-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예산 증액
  - 협의회 경상보조예산 증액
  - 협의회 통일활동지원예산 확보 (’01)
- 자문위원 추천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01. 4)
  - 국민화합 및 남북 화해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확충
  - 여성위원 및 40대이하 각각 25%이상 추천 의뢰



## 放 送 委 員 會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85(06-69-01) |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보호대책 마련 | 2001. 2.14 |

## 1) 靑少年에 대한 有害環境 保護對策 마련 : 485(06-69-01)

-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
- TV를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음주·흡연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TV관계자와 협의하여 자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01. 2.14,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방송프로그램 음주·흡연장면 정기적 분석 및 자제권고
  - 방송프로그램의 음주·흡연 현황 정기적 분석('01. 2, '02. 1, '02. 4. 8)
  - 음주·흡연 장면 자제 권고문 발송('01. 3.19, '02. 2. 8)
- 음주·흡연관련 묘사에 대한 심의 강화
  - 청소년의 음주·흡연장면의 묘사에 대한 심의제재 강화
  - 심의원 합평회시 지속적인 음주·흡연장면에 대한 심의철회 지시 및 교육 실시
- 방송사업자와 회의운용을 통한 자율규제 유도
  - 심의책임자, 제작책임자 회의시 건전한 방송제작을 위한 방송사의 자체적인 노력 촉구('01. 5.23·7.11·12.19, '02. 5. 7·6.11·8. 9·11.29)
- 시청자의 프로그램 감시체제 구축
  - 시청자단체 추천에 의한 특별 심의원 운용
- 심의결과 방송평가제 연계 및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심의제재 결과를 방송평가 항목으로 설정, 재허가 심사시 반영
- 방송사 자체심의기구 운영 내실화 및 감독 강화
  - 자체사전 심의 현황자료의 정기적 제출 의무화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확대실시

- 어린이·청소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제작 드라마를 등급제 우선실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급제 규칙 개정 실시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관련 시청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01. 8)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개정 관련 전문가 공개토론회('01.12.11)
-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시행('02. 5. 1)

## 第 3 章 市・道別 指示事項 및 推進實績

# 서울特別市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55(08-51-01)  | 지하철 침수사고 원인과 책임규명 | 1998. 5. 6 |
| 160(03-51-02) | 철저한 동절기 실업대책수립 추진 | 1998.11.10 |
| 241(08-51-03) | 서울 지하철 파업에 확고히 대응 | 1999. 4.20 |
| 270(08-70-26) | 전세값 상승에 대한 대책 강구  | 1999. 8.24 |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地下鐵 沈水事故 原因과 責任 糾明 : 55(08-51-01)

- 이번 지하철 침수사고는 한심한 일이며 거듭되는 지하철 사고는 모두 인재임
- 서울시에서는 사고원인과 책임규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내면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것('98. 5. 6, 국무회의시)

- 사고원인 조사
  - 서울시 자체조사 완료 : '98. 5. 2~ '98. 5.14
  - 검찰수사 완료 : '98. 5. 2~ '98. 6.15
  - 사고 원인
    - 시공업체 : 부실시공(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음)
    - 감리업체 :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미이행
    - 발 주 처 : 현장안전점검 및 감리에 대한 감독 소홀
- 관련자 조치
  -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공업체 및 소속관련자(감리업체 포함) 제재 조치 요구('98. 5.15 : 1차, '98. 6.23 : 2차)
  - 감리업체는 서울시에서 제재 조치
  -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12명('98. 7. 3)
    - 징계요구 : 9명
      - ┌ 중징계 : 3명(공사담당 파면, 과장 및 실장 각 해임)
      - └ 경징계 : 6명(본부장, 차장, 안전관리부장, 안전점검담당 3)
    - 훈계처분 : 3명(안전점검 담당)
- 책임 감리 의무대상범위 조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 지하철 공사 감리원 자격기준 강화 : 지하철 공사 경력자만 감리원으로

배치토록 입찰 안내서에 명기(책임감리원 : 2년이상, 고급 : 2년이상)

- 단계별 복구계획에 의거 통신시설, 신호시설 완전 복구

## 2) 徹底한 冬節期 失業對策 樹立・推進 : 160(03-51-02)

- 서울특별시장은 노숙자대책, 실업자 직장알선 등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 동절기 노숙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98.11.10, 국무회의시)

- 동절기 실업자 종합대책 수립 시달(‘98.12.10)
-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실시(‘98.11~’99. 3.31)
  - 125개 사업장 총 339,121명 투입(‘99. 3월말 기준)
- 겨울방학중 결식아동 중식 지원 실시(‘98.12.21~’99. 3.31)
  - 대상 학생수 : 13,075명
  - 결식아동 식권 배부 : ‘98.12.19~12.21
- 희망의 집 입소노숙자 공공근로사업 실시(‘98.11~’99. 3)
  - 희망의집 105개소에 3,300명 입소,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132,476명 투입  
(‘99. 3월말 기준)
-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98.11~’99. 3)
  - 범정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편부 및 모자가정(7,261명), 소년소녀가장(970명), 저소득노인 등 방문 상담, 가정도우미 등(‘99. 3월말 기준)
    - 쌀모으기 행사지원 : 총93.5천kg가구당 쌀 20kg씩 46,700가구지원)
    - 현금지원 : 111억원(현금지원 58억원, 쌀, 김치, 의류, 라면 53억원)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지속 실시

- 추진실적('99. 3월말 기준) : 67,977명 선정(실직자 위주)
  - 생계비지원 : 47억원
  - 자녀학비지원 : 12억원

### 3) 서울地下鐵 罷業에 確固히 對應 : 241(08-51-03)

- 서울시 지하철 파업을 계기로 노사문제 대응에 있어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함. 국민의 정부는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쟁의는 용인하지만 불법파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서울 지하철은 법 절차를 밟은 쟁의가 아닌 만큼 확고한 태도를 갖고 엄정히 대처해야 함
- 정부와 서울시장은 이러한 확고한 입장과 지하철 노사문제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 서울시민과 국민의 지지속에 이번사태를 극복해 주기 바람('99. 4.20, 국무회의시)

- 파업전 예방대책 추진
  - 노사정 간담회 개최 (총4회) : 시장, 공사사장, 노조대표자 등
  -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시장 및 시간부, 시민단체 대표 10인 등
  - 지하철노조원의 파업자제 설득 : 9,850명 중 5,129명
- 대시민 홍보
  - 구조조정의 당위성 및 불법파업 등에 대한 일간신문 유료광고 게재
  - 임시반상회보 제작 및 배포 : 2,448천매
- 파업기간중 비상수송대책 수립 시행('99. 4.19~4.26)
  - 지하철 정상운행 : 파업초기 대체인력 및 지원인력으로 정상운행
  - 대체수송수단 확보 및 운행 : 시내버스 21개노선 288대 연장운행, 개인택시 14,127대 부제 해제, 시·구청버스



#### 48대 임시운행 등

- 외부인력 대체 지원 : 경찰인력 배치 1일 4,200명, 역무인력 배치 1일 1,171명(시공무원, 소방관 등), 전동차 검수 및 보수인력 확보 540명(전동차 제작사, 도시철도공사), 기타인력 99명(전기·신호통신 점검보수, 선로보수 등)
- 파업종료후 정상화 대책 추진
  - 파업 적극가담자 조치 : 고소·고발273, 직위해제172, 직권면직65, 징계해고26명 등
  - 불법으로 인한 손실금 3,930백만원 노조 및 노조간부에게 손해배상청구
  - 근무분위기 쇄신 : 간부직원 현장직원 결연 및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 등 화합분위기 조성
  - 구조조정 추진 : '99.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4) 專貰欲 上昇에 대한 對策講究 : 270(08-70-26)

-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세값 양등은 문제가 있음
- 건교부장관과 서울시장은 전세값 안정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99. 8.24, 국무회의시)

- 전세가격 안정대책 관련회의('99. 8.24)
  - 참석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련국장, 서울시 주택국장
  - 안건 : 최근 전세가격 동향분석 및 안정대책

○ 전세가격 안정대책수립('99. 8.31)

- 저밀도 재건축관련 전세수요 안정대책 : 조정자문위원회, 각계전문가로 구성
- 지속적인 주택공급 : 재개발, 재건축, 민영주택 등 '00년까지 17만여호 공급
-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책강구 : 미분양주택의 임대사업 전환 적극추진
- 전세수요에 대한 전세공급의 홍보강화 : 단독, 다가구, 연립 등의 공가 상태와 원활한 부동산 정보 공개를 위한 사이버 복덕방 개설 홍보
-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00년까지 11,674호 공급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강화 : 특정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99. 9. 9)

- 반상회 회보를 이용 홍보
-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대책 : 임대사업자등록(5가구 → 2가구)로 '99.

11.12부터 완화 및 세제지원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단속반 운영 : 서울시(지적과) 및 자치구(지적과) 편성 지도단속
  - ※ 단속실적('99.12월말 기준) : 361건(무허가중개24, 자격증대여39, 기타 298)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복덕방” 개설 운영('99.10.18)하여 전세자료 입·출력관리 및 대시민 홍보 등

## 5)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정비(‘99~’02.10)
  - 시본청 : 834건중 818건 정비 완료
  - 자치구 : 5,376건중 5,338건 정비 완료
- 개혁과제 중심 연관 규제 일괄 정비
  - 주택, 건축, 보건복지, 교통, 산업경제 등 4개 분야 38건
- 규제 개혁 추진체계의 개선
  -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 15명(민간위원12명, 공무원 3)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정례화 : 격월 1회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의 서면 부의 금지
- 규제개혁 성과 확산 및 정착
  -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총 1,175건 접수 처리
  - 규제개혁 백서 제작 배포 : 3회 3,500부
  - 규제개혁 사무 인터넷 및 시보 등록 및 공표 : 총 1,142건
  - ※ 서울시·자치구 규제개혁사이트 통합 신설 (’02. 6.30)
- 시민 홍보 및 직원교육
  - 다양한 매체활용 시민홍보 및 시민 여론조사 실시(3회)
  -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 3회 415명(’02)
  - 규제개혁 운영실태 점검 평가 : 연2회 (상·하반기)

## 6)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서울도심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

- 한국 방문의 해, 2002 월드컵 등 관광객 수요 대비 관광사업으로 육성
- 4개코스 운행, 승차인원 185,913명(내국인 111,382명, 외국인 74,531명)

- 서울문화관광상품 육성

-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울문화관광산업을 육성
- 우수문화상품 139점 선정 및 전시회 4회 개최, 개발 보조금 지원(20개사 200백만원)

-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발굴 육성 지원

-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 지원, 서울의 문화관광상품으로 계승발전
- 전통문화예술(전통꽃신, 오색전지공예 등) 지원 : 65개단체 583백만원

- 서울문화관광사업 개발 운영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상설실시 : 845회 2,253,710명(내국인 1,416,760명, 외국인 836,950명)
- 서울세계드럼페스티벌개최 : 4회 개최, 630,000명 참여
-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개최 : 3회 개최, 413,500명 참여
- 서울단오 민속축제 개최 : 4회 개최, 412,000명 참여
- 조선조 과거 재현 행사 개최 : 4회 개최, 170,000명 참여
- 종묘대제 개최 : 4회 개최, 270,000명 참여
- 연등축제 개최 : 4회 개최, 633,000명 참여
- 미디어시티 서울 개최 : 2회 개최, 337,000명 참여

○ 문화관광홍보 추진

- 서울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구축(00. 1. 3) 및 운영:영·일·중·한 서비스, 이용실적 : 72개국 5,517,746건
-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 '99년 5회, '00년 6회, '01년 7회, '02년 13회
-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 주제별 서울관광지도, 관광화보, 종합관광안내책자 등 17종 222만부

## 7)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98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

- 추진기간 : 5년('99~'03)
- 사업분야 : 5개분야 369건(하천 및 하수도, 산림·녹지, 도로·교통, 지하철, 건축)
- 사업비 : 4,557억원
- 추진현황('02.12월말 기준)
  - 사업완료 : 하천 및 하수도, 건축 등 7개분야 347건
  - 추진중 : 도로·교통, 산림·녹지 등 4개분야 22건

○ '01년도 수해 항구대책 5개년계획

- 추진기간 : 5년('99~'06)
- 사업분야 : 4개분야 105건(하천, 하수도, 펌프장 신·증설, 기타)
- 사업비 : 3,154억원

- 추진현황('02.12월말 기준)
  - 사업완료 : 3개분야 37건
  - 추진중 : 4개분야 68건
- 수방대책 5개년계획 조기완료 계획 수립 추진
  - 상습침수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지대로서 서민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당초 '06년 완료예정이었으나,
  - '04년까지 2년 앞당겨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임

# 釜 山 廣 域 市

## □ 指示事項 目錄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사무 정비 추진
  - ‘98년 이후 규제사무 총507건중 274건 정비(폐지 185, 완화 89)
  - 법령 미근거 규제사무 일제정비 : 49건(40건 폐지, 9건 근거마련)
  -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 실시 : 32건
- 행정규제개혁 사이트 정비(‘02. 5)
  - 유형별, 부분별, 법령별, 변경사유 등 규제사무 열람이 가능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제3기 위원회 구성(‘02. 5.20) 및 운영(15회 개최, 안건 886건 심의)
- 규제개혁 설문조사 실시(‘02. 7)
  -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규제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000명)
- 유사행정규제사무 발굴·정비 추진
  - 유사행정규제사무 87건 위원회 심의(‘02. 9. 9) 및 정비 추진
-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추진
  - 규제개혁 업무요강, 지적사례 모음집, 알림마당(제5호) 제작·운영
  -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교과목 편성·운영 - 연간 20시간
  - 관련 법령 정비결과 전부서 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자료실에 소개
  - 규제사무 사전심사 안건 조례·규칙 등 정비(개정) : 3건
  - 유사행정규제사무(87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수시 교육 실시
  - 민원업무 처리상황, 규제사무 등록·관리 상황 등 중점 점검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규제정보 공유
  - 알림마당 및 잘못된 규제집행사례 등 시게시판 정보센터 지속 소개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부산문화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문화비전부산21』 수립(‘00. 6)
- 문화의 대중화 시행(‘01. 6)
- 부산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 추진
  -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락페스티벌, 자갈치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새천년맞이기념사업실시
- 「2002 부산방문의 해」 성공 추진으로 연내 200만명 내·외국관광객 유치  
[관광 수용태세 확립]
  - 2002 AG,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2002 부산방문의 해」 준비, 지정숙박업소 확보
  - 관광안내기능 강화,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 다대포항 임시터미널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 2002 부산국제관광박람회 개최, 국내외 박람회 참가, 관광설명회 개최  
[문화·관광 상품화 추진]
  - 축제·이벤트 지원 및 관광상품화, 제3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특화관광시설 확충

#### [관광개발 및 인프라 개선]

- 부산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 실시, 동부산 그린시티 조성사업,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등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철저한 재해상황 관리
  - 평시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기상특보시 단계별 비상근무
- 재해사전대비 완벽 추진
  -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 207개소, 수시
  - 포대류 등 방재물자 6종 204천점 및 굴삭기 등 복구장비 7종 594대 확보
-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00~‘02)
  - 응급복구 위주에서 예방사업위주로 정책 전환(56개소 11,625백만원 투입)
- 2001 수해피해 복구 : 계획 1, 완료 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99년부터 계속사업)
  - 대상 : 18개소 130,897백만원
    - 사업내용 :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 완료 5개소 4,327백만원 (광안4동 위험 언덕 외 4개소)
  - ‘02년 추진중 13개소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건수 | 투 자     |        |       |        |        |        | 비<br>고 |
|------|----|---------|--------|-------|--------|--------|--------|--------|
|      |    | 합계      | '99실적  | '00   | '01    | '02    | '03이후  |        |
| 계    | 13 | 126,570 | 24,487 | 8,863 | 11,820 | 11,833 | 69,567 |        |
| 상습침수 | 10 | 124,760 | 24,487 | 8,213 | 10,960 | 11,833 | 69,267 |        |
| 붕괴위험 | 1  | 550     | -      | 50    | 200    | -      | 300    |        |
| 노후시설 | 2  | 1,260   | -      | 600   | 660    | -      |        |        |

# 大邱廣域市

## □ 指示事項 目錄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시제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98~‘02)
  - 위원회 구성 : 17명(민간인 12, 공무원 5)
  - 운영실적 : 총 12회(회의 6회, 서면심사 6회)
-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98~‘02)
  - 총 426건을 발굴 249건을 정비과제로 확정
  - 249건 중 248건(폐지 206건, 완화 42건)을 정비완료 : 99.6% 달성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정비
  - 총 68건을 발굴, 66건은 폐지, 2건은 법령근거마련
- 신설·강화규제의 사전심사 : 12회 488건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규제개혁분위기 정착(‘98~‘02)
  - 시민 홍보 : 총 85회(인터넷 12, 신문·방송 23, 구·군 소식지 50)
  - 규제개혁담당 및 일선공무원교육
    - 상설교육(25개 과정 850명), 수시교육(45회 2,425명)
- 법령개정 건의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98 ~‘02)
  - 법령개정건의 : 23건
  -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처리 : 28건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관광기반시설 확충

-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01.10)

- 대구관광정보센터 건립(개관 : '00. 4.27)

- 관광호텔 건립(4개소) : 인터볼고(207실), G.S PLAZA(88실), 호텔에어포트(51실), (주)팔공산온천(35실)

- 관광안내소 운영 활성화 : 7개소 안내원 23명 ( '99년 2개, '00년 1개, '02년 1개)

- 관광거점지역(중구) 육성사업 추진 ( '99~'01)

- 관광안내소 1개소, 관광안내판 4개소, 관광화장실 2개소, 외국인 전용 관광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

-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 관광홍보설명회 참가 : '00년-5회, '01년-11회, '02년-9회

- 현지답사 초청 설명회(Fam-Tour)개최 : '99년1회, '00년4회, '01년2회, '02년6회

- 녹동서원 일본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 : '99년 2회 추진, 녹동서원 홍보 비디오 제작('00), 전시유물 구입 및 전시시설 보완('01)

- 중국북경 대구관광홍보관 상설 운영('02. 2.27 개관)

- 국외순회관광홍보설명회 : '01년 1회, '02년 1회

- 관광홍보활동 강화

- 대구관광홍보물 제작 : '01년 7종 528,000부, '02년 11종 706,650부

- 관광홍보관 설치(9개소) 및 관광문화정보시스템 구축('01. 3)
- 외국인 관광자문단 확대 : 27명, 자문실적 103건('01)
-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 대구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관광기념품 전시판매행사 참가(매년)
  - 달구벌대중 타종의회식 재현 : 매주 토·일 15:00('02년 52회 7,600명)
  - 약령시 축제 등 지역축제의 홍보 : 인터넷 및 홍보물을 통한 수시 홍보
  - 관광코스 개발 : 3개분야 47개코스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북구 팔달지구(시행청 : 북구청, '99~'02)
  - 규 모 : 배수펌프장 설치(펌프 : 5대, 유수지 9,000㎡)
  - 사 업 비 : 7,919백만원
  - 추진상황 : 배수펌프장 설치완료, 유입수로공사 시행중
- 수성구 팔현지구(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성구청, '99~'03)
  - 규 모 : 제방축조 0.9km, 배수펌프장 설치 : 1식
  - 사 업 비 : 9,325백만원
  - 추진상황 : 제방축조 완료, 배수펌프장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 달성군 하빈·봉촌지구(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99~'05)
  - 규 모 : 하천편입토지 보상 302필지 274천평
  - 사 업 비 : 1,842백만원

- 추진상황 : 275필지 24만 1천평 보상(88%)
- 달성군 구지·징리지구(시행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99~'04)
  - 규모 : 제방축조 2.3km, 가옥이주 11동
  - 사업비 : 15,319백만원
  - 추진상황 : 편입토지 보상 및 제방축조 공사 시행중
- 구호물자 확보
  - 확보계획 : 의류, 천막, 모포 등 19,390점, 재해구호기금 4,000백만원
  - 추진상황 : 전량 확보



# 仁川廣域市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시제 목             | 지시일자       |
|---------------|-------------------|------------|
| 240(04-54-01) |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철저한 준비 | 1999. 4.15 |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시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松島知識情報産業團地 建設 徹底한 準備 : 240(04-54-01)

-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 주기 바람  
(‘99. 4.15, 인천광역시 행정개혁보고회의시)

### ○ 사업개요

- 위 치 : 송도매립지2·4공구내(연수구 동춘동 일원),
- 면 적 : 2,655,143m<sup>2</sup> (80.3만평)
- 단지구성 : 테크노파크13.7만평, 테크노밸리66.6만평  
(국제전시교류타운 10만평 포함)
- 유치업종 :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물,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 ○ 추진경위

- ‘98.12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99.10. 9)
- ‘02. 5.22 : 지구단위 계획(안) 공청회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02.12. 9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02.12.31 : 세부기반시설 착공

### ○ 투자계획

| 소계(백만원) | ‘01 이전  | ‘02 실적 | ‘03 계획 | ‘04 이후  |
|---------|---------|--------|--------|---------|
| 112487  | 112,487 | 31,943 | 28,227 | 171,888 |

### ○ 투자유치

- ‘00.10.17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 300여 업체 참석, 130개 업체 입주의향서 접수

- '02. 3.21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투자상담(국내 : 81건, 국외 : 24건)
- 입주현황
  - '00. 6. 8 : 테크노파크 부지내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착공  
(⇒ 2004. 3/4분기)
  - '00. 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센터 건립
  - '01. 3. 7 : 테크노파크 본부동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착공  
(⇒ 2003. 1/4분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5개 기관)
  - '02.12 : 테크노파크내 일반기업용지 분양완료(32개 필지)
- 향후추진계획
  - '03. 2/4분기 : 테크노밸리 분양
  - '05.12 : 세부기반시설 준공

## 2)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행정규제완화 정비 현황

| 대 상 | 폐 지 | 완 화 | 존 치 |
|-----|-----|-----|-----|
| 23  | 8   | 13  | 2   |

- 유형별 : 조례 9건, 규칙 11건, 훈령 3건

○ 정비조례 및 규칙명

- 조 례

-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조례 : 9건

- 규 칙

- 인천광역시비료판매업자행정처분규칙 : 2건
- 인천광역시고압가스업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 4건
- 인천광역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기준규칙 : 1건
- 인천광역시제2종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규칙 : 3건
- 인천광역시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규칙 : 1건

- 훈 령

-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 : 3건

### 3)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관광명소 시내순환관광 운영

- 시내순환관광 사업계획 작성 시달 : '99. 5.20(관광협회,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운송조합)
- 시내순환관광버스 및 승강장 IP 도안 확정 : '99. 6.17
- 시내순환관광 사업계획서 제출(2개업체 → 시) : '99. 6.21
- 시내순환관광 운행 개시 : '99. 8.21
- 관광명소 시내순환관광 인천국제공항노선 확대운영 : '00. 8. 1
- 관광명소 시내순환관광 노선 변경 : '02. 3.15

- 시내 시티투어 변경운행 : '02.12.26
-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사업 및 용유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 '97.12~'99. 5.22
  - 미국 CWKA사와 52억불 규모 투자합의서(MOU) 체결 : '99. 5.11
  - 용유·무의관광단지 지정 : '99.10.20
  -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 기본설계 발주 : '99.12
  - 용유·무의 관광단지 변경지정 : '00. 2.25
  - 용유~무의간 연도교 사업계획 변경(B=10.5m 단계별건설) : '00. 9.29
  - 제3자 제안을 위한 사업제안내용 공고 : '01. 3.29
  - 용유·무의 관광단지 협상 : '01.10.17 ~ '02. 7
    - 정부측 협상단 (본협상단 : 8명, 실무협상단 : 9명)
    - 사업자측 협상단 (본협상단 : 11명, 실무협상단 : 9명)
  - 재원 조달계획 미충족으로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해지)
  -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방안 검토 의뢰(인천시 → 인천발전연구원): '02.12. 2  
⇒ 사업추진주체(사업시행자), 개발방식, 개발Concept, 사업시행방안 등
- 인천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 사업계획승인 및 기금보조결정 : '98.12.12
  - 건축공사 착공 : '99.12.20~'00. 7
  - 공사 준공 및 운영 : '00. 8

#### 4)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 만전
  - ’99 수해규모 및 복구계획 수립 : ’99. 8.20
  -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행정자치부) : ’99. 8.30
  - 수해복구추진 실무대책단 회의 : ’99. 9. 6
  - 공공시설 복구 설계 조사단 구성 : ’99. 9.15
  -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 ’99.10. 2
  -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 ’99.10.25
  - 우기전수해복구 완료지시(구군회의) : ’00. 2. 2
  - 수해복구 우기전 마무리지시 (구군과장회의) : ’00. 3.15
  - 우기대비 사전점검(침수지역,취약지역,미복구현장) : ’00. 4~5
  - 2001년 장마철 침수예방 대책 수립 : ’01. 5.21
- 이재민 구호비 지급 및 재해복구 활동 전개
  - 이재민 구호비등 지급 : ’99. 8~12
    - 사망, 실종자 위로금      13명      85백만원
    - 침수주택수리비      1,188세대      713백만원
    - 추석절 특별위로금      2,425세대      6,679백만원
    - 기타 생계구호비      710세대      12백만원
  - 주택복구 : 35동 (41동중 복구포기 6동제외)
    - 복구 완료(복구대상 41동중 35동)

- 도로·교량·하천등 공공시설복구 (완료)
  - 194건중 완공 194건
- 갯골유수지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00. 7~'03.12)
  - 남구 용현동 일원 상습 저지대 침수지역 위험요소 해소
- 인천광역시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개정 : '00. 9. 4
  - 재난 재해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등 상황유지

|           |
|-----------|
| 光 州 廣 域 市 |
|-----------|

## □ 指示事項 目錄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정비 : 71건(동구9,서구17,남구12,북구20,광산구13)
- 법령·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정비
  - 규제발굴 : 1,263건(시 335, 구 928)
  - 정비대상 : 825건(시 204, 구 621)
  - 정비완료 : 825건(시 204, 구 621)
- 모델에 의한 제2단계(‘00) 규제정비
  - 규제발굴 : 481건(시145, 구336)
  - 정비대상 : 357건(시 66, 구291)
  - 정비실적 : 357건(시 66, 구291)
- 잔존규제사무 자체발굴(‘01~‘02.12.31) 정비
  - 규제발굴 : 262건(시132, 구130)
  - 정비대상 : 58건(시 18, 구 40)
  - 정비실적 : 58건(시 18, 구 40)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 : ‘99. 1.15(제1기), ‘01. 3.15(제2기)
  - 구성일자 : ‘99. 1.25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민간인, 여성위원 3명)
  - 구성방법 : 위촉직에 대하여 공모후 적임자 선정

- 운영회수 : 16회(70개 안전, 358개 규제사무 심의)
- 회의내용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심사
- 규제신고센터 설치운영
  - 설치일시 : '98. 5.26(화)
  - 설치장소 : 시청 1층 민원실 및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시 홈페이지, 인터넷(E-mail), 모사전송, 우편
  - 신고내용
    - 법령에 근거한 규제중 개선 및 폐지가 요구되는 규제
    - 법령에 미근거하여 운영되는 규제
    - 규제 오·남용 사례 등
  - 접수·처리실적 : 170건
- 공무원 교육
  - 직무연찬 발표회 : 4회 27명(시 7, 구 20)- 중앙단위행사 참석 직무연찬
  - 교육원 위탁교육 : 63회 3,793명
- 규제관련 홍보
  - 언론매체, 시보, 자치구보, 법무소식지 등 : 91회
  - 시·자치구 홈페이지 : 6개소(시 1, 구 5)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
  -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 '99. 4~11

- 대통령 광주순시시 110만평 해제 건의 : '00.11. 8
- G·B 해제관련 중앙통보(84만평 예정) : '01. 4.25
-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서울,영국 등) : '01.11~12
-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한 안내공고(시보 2회, 일간지 1회) : '02. 3~5
-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84만평) : '02. 5.29
-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 용역착수 :  
'02.11.29
- 문화산업단지 조성
  - 문화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 : '00.11~12
  - 문화산업단지 조성 신청(1차) : '00.12.28
  - 단지지정 결과 발표(8개 시·도중 4곳 지정보류) : '01. 5. 4
  - 조성계획 보완 작업 : '01. 5.29~7.20
  - 문화산업단지 조성 신청(2차) : '01. 7.31
  - 문화산업단지 조성 신청 협의 결과 통보 : '01.10.20
  - 문화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 : '02. 3 ~ '03. 1
- 영상예술센터 설립
  - 영상산업발전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3회) : '01. 2~6
  - 센터설립 기본조사설계 : '01. 4~6
  - 센터설립 실시설계 : '01. 7~9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공사계약 : '01.12.24
  - 센터설립 조례 제정 : '02. 5. 1
  -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위·수탁 협약 : '02.10
  - 공용장비 구축 : '02.10~12
  - 수탁자 및 입주업체 모집 : '02.11~12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이재민 구호대책 완료
  - 수용시설 지정 : 학교, 교회등 97개소(38,720명 수용)
  - 방역물자 비축 : 방역약품860ℓ, 우물소독약 98kg, 예방주사약 7천명분
  - 구호물자 비축 : 천막, 침구, 의류 등 3,122점
-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비상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 군·경찰, 한전, KT, 적십자사 등
  - 수방단 조직 : 수방단 844개단 13,013명
  - 복구장비 지정 : 백호우등 7종 174대(관89, 민85)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정비사업 완료(지구지정 해제 '02. 4. 9) : 3개지구(송정, 우산, 소촌)
  - 정비사업 연차적 정비중 : 8개지구
    - 정비사업 지구 : 산수, 용봉, 평동, 동곡, 구산동교, 송대, 선암, 승촌·화장
  - 2002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 실적
    - 정비대상 : 5개지구(산수, 평동, 동곡, 승촌·화장, 송대)
    - 사업비 : 7,700백만원

# 大田廣域市

## □ 指示事項 目錄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시제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행정규제 발굴·정비
  - 발굴 : 509건 / 정비 476건 (기본규제 436, 신설·강화규제 40)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구성 : 15명(민간 11, 공무원 4)
  - 운영 : 18회 509건 심의(폐지 181, 완화 119, 존치 167, 신설 20, 강화 22)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전개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규제관리 사이트 개설
    - 규제관리 프로그램 개선 / 규제정비 내용 재정비 : 509건
    - 규제신고센터 운영 : 접수 26건 처리 26건 / 규제사무 등록·공표 : 509건
  - 리플렛 및 책자 발간·배부 : “우리 시 규제개혁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 공무원 교육원 교육 : 13개과정 20회 1,464명
  - 직장교육 등 수시교육 : 6개과정 6회 913명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외래관광객 유치 위한 대전관광 홍보활동 전개
  - 국제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 서울, 러시아, 중국 등 11회
  - 월드컵 대전경기 국가 팸투어 실시 : 스페인 등 4개국 언론인 9명
  - 관광홍보관 설치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홍보관 설치
  -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 관광책자 : 72,000부 / 관광안내지도 : 170,000부
    - 대전관광 CD 및 비디오 제작 : 4,200개 / 브로셔 : 2,000부
    - 기타 관광상품책자(4,000부), 리플렛(236,000부) 등 홍보물 배부
  - 대전 명예관광통역 안내원 운영 : 401개소 299명
- 대전시티투어 운영
  - 대전시티투어의 관광상품 정착
    - 매일운행, 안내소 운영, 외국어도우미 확보 4명 (영어 2, 일어 1, 중국어 1)
    - 월드컵대비 관광코스 개발 : 반나절형, 1일형, 1박2일형 등
- 지역 문화축제 개발
  - 대전세계유머페스티벌('20. 5.25~5.28), 사이언스페스티벌(8.11~8.20, '99년이후 매년)
- 우수 문화상품 개발
  -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 우수공예품개발 보조금지급
  -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 : 14개업체 60,000천원
- 관광 편의시설 확충
  - 숙박시설 확충(관광호텔 24개소, 지정숙박업소 345개소 8,417실)
  -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33개소) / 관광지 화장실설치(2개소)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재해 사전 대비태세 만전
  - 방재상황 종합관리
    - 연중 지속적 상황관리 및 경찰청 회 14개 기관 HOT-LINE 설치·운영
    - 긴급 구조기관 공조체계 정비 : 경찰청 외 12개 기관
  - 방재시설물 관리
    - 소하천, 제방·수문, 대형공사장 등 점검·관리(85개소)
  - 수방장비 및 자재, 이재민 수용시설 관리
    - 수방장비(7종 455대), 수방자재(포대류 등 6종), 이재민 수용시설 112개소
- 수난구조체계 확립
  - 여름 119 구조·구급대 근접배치 운영
    - 운영 : 7. 1 ~ 8.31 (매년) / 금강하류 외 2개소
    - 구조실적 : 48건 74명(사망 23, 부상 14, 기타 37)
  - 수난사고예상지역 기동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
    - 사고예상지역 기동순찰 실시 : 6개 노선 (1일 2회)
  - 전문강사 초빙 수난구조기술 습득 및 자체 적응훈련 실시 : 19회
-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능력 제고
  - 긴급구조합동훈련 실시 : 2회 (324개 기관·단체 참여)
  - 긴급구조대비체제 정비 : 4회 (29개 기관·단체)



|           |
|-----------|
| 蔚 山 廣 域 市 |
|-----------|

## □ 指示事項 目錄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법령미근거 규제정비
  -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 및 구 군 6개소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 '98.12.30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 : '01. 4.18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12명 (민간인 9, 공무원3), 14회 개최
  - 규제정비 실적 : 총 148건 중 147건 폐지, 법령근거 마련 1건
- 법령정비에 따른 조례 규칙 등 규제정비 : 총 110건 정비
- 2단계 규제개혁 모델적용에 따른 조례 규칙 등 규제정비
  - 총 규제사무 1,626건 중 정비대상 1,003건 중 100% 정비완료  
: 폐지 717건(44%), 완화 286건(18%)
  - 규제개혁 마인드조성 공무원 교육 : 2회 430명
  - 모델전수조사 추진상황 점검 : 2회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감사 8회, 202건 지적·시정
- 규제개혁 홍보
  - 시 규제개혁사이트 업그레이드 : 2회
  - 홍보책자 발간 : 500부(울산시 규제개혁 이렇게 바꿨습니다)
  - 규제개혁 리플렛 제작 발간·배부 : 2000매  
(규제개혁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이렇게 추진합니다)

- 규제개혁 광고게재 홍보 : 5단 광고 1회 및 일간신문 20회
- 전광판 홍보 : 10개소(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신고센터 안내)
-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업무능력평가 실시 : 12개 분야 58명
- 규제개혁마인드 향상을 위한 무작위 서면평가실시 : 1회 40명(구. 군)
- 법무소식지 게재(11회), 생활정보지 5개사 게재(200회), 기업체공문발송(1회 300개사), 기업체 방문 홍보(1회 113개사)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문화예술 기반조성
  - 종합문화예술축제인 처용문화제 개최(매년 10월, 태화강 둔치, 3일간)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 12억4천7백만원 조성
  - 울산광역시 문화상 발굴 시상(’02년 5회)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활동공간 확보
  - 충의사 및 북구문예회관 건립, 문화의 집 조성운영(4개소), 문화재 보수정비
- 2000년 밀레니엄 축제행사 개최
-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여건조성(매년)
  - 예총행사 : 울산광역시 서예대전 등 20종
  - 문화원행사 : 정월 대보름 달집행사 등 10종
  - 울산향교 : 석전대제 등 10종 등
- 구·군 단위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최 지원 (매년 구·군당 30,000천원 지원)
- 관광상품개발

- 시티투어 운영(정기투어 6개 코스, 맞춤형투어 3개 코스)
- 문화·관광상품개발(30종)
-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소 2개소 운영(종합관광안내소, 국제여행터미널)
- 문화재 탐방, 산악, 산업, 해안 등 4개 관광코스 개발
- 관광안내 체계개선
  -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및 이전개소
  - 울산공항외 2개소에 상설 관광안내소 설치 및 통역관광안내요원 추가확보
  - 종합관광안내판 설치(7개소) 및 실용성 있는 관광 홍보물 발간(300천부)
- 외국인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 한·일 국제여행객항로 개설
  - 외국인전용 관광통역『1330』개설 및 회선 증설
- 관광홍보 인터넷설치
  - 사이버 울산가이드 개설 (울산종합관광안내 - '00. 4. 1)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이재민 구호체계 확립
  - 구호물자 3,570확보, 재해구호기금 5,716백만원 및 재해대책기금 10,685백만원 확보, 필요시 예비비 적극활용, 이재민 수용시설 130개소 75천여명 수용 지정관리
- 매년 재해예방용 홍보책자 제작·배포 및 재해예방포스터 공모를 실시

하여 범시민 자율 방재의식 제고

-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침수위험 절감 추진
  -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58.7%, 하천정비율 48.29%, 2005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
- 방재 및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 매년 3~4회 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시설은 우기 전에 응급조치
- 재해위험지구 관리강화
  - 당초 5개소 중 현재 3개소 정비완료, '03년도 2월중 완료예정
- 석남사 계곡 외 13개소에 대한 재해경계구역 관리 철저
- 재해예측 능력 향상 및 경보전달체계 개선
  -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 운영 15개소, 우량자동경보시설 5개소, 음성자동 통보 시스템 12,562개소, 기상특보 문자메시지전송 195명, 재해경보 자동방송 100대, 재해문자표출시스템 16개소 운영

# 京 畿 道

## □ 指示事項 目錄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행정규제심의기구 설치(’99. 4.12)
  - 위원 72명(본위원회 22명, 실무위원회 50명)
- 규제개혁 전담기구 구성(’98. 5~ 현재)
  - 규제개혁 추진단(단장 : 기획관리실장, 반원 3명)
- 규제신고센터 설치 운영(’98. 6 ~ 현재)
  - 경기도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설치, 216건 접수처리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98.10 ~ 현재)
  - 1단계(’98.10 ~ ’00. 4) : 6,639건 정비
  - 2단계(’00. 4 ~ 현재) : 6,998건 정비
- 도, 시·군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4회)
  - 주택, 토지형질변경, 위생 등 10개분야 중점점검, 244건 정비
- 규제개혁관련 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 개최(27회, 2,210명)
- 규제개혁 대상 지속적 발굴·정비 추진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세계도자기 Pre-EXPO 개최('00.10.10~10.22)
-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01. 8.10~10.28)
  - 이천·여주·광주 3개지역에 606만명 관람
  - 경제적 파급효과 : 1조2,474억원 → 도자문화 발전기반 구축
-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추진
  - 지역별 축제에 맞는 문화이벤트, 전시회, 상설공연, 농산물 코너 등 운영
- 경기도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화 추진
  - 대물림 향토 음식점 8개소지정 육성, 토야음식점 10개소 지정
  - 경기명주 품평회 개최 및 경기명주 5종 선정 홍보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99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 수해복구사업 : 1,963건 6,155억원 투입 복구사업 완료
  - 수해예방대책 사업 : 37건 1,680억원 투입 예방대책사업 완료
- '00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 원상복구사업 : 1,676건 885억원 투입 복구사업 완료
  - 개량복구사업 : 61건 2,141억원 투입 개량복구사업 완료
- 재해구호물자 비축완료('00. 6.10)
  - 생필품 및 취사도구 : 5,744세트, 이불 및 1회용품 : 2,000명분, 천막 : 150조, 쌀 및 장류 : 515세대용, 기타 부식류 구매기관 지정(농협)



|       |
|-------|
| 江 原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9(03-61-01) | 농축어업대책 강구 | 1999. 5. 3 |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農畜漁業對策 講究 : 249(03-61-01)

- 축산·화훼등 수출이 유망한 분야는 외국에 수출을 늘릴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업은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99. 5. 3, 강원도 행정개혁 회의시)

### ○ 화훼분야

- 수출유망품목 6대품목 선정 및 강원화훼 육성전략 수립('99.12.10)
- 화훼류 생산기반 조성
  - 화훼단지 확대조성 완료 : 5품목 16개소 46.8ha
  - 백합종구 자급화계획수립 추진 : 구근센타 1개소, 종구생산 402만구
  - 도 자체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700만구 3,500백만원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 4회, 10개업체 수출상담
- 국내외 꽃 박람회 참가 홍보 : 3회('00년 일본 효고현 꽃박람회 등)
- 강원외 꽃 홍보책자 발간 배부 : 10천부(한·영문3천부, 한·일문7천부)
- 우수화훼 수출단지의 수출농장 지정 인센티브지원 : '02년 10개소지정
  - ※ 화훼수출 신장 : ('99)165만\$→('00)251만\$→('01)298만\$→('02)330만\$

### ○ 축산물 분야

- 품질규격돈 생산 기반조성 : air cool 240대 설치, 전문종돈업 4개소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2개소 조성
- 한우송아지 수출 지원(600두) : 수출 물류비용 지원
- 수출실적 : 돼지고기 224천kg 1,056천만원

### ○ 어업분야

- 종묘방류 및 양식개발 완료 : 6개사업 4,265백만원 투자
- 인공어초 시설 : 3,555ha, 18,774백만원 투자

## 2)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규제개혁 추진체계 확립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19개 위원회(도, 18시군), 73회 103건 심사
  - 행정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 : 106건 접수 104건 처리
- 규제 정비추진
  -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 521건 정비완료 (도 19, 시군 502)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 4,699건 정비완료(도 251, 시군 4,448)
-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 : 조례·규칙 등 공표후 30일 이내 등록(인터넷 홈페이지등 이용)
- 규제개혁 추진상황 지도점검 : 61회 136개기관(413건 시정조치)
-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 261회 43,211명
- 규제개혁 홍보활동 전개 : 인터넷 홈페이지(19개기관), 전광판 및 게시판(78개) 등
- 시군 규제개혁이행상황 평가 및 우수기관·유공공무원 표창
  - 평가실시 : 2회(상·하반기)
  - 표창내용 : 우수기관(강릉시), 유공공무원 9명(장관 2, 도지사 7)

- [illegible]

- 강원도 열 선양사업 : 의암 유인석 열 선양 등6개분야 17개사업 추진
- 문화관광기반 확충 : 전통문화 전수회관 건립(5동), 강원도립 국악·무용 예술단 창단, 춘천 만화이미지 정보센터 건립 (970%), 강릉전통문화시범 도시조성 착공(8개지구 16개사업), 강원감영 복원·공원조성('02년 착공),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02년 착공)
- 일·안보관광지 개발(7개지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등

#### 4)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및 경보전달체제 확립
    - 재해기간('99. 6.15~10.15)24시간 상시근무, 기상특보시 3단계(준비, 경계, 비상)체제 근무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 18개시군 설치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 6개시군 11개소
  -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방재·구호물자 확보
    - 방재시설물 점검·정비(3회 378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39개지구 764억원)
    - 가뭄대책 하상굴착 복구(1,991개소), 경계구역지정·점검 (11시군 41개소)
    - 대형공사장 정비(골프장등 55개소), 산지사방 복구 (240ha),

사방댐(13개소)

- 수방자재 (1,212천점), 동원장비(1,065대), 구호물자(18,309점)
  - 재해사전 대비 현지확인 점검 : 14회
  -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추진
    - '99년 수해이재민 17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 주택 1,292동, 농경지 953ha복구완료
    - 수해복구 : '99년 4,318건 완료, '00년 345건 완료, '01년 3,121건완료
- < 향후계획 >
- 재난관리종합대책 수립 : 수해·가뭄·산불 등 총망라
  - 강원발전연구원 부설 「환경·방재연구소」 설치
  - 도와 시군의 방재조직 확대 개편 : 42명 증원(도 13, 9개시군 29)
  - 모든 공공부문과 주택 등 토목·건축공사에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 사이버자원봉사시스템 구축, 자원봉사대학개설 운영(2개소)

|         |
|---------|
| 忠 清 北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7(03-62-01) | 영농발전 지원     | 1999. 4.30 |
| 248(03-62-02) |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1999. 4.30 |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영농발전 지원 : 336(03-63-01)

- 농사철 인력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고, 영농자금에
- 일본 등 주요농산물 수입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9. 4.30, 충북 행정개혁보고회의시)

- 농사철 인력수급
  - ‘99 농촌 일손돕기 추진
    -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농촌일손돕기 협조 요청 : 2개 기관
    -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설치 및 운영 : 274개소
    - 농촌일손돕기 라디오 캠페인 방송 : 2개 방송사(10일간)
    - 쓰러진벼 세우기 일손돕기 협조 요청 : 27개 기관
    - 인력지원 : 175,955명
    - 작업면적 : 2,451ha
    - 도지사 감사서한문 발송 : 147개 기관·단체
  - ‘99 농기계 공급 : 3,564대(계획대비 119%)
- ‘99 농업경영자금 지원실적 : 193,293백만원(12월말 현재)
  - 일반농업경영자금 : 138,381백만원(계획대비 100%)
  - 전문농업경영자금 : 45,676백만원(계획대비 138%)
  - 농기업 경영자금 : 9,236백만원(계획대비 81%)
- 농특산물 수출진흥
  - 농특산물 수출실적 : 186.5백만달러(계획대비 98%, 전동기대비 125%)
  -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34백만원)
  - 바이어수출업체와 주요작목반간 만남의장 마련 현지계약 추진



- 바이어상담 : 12개업체 22명, 수출업체 : 7개업체 463천달러
- 농특산품 국제우편주문판매 추진 : 시범판매액 860만원
- 수출자문관 위촉(4명) 및 수출컨설팅(4회 300명) 실시
- 국제식품박람회 및 특별관측행사 참가 : 3회
- 농특산품 해외판매망 구축 : 일본2, 홍콩 1개소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교육 및 홍보, 전두수 예방접종(1,460천두)
- 농업인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반 교육(46명)
- 해외시장개척 등 수출관련 2000예산 확보 : 132백만원(도비)

## 2) 오송生命科學團地 造成 : 248(03-63-02)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구성에 있어 중앙부처 등과 원활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 ('99. 4.30, 충북 행정개혁보고회의시)

### ○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 사업규모 : 4,637천㎡(1,403천평)
- 사 업 비 : 3,966억원(개발비 1,635, 보상비 1,189, 기반시설 1,142)
- 사업기간 : 1997 ~ 2006(10년)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 유치업종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산업체(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기계제조업 등)

### ○ 추진내용

-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 : '97. 9.23
-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공사) : '97.12.16

- 입주수요조사 및 지원시설모델개발 연구용역 : '99. 7 ~ '00. 6
- 보건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대통령께 보고(복지부) : '00. 2.21
- 환경·재해·교통·에너지 등 영향평가 용역 착수 : '00. 7.12
- 생명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 지시(대통령) : '00. 9.27
-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전략기지로 육성 회의 : '00.10. 4
  - 국무총리 주제 : 재경부, 통일부, 교육부, 행자부장관 참석
-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보고회 개최(청와대) : '00.10. 5
  - 산·학·관 협조체제 및 정부, 유관기관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모든 지원
- 3개 국책기관 이전 기본계획 확정(110천평, 보건복지부) : '01. 4.30
- 한국토지공사 오송보상실시단 구성(17명) : '01. 8.27
- 입주수요조사 실시 : '01. 8.27~9. 8
  - 입주희망 159개 업체 103만평(3개 국가기관 포함)
- 지구지정(개발계획)변경 (141만평, 건교부) : '01.10. 6
- 진입도로실시계획 용역착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1.11. 8
- 대통령 충청북도 순방시 : '01.11.26
  - 2006년까지 국책기관을 완전 이전하고, 보건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 오송생명과학단지 명칭변경(건교부) : '01.12. 3
- 국책기관 이전규모 조정(122천평, 이전추진단회의) : '02. 1.21
  - (식품의약품안전청 38천평, 국립독성연구소 29천평, 국립보건원 44천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천평)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대체지정) 승인(농림부) : '02. 5.20
- 보상계획공고 (한국토지공사) : '02. 7.22.~ 8. 5
- 개인별 보상가격(토지) 통보 (한국토지공사) : '02. 8. 6
- 실시계획 승인요청 (한국토지공사→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2. 9. 2

- 개인별 보상가격(지장물) 통보 (한국토지공사) : '02.12. 4
- ※ 현재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추진 중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03. 3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단지조성공사 착수 예정
  - '04~'06      국책연구기관 이전공사 및 입주
  - '06.12        단지조성공사 준공

### 3)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단계별 규제개혁추진 계획수립 정비추진
  - '99년도 : 조례·규칙상 규제발굴정비
  - '00년도 :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재정비
  - '01년도 :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강화
  - '02년도 : 잔존규제 지속발굴·정비 및 유사행정규제 발굴·정비
- 규제정비 완료 → 100%
  - 1단계('99.10~'00. 3) : 1,585건(도 133, 시·군 1,452)
  - 2단계('00. 4~'02.10) : 2,499건(도 181, 시·군 2,318)
- 유사행정규제 발굴 심사 : 105건
  - 의료분야 7, 문화예술분야 38, 관광분야 5, 교통분야 55

- 신설·강화규제 영향분석 : 15건
- 행정규제 실태조사·발굴 및 개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01. 7. 6 ~ '01. 9.27
  - 용역기관 : 청주경실련,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합동
  - 주요내용 : 충청북도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 등
- 규제정비심사위원회 개최 : 15회
- 규제신고센터 설치 : 도, 시·군
  -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실 등
- 행정규제 사무등록 및 공표 : 인터넷 홈페이지, 도보
- 규제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26,749명
- 행정규제 홍보 : 도·군정소식지, 언론매체, 전광판,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 4)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지역특성에 부합된 관광개발
  - 지정관광지 개발(완료) : 온달관광지, 수옥정관광지, 송호관광지
- 지역특성화를 위한 특화관광사업 추진
  - 청풍수정분수 준공('00. 4.15),      - 수안보 물탕공원 준공('00. 4.14)
  -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준공(00. 9. 9)
  - 단양활공장 개발 준공('01. 5.29)      - 청풍번지점프장 설치('01.11.10)
  - 진천역사테마공원조성('01.12.31)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완료)
  - '99년 : 5개 축제 538백만원(국비48, 도비178, 시군비 312)
  - '00년 : 8개 축제 2,912백만원(국비190 도비372 시군비930 교부금 600  
기타810)
- 시대에 부응한 관광상품 개발(완료)
  - 관광캐릭터상품 : 2개사업, 40백만원('01. 2)
    - 6종(3단우산, 핸드폰줄, 머그잔, 수전, 아동양말, 쇼핑가방)
  - 패키지투어상품 개발비지원 : 10백만원('99. 9)
  - 충북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 68점 선정('99. 9)
  - 광역관광루트사업 완료('99. 9)
    - 민족의 젓줄한강 관광홍보책자 발간 60만부('00. 8)
    - 한강벚길 도로싸이클대회('00.10)
    -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00. 7)
    - 수도권 공동관광홍보관축전('00. 8)- 동남아5개국
    -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청풍문화재단지)
- 21C 새로운 천년맛이 밀레니엄사업 (완료)
  - 충북 천년대중, 천년각 건립 완료 : '99.10.25
  - 새천년맛이 행사 완료 : '99.12.31(관광객 25천명)
- 관광객 유치홍보 (완료)
  - 국내·외 일반여행사 Fam Tour 개최 : 4회 144명
    - '99년 : 3회(국내 1회, 국외2회-일본, 중국) 102명
    - '00년 : 1회(국내 1회) 42명
  - 우수여행사 포상 : 9개 여행사 20백만원
    - '99년 : 4개사 10백만원                      · '00년 : 5개사 10백만원
  - 벽면조명광고 설치 : 5개소 45백만원

- '99년 : 1개소 (서울시청 지하도)
- '00년 : 4개소 (부산, 인천, 울산터미널, 광주역)
- 관광교류전 : 10회
  - '99년 : 6회(국내4, 국외2)
  - '00년 : 4회(국내3, 국외1)
- 관광종합홍보물 제작(완료)
  - 홍보팜프렛 제작 : 60천부 ('00. 2)
  - 홍보영상물 : VTR 300개, 35백만원 ('00. 2)
  - 홍보책자 및 지도 등 : 92천부, 107백만원 ('00. 2)

## 5)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수해상습지 개선
  - 수해상습지 27개소 대하여 년차적으로 사업비 65,766백만원을 투자 17개소 완료 10개소 추진중
- 재해위험지구 정비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1개소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사업비 64,046백만원을 투자 26개소 완료 45개소 추진중
- 재해사건예방 추진
  - 지역주민 재해방재 의식 고취를 위하여
    -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재해담당자 방재교육 실시 : 매년
    - 재해예방포스터 공모 및 공모작 거리 전시회 등 실시 : 매년

- 재해취약시설 및 대형공사장 예찰활동 강화 : 공무원, 주민 등으로 책임관리 실시
- 매년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자재·장비, 구호물자 등 확보
  - 수방자재 : 포대 754,129매, 비닐덮개 301,555㎡, 묶음줄 6,571타래 등
  - 구호물자 : 양곡 131,444천원·양곡 51가마, 천막 1,335, 의류 8,650점, 침구 7,655점 등
  - 방역물자 : 살충제 2,872ℓ, 살균제 1,040ℓ, 우물소독약, 470kg, 예방 주사약 6천명 등
- 신속한 기상상황 파악 및 상황전달을 위한 행정장비 설치
  -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음성통보시스템 설치 : 10개지구 4,661백만원 투입
  -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13개소) 및 TV ON/OFF시스템(193개소) 설치 : 287백만원 투입
  -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개선 : 119개소 552백만원 투입
  - 기상대 및 지역내 공군기상대 행정전화 가설 : 5개소(기상대 3, 공군 2)

|         |
|---------|
| 忠 清 南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53(03-63-01) |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증대 대책 추진 | 1999. 6.18 |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農水畜産物 價格安定 및 輸出增大對策 推進 : 253(03-63-01)

- 야채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수축산물 가격안정과 농촌 피해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바람
- 충청남도는 농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수출 활성화가 필요함. 농수축산물에 대한 일본시장조사와 농산물 포장, 기술개발 등 일본에 비해 낙후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원대책을 강구('99. 6.18, 충청남도 행정개혁 보고서)

- 농특산물 유통구조 혁신 : 중간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도모
  - '99. 9.14,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립 : 524억원(부지 4만평, 건평 1만평)
  -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품목 육성 지원 : 32개 품목, 55억원
  - 도지사 품질추진 농특산물 관리(69개 품목) : 지역대표상품 육성
  - 산지 유통시설 확충, 물류 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 : 32억원
  - 농특산물 수출 확대 : 전문단지 조성 8개소, 수출지원자금 지원 20억원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 충남의 「얼굴있는 농산물」로 육성
  -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비료 지원 : 7만톤 168억원
  -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친환경 농업마을 2개소, 친환경지구 3개소
  - 화훼농업 육성 : 3개년 계획 추진 완료('00년~'02년, 190억원 투자)
- 축·수산 경쟁력 강화
  - 한우 다산 장려금 지원 : 10천두, 21억원
  - 한우 품질 고급화 : 11천두 14억원
    - ※ 구제역 발생 방지, 돈 콜레라 : 5년 연속 청정화 달성
  -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 갯벌형 바다목장화 등 추진

## 2)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내재된 규제 발굴, 폐지
  - 총 327건 근거부여 또는 발굴·폐지
- 자치법규상 규제 정비 : 도 314건, 시·군 4,211건
- 규제개혁 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
  - 공무원 1인 1규제 정비 : 법령 51건 개선 건의, 자체 반영 24건
  - 규제개혁 메시지제 시행 : 총 4,000건 이상
- 신설 규제 사전심사 강화
  - 조례·규칙 사전 심사 36회, 321건
  - 기존 규제 심사·정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3회, 742건 심사
  - 규제개혁 사후 관리 : 규제개혁 추진실태 점검(5회, 81건 개선)
- 규제개혁 홍보 및 교육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 담당공무원 연찬회 10회, 부단체장 회의시 독려 12회, 도 직원 교육 6회
    - 시군 규제개혁담당관 토론회 3회,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반영 4개과정
  - 규제개혁 성과의 체감 향상을 위한 홍보
    - 법무소식지 게재 12회,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61건 처리
    - 도정소식지 게재 2회, 신문기사 모음집 발간·배부 1회

### 3)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관광자원 개발

-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 : 31지구 4,917평
- 테마관광지 조성 : 해미읍성 역사문화관광 개발 등 명소화 관광지 개발
- 관광숙박시설 확충 : 관광호텔·콘도 19개소 1,836억원, 공중화장실 36개소 개설
-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추진 : 공공투자 539억원, 민자유치 741억원

-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차별화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 관광박람회 등 참가 8회, 관광설명회 개최 9회, 중앙지 기획보도 114회, 한·중 경제문화교류 협력사업 추진 5회 138명
- 관광마케팅 적극 추진
  - 관광상품 개발 : 인삼, 머드 등 건강·미용투어,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등
  - 문화관광축제 개최 : 금산인삼축제, 서천모시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 관광기념품 개발 : 관광기념품 공모전 2회, 꽃박람회 관광열차 등 운영 83회 4만명
- 지역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 대전·충청권 공동 관광마케팅 : ‘02. 2.25~ 3. 7(11일간), 중국 방문 마케팅 실시
  - 대전·충청권 공동 관광설명회 : ‘02. 2.19, 한국관광공사, 100여업체 참석
  - 대전·충청권 공동 관광홍보물 제작 : 4종 17,000부 제작, 활용

#### 4)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공공 및 사유시설 수해 복구
  - 공공시설 : 2,620개소 183, 532백만원
  - 사유시설 : 186개소 68,381백만원
- 이재민 생계 지원
  - 이재민 구호비 지원 : 374세대 282백만원
  -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 : 655동 44백만원
  - 주택복구 보조금 지원 : 77동 1,188백만원
- 재해구호 비축물자 확보
  - 양곡 118백만원, 물자, 모포 등 5종 22,643점
-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 마련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 : 10개지구 110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 9개지구 201억원

|         |
|---------|
| 全 羅 北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03(03-64-01) | 쌀 생산비 절감사업의 전국 보급 방안 강구 | 2000.10.26 |
| 404(01-64-02) |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계획 수립      | 2000.10.26 |
| 405(06-64-03) | 전북예술의 전국적인 대외 진출        | 2000.10.26 |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쌀 生産費節減事業의 全國 普及方案 講究 : 403(03-64-01)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농사 비용 50% 절감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획기적이고 괄목할만한 사항임
-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00.10.26, 업무보고시)

### ○ 추진 계획

- 단지조성 : '98년 5 → '04년 17개소, 850ha - '99년이후 매년 2개소씩 확대
- 사업비 : 3,996백만원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절감목표 : '94년 425 → '04년 214천원/10a ( $\Delta$ 50%)

### ○ 추진실적

- '02년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전북) : 13개소, 663ha
- 단지운영 결과 정밀분석 미진사항 보완 및 사업계획 반영 : '01.12
- 단지별 회원총회 개최 : 영농 협약, 실증과제 교육 ('02. 3. 1~28)
-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기술 중앙 연시대회 개최 : '02. 4.29 (400명)
  - 화판 및 새로운 농기계·자재 전시, 생산비 절감기술 연시, 종합토의
- 현장지도본부 운영 : 단계별 주요 농작업 입회지도 (13개반, 54명)
  - 현장 문제점 도출 신속해결, 영농상담, 당면 농작업 현장지도 등
  - 고품질품종 확대재배 : 559ha(90%), 직파재배 확대 : 372ha(56%)
- 대학교수 외부평가제 도입 연차별 경영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 생산비 절감('94 불변가격 대비)
    - '98년  $\Delta$ 9.4% → '99년  $\Delta$ 23.5% → '00년  $\Delta$ 27.2% → '01년  $\Delta$  30.1%
    - '02년 직접생산비 절감 : '94년 211 → 122천원/10a ( $\Delta$ 42.1%)
  - 단지회원 기술수준 향상, 영농의욕 고취 등 간접효과 거양

※ 단지주변 직파증가 : '98) 522 → '99) 2,700 → '00) 5,800 →  
'01) 6,900 → '02) 8,200ha

- 농림부에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운영
  - 쌀 생산비절감 추진상황 행정자치부, 농림부, 민주당 보고 : '00. 10
  - 농림부 간부회의시 사업 추진상황 발표 및 토의(원장) : '00. 12
  -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전국 확대 조성 : 8개시도, 18개소, 900ha
- 금후 계획
  - 간접생산비는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음  
→ 2002년부터 직접생산비 중심 목표설정 추진
  - ※ 단지명칭도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로 변경 농업인 공감대 형성
  - '02년 단지운영 결과 미진사항 내년 계획에 반영 및 순회교육으로 보완
  - 단지영농에서 실증된 기술의 일반농가 확대 보급을 위한 경영모델 개발
  - 남서부 지역 지대별 쌀 생산비절감 단지 모형 농림부 시책 건의 :  
'02.12

## 2) 地自體 次元의 南北交流計劃 樹立 : 404(01~64~02)

-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문화·체육·학생·여행 등)을 강구할 것 ('00.10.26, 업무보고시)

- 추진 계획
  - 정부(통일부,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
  - 민간차원의 체육·문화분야 등 단계적으로 교류하여 가시적인 효과 거양과 상호 신뢰 기반 구축
  - ※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 제1단계 : 교류협력 기반구축
- 제2단계 : 민간차원의 상호신뢰기반 구축
- 제3단계 : 상호 유사지역 공동발전 협력
- 추진 실적
  - 도지사 북한방문 : '01. 1.31 ~ 2. 2
  - 의향서 체결 및 직접 접촉 창구개설 합의
  - 남원시립 국악단 창무극 “춘향전” 평양공연(58명) : '01. 2. 1
  - 남북한 교류의 구체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 : '01. 2. 3
  - 민족화해협의회 (김령성 부회장) ⇔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협조공문 및 감사 서안문 발송 : '01. 2.13
  - 제2회 전군간 국제 벚꽃 마라톤대회 초청 제안 : '01. 1
  -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북한 음악단체 초청 제안 : '01. 1
  - 남북 공동 육계 계열화사업 추진 제안 : '01. 2
- 금후 남북교류 협력대상사업 선정 등은 중앙부처와 협의 후 추진

### 3) 全北藝術의 全國的인 對外 進出 : 405(06~64~03)

- 전북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예술의 보고인 바 이를 활용하여 전국은 물론 세계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00.10.26, 전라북도 업무보고시)

- 세계수준의 문화예술 기반 구축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건립
  - 건 립 : '01. 9.12 완공
  - 규 모 : 부지 99,783m<sup>2</sup>. 연면적 36,574m<sup>2</sup>. 건축면적 13,385m<sup>2</sup>
  - 주요시설 : 공연장 3개, 야외공연장 1. 국제회의장, 전시실 7실 등



- 총사업비 : 1,094억원
- 우수기획 문화축제의 관광 상품화
  - 전주세계 소리축제 개최
    - 개최주기 : 매년 1회 ('01년부터 매년 9일간)
    - '02년 참가 : 15개국, 214개단체
    - 개최기간 : '02. 8.24 ~ 9. 1
    - 총사업비 : 3,298 백만원
  - 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 개최 (2년주기)
    - '01년 참가 : 20개국, 2,200여명
    - 개최기간 : '01.10. 6 ~ 11. 5 (1개월간)
    - 총사업비 : 657 백만원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개최
    - 개최주기 : 매년 1회 ('02. 5.22 ~ 5.23)
    - 대회종목 : 전통예술 7개분야 (참가 293개단체, 617명)

#### 4)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행정규제정비기획단 구성(13명), 대책협의회 (12명) 구성·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15명) 및 운영조례 제정 운영(11회)
- 『규제신고센터 설치』 — 도, 시·군 15개소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무발굴 정비 : 344건 (도 61, 시·군 283)
- 중앙부처 소관(법령) 행정규제발굴 개선 건의 : 246건
  - 법령 미 근거(43건), 법령 근거(203건)
- 불필요한 민원서류 일제조사(총 1,934건 중 137건 발굴 중앙에 개선건의)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추진 : 4,168건
- 규제개혁관련 교육 운영(22개 과정 9,673명), 책자발간·배부(4회 600부)

## 5)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 추진 계획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 '01~'20년까지 1조 5,170억원을 투입 고군산군도(선유도)를 국제적인 휴양해양관광지로 개발
  - 용담호주변관광개발 : '96~'08년까지 185억원을 투입 진안의 용담호 주변에 쉼터 등을 조성하여 휴양관광지로 개발
  - 서해안종합관광벨트조성(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 : '98~'07년까지 1조 8천억원을 투입 서해안고속도로주변(관광)개발
- 추진 실적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 '01년 5월부터 본격 추진 결정, '03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수정용역비 3억원 확보
  - 용담호주변관광개발 : '01~'02년 휴게소 및 쉼터 조성사업 추진, '03년 예산으로 쉼터조성비 12억원 확보
  - 서해안종합관광벨트조성 : 관광지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12개

소)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용역(건교부)  
에반영토록 노력

○ 향후 계획

- 군산국제해양관광지 : 기본계획수정용역('03~'04) 결과에 따라 사업 본격 추진(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 용담호주변관광개발 : 휴게소 및 쉼터 조성 사업 지속 추진
- 서해안종합관광벨트조성 : 용역 결과에 따라 서해안종합관광벨트화 추진

## 6)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조치 내용

- 총 투자비 : 8,053억원
  - 수해복구사업 추진 : 6,995억원
  - 상습침수지역 해소 : 1,058억원

○ '99 수해복구사업 추진

- 복구비 : 677억원(사유시설 455억원, 공공시설 222억원)
  - 사유시설(7개시설) : '00. 4.30 복구완료
  - 공공시설(280개소) : '00. 6.30 복구완료

○ '00 수해복구사업 추진

- 복구비 : 967억원(사유시설 80억원, 공공시설 887억원)
  - 사유시설(11개시설) : '00.12.30 복구완료

- 공공시설(411개소) : '01. 6.30 복구완료
- '01 수해복구사업 추진
  - 복구비 : 561억원(사유시설 74억원, 공공시설 487억원)
    - 사유시설(8개시설) : '01.12.30 복구완료
    - 공공시설(268개소) : '02. 6.30 복구완료
- '02 수해복구사업 추진
  - 복구비 : 4,790억원(사유시설 790억원, 공공시설 4,000억원)
    - 사유시설 : 주택 331동 중 282동완료, 농경지 668ha 중 270ha완료
    - 공공시설(2,019개소) : 완공 454개소, 공사중 1,565개소(종합진도 48%)
-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
  - 실 적 : 73개지역 1,058억원(추진기간 '99~2002)
  - '99~'01까지 투자실적 : 50개지구 46.0km 615억원
  - '02추진사항 : 23개지구 37.0km 443억원
    -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 10지구 7.0km 95억원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13지구 30.0km 348억원

|         |
|---------|
| 全 羅 南 道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63(04-65-01) | 지역개발의 성공적 추진노력 | 1999. 7.22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地域開發의 成功的 推進努力 : 263(04-66-01)

- 광양만권과 목포권을 「해양전남」의 양대핵으로 개발하고,
- 특히, 「광양만·진주권」 공동개발은 특별히 유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99. 7.22, 전남행정개혁 보고회시)

-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공동사업 발굴 건의
  - 남해고속도로 확장 : 순천~진주~마산, 79.1km, '05년 이후 추진
  - 경전선(보성~마산간)복선화 : 168km, '05년 이후 추진
  - 국도2호선(광양~진주간)확장 : 110km, '05년 이후 추진
  - 교량(여수~남해간)건설 : 6km,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중
  - 섬진강 양안관광 환경 조성사업 : '05년 이후 추진
  - 섬진강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 '05년 이후 추진
- 목포권 개발사업 추진
  - 호남선 철도 복선화 : 복선화 사업 추진 70.6km(총 공정 85%)
  - 목포 신외항 건설 : 진입도로 준공, 안벽공사중(총공정 29%)
  - 서남권 신산업 철도 : 노반공사 완료(총공정 90%)
  -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건설 : 실시설계완료, 사업 착공
  - 무안국제 공항건설 : '03년 완공예정(총공정 62%)
  - 목포~보성간 철도건설 :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추진중
- 향후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협의

## 2)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조례, 규칙, 고시 등 미발굴 규제사무 잔존규제의 지속적 발굴 추진
  - 등록규제 사무 : 495건(폐지 300, 완화 28, 존치 167)
  - 정비대상 328건 정비 완료
-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 지시이후 총 8회
  - 6차 규제개혁위원회('02. 1.30) : 주민불편해소 특정 과제 의결
  - 7차 규제개혁위원회('02. 5.17) : 규제사무 19건 정비(폐지10, 강화5, 신설4)
  - 8차 규제개혁위원회('02. 9.30) : 유사행정기관 규제사무 정비 43건
- 교육 및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 직원 및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규제개혁 관련 교육 : 65회, 11,639명
  -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 28건 접수 처리
  - 규제개혁이행상황 점검 및 처리 : 126건

## 3)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용역 : '99. 2 ~ 12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정부 확정(문화관광부) : '00. 7.19
  - 대 상 : 목포시 등 13개 시군(남해안에 접한 시군)
  - 사업기간 : '00 ~ '09(10년간)
  - 사 업 비 : 1조6,239억원(국비 2,675, 지방비 3,798, 민자 9,766)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대상 30개 사업 정상추진
  - 기본계획 및 조성 계획 수립 28건 완료, 2건 추진중
  - 실시설계 19건 완료, 11건 설계중
  - 자연사박물관 등 19건 사업 착공
- 향후 사업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대책강구

#### 4)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재해발생 현황
  - 피해횟수 : 5회(7월호우, 8월호우, 태풍 프라피룬 · 사오마이)
    - 인명피해 2명, 주택 205동, 공공시설 1,581개동 등
  - 총 피해액 : 1,011억원(7월 142, 8월 842, 사오마이 28)
  - 복 구 액 : 2,883억원(국비 2,134, 지방비 492, 융자등 257)
-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
  - 태풍 내습에 따른 대통령 지시말씀 전파 : 2회
  - 태풍관련 도지사 재해예방 강조 지시
    - 서한문 1회, 특별지시 4회, 일제전화 3회, 도 실과장 시군 일제점검 3회



- 기상특보관련 재해예방 강화 지시 : 129회
- 산간계곡, 하천변 등 행락·야영객 신속 대피조치 : 42지구 1,005명
- 재해위험지구 담당공무원 배치, 순찰·점검 실시 : 99지구
-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
  - 응급복구비 및 설계용역비 예산 긴급 지원 : 27억원
  - 지방비 부담분 예비비 동원 긴급 지원 : 81억원
  - 설계지원단(78개팀 367명) 및 편입용지 보상단(12개팀 65명) 구성·운영
  - 피해복구 추진
    - 이재민 구호 : 912세대 3,137명 생계비 등 11억원 지원
    - 주택 복구 : 205동 복구
    - 농업용 시설 : 비닐하우스 417동, 농경지 103ha 복구, 가축 39천수 입식
    - 수산시설 : 어선 518척, 수산 증·양식시설 554개소 복구
    - 공공시설 : 1,581개소(도로·교량 143, 하천·소하천 377, 수리시설 337, 소규모시설 166, 기타 공공시설 558)

|         |
|---------|
| 慶 尙 北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규제정비방향
  - 자치법규의 전면 재조사를 통한 각종 행정규제 발굴·정비
  - 규제사무의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한 규제의 신설·강화규제 적극 억제
-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개최(9회, 221건 정비)
-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3회)
  - 23개 시·군 54건 시정조치
- 규제사무 인터넷 등록(405건)
- 규제개혁교육과목편성운영(‘01~‘02, 매년 32시간)
- 규제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46건 접수처리)
- 규제개혁 홍보실적(언론매체 등, 3종 10,000회)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3대문화권(신라·유교·가야문화) 문화재 보전 및 관광자원화 도모
  - 권역별 관광관광지개발 : 총 54개지구(조성중 32, 예정 22)

- 전통문화 체험관광상품 개발 : 선비촌, 지례예술촌, 템플스테이
- 동해안 해양 레포츠 활성화 : 감포관광단지개발, 호미곶
- 휴양 및 산악레포츠 개발 : 문경활공단지, 레프팅 등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00~'10, 2조 2,666억원)
  -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00. 3완료), 정부주도 추진 확정(213개사업)
- 「경주세계문화EXPO」 개최('00. 9. 1~11.26, 87일간)
  - 81개국 9,414명, 54개 행사, 175만명(외국인13) 관람
    - ※ 「'03 경주세계문화EXPO」 행사(8.13~10.23, 72일간), 대구U대회와 연계
- 「퇴계탄신 500주년기념 세계유교문화축제」 개최('01.10. 5~10.31, 27일간)
  - 행사내용 : 기념공원조성, 전시·영상, 국제학술대회, 기념행사 등
- 외래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 관광호텔(46개소), 휴양콘도미니엄(6개소), 민박마을조성(16개마을)
-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 경북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국 북경),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33회)
  - 해외 언론사, 관광기자단초청 현지답사설명회 개최 : 31회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 COTAL 총회, PATA 한국지부총회 등
-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 명예통역안내원(121명), 문화유산해설사(156명), 관광안내소 운영(12개소)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 재해사전 대비체제 확립

- 재해취약시설장비 555개소, 수방자재 1,789천매, 구호물자 8천점 확보
- 방역물자 9천ℓ 확보, 수방단 4,795단, 인명구조대 27대 편성, 이재민수용 시설 1,114개소 확보
- 복구장비 1,644대 확보, 주요방재중점관리대상 764개소 지정관리

## ○ '02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완료 추진

- 주택 853동 중 772동 완료, 복구중 81
- 농경지 3,017ha 중 1,734ha 완료, 복구중 1,283ha
- 공공시설 9,145건 중 1,412완료, 복구중 7,485건, 설계발주 248건

## ○ 치수사업 추진('02까지 9,379억원 투자)

- 낙동강치수 보강사업('95~'02) : 47지구 91km 1,759억원
-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95~'02) : 30지구 1,595억원
- 수해상습지개선사업('99~'02) : 41지구 119km 1,250억원
- 소하천 정비사업('95~'02) : 3,347km 4,775억원

|         |
|---------|
| 慶 尙 南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lt;시·도 공통 지시사항&gt;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조례 제정 : ‘99. 3.25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5명(민간인8, 공무원7), 12회 개최
- 규제사무 발굴·정비 : 8,357건(폐지 3,364, 완화 1,626, 존치 3,367)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 : 168건
- 유사행정규제 발굴·정비 : 193건
- 기업의 경제활동관련 규제 설문조사 : 2회(63건 접수처리)
-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대폭 감축 : 10종 → 2~4종
- 시군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 3회(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도 홈페이지
- 공무원 형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 : 6,500명
- 규제개혁 대도민 홍보로 체감도 제고 : 언론 50회, 홍보책자 제작

## 2)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회의개최(문화관광부) : ‘98. 7.10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용역 : ‘99. 2.10~‘99.12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 '99. 5.12 ~ 15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지역 간담회 개최 : '99. 7.13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지역공청회(국토연구원) : '99. 9. 2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용역완료(한국관광공사) : '99.12.24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반영 : '00. 1. 8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전략회의 : '00. 3.31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 확정 : '00. 7.19
  - 대상지역 : 3개 시·도, 11개 시, 12개 군(부산시 전역, 전남 13, 경남10)
  - 경상남도 사업계획 : 28개 사업
    - 1단계('00~'05) : 19개 사업
    - 2단계('06~'09) : 9개 사업
    - 사업비 : 1조7,691억원(공공 5,257, 민자 1조2,434)
- 사업지구별 실시절계 및 착공, 준공 : '00 ~ '09
- '02년까지 추진실적
  - 사업량 : 19개 사업
  - 사업비 : 2,694억원(공공2,462, 민자 232)
  - 진 도 : 공공사업 47%(사업비 비율)
- 향후, 관광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민자유치 방안 강구 등

### 3)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99. 8. 3, 국무회의시 )



- 공익근무요원의 재해기간(6.15~10.15, '00~'02)중 경계구역 등에 재해대피 요원화(249명)로 인명피해 최소화
- 경계구역의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및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구축 : 53지구 82억원
- 산사태 위험지역 개선사업 추진 : 62ha, 40억원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 : 77개 지구 1,430억원
- 소하천정비 등 기타 재해예방사업 추진 : 593개 지구 1,382억원
- 재해위험지구 및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 320건 839억원
- 침수국도 개량복구건의(도지사지휘보고 : '99.10. 1)
  - 4개소 105억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지구(45억원) 침수 국도개량
- 수해복구사업 및 노후취약시설 추진 수시 점검 (도지사, 간부공무원 등)
- 과수지주목 및 방풍망 설치지원('99) : 지주목 665ha, 방풍망 5km, 34억원
- 배수개선사업추진 : 132지구 17,524ha 1,655억원

|       |
|-------|
| 濟 州 道 |
|-------|

# ☐ 指示事項 目錄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408(03-68-01) | 감귤경쟁력 강화 | 2000.12.16 |
| 409(06-68-02) | 항몽유적 개발  | 2000.12.16 |

## <시·도 공통 지시사항>

|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 지 시 제 목       | 지시일자       |
|---------------|---------------|------------|
| 243(08-70-23) | 과감한 규제개혁      | 1999. 4.24 |
| 244(08-70-24) | 문화관광 사업의 육성   | 1999. 4.24 |
| 264(08-70-25) |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 | 1999. 8. 3 |

## 1) 柑橘 競争力 強化 : 408 (03-68-01)

-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감귤을 사고 싶도록 포장을 개선하고 『세계감귤경시대회』 등을 통해 마케팅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감귤이 맛이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 생산량이 늘어도 문제가 없으므로 맛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주기 바람  
(’00.12.16, 제주도 업무보고시)

- 품질고급화를 통한 맛있는 감귤생산 기반시설 지원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폐원 정비 : 560ha · 16,800백만원
  - 감귤 당도 향상을 위한 토양 피복재배 시설 지원 : 56ha · 474백만원
  - 만감류 우량묘목 공급 : 34천본 · 151백만원
  - 고품질 감귤생산기반 조성 지원 : 2개소 · 1,478백만원
  - 제주감귤당도 1°brix 높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 저급품 감귤 시장 격리를 통한 상품 가격지지 도모
  - 감귤 산지폐기 : 77,769톤 (정부지원 50,000, 자치단체 27,769톤)
  - 가공용 수매 : 107,189톤 (’01년산 49,537, ’02년산 57,652)
  - 북한 감귤 보내기 : 10,105톤 (’01년산 6,105, ’02년산 4,000)
-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 개선
  - 감귤포장상자 색상 칼라화 개선
    - 칼라상자 602종 40% ⇒ ’99년말 21%보다 19% 증
  - 감귤포장상자 색상 황색상자 감소
    - 황색상자 128종 11% ⇒ ’99년말 45%보다 36% 감
  - 고유브랜드 개발 활용 : 16종(상표등록 3종, 미등록 13종)
  - 물류비 절감을 통한 유통개선 : 선과장 대형화,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감귤 우수성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농축액 이용 지역 특산품화를 위한 감귤복합가공공장 2차가공시설 설치
  - 사 업 비 : 5,657백만원(국비 2,150, 도비 2,150, 자담 1,357)
- 감귤 수출 확대 추진 : 15,890톤 ('01년산 7,306, '02년산 8,584)
- 2001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 : '01.11.16 ~ 11.20
- 소비확대를 위한 감귤 우수성 대형 광고판 설치 : 공항, 주요도로변

## 2) 抗蒙遺蹟 開發 : 409 (06-68-02)

- 제주도와 같은 외딴 섬에서 국가운명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영광스러운 항몽유적을 개발한다면 국민들에 대한 교육효과와 동시에 관광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임('00.12.16, 제주도 업무보고서)

○ '01. 2. 7 : 항몽유적개발 관련 기본 계획 수립

- 총 사업비 : 430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130억원)
- 사업 기간 : '95~'06
- 주요 사업내용 : 토성정비, 토성관람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액 : 29억(국비 17, 지방비 12)
- 주요내용 : 토지매입 70필지42,588㎡, 토성복원 1,120m, 편의시설 1식 등

○ 종합정비계획 용역 완료('02.12)

- 건물지 발굴조사(옛 관아터 조사)
- 유적정비 문화관광 자원화(사료관건립, 애니메이션제작, 궁술연습장 등)
- 지표조사(토기, 파편 등 유무조사)

### 3) 果敢한 規制改革 : 243(08-70-23)

-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 시)

- 조례·규칙 등 규제사무 정비
  - 규제사무 현황 : 정비대상 235건(폐지 171, 완화 64), 존치 197건
  - 정비 실적 : 235건(폐지 171, 완화 64)
- 신설·강화규제 규제영향분석 실시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21건
- 행정규제관리의 투명성 제고
  - 규제사무 전수조사·공표(432건) : 도정신문 또는 인터넷 이용
  - 규제사무의 폐지·완화 등 변동상황 수시 입력·관리
-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규제개혁』 과목운영 교육 : 7개과정·264명

### 4) 文化觀光事業의 育成 : 244(06-70-24)

- 문화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해 주기 바람  
(‘99. 4.22~24, 부산·경남·경기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제주 문화자료 편찬·번역하여 보급 소개
  - '99. 6 자연, 역사, 문화유산, 전통문화 등
  - '99.12 『아름다운 제주(제주의 속담)』 편찬 보급 2,500부
  - '00. 2 제주큰굿 학술보고서, 제주 마애명 발간,

- '02.12 제주도 제주마 책자 발간 보급 500부.
- 역사·설화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지 및 상품개발
  - 정방폭포 서불과지 유적재현 : 기본계획 및 전시관 공사중
  -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 : 기념비 주변정비, 하멜상선 건조중
  - 삼성혈 성역화 및 인근문화시설 관광벨트화 :  
역사관·전사청 복구, 삼성신화 애니메이션 제작, 제기고 신축, 주변토지 매입 등
  - 혼인지 재현으로 전통문화 계승 : 혼례관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추진  
(‘03년부터 본격 사업추진)
- 선사유적의 보존 정비
  - 고산 유적지 발굴조사(3회)·토지매입(15필지18,874㎡)
  - 삼양·화북권 유적지 발굴조사(3회), 연계도로 확·포장정비(1,330㎡), 주거지 복원 11동 등
-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방문화재 지정
  - 해녀노래, 정동벌립장, 화북진, 서귀진 등 지방문화재 발굴 전통문화 계승사업 추진
  - 제주도 “큰 곳”지방문화재 지정
- 연차별 문화예술활동 체계정립
  - 제주 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수립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 '01. 4월 개원
  - 제주역사·문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 등

## 5)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 264(08-70-25)

- 이번 수해를 계기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99. 8. 3, 국무회의시)

- ’99년도 피해 및 복구실적
  - 피해내용 : ’99. 7.23 ~ 8. 4 기간중 호우 및 태풍 “올가”외 5회
    - 인명피해 : 사망·실종 13명
    - 재산피해 : 295억원 상당(주택,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유실 등)
  - 복구내용 : 총 883억원 투자
    - 공공시설 복구대상 352건 전량 복구 완료
    - 사유시설 복구 : 건물 31동, 농림·축산·수산 분야 등 100%복구완료
- ’00년도 피해 및 복구실적
  - 피해내용 : ’00. 8.23 ~ 9. 1 기간중 태풍 “프라피룬”외 7회
    - 인명피해 : 사망·실종 7명, 부상 35명
    - 재산피해 : 149억원 상당(주택,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등)
  - 복구내용 : 총 304억원 투자
    - 공공시설 102건 복구완료, 미준공 2건 (’02. 2월말 준공예정)
    - 사유시설 복구 : 건물 57동중 57동 복구완료, 기타 농경지 등 복구완료
- ’01년도 피해 및 복구실적
  - 피해내용 : ’01. 1.14 ~ 1.16 기간중 폭풍설 피해 외 3회
    - 인명피해 : 사망·실종 3명
    - 재산피해 : 15억원 상당 (주택 침수 2동, 선박파손 3척 등)
  - 복구내용 : 사유시설 복구완료

○ '02년도 피해 및 복구실적

- 피해내용 : '02. 8.29 ~ 9. 1 기간 중 태풍 “루사”의 2회
  - 인명피해 : 부상 1명
  - 재산피해 : 604억원 상당(주택,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 복구 등)
- 복구내용 : 총 1,058억원 투자
  - 공공시설 : 129건 완료, 미준공 138건(2003. 6월이전 완료예정)
  - 사유시설 : 주택 88동중 81동 완료, 농경지 등 복구중(03. 2월까지 완료예정)



## 附 錄

- 大 統 領 指 示 事 項 目 錄
- 大 統 領 指 示 事 項 管 理 指 針

## 대통령지시사항 목록

1998년

### □ '98.3.3, 제11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무회의 토론 활성화
- 【훈시】 국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정신 함양
- 【훈시】 국무위원의 솔선수범
- 【훈시】 능률적인 공직사회 조성
- 【훈시】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
- 【훈시】 국정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 【훈시】 경제난국 극복 만전
- 【훈시】 노·사·정 구조개혁 합의의 철저한 이행

### □ '98.3.10, 제12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무회의 토론 활성화
- 【훈시】 각 부처의 개혁노력 강화
- 【훈시】 능률적인 정부운영노력 강화
- 【훈시】 정부 본연의 업무 충실노력 강화
- 【훈시】 위기극복 노력 강화
- 【훈시】 공정한 인사관행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 '98.3.11,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훈시】 부실기업 퇴출 등 개혁노력강화
- 【훈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훈시】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 【훈시】 수입원자재 가격에 대한 감시철저
- 【훈시】 기업의 무분별한 해고방지노력 강화
- 【훈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 필요

【계획】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역할 강화(재경부)

【계획】 기업인수 및 합병활성화(재경부)

【계획】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건교부)

【계획】 소수주주권 강화(재경부)

【국정】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농림부)

【국정】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강화(노동부)

□ '98.3.1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훈시】 외환소요와 조달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외국인 투자활성화 노력

【계획】 물가통계(재경부)

【국정】 출판계 지원(문광부)

【국정】 조세제도(재경부)

□ '98.3.16,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시

【훈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

【훈시】 외환수수료에 대한 담합행위 방지

【훈시】 공정위 역할 강화

【훈시】 불공정행위 방지와 시장경제질서 확립

【훈시】 바람직한 기업의 역할 제고

【계획】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공정위)

【국정】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조사(공정위)

□ '98.3.17, 통일부 업무보고시

【훈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일관성 유지

【훈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노력

【훈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훈시】 대북접근시 신중한 자세 유지

【훈시】 통일부 중심으로 대북정책 추진

【계획】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창구 다원화(통일부)

□ '98.3.17,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시

- 【훈시】 주변국가와의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 【훈시】 남북문제 및 주변 4국관련 일관된 외교정책 추진
- 【훈시】 외교통상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 【훈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훈시】 재외동포 지원강화

□ '98.3.17, 국방부 업무보고시

- 【훈시】 경제적인 군 운용
- 【훈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국정】 병무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국방부)

□ '98.3.18, 제14회 국무회의시

- 【훈시】 각 부처의 선도적 개혁노력 강화
- 【훈시】 부처 업무보고시 정책의 중점부각 필요
- 【훈시】 실업대책 준비 철저
- 【훈시】 북풍문제의 공정한 처리필요
- 【훈시】 남북기본합의서 기본정신의 올바른 인식

□ 육(3.16), 해(3.18), 공(3.20)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시

- 【훈시】 사기높은 강력한 군대육성
- 【훈시】 철통같은 안보태세 유지
- 【훈시】 「국민의 정부」하 민주군대로서 사명완수
- 【훈시】 한·미 안보체제 강화
- 【계획】 해상방위 신무기체계 확보필요(국방부)
- 【국정】 군의 정보화·과학화추진 정예군 육성(국방부)

□ '98.3.18, 해군작전사령부 순시시

- 【훈시】 장병 정신전력 강화
- 【훈시】 해군 해상근무자의 처우개선
- 【훈시】 군의 국가적 위기극복 동참

□ '98.3.19,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시

- 【훈시】 무역수지 목표달성 노력강화
- 【훈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
- 【훈시】 기술개발 지원과 전략산업의 육성노력
- 【훈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강화
- 【훈시】 시장경제원칙의 고수
- 【훈시】 구조조정 계속 추진
- 【계획】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리방향 설정(산자부)

□ '98.3.26, 제15회 국무회의시

- 【훈시】 은행대출의 활성화 노력강화
- 【계획】 실업세부대책 수립(노동부)
- 【계획】 예산편성시 수요기관과 대화(예산처)
- 【계획】 행사간소화 방안 마련(행자부)
- 【추가】 생활물가 관련 통계 보완(재경부)

□ '98.3.27, 제1차 무역·투자 진흥대책회의

- 【훈시】 외환위기 해결을 위한 수출과 투자유치 노력
- 【훈시】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 【훈시】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의 적극적 노력 필요

□ '98.4.6, 제17회 국무회의시

- 【훈시】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식
- 【훈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
- 【훈시】 공기업의 다각적 개혁방안 강구
- 【훈시】 공정한 조세체계 확립 필요
- 【계획】 ASEM 외국인투자유치 후속조치(산자부, 외통부)
- 【계획】 실업대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점검(국조실)

□ '98.4.9, 법무부 업무보고시

- 【훈시】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
- 【계획】 공명선거 실현(법무부)
- 【계획】 불구속수사 확대(법무부)
- 【추가】 공명선거 풍토정착(법무부)
- 【국정】 교정행정의 근본적 개혁(법무부)

□ '98.4.9,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훈시】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 【훈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 【계획】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기부)
- 【계획】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과기부)
- 【계획】 과학기술자 우대정책(과기부)
- 【계획】 벤처기업 지원(산자부)
- 【계획】 원자력 수출지원(과기부)

□ '98.4.10,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훈시】 국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 당부
- 【훈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촉구
- 【계획】 종교계의 복지참여 활성화(복지부)
- 【계획】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철저(복지부)
- 【계획】 병원의 의약품구입 비리근절(복지부)
- 【국정】 취약계층의 복지증진(복지부)
- 【국정】 음식문화 개선(복지부)

□ '98.4.10, 환경부 업무보고시

- 【훈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동시추진
- 【훈시】 인센티브를 도입한 환경정책 추진에 역점
- 【훈시】 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필요
- 【계획】 탄력적 10부제 운영방안 연구(건교부)

- 【계획】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보전(환경부)
- 【추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강화(복지부)
- 【국정】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건교부)
- 【국정】 수질개선 및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방안 강구(환경부)

□ '98.4.13,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유기적 협조
- 【훈시】 개혁에 대한 홍보 활성화
- 【훈시】 인사와 예산면에서 지역균형발전 유도
- 【계획】 예산절약(예산처)
- 【계획】 산하단체 정비(예산처)
- 【계획】 국민과 함께 하는 산하단체 정비(예산처)

□ '98.4.13, 전국검사장 접견시

- 【훈시】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
- 【계획】 북풍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법무부)
- 【계획】 한총련조직에 대한 대응철저(법무부)
- 【국정】 학교폭력사범근절(법무부)
- 【국정】 민생침해사범 철저 단속(법무부)

□ '98.4.14, 제18회 국무회의시

- 【훈시】 정부정책의 발표와 실천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
- 【계획】 신속한 규제철폐(국조실)
- 【계획】 기업구조조정 시급(재경부)
- 【추가】 10부제 검토(건교부)
- 【국정】 주행세 도입(재경부)

□ '98.4.15,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훈시】 해양수산부는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서로서의 역할 제고
- 【계획】 어업협정조기체결 추진(외교부)

【계획】 해양경찰기능 재정립방안(해양부)

【국정】 21세기 선진항만 건설(해양부)

【국정】 수산물 유통체제 개선(해양부)

#### □ '98.4.16, 농림부 업무보고시

【훈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저렴한 농자금 지원

【훈시】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농업인위주의 농업정책추진(농림부)

【계획】 푸른숲 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농림부)

【추가】 유통구조 개선(농림부)

【국정】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농림부)

#### □ 98.4.16,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훈시】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중산층의 재산권 보호

【훈시】 인천국제공항의 차질없는 건설추진

【훈시】 국토균형 발전과 생활편의 향상 노력필요

【훈시】 고용효과가 큰 국가토목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중국여행 자유국 문제 성사노력

【계획】 경제성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 계획안 마련(건교부)

【계획】 대중교통수단이용 유도대책 마련(건교부)

【계획】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적극적추진(건교부)

【계획】 중국의 해외여행자유국 추진(건교부)

【국정】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마련(건교부)

【국정】 수도권 집중억제 방안 강구(건교부)

#### □ '98.4.1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훈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정보화 노력필요

【훈시】 인터넷 이용 활성화 대비

【훈시】 정보화 마인드 확산

【훈시】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계획】 컴퓨터이용능력 배양(정통부)

【계획】 SW산업 진흥방안(정통부)

【계획】 민영화 추진(정통부)

【계획】 정보화수준 강화(정통부)

□ '98.4.21, 98 한국디자이너 대회시

【국정】 디자인산업 육성(산자부)

【국정】 세계 그래픽디자인 대회 및 세계 디자인 총회 준비(산자부)

□ '98.4.21, 제19회 국무회의

【훈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작업의 성공적 추진

【훈시】 여성관련 정책수립·집행시 여성특위와 적극협조

【훈시】 근로자해고시 적법절차준수 및 해고 최소화

【훈시】 정부정책 확정발표전 부처간 충분한 의견교환

【계획】 중소기업 지원(산자부)

【추가】 적대적 M&A 대체용어 검토(재경부)

□ '98.4.28, 제20회 국무회의시

【계획】 노사정위원회의 발족(노동부)

【계획】 경제정책 대외홍보 강화(전부처)

【추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확립(법무부)

【국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혁신(복지부)

□ '98.5.6, 제21회 국무회의시

【훈시】 전세반환금 부족분 지원대책 격려

【훈시】 국무회의 운영활성화와 정책의 사전조율 노력

【계획】 학교급식 확대(교육부)

【계획】 스승모시기행사 적극동참(교육부)

【계획】 공기업의 고율이자 조장 조사(재경부)

【계획】 공무원 부정비리 엄단조치(행자부)

- 【계획】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처(법무부)
- 【계획】 청소년의달 행사 내실화(문광부)
- 【계획】 지하철침수사고 원인과 책임규명(서울시)
- 【추가】 노사정 2기 위원회 조속 발족(노동부)

□ '98.5.12,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여성의 대표성 제고
- 【계획】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여성특위)
- 【계획】 가정주부의 권익확대(여성특위)
- 【국정】 정부위원회등 공공분야의 여성참여 확대(여성특위)

□ '98.5.13, 제22회 국무회의시

- 【계획】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강화(예산처)
- 【계획】 서비스업 관심제고(문광부)
- 【계획】 공기업예산 조기집행(예산처)
- 【추가】 노동계 파업대책 방안 강구(법무부)
- 【추가】 중소기업 지원(산자부)
- 【추가】 벤처기업 지원(산자부)
- 【추가】 행정규제 철폐(국무조정실)

□ '98.5.19, 제23회 국무회의시

- 【훈시】 노동계·집회 시위관련 적절한 대처 요망
- 【훈시】 제2기 노사정위원회 조속 발족
- 【훈시】 경제정책 결정시 다양한 의견수렴
- 【훈시】 인니사태 피해 최소화
- 【훈시】 방미준비 만전

□ '98.5.21, 제1차 정보화 전략회의시

- 【훈시】 정보화 전략회의의 충실한 운영
- 【훈시】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자본과의 제휴노력

【훈시】 정보화와 리엔지니어링 병행 추진

【계획】 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행자부)

□ '98.6.2 제25회 국무회의시

【훈시】 각종선거시 흑색선전 단속철저

【훈시】 제2기 노사정에 민노총 참여 등 원만한 출범 추진

【훈시】 정부 정책마케팅 강화

【훈시】 현장위주의 정부정책 추진

【훈시】 금번 방미시 한미관계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마련

【국정】 실업대책 철저(노동부)

□ '98.6.16, 제27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정개혁 가속화

【훈시】 기업구조조정의 철저

【훈시】 정부와 공기업 개혁노력 강화

【계획】 금감위의 분발촉구(금감위)

【계획】 병무비리 추궁 철저(법무부, 국방부)

【계획】 교육개혁 추진(교육부)

【추가】 산업자원부의 벤처기업 육성(산자부)

【추가】 실업대책 철저(노동부)

【추가】 기획예산위의 분발 촉구(예산처)

【추가】 국세청의 불로소득자 과세 철저(재경부)

【추가】 규제개혁 강화(국조실)

【추가】 재정경제부의 리더쉽 발휘(재경부)

【국정】 노사정위원회 운영 배려(노동부)

□ '98.6.17, 국무조정실장 보고시

【훈시】 규제개혁의 가시화

【계획】 규제정비계획 재수립(국조실)

【추가】 규제개혁사항의 신속한 추진(국조실)

□ '98.6.17,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추가】 노사정 협력 및 경제조정력 강화(재경부)
- 【추가】 세제개혁 추진(재경부)
- 【추가】 중소기업 지원 강화(산자부)
- 【추가】 벤처산업 육성(산자부)
- 【추가】 차질없는 실업대책 추진과 홍보강화(노동부)
- 【추가】 실업문제 해결(노동부)

□ '98.6.19, 제7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 【추가】 내부거래 차단(공정위)
- 【계획】 부실판정기업의 협력업체 대책마련(금감위, 재경부)
- 【계획】 부실판정기업 종사근로자 해고대책 마련(노동부)
- 【국정】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금감위)
- 【국정】 구체적인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금감위)
- 【국정】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금감위)

□ '98.6.23, 제28회 국무회의시

- 【훈시】 동해잠수정 사건,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처
- 【훈시】 영예수여 남발자제

□ '98.6.26, 산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계획】 교역량 확대하에 무역수지 흑자달성(산자부)
- 【계획】 외국인 투자도입 노력 강화(산자부)
- 【계획】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등 행정개혁 강화(산자부)
- 【계획】 산자부의 역할 강조(산자부)
- 【계획】 에너지 절약(산자부)

□ '98.6.26, 재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최대한 노력
- 【계획】 각종 개혁정책의 철저한 추진(재경부)
- 【계획】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체질 강화(재경부)

□ '98.6.26, 노동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노사관계 안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 【계획】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출(노동부)
- 【국정】 노사협조에 바탕한 구조개혁 추진(노동부)
- 【국정】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노동부)

□ '98.6.27, 기획예산위원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개혁의 가시화 필요
- 【훈시】 장관들의 국민과의 접촉 강화
- 【훈시】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지원 강화
- 【계획】 지방자치시대의 정착(행자부)
- 【계획】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산자부)
- 【추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예산처)
- 【추가】 대화를 통한 예산편성(예산처)

□ '98.6.27, 공정위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보급
- 【훈시】 물가안정관련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 【계획】 공정위의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마련(공정위)
- 【추가】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방지(공정위)
- 【추가】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공정위)
- 【국정】 5대 재벌의 자금시장 독점현상 완화(공정위)

□ '98.6.27, 금감위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은행경영의 합리화로 경쟁력강화 노력
- 【훈시】 금융·기업구조조정시 부작용 최소화 노력
- 【계획】 직원교육 강화(금감위)
- 【계획】 구조개혁단직원 신분문제 조치(금감위)

□ '98.6.29, 농림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농촌투융자 관련비리 엄중 처리
- 【계획】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진입제한 폐지 재검토(농림부)
- 【계획】 축산물 판매부조리 단속 철저(농림부)
- 【계획】 행정규제 개혁 강화(농림부)
- 【추가】 농축산물 유통개혁(농림부)
- 【국정】 협동조합개혁(농림부)
- 【국정】 주곡 자립대책 수립(농림부)
- 【국정】 농촌 투융자제도 개선(농림부)
- 【국정】 농가 부채경감 추진(농림부)
- 【국정】 농산물 수출 확대(농림부)
- 【국정】 산지소득증대 대책 추진(농림부)

□ '98.6.29, 건교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장마대비 철저
- 【계획】 토지공사의 기업토지매입 확대(건교부)
- 【계획】 항공산업 육성(건교부)
- 【계획】 효율적 물류모델 연구(건교부)
- 【계획】 도시철도건설시 철저한 계획수립(건교부)
- 【계획】 규제개혁(건교부)
- 【계획】 철도경영혁신(건교부)
- 【추가】 경부고속철도 준비 철저(건교부)
- 【추가】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개발(건교부)
- 【추가】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건교부)
- 【추가】 건설업 실업방지대책(건교부)
- 【추가】 토지규제 개선방안 수립(건교부)
- 【추가】 지역간 균형개발(건교부)
- 【국정】 주택시장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건교부)
- 【국정】 해외건설지원 강화(건교부)
- 【국정】 낙후지역개발 청사진 제시(건교부)

【국정】 부실공사 및 하도급 부조리해결(건교부)

【국정】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건교부)

□ '98.6.30, 제29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무위원들의 TV출연 등 홍보강화

【계획】 북한잠수정 침투관련 후속조치 철저(외교부, 국방부)

【계획】 정리은행 인수등 철저(금감위)

□ '98.7.1, 교육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훈시】 정보화 교육 강화

【계획】 교원잡무경감 및 정보화교육 자격증제도방안 검토(교육부)

【추가】 금년도 고교생 급식 실시(교육부)

【국정】 대학총장 선임문제 대책강구(교육부)

【국정】 학교시설사업 집행 효율화 대책(교육부)

【국정】 대학경쟁력 강화(교육부)

【국정】 실업계 학교 적극 지원(교육부)

□ '98.7.1, 법무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계획】 인권보장과 수사력강화 병행발전(법무부)

【계획】 국가기강 확립(법무부)

【계획】 법조비리 척결(법무부)

【계획】 구조조정방해, 해외재산도피 등 엄정대처(법무부)

□ '98.7.2, 국방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훈시】 국방부 각분야 개혁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훈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노력

【훈시】 햇별정책과 안보정책의 균형유지

【훈시】 방위력개선사업 투명성 확보

【계획】 강력한 군대 육성

【계획】 직급조정 관련 개선방안 마련

- 【계획】 방위태세 점검
- 【추가】 병무행정제도 개선(국방부)
- 【국정】 군사보호구역 정비(국방부)

□ '98.7.2, 문화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공정한 종교정책 추진
- 【훈시】 통합방송법 준비
- 【훈시】 무대예술 지원책 강구
- 【훈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
- 【훈시】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철저
- 【훈시】 청소년지도 철저
- 【훈시】 TV프로그램 개선
- 【계획】 구조조정노력 강화(문광부)
- 【계획】 외규장각 도서 해결(외교부)
- 【계획】 문화산업 육성(문광부)
- 【계획】 일본대중문화 개방(문광부)
- 【계획】 전통문화 중시(문광부)
- 【계획】 오락성 유희문화 개발(문광부)
- 【계획】 영화산업 육성(문광부)
- 【계획】 남북 문화교류 준비(문광부)
- 【국정】 문화관광부의 역할 강조(문광부)
- 【국정】 관광산업 육성(문광부)

□ '98.7.4, 통일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 【훈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
- 【훈시】 햇볕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훈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반형성
- 【계획】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신변안전보장대책 마련(통일부)
- 【계획】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강구(통일부)
- 【계획】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 철저(민주평통)



□ '98.7.4, 외교통상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엔화하락 대처를 위한 외교노력 전개
- 【훈시】 외자유치노력 강화
- 【훈시】 대북정책 강화의 일관성있는 추진
- 【훈시】 Clinton 중국방문 영향분석 및 대외정책 수립
- 【훈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재외동포 정책전개
- 【훈시】 문화외교 강화
- 【계획】 방미 후속조치 철저(외교부)
- 【국정】 청소년 세계교육 실시(외교부)

□ '98.7.6, 과학기술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과학기술분야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 【훈시】 현재 설치추진중인 과학기술위원회 역할제고
- 【훈시】 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강화
- 【계획】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혁(과기부)
- 【계획】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과기부)
- 【계획】 기초과학 육성(과기부)
- 【추가】 연구원에 대한 훈·포장수여 및 포상(과기부)
- 【추가】 원자력 기술 수출(과기부)
- 【국정】 해외과학자유치(과기부)

□ '98.7.6, 환경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정부의 수질관리 노력에 대한 홍보강화
- 【훈시】 민간환경운동에 대한 지원강화
- 【훈시】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계획】 철저한 오염현장 감시체계 구축(환경부)
- 【계획】 환경오염자에 대한 처벌강화(환경부)
- 【계획】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종합처리대책수립(환경부)
- 【계획】 폐자원 수거운동의 지속적 추진(환경부)
- 【계획】 청소년의 환경운동 참여 활성화(환경부)
- 【국정】 한강등 하천별 수질개선대책 추진(환경부)

□ '98.7.7, 제30회 국무회의시

- 【훈시】 금융·기업·공기업·노동 등 4대개혁의 성공적 추진
- 【훈시】 노동문제에 노사정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 【계획】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극복(금감위)
- 【계획】 재계와의 협력강화(금감위, 재정부)
- 【추가】 북한 잠수정 침투 재발 방지(국방부)

□ '98.7.8, 행정자치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통반장 제도개선
- 【훈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훈시】 민생치안 확립
- 【훈시】 경찰부조리 일소
- 【훈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및 불법·폭력시위 엄정대처
- 【훈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철저
- 【훈시】 공직사회 개혁추진
- 【계획】 공직사회의 변화와 체질개혁 추진(행자부)
- 【계획】 정부구조조정 추진(행자부)
- 【추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행자부)
- 【국정】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강력추진(행자부)

□ '98.7.8,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 【훈시】 노숙자대책 추진시 종교 시민단체와 적극 협조
- 【훈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계획】 한시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복지부)
- 【계획】 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방안 마련(복지부)
- 【계획】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적극추진(복지부)
- 【국정】 장애인 복지대책 강화(복지부)
- 【국정】 장애인 의무고용 실천(복지부)

□ '98.7.10, 여성특별위원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추가】 여성취업 및 승진기회 확대(여성특위)

□ '98.7.10, 정보통신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훈시】 정보통신 산업육성 노력

【훈시】 정보화촉진 노력

【훈시】 정보화시대의 정통부의 역할강화

【계획】 규제개혁 50%이상 달성(정통부)

【계획】 재외기업인 활용 강화(정통부)

【추가】 우정사업 민영화(정통부)

【국정】 S/W 불법복제금지

□ '98.7.10, 해양수산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시

【훈시】 생산위주의 수산정책에서 소득위주의 정책으로 전환

【계획】 장보고대사 연구(해양부)

【추가】 21세기 선진항만 건설(해양부)

【추가】 해양경찰기능 재정립(해양부)

【국정】 2010 해양EXPO 유치 철저

【국정】 수협개혁 추진

【국정】 적조피해 예방 철저

□ '98.7.14, 제31회 국무회의시

【훈시】 구조조정 등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

【훈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훈시】 7.21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협조

【훈시】 노동계대책 관련하여 법과 질서준수 원칙 확립

【훈시】 박세리선수 우승 치하

【계획】 우유 및 쇠고기 수급안정 대책 수립(농림부)

【계획】 일반제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한시적 세제지원  
방안 검토(재경부)

□ '98.7.21, 제32회 국무회의시

- 【훈시】 노동계 재과업 대책마련
- 【훈시】 규제개혁 노력강화(금년중 50%이상 철폐)
- 【훈시】 중소기업 활성화와 실업대책의 강화
- 【훈시】 노숙자 지원강화
- 【훈시】 외국인 투자촉진 노력
- 【계획】 KOTRA의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산자부)
- 【추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농림부)

□ '98.7.23,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회의시

- 【추가】 물류개선을 위한 집중투자 실시(농림부)

□ '98.8.4, 제34회 국무회의시

- 【훈시】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 【훈시】 대학의 자율적 재원조달 노력강화
-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능력향상지원강화(행자부)
- 【추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행자부)
- 【추가】 권한이양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폐단 방지(행자부)

□ '98.8.6,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시

- 【훈시】 입체적인 재해예방 대책수립과 전국민적 협력

□ '98.8.11, 제35회 국무회의시

- 【계획】 사업완성위주의 예산편성(예산처)
- 【계획】 농정예산 편성방향의 개선(예산처)
- 【계획】 국방예산의 효율화(국방부)
- 【계획】 각부처의 경비절감노력 강화(전부처)
- 【계획】 수해관련 대통령지시사항(전부처)
- 【추가】 입찰담합의 철저 단속(공정위)

□ '98.8.17, 제37회 국무회의시

- 【훈시】 공공부문 개혁 적극 추진과 홍보철저
- 【추가】 수해복구 만전(전부처)
- 【국정】 기상예측장비 현대화(과기부)

□ '98.8.27, 99예산 중간보고시

- 【훈시】 우선순위에 따른 99년 예산편성
- 【훈시】 실업대책 예산집행 철저 및 홍보강화
- 【훈시】 수해복구 철저
- 【훈시】 교육투자 효율성 강조
- 【계획】 중소기업 지원강화(예산처)
- 【계획】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 인센티브 강화(예산처)
- 【계획】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지원강화(예산처)
- 【계획】 공무원 보수체계 재검토(예산처)
- 【계획】 입찰제 재검토 등 공공사업투자의 효율성 강화(건교부)
- 【계획】 지역현안 사업관리 철저(예산처)
- 【계획】 과감한 규제정비를 통한 예산절감 철저(국무조정실)
- 【계획】 예산집행 평가 철저(예산처)
- 【추가】 농가소득 증대(농림부)
- 【추가】 농산물 유통부문 투자 확대(농림부)
- 【추가】 쌀농사 적극 지원(농림부)
- 【추가】 농산물 수출지원 강화(농림부)
- 【추가】 농어민 보조는 자생력 배양위주로 조정(농림부)

□ '98.9.1, 제40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DJnomics) 널리 보급
- 【훈시】 호우피해 복구 철저
- 【훈시】 노사질서 확립
- 【훈시】 국무위원 해외출장 자제
- 【계획】 지방행정감사 중복개선(행자부)

【계획】 국제금융동향 점검 및 구조조정노력 강화(재경부)

【추가】 기아자동차문제 조속 해결(산자부)

□ '98.9.15, 제42회 국무회의시

【훈시】 한강수질개선대책의 합리적 처리

【훈시】 외환보유고 증가 노력 강화

【훈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적 추진

【훈시】 국민들의 수재의연금 모금동참에 감사

【훈시】 대외홍보 강화

【계획】 실업자대책 내실화(행자부, 복지부)

【계획】 실효성있는 건군50주년 기념행사 거행(국방부)

【계획】 대형사고 예방노력 강화(행자부)

【계획】 가스충전소 외곽 이전(산자부)

【계획】 Y2K 대책 철저 점검(행자부, 정통부)

【추가】 각종 개혁정책의 신속 추진(재경부)

□ '98.9.24, 제44회 국무회의시

【훈시】 예산편성 노고치하 및 대국민 홍보강화

【훈시】 경제살리기 노력 강화

【훈시】 정부의 개혁 솔선수범

【계획】 중기재정계획수립 철저(예산처)

□ '98.9.29, 제45회 국무회의시

【훈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지원

【훈시】 금융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추석연휴 대책강화

【훈시】 일본방문기간중 국정수행 철저

【계획】 기금정비 방안의 수립(예산처)

【계획】 정부경영진단의 효율적 추진(예산처)

□ '98.10.12, 제47회 국무회의시

- 【계획】 방일 후속조치 철저(전부처)
- 【계획】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강구(국조실, 행자부)
- 【계획】 경제회복대책의 실효성확보노력 강화(금감위, 재경부)-관리종결
- 【추가】 금년내 규제 50%이상 철폐(국조실)
- 【추가】 실효성있는 실업대책방안 보고(행자부, 복지부, 노동부)
- 【국정】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강구(법무부)

□ '98.10.20, 제48회 국무회의시

- 【훈시】 정기국회 대비에 만전
- 【계획】 철저한 동절기 실업대책 수립 추진(서울시)
- 【계획】 수출증대를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산자부)
- 【추가】 철저한 동절기 실업대책 수립·추진(노동부)

□ '98.10.21, 과학기술자문회의시

- 【훈시】 과학기술의 발전역량 강화

□ '98.10.27, 제49회 국무회의시

- 【훈시】 정부 경영진단의 철저한 실시
- 【훈시】 적극적인 홍보노력 전개
- 【훈시】 연말업무의 철저한 마무리
- 【계획】 담합과 부당내부거래 근절(법무부)
- 【추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운영의 혁신(기획예산위)
- 【추가】 담합과 부당내부거래의 근절(법무부, 공정위)
- 【추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여성특별위)
- 【추가】 중소기업의 회생을 적극 지원(재경부, 산자부)
- 【추가】 경제활성화 노력의 가속화(재경부, 산자부)

□ '98.10.28, 경제부처장관 및 시도지사 오찬시

- 【계획】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예산처)

□ '98.11.3, 제50회 국무회의시

- 【훈시】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경영진단의 추진
- 【계획】 남북경협의 차질없는 추진(통일부)
- 【추가】 철저한 가스안전대책 수립(산자부)

□ '98.11.3, 전국검사장 접견시

- 【훈시】 국세청 동원 선거자금 모금사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진상규명  
철저
- 【훈시】 신 노사문화 정착 노력
- 【추가】 검찰의 정보수집기능 강화(법무부)
- 【추가】 사정기관의 자체정화 철저(법무부)
- 【추가】 불법감청과 고문근절 등 인권보장 철저(법무부)
- 【추가】 지역감정 조장행위 엄벌(법무부)
- 【국정】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정부패척결 활동 전개(법무부)

□ '98.11.10, 제52회 국무회의시

- 【훈시】 중국방문 및 APEC 참가 성과인식
- 【훈시】 해외체류중의 국정수행에 만전
- 【추가】 벤처기업 육성대책 마련(산자부)
- 【추가】 외국인 투자노력의 가속화(산자부)
- 【추가】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국조실)
- 【추가】 실업자 및 노숙자 대책(노동부, 서울시)

□ '98.11.23, 제55회 국무회의시

- 【훈시】 한·중 동반자 관계 강화
- 【훈시】 APEC 정상회의 성과 인식
- 【훈시】 미대통령 방한시 대북정책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인
- 【계획】 컴퓨터 2000년문제 관련(전부처)



□ '98.12.1, 제56회 국무회의시

【훈시】 조계종 분규 신중대처

【계획】 교원정년단축의 원활한 추진(교육부)

【계획】 신 구정 이중과세문제의 적극적 해결(행자부)

【계획】 규제개혁입법의 차질없는 추진(법제처)

【추가】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복지부)

【추가】 규제개혁 및 실업대책 홍보 적극 추진(국조실, 노동부)

【국정】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추진(노동부)

□ '98.12.4,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훈시】 예산안의 원만한 국회심의 노력

【훈시】 내실있는 재벌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 지식산업기반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문광부)

【계획】 지식산업기반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정통부)

【계획】 신지식인상 정립(정통부)

【계획】 디지털TV 및 CDMA기술 유망수출품목으로 적극 개발 추진(정통부)

【추가】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산자부)

【국정】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개발 추진(문광부)

□ '98.12.8, 제57회 국무회의시

【계획】 군의 철저한 사고예방대책 추진(국방부)

【추가】 불법감청 근절(법무부)

□ '98.12.21, 제59회 국무회의시

【계획】 효과적인 공무원 포상실시(행자부)

## 1999년

### □ '99.1.12, 제1회 국무회의의시

- 【훈시】 5대 국정지표의 실현과 제2의 건국운동 추진
- 【계획】 수정변질된 규제개혁 법안의 재입법 추진(국무조정실)
- 【계획】 공정한 인사행정(전부처)
- 【추가】 실업대책에 만전(산자부, 건교부)
- 【추가】 법조비리 척결(법무부)

### □ '99.1.19, 제2회 국무회의의시

- 【훈시】 구조조정의 내실화
- 【훈시】 경제청문회에 성실한 대응
- 【계획】 변호사법의 신속한 보완(법무부)
- 【국정】 교권확립과 학교분위기 쇄신(교육부)

### □ '99.1.20,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의시

- 【훈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해소
- 【계획】 APEC 투자박람회 준비철저(산자부)
- 【추가】 수출여건의 안정적 운영(산자부)

### □ '99.1.26, 제3회 국무회의의시

- 【훈시】 집단따돌림 방지 및 교권확립
- 【훈시】 지역감정의 근절

### □ '99.1.27, 노인의 해 사업계획 보고대회시

- 【훈시】 노인복지대책 발전방향
- 【계획】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복지부)
- 【계획】 노인복지담당부서 격상방안 검토(복지부)

□ '99.1.28,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초청 오찬시

【훈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

【계획】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여건정비(산자부)

□ '99.1.30, 경제부처 실국장 초청 오찬시

【훈시】 개혁의 철저한 완수

【훈시】 실업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

【훈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

【훈시】 지식기반사회 구축

【훈시】 개혁에 대한 공무원의 주체 의식

【계획】 경기활성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금감위)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 '99.2.2, 제4회 국무회의시

【훈시】 경제개혁의 철저한 추진

【훈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홍보

【계획】 설 연휴 대책(재경부, 복지부, 문광부)

【추가】 법조계 정화 및 개혁의 철저(법무부)

□ '99.2.9, 제5회 국무회의시

【훈시】 설문화의 재창조

【계획】 한자병용 추진(문광부)

【계획】 의미있는 국경일 행사 기획(행자부)

【계획】 ASEM 정상회의 준비(외교부)

【계획】 복사본 교재사용 근절(문광부)

【계획】 국민연금실시에 대한 홍보 강화(복지부)

【국정】 각종 국제행사의 철저한 준비(문광부)

【국정】 전자상거래확산에 대비(산자부, 정통부)

【국정】 한·일 어업협정 후속대책 추진(해양부)

□ '99.2.22, 제6회 국무회의시

【훈시】 임시국회 대비철저

【훈시】 정책수립 및 집행방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홍보노력 전개

【계획】 농협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 강구(농림부)

【계획】 국민연금의 철저한 보완과 차질없는시행(복지부)

□ '99.3.2, 제7회 국무회의시

【계획】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대국민 설득강화(외교부, 해양부)

【계획】 SOC사업 조기집행(건설부)

【계획】 노사정위 법적근거 마련(노동부)

【계획】 우리사주신탁제도 적극 추진(재정부)

【추가】 중소기업 활성화(산자부)

【추가】 벤처기업 육성(산자부)

【추가】 문화관광·서비스분야 고용창출(문광부)

【추가】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복지부)

【국정】 각종개혁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인권법제정)(법무부)

【국정】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산자부)

□ '99.3.9, 제8회 국무회의시

【계획】 정부조직개편의 원활한 추진(예산처)

【계획】 한·중 어업협정의 차질없는 추진(외교부, 해양부)

□ '99.3.18, 제9회 국무회의시

【계획】 국정혼선의 방지(국조실)

【추가】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전부처)

【추가】 정부조직개편의 신속한 마무리(예산처)

【추가】 홍보노력의 강화(전부처)

□ '99.3.22, 외교통상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구현 외교 촉진

【국정】 포용정책지지확보 외교 강화(외교부)

【국정】 수출증대 및 투자촉진 외교강화(외교부)

□ '99.3.22, 문화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문화산업의 중요성 강조

【계획】 국가 이미지 개선강화(문광부)

【계획】 금강산관광사업 상품개발(문광부)

【계획】 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강화(문광부)

【추가】 문화관광 분야의 고용증대 확대(문광부)

【추가】 중국관광 유치노력 강화(문광부)

□ '99.3.23, 제10회 국무회의시

【계획】 외환자유화의 차질없는 추진(재경부)

【계획】 국민권리제도 확충(예산처)

【계획】 사법개혁안 마련(사법개혁위원회구성)(법무부)

【계획】 경찰개혁안마련(행자부)

【계획】 군비획득사업의 투명성확보(개혁단구성운영)(국방부)

【계획】 아파트 관련비리 척결(법무부, 건교부)

【추가】 대학교재 정품 사용(문광부)

□ '99.3.24, 국방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강한 군대 육성

【계획】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철저대비(국방부)

【추가】 병무행정관련 비리척결(국방부)

□ '99.3.24, 통일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

【훈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 필요

【훈시】 통일부를 중심으로한 대북정책 추진

【계획】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통일부)

- 【계획】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통일부)
- 【계획】 북한에 대한 철저한 연구(통일부)
- 【추가】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경주(통일부)
- 【국정】 통일교육 강화(통일부)

□ '99.3.25,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부정부패 일소
- 【훈시】 산업평화 정착
- 【훈시】 검찰의 중립 견지
- 【계획】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적극검토(행자부)
- 【추가】 인권보장 및 인권위원회 설치(법무부)
- 【추가】 사법개혁 철저(법무부)
- 【추가】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와 학교폭력 근절(법무부)
- 【추가】 교정행정의 획기적 개선(법무부)

□ '99.3.25, 행정자치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계획】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행자부)
- 【계획】 공직자의 과거 소액금품수수에 대한 관용조치(행자부)-관리종결
- 【추가】 정부개혁 후속조치의 철저한 시행(행자부)
- 【추가】 공공근로사업(행자부)
- 【추가】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대책 마련(법무부, 건교부)
- 【국정】 공무원연금 안정화대책 추진(행자부)

□ '99.3.27, 재정경제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물가안정
- 【훈시】 인본적인 경제정책

□ '99.3.27, 기획예산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국민감정을 고려한 공기업 민영화
- 【훈시】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권한과 책임강화

【훈시】 21세기형 정부와 공공부문 실현

【계획】 2000년 예산편성 방향(예산처)

【계획】 차질없는 공공부문 개혁추진-①(예산처)

【추가】 차질없는 공공부문 개혁추진-②(예산처)

【추가】 효과적인 실업대책 추진방향(문광부, 산자부, 재정부)

□ '99.3.29,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부정부패 방지 강화

【추가】 카르텔 규제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①(공정위)

【국정】 카르텔 규제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②(공정위)

□ '99.3.29,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튼튼한 금융기관 육성

【훈시】 5대재벌 구조조정 계획의 철저한 이행

【훈시】 기업구조개선작업 지속추진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훈시】 대기업 부채비율의 실질적 축소

【국정】 소프트웨어 측면의 금융개혁 추진(금감위)

□ '99.3.30, 제11회 국무회의시

【계획】 추경예산의 원만한 국회심의회와 차질없는 집행(예산처)

【추가】 ASEM 정상회의 준비 철저(외교부)

【추가】 국민연금의 차질없는 시행(복지부)

□ '99.3.3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훈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중요

【훈시】 지식산업 중점 육성

□ '99.3.31, 산업자원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수출업계의 노력 필요

- 【훈시】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달성
- 【훈시】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 【훈시】 APEC 투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계획】 중소기업 유희설비의 북한 및 해외이전 추진(산자부)-관리종결
- 【계획】 밀라노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산자부)
- 【추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실업난 극복(산자부)
- 【국정】 여성경제인 지원강화(산자부)
- 【국정】 대학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지원(산자부)

#### □ '99.4.1, 과학기술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과학기술입국 건설
- 【훈시】 과학기술자 우대 및 사기 진작
- 【계획】 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과기부)
- 【추가】 과학기술인력의 실업대책(과기부)

#### □ '99.4.1, 정보통신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
- 【계획】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정통부)
- 【계획】 우체국의 역할 강화(정통부)
- 【추가】 정보화 마인드 확산(정통부)
- 【추가】 CDMA 수출확대(정통부)

#### □ '99.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훈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관계 정립
- 【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강화(과기부)
- 【계획】 정부연구개발 예산 확대(예산부)
- 【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과기부)
- 【계획】 과학기술인력의 병역혜택 확대 검토(교육부, 과기부)
- 【계획】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과기부)
- 【국정】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과기부)



□ '99.4.3, 해양수산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화

【계획】 해양수산정책의 선진화

□ '99.4.3, 농림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국정】 WTO 협상준비 철저(농림부)

【국정】 신지식 농업인 육성(농림부)

□ '99.4.6, 제12회 국무회의시

【계획】 부정선거 척결(법무부)

【계획】 경제림 조성과 첨단임업의 발전(농림부)

【계획】 경제력 집중현상의 시정과 중산층 육성(재경부, 산자부)

□ '99.4.7, 건설교통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계획】 영월댐 건설계획의 합리적 검토(건교부)

【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차질없는 추진(건교부)

【추가】 철도경영개선 추진(건교부)

【국정】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외자유치 추진(건교부)

【국정】 버스운송사업 지원대책 마련(건교부)

【국정】 항공사고 방지대책 추진(건교부)

□ '99.4.7, 환경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계획】 수돗물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환경부)

【계획】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환경부)

【계획】 대형개발사업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환경부)

【계획】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력(환경부)

【추가】 환경교육 강화(환경부)

【국정】 환경사업의 육성지원(환경부)

□ '99.4.8, 보건복지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노인복지대책의 차질없는 수행

【추가】 의료계 비리척결(복지부)

【추가】 국민연금제도 정착 및 기금의 투명한 운영(복지부)

【국정】 저소득노인에 지원대책 강화(복지부)

□ '99.4.8, 노동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실업자 근로의지 제고

【훈시】 영세사업장 실직자 보호강화

【훈시】 21세기 지식기반 산업과 신지식인 육성

【훈시】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훈시】 실업대책의 실효성 제고

【훈시】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강화

【훈시】 정리해고제에 대한 이해 당부

【계획】 여성의 창업지원확대 및 여성 부당해고 방지대책 마련(노동부)

【추가】 노사정위원회의 항구적 기구화(노동부)

【국정】 장애인 의무고용 실천(노동부)

□ '99.4.12, 교육부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세계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 육성

【훈시】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훈시】 교원단체 복수화 대책

【훈시】 교원존중과 사기양양

【계획】 집단 따돌림등 학교폭력 대책 철저(교육부)

【계획】 학교용지확보특별법 추진에 대한 지원(국조실)

【국정】 기초학문육성(교육부)

【국정】 대학입학전형의 지속적 발전(교육부)

□ '99.4.12, 여성특별위원회 국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대비

【훈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계획】 생활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여성특위)

【추가】 가정폭력의 근절(여성특위)

□ '99.4.13, 제13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정개혁보고회의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정】 WTO 뉴라운드 협상에 철저히 대비(외교부)

□ '99.4.15, 인천광역시 행정개혁보고회의시

【훈시】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

【훈시】 학교교육의 내실화

【훈시】 학교폭력 근절 및 민생치안 만전

【계획】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철저한 준비(인천시)

【추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미디어밸리 건설 철저한 준비(건교부)

□ '99.4.20, 제14회 국무회의시

【계획】 서울지하철 파업에 확고히 대응(서울시)

□ '99.4.22, 경상남도 행정개혁보고회의시

【훈시】 외자유치노력 경주

【훈시】 세계경쟁에서의 일등 추구

【훈시】 실업문제 해결

【훈시】 신지식형 산업육성

【훈시】 신지식인 공무원 양성

【추가】 학교폭력 대책 철저(교육부)

【추가】 관광자원 활용(경남, 전남)

□ '99.4.23, 부산시 행정개혁보고회의시

【훈시】 실업해소 및 공장가동을 제고

【훈시】 공무원의 술선수범

【훈시】 지역편협주의를 탈피한 시민운동 전개

【훈시】 선물거래소의 성공적 운영

□ '99.4.24, 경기도 행정개혁보고회의시

【훈시】 실업자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

【훈시】 지방경찰제 시행준비 철저

【훈시】 공무원의 부패방지

【훈시】 남북화해협력 방안 모색

【계획】 경기도지청 설치검토(행자부)

【계획】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전국 시·도)

【계획】 문화관광산업육성(전국 시·도)

□ '99.4.27, 제15회 국무회의시

【훈시】 기업과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

【훈시】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조

□ '99.4.30, 충청북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실업 및 장애인 지원 철저

【훈시】 개혁정책의 적극적 추진시민운동 전개

【훈시】 왕따 퇴치

【훈시】 경찰의 기강확립

【계획】 영농발전 지원(충북)

【계획】 오송의료과학단지 조성(충북)

□ '99.5.3, 강원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훈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

【훈시】 제2의 건국운동 협조

【훈시】 공직기강 확립 당부

【계획】 농축어업 대책 강구(강원)

□ '99.5.4, 제16회 국무회의시

- 【훈시】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
- 【계획】 컴퓨터 바이러스 및 Y2K대책(정통부)
- 【계획】 국민화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행자부)
- 【추가】 교원개혁과 교원사기 양양(교육부)
- 【추가】 Y2K 대책 철저(행자부, 정통부)
- 【추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문제에 적극 대응(복지부)
- 【추가】 하절기에 대비한 철저한 수해대책 수립(행자부)

□ '99.5.10, 전라북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중산층의 안정 육성
- 【훈시】 소외계층 지원
- 【훈시】 지덕체 삼위일체 교육 실시
- 【훈시】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
- 【추가】 관광진흥정책 적극개발(전북)

□ '99.5.13, 대구광역시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21세기 신지식인 양성
- 【훈시】 밀라노 프로젝트 적극 추진
- 【훈시】 문화관광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적극 육성
- 【훈시】 국민화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99.5.14, 경상북도 행정개혁보고회의시

- 【훈시】 다양한 관광진흥시책 개발
- 【훈시】 신뢰받는 경찰상 재정립
- 【훈시】 제2의 건국운동의 적극 전개

□ '99.5.25, 제19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의 과제

□ '99.6.2, 제20회 국무회의시

【계획】 공직기강 확립 대책(행자부)

【계획】 중·저소득층 지원 대책(재경부)

□ '99.6.14, 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회의시

【훈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

【훈시】 벤처기업 육성

【계획】 생산적 복지이념의 정립(정책기획위)

□ '99.6.14, 제22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정개혁의 가속화

□ '99.6.12, 제주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관광진흥시책 적극 추진

【훈시】 1차산업 육성

【훈시】 공직기강 확립

【훈시】 치안 확립

□ '99.6.17, 대전광역시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주요기관의 대전이전을 위한 기반조성

【훈시】 산·학·연 연계 촉진

【훈시】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

□ '99.6.18, 충청남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대책 철저 추진

【훈시】 공직사회 인사의 공정성 확립

【훈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치안대책 확립

【계획】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출증대 대책추진(충남)

【계획】 대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교육부)

□ '99.6.21, 울산광역시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 【훈시】 문화관광도시로 개발
- 【훈시】 대기업 본사 울산이전
- 【훈시】 산·학·연 협력강화
- 【훈시】 왕따현상 대책 및 외국어 교육 강화
- 【훈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강화
- 【훈시】 지식정보화산업 육성
- 【훈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 【훈시】 21세기형 경찰청 운영
- 【훈시】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당부

□ '99.6.22, 제23회 국무회의시

- 【훈시】 대북관계에 확고한 대처
- 【훈시】 수해대책에 만전
- 【훈시】 중산층과 서민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 【추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의 철저한 실천(행자부)

□ '99.6.29, 제24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책임있는 국정운영
- 【훈시】 지속적인 개혁과 부패척결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 【훈시】 순방기간중 차질없는 국정수행
- 【계획】 수도권 집중해소대책의 수립(재경부)
- 【추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수립(재경부)

□ '99.7.12, 6.25 50주년 기념사업계획 보고시

- 【훈시】 6.25전쟁의 의의 정립
- 【훈시】 6.25전쟁에 대한 홍보 강화
- 【훈시】 참전국 관련 홍보 강화
- 【훈시】 기념탑, 전적지를 견학과 관광의 대상으로 개발
- 【계획】 내년 UN총회 참석 및 행사준비(외통부)
- 【계획】 전쟁관련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제고(보훈처)

□ '99.7.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계획】 민간분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지원(산자부)

【계획】 연구개발의 실용화와 산학합동연구 촉진(과기부)

【추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산자부)

【추가】 과학기술자의 사기양양대책 수립(과기부)

□ '99.7.13, 제26회 국무회의시

【계획】 대형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활용(문광부)

□ '99.7.20, 제27회 국무회의시

【훈시】 부패구조의 척결

【훈시】 재벌개혁의 확고한 추진

【계획】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의 시정(재경부)

□ '99.7.14, 서울특별시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공직자 사기진작대책 강구

【훈시】 서울을 문화도시로 발전 육성

【훈시】 중소 벤처기업 및 관광산업 적극 육성

【훈시】 활발한 신지식인 운동 전개

【훈시】 세계와의 교류 강화

【훈시】 신노사문화 정착노력 강화

□ '99.7.22, 전라남도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대비

【훈시】 국민화합 노력 당부

【훈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

【훈시】 농산물 수출노력 강화

【훈시】 도지사의 대민 접촉 강화

【훈시】 과소학교 통폐합 및 집단따돌림 문제 해결

【훈시】 경찰의 신뢰회복



【계획】 지역개발의 성공적 추진 노력(전남)

【추가】 문화관광의 세계적 상품화 노력(전남)

□ '99.7.23, 광주광역시 행정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지식산업형의 첨단산업 육성

【훈시】 공직분위기 쇄신 및 자율연구모임의 확산

【훈시】 국민화합시책의 계속 추진

【훈시】 실직자 생활안정 및 경제도약 기반 구축

【훈시】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훈시】 지덕체 교육의 강화

【훈시】 교원의 사기진작 및 결식아동 해소

□ '99.8.3, 제29회 국무회의시

【계획】 빈틈없는 수해대책의 추진(재경부등 10개부처, 전국 시·도)

□ '99.8.12, 제30회 국무회의시

【계획】 규제개혁 성과의 점검(국조실)

【계획】 한자병기의 실시(행자부)

【추가】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예산처등 11개부처, 전국 시·도)

□ '99.8.16, 제1회 을지국무회의시

【훈시】 을지사태와 동원령 및 계엄령 선포관련 후속조치 철저

【훈시】 전시대비 계획의 지속적 보완 발전

【훈시】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

【계획】 발생가능한 모든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책강구(비기위)

【계획】 재난발생시 대피요령의 철저한 교육(교육부)

□ '99.8.19, 을지연습종합보고시

【계획】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행자부)

【계획】 유사시 대피훈련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철저(행자부)

□ '99.8.24, 제32회 국무회의시

- 【계획】 수해로 인한 보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복지부)
- 【계획】 장애인 관련법 단일안 마련(국조실)
- 【계획】 전세값 상승에 대한 대책 강구(건교부, 서울시)

□ '99.8.31, 제33회 국무회의시

- 【훈시】 공직자와 가족들의 바른 몸가짐
- 【계획】 물가안정대책 수립(재경부)
- 【계획】 공공부문개혁의 가속화(예산처)
- 【국정】 재외동포법 관련 보완대책의 수립·추진(법무부)

□ '99.9.7, 제34회 국무회의시

- 【훈시】 북방한계선 문제에 확고한 대응
- 【훈시】 정기국회에 철저히 대비
- 【계획】 추석대책에 만전(노동부)
- 【계획】 8.15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전부처)
- 【추가】 추석대책에 만전(재경부, 행자부, 복지부)

□ '99.9.21, 제37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에 적극 대처
- 【계획】 불법도청의 근절(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 【계획】 주세인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재경부)
- 【계획】 고속전철차량 도입관련 낭비사례 시정(건교부)
- 【계획】 아파트 안전대책 수립(건교부)
- 【계획】 부산 파이낸스사 문제에 대한 대책(재경부)

□ '99.10.4, 제39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정감사에 성실히 대응
- 【훈시】 언론의 오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계획】 경북관광공사 설립 추진(문광부)

【계획】 국가채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홍보(재정부, 예산처)

【계획】 지진 대비책 수립(행자부)

【추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통합 추진(복지부)

【추가】 공기업 개혁 추진상황의 점검(예산처)

【추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홍보(전부처)

□ '99.10.12, 제40회 국무회의시

【훈시】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계획】 노근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국방부)

【추가】 수출증진 노력 강화(산자부)

□ '99.10.22, 제41회 국무회의시

【훈시】 환경문제에 적극적 관심

【훈시】 공명선거의 정착

【계획】 한자병기의 철저한 실시(건교부)

【계획】 정보화 역기능에 철저히 대처(정통부)

【추가】 한자병기의 철저한 실시(행자부, 문광부)

【추가】 장애인 고용실태 점검(노동부)

【추가】 교육개혁의 추진(교육부)

□ '99.11.2, 제43회 국무회의시

【계획】 안전의식 강화의 전기마련(국조실)

□ '99.1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계획】 과학기술발전여건 조성 촉진(국조실)

【계획】 과학기술발전여건 조성 촉진(예산처)

【계획】 과학영재양성 철저(교육부)

【추가】 과학기술발전여건 조성 촉진(과기부, 산자부)

【국정】 과학기술발전여건 조성 촉진(교육부)

□ '99.11.8,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계획】항공편 확충(건교부)

【추가】관광상품개발 홍보(전국 시·도)

【추가】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여건의 개선(문광부, 건교부)

□ '99.12.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계획】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과기부)

【추가】산학연 협동연구 강화(과기부)

□ '99.12.7, 제50회 국무회의시

【계획】청소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청소년보호위)

【계획】노동계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노동부)

【계획】대국민 과제홍보(전부처)

【추가】내년도 과제의 대국민 홍보(전부처)

□ '99.12.14, 제51회 국무회의시

【추가】공무원 연금관련 대책 수립(행자부)

【추가】철도서비스 개선(건교부)

□ '99.12.21, 제52회 국무회의시

【훈시】새천년을 앞둔 철저한 마무리

【계획】규제개혁 입법 추진(국조실)

【추가】2000년도 예산의 적극 홍보(전부처)

□ '99.12.28, 제53회 국무회의시

【계획】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예산처등 6개부처)

【추가】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재경부 등 10개부처)

【추가】Y2K 문제 발생에 대비(전부처)

## 2000년

### □ 2000.1.4, 제1회 국무회의시

- 【훈시】 2000년을 맞는 새로운 결의
- 【훈시】 교육의 중요성 인식
- 【훈시】 공명선거의 원년 실현
- 【추가】 소득분배 개선대책 강구(예산처 등 5개부처)
- 【추가】 4대개혁의 지속적 추진(예산처, 노동부)
- 【국정】 공무원 처우개선(중앙인사위)

### □ 2000.1.18, 제3회 국무회의시

- 【훈시】 지식정보혁명에 능동적 대응
- 【훈시】 공명선거의 실천
- 【추가】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예산처)

### □ 2000.1.24, 전국 문화원장 오찬 간담회시

- 【훈시】 회원제확대를 통한 문화원 활성화
- 【훈시】 문화시민운동 전개
- 【훈시】 바람직한 생활문화의 개발 보급
- 【계획】 지방문화원의 지역청소년 정보화교육 지원(문광부)

### □ 2000.1.25, 제4회 국무회의시

- 【계획】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행자부)
- 【계획】 전자민주주의시대 선도(인터넷)(행자부)
- 【계획】 설 연휴 소외계층 위문(복지부)
- 【계획】 국정홍보활동 평가(홍보처)
- 【추가】 전자민주주의의 시대 선도(정통부)
- 【추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정통부, 산자부)
- 【추가】 국정홍보 강화(전부처)

□ 2000.2.1, 제5회 국무회의시

- 【계획】 각 부처 개혁방안 보고(전부처)
- 【계획】 인적자원 개발의 일관성있는 추진(교육부)
- 【계획】 복지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복지부)
- 【계획】 도서관의 정보화 추진(문광부)
- 【계획】 신용불량자 사면조치의 이행(금감위)

□ 2000.2.8, 제6회 국무회의시

- 【계획】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산자부)
- 【계획】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수립(재경부)

□ 2000.2.16,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훈시】 미래대비 연구개발투자 확대
- 【계획】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공공기관)(재경부)
- 【계획】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군 관련)(국방부)
- 【계획】 고급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교육부)
- 【계획】 지역간 과학기술격차 해소(과기부)
- 【계획】 연구여건 조성과 내실있는 질적 개혁 추진-①(과기부)
- 【추가】 연구여건 조성과 내실있는 질적 개혁 추진-②(과기부)
- 【추가】 산학연정 협력의 강화(과기부)
- 【추가】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불균형 해소(과기부)

□ 2000.2.16,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시

- 【훈시】 새로운 시대에 대비(지속적인 구조조정)
- 【훈시】 이익이 되는 수출증진
- 【훈시】 에너지 절약
- 【훈시】 실업자 문제와 일자리 창출

□ 2000.2.17, 환경부 업무보고시

- 【훈시】 환경오염사고 예방 철저

- 【훈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병행
- 【훈시】 시장원리의 환경규제제도 활용
- 【훈시】 낙동강 대책 관계자 노고치하 및 후속조치 당부
- 【계획】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환경부)
- 【계획】 동아시아 국가간 국제환경협력 강화(환경부)
- 【계획】 국민의 환경보전인식 제고(환경부)
- 【국정】 물수요관리대책(환경부)
- 【국정】 환경산업육성(환경부)

□ 2000.2.18, 국방부 업무보고시

- 【훈시】 연평해전 관련 대비
- 【훈시】 군 인력 양성 강화
- 【훈시】 방공태세 대비 철저
- 【훈시】 수해예방조치 철저
- 【계획】 군 정보화 철저(국방부)
- 【계획】 방위력 개선사업 효율화(국방부)
- 【계획】 군 간부 관사개선(국방부)
- 【국정】 군 정보화 철저(국방부)

□ 2000.2.21, 여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여성의 경쟁력 강화
- 【훈시】 남녀평등의 새로운 가정문화 형성
- 【훈시】 여성정책의 전환 필요
- 【계획】 전업주부의 GDP 산정방안 강구(여성특위)
- 【계획】 여성부 신설준비(여성특위)

□ 2000.2.22, 제8회 국무회의시

- 【계획】 경제안정대책 강구(재경부)
- 【계획】 지방대 육성대책 강구(교육부)
- 【계획】 대형사고의 사전예방(행자부)

【국정】 의약분업의 원활한 추진(복지부)

【국정】 월드컵 경기장 건설지원(문광부)

□ 2000.2.29, 제9회 국무회의시

【훈시】 공정한 인사의 실천

【계획】 제조업과 지식정보산업의 병행 발전(산자부)

【계획】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외교부)

【계획】 젊은이들의 해외취업 방안 검토(산자부)

【계획】 해빙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행자부)

【추가】 유럽순방의 의의와 ASEM의 철저한 준비(과기부)

【추가】 해외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외교부)

【국정】 마약문제 해결(법무부)

□ 2000.3.14, 제11회 국무회의시

【계획】 서구 4개국 국민방문 후속조치 추진(외교부)

□ 2000.3.20,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훈시】 지속적인 물가안정

【훈시】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홍보

【훈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훈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계획】 경제안정대책 강구(재경부)

【추가】 소득분배정책 강화와 실업자 양극화현상 해소(재경부)

【추가】 증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재경부)

□ 2000.3.21, 제12회 국무회의시

【훈시】 세계화 시대에 대응

【계획】 공정한 선거관리(전부처)

【추가】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행자부, 건교부)

【추가】 수해예방대책 추진(재경부 등 10개부처)



□ 2000.3.22,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훈시】 공직사회에 대한 사기진작
- 【훈시】 지방자치 개선
- 【훈시】 공무원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적극추진
- 【훈시】 소방업무에 관한 당부
- 【훈시】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한 당부
- 【계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행자부)
- 【계획】 퇴직공무원 대책 마련(행자부)
- 【계획】 ASEM행사 대비 철저(행자부)
- 【추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행자부)
- 【추가】 우기대비 철저(행자부)
- 【국정】 공무원연금 안정화(행자부)

□ 2000.3.23,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외국인 투자유치노력 및 홍보강화
- 【훈시】 4대개혁은 민간주도로 추진
- 【훈시】 디지털 경제에 적극 대처
- 【훈시】 중소기업 지원
- 【훈시】 금융의 자율적 시장경제체제 추진
- 【추가】 관치금융논란에 대한 홍보강화(금감위)
- 【국정】 서울은행문제의 조속한 매듭(금감위)

□ 2000.3.24, 노동부 업무보고시

- 【훈시】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 【훈시】 생산적 복지 실천
- 【훈시】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 【계획】 여성종합대책의 실천(노동부)
- 【계획】 노사 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노동부)
- 【추가】 실업대책 추진(노동부)
- 【국정】 영세노동자 대책강구(노동부)

□ 2000.3.25,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서

- 【훈시】 인사질서 확립의 파수꾼 역할 수행
- 【훈시】 적극적인 공무원의 봉사정신
- 【훈시】 공무원의 공로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
- 【계획】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인사위)
- 【국정】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인사위)

□ 2000.3.27,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서

- 【훈시】 지식정보화시대의 주체적 역할
- 【훈시】 정보화혜택의 균등한 배분
- 【계획】 정보통신산업 발전(정통부)
- 【계획】 주부 인터넷교육 홍보 강화 및 후속대책 강구(정통부)
- 【계획】 문화·관광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육성(문광부)
- 【추가】 전국민 정보화 확산(정통부)
- 【추가】 CDMA 수출산업 육성(정통부)
- 【추가】 통신관련 국민 피해 방지(정통부)
- 【국정】 초고속 통신망의 차질없는 추진(정통부)

□ 2000.3.28,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 【훈시】 부품·소재 산업육성 시책 강화
- 【훈시】 세계중소기업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 【훈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 추구
- 【추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활성화 대책 강구(산자부)
- 【추가】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방안 강구(산자부)

□ 2000.3.29,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

- 【훈시】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공존
- 【훈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외교
- 【훈시】 서울 ASEM 정상회의
- 【훈시】 재외국민의 보호강화
- 【훈시】 외교통상부 제도개혁

□ 2000.3.30, 농림부 업무보고시

【훈시】 WTO 차기 농산물 협상 대비 철저

【훈시】 금년도 풍년농사 달성

【계획】 농민을 중산층으로 육성(농림부)

【계획】 한우 사육기반 유지(농림부)

【국정】 농산물 수출촉진(농림부)

□ 2000.4.4, 제14회 국무회의시

【훈시】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단호히 대처

【계획】 구제역 확산에 철저히 대처(농림부)

□ 2000.4.18, 제16회 국무회의시

【훈시】 총선후 국정운영 방향

□ 2000.4.18,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시

【훈시】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계획】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공정위)

【국정】 기업구조개혁의 완성(공정위)

□ 2000.4.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시

【훈시】 벤처기업의 활성화

【훈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계획】 유전체 기술개발 적극 추진(과기부)

【계획】 우주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기부)

【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①(과기부)

【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②(과기부, 정통부)

□ 2000.4.20, 법무부 업무보고시

【훈시】 법무부와 검찰의 국민신뢰 회복

【훈시】 준법풍토의 확립

- 【훈시】 교정행정의 선진화
- 【훈시】 검찰의 독립과 중립
- 【국정】 철저한 반부패 활동 및 공무원사기 양양
- 【국정】 인권법 제정 노력 강화

□ 2000.4.24,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훈시】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
- 【계획】 노인복지대책 강화(복지부)
- 【계획】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복지부)
-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복지부)
- 【추가】 의약분업 시행대책 보완(복지부)
- 【추가】 의료보험 통합 관련 조직간 갈등해소(복지부)
- 【추가】 암관리대책 수립(복지부)
- 【추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복지부)
- 【국정】 장애인 취업대책 강화(복지부)

□ 2000.4.26,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훈시】 공공부문개혁의 지속적 추진
- 【훈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 【계획】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행자부, 예산처)
- 【계획】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재경부, 예산처)
- 【계획】 산불 등 재해복구-①(농림부, 예산처)
- 【추가】 산불 등 재해복구-②(농림부, 예산처)

□ 2000.4.28, 교육부 업무보고시

- 【훈시】 교육재정의 확충
- 【훈시】 교육정보화의 촉진
- 【훈시】 교직원 사회의 활성화 및 안정화
- 【계획】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등 기초교육 강화(교육부)
- 【계획】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향상-①(교육부)

- 【계획】 평생교육과 산학협동(교육부)
- 【추가】 과외금지위헌결정관련 철저한 후속대책 마련(교육부)
- 【추가】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향상-②(교육부)
- 【국정】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의 향상-③(교육부)
- 【국정】 평생교육과 산학협동(교육부)

#### □ 2000.5.1,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훈시】 한국영화 진흥과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훈시】 한국문화상품 해외진출 촉진
- 【훈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 【훈시】 내국인 해외관광 교양 향상
- 【훈시】 시드니올림픽 준비 만전
- 【훈시】 생활체육 활성화
- 【훈시】 남북스포츠 교류대비 철저
- 【훈시】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
- 【계획】 저작권 보호 강화(문광부)
- 【계획】 순수문화예술의 간접지원방안 강구(문광부)
- 【계획】 특성있는 관광기념품 개발(문광부)
- 【계획】 체육시설 및 전문인력 양성(문광부)
- 【계획】 골프대중화 추진(문광부)
- 【추가】 문화콘텐츠산업 적극 육성(문광부)
- 【추가】 한국을 대표할수 있는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①(문광부)
- 【추가】 월드컵대회 후 경기장 활용대책 강구(문광부)
- 【국정】 한국을 대표할수 있는 관광자원 및 코스 개발-②(문광부)

#### □ 2000.5.2, 제18회 국무회의시

- 【훈시】 최선을 다하는 정부
- 【계획】 경제문제에 철저히 대처(산자부)
- 【계획】 각종 현안문제에 능동적 대응(교육부)
- 【추가】 경제문제에 철저히 대처(재정부)

【추가】 각종 현안문제에 능동적 대응(행자부, 농림부, 복지부)

【국정】 경제문제에 철저히 대처(금감위)

【국정】 각종 현안문제에 능동적 대응(노동부)

#### □ 2000.5.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훈시】 건설한 건설문화 조성

【훈시】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훈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준비 철저

【계획】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강력한 추진(건교부)

【계획】 정부고속철도의 차질없는 추진(건교부)

【계획】 각종 사고방지대책의 강화(행자부)

【추가】 각종 사고방지대책 강화(재정부등 10개부처, 법무부)

【국정】 각종 사고방지대책 강화(건교부)

#### □ 2000.5.4,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훈시】 한·일어업협정 후속조치 및 한·중어업협상 철저 대비

【훈시】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 유치 노력 강화

【훈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육성

【훈시】 장보고 해양개척정신 계승 및 “해양한국21” 추진

【훈시】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훈시】 해양환경 보전

【훈시】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계획】 해상치안질서 확립 및 여객선 안전운항(해양부)

【국정】 수협개혁 및 경영정상화

【국정】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 □ 2000.5.9, 제19회 국무회의시

【계획】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17부 5위 4처)

【계획】 정부기능조정 추진(기획예산처)

【추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행자부)

□ 2000.5.16, 제20회 국무회의시

【계획】 국제수지대책 수립(산자부)

【계획】 풍납토성 유적 보존대책 추진(문화부)

【추가】 국제수지대책 수립(산자부)

□ 2000.5.30, 제22회 국무회의시

【훈시】 책임있는 국정운영

□ 2000.6.20, 제26회 국무회의시

【추가】 8.15 경축사 후속대책의 철저한 실천(복지부)

□ 2000.6.27, 제27회 국무회의시

【계획】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복지부)

【계획】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신중한 추진(통일부)

【국정】 집단이기주의에 엄정히 대처(법무부)

□ 2000.6.28, 공공부문 혁신대회시

【훈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전환

【훈시】 공공개혁의 방향전환 추진

【훈시】 공공부문 개혁성과 홍보강화

【계획】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조기 발족(예산처)

【계획】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국조실)

【추가】 전자정부의 조기구현(행자부, 예산처)

□ 2000.7.4, 제28회 국무회의시

【훈시】 각종현안에 원칙을 갖고 대처

□ 2000.7.10, 제29회 국무회의시

【훈시】 개혁의 흔들림없는 추진

【계획】 워크아웃 제도의 보완(금감위)

【추가】 ASEM 정상회의의 준비(외교부)

□ 2000.7.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시

【훈시】 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우수과학기술인력 양성

【훈시】 신기술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 2000.7.18, 제30회 국무회의시

【훈시】 개혁 아이디어와 정책의 발굴 및 추진

【훈시】 이산가족상봉 및 남북교류협력의 착실한 추진

【계획】 안전사고의 재발방지(행자부)

【추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성화(과기부)

□ 2000.7.19,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계획】 관광수지 개선대책 마련(문광부)

【계획】 남북 관광협력방안 마련(문광부)

【계획】 관광개발사업 철저(문광부)

□ 2000.8.1, 제32회 국무회의시

【훈시】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훈시】 한·미관계의 중요성

【추가】 철저한 재해예방(재경부등 12부처)

□ 2000.8.8, 제33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민의 정부 제2기의 국정과제

□ 2000.8.21,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5회 국무회의시

【훈시】 남북관계개선과 을지훈련

【훈시】 원칙에 입각한 의약분업사태 해결

【추가】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통일부)

□ 2000.8.29, 제36회 국무회의시

【훈시】 새로운 각오로 국정2기 출발



【훈시】 수해대책 평가

【훈시】 기금운영평가와 공공부문개혁

【계획】 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재경부, 노동부)

【계획】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수립(건교부, 산자부)

【계획】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준조세 경감(예산처, 산자부)

□ 2000.9.4, 제37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

【추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추석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추가】 남북관계의 착실한 추진(통일부)

□ 2000.9.19, 제38회 국무회의시

【훈시】 경제의 어려움 극복

【계획】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금감위, 재경부)

【계획】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예산처등 13개부처)

【추가】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행자부)

【추가】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재경부)

【추가】 고유가 시대의 극복(산자부)

□ 2000.9.19, 규제개혁 보고회의시

【훈시】 지시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훈시】 기업확동의 자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훈시】 사회적 규제의 효율화

【훈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계획】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국조실)

【계획】 현장, 지방 중심의 규제개혁(국조실)

□ 2000.9.26, 제39회 국무회의시

【계획】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정통부)

【계획】 서민생활의 안정(복지부)

【추가】 4대개혁의 완성(재경부)

【추가】 전통산업과 지식정보화산업의 접목(산자부)

【추가】 고유가 시대의 극복(산자부)

【추가】 지방경제의 활성화(산자부, 건교부)

#### □ 2000.9.28, 충청남도 방문시

【훈시】 농촌경제 발전대책 강구

【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

【계획】 백제권개발사업의 철저한 추진(건교부)

【국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개혁 추진(행자부)

#### □ 2000.10.4, 제40회 국무회의시

【훈시】 ASEM의 성공적 개최

【훈시】 경제어려움에 적극 대처

【계획】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재경부)

【추가】 서민생활 안정대책(복지부)

【추가】 에너지절약 시책의 추진(산자부)

【추가】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수립(행자부)

#### □ 2000.10.4, 4대부문 합동보고회의시

【훈시】 개혁의 확고한 추진

【계획】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재경부등 6개부처)

【계획】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수립(금감위)

#### □ 2000.10.10, 제41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회에 성실히 대응

【훈시】 남북관계의 진전

【계획】 공적자금 투명한 집행(재경부)

【추가】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재경부)

□ 2000.10.16, 제42회 국무회의시

【훈시】 노벨상 정신의 계승, 발전

【계획】 신도시 개발문제에 신중히 대처(건교부)

【계획】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중앙인사위)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복지부)

【국정】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교육부)

□ 2000.10.23, 제43회 국무회의시

【훈시】 ASEM 정상회의의 성과

【훈시】 정기국회에 성실히 대응

【계획】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대처(재경부등 16부, 금감위, 보훈처)

【추가】 경제와 민생문제해결에 주력(재경부 등 6개부처)

【추가】 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법무부)

□ 2000.10.28, 대구광역시 방문시

【훈시】 세계적인 패션중심지 육성

□ 2000.10.28, 경상북도 방문시

【훈시】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2000.10.31, 제44회 국무회의시

【계획】 금융감독원 쇄신(금감위)

【계획】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재경부, 금감위)

【추가】 4대부문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재경부 등 6개부처)

□ 2000.11.2, 울산광역시 방문시

【훈시】 공공부문 개혁 마무리

【훈시】 신노사문화 조성

【훈시】 월드컵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 철저

【훈시】 원전주변 주민에 대한 안정노력 강화

□ 2000.11.2, 부산광역시 방문시

【훈시】 4대부문 개혁 동참

【훈시】 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북한 참가

□ 2000.11.3, 경상남도 방문시

【훈시】 4대부문 개혁의 철저한 추진

【훈시】 경제강국 건설에 적극 노력

【훈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훈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적극 추진

□ 2000.12.6, 제49회 국무회의시

【훈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난국에 대처

【추가】 사회안전망 보완(노동부, 복지부)

【국정】 사회안전망 보완(농림부)

□ 2000.12.19, 제51회 국무회의시

【훈시】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수행

□ 2000.12.26, 제52회 국무회의시

【훈시】 제2차 경제개혁 추진

【훈시】 원칙에 입각한 은행파업사태 해결

□ 2000.9.27, 충북 업무보고시

【훈시】 과학단지와 생명산업의 적극 육성

□ 2000.10.26, 전북 업무보고시

【계획】 쌀 생산비 절감사업의 전국적 보급방안(전북)

【계획】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와 통일교육 강화(전북)

【계획】 전북 예술의 적극적 대외 진출(전북)

【훈시】 3대 공익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책 추진

□ 2000.11.7, 전남 업무보고시

【훈시】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촌 건설

【훈시】 친환경적 농업 및 기르는 어업 육성

【훈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및 세계박람회 적극 추진

□ 2000.11.8, 광주 업무보고시

【훈시】 문화월드컵 준비

□ 2000.11.20, 인천광역시 업무보고시

【훈시】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관련, 일시적 희생 감내 필요

【훈시】 공직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새천년 교육의 중점사항

【훈시】 사이버 범죄·반공익사범 단속 철저

□ 2000.12.1, 경기도 업무보고시

【훈시】 질 위주의 수도권 과밀억제방안 추진

【훈시】 북한지역의 개성공단 개발 촉진 협조

【훈시】 지식기반시대의 학생교육 강화

□ 2000.12.16, 제주도 업무보고시

【훈시】 특색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훈시】 컨벤션 산업 육성

【훈시】 학교의 왕따문제와 고발정신 함양

【훈시】 관광경찰의 모범

【계획】 감귤 경쟁력 강화(제주)

【계획】 향몽유적 개발(제주)

□ 2000.12.1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계획】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과기부)

【계획】 국가적 중요기술의 개발 계획 수립(과기부)

【훈시】 과학기술 홍보 강화

【훈시】 우주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에너지 기술개발 및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 2000.12.20, 서울특별시 업무보고시

【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철저한 시행

【훈시】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大会의 철저한 준비

|       |
|-------|
| 2001년 |
|-------|

□ 2001.1.3, 제1회 국무회의시

【훈시】 금년도 국정운영에 임하는 자세

【훈시】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

□ 2001.1.9, 제2회 국무회의시

【계획】 설 종합대책의 마련(재경부,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복지부)

【계획】 반부패대책 마련(국조실)

□ 2001.1.13,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시

【훈시】 평가제도의 착실한 발전 추진

【훈시】 전자정부 구현

【훈시】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개혁 추진

【훈시】 지역균형 개발

【훈시】 생산적 복지의 실현

【훈시】 금년도 5대 국정지표의 확실한 추진

□ 2001.1.15,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훈시】 2월말까지 구조개혁 마무리

【훈시】 실효성있는 경제 홍보

【훈시】 미국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

【훈시】 은행 대출관행의 선진국형 전환

【훈시】 전자정부 구현

【계획】 기업금융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재경부)

【계획】 외환시장 안정방안 강구(재경부)

【계획】 국내자금의 해외도피 차단 노력 강화(재경부)

【계획】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대책 수립(재경부)

□ 2001.1.19,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시

- 【훈시】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개혁 추진
- 【훈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국정】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산자부)
- 【추가】 중소·벤처기업 대책 마련(산자부)
- 【추가】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산자부)
-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산자부)
- 【추가】 에너지대책 수립(산자부)
- 【추가】 중소기업 지원 강화(산자부)

□ 2001.1.20,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훈시】 건설업 경쟁력 강화 추진
- 【훈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훈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 【훈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준비 철저
- 【계획】 노후 주택개량사업의 적극 추진(건교부)
- 【계획】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산자부)
- 【추가】 수도권 판교신도시 개발(건교부)
- 【추가】 철도 민영화 추진(건교부)

□ 2001.1.22, 제4회 국무회의시

- 【훈시】 설 기간중 대형사고에 철저히 대비
- 【훈시】 한미관계의 공고화
- 【계획】 선진국 수준의 의무교육 실시(교육부)
- 【계획】 북한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통일부)
- 【추가】 경제개혁의 완수(공통)

□ 2001.1.2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공정거래 완전실현의 해 달성
- 【훈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감시자 역할 강화



- 【훈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정거래 풍토 조성
- 【국정】 부당내부거래의 근절(공정위)
- 【국정】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공정위)
- 【계획】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공정위)
- 【국정】 중소하도급업체의 보호 강화(공정위)

□ 2001.1.30 제5회 국무회의시

- 【훈시】 개각에 따른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 【계획】 고 이수현군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강구(복지부)

□ 2001.1.31,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훈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개혁의 내실화
- 【훈시】 기초생활보장의 정착
- 【국정】 장애인 직업재활대책 추진(복지부)
- 【국정】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복지부)
- 【계획】 금연대책 적극 추진(복지부)
- 【계획】 양성자 가속치료기 설치(복지부)

□ 2001.2.2, 노동부 업무보고시

- 【훈시】 원칙과 대화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
- 【훈시】 새로운 노사문화의 형성
- 【훈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
- 【훈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훈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 추진
- 【계획】 중소기업의 근로자 보호(노동부)

□ 2001.2.5, 환경부 업무보고시

- 【훈시】 환경공무원의 사명감
- 【계획】 환경정책 홍보 강화(환경부)
- 【국정】 환경산업 육성(환경부)

- 【국정】 노후수도관 교체 등 물 절약대책 활성화(환경부)
- 【국정】 국립공원관리 운영 개선(환경부)
- 【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환경부)
- 【국정】 4대강유역 오염원 관리 철저(환경부)
- 【계획】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환경정책의 보완(환경부)
- 【계획】 SOFA 협상 후속조치 철저(환경부)

□ 2001.2.6, 제6회 국무회의시

- 【계획】 인사청탁 근절(공통)
- 【추가】 실업·물가문제에 철저히 대처(재경부, 노동부, 복지부)

□ 2001.2.7, 농림부 업무보고시

- 【계획】 농외소득 증대방안 강구(농림부)
- 【국정】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확대(농림부)
- 【계획】 농업금융제도 개혁(농림부)
- 【국정】 농산물 유통 개혁(농림부)
- 【국정】 농산물 수출 증대(농림부)
- 【국정】 농업생명공학과 농촌 정보화사업 강화(농림부)
- 【계획】 농업벤처산업 지원대책 강구(농림부)
- 【국정】 WTO 농산물 협상 철저 대응(농림부)
- 【계획】 남북 농업협력 강화(농림부)
- 【계획】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농림부)

□ 2001.2.8,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국정】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구축(해양부)
- 【국정】 항만공사제 도입 및 항만건설 외자 유치(해양부)
- 【국정】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연안수송 활성화(해양부)
- 【계획】 해양인적자원 능력 향상(해양부)
- 【국정】 새로운 자원관리어업 발전(해양부)
- 【국정】 수산물 안전관리 철저 및 유통구조 개선(해양부)

【계획】 신해양산업 발전(해양부)

【국정】 해양오염방지 노력 강화 및 연안 난개발 방지(해양부)

□ 2001.2.10, 제7회 국무회의시

【추가】 실직자에 대한 구직지원 강화(노동부)

□ 2001.2.10,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훈시】 유망 핵심기술의 발굴·육성

【훈시】 연구개발의 생산성 제고

【훈시】 기술영향평가의 철저한 실시

【훈시】 인간복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훈시】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육성

【계획】 산·학·연 협동 촉진(과기부)

【계획】 원자력 안전관리 철저(과기부)

【추가】 지역과학기술 진흥(과기부)

【추가】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 제고(과기부)

□ 2001.2.14,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훈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훈시】 공무원 전문성 향상

【계획】 지연·학연 등 정실인사 배제(인사위)

【계획】 과학기술공무원의 확보·활용(인사위)

【계획】 여성·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인사위)

【계획】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구축·활용(인사위)

【국정】 공무원 처우 개선(인사위)

【계획】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인사위)

□ 2001.2.14,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훈시】 전자정부 구현과 공무원의 능력 배양

【훈시】 강력한 정부의 실현

- 【훈시】 지자체 특성과 능력에 맞는 사업 추진 유도
- 【훈시】 남북지자체간 교류 협력 내실화
- 【계획】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인사위)
- 【계획】 일선의 부정부패 척결(행자부)
- 【계획】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강구(행자부)
- 【계획】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도 강화(행자부)
-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행자부)
- 【계획】 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처(행자부)
- 【추가】 공정한 인사관행 정착(행자부)

#### □ 2001.2.14,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훈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병행 발전
- 【훈시】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 제고
- 【훈시】 관광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 계몽
- 【훈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의 해외진출 지원
- 【훈시】 종교계의 사회적 역할 강화
- 【계획】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영(문광부)
- 【계획】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본격 추진(문광부)
- 【국정】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문광부)
- 【계획】 경주북부 유교문화권 개발(문광부)
- 【국정】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문광부)
- 【국정】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철저(문광부)
- 【계획】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보호대책 마련(방송위)
- 【추가】 남북문화관광체육교류 활성화(문광부)
- 【추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추진(문광부)
- 【추가】 관광수지 개선대책(문광부)

#### □ 2001.2.15, 통일부 업무보고시

- 【훈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 【계획】 통일 교육·홍보 강화(통일부)
- 【추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통일부)

□ 2001.2.16,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시

- 【훈시】 국가변영을 위한 외교 강화
- 【계획】 한반도 안보와 냉전 종식을 위한 외교(외교부)
- 【계획】 수출증진 및 투자유치 외교 강화(외교부)
- 【계획】 지정학적 이점 활용(외교부)
- 【계획】 민주인권국가 이미지 확립(외교부)
- 【계획】 적극적인 문화외교 추진(외교부)
- 【계획】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외교부)

□ 2001.2.19,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훈시】 IT산업 육성
- 【훈시】 고급두뇌 유출 방지 노력
- 【훈시】 인터넷상 음란·폭력물에 대한 자율규제
- 【훈시】 한국통신의 세계 제일 기업화
- 【계획】 IT인력 및 기술개발 강화(정통부)
- 【국정】 정보격차 해소(정통부)
- 【국정】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정통부)
- 【국정】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체화(정통부)

□ 2001.2.26, 제8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민의 정부 3년의 평가와 각오

□ 2001.3.5, 제9회 국무회의시

- 【훈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준비 철저
- 【계획】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추진(국조실)
- 【계획】 전월세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건교부)

□ 2001.3.13, 제10회 국무회의시

- 【훈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 【계획】 전월세 대책 마련(재경부)

- 【계획】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무부)
- 【계획】 해빙기 안전점검 철저(건교부)
- 【추가】 전월세 대책 마련(건교부)
- 【추가】 해빙기 안전점검 철저(행자부)

□ 2001.3.17, 교육부 업무보고서

- 【훈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승격
- 【훈시】 창의력과 모험심이 강한 인재 양성
- 【훈시】 공교육 내실화 방안
- 【훈시】 대학경쟁력 강화
- 【계획】 인적자원 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교육부)
- 【국정】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근절(법무부)
- 【국정】 2002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 시행(교육부)
- 【계획】 교육정보화의 지속 추진(교육부)
- 【국정】 교원사기 양양대책 적극 추진(교육부)
- 【계획】 시간강사 대책 수립(교육부)
- 【추가】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근절(교육부)
- 【추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교육부)

□ 2001.3.21, 대통령자문위원 초청 만찬시

- 【훈시】 남북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촉진
- 【훈시】 한반도 물류중심국가 달성
- 【훈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증진
- 【훈시】 상시개혁체제의 확립
- 【훈시】 지식정보국가 건설
- 【훈시】 민주인권국가 건설

□ 2001.3.21, 법무부 업무보고서

- 【훈시】 국가사회기강의 확립
- 【훈시】 부정부패의 근절

- 【훈시】 인권과 법률복지 확충
- 【훈시】 교정·보호행정의 혁신
- 【계획】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법무부)
- 【계획】 출입국 관리체제 완비(법무부)
- 【계획】 불법체류자의 인권보장(법무부)
- 【계획】 남북평화협력관계의 적극 지원(법무부)

□ 2001.3.27, 제12회 국무회의시

- 【훈시】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
- 【추가】 일자리수급 안정대책 추진(노동부)

□ 2001.4.3, 제13회 국무회의시

- 【훈시】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 2001.4.9,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중기특위의 활동 강화
- 【훈시】 중소기업관련 정책 강화
- 【훈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 【계획】 중소기업 자금대출 강화방안 마련(중기특위)
- 【계획】 소상공인 적극 지원(중기특위)
- 【국정】 여성기업인 지원 강화(중기특위)

□ 2001.4.9, 제14회 국무회의시

- 【훈시】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
- 【훈시】 국회계류 주요법안 통과에 역량 집중

□ 2001.4.17, 제15회 국무회의시

- 【훈시】 국회를 정부정책홍보의 기회로 활용
- 【훈시】 장애인 자활노력 지원
- 【훈시】 건전한 시위문화 창출
- 【계획】 사금융의 폐해 근절(재정부)

□ 2001.4.12,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구조조정을 위한 상시개혁체제 강화
- 【훈시】 금융기관·기업의 경쟁력 강화
- 【훈시】 금감위의 적극적인 역할

□ 2001.4.14, 국방부 업무보고시

- 【훈시】 경의선 연결시 군사대비책 수립
- 【훈시】 군의 안보역량 강화
- 【훈시】 여성인력의 활용 강화
- 【계획】 장병 정신교육(국방부)
- 【계획】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기 획득사업 추진(국방부)
- 【계획】 장병 특기교육 활성화(국방부)
- 【계획】 장병사기 양양(국방부)

□ 2001.4.16, 예산처 업무보고시

- 【훈시】 공공부문 개혁 지속 추진
- 【훈시】 R&D 투자효과 제고 노력
- 【훈시】 지자체 민자유치 지원
- 【훈시】 사회안전망과 근로의욕 고취 병행 추진
- 【훈시】 200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 노력
- 【훈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 【계획】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 관리(예산처, 행자부)
- 【계획】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지원(예산처, 행자부)
- 【계획】 해외순방시 외자유치사업의 실현(예산처,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 【국정】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의 차질없는 추진(예산처)
- 【추가】 전자정부의 조기 실현(예산처)

□ 2001.4.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 【훈시】 BT·IT와 전통산업의 접목
- 【훈시】 연구성과의 극대화



【훈시】 과학기술자 사기 양양 및 산·학·연 협동 강화

【국정】 과학기술의 국제화(과기부)

【국정】 영재교육의 강화(과기부)

□ 2001.4.18, 여성부 업무보고시

【훈시】 여성의 시대 도래

【훈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력

【계획】 여성인권 개선(여성부, 법무부)

【계획】 여성인적자원 개발(여성부, 행자부)

【계획】 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여성부, 복지부)

□ 2001.5.2, 제17회 국무회의시

【훈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

【훈시】 경제관련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훈시】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통한 어린이날

□ 2001.5.8, 제18회 국무회의시

【훈시】 스승에 대한 존경의식 함양

【훈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

□ 2001.5.15, 제19회 국무회의시

【훈시】 경제여건 개선에 대비한 준비 철저

【훈시】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국정운영

□ 2001.5.22, 제20회 국무회의시

【훈시】 여야 정책토론회 활성화

【계획】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교육부)

□ 2001.5.29, 제21회 국무회의시

【계획】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공통)

□ 2001.6.5, 제22회 국무회의시

【훈시】 호국정신의 고양

【훈시】 가뭄 피해의 최소화

□ 2001.6.12, 제23회 국무회의시

【훈시】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

【계획】 물질약 대책 강구(환경부)

□ 2001.6.19, 제25회 국무회의시

【훈시】 산불·구제역 최소화

【훈시】 물부족 문제에 적극 대처

【훈시】 노사관계 안정 및 기업투명성 제고

【추가】 수해방지에 만전(공통)

□ 2001.7.2, 제27회 국무회의시

【훈시】 투명하고 건전한 언론발전

【계획】 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재경부)

□ 2001.7.10, 제28회 국무회의시

【훈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단호히 대처

□ 2001.7.17, 제29회 국무회의시

【훈시】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에 적극 협조

【계획】 대내외 경제문제에 적극 대처(재경부)

【추가】 집중호우에 철저 대비(공통)

□ 2001.7.23,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계획】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관광발전의 계기로(문광부)

【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수립(문광부)

□ 2001.7.24, 제30회 국무회의시

【훈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 재해대비 철저(과기부)

【계획】 주 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시행(노동부)

【추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광부)

□ 2001.8.7, 제32회 국무회의시

【훈시】 장애아 교육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장마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 촉구

【계획】 전자정부의 차질없는 추진(공통)

□ 2001.8.14, 제33회 국무회의시

【추가】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공통)

□ 2001.8.20, 제34회 국무회의시

【계획】 쌀 수급대책 마련(농림부)

□ 2001.8.20, 을지국무회의시

【훈시】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확립

□ 2001.8.28, 제35회 국무회의시

【훈시】 적조문제에 적극 대처

【계획】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재정부)

□ 2001.9.11, 제37회 국무회의시

【훈시】 현 정국에 대한 대응자세

【훈시】 햇볕정책의 지속 추진

【계획】 예산집행 철저(예산처)

【계획】 콜레라 등 후진국병 방지대책(복지부)

- 2001.9.18, 제39회 국무회의시  
【훈시】 대미 테러사건 이후의 대처방향
  
- 2001.9.25, 제40회 국무회의시  
【훈시】 2002년 예산안 후속조치 철저  
【훈시】 추석연휴대책 추진  
【계획】 테러예방대책 마련(국조실)
  
- 2001.10.9, 제42회 국무회의시  
【훈시】 미국의 테러대응조치 이후 각 분야별 대비 철저
  
- 2001.10.16, 제43회 국무회의시  
【훈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철저  
【추가】 쌀값 안정대책 마련(농림부)
  
- 2001.10.23, 제45회 국무회의시  
【훈시】 내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
  
- 2001.10.29, 제46회 국무회의시  
【훈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
  
- 2001.11.12, 제48회 국무회의시  
【훈시】 3대 과업 및 4대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  
【훈시】 수험생 진학지도에 적극 협조  
【계획】 기업규제 완화(재경부)  
【계획】 중국의 WTO 가입 대비 철저(재경부)
  
- 2001.11.20, 제49회 국무회의시  
【국정】 차기 국제농산물 협상전략 수립(농림부)

□ 2001.11.27, 제51회 국무회의시

【훈시】 대국회관계 효과적으로 대처

【훈시】 근로능력 제고 필요

【계획】 가을가뭄에 적극 대처(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점검(복지부)

【계획】 연말 공직기강 확립(행자부, 국조실)

□ 2001.12.18, 제54회 국무회의시

【훈시】 예산안, 민생·개혁입법 조기 국회통과 당부

【훈시】 민주·인권국가로의 위상 강화

【훈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훈시】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립 철저

□ 2001.12.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학기술부)

【추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육아문제 대책(복지부, 여성부)

□ 2001.12.22,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 대회 준비상황 합동보고시

【계획】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세계인들에 대한 대책강구(외교통상부)

□ 2001.12.2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계획】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조기 추진(재경부등 8개기관)

【계획】 전자정부 국제심포지움 개최준비에 만전(정통부)

□ 2001.12.26, 제55회 국무회의시

【훈시】 지난 1년간의 회고 및 새해의 주요과제

## 2002년

### □ 2002.1.8, 제1회 국무회의시

- 【훈시】 새해 새출발을 위한 정부의 다짐
- 【계획】 최근 경제현안 등에 엄정 대처(노동부)
- 【추가】 최근 경제현안 등에 엄정 대처(일부지역 주택문제 및 물가 악영향)  
(재경부, 건교부)

### □ 2002.1.15, 제2회 국무회의시

- 【훈시】 부정부패 척결 노력 강화
- 【훈시】 경제경쟁력 제고 추진
- 【훈시】 중산·서민층 지원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 【훈시】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 철저

### □ 2002.1.30, 제5회 국무회의시

- 【훈시】 1.29 개각의 의미
- 【훈시】 월드컵·선거 등 준비 철저
- 【훈시】 남북관계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

### □ 2002.2.4,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시

- 【계획】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재경부)
- 【훈시】 금융·기업구조조정 철저
- 【훈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 【훈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월드컵·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 【훈시】 공정선거 관리
- 【추가】 부정부패 척결 및 세수증진(재경부등 5개부처)
- 【계획】 카드사용 확산(재경부)
- 【계획】 공사계약 실명제 시행(건교부)
- 【훈시】 경쟁력 제고 및 노동문제 안정

□ 2002.2.6, 여성부 업무보고시

- 【계획】 보육문제 해소를 통한 여성 사회진출 확대(복지부, 여성부)
- 【계획】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여성부)
- 【훈시】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
- 【훈시】 여성들의 월드컵 적극 참여

□ 2002.2.8,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 【훈시】 노인문제에 적극 대처
- 【훈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 【국정】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복지부)
- 【계획】 여성보육문제 해소방안 마련(재경부)
- 【계획】 국민연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복지부)
- 【계획】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마련(복지부)
- 【훈시】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
- 【훈시】 금연대책 및 전염병예방 철저

□ 2002.2.15,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시

- 【국정】 효과적인 인적자원 양성방안 마련(교육부)
- 【훈시】 대학의 경쟁력 제고
- 【계획】 학생들의 자연계 진출 촉진방안 마련(교육부)
- 【계획】 지방대학 육성·발전방안 마련(교육부)
- 【계획】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부)
- 【계획】 농어촌 교육개선방안 마련(교육부)
- 【훈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

□ 2002.2.19, 제7회 국무회의시

- 【훈시】 설연휴대책에 대한 치하
- 【훈시】 월드컵 준비 철저
- 【훈시】 국민의 정부 4주년에 대한 평가

□ 2002.2.22,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시

- 【계획】 순수예술의 진흥(문광부)
- 【국정】 관광인프라 구축(문광부)
- 【훈시】 월드컵 대비 철저
- 【훈시】 청소년 보호대책 철저
- 【훈시】 종교계의 모범적 행동에 대한 치하
- 【계획】 종교시설을 이용한 탁아사업 추진(문광부, 복지부)

□ 2002.2.27, 법무부 업무보고시

- 【훈시】 법질서 확립 철저
- 【훈시】 부정부패 척결
- 【훈시】 공명선거 실천
- 【추가】 월드컵 대비 철저(법무부)
- 【훈시】 일류경제를 위한 법적 지원
- 【추가】 약자의 권리보호(법무부)
- 【계획】 교정행정 개선(법무부)

□ 2002.3.4,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시

- 【훈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도모
- 【훈시】 첨단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
- 【훈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병행 발전
- 【계획】 인적자원 수급계획(교육부)
- 【국정】 영재교육체계 마련(교육부, 과기부)
- 【훈시】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 【계획】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체험활동 마련(과기부)
- 【훈시】 원자력 안전 및 효과적 활용
- 【계획】 중소기업 연구시설 공동활용 방안 검토(과기부)

□ 2002.3.5, 제9회 국무회의시

- 【추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재정부등 12개부처)



- 【훈시】 경제도약의 기반 마련
- 【국정】 수출증진에 전력(산자부)
- 【훈시】 노사문제에 원칙적 대처
- 【훈시】 봄철 각종 사고에 만전

□ 2002.3.6,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시

- 【훈시】 벤처기업 비리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 【훈시】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
- 【훈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훈시】 수출증대 노력 강화
- 【훈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훈시】 공공부문 개혁 지속 추진

□ 2002.3.8,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금융기관의 운영효율화 지원
- 【훈시】 벤처비리 재발방지 노력 강화
- 【훈시】 기업구조조정 지원
- 【계획】 대출문화의 혁신(금감위)
- 【계획】 주가조작에 엄중 대처(금감위)
- 【계획】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금감위)

□ 2002.3.11,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 【훈시】 공직기강 확립
- 【훈시】 전자정부 구현 철저
- 【훈시】 작은 정부 구현
- 【계획】 봄가뭄 및 안전관리대책 철저(행자부)
- 【훈시】 불법폭력 등에 적극 대처
- 【계획】 지방자치제 실천(행자부)
- 【계획】 학교폭력에 철저 대처(행자부)
- 【계획】 선거공영제 실시(행자부)

□ 2002.3.13,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시

- 【훈시】 지식경제 강국 건설
- 【훈시】 정보격차 해소
- 【계획】 불건전한 정보유통 방지(정통부)
- 【계획】 세계시장 진출 확대(정통부)
- 【훈시】 디지털 방송 준비 철저
- 【훈시】 「IT강국 코리아」 이미지 확립
- 【훈시】 전자정부 기반완성
- 【훈시】 우정사업 대국민 서비스 강화

□ 2002.3.18, 노동부 업무보고시

- 【훈시】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 【훈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 【계획】 인력수급불균형 대책 수립(노동부)
- 【계획】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노동부)
- 【훈시】 저소득층·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 2002.3.20,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시

- 【훈시】 북미관계 개선 적극 지원
- 【훈시】 정상회담 준비 철저
- 【훈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 2002.3.27, 환경부 업무보고시

- 【훈시】 중국 환경산업 진출에 적극 노력
- 【계획】 수도권 대기질개선특별대책 추진(환경부)
- 【계획】 4대강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환경부)
- 【훈시】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정】 급수난 해소와 수돗물관리의 투명성 제고(환경부)
- 【계획】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및 황사관련 국제환경외교 강화(환경부)
- 【계획】 식단 간소화 시민문화운동 추진(복지부)
- 【국정】 밀렵, 산불, 환경파괴 방지를 위한 환경도우미 도입(환경부)

□ 2002.3.29, 국방부 업무보고시

- 【훈시】 테러 등 전방위 전쟁에 대한 대비 철저
- 【훈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견고한 유지
- 【훈시】 군부대 주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훈시】 월드컵 안전개최에 군이 적극 협조
- 【훈시】 군 사고방지에 철저
- 【국정】 장병에 대한 맞춤형 교육 도입(국방부)

□ 2002.4.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
- 【훈시】 소비자 권익보호 철저
- 【훈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 2002.4.2, 제13회 국무회의시

- 【훈시】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
- 【훈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 【훈시】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 【훈시】 201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강화

□ 2002.4.3,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 【계획】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 마련(건교부)
- 【국정】 수도권 분산대책 마련(건교부)
- 【훈시】 지자체 SOC투자사업 신중 추진
- 【훈시】 월드컵, 아시안게임 교통대책 철저
- 【훈시】 철도민영화 조속 추진

□ 2002.4.8, 제14회 국무회의시

- 【훈시】 남북관계 개선노력 강화
- 【훈시】 신노사문화 확립
- 【훈시】 월드컵 준비 철저

□ 2002.4.19,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시

- 【훈시】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 【국정】 동북아 물류중심지 구축(해양부)
- 【국정】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대처(해양부)
- 【훈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
- 【계획】 해양환경 보호(해양부)
- 【계획】 해양경찰 위상정립 및 선원복지 향상 추진(해양부)
- 【훈시】 장보고 정신의 계승발전

□ 2002.4.22, 통일부 업무보고시

- 【계획】 특사방문시 합의사항 이행 철저(통일부)
- 【훈시】 미·북, 일·북 관계개선에 노력
- 【훈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

□ 2002.4.22, 제16회 국무회의시

- 【훈시】 지식정보화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
- 【추가】 서민·소외계층 생활안정 대책 추진(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 2002.4.25, 농림부 업무보고시

- 【국정】 농업경쟁력 강화(농림부)

□ 2002.4.30, 제17회 국무회의시

- 【훈시】 월드컵 준비 철저
- 【계획】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준비 철저(재경부)
- 【훈시】 남북관계 개선노력 지속
- 【계획】 주5일 근무제 보완대책 마련(행자부)

□ 2002.5.6,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인권침해 사전예방 철저
- 【계획】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인권위)- 관리종결

【훈시】 인권친화적 문화 확립

【훈시】 외국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2002.5.3,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훈시】 공기업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

【계획】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예산처)

【훈시】 4대과제·4대행사 및 주요 재정사업 적극 지원

【훈시】 균형재정 달성 노력 강화

□ 2002.5.7, 제18회 국무회의시

【추가】 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재경부등 8개부처)

【훈시】 스승에 대한 존경심 고취

【훈시】 구제역 예방 철저

【훈시】 민주당 탈당의 의미

□ 2002.5.9,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시

【훈시】 공정한 인사실시 및 인사제도 개선

【계획】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강구(인사위)

【훈시】 인사분야 전자정부의 차질없는 추진

□ 2002.5.1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시

【훈시】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

【훈시】 부패척결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훈시】 권력층 친인척 관리 강화

□ 2002.5.14, 제19회 국무회의시

【훈시】 월드컵 준비 철저

【훈시】 성공적인 지방선거 실시

【훈시】 구제역 방역 철저

- 2002.5.1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시
  - 【훈시】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차질없이 집행
  - 【훈시】 벤처기업의 옥석구분
  - 【훈시】 중소기업 취업난 및 외국인근로자 문제 해소 추진
  
- 2002.5.21, 제20회 국무회의시
  - 【훈시】 부처 업무보고 후속조치 철저
  - 【훈시】 월드컵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전념
  
- 2002.5.27, 제21회 국무회의시
  - 【훈시】 안전 월드컵 개최
  - 【훈시】 호국·보훈의 의미 재고
  
- 2002.6.11, 제23회 국무회의시
  - 【훈시】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
  - 【훈시】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노력 강화
  - 【훈시】 6.15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대한 회고
  
- 2002.6.18, 제24회 국무회의시
  - 【훈시】 지방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철저
  - 【훈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마무리
  - 【훈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당부
  
- 2002.6.25, 제25회 국무회의시
  - 【계획】 포스트 월드컵대책 마련(국조실)
  - 【훈시】 6.25 52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안정 노력 강화
  
- 2002.7.9, 제27회 국무회의시
  - 【훈시】 포스트 월드컵대책 추진
  - 【훈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 【훈시】 8. 8 보선, 대선의 공정관리
- 【훈시】 기업투명성 제고 노력 강화
- 【훈시】 중산층·서민대책의 철저 추진
- 【훈시】 서해교전 전사자·유가족에 대한 위로
- 【계획】 재해대책에 만전(행자부)
- 【훈시】 주5일 근무제 정착 노력 강화

□ 2002.7.16, 제28회 국무회의시

- 【훈시】 새 내각에 대한 당부
- 【계획】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법무부)
- 【훈시】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 【추가】 자연재해에 대비 철저(행자부)

□ 2002.7.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회의시

- 【훈시】 과학기술인력 양성
- 【훈시】 연구원·학생의 국제교류 강화
- 【계획】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

□ 2002.7.23, 제29회 국무회의시

- 【훈시】 마늘협상 관련 문제에 적절히 대처
- 【훈시】 국정과제 마무리 철저
- 【훈시】 임시국회에 적극 대처

□ 2002.8.19, 제33회 국무회의시

- 【훈시】 수해극복을 위한 노력 강화
- 【계획】 8.15 경축사 후속대책 추진(국조실)

□ 2002.8.27, 제34회 국무회의시

- 【계획】 민생안정 노력 강화(재경부)
- 【훈시】 호우피해 복구에 신속 대처

【국정】 적조피해 방지대책(해양부)

【훈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2002.9.3, 제35회 국무회의시

【계획】 태풍 및 호우피해 조속 복구(행자부)

【훈시】 남북관계 개선노력 강화

【추가】 추석종합대책 마련(재경부등 5개부처)

【훈시】 정기국회 대비 철저

【훈시】 아시아 경기대회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차질없이 준비

□ 2002.9.10, 제37회 국무회의시

【훈시】 수해복구 노력강화

【훈시】 특별재해지역 선정 신중 추진

【추가】 추석 종합대책 마련(재경부등 5개부처)

【훈시】 주택가격 안정노력 강화

□ 2002.9.17, 제38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정마무리 철저

【훈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의 의의

【훈시】 북·일간 관계 개선 기대

【훈시】 태풍 이재민 피해 조기 복구

【훈시】 부산아시안게임 및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준비 철저

【훈시】 ASEM 참가의 의미

□ 2002.10.2, 제40회 국무회의시

【훈시】 수해극복 국민참여에 감사

【훈시】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마무리 당부

【훈시】 경제불안요인 해소

【훈시】 정기국회 대응 철저

【훈시】 반미·병역거부 등 불법시위에 적극 대처



□ 2002.10.15, 제42회 국무회의의시

【훈시】 아시아경기대회 관계자에 대한 치하

【훈시】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

【훈시】 반테러태세 확고히 유지

【훈시】 법률·예산안 통과 노력 강화

□ 2002.10.22, 제44회 국무회의의시

【계획】 정부 입법 신속 추진(법제처)

【훈시】 수재의연금 신속 집행

□ 2002.11.5, 제46회 국무회의의시

【훈시】 동절기 대책 마련

【훈시】 부산 아태장애인대회 관계자 치하

【훈시】 올바른 검찰상 재정립

【훈시】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

【훈시】 공정한 대통령선거 관리

□ 2002.11.11, 제47회 국무회의의시

【훈시】 국회통과 예산 및 법률에 대한 홍보강화

【훈시】 경제불안 심리 축소노력 강화

□ 2002.11.19, 제48회 국무회의의시

【훈시】 공명선거 실천노력 강화

【훈시】 경제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

【훈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

【훈시】 의약분업 정착노력 강화

□ 2002.11.26, 제49회 국무회의의시

【훈시】 무역수지 흑자 노력 지속

【훈시】 불법·폭력에 엄중 대처

□ 2002.11.28, 국가과학기술위원회회의시

【훈시】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활용 여건 조성

【훈시】 부처간 협조를 통한 환경산업 발전정책

□ 2002.12.10, 제51회 국무회의시

【훈시】 SOFA 운영개선을 위한 협의 추진

【훈시】 대통령선거 공정관리

【훈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 노력 강화

【훈시】 연말연시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 2002.12.17, 제52회 국무회의시

【훈시】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마무리

【훈시】 SOFA 개선 및 한·미 협력관계 강화

□ 2002.12.24, 제53회 국무회의시

【훈시】 대통령선거 관계자들 노고에 대한 치하

【훈시】 국정 마무리 철저

【훈시】 북핵 문제에 적극 대처

【훈시】 연말연시 민생안정대책 추진

|       |
|-------|
| 2003년 |
|-------|

□ 2003.1.7, 제1회 국무회의시

【훈시】 국정과제 마무리 추진

□ 2003.1.28, 제4회 국무회의시

【훈시】 인터넷 보안 강화

【훈시】 남북관계 개선 노력 강화

국무총리훈령 제 399 호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2000. 2. 7

국 무 조 정 실

## 대통령지시사항관리지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지시사항이 정부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시사항 :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
2. 주관기관 :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
3. 관련기관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시사항에 대하여 협조·추진할 책임이 있는 기관
4. 중앙행정기관 : 부·처(대통령직속기관·국무총리직속기관 및 자문기관을 포함한다)
5.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및 도
6. 전 기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3조(지시사항의 구분) 지시사항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훈시사항 :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공람에 의한 주지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 이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는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2. 계획수립사항 : 구체성이 있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가. 신규지시 : 지시내용상 처음으로 지시된 사항

나. 추가지시 : 이미 지시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지시사항으로서 기존 지시사항에 포함하여 동일 건으로 관리할 사항. 이 경우 기존 지시사항의 관리번호를 괄호에 넣어 표시한다.

## 제 2 장 시달체계

제4조(기관장의 우선 조치사항) 전 기관의 장은 회의·업무보고·대통령순시 등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 이 지침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이 시달되기 전에 우선 관계직원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지시사항을 전달·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대통령비서실장의 송부)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시사항을 훈시사항과 계획수립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국무조정실장의 조치사항) ①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어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잠정시달(계획수립사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지정한 주관기관에 전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잠정시달시 훈시사항과 관련있는 기관에도 이를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지시사항중 계획수립사항만을 발췌하여 공문시달(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시사항의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을 지정하고, 지시사항의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문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의 처리방침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아울러 시달한다.

## 1.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지정기준

- 가. 단일기관 관련사항 : 주관기관만 지정
- 나. 수개기관 관련사항 : 주관기관과 관련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 다. 공통지시사항 : 2개 이상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 라. 청의 소관 지시사항은 소속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 마. 시·도 교육청의 소관 지시사항은 교육부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 바. 시·도 소관 지시사항은 해당 시·도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 2. 지시사항 관리번호의 부여기준

- 가. 전 계획수립사항의 지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 나. 사업분야별, 주관기관별, 지시순서별 코드번호 부여
  - (1) 제1차 분류 : 별표 1에 의하여 사업분야별 번호 부여
  - (2) 제2차 분류 : 별표 2에 의하여 주관기관별 번호 부여
  - (3) 제3차 분류 : 주관기관별 지시순서에 따라 번호부여

제7조(기관장의 지시사항 선람) 전 기관의 장은 지시사항을 선람하여야 한다.

제8조(지시사항 관리기관의 지정) 전 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별로 이를 관리할 단위기관을 지정·시달하되, 실제로 담당·처리할 기관까지만 시달하여야 한다.

제9조(지시사항의 관리)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관보에 게재된 지시사항을 소속공무원이 신속하게 공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전 기관의 장은 계획수립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전 기관은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실이 없는 기관은 그에 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군·구, 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 한하여 지시사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그 이하 단

위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주관기관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시사항의 통합관리) ①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와 중복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정과제명을 명기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국정과제에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 기관의 장은 일선기관에서 지시사항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과 중복되는 부연지시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지시는 지시사항의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기술 이용의 권장) 전 기관의 장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련문서 및 자료 송·수신에 있어서 국정보고유통시스템 등 정보화기술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

제12조(추진계획수립시 고려사항) 전 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사업계획의 수립

가. 지시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나. 실현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수립

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1) 광범위한 자료·지식·경험 등의 활용

(2) 관련부서·전문연구기관 및 국민각계의 의견수렴·반영

(3) 상호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실익 비교·검토



- 라. 기존 국가계획과의 조화 고려
- 마.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바. 예견되는 문제점 검토 및 효과 판단
- 사. 사업 추진기간 명시

## 2. 추진계획과 재원확보방안 등의 연계

가. 재원소요 판단과 재원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

(1) 기존사업의 경우 가급적 예산확보 범위안에서 계획수립

(2) 추가재원 소요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나. 법제 및 행정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는 법제처·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계획 확정

제13조(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시사항 시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지시사항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이유로 사전협의를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부처 자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추후 협의결과에 따라 수정된 추진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진계획의 확정후 추가지시사항 시달 등 상황 및 여건의 변화로 추진계획의 수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추진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정·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하여 제출한다.

제14조(부처간 협조부진사항의 보고 및 조정) 주관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의 수

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장과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대외비사항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추진계획보고중 비밀 또는 대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계획에 비밀등급 또는 대외비임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생략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 장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6조(추진상황의 점검) 각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지시사항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시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실적의 결과보고) ①각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말 현재까지 시달된 모든 지시사항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매년도 말까지 시달된 모든 소관지시사항의 연간추진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추진실적은 각 부처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소관 지시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의 장은 추진실적보고중 비밀 또는 대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실적에 비밀등급 또는 대외비임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생략한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반기별·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항이 있거나 예상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상황의 확인·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주관기관의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항 및 문제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의 종결) 국무조정실장은 그 내용상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추진이 곤란한 대통령지시사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협의하여 부처자체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지시사항으로서의 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시사항 사업분야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제2호관련)**

| 코드<br>번호 | 분야항목               | 내<br>용   | 주관기관(예시)                                |
|----------|--------------------|--|---|
| 01       | 통일 · 안보            |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협력,<br>국방, 안보, 보훈, 민방위             |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br>치부, 국가보훈처, 비<br>상기획위원회 |
| 02       | 정치 · 외교            | 정치발전, 선거, 외교                                     | 외교통상부,<br>행정자치부                         |
| 03       | 경 제                | 경제발전, 재무금융, 통상, 산업,<br>에너지 자원, 농 · 축 · 수산        | 재정경제부, 농림부,<br>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
| 04       | 국토개발 ·<br>교통       | 사회간접자본, 국토종합개발,<br>지역발전, 교통                      | 건설교통부,<br>해양수산부                         |
| 05       | 사회 · 복지<br>노동 · 환경 | 사회질서, 보건위생, 방역,<br>근로조건, 직업안정, 환경,<br>노인 · 청소년문제 | 법무부, 보건복지부,<br>노동부, 환경부                 |
| 06       | 교육 · 문<br>화 · 체육   | 교육, 문화예술, 관광체육진흥                                 | 교육부, 문화관광부                              |
| 07       | 과학 · 기술            | 과학기술, 정보 · 통신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
| 08       | 일반행정               | 지방행정, 공무원복무, 민원처리,<br>대국민홍보                      |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br>법제처, 국정홍보처             |
| 09       | 기 타                | 감사, 부처업무조정, 기타<br>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br>사항          |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

[별표 2]

**지시사항 주관기관별 관리번호 부여기준(제6조제2항제2호관련)**

| 기 관 명     | 기관번호 | 기 관 명   | 기관번호 | 비 고                                      |
|-----------|------|---------|------|--|
| 대통령비서실    | 01   | 산업자원부   | 41   | ※ 기타 대통령직<br>속기관은 대통<br>령비서실 기<br>관번호 사용 |
| 감 사 원     | 04   | 정보통신부   | 42   |  |
| 여성특별위원회   | 06   | 보건복지부   | 43   |  |
| 중소기업특별위   | 07   | 환 경 부   | 44   |  |
| 중앙인사위원회   | 09   | 노 동 부   | 45   | ※ 국무조정실과<br>국무 총리비<br>서실은 국무<br>총리실에 포함  |
| 국무총리실     | 11   | 건설교통부   | 46   |  |
| 국정홍보처     | 13   | 해양수산부   | 47   |  |
| 법 제 처     | 14   |         |      |  |
| 국가보훈처     | 15   |         |      |  |
| 공정거래위원회   | 16   | 서울특별시   | 51   |  |
| 비상기획위원회   | 17   | 부산광역시   | 52   |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18   | 대구광역시   | 53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19   | 인천광역시   | 54   |  |
| 금융감독위원회   | 20   | 광주광역시   | 55   |  |
| 기획예산처     | 21   | 대전광역시   | 56   |  |
| 재정경제부     | 31   | 울산광역시   | 57   |  |
| 통 일 부     | 32   | 경 기 도   | 60   |  |
| 외교통상부     | 33   | 강 원 도   | 61   |  |
| 법 무 부     | 34   | 충 청 북 도 | 62   |  |
| 국 방 부     | 35   | 충 청 남 도 | 63   |  |
| 행정자치부     | 36   | 전 라 북 도 | 64   |  |
| 교 육 부     | 37   | 전 라 남 도 | 65   |  |
| 과학기술부     | 38   | 경 상 북 도 | 66   |  |
| 문화관광부     | 39   | 경 상 남 도 | 67   |  |
| 농 립 부     | 40   | 제 주 도   | 68   |  |
|           |      | 공 통     | 70   |  |

[별지 제2호서식]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

「최초( )」  
「수정(제 차)」

|  |  |               |                         |      |              |
|--|--|---------------|-------------------------|------|--------------|
| 지시제목   |  |               |                         | 관리번호 | ○○(○○-○○-○○) |
| 주관기관   |  | 추진부서          |                         | 관련기관 |              |
| 사업기간   |  | 관련기관과<br>협의여부 | 협의완료( ), 협의중( ), 미협의( ) |      |              |
| <div>&lt;지시내용&gt; 2002년 ○○월 ○○일(○○부 업무보고시)<br/>○<br/>○<br/>* 추가지시가 있는 경우 요지 기록</div> |  |               |                         |      |              |

1. 추진계획 개요
- ※ 동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간단히 서술
2. 세부추진계획
- (1)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 내용서술
- (2) 세부계획명(조치시한 명기)
- 내용서술
- .
- .
- .

## 3. 소요재원 : 총 \_\_\_\_\_백만원(비예산사업의 경우 비예산사업임을 기록하고 표 생략)

| 구 분 | 계 | 2002 | 2003 | . . . . |
|-----|---|------|------|---------|
| 계   |   |      |      |         |
| 국 비 |   |      |      |         |
| 지방비 |   |      |      |         |
| 기 타 |   |      |      |         |

## 4.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사항

※ 법·제도·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주관기관의 사항에 한정)을 명기

## 5. 관련기관 협의 필요사항(관련기관 명기) 및 협의상황

## 6. 수정사항 및 사유(수정계획의 경우만 해당)

| 계획원안 내용 | 수정계획 내용 | 수정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7. 문제점 및 대책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 ○ 년 ○ 반기)**  
**( ○ ○ 부 )**

**1. 총 괄**

| 지시사항 건수 |  | 완 료 | 관리<br>종결 | 추진 중 |     | 미 착 수 | 비 고 |
|---------|--|-----|----------|------|-----|-------|-----|
|         |  |     |          | 정 상  | 부 진 |       |     |
| 총 계     |  |     |          |      |     |       |     |
| 단독주관사항  |  |     |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     |       |     |

**2. 지시사항 추진상황**

○ 완료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완료연월일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관리종결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비 고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추진중인 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비 고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정 상<br>부 진<br>구 분 |
|      | < 공통지시사항 >    |                   |



## 3. 지시사항 건별 추진상황 보고서식

##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   |  |      |                  |      |              |
|---|--|------|------------------|------|--------------|
| 지시제목  |  |      |                  | 관리번호 | ○○(○○-○○-○○) |
| 주관기관  |  | 추진부서 |                  | 관련기관 |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민자 등 ) |      |              |
| <p>&lt;지시내용&gt; 2002년 ○○월 ○○일(○○부 업무보고시)</p> <p>○</p> <p>○</p> <p>* 추가지시가 있는 경우 요지 기록</p> |  |      |                  |      |              |

| 추진상황 | 완 료 | 관리종결 | 추진중 |     | 미착수 | 비 고 |
|------|-----|------|-----|-----|-----|-----|
|      |     |      | 정 상 | 부 진 |     |     |
|      |     |      |     |     |     |     |

## ○ 추진계획 개요

\* 별지 제2호서식의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계획서의 추진계획 개요내용을 기술

##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계획                       | 추진실적                                 | 추진상황                       |
|---------|------------------------------|--------------------------------------|----------------------------|
| ○ 세부사업명 | * 추진계획서에 명시된 세부추진계획과 일치하게 작성 | * 세부추진계획의 각 항목별로 대응하여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록 | * 각 항목별로 기록 (정상,부진, 미착수 등)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 사업성과(완료사업의 경우)
- 향후 계획(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 건의사항
  - \* 사업추진이나 지시사항 관리와 관련된 사항

#### **4. 건별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 (1) 지시사항 제목 : (관리번호)
  - ※ 지시내용 요지만 정리
- (2) 수범내용

#### **5. 미착수 사항**(미착수 사항이 있는 경우)

- (1) 지시사항 제목 : (관리번호)
  - ※ 지시내용 요지만 정리
- (2) 미착수 사유
- (3) 향후 계획
- (4) 의견 또는 건의사항

#### **6. 건별 부진사항**(부진사항이 있는 경우)

- (1) 지시사항 제목 : (관리번호)
  - ※ 지시내용 요지만 정리
- (2) 부진내역
  - 가. 추진계획 주요내용

나. 추진상황 주요내용

다. 부진내용

(3) 부진사유

(4) 보완 또는 개선대책

(5) 의견 또는 건의사항

## **7. 전반기 부진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1) 지시사항 제목 : (관리번호)

※ 지시내용 요지만 정리

(2) 조치내역

가. 부진내용

나. 전반기 보완 또는 개선대책

다. 조치실적

라. 향후 조치계획

(3) 의견 및 건의

[별지 제4호서식]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 ○ 년 ○ 반기)**  
**( ○ ○ 부 )**

**1. 총 괄**

| 지시사항 건수 |  | 완 료 | 관리<br>종결 | 추진 중 |     | 미 착 수 | 비 고 |
|---------|--|-----|----------|------|-----|-------|-----|
|         |  |     |          | 정 상  | 부 진 |       |     |
| 총 계     |  |     |          |      |     |       |     |
| 단독주관사항  |  |     |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     |       |     |

**2. 지시사항 추진상황**

○ 완료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완료연월일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관리종결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비 고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
|      | < 공통지시사항 >    |     |

○ 추진중인 사항

| 관리번호 | 지 시 제 목       | 비 고               |
|------|---------------|-------------------|
|      | < 단독주관 지시사항 > | 정 상<br>부 진<br>구 분 |
|      | < 공통지시사항 >    |                   |

### 3. 완료지시사항

\* 부처 단독주관 지시사항부터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공통지시사항을 이어서 작성

1) 지시제목 ○ ○ ○ ○ (○ ○ - ○ ○ - ○ ○)

가. 지시내용(○ ○ 년 ○ 월 ○ 일, ○ ○ ○ ○ ○ ○ 회의시)

- 지시내용 요약
- \* 추가지시가 있을 경우 요지 기록

나. 조치내용

다. 사업성과

### 4. 관리종결 지시사항

\* 부처 단독주관 지시사항부터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공통지시사항을 이어서 작성

1) 지시제목 ○ ○ ○ ○ (○ ○ - ○ ○ - ○ ○)

가. 지시내용(○ ○ 년 ○ 월 ○ 일, ○ ○ ○ ○ ○ ○ 회의시)

- 지시내용 요약
- \* 추가지시가 있을 경우 요지 기록

나. 조치내용

다. 향후 부처자체 추진계획

## 5. 추진중인 지시사항

\* 부처 단독주관 지시사항부터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공통지시사항을 이어서 작성

1) 지시제목 ○ ○ ○ ○ (○ ○ - ○ ○ - ○ ○)

가. 지시내용(○ ○ 년 ○ 월 ○ 일, ○ ○ ○ ○ ○ 회의시)

○ 지시내용 요약

\* 추가지시가 있을 경우 요지 기록

나. 지금까지의 조치내용

다. 향후 추진계획

第15代 金大中 大統領  
指示事項 綜合

---

---

발 행 일 : 2003년 2월 일  
발 행 처 : 국 무 조 정 실  
[전화] 02-737-9441, 732-2753  
인 쇄 소 : 성 문 인 쇄 사

---

---

〈비매품〉